

2010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I)

2010. 10

금 융 위 원 회

총 목 차

(가, 나, 다, 순)

(Ⅰ 권)

고 승 덕 의원	1
권 택 기 의원	287
김 영 선 의원	425
김 용 태 의원	597
김 정 의원	683
박 병 석 의원	755
박 선 숙 의원	1059
배 영 식 의원	1069
신 건 의원	1179

(Ⅱ 권)

우 제 창 의원	1
유 원 일 의원	301
이 범 래 의원	449
이 사 철 의원	577
이 성 남 의원	913
이 성 현 의원	1073

(Ⅲ 권)

이 진 복 의원	1
임 영 호 의원	189
정 옥 임 의원	243
조 문 환 의원	463
조 영 택 의원	495
현 경 병 의원	845
홍 재 형 의원	1033
홍 준 표 의원	1115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고승덕 의원	1. 최근3년간(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3
	2. 최근 3년간(2008부터 2010까지)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64
	3.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137
	4. 최근 3년(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38
	5.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39
	6. 임직원 퇴직 및 징계 현황	143
	7. 재취업 현황	143
	8.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검찰·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145
	9. 금융위 소관 최근 3년간 소송사건 현황	146
	10. 최근 3년(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체감사계획서 및 그 결과(결과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51
	11. 최근 3년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에 대한 상세내역	281
권택기 의원	1. 햇살론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이 징구하는 서류 목록	289
	2. 1995년 폐지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서민들을 위해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295
	3. '06년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조정혐의로 고발한 펀드매니저 및 자산운용회사 명단, 혐의점, 처벌근거법령 조항	296
	4. 이자율 상한선이 44%로 낮아진 이후, 캐피탈업계 및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신용이 낮은 사람은 대출을	297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권택기 의원	언기 더욱 힘들어져, 미등록 대부업체로 몰릴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의견	
	5. 역대 이자율 상한선 변화 추이와 그 이유, 등록대부업자 수 변화 추이, 외국(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이자율 상한 및 역대 금리 인하 내역	298
	6. 최근 5년간 수협의 경영상태와 2002년 수협에 출자된 정부자금 1조 1,58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계획	300
	7.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차이점	301
	8.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과 정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의 차이점	304
	9.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기업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선을 설정하여 고금리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305
	10.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금리를 설정하고, 대위변제시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306
	11.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는 보증서에 금융기관명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금리쇼핑을 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307
	12. 미소금융 출범 이후,대출 상담자(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 별도 표기),서류접수자,서류 통과자,탈락자(유형별 구분),대출 성공자 - 기업계열 재단과 은행계열 재단으로 구분	308
	13. 저축은행업계에서 요구하는 ‘저축은행의 비과세 예금 허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309
	14.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정책 및 향후 계획	310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권택기 의원	15. 저축은행이 ‘채무자 회생 지원을 위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채무감면액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 - 은행의 경우와 비교	311
	16. 은행 및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취급 실적을 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시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312
	17. '08년 이후 개최한 대부업정책협의회 회의록	313
	18. 세계 각국의 금리현황 및 역대 금리 인하 내역 - 대부업체 대출심사시 조사항목	335
	19. '06년 이후 ‘서민금융 실태조사’ 및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자료	337
	20. LTV, DTI 관련 - LTV, DTI 시행 관련 근거 및 구체적인 시행 경과 - '08년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자료, 당정협의 자료	361
	21. '10년 6월말 기준, 각 은행이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402
	22.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내용 - 시장효율화위원회('09.12.22) 회의록	403
	23.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 '06년 이후 월별, 증권회사별,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내역	420
	24.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 '06년 이후 월별, 증권회사별,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내역	421
	25.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수료 체계 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의견 개진한 내용	422
김영선 의원	1. 2010년도 8월 현재 업무보고 자료집	427
	2. 2010년 예산 자료 및 결산자료	516
	3. 언론스크랩 현황	595
	4. 서면답변 파일	596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김용태 의원	1. 임직원 퇴직, 재취업, 징계 현황	599
	2.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서 사본	601
	3. 외부기관에 위탁한 각종 연구용역 리스트	679
	4. 장애인, 여성, 보훈대상자 고용 현황	682
김 정 의원	1. 주택담보대출 비중과 연체율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어 금융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책자료	685
	2. 금융위 직원 징계 현황	686
	3. 햇살론 관련	687
	3-1. 햇살론 출시 이후 대출현황(인원, 금액, 등급별 대출금액, 보증재원 현황, 첫 이자 발생시기와 시작되었다면 연체율)	687
	3-2. 햇살론 취급기관별 출시 이후 월별 대출현황	688
	3-3. 햇살론 출시 이후 현재까지 대출형태(사업운영, 창업, 생계) 월별 대출현황	689
	4. 개인워크아웃 관련 자료	690
	4-1. 현재 개인워크아웃 제도 현황(개인회생, 파산 포함) (종류, 시행시기, 특성, 주관부서, 통합도산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년도별 신청건수 및 인정건수 거부건수 등)	691
	4-2. G20 주요국 개인파산, 개인회생 이용현황(최근 년도기준)	693
	4-3.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사한 개인회생 및 파산 광고 홍보물 현황	693
	4-4. 개인파산자 증가로 인한 신용질서 혼란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 향후 대책	693
	5. 신용회복관련 자료	700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주)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변제금 납입 현황(인원, 금액 등)	701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김 정 의원	- 2006년 이후 24회 이상 성실납부자(년도별 인원 기관별)	702
	- 2005-현재까지 변제금 납입 불이행으로 회복절차에서 탈락한 인원(년도별)	703
	- 2005-현재까지 신용회복 신청 거부 인원 및 주요 사례	704
	6. 청년인턴십 채용현황	705
	7.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706
	8. 관사(숙사), 콘도, 골프회원권 등 보유 및 임차현황, 차량구매 및 임차현황	725
	9. 선택적 복지비용 예산 및 개인별 지급액(2008~현재, 2010년은 배정액) 및 직원 1인당 연간 선택적 복리제도상 지급금액, 단체상해질병보험 계약회사 및 계약금액, 전체 대상직원 중 단체상해질병 보험 가입제외자	726
	10.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728
	- 자문형 랩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박병석 의원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757
	2.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상황	810
	3. 가장 최근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	842
	4. 최근 3년간 감사원, 총리실,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911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008
	6. 민원 처리 결과 통보 현황	1010
	7. 정보통신 보안 관련	1011
	- 최근 3년간 보안사건 발생 현황 (연도별, 유형별, 건별 발생사유, 피해액, 재발방지 대응 방법 등)	
	- 2009년 6월 발생한 일명 디도스(DDos)공격 피해 내역	
	- 보안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에 통보 및 업무 협조 내역	
	- 보안담당조직 및 인력, 예산 운용 현황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박병석 의원	8. 인력운용 현황 - 정원 및 현원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 신규 채용 및 퇴사현황 - 청년 인턴 채용 현황	1012
	9.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	1014
	10.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업의 재취업 현황	1019
	11. 설립이후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직원 사법처리 현황	1020
	12. 임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 현황	1021
	13. 1997년 IMF 이후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현황 - 저축은행별, 연도별, 종류별, 투입방법별 - 회수현황	1022
	14. 최근 5년 간 혐의거래보고 접수현황 (월별, 개별금융회사별)	1026
	15. 최근 5년 간 법집행기관 정보제공요구 현황	1027
	16. 최근 3년간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1028
	17.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1035
	18. 국내 금융 자격증 제도 현황	1051
	19.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현황	1056
박선숙 의원	1. 8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그러한 입장을 도출한 근거	1061
	2.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 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63

의원명	요구자료	페이지
박선숙 의원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에 따른 의사록 및 의안 비공개에 대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률상의 위임 또는 근거 규정	1065
	4.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른 의사록 및 제12조 제5항에 따른 의안 비공개 대상에 국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해석	1066
	5. 의사록 및 의안 비공개 대상에 국회가 포함된다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5조상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과의 상충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해석	1067
	6. 의사록 및 의안 비공개 대상에 국회가 포함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의 상충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해석	1068
배영식 의원	1. 2000~2010.9 현재 주택대출과 관련, DTI, LTV 연도별, 상황별 정부규제발표 상세내역 현황	1071
	2. 서민금융(햇살론) 월별 지원액 및 재원현황	1072
	3. 2005~2010.8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현황 - 회의일자, 제목	1073
	4. 금융위 금융정책 발표내용	1079
	5. 서민금융지원 종류 현황	1137
	6. 2010.8 현재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 등과 관련 - 지원배경/자본 - 지자체 민간단체 대기업별 기부금 현황 - 전국지점 현황/대출시작 월 일/대출조건/ - 대출 현황(건수, 총 대출액)/대출 구비서류 및 자격 - 지역별 월별 대출 현황 - 지점별 종사자 현황 - 현행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 재계 금융권의 미소금융사업 확대 현황	1166
	7. 파생상품과 관련해 민원접수 목록(2008~2010.8)현재	1176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신 건 의원	11. 햇살론 사업 참여 금융기관 현황 - 각 금융기관별 대출 실적	1359
	12.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현황 관련 A. 2008~현재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실정, 소액금융지원, 취업지원, 신용관리 교육실적 B. 지역별 지원 실적 C.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중 금융기관 잉여금의 법적 성격,발생경위, 금융기관 배분현황, 배분 당시 잉여금 총액	1360
	13. 미소금융 관련 A. 사업내역 B. 재단 및 지역재단 현황 - 대표자 약력, 각 지역별 자본금 현황	1364
	14. 미소금융 사업실적 관련 A. 총 대출건수, 총 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B. 대출종류별 대출건수, 총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C. 각 신용등급별 대출건수, 총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D. 각 지점별 대출건수, 총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1364
	15. 업종별 대출종류별 미소금융 대출실적 - 총 대출건수, 총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1364
	16. 미소금융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 관련 A. 각 프랜차이즈 회사별 대출실행 건수, 대출규모 B. 2인 이상 공동창업자 대출 비중	1364
	17. 미소금융 대출자 중 폐업현황	1364
	18. 민간배드뱅크 사업 현황 - 민간배드뱅크의 부실채권 인수현황	1373
	19.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현황	1374
	20.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현황(2002년 이후 매 년도별)	1375

의 원 명	요 구 자 료	페이지
신 건 의원	21. 2006년 이후 취업제한대상자의 재취업 관련 A. 재취업자 현황 : 성명, 퇴임당시 소속부서와 직위, 재취업 직장명·직책 명시 B.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사본, 첨부한 의견서 사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지서 C. 금융위에 접수된 취업승인 요청서 사본, 이에 첨부한 의견서 사본	1376
	22.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관련 - 2005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체납현황 - 결손처리한 체납과징금 현황	1377
	23. 2007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 년도별 부과건수, 부과총액, 체납건수, 체납총액 - 부과일시, 당사자,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일시	1378

고 승 덕 의원

1. 최근3년간(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붙임참조

〈별첨 1〉

200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

목 차

1. 舊금융감독위원회 소관

- (1)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 3
- (2)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4
- (3)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 (4)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2. 舊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소관

- (5) 국책금융기관의 경영혁신 촉진 7
- (6) 국책금융기관의 역할재정립 방안 보완 8
- (7) 금융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개선 9
- (8)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10
- (9) 상호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11
- (10) 방카슈랑스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12

1. 舊금융감독위원회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일자리 창출 부진, 불완전 판매, 보험료 인하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실태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p>	<p>□ 당초 정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설계사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p> <p>○ 4단계 방카슈랑스(개인보장성·자동차보험)를 예정대로 '08.4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p> <p>※ 설계사 실업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p> <p>①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p> <p>② 해당은행과 대출 등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상충자에 대한 판매제한</p> <p>③ 은행의 보험판매시 현행 판매임직원수 2인제한 유지</p> <p>④ 판매관련 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등</p> <p>□ 그러나, '08.2월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p> <p>○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규제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p> <p>⇒ 이에 따라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완료('08.3.28일)</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 채무유예서비스(DCDS)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연체시 카드 대금을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p>	<p>□ 현재 일부 신용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제공하고 있음</p> <p>○ 아울러, 동 서비스 취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카드사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p> <p>□ 이에 따라 DCDS와 같이 보험상품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상품에 대해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08.12.18일)</p> <p>○ 현재 동 개정안이 정무위 계류중으로 향후 국회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 예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휴면예금이 '08.3월에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의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통해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p> <p>* 간단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통신망으로 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하도록 하는 시스템</p> <p>○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07.11)하여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자동이체하였고,</p> <p>○ 30만원 이상 휴면예금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기 1개월 이전에 원권리자에게 문서로 통지토록 하였으며</p> <p>○ 또한 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한 이후에도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시 재단이 휴면예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p>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치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만큼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금융소외계층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08.7월)하여 추진중 * 각 기관에 산재한 자활지원제도를 집중하여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분석하고 금융소외자의 현황을 종합 조회하여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제도 도출 ○ 또한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병행 · 추진해 나갈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캠프 베드뱅크 등 민간 자율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운영중 -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시행중

2. 舊제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 국채금융기관의 경영 혁신 촉진</p> <p>각 국채금융기관에 대한예산 승인시 경영혁신을 감안하여 지출수준을 합리적으로 통제</p>	<p>□ 국채금융기관의 객관적 경영실적 평가 및 공정한 예·결산 심의를 위해 「국채금융 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를 설치·운영 (‘06.11월)</p> <p>* 경영·예산·회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p> <p>○ 동 심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승인시 반영</p> <p>- 경영평가는 ‘07년에 파일럿테스트를 실시 하였고(‘07.9월), ‘08년부터 정식평가 실시 (‘08.5월)</p> <p>- ‘08, ‘09, ‘10년도 예산 승인시 심의회를 거쳐 예산 승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국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 보완</p> <p>'07년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방안에 제시된 국책은행간 업무중복 해소나 상업금융기관과의 차별화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시장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08.6) 민영화하고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인 한국개발펀드(KDF)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방안' 발표</p> <p>* 동 방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09.4)</p> <p>* KDF는 입법과정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09.10)</p> <p><input type="checkbox"/>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승계하여 중소기업 전문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p> <p>○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소수지분 매각을 추진</p> <p>○ 다만, 지배지분 매각은 중기대출의 상업화 진전, 여타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체계의 정착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후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금융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개선</p> <p>금융중심지 조성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금융관련 자격증 제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실무전문지식과 윤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프로그램과 관련 자격증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실시현황 등을 '08년 국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p>	<p>□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KAIST 금융대학원에 '08년 15억, '09년 10억을 출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 금융대학원에 산학 연계교육을 강화하기위한 금융전문가 과정을 설치 (100명, '07년) ○ 금융협회 연수원별로 중·장기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유도하고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09년 4개 과정*, 4.1억 지원) <p>* IB리더과정, 퇴직연금전문가과정, 자산운용·파생상품 전문가과정</p> <p>□ 금융투자분야 자격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09.12월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고, '10.24일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협회 내에 전문인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 및 시험제도를 체계적 으로 운영중임 <p>* 금융투자분야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며, 자격 제도는 자율규제사항으로서 금융투자 협회에서 규정하고 운영</p> <p><참고 : 자격제도 개편안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을 20종 → 7종(시험은 11종 → 6종)으로 대폭 통폐합함으로써 자격 제도를 단순 명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음 ○ 이번 개편안은 영업현실을 반영하되, 시험 내실화 및 보수교육 강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였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p> <p>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공익재단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실적을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정부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 설립, 신용회복기금 설치,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08.7월)하여 추진중</p> <p>○ 또한 기존의 신용회복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p> <p>-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캠프 배드뱅크 등 민간 자율프로그램과 법적 지원제도(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운영중</p> <p>- 아울러,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병원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금융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시행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상호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따른 대책 마련</p> <p>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높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대한 대책 마련</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여전사 및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LTV(50%~60%), DTI(투기지역 6억원이상 APT, 40%) 규제를 도입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p> <p><input type="checkbox"/> M&A 통한 부실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p> <p>○ 부실저축은행 인수자에 대한 영업구역외 지역에 지점설치 허용 등(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 '08.9.30)</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방카슈랑스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p> <p>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방카 슈랑스 도입 이후 대출 연계한 보험권유 행위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의 보험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카슈랑스의 부작용 발생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08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p>	<p>□ 당초 정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 설계사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p> <p>○ 4단계 방카슈랑스(개인보장성·자동차보험)를 예정대로 '08.4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p> <p>※ 설계사 실업 및 불완전 판매 방지 방안</p> <p>①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 전환</p> <p>② 해당은행과 대출 등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상충자에 대한 판매제한</p> <p>③ 은행의 보험판매시 현행 판매임직원수 2인제한 유지</p> <p>④ 판매관련 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등</p> <p>□ 그러나, '08.2월 국회논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하고,</p> <p>○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관련 규제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p>

〈별첨 2〉

2008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

목 차

1. 금융위기 대책 관련

- (1)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환되지 않도록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5
- (2) 최근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단기대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5
- (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6
- (4) 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6
- (5) 은행의 대출 거부 및 꺾기에 대해 검사해서 제재할 것 7
- (6) 펀드의 대량 환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 7
- (7) 은행채가 편입된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7
- (8) 은행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 7
- (9)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8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 (1) 은행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삭감 등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mou체결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9
- (2) 국가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규모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음 9
- (3) 공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금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0

3. (KIKO 피해 관련)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0

- 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관련)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 파생상품의 위험도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10
- 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 11
- 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 12
- 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12
-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13
- 9.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 10. KB 금융 지주의 김종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 14
- 11. (신용회복기금 관련) 안정적 재원조달방안과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 ‘금융기관 업무 협의회’의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14

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
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15
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16
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 1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융위기 대책 관련	
(1)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환되지 않도록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신속 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 ○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08.12) ○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보증지원 기준 완화 등 신용보증 확대방안 발표('09.2.12) ○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발표('09.2.25) ○ 구조조정기금 설치 등 구조조정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마련('09.3.13) ○ 사전채무조정제도 시행('09.4.8) ○ 관계기관 합동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09.4.9) ○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산법 개정('09.5.27) 및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09.5.13) ○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09.6.23)
(2) 최근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단기대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국제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위기 관리대책을 추진 <input type="checkbox"/> 이와 함께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안정기금('09.5.27) 및 구조조정기금('09.5.13)을 설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경제금융대책회의, 금융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조율</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장 상황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음</p>
<p>(4) 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은행의 신용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85%수준에서 95%로 확대하였음('10년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p> <p>※ 금융위기시 시행한 주요 중소기업금융 지원조치</p> <p>① 유동성 신속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p> <p>* '10.6월말까지 총 27.6조원 지원</p> <p>② 매출액 감소 등을 반영하여 보증 심사기준 완화, 보증절차 개선 등 보증 운영 비상조치 실시('09.1)</p> <p>③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보증지원 기준 완화, 핵심분야 보증비율·보증 한도 특례적용 등 신용보증 확대방안 발표('09.2)</p> <p>* '09.8월말까지 신규보증 28.6조원, 만기 연장 20조원 등 총 48.6조원의 보증 지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④ 은행권 자율결의로 중기대출 전액 만기연장 시행 유도(09.2월)</p> <p>⑤ 국책은행(산은·기은) 중기대출 확대*</p> <p>* ('08년 실적) 39.1조원 → ('09년 실적) 48조원</p>
(5) 은행의 대출 거부 및 꺾기에 대해 검사해서 제재할 것	<p>□ '09.4.28~5.22 기간중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일명 꺾기)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 실시</p> <p>○ 16개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 적발</p> <p>○ 위규 행위자 768명에 대하여 제재 조치(견책이상 42명, 주의 726명)</p>
(6) 펀드의 대량 환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	<p>□ 자산운용사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증권금융을 통해 한은 RP 지원('08.10)</p>
(7) 은행채가 편입된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세제적격 장기회사채펀드 의무편입대상 자산의 범위에 은행채, 카드채를 추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09.2)</p>
(8) 은행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	<p>□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제도 개선(08.10월 말)</p> <p>(비율규제 적용대상 유동성 자산·부채를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4조원상당의 신종자본증권(3.5조원) 및 후순위채권(0.5조원) 매입('09.3월말)
(9)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위, 재정부, 한은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구성('08.9.16)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 <input type="checkbox"/> '08.9.22~12.31간 증권선물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여 증권사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 '10.1.4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수수료 체계개편 및 인하 <input type="checkbox"/> '08.10.1일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여 공매도가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 ○ '09.6.1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해 공매도 제한을 해지 <input type="checkbox"/> 시장불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처벌 <input type="checkbox"/> 08.10,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 <input type="checkbox"/> 증권유관기관(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공동으로 증시안정펀드(총 5150억원 규모)를 조성·운용 - '08.11월~'09.3월간 매월 1/5 (1,030억원) 순차적으로 투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1) 은행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삭감 등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MOU체결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08.11월 은행별로 실물경제 지원과 경영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MOU를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에 임직원의 연봉 및 스톡 옵션 등 보수체계의 합리적 조정, 보상체계의 장기화, 증자 및 적정 배당수준 유지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등의 자구노력을 포함 <input type="checkbox"/> MOU 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MOU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이행실적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조치 등 시행
(2) 국기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규모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08.12.12 한-일 통화스왑 200억\$로 증액('10.4.30일 증액 종료) <input type="checkbox"/> '08.12.12 한-중 통화스왑(1,800억 위안/38조원) 체결('11.12.11일 종료 예정) <input type="checkbox"/> '09.2.4, '09.6.26, 한-미 통화스왑 만기 연장('10.2.1일 종료) <input type="checkbox"/> '10.6.22 한-일 통화스왑 만기 연장('13.7.3일 종료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공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금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경영평가시 반영 * 공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 등 반영
3. KIKO(키코) 피해 관련 -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을 통해 KIKO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전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지속 <input type="checkbox"/>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장외파생시장 감독 선진화 종합대책」을 수립·발표(08.12) ※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은 '09.1월 법 개정 등을 통해 반영 완료
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관련 -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 - 파생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미스터리쇼핑,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강화('09.1월)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 위험도 표시관련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손실범위별로 경고제도 실시 (노란색→주황색→적색경고문)('09.2월)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 방안 마련 ('08.12월) · 시장모니터링 강화: 취합정보 세분화(거래상대방, 거래목적등), 파생거래 정보DB 구축('09.12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보호 강화: 일반투자자의 헤지거래기준·투자권유준칙 마련,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상장법인 등 파생상품 투자시 일반투자자로 분류 등('09.2월) · 금융사 내부통제강화 강화 :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지정 및 금융위 보고('09.2월), 장기성과 등을 감안하도록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개선 등('10.1월) ·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도입 : 금융투자협회에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자료의 충실성, 상품구조, 타당성 등을 심의('10.6월)
<p>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p>	<p><input type="checkbox"/>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대부업법을 개정·시행('09.4.22)하였음</p> <p>○ 대부중개업의 별도 등록, 대부업자 등의 교육의무, 상호에 관한 규제,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구의무, 허위·과장 광고 규제 신설 등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p> <p><input type="checkbox"/> 대부업법 개정·시행('10.4.26)을 통해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영업방식의 투명성 제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사업장 보유 의무화, 범죄조직 관련 처벌받은 자 등 종사자 결격요건 확대, 제3자 담보제공시 확인 의무 신설 등
<p>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매분기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해 나가고 있음 ○ '09.1.21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간 필요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p>* 대부업정책협의회는 06.12월부터 운영</p>
<p>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직불·체크카드 결제범위를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시행, '09.6.13) ○ (개정前) 직불·체크카드 결제 가능 범위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로 한정(신용카드 결제 가능 범위와 동일) ○ (개정後) 직불·체크·신용카드 결제 범위 규정을 네거티브 형태로 변경하는 한편,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체크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 등도 결제가 가능토록 결제 범위를 확대 <p>* 신용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에 대해 결제 금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아울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차등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10.1.1)</p> <p>○ (개정前)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동일(20%)</p> <p>○ (개정後)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5%로 상향조정</p>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p>□ '09년중 : 국민·신한은행 등 금융회사의 일회용비밀번호(OTP) 사용 등 전자금융보안인프라 점검(은행(21)·금융투자(7)·보험(7)·카드(5)·기타(2))</p> <p>* 점검결과 : 금융회사가 OTP 등 현행 보안매체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새로운 보안매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토록 지도</p>
9.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의 관리·감독권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예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수행하겠음</p> <p>※ (참조) 현행 자본시장법은 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p> <p>* 제299조 : 정관 변경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함</p> <p>* 제305조 : 예탁업무규정과 결제업무규정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여, 그 외 업무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06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제307조: 금융위원회는 예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의 시정명령·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p>10. KB금융지주의 김중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p>	<p><input type="checkbox"/> '08.10.22 공직자윤리법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거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p> <p>○ '08.12.12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안부를 경유하여 접수</p> <p><input type="checkbox"/> 유권해석 요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p> <p>(이유)</p> <p>○ 취업제한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p> <p>○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영리업체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p> <p>○ 신설 등의 이유로 고시에서 누락된 영리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p>
<p>11. 신용회복기금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재원조달방안과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 - '금융기관 업무 협의회'의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회사 배분금 4,995억원을 출자받음으로써 ('09.1월) 신용회복기금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법인세 이연 조치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1,942억원 추가 재원 확보('09.5월) □ 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도 개정('08.12월) □ 법적근거 마련 이전에도 신용회복기금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중 □ '금융기관 업무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을 운용 <p>* 연체채권 매입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금융회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08.12월 1천만원 이하 → '09.4월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으로 확대)</p>
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는 「'09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 지침」을 통해 ○ 산은·수은·기은·예보·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09년도 임원 보수를 평균 10% 내외로 감액하고, 총인건비를 동결
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제85조의2)을 마련 국회에 제출('08.12.18), 국회의결('10.6.29)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또한 「10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전년대비 5% 삭감 편성토록 하고, 대졸 초임도 20%내외 삭감</p> <p>○ 향후 시행령 등 하이 법령 개정시 설계사에 대한 보수교육 제도가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p>
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p>□ 주택금융공사법 개정('10.1.25 시행)으로 CP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2월부터 발행 시작('10.5.27까지 누계 7,800억원)</p>
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	<p>□ 외환, 씨티, SC제일은행의 경우 은행장 및 임원 급여에 대해 동결 또는 10% 자율적으로 삭감한 바 있으나, 급여 금액 수준의 공개여부의 경우, 이의 제출을 요구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p>

〈별첨 3〉

2009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

목 차

1.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관련

- 1) 외환관리에 있어 예대율 관리, 통화스왑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7
- 2)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등 세계경제의 침체(더블딥) 우려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7
- 3)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치(기금, 펀드 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8
- 4)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8

2. 미소금융 및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 1) 미소금융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 9
- 2)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9
- 3) 미소금융재단 이사회가 방만경영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0
- 4)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인력의 전문 능력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10
- 5) 미소금융이 기존의 서민금융(희망홀씨 대출 등)과 중복, 상충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 6) 서민에 대한 대출시 정부의 보증을 통한 신용을 보강하는 방안과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 11

3. 녹색금융추진관련

- 1) 녹색금융의 정의와 지원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 11

4.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관련

- 1)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감독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MOU 점검방식의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12

5. 한국은행법 개정관련

- 1)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MOU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부여 등이 우리 금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12

6. 신용카드 관련

-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하여 원가공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13
- 2)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 3)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15

7. 주택담보대출관련

- 1)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DTI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8.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 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 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꺾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6
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원실적이 미흡하므로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 16
10. 중소기업지원관련
 - 1) 향후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신·기보 적정 보증 규모 확보 등)의 마련과 함께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 18
 - 2)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를 미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T/F 구성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8
 - 3)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19
11. 현행 대출금리의 산정기준인“CD+가산금리”체계에 대하여 CD금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가산금리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금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 및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 20
12.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 해소와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20
13.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21

14.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2

15.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베드뱅크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면책기록의 보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

16.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1)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정책 수립)하고, 금융민원의 원활한 해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23

17.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 등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24

18. 금융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4

19. 펀드 관련

1) 대리인에 의한 펀드 개설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

2)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펀드 운용보수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6

3)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방지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6

4) 펀드 판매회사가 높은 판매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지속되므로, 숨겨진 비용인 판매보수 폐지 및 판매수수료와의 이중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

- 5)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위한 미스터리쇼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28
20. 은행의 DCDS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할 것 28
21. 은행연합회를 공적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단체로 은행 법상에 규정하되,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 구조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29
22. 금융보안체계 구축 관련
- 1) 인터넷공간에서 해킹 등에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보안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30
23. 신용평가사의 자회사가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로 오인될 활동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30
24.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협회의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연수교육 업무를 부여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회원에 대 한 연수 및 교육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 구할 것 31
25. 금융위원회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해당 부서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잦은 인사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
- 1)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 31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관련	
1-1) 외환관리에 있어 예대율 관리, 통화스왑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강화 방안' 시행('10.1.1일)</p> <p>*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 및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 강화,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신설,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 신설</p> <p><input type="checkbox"/> '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시행('10.8.1일)</p> <p>* 외화유동성비율 일일 관리 및 중장기 외화 자금관리 추가 강화,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신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추가 강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각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p>
1-2)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침체(더블딥) 우려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노력* 강화</p> <p>* 금융회사 외화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마련, 글로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적극 참여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시장의 잠재적 취약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p> <p>○ 또한, G20, FSB 등 국제적 논의와 연계 하에 국내 금융 건전성 규제체제 정비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3)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치(기금, 펀드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비상조치*의 내실 있는 운용과 점검 추진</p> <p>*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구조조정 기금,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등</p> <p>○ 아울러 경제·금융 여건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정상화 추진</p> <p>* 은행 외화채무지급보증 종료('09.12)</p> <p>* 중소기업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10.7)</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아직 불안요인이 진존하는 만큼 비상조치를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p>
<p>1-4)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비상조치 환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추진</p> <p>○ 중소기업 활성화·설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적 경기 회복기반 마련</p> <p>○ 기업구조조정추진 등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추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미소금융 및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2-1) 미소금융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행의 기부금은 자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재출연되어 각 기업·은행재단이 자율적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수행중 ○ '10.9.28 현재, 75개 기업·은행권 재단 및 지역지점 설립이 완료 ○ 기업·은행이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은행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2-2)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중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정비를 추진 중 ○ 휴면예금법 개정안 국회심의 ('10.9.14,정무위 상정) □ 또한 미소금융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선정위원회 (7인)」를 외부전문가(5인) 중심으로 기 재편하고 사업자 선정기준도 이사회에서 사전결정 ○ 1차('09.12)·2차('10.4) 지역법인 대표자 공모 과정에 기 적용했고 앞으로도 선정 기준·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3) 미소금융재단 이사회가 방만 경영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재단의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 (금융위원회는 당연직 이사로 미소금융재단이사회에 참석)</p> <p>* '10.2월, 6월중 감사원의 미소재단 감사실시</p>
2-4)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의 전문 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운영인력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운영인력의 전문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방안을 시행중</p> <p>○ 예) 미소희망봉사단을 통한 전문인력 재능기부, 현대차미소학습원 운영, 금융연수원과 공동으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p>
2-5) 미소금융이 기존의 서민금융 (희망홀씨 대출 등)과 중복 상충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과 희망홀씨대출은 대출자금의 용도가 상이하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p> <p>○ 미소금융 : 창업자금·운영자금 등 희망홀씨대출 : 생계비 등 일반대출</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지점 방문자 중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희망홀씨대출 등 기타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병행 중</p> <p>○ 다만, 과도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연계 관리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6) 서민에 대한 대출시 정부의 보증을 통한 신용을 보장하는 방안과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을 출시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생계자금, 사업자금을 지원('10.7.~) <input type="checkbox"/>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보증을 통해 저소득층·저신용층 서민을 위한 대출(햇살론)을 확대 <input type="checkbox"/>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실시중
<p>3. 녹색금융추진관련</p>	
<p>3-1) 녹색금융의 정의와 지원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책금융기관들이 인증대상 녹색기술·녹색사업(지경부 고시)을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지원을 하도록 조치 <input type="checkbox"/> 또한, 금년 4월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하여, 세제혜택(민간투자자)을 받는 민간금융회사의 녹색금융상품 지원 대상을 녹색인증사업 등으로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녹색금융 및 녹색펀드의 운용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기준」, 「녹색펀드 판매·운용 모범기준」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p>4-1)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MOU 점검방식의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예금보험공사는 MOU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MOU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1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체결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방식을 개선하여 예방기능을 강화 ○ MOU 재무목표 부여방식과 재무지표 산정방식 개선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예보가 MOU 이행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적절한 사후 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리 감독하겠음</p>
5. 한국은행법 개정관련	
<p>5-1)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MOU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부여 등이 우리 금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정보공유 MOU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보 등 각 기관은 관련정보를 원활히 공유하고 있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5개 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정보공유 협회 등을 통해서 MOU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개선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신용카드 관련</p> <p>6-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하여 원가공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① (재래시장 가맹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상한을 20~22%에서 1.6~1.8%로 인하</p> <p>*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재래시장 (약 1,550개)</p> <p>○ 다만, 유흥주점, 무도장, 성인오락실, 귀금속점 등 영세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가맹점은 제외(중소 가맹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p> <p>※ (참고) 현재 서울시내 3大 대형마트 신용카드수수료율 : 1.6~1.9%</p> <p>② (중소 가맹점)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p> <p>○ 신용카드사별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이 2.0~2.15%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기존에 2.0~2.3%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가맹점 (간이과세자)도 일부 인하</p> <p>※ (참고) 현재 서울시내 3大 대형백화점 신용카드수수료율 : 2.0~2.4%</p>
<p>6-2)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p> <p>□ (현금서비스 이자율) '10년 9월기준 카드사는 취급수수료 폐지(8개사) 또는 일부 인하 등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카드사별 인하폭(취급수수료 포함)은 0.3%p~4.06%p 수준이며, 평균 현금 서비스 금리도 '09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 지속</p> <p>* 26.4%('09.1Q)→25.9%('09.2Q) → 25.7%('09.3Q) →25.7%('09.4Q)→24.6%('10.1Q)</p> <p>○ '10년 3/4분기 중 취급수수료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 인하한 카드사 중</p> <p>- 일부 카드사가 추가로 취급수수료 폐지할 예정(10개사)</p> <p>⇒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급수수료 폐지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지속 유도</p> <p>□ (체크카드 수수료율) 다음과 같이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旣 마련</p> <p>○ 기존에는 직불·체크카드 결제 가능 범위를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로 한정(신용카드 결제 가능 범위와 동일)하고 있었으나 결제 가능 범위 규정을 네거티브 형태로 변경하는 한편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체크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 등도 결제가 가능토록 결제 범위를 확대</p> <p>* 신용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에 대해 결제 금지</p> <p>② 2010년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율 차별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0.1.1)</p> <p>* 신용카드 : 20%, 체크카드 : 25%</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카드사의 체크카드 수수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p> <p>*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비중</p> <p>· 2.9%(’05)→6.0%(’07)→9.9%(’09)→10.8%(’10.1Q)</p>
<p>6-3)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p>	<p>< 향후 추진계획 ></p> <p>□ 최근 포인트·마일리지의 사용처가 다양화되고 그 이용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p> <p>○ 금융당국은 거래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포인트 등 발행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음</p> <p>□ 또한,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성남 의원)이 발의되어 있는 바</p> <p>○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갈 계획</p>
<p>7. 주택담보대출관련</p>	
<p>7-1)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DTI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각 개별법에 근거한 감독규정으로 규제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추이 등 관련동향을 보아가며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p>
<p>8.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 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쪼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2010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을 영업점 경영실적평가 기준(KPI)에서 제외('10. 1. 11) 하여 영업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과당 유치 유인 구조를 개선</p> <p><input type="checkbox"/> 불완전 판매 방지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캠페인 등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실수요자 중심의 영업 추진</p>
<p>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원 실적이 미흡하므로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08년 9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2년째 운영 중</p> <p><input type="checkbox"/> 그동안 지원센터는 금융기관의 질의·건의사항 처리와 애로사항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금융환경개선에 노력</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해왔으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심지 정책 홍보를 위한 해외 IR('09.11월, '10.5월)을 실시 - 서울시-맥쿼리그룹간 한국내 사업 확대를 위한 MOU('09.11월) 및 부산시-칼리온 은행간 선박금융 협력강화 MOU 체결지원('09.11월) - 부산시-佛 Orbeo社간 탄소배출권시장 협력을 위한 MOU 체결지원('10.5월) ○ 또한, 금융감독법규 영문화('09.12월), 금융거래 가이드북 발간('10.1월), 금융회사 외국인 임원의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10.4월)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p><향후 추진계획></p> <p>□ 앞으로도 국내사의 해외진출과 외국사의 국내진입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중소기업지원관련</p> <p>10-1) 향후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신·기보 적정 보증 규모 확보 등)의 마련과 함께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한시적 확대지원조치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10년 업무계획에 반영</p> <p>○ '10년중에도 위기이전인 '07~'08년 보다 확대 보증지원</p> <p>* 신·기보 보증공급(조원): ('07) 40.6 → ('08) 41.6 → ('09) 55.4 → ('10) 52.6</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도 병행 추진 ⇒ '10년 업무 계획에 반영</p> <p>○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제한적으로 보증 만기연장</p> <p>○ 비효율적 부문(한계기업 고액·장기보증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보증감축 및 구조조정 유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위기대응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 상황과 중기대출·보증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한계기업 등의 구조조정 촉진</p>
<p>10-2)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를 미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T/F 구성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4.21일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방안” 발표</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주요내용) ① 보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 부과 금지, ② 보증부 대출 금리 보증기관에 통보, ③ 보증부 대출 금리관련 은행 내부통제 강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방안 시행 및 사후 점검</p> <p>○ 또한 여신거래약정서 주요사항 기재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p>
<p>10-3)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정부는 금융위·기재부·지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육성 방안 발표(3.18)</p> <p>* (주요내용) ①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범위 규정(지경부), ② 중견기업 조세 부담 완화(기재부), ③ 중견기업 금융 부담 완화(금융위)</p> <p>○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중견기업 자금 공급, 신기보 보증 종료 부담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 개정 즉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완료</p> <p>* 정책금융공사 : 자금공급 기준 마련 * 신·기보 : 보증 종료 부담 기준 마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 개정과 동시에 중견기업 지원 개시</p>
<p>11. 현행 대출금리의 산정기준인 "CD+가산금리" 체계에 대하여 CD 금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금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 및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은행연합회가 '10.2월부터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를 고시하고, 시중 은행이 이를 이용한 대출상품을 출시</p> <p>○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코픽스 연동 대출 도입으로 고가산금리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p> <p>※ CD연동 대출의 코픽스 전환 허용으로 기존 차주의 고가산금리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p> <p><input type="checkbox"/> 다만, 금리는 시장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나, 코픽스 도입 전후 신규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p> <p>* (1월) 5.88 (3월) 5.47 (5월) 4.78 (7월) 4.70</p>
<p>12.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 해소와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의 고금리 서민대출 문제 해소를 위해</p> <p>○ '10.4.7 저축은행의 보증부 서민대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p> <p>○ 이러한 보증을 통해 서민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유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화 방지를 위해 감독 및 검사 강화방안*을 포함한 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 의결('10.3.22 공포, '10.9.23 시행)</p> <p>*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Dynamic fit & proper test) 실시 등 소유·경영 지배구조 개선,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한도 설정 등 자산운용 규제 강화 등</p> <p>○ 아울러, '10.4.9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시행령 및 감독규정 반영완료 '10. 9.)</p> <p>- 저축은행의 PF 등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강화</p> <p>- 저축은행의 외형 확대에 걸맞는 건전성 기준 강화(예: BIS비율을 5%에서 7%로 단계적 상향조정 등)</p>
<p>13.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활용도 제고('09.11월)</p> <p>○ 구조조정기금 투입 비율을 상향(40% → 60%)하고 건조 중 선박*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운영방식 개선</p> <p>*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는 지원을 약정하고, 건조완료 후 매입대금 지급 및 인수</p> <p>○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 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0.8월까지 7척(건조중 선박 2척 포함)을 매입하였고, 이중 6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금 투입비율 상향조정(40%→60%)</p> <p>□ 한편, 금년 해운업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6월말)를 통해 1개사(C1)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p> <p>○ 워크아웃 추진 업체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중</p> <p><향후 추진계획></p> <p>□ '10년 하반기에도 선박펀드 등을 통해 해운사 선박 매입을 지속 추진</p> <p>□ 현재 추진중인 워크아웃 등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채권단을 적극 독려</p>
<p>14.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 서민금융활성화 대부업분과 TF 운영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논의('10.2~)</p> <p>○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발표('10.4)</p> <p>-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이원화하는 제도 개선 방향 포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TF 등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세부방안 마련</p>
<p>15.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면책기록의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09.10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추가 단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채무상환의지 약화 등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며</p> <p>○ 금융소비자 본인의 신용관리는 물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p> <p><input type="checkbox"/> 또한, 민간 배드뱅크의 과잉·불법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음</p>
<p>16. 금융소비자보호관련</p>	
<p>16-1)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정책 수립)하고, 금융민원의 원활한 해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KDI, '10.04.13.)</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KDI)을 토대로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가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7.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 지역 등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올해부터 실무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의 전문인력양성을 지원(전체 교육비의 35%)</p> <p><부산지역 교육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145명 교육에 총 3.7억원 지원 ○ 과정: 선박금융·국제금융(교육기관 : 금융연수원) 해양파생상품, 녹색산업(금융투자협회), 해상보험(보험연수원)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p>
<p>18. 금융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분야 자격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09.12월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고, '10.2.4일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협회 내에 전문인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 및 시험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중임 <p>* 금융투자분야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며, 자격제도는 자율규제사항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하고 운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참고 : 자격제도 개편안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을 20종 → 7종(시험은 11종 → 6종)으로 대폭 통폐합함으로써 자격제도를 단순명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음 ○ 이번 개편안은 영업현실을 반영하되, 시험 내실화 및 보수교육 강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였음 <p>□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제도로써 업무감독과 교육은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부터 전문인력 양성확대를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1,000명으로 100%확대했으며 2007년에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였음 <p><향후 추진계획></p> <p>□ 금융투자분야 전문인력은 향후로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인력위원회와 전담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해나갈 계획임</p>
<p>19. 펀드 관련</p> <p>19-1) 대리인에 의한 펀드 개설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 및 개선방안></p> <p>□ 대리인을 통한 펀드가입시 절차 관련 국내 실태 및 외국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음</p> <p>□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표준 투자권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준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판매절차 개선 TF 논의 결과)</p> <p>* (예시)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성향 파악을 허용하는 방안 등</p>
<p>19-2)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펀드 운용보수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 펀드 판매 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하였음('09.12.21 시행)</p> <p>○ 판매 보수 : (종전) 연 5.0% 이내 → (변경) 연 1.0% 이내</p> <p>* 체감식인 경우 1.5%까지 허용하되, 2년 이후부터 1.0%이내로 인하</p> <p>○ 판매 수수료 : (종전) 연 5.0% 이내 → (변경) 연 2.0% 이내</p> <p>□ 신설펀드에 준해서 기존펀드 판매보수도 자율적으로 인하('10.5.3부터 단계별 시행중)</p>
<p>19-3)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 인덱스펀드의 이해상충 발생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p> <p>○ 인덱스펀드의 운용사는 미리 발표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자산을 편입하는 소극적 운용을 담당하므로 이해상충 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편, 계열사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원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으며,</p> <p>○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가 존재</p> <p><향후 추진계획></p> <p>□ 인덱스펀드 출현으로 인해 수익자와 계열그룹간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임</p>
<p>19-4) 펀드 판매회사가 높은 판매 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지속 되므로, 숨겨진 비용인 판매보수 폐지 및 판매 수수료와의 이중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p>	<p><처리결과></p> <p>□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을 설정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발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p> <p>○ 판매보수를 완전히 없앨 경우 판매 수수료가 올라가는 풍선효과 등을 감안하여 판매보수제 자체는 존치하되, 판매보수 상한을 설정(연간 1.5% 이내) 하였음</p> <p><향후 추진계획></p> <p>□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 인하에 따른 시장변화를 보아가며, 판매보수추가 인하 및 판매보수·수수료 일원화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9-5)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스터리쇼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09년중에 미스터리쇼핑을 2차례 실시한바 있음</p> <p>○ (제1차: 3~ 4월) 20개 판매사, 200개 지점</p> <p>○ (제2차: 9~10월) 30개 판매사, 450개 지점</p> <p>※ '10년 미스터리쇼핑은 6월중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중임</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실시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등을 개별금융회사에 서면통지함으로서 판매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사항 등의 이행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임</p> <p><input type="checkbox"/> 감독역량, 효과 극대화 요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 판매사 및 점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임</p>
<p>20. 은행의 DCDS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p>	<p>< 처리결과 ></p> <p><input type="checkbox"/> 현재 DCDS 업무가 은행의 부수업무로 영위가 가능한지, 보험업의 일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에 DCDS 취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조항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있어, 계속 논의중에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은행의 부수업무에 DCDS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박종희 의원안, 09.9.9)이 발의되었으나,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대안폐기되었음</p>
<p>21. 은행연합회를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단체로 은행법상 규정하되,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p>	<p>< 향후 추진계획 ></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시스템 측면에서 은행연합회에 대한 자율규제기능의 법적 부여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 규제기관을 통합·일원화하는 국제적 경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 <p><input type="checkbox"/> 또한,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법상 모든 금융업권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기관으로서의 객관성 및 대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p>* 신용정보협의회 구성 및 운용 개선, 자문위원회 설치 등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2. 금융보안체계 구축 관련</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 보안 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 및 개선방안></p> <p><input type="checkbox"/> 행안부 및 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11년 정보화 인력을 일부 확충(7급 1명) 하였고, 향후 사이버 테러의 증가 등 위기 대응 업무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화 인력 추가 확충 및 금융보안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p>
<p>23. 신용평가사의 자회사가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로 오인될 활동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p>	<p>< 처리결과 ></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신용정보법('09.10월 시행)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산정하는 행위”를 “신용조회업”에 명확히 포함하여 감독·당국의 규율범위에 편입</p> <p>○ 신용조회업에 편입될 경우, 법적요건 구비 후 금융위 허가 취득,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을 받음</p> <p>○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겸업 가능하며,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직 및 업무체계 구비 필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4.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협회의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p><input type="checkbox"/> 현재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 · 교육업무를 할 수 있음</p> <p>○ 추가적인 정부업무 위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협회의 조직과 인원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음</p>
<p>25. 잦은 인사 관련</p> <p><input type="checkbox"/>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p>	<p><처리결과 및 개선방안></p> <p><input type="checkbox"/>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이직,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 등으로 불가피한 보직 이동이 있었으나</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정기 인사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금융위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p>

2. 최근 3년간(2008부터 2010까지)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

☐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서 : (별첨 1)

☐ 감사원 수사요청서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원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

○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처분요구서(별첨 2)

○ 2009회계연도 결산감사 처분요구서(별첨 3)

[참고사항]

○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금융위원회 설립
(‘08.2.28) 이후 ①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09.11)
②2009회계연도 결산감사(‘10.3), ③서민금융 지원실태
(‘10.2~10.4)* 등 3차례 실시된 바 있으며,

○ 이 중 ③서민금융 지원실태(‘10.2~10.4)의 경우 2010년 8월
현재까지 감사원은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함

<별첨 1>



감 사 원

바른감사
바른나라


수신자 금융위원회 위원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조사개시통보

우리 원에서 2009. 7. 27. 다음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음을 감사원법 제 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합니다.

- 다 음 -

소 속	직 · 성명	조사대상 사건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인사팀장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끝.

감 사 원



감사주사보

김수만

산업금융감사국 전결 07/27

제3과장

조규호

첨조자

시행 제3과-1237

(2009. 07. 27.)

접수

우 110-706 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12(삼정동 25-23)

/ <http://www.bai.go.kr>

전화 02-2011-2131

전송 02-2011-2135

/ udb99@bai.go.kr

/ 비공개(6)

〈별첨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

2009 . 11.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	---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2
---------------------------	---

1.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부적정(통보)	2
--------------------------------	---

2.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 감사감독 부적정(주의통보)	6
---	---

3.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 부적정(주의2)	15
--------------------------------------	----

4. 인건비 과다편성·집행 및 특별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주의2)	24
---	----

5.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부적정(주의2)	33
--------------------------------------	----

6.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36
-------------------------------------	----

7. 금융법규 관련 유권해석사례 공개 부적정(주의)	39
------------------------------------	----

8. 파견 인력 운용 부적정(주의)	42
---------------------------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시장 질서 유지, 금융산업 육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직 운영과 예산·인력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방만한 기관운영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범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본부 및 대전·대구·광주·부산지원을 대상으로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9. 25. ~ 11. 3.) 종료 후 2006년 2월부터 2009년 5월 말까지 집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은행·증권·보험·비은행 업무권역별 금융감독업무가 적정한지, 인건비·경비 등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조직 운영과 인력 운용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는 데 감사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인원 등

2009. 5. 28.부터 같은 해 6. 10.까지 10일간 예비조사를 한 후, 같은 해 6. 15.부터 7. 17.까지 감사인원 2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11. 12.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하 “펀드”라 한다)을 운용하는 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1. 펀드 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상 등록 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 부적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2009. 5. 4.부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판매회사는 간투법에 따른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¹⁾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별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전환등록이 되지 않은 펀드의 경우에는 추가 자금모집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환매만 발생하는 등 펀드 수탁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전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의 전환등록 여부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탁됨

그런데 2009년 6월 말 현재 간투법상 펀드의 전환등록 현황²⁾을 보면 공모·추가형펀드 3,423개 중 2,216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환 등록된 반면, [별표 1] “공모·추가형펀드의 미전환 현황”과 같이 증권펀드 등 1,207개(계좌 수: 605,944개)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환등록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중 수탁고 100억 원 미만인 펀드가 1,136개(94%)로 대부분 소규모 펀드에 해당되어 나중엔 전환등록 되지 않는 한 신규자금 모집이 불가능한데도 간투법상 펀드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들이 개별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법 펀드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간투법상 펀드 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전환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개별통보하도록 하는 등 간투법상 펀드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2. 소규모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부적정

수탁고 규모가 적은 소규모 펀드는 분산투자의 어려움이 있는 등 펀드재산의 운용효율성이 떨어지고, 법정보고서 작성비용, 회계감사비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비용이 대형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 계상될 뿐 아니라 펀드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 수가 증가하여 소규모 펀드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기 쉽다.

실제로 2009년 6월 말 현재 펀드의 수익률은 [별표 2] “펀드규모에 따른 수익률 현황”과 같이 수탁고 100억 원 이상의 펀드의 수익률이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의 수익률보다 1년 및 3년 펀드수익률이 최고 128.72%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간투법 시행으로 2004. 1. 5.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도 포함

또한, 소규모 펀드의 수는 2006년 4,368개, 2007년 5,136개, 2008년 6,18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9. 6. 30. 현재 소규모 펀드의 수는 [표 1]과 같이 6,054개로 전체 펀드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수탁고별 펀드 현황 (2009. 6. 30. 기준)

(단위: 개, 십억 원)

펀드 규모	10억 원 미만		10~100억 원		100억 원 이상		합 계	
	펀드 수	수탁고	펀드 수	수탁고	펀드 수	수탁고	펀드 수	수탁고
공모	1,479	603	1,679	8,231	1,400	248,364	4,558	257,198
사모	598	286	2,298	7,902	1,841	108,758	4,737	116,946
합계	2,077	889	3,977	16,133	3,241	357,122	9,295	374,144

자료: 금융투자협회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 2-11조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펀드의 판매회사가 투자자 개인의 펀드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잔고통보제를 실시하고 있고,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에 펀드조회 등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잔고통보 및 펀드조회내용에 펀드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환매 등의 의사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잔고통보 및 펀드조회내용에 펀드 규모를 포함하여 통보하거나 공시하는 등 펀드 투자자가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집합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펀드로 전환되지 않은 펀드를 펀드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 ② 펀드 판매회사에게 펀드조회 내용 등에 펀드 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공모·추가형 펀드의 미전환 현황 (2009. 6. 30. 기준)

(단위: 개)

구 분		펀드 수	계좌 수
증권펀드	주식형	75	4,380
	채권형	479	389,387
	혼합주식형	161	34,915
	혼합채권형	370	24,589
파생상품펀드		12	3,935
부동산펀드		-	-
실물펀드		-	-
단기금융펀드(MMF)		102	148,518
재간접펀드		8	220
특별자산펀드		-	-
합 계		1,207	605,944

주: 1) 펀드구분기준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펀드 분류기준

2) 모펀드, 종류형 클래스펀드 및 기금 개별펀드 제외, 계좌 수는 '09. 5. 31.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별표 2]

펀드규모에 따른 수익률 현황(2009. 6. 30. 기준)

(단위: 억 원, 개, %)

구 분	운용 사명	수탁고 합계	펀드 유형	펀드 수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A)	100억 원 이상(B)	(B)-(A)	100억 원 미만 (C)	100억 원 이상(D)	(D)-(C)
1	○○○	566,482	채권형	44	48	6.89	8.59	1.7	15.45	17.05	1.6
			주식형	59	59	-15.8	-14.75	1.05	28.94	11.01	-17.93
			단기금융	9	11	3.48	4.35	0.87	13.2	14.35	1.15
2	○○○	462,979	채권형	7	25	9.64	9.4	-0.24	17.28	18.08	0.8
			주식형	45	88	-21.68	-14.95	6.73	18.78	21.67	2.89
			단기금융	-	8	-	4.08	-	-	13.33	-
3	○○○	255,206	채권형	74	33	0.04	7.36	7.32	-0.39	15	15.39
			주식형	24	46	-25.42	-19.06	6.36	7.5	30.79	23.29
			단기금융	11	9	-0.44	4.13	4.57	6.36	13.96	7.6
4	○○○	228,635	채권형	27	38	11.64	3.82	-7.82	13.24	14.65	1.41
			주식형	13	23	-22.49	-17.8	4.69	7.26	20.11	12.85
			단기금융	14	6	2.69	4.44	1.75	11.05	14.79	3.74
5	○○○	202,539	채권형	94	35	5.98	8.77	2.79	14.16	17.42	3.26
			주식형	54	45	-10.85	-4.39	6.46	17.02	26.17	9.15
			단기금융	15	8	3.42	4.56	1.14	12.28	15.03	2.75
6	○○○	186,070	채권형	59	26	5.79	8.84	3.05	13.89	17.78	3.89
			주식형	37	31	-16.73	-14.12	2.61	3.72	14.69	10.97
			단기금융	6	7	4.17	4.25	0.08	13.33	13.95	0.62
7	○○○	135,423	채권형	142	25	7.76	4.27	-3.49	35.19	-	-
			주식형	7	14	-26.85	-24.37	2.48	-12.67	116.05	128.72
			단기금융	18	3	-	7.32	-	-	18.06	-

자료: 금융투자협회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 검사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을 검사·감독¹⁾하고 있다.

실손(實損)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²⁾가 질병·상해로 입원(또는 통원)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³⁾으로 2003. 9. 30.까지는 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라 한다)에서만 판매하였고,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라 한다)는 같은 해 10. 1.부터 단체, 2008. 5. 1.부터는 개인에게도 위 보험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다.

2003년 9월 이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 등 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고 시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해야

1)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1조와 「보험업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검사 그리고 「보험업법」 제19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위탁받은 보험회사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음.

2)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보험수익자와 다를 수 있으나 이 처리안에는 모두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서술하였음.

3) 주로 상해·질병·운전자 보험의 주계약이 아닌 특별약관(특약)으로 부가되어 판매되고, 1999년 이전부터 판매된 상해의료비 및 1999년부터 판매된 입·통원의료비(상해, 질병) 상품이 있음.

하는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을 비례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보험금액을 중복하여 지급⁴⁾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에게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하는 등 [표 1]과 같이 2003회계연도까지 손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표 1] 실손의료보험 현황

(단위: 천 건, 백만 원, %)

회계연도	경과계약 건수 ¹⁾	사고건수	납부보험료 (A)	사고발생률	지급보험금 (B)	건당 지급보험금	손해율 ²⁾ (B/A)
2001	13,291	681	230,213	5.12	291,613	0.4282	126.7
2002	15,940	814	273,563	5.11	349,482	0.4291	127.8
2003	18,397	1,078	352,342	5.86	465,139	0.4316	132.0
2004	21,239	1,144	374,246	5.38	485,160	0.4242	129.6
2005	25,370	1,600	512,848	6.30	594,471	0.3717	115.9
2006	30,437	2,327	650,794	7.65	715,904	0.3076	110.0
2007	38,122	3,382	861,311	8.87	947,010	0.2799	109.9

주: 1) 회계연도 중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약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회계기간 동안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경우 1건으로 간주함. 만약 회계기간 중 6개월간 계약을 유지할 경우 0.5건으로 간주함.

2)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됨.

자료 : 보험개발원

이에 따라 2003. 7. 10. 위 감독원에서는 ‘의료비 보험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어 경영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같은 해 10. 1. 이후에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이하 “신계약”이라 한다)은 보험약관대로 비례분담⁵⁾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다.

4) 「상법」 제672조에서 보험계약을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비례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자신의 책임금액 이상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이고, 고객신뢰보호 상 관례적으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었던 것임.

한편, 손보사들은 같은 해 9. 30.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이하 “구계약”이라 한다)과 여러 개의 신계약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시 구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본인 부담금 의료비가 기존 계약에서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남은 보험금 잔액을 신계약에서 비례분담하도록 협의 하여 보험금을 보상(이하 “잔액보상방식”이라 한다)하는 등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상법」 제672조의 실손보상 원칙⁶⁾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발생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간 비례분담하여 보상하고 있다.

1.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계약자료 관리 부적정

위 감독원에서는 2009. 4. 14. 손보사⁷⁾들이 신계약의 중복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비례분담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고, 가입금액을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오해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보험모집 시 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비보험 계약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반드시 신계약의 중복가입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5) 2003. 10. 1.부터 각 손보사의 신계약 자료를 손해보험협회에 집적하여 각 손보사에서 공유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 시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을 비례보상하고 있음.

6)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만을 보상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실제손해를 초과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임.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과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과거부터 계약 간에 비례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었고, 실손의료보험의 성격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보험과 유사하므로 위 감독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7) 생보사는 2008년 5월부터 개인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으로 판매(단체보험은 이전부터 판매)하였으므로 중복가입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 위 감독원에서 손보사만을 언급.

8) 보험계약자가 보장내용(상해, 질병 등)이 같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다수 가입(보장금액 100만 원, 1,000만 원 등)하여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보장금액이 중복되는 부분(100만 원까지)은 각각의 보험상품에서 보험금을 비례분담 받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의 문제가 발생함.

이 후 금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7. 1.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위 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3을 개정하였고, 위 감독원에서는 같은 해 6. 30. 위 제도 개선방안의 내용과 같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신계약의 중복가입 뿐만 아니라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신계약을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별표 1]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비교 명세”와 같이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비례보상 받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감독원에서는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신계약에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176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집적·관리하고 있는 구계약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고,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위 시행세칙을 개정하여야 했으며, 위 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 전산자료에 구계약 자료입력을 누락하거나 실효·해지 또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별표 2]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현황”과 같이 2002년 8월까지의 집적률이 최대 30%에 불과하며, 같은 해 8월 이후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구계약 자료의 정확성이 낮은데도 손보사로 하여금 유효한 계약자료를 모두 입력하도록 감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가 구계약 자료를 활용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위 시행세칙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위 위원회도 위 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2009. 5. 31. 현재 225만여 건의 유효한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 중복여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계약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게 될 우려가 있다.

[표 2] 손해보험회사의 구계약 보유 현황

(단위: 천 건)

보험사명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등 6개 ^주 손해보험사	합계
보유건수	1,288	273	238	187	84	58	125	2,253

주) ●●손해보험(43천 건), ■■손해보험(34천 건), ◆◆해상보험(21천 건), □□손해보험(15천 건), △△해상보험(9천 건), ◎◎손해보험(3천 건)

자료 : 금융감독원

2.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방식 부적정

금융감독원에서는 2003년 7월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다른 보험사에 중복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가 최초로 청구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별 분담액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비 보험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시달하였고, 2007. 11. 2. 보험금을 처음 청구받은 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지급액을 포함한 해당 보험금 전액을 지급 후 다른 회사와 각사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도록 ‘다수보험 중 의료실손 보험계약의 보상체계 정비’ 공문을 각 보험회사에 시달하였다.

그런데도 위 감독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 막연히 정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만 시달하였을 뿐 아니라 지침을 최초로 시달한 지 6년이 지난 2009. 7. 17. 현재까지 보험업계에서 정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각각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⁹⁾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2009. 6. 16.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0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검토한 결과 [별표 3]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비례분담 현황”과 같이 총 537,189명이 총 550,124건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들 중 12,230명은 중복 가입으로 2개 이상 보험회사에 25,165건(1인당 평균 2.06건)을 각각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진단서 발급비용¹⁰⁾을 최대 12백만여 원¹¹⁾만큼 부담¹²⁾하였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최대 12,935회 중복 방문¹³⁾하는 등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치할 사항 [통보] 금융감독원장은

9) 금융감독원에서는 2007. 12. 28.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서류의 경우 발급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제출서류(진단서 등) 대신 간이서류(입퇴원확인서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서류의 중복제출 및 중복청구를 방지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지침 등을 통보한 바 없음.

10) 보험금 청구 시 필수서류인 진단서는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다르므로 1부를 초과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1부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11) $(25,165\text{건} - 12,230\text{건}) \times 1,000\text{원} = 12,935,000\text{원}$

12) 10개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거서류의 요구기준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진단서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액의 기준이 보험사별로 다르고, 일부 보험사에서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1개월간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한 25,165건은 진단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 처리안에서는 모두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음.

13) 10개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방법을 검토한 결과 직접 방문, 우편, FAX, 모집인 대행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개월간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한 25,165건은 어떤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 처리안에서는 모두 직접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음.

- ① 보험개발원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계약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험회사가 신계약과 구계약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 ② 각 보험회사로 하여금 정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하여 보험료를 낭비하거나 보험금 수령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 시행세칙 개정 등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비교 명세

보험회사 종류	보험회사명	보험금 지급방식		
		구계약 ¹⁾ +구계약	신계약 ²⁾ +신계약	구계약+신계약
손해보험	◇◇◇	사업방법서가 동일하면 비례 보상, 다르면 중복보상	비례보상	구계약의 존재여부를 인지할 경우 구계약에서 선차감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신계약 간 비례보상 구계약의 존재여부를 인지하 지 못할 경우 신계약 간 비 례보상
생명보험 ³⁾	◇◇◇	해당사항 없음		

주: 1) 2003. 9. 30.까지 체결한 보험계약

2) 2003. 10. 1.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3) 현재 11개 생보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5개 생보사에서는 구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 없이 신계약 간에서만 비례분담하고 있음.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2]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현황

(단위: 건, %)

회사명	상해의료비	입원 80%	입원 100%	통원 100%	계
○○	334,879	0	0	0	334,879
○○	224,096	2,164	0	0	226,260
○○	102,487	0	0	0	102,487
○○	94,655	1,423	1,036	0	97,114
○○	83,491	0	1,885	0	85,376
○○	159,699	0	3,349	3,349	166,397
○○	50,732	0	0	0	50,732
○○	1,400,212	109,680	0	0	1,509,892
○○	711,634	43,839	0	0	755,473
○○	545,782	5,089	426	9,096	560,393
○○	635,038	46	195,788	0	830,872
계 ¹⁾	4,342,705	162,241	202,484	12,445	4,719,875
경과계약 건수 ²⁾	12,715,429	1,418,907	788,362	582,761	15,505,459
집적률	34.2	11.4	25.7	2.1	30.4

주: 1) 손보사에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자료로 2002년 8월 기준 계약건수로 집계한 것임. 이에 따라 경과계약 건수로 환산할 경우 합계액보다 적어져 집적률이 더 낮아짐.

2) 2002회계연도(2002. 4. 1.~2003. 3. 31.)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경과계약 건수 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손보사로부터 받는 자료로 위 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와는 별개로 운용되며, 손보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모든 보험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자료 재구성

[별표 3]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비례분담 현황

(단위: 건, 명, %)

회사명	총보상 건수	1개 회사 청구건수	다수 보험회사 간 비례분담 건수 및 인원 ^{주)}							
			2개사		3개사		4개사 이상		합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	70,469	67,873	2,596	1,298	0	0	0	0	2,596	1,298
○○	26,757	25,606	961	481	150	50	40	10	1,151	541
○○	12,199	11,243	856	428	80	27	20	5	956	460
○○	15,360	13,809	1,361	681	154	51	36	9	1,551	741
○○	27,044	26,192	752	376	78	26	22	6	852	408
○○	13,643	12,399	1,050	525	146	49	48	12	1,244	586
○○	130,787	128,708	1,922	961	149	50	8	2	2,079	1,013
○○	97,963	93,273	4,304	2,152	350	117	36	9	4,690	2,278
○○	58,371	52,711	5,038	2,519	482	161	140	35	5,660	2,715
○○	97,531	93,145	4,386	2,193	0	0	0	0	4,386	2,193
합계	550,124	524,959	23,226	11,613	1,589	530	350	88	25,165	12,230
비율	100	95.42	4.58							
	-	-	92.30		6.31		1.39		100	

주) 보험계약자 1명이 3개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총 보상건수는 3건임.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감독원에서 「조직관리규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면서 위 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1. 인력감축계획의 형식적 추진

금융위원회에서 2008. 3. 31. 2008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 금융회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금융규제기관의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5. 2. 금융감독원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53명씩 총 159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1,589명에서 1,430명으로 10% 축소하는 내용의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였다.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정원 숫자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실제 운용하는 총 인원을 축소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1999년 설립 당시부터 1년 이상 국내·외 학술연수

및 외부파견 인력 등을 「정원의 인력」이라는 명칭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하면서, 국내·외 학술연수 인력을 1999년 15명(당시 현원 1,266명의 1.2%)에서 2007년 61명(당시 현원 1,680명의 3.6%)으로, 국제기구 연수인력을 1999년 1명에서 2007년 8명으로 각각 증가시키는 등 [별표 1] “정원의 인력의 연도별 추이”와 같이 2007년 말 현재 총 137명의 「정원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정원 10%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원 감축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2008. 5. 29. 연령 기준에 따른 팀장 보임해지 직원 18명을 위 기관 소속 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이들을 「정원의 인력」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같은 해 9. 8.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6개월 이상 파견”의 경우를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항목에 신규로 추가하였다.

또한 같은 해 8. 29. 위 기관에서 종전에는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던 교육연수 휴직, 국외유학 휴직, 배우자 동반 휴직, 가족 간병휴직 등 청원휴직 인력을 「정원의 인력」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같은 해 9. 8.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2008년 말 현재 청원휴직자 18명이 「정원의 인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08. 6. 23. 및 같은 해 7. 1. 4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기초자치단체에 10명의 인력을 신규로 파견하는 등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증가시킨 결과, [별표 2] “금융감독원 직원 정원 및 총 현원 연도별 추이”와 같이 정원 및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은 감소하였으나, 「정원의 인력」은 2007년 137명

에서 2008년 175명으로 38명 증가하여 위 기관의 총 현원은 2007년 1,680명에서 2008년 1,684명으로 4명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도록 인력감축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정원의 인력」의 한도를 엄격히 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채, 위 기관에서 인력감축계획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2. 상위직 인력 과다 운용

금융감독원에서 「조직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장, 실장, 팀장 등 직위별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현원은 가급적 정원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여야 하고 국장, 실장, 팀장 등 상위직 인력을 직위별 정원보다 많이 운용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2009. 4. 6. 정기인사를 하면서, 팀장 이상 정원은 총 265명(국장 25명, 실장 24명, 팀장S 118명, 팀장J 98명)에 불과한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국장급, 실장급, 팀장급 인사발령을 내고 이들에게 각각 국장, 실장, 팀장과 동일한 직무급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원보다 78명을 초과하여 총 343명(국장 27명, 실장 73명, 팀장S 119명, 팀장J 124명)을 팀장 이상 상위직으로 운용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2007년 말 동 기관의 실장 정원은 26명인데도 실장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을

1) 직무급(1년 기준): 부서장 27,863,000원, 실장 24,530,000원, 팀장S 19,719,000원, 팀장J 15,141,000원, 미보임 직원 12,895,000원(또한, 직무급의 차이는 평가급, 특별상여급, 연차휴가보전수당, 퇴직금 등의 차이를 가져옴)

45명으로 하여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별표 3] “금융감독원의 팀장 이상 정원 대비 예산상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 비교”와 같이 매년 팀장 이상 상위직에 대해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3. 보임해지 인력 선정 및 운용 부적정

금융감독원에서 국·실장 및 팀장이 일정 연령이 되면 보임 해지한 후 이들을 교수,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운용하거나 일정기간 연수·파견을 보내는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위 기관의 「취업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되어 있고, 「팀장 보임해지 가이드라인」에서 팀장에 대한 보임해지는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 건강상태 등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보임해지 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실적 등이 아닌 단순한 연령기준에 따라 정년이 4년 이상 남은 국·실장 및 팀장을 강제로 보임 해지하여서는 안 된다.²⁾

또한, 정년까지 4년 이상 남은 인력을 현업부서가 아닌 교수,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운용하거나 연수·파견을 보내는 것은 조직 운용상 비효율적이고, 보임이 없는 무보임자에게 보임자와 같은 수준의 직위를 부여하거나 직무급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04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표 4] “심사대상 선정사유별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과 같이

2) 위 기관의 「인사관리규정」 제86조의 3의 규정 등에 따르면 정년이 1년 남은 1급에서 3급 직원은 총무국 소속 자문역으로 발령을 내어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국·실장의 경우 주로 고령자 위주로 보임 해지자가 선정되고 있고, 팀장의 경우에도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보임 해지 사례는 감소하는 반면 주로 연령(만 54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임 해지가 결정되고 있었다.

또한 위 기관에서는 국·실장을 보임 해지한 후 인력개발실 교수, 원장 자문위원, 감독역량 강화 연구위원 등으로 운용하면서 2년간 실장급으로 발령하여 실장의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팀장의 경우에도 2007년 이전에는 보임 해지 후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현업부서에 배치하였으나, 2008년부터 연령 기준에 따른 보임 해지자에 대해서는 1년간 교육훈련 파견(정원의 인력으로 관리) 후 현업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었다.

4. 수견직원 파다 운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인력을 수견 받아 민원상담,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에 운용하고 있다.

위 기관의 「수견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외부기관과의 공동업무 수행 또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 기관 인력을 수견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견인력의 수와 기간은 그 사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인력 운용의 편의 또는 단순 보조업무를 위해 인력을 수견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 2008년 현재 연수·파견·휴직 등 총 163명³⁾의 자체 인

3) 2008년 말 현재 금융감독원의 「정원의 인력」 175명 중 육아휴직 11명과 가족 간병휴직 1명을 제외한 인원

여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감축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말 현재 총 86명(총원 대비 4.9%)의 인력을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수건 받아 운용하고 있었다.

또한 위 86명 중 41명은 민원상담 업무를, 24명은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공하는 지원업무를, 19명은 금융 인·허가 등 상담업무를, 나머지 2명은 금융감독원의 고유 업무인 보험대리점 등록을 대행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보다는 단순 보조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민원상담 업무는 이해상충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7. 10. 18. 위 기관에서 전문상담원을 자체 채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2009년 6월 말 현재까지 이를 추진하지 않은 채 수건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 ① 정원 뿐 아니라 정원의 인력에 대하여도 인력감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앞으로는 연수·파견 인력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정원 외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 ② 앞으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상위직 인력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③ 정년까지 4년 이상 남은 보임직원을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보임해지한 후 교수, 연구위원 등으로 운용하거나 연수·파견을 보내는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 ④ 수건직원 운용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 최소한도

로 하고 민원상담업무를 수견직원이 주로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연수·과건 인력 등 정원의 인력은 그대로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정원만 형식적으로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정원외 인력 관련 예산 심사 등을 철저히 하고
- ② 금융감독원에서 미보임직원 등을 정원에 근거가 없는 상위직위에 임용하여 사실상 상위직위 인력을 정원보다 과도하게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정원외 인력」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구 분	1999년 ¹⁾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가기관 파견	미상	미상	36	49	51	49	32
지방자치단체 파견	미상	미상	0	0	1	1	14
공공단체 파견	미상	미상	(2)	3 (3)	5 (5)	5 (6)	5 (9)
민간단체 파견	0	0	0	0	0	0	(2)
국가기관 겸임	미상	미상	7	6	0	0	0
국내외 학술연수	(15)	(32)	(38)	54	72	61	65
국제기구 연수	(1)	(1)	(2)	3	6	8	9
교육연수 휴직	0	0	0	(1)	(9)	(6)	2
육아휴직	0	(3)	(4)	5	3	5	11
국외유학 휴직	0	(4)	(10)	(4)	(13)	(10)	10
자문역 ²⁾	-	-	0	6	4	8	3
배우자 동반휴직 ³⁾	-	-	-	-	(1)	(6)	5
가족 간병휴직 ⁴⁾	-	-	-	-	(1)	(1)	1
교육훈련 파견 ⁵⁾	-	-	-	-	-	-	18
합 계	미상	미상	43	126	142	137	175

주: 1) 해당연도 연도말 기준 인원임(괄호 안의 숫자는 정원내 인력으로 합계에서 제외됨)

2) 2002. 5. 11.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 남은 1~3급 직원을 자문역으로 발령하여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3) 2005. 9. 20.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4) 2006. 2. 17.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5) 2008. 5. 29.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2]

금융감독원 직원 정원 및 총 현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구 분	1999년 1월	2002년 말	2004년 말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말
정 원	1,342	1,529	1,545	1,585	1,589	1,536
총 현원	계	1,266	1,533	1,643	1,673	1,684
	정원내 인력	미상	1,490	1,517	1,531	1,509
	정원외 인력	미상	43	126	142	175

주) 매년 말 총 현원에는 12월 31일 퇴직자(12월 31일까지 근무자)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3]

금융감독원의 팀장 이상 정원 대비 예산상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 비교

(단위: 명)

구 분		국장	실장	팀장S	팀장J
2005년	2004년 말 정원(A)	30	24	129	114
	예산편성인원(B)	30	32	126	116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0	8	-3	2
2006년	2005년 말 정원(A)	28	24	120	100
	예산편성인원(B)	30	35	123	110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2	11	3	10
2007년	2006년 말 정원(A)	28	26	124	101
	예산편성인원(B)	29	40	133	110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1	14	9	9
2008년	2007년 말 정원(A)	28	26	125	104
	예산편성인원(B)	29	45	133	111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1	19	8	7

주: 1) 팀장J로 승진한 자에게 승진한 해에는 팀장 직무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팀장J 직무급을 실제 지급한 인원은 정원 및 예산편성인원보다 적음

2) 금융감독원의 2009년도 인건비 예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승인은 개별적인 인건비 산출근거를 토대로 하지 않고 자연증가율, 인력감축 및 임원보수체계 개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의 2008년도 인건비 예산 총액을 조정하여 이루어짐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직위별 정원 현황 제출자료 분석

[별표 4]

심사대상 선정사유별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

(단위: 명)

구 분	심사대상 선정사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심사대상	보임해지	심사대상	보임해지	심사대상	해지	심사대상	보임해지
국·실장	연 령	6	6	11	11	14	13	18	17
	보임기간	5	2	4	3	3	1	2	0
	기 타			1	1				
팀 장	연 령	2	2	18	18	9	8	13	13
	성과저조	14	5	21	4	19	2	5	4
	기 타	3	3	1	0	1	1		

자료: 금융감독원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인건비 과다편성·집행 및 특별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금융감독원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1. 인건비 과다 편성 및 집행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민간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2009년도 수입 예산의 73.5%)이 주된 재원이므로, 민간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현원¹⁾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인원과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① 국책금융기관의 경우 전년 말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전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되 정원과 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여 채용에 따른 실소요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을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③ 정부의 경우 정원에 (1-결원율)을 곱해 인건비 예산을 산정하여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율을 인건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별표 1] “연도별 예산 편성인원 과다산정 명세”와 같이 매년 예산편성인원을 전년도 현원보다 최소 26명에서 최대 68명까지 더 많이 산정하고, 인건비 지급단가도 [별표 2] “연도별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의 차이 명세”와 같이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함으로써, 2002년 이후 매년 기본급(연공제 직원의 경우 기준봉급)을 [별표 3] “연봉제 및 연공제 직원의 기본급(기준봉급) 과다편성 현황”과 같이 최소 1,753백만 원에서 최대 4,751백만 원까지 과다하게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기본급(기준봉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평가급, 수당, 상여금 등 다른 보수지급항목도 함께 과다 편성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위 기관에서 2002년에 전년도 특별상여금 지급분(기본급의 150%) 중 일부(기본급의 100%)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화²⁾하고서도 다시 인건비 집행잔액 3,869백만 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별표 4] “인건비 집행잔액 사용현황”과 같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224백만 원을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직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인원과 단가를 과다 산정하여 인건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그 집행잔액으로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직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2) 기본급에 통합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본급이 증가할 뿐 아니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도 함께 증가

2. 특별상여금 정액 지급

금융감독원에서 「급여규정」 제32조 제4항 및 제4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상여금 성격의 특별상여금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임직원의 경영 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비록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다른 공공기관³⁾의 경우에 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그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관 전체의 특별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특별상여금 제도가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별표 5]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명세”와 같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특별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하였고, 2005년부터 지급시기를 3차례로 나누어 근로자의 날과 추석에 기준봉급(1개월)의 50%씩 기준봉급의 100%를 정액 지급하고, 연말에만 기준봉급의 50%를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⁴⁾.

이에 대해, 2007년 감사원에서 특별상여금을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위 기관에서는 2007년 이후에도 연말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차등 지급 폭만을 일부 확대⁵⁾한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며,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며, 각 기관에서는 이와 같이 결정된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액을 다시 임직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

4) 집행간부, 사무서무직원, 해외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정액으로 지급하였고, 연봉제 직원에 대해서는 위 연공제 직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근로자의 날과 추석에 연봉의 1/36씩 총 2/36를 정액 지급하고 연말에만 연봉의 1/36을 차등지급

5) 연공제 직원의 경우 2006년 기준봉급의 50%±6% → 2007년 100%±6% → 2008년 150%±6%로 확대

채 근로자의 날 및 추석에는 특별상여금을 여전히 정액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성과 향상의 동기부여 목적으로 도입한 특별상여금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 지급률 결정 등의 성과평가 요소 없이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 ① 앞으로 인건비 예산 편성인원 및 지급단가 등을 실제보다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인건비를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특별상여금을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를 부당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특별상여금을 임직원의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연도별 예산편성인원 과다산정 명세

(단위: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년 말 총현원주)(A)	1,476	1,544	1,613	1,654	1,653	1,686	1,693
예산편성 인원(B)	1,523	1,612	1,675	1,680	1,690	1,738	1,740
실제 보수지급 인원(C)	1,524	1,598	1,660	1,661	1,667	1,684	1,692
총현원대비 차이(B-A)	47	68	62	26	37	52	47
실제인원대비 차이(B-C)	-1	14	15	19	23	54	48

주) 총 현원은 연수·파견 인력 등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숫자임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2]

연도별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의 차이 명세

가. 연봉제 직원의 기본급 지급단가(1년 기준)

(금액단위: 천 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02년	예산상 지급단가(A)	44,016	40,025	30,515	24,851	18,202
	실제 지급단가(B)	43,751.40	39,241.44	28,863.12	25,548.72	17,566.20
	차이(A-B)	264.60	783.56	1,651.88	-697.72	635.80
'03년	예산상 지급단가(A)	45,391	41,108	29,914	27,339	19,436
	실제 지급단가(B)	44,994.84	40,556.64	28,639.92	28,483.92	19,414.44
	차이(A-B)	396.16	551.36	1,274.08	-1,144.92	21.56
'04년	예산상 지급단가(A)	48,638	43,825	38,022	30,489	0
	실제 지급단가(B)	47,590.92	43,325.76	37,367.64	29,675.64	0.00
	차이(A-B)	1,047.08	499.24	654.36	813.36	0.00
'05년	예산상 지급단가(A)	49,136.40	44,711.30	38,584.20	31,274.80	0.00
	실제 지급단가(B)	48,664.44	44,457.36	38,505.24	30,907.08	0.00
	차이(A-B)	471.96	253.94	78.96	367.72	0.00
'06년	예산상 지급단가(A)	50,072	45,899	39,818	32,119	0
	실제 지급단가(B)	49,484.04	45,575.04	39,652.08	31,972.92	0.00
	차이(A-B)	587.96	323.96	165.92	146.08	0.00
'07년	예산상 지급단가(A)	51,555	47,539	41,411	33,428	0
	실제 지급단가(B)	50,838.84	47,219.16	41,039.04	33,045.00	0.00
	차이(A-B)	716.16	319.84	371.96	383.00	0.00
'08년	예산상 지급단가(A)	51,603	47,826	41,683	31,947	0
	실제 지급단가(B)	52,075.92	48,326.52	41,893.56	33,359.40	0.00
	차이(A-B)	-472.92	-500.52	-210.56	-1,412.40	0.00

주: 1) 실제 지급단가는 각 직급 월 평균 지급단가에 12를 곱해 1년 기준으로 작성(이하 같음)

2) 실제 지급단가는 별도로 편성된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 예산에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이하 같음)

3) 2008년에 예산상 지급단가보다 실제 지급단가가 높은 것은 2007년에 예산상 인건비 동결방침과 달리 인건비를 2% 인상한 부분이 2008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상 지급단가는 2% 인상이 되지 않은 단가로 편성이 되고, 2008년에 실제로는 지급은 2% 인상된 단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임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이하 같음)

나. 연공제 국내직원의 기준봉급 지급단가(1개월 기준)

(금액단위: 천 원)

구 분		2급	3급	4급	5급	사무직원	사무직원
'02년	예산상 지급단가(A)	3,090	2,845	2,247	1,661	1,255	1,553
	실제 지급단가(B)	3,013.19	2,761.07	2,108.71	1,538.79	1,216.06	1,541.55
	차이(A-B)	76.81	83.93	138.29	122.21	38.94	11.45
'03년	예산상 지급단가(A)	3,293.3	3,136.6	2,393.7	1,754.4	1,378.9	1,683.4
	실제 지급단가(B)	3,268.12	2,965.82	2,288.32	1,629.60	1,340.46	1,669.99
	차이(A-B)	25.18	170.78	105.38	124.80	38.44	13.41
'04년	예산상 지급단가(A)	0	4,315	3,351	2,432	1,914	2,372
	실제 지급단가(B)	4,574.58	4,122.57	3,182.88	2,248.63	1,730.11	2,285.61
	차이(A-B)	-4,574.58	192.43	168.12	183.37	183.89	86.39
'05년	예산상 지급단가(A)	5,203	4,618	3,586	2,655	2,182	2,596
	실제 지급단가(B)	4,888.87	4,441.63	3,403.66	2,448.41	1,931.18	2,476.60
	차이(A-B)	314.13	176.37	182.34	206.59	250.82	119.40
'06년	예산상 지급단가(A)	5,236	4,711	3,658	2,749	2,160	2,684
	실제 지급단가(B)	5,054.25	4,498.97	3,458.56	2,529.27	2,036.72	2,561.40
	차이(A-B)	181.75	212.03	199.44	219.73	123.28	122.60
'07년	예산상 지급단가(A)	5,468	4,710	3,699	2,771	2,284	2,800
	실제 지급단가(B)	5,194.79	4,641.32	3,543.32	2,624.07	2,166.63	2,681.09
	차이(A-B)	273.21	68.68	155.68	146.93	117.37	118.91
'08년	예산상 지급단가(A)	5,394	4,853	3,699	2,826	2,226	2,844
	실제 지급단가(B)	5,085.93	4,793.48	3,627.51	2,665.59	2,228.47	2,761.31
	차이(A-B)	308.07	59.52	71.49	160.41	-2.47	82.69

주) 임원의 기본급과 해외직원의 기준봉급은 그 지급단가가 「급여규정」에 정해져 있어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 간 차이 분석대상에서 제외

[별표 3]

연봉제 및 연공제 직원의 기본급(기준봉급) 과다편성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본급(연봉제)	602	715	882	1,286	641	1,006	380
기준봉급(연공제)	1,151	2,236	2,743	2,462	3,879	3,745	3,183
합계	1,753	2,951	3,625	3,748	4,520	4,751	3,563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4]

인건비 집행잔액 사용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추가 보수인상	-	-	-	2,325	-	2,741	-	5,066
특별상여금 지급	3,869	4,572	-	-	-	-	717	9,158
합 계	3,869	4,572	-	2,325	-	2,741	717	14,224

주)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예산보다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한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보수 및 특별상여금 예산 자체를 전년보다 과도하게 인상하여 편성한 부분은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5]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 명세

(금액단위: 천 원)

지급일자	차등 여부	집행간부	연봉제 직원	연공제 직원	해외근무직원	계
1999. 12. 29.	정액 지급	19,901	231,314	2,509,225	0	2,760,440
2001. 9. 28.	정액 지급	0	297,836	1,079,545	0	1,377,381
2001. 12. 28.	정액 지급	0	0	2,351,162	0	2,351,162
2002. 9. 16.	정액 지급	0	385,387	1,472,376	0	1,857,763
2002. 12. 27.	정액 지급	29,998	403,596	1,577,395	0	2,010,989
2003. 12. 31.	정액 지급	63,894	913,702	3,537,104	57,373	4,572,073
2004. 9. 23.	정액 지급	44,999	805,296	1,982,392	29,165	2,861,852
2004. 12. 31.	정액 지급	46,111	838,913	2,100,475	33,247	3,018,746
2005. 4. 29.	정액 지급	52,717	900,970	2,123,563	30,454	3,107,704
2005. 9. 15.	정액 지급	52,717	871,302	2,145,314	34,120	3,103,453
2005. 12. 30.	차등 지급	52,717	870,906	2,206,461	30,726	3,160,810
2006. 4. 28.	정액 지급	72,826	939,273	2,189,135	28,758	3,229,992
2006. 10. 2.	정액 지급	79,076	904,020	2,247,892	31,814	3,262,802
2006. 12. 29.	차등 지급	84,057	914,972	2,334,207	32,770	3,366,006
2007. 4. 30.	정액 지급	86,666	1,024,624	2,282,670	31,946	3,425,906
2007. 9. 20.	정액 지급	86,666	973,933	2,301,517	31,946	3,394,062
2007. 12. 31.	차등 지급	94,999	959,600	2,331,720	33,500	3,419,819
2008. 4. 30.	정액 지급	88,958	1,080,305	2,314,518	29,168	3,512,949
2008. 9. 11.	정액 지급	95,624	1,031,957	2,323,530	32,405	3,483,516
2008. 12. 31.	차등 지급	95,624	1,025,788	2,364,728	30,571	3,516,711
2008. 12. 31.	3급이하 정액지급	0	80,087	631,026	5,562	716,675
2009. 4. 30.	정액 지급	0	1,088,678	2,285,798	36,340	3,410,816
합 계		1,147,550	16,542,459	46,691,753	539,865	64,921,627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가 2008. 10. 2. 금융투자업(증권중개업)의 인가를 신청하자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위탁한 후, 심사안을 검토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2조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008-25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의 인가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하여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와 그 임원이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이번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 전인 2008. 2. 29.에 증권 위탁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설립하고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 9개 대부업자의 311개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매매주문을 수탁한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5. 7. “◆◆◆◆이 대부업체의 선물·옵션 계좌 대여행위임을 알고도 불건전 매매주문을 수탁한 것은 증권업의 건전영위를 곤란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¹⁾

따라서 ◆◆◆◆에서 불과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 2. 「자본시장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미 인가받은 ◆◆◆◆에 증권중개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가 신청하였으므로 위 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부의안건을 작성할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었음을 명시하여야 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부의안건을 검토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감독원에서는 ◆◆◆◆이 대부업체의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을 수탁한 데 대하여 같은 해 7. 24. 위 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기관주의’는 금융감독원의 내부기준상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누락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2009. 1. 20. 부의안건을 작성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그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부의하였다.

그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 21.과 같은 해 1. 28. ◆◆◆◆에 대하여 위 심사안건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1) ◆◆◆◆에서 금융위원회 최종의결 하루 전인 2008. 5. 8.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함

증권중개업을 인가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심사안건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여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업체에 증권중개업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지도·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1997. 7.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를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용정보업자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도록 하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¹⁾를 등록 조치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과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위 위원회는 위 연합회에 집중되는 정보는 각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과 회계법인 등에서 여신심사, 여신 건전성 감독, 회계감사 등에 폭넓게 이용되므로 신용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위 연합회가 2008. 10. 20.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실시한 일제 정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위 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정보 1,000만 여 건의 1.88%에 해당하는 188,903건이 오류가 있거나 누락되어 일제정비를

1) 모든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을 정회원으로 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준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위 법에 따라 7천여 개의 금융기관, 공공기관, 각종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정책당국의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

통하여 수정되는 등 오류 및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각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바로 등록 또는 해지하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국은행연합회 일제정비 결과

구 분	연체 정보	개인대출 정보	개인채무보증 정보
전체 등록 건수	1,000만여 건	3,200만여 명	410만여 명
정비 대상 건수	188,903건	776,834명	22,522명
비 율(%)	1.88	2.42	0.54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자료 재구성

그러나 위 위원회에서는 위 연합회로부터 신용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협의회 안건을 보고받거나 2007. 7. 12.부터 같은 해 7. 16.까지 4일간 금융감독원을 통해 위탁검사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지도·감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위 위원회에서는 위 연합회로부터 위와 같이 일제정비²⁾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결과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거나 정비상태를 표본 점검하는 등 적절하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09. 7. 2.부터 같은 해 7. 8.까지 감사원 감사 시 위 일제 정비 후 6개월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연합회에 신용정보 변동 사항을 통보한 실적을 조사³⁾한 결과, [표 2]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위 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있는 자로 등록된 100명이 분할 상환 등으로 「신용정보 관리규약」(2009. 6. 12.)에 따른 신용정보 등록해제 대상자인데도 위 연합회에 신용정보 해제를 요청하지 않아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2009. 6. 30.

2)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2003. 2. 24.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일제 정비 작업을 한 지 5년이 지난 2008년 에 다시 실시.

3)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7,000여 개의 기관 중 특정 기관에 대하여 조사.

현재까지 짧게는 62일 길게는 1,586일간 연체 등록되어 있는 등 두 기관에서 443명이 짧게는 11일에서 길게는 1,586일간 신용정보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연체 등록 또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표 2] 신용정보 변동 미반영 현황

(단위: 명)

구 분	연체 정보 등록		연체 정보 해제	
	대상자 ⁴⁾	미 등록자	대상자	미 해제자
한국주택금융공사	107,502	-	33,783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4,654	238	25,969	96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처 신용정보 등록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연체등록자 100명 중 카드 발급을 신청한 5명 모두 위 연합회의 연체등록자라는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었고 2명은 카드 사용이 중지된 후 해제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아 신용정보 제공자의 경제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그 외에도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는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을 취급하면서 잘못된 신용정보를 기초로 이들에게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전국은행연합회와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 변동사항 관리를 게을리하여 신용양호자가 피해를 입거나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대상자는 2006년부터 연체 등록이나 해제 사실을 위 연합회에 통보해 준 건수를 집계한 것임.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금융법규 관련 유권해석사례 공개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7. 6. 4. 감독행정을 체계적·단계적으로 규범화하고자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 회의를 거쳐 확정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2007. 6. 8. 언론 보도)에 따라 금융법규와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 중 “금융감독 법규의 적법성·투명성 확보” 내용에 따르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관련 법규의 유권해석 및 실무해석사례가 공유 또는 공개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관련 기관의 법규 해석사례를 공유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08. 3. 3. 출범 이후, 같은 해 7월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개통하면서 그간 민원에 회신하는 형태로 질의 당사자에게만 통보하여 오던 유권해석사례를 같은 해 7. 1.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 홈페이지인 “e-금융민원센터”에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

방안”의 취지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등 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신속하게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전신인 구 금융감독위원회와 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3. 3. 금융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2009. 6. 30.까지의 유권해석사례의 공개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공개가 가능한 유권해석사례 총 326건 중에서 82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244건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¹⁾

[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공개 현황(2009. 6. 30. 현재)

(단위: 건, %)

	접수건수	완료건수 (A)	비공개사유 ²⁾ 해당건수 (B)	공개건수 (C)	미공개 건수 (A-B-C)	공개 비율 [C/(A-B)]
2008년	259	257	74	80	103	25.2%
2009년 상반기	298	226	83	2	141	1.4%
합 계	557	483	157	82	244	25.2%

자료: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위 홈페이지에 구 재정경제부와 구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의 유권해석사례 총 134건(2006년도 회신 60건, 2007년도 회신 74건)만 등록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전체 유권해석사례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금융위원회 출범 이전에 구 재정경제부와 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회신한 유권해석사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 위 유권해석사례 공개제도가 금융정책의 일관성·투명성 확보라는 애초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1) 따라서 유권해석사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위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시중에서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2) 동일·유사 내용, 신청인 철회, 유선 답변, 회신 후 법령 개정, 단순 법령안내 등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
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권해석사례를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는
등 유권해석사례 공개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파견 인력 운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외 기관 또는 단체(이하 “민간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파견받거나 소속 공무원을 국가기관으로 파견하고 있다.

위 위원회에서는 2008. 2. 29.부터 2009. 6. 30. 현재까지 민간기관으로부터 총 73명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게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41조의2 및 「공무원 임용규칙」(2008. 9.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제42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미리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며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후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 발령하고 파견목적 및 심의결과 등을 첨부하여 민간전문가의 파견사실을 파견 후 1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 근무하거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파견 전에 민간전문가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면밀하게 심의·검토함으로써 제도에 맞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제도가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로 파견 받은 직원을 비서로 활용

그러나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2009. 7. 17. 민간전문가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8. 3. 21.부터 위 위원회 △△△△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공사 산하 ○○○○공사 계약직 ○○○은 위 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구조개선과에서 ●●●●●공사에 위 사람을 공적자금 업무 관련 민간전문가로 파견 요청을 하여 같은 해 4. 21.부터 2010년 3월¹⁾까지 같은 과에 인사 발령을 내고도 실제로는 2008. 3. 21.부터 2009. 5. 31.까지 위 위원회 △△△△에 비서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위 사람과 금융불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 파견받은 ○○○○공사 ◎◎◎◎²⁾을 파견 사유와 다르게 비서로 근무하게 하고 있었다.³⁾

또한, 위 위원회 혁신행정과(현 행정인사과)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민간전문가

-
- 1) 위 두 사람을 대상으로 2008. 4. 21.부터 2009. 4. 20.까지 파견 요청을 하여 파견 근무토록 하고 이후 2009. 3. 20. ●●●●●공사에 파견기간 연장 협조요청을 하여 1년간 파견 기간을 연장.
 - 2) ◎◎◎◎은 2008. 3. 21.부터 2009. 6. 3.까지 △△△△△△, 같은 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비서로 근무하였고 ◎◎◎◎과 ○○○은 감사원 예비조사(2009. 5. 28.) 이후에 각각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 3) ◎◎◎◎은 은행과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 지원에 위 사람이 필요하고 부보금융기관의 경영분석 및 금융권별 리스크 관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아 지원업무에 적임자로 선정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문서를 기안 작성하여 2008. 4. 11. 혁신행정과에 관련 문서 송부.

파견사실을 통보하면서 ○○○은 공적자금과 관련된 업무 등에서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파견받은 것이며 ●●●●공사에서 부보금융권별 보험료 납부를 통한 목표기금규모 설정 등 예금보험제도 연구, 정리금융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등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는 위 두 사람⁴⁾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 것처럼 파견목적과 원 소속기관 담당업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민간전문가 파견

한편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2009. 7. 6. 위 위원회에서 제출한 민간전문가 파견 현황과 실제 근무 인력을 비교해 본 결과, [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민간전문가 수전 명세”와 같이 위 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직무파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도 파견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 직원 ◆◆◆ 등 2명을 2009. 2. 17. 및 같은 해 3. 23.부터 같은 해 7. 2. 현재까지 각각 근무하도록 하는 등 위 위원회 3개 과에서 민간전문가 4명⁵⁾을 위와 같이 심의절차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 해 2. 17.부터 같은 해 7. 2. 현재까지 짧게는 54일에서 길게는 136일 동안 파견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4) ○○○은 금융 불공정거래 감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파견받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업무와 금융기관 상시 감시 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으나 위 두 사람은 ●●●●공사에서 비서나 서무 업무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근무토록 하다가 금융위원회에 파견하기 위하여 정리금융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한 인력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 전혀 경험 및 전문지식이 없음.

5) 이 중 자본시장과에 근무한 ◆◆◆ 등 3명은 감사원 예비조사 실시(2009. 5. 28.) 이후인 2009. 7. 2.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민간전문가 수견 명세

구 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소속 및 직위	◇◇◇◇ 대리	◇◇◇◇ 대리	■■■■ 과장	◇◇◇◇ 대리
실제파견 근무일	2009. 2. 17.	2009. 2. 17.	2009. 3. 22.	2009. 5. 10.
근무 부서명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파견종료일(실제)	2009. 7. 2.	2009. 7. 2.	2009. 5. 22.	2009. 7. 2.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3. 전문성 없는 업무에 민간전문가 파견 운용

한편 위 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는 국회 대응 등의 목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유를 들어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 소속 ◆◆◆ 등 2명을 파견 받아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국회대응자료 작성 및 지원에 활용하는 등 민간전문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1항”과 “3항”의 내용과 같이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부서에서도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위 위원회 직원처럼 운용하는 등 위 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일부 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금융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전문가라는 명목으로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위 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2008. 9. 23. 부터 2009. 6. 10.까지 약 9개월간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상 필요하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민간전문가 파견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근무시키거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금융위원회)

2010. 4.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	---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3
------------------------	---

1·2.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주의·시정) ...	7
---	---

3.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주의)	11
--	----

4.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주의)	18
---------------------------	----

5.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주의)	20
---------------------------------------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및 출처 등에 의하여 검증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0. 3. 15.부터 같은 해 3. 19.까지(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0. 4. 29.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30	220	2	2	4	4	200	190	1	1	11	11	12	12
본 부	164	161	2	2	4	4	137	134	1	1	9	9	11	11
소속기관	66	59	0	0	0	0	63	56	0	0	2	2	1	1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함.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6,811억 원(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기금 55조 8,76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0.5%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서민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2조 7,000억 원(한국산업은행 9,000억 원, 중소기업은행 8,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6,000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4,000억 원)을 출자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회 계 구 분		'09세출예산	'08세출예산	증감률
총 계		586,811	424,263	38.3
일 반 회 계		28,868	3,037	850.5
기금	소 계 (관리주체)	558,766	421,457	32.5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	110,362	89,972	22.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	1,560	1,721	△9.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57,909	30,743	88.3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24,595	16,030	53.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20,912	13,250	57.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11,168	9,757	14.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117,819	170,412	△30.8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12,085	89,567	△86.5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202,352	-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중 [표 3]과 같이 위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2조 7,719억 원, 회계기금 간 거래 822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집행금액은 327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5억 원으로 전체의 68.8%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는 102억 원)한다.

[표 3]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부 집행 현황

(금액단위: 억 원)

일반회계	28,868
인건비	139
기본경비*	86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출자 27,0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650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39 - 역모기지론 출연 30	27,820 (좌측 금액 합은 27,719)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786 - IBRD차관 원금상환 31 - IBRD차관 이자상환 5	822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만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3.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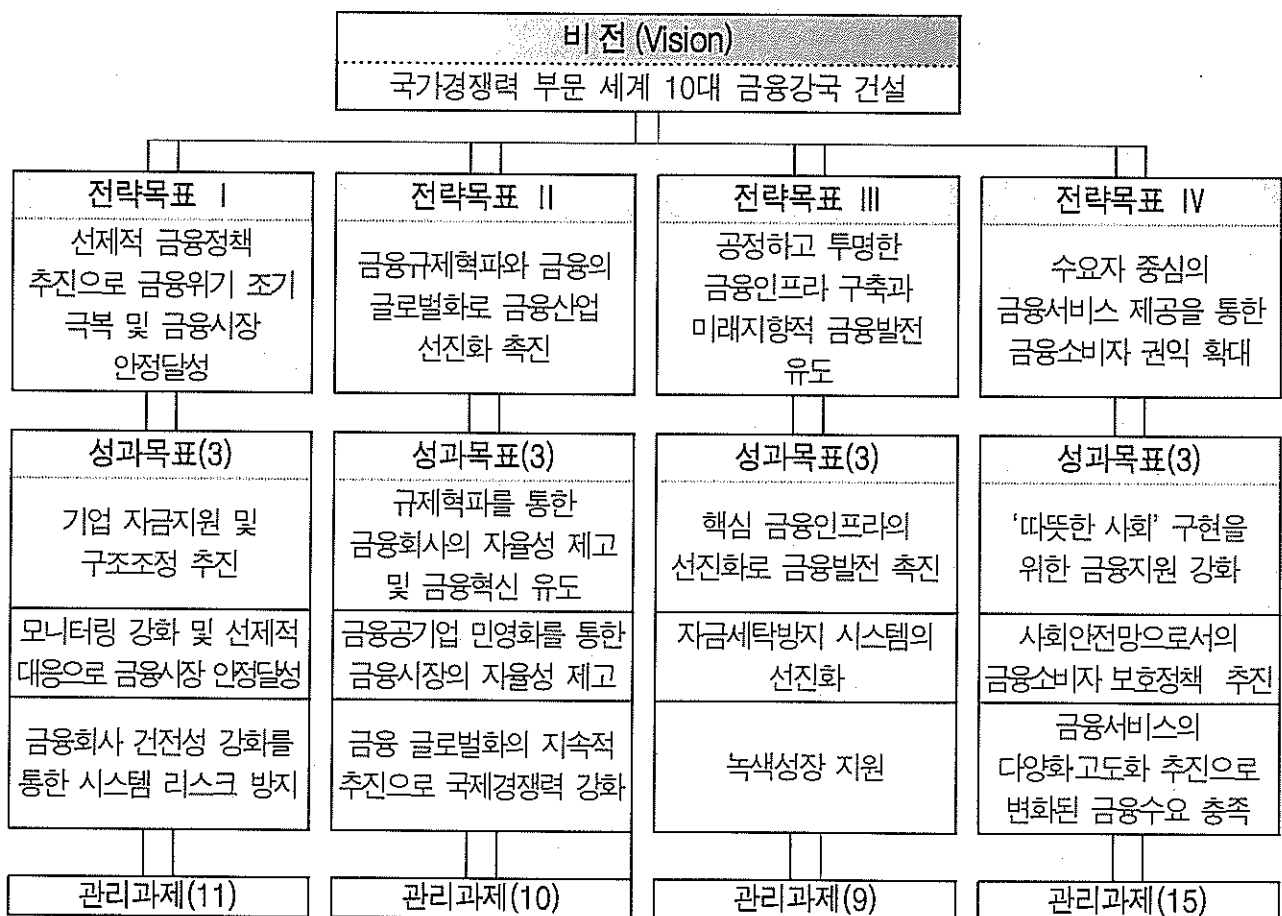
가. 임무(Mission) 및 비전(Vision)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였다.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12개의 성과목표, 45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3개와 64개, 계 77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시정요구

제 목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2005. 8. 31.)과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2007. 1. 31.)에 근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리우대 모기지론으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개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00백만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실제 대출은 개별 은행에서 취급)해 주면서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별인하(0.5~1.0%p)⁶⁾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말 현재까지 6,871명에게 4,766백만 원을 이차보전 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6) 16백만 원 이하: 1.0%p 인하, 18백만 원 이하: 0.75%p 인하, 20백만 원 이하: 0.5%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르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 전산자료를 조회⁷⁾하여 대출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대출실행 전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다주택 소유 여부를 재확인하며 대출실행 시 1주택 초과 보유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출실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출자와 약정한 「추가약정서」에도 “대출 실행일 이후에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 이하인 상태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와 세대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2005년 11월 상품 출시 이후 사후적으로 한번도 검증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게다가 위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약정서」에는 사후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을 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2010년 3월 감사원에서 대출자와 그 배우자의 다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취급 금융기관의 부주의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한 ‘취급기준 위반’ 사례가 3건(대출잔액 200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3백만 원), 대출 취급 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대출 후 주택 추가구입 등으로 사후적으로 다주택이 된 ‘사후적 자격 상실’ 사례가 31건(대출잔액 1,552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26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백만 원)으로 다주택 소유자 총 34명에게 대출잔액 1,752,151,844원, 부당 이차보전금 29,131,935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⁸⁾

[표] 대출 부적격자 다주택 소유 현황

(단위: 명, 건, 원)

구 분	부적격 대출자 수	발견 주택수	부적격 대출잔액	부당 이차보전금
취급기준 위반 ¹⁾	3	6	200,072,054	2,939,440
사후적 자격 상실 ²⁾ (3주택자)	31 (3)	65 (9)	1,552,079,790	26,192,495 ³⁾
계	34	71	1,752,151,844	29,131,935

주: 1. 주택소유자에게 대출실행

2. 세대별 1주택 사후유지 요건 위반(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 주택 추가 구입 21명)

3. 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은 결혼일자를 알 수 없어 부당 이차보전금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특히 34명 중 3명은 금리우대 모기지론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2채 더 취득하는 등 주택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산광역시 *** ** OO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던 OOO의 경우 2008. 5. 7. 위 주택을 지인에게 증여하여 2008. 5. 8.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2008. 6. 20. 증여를 해제⁹⁾하는 등 사기성 대출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8) 한편 대출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57건, 대출잔액 3,638백만 원으로 나타나 위 직계 존비속이 대출자의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의] 앞으로 다주택 소유자에게 금리우대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시정] ①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의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3건의 대출금 200,072,050원을 회수하고 이차보전금 2,939,440원을 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한편, '사후적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31건의 대출금 1,552,079,790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 '사후적 자격 상실' 건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대출자와의 「추가약정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12개)-관리과제(4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성과지표(성과목표 성과지표 1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64개)를 설정하고 각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3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중 10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55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표 1]과 같이 4개 전략목표의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84% 수준이다.

[표 1] 전략목표 달성현황

전 략 목 표	사업규모(억 원)	성과지표 실적 (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I.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33,667	17/17 (100%)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23.1	15/19 (79%)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52.8	13/16 (81%)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4,709.5	20/25 (80%)
총 계	38,452.4	65/77 (84%)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0. 3. 15.~3. 19.) 중 위 13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77개 성과지표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① “법 개정 여부”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위 판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64개 중 14%인 9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표는 목표 달성 여부가 국회 심의·통과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등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표 2]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황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I-3-정책②)	RBC제도 시행	관련 법규 개정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II-1-정책①)	은행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금융상품 판매체계 개편 (II-1-정책②)	(가칭)금융상품판매법 제정	법 제정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II-1-정책③)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회계·공시제도 개선 (III-1-정책①)	국제회계기준 관련 시행령 및 규정개정	시행령 및 규정개정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추진 (IV-2-정책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파생금융상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IV-2-정책②)	관련 법령 개정	법령 개정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개선 (IV-2-정책③)	내부통제개선	법
헤지펀드 도입 (IV-3-정책②)	헤지펀드제도 도입 여부	시행령 개정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② 예산액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제정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
 (성과지표) 기금출연실적(측정방법: 기금출연액, 목표치: 650억 원)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의 성과지표를 ‘기금출연실적’, 목표치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금 예산액 ‘65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기금은 한국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있고, 위 관서에서는 매년 전년

도에 기확정된 예산액 전액을 한국은행으로 전출하고 있어, 목표치인 기금출연액이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③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제정② 저축의 날 행사 개최
(성과지표) 저축의 날 행사 개최(측정방법: 개최 여부, 목표치: 저축의 날 행사 개최)

관리과제 “저축의 날 행사”의 경우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저축의 날 행사 개최’로 하고 있으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4호)에 따르면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에 저축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1973년 법령 제정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등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④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3.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3-제정③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측정방법: FTA 금융협상 및 MOU체결실적, 목표치: 개선)

위 관서에서는 “금융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성과지표를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지원 실적’으로 설정하여 측정방법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 목표치를 ‘개선’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는 2008년 대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이 증가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목표치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달성률이 위 관서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리과제의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①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정책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측정방법: 펀드규모, 목표치: 300억 원)

위 관서에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시달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 추진계획」(2009. 9. 28.)에 따르면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의 수정은 환경변화로 정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등 환경변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방법에 따르되, 각 부처가 참여하는 수정검토 TF를 반드시 거친 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무총리실 규정과 달리 목표치를 ‘100억 원(3년간 300억 원)’으로 임의로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를 근거로 100% 달성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결과 실제 달성률은 33.3%에 불과하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② 당해 연도의 실적치가 아닌데도 실적치로 제시

(전략목표) 1.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성과목표) 1-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관리과제) 1-1-정책②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성과지표) ①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측정방법: 구성 여부, 목표치: 구성 여부)

②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측정방법 및 목표치: 위원 신규 선임 및 인원 보강 여부)

위 관서에서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2008년 11월 이미 설치되었고, 위원의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등 관련 기관장이 선정하는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말 이미 각 기관에서 선정하는 등 위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되었거나, 과거 업무추진의 결과로 목표치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어 당해 연도 업무추진 성과와 무관한데도 당해 연도의 실적인 것처럼 표시하고는 목표달성으로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관련되어 있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과거연도의 실적을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로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

임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
비전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Ⅰ.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Ⅰ-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 성과목표 Ⅰ-2.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 성과목표 Ⅰ-3.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 ▪ 전략목표 Ⅱ.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Ⅱ-1. 규제혁파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 성과목표 Ⅱ-2.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자율성 제고 - 성과목표 Ⅱ-3.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전략목표 Ⅲ.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Ⅲ-1. 핵심 금융인프라의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 성과목표 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 성과목표 Ⅲ-3. 녹색성장 지원 ▪ 전략목표 Ⅳ.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Ⅳ-1.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성과목표 Ⅳ-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 성과목표 Ⅳ-3. 금융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추진으로 변화된 금융수요 충족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는 2009. 3. 16. ○○○○연구원과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3. 16. ~ 9. 16. 계약금액: 45,000,000원)을, 같은 해 8. 28.에는 ○○○○○ 산학협력단과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8. 28. ~ 11. 9. 계약금액: 35,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상 최종보고서는 각각 2009. 9. 16. 및 같은 해 11. 9.까지 50부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자 위 관서에서는 각각 같은 해 12. 15. 및 12. 28.까지로 작성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연구용역 계약서」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사완료한 후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이들 최종보고서 초안¹⁰⁾을 2009년 12월 말경 컴퓨터 파일로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보고서 50부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2. 23.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28. 두 과제의 용역비 전액 총 80,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보고서 50부는 2010년 3월 말 현재 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용역 마무리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 저하로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완성도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0) 최종보고서 초안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차이: 최종보고서는 2010년 2월 FATF 총회에서 FATF 측과 협의한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이행계획(「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포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게 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자에게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채납 시 「국세징수법」상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미수납액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과징금 등을 불납결손처분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표 1]과 같이 2008년에 과징금 및 과태료 26,194백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7,825백만 원을 수납받고 2,017백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 미수납된 16,352백만 원 및 신규 13,921백만 원 등 총 30,273백만 원을 부과하여 7,251백만 원을 수납받고 834백만 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다.

1) 2005. 6. 29. 금융위원회 수입징수관(행정인사과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과징금 등 징수업무 및 결손처분관련 중요사항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표 1]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해당연도	징수결정액 ²⁾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소계	납기 미도래	거소불명· 재력부족	징수유예
2008년	26,194	7,825	2,017	16,352	2,062	13,810	480
2009년	30,273	7,251	834	22,188	4,210	15,394	2,584

주: 전년도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됨.

자료: 금융위원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면제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²⁾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 불납결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채납자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징수결정 금액을 수납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결정통지 등의 사유가 있어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을 때에만 불납결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 3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 관서의 결손처분 내역 중 결손액이 큰 대상을 표본조사한 결과 결손액이 690백만여 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04. 7. 15. 폐업)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43백만여 원³⁾과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 2001년 8월 14일 제작)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 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

3) 2002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장부가액 12백만여 원, 시가 20백만여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2007. 4. 27. 재산조사 결과 재산이 없었으며 2008. 11. 28. 현장조사 결과 최후 주소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표 2]와 같이 위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의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이 2010. 11. 23.⁴⁾인데도 과징금 51백만여 원은 2008. 10. 29.에, 639백만 원은 2009. 5. 2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불납결손하였다.

[표 2] (주)○○○○○의 불납결손 내역

(금액단위: 원)

부과일	과징금·채납액	위원회 판단 소멸시효 완성일	불납결손 결정일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
2003. 7. 23.	51,400,000	2008. 10. 29.	2008. 12. 11.	2010. 11. 23.
2002. 6. 14.	639,000,000	2009. 5. 22.	2009. 12. 29.	2010. 11. 23.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관서에서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였으면 회수할 수 있었던 과징금(○○○○공제조합 출자금만도 2002년 기준 20백만여 원, 2010년 기준 43백만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⁵⁾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결손 처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2004. 5. 31. 위 관서는 (주)○○○○○에 부과한 과징금 51백만여 원과 639백만 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소멸시효 중단 목적으로 (주)○○○○○ 소유 아파트(울산광역시 남구 *** *****)를 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이 2005. 11. 24. 법원 강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11. 24.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0. 11. 23.임.

5) (주)○○○○○의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없다가, 2007. 11. 27. 북부산세무서에서 889백만여 원을, 2008. 1. 17. 서대구세무서에서 51백만여 원을 압류함. 따라서 위 관서는 2007년 11월 이전에 채권압류한 후 법원에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음.

3.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 별도제출

4. 최근 3년(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A. 금정과

기관명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국민권익위원회	임의적 절차(진행) 규정의 강행 규정화	- 제재규정 강행규정화 대상 선정 · 규정변경예고(~2010.9.30일)
	제재기준의 세분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2010.1.5) -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제재기준을 시행세칙에 반영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방안 검토	- 주요 선진국 등 해외사례 조사·연구 진행 중
	감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신뢰성 제고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시행(2010.1.28) - 재판상 공개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B. 은행과

기관명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국민권익위원회	우체국 예금 건전성에 관한 감독기구 협조	·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의 건전성기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우리 위원회는 기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전달 · 우정사업본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우체국예금 건전성기준 개정 추진
	예금의 구속행위에 대한 관련자 제재수준 강화 등	· 개정 은행법(10.4월 국회 통과, 11.18일 시행예정)에서 은행의 예금 구속행위(깍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제재규정 신설

C. 중소기업육성

□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09.6)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실적
대부업 관리감독의 책임주체 변경 (시·도→금융위)	- 현재 연구용역, 대부업정책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중
대부업 정책 협의회의 기능 강화	- 기능강화가 필요한 이슈가 생겨 관련부처간 합의가 있으면 추진
지자체 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해당사항 없음(법무부 소관)
대부업 정상화 과제평가 및 지표개발	- 대부업무 추진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민금융 감독대상” 포상('10.1) - 대부업무를 지자체 평가 항목에 포함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
과잉대부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검토	- 현재 과잉대부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부금액 500만원 이상 대출시 대부업자는 소득증빙서류를 받도록 이미 의무화(대부업법 §7)
공적금융 제도 확충방안 강구	- 미소금융 시행 ('09.12), 햇살론 시행 ('10.7)
채무관계 서류 발급절차 등 규정개선	- '09.4월 시행된 대부업법에 기규정
대부업 실태조사 횟수축소 및 방식개선	- 실태조사(매년 3,9월)를 업무보고서(매년 6,12월)와 연계하여 연 4회→연 2회로 축소('09.12)
대부업 실태조사 항목 개선	- '09년 상반기 실태조사부터 연체율 항목을 포함하여 발표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실적
취약분야 관리 및 전문역량 확충	-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금융이용자들이 상담, 채무조정, 수사의뢰 등을 한 곳에서 one-stop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정지제도 도입	- 해당사항 없음(방통위 소관)
대부업 등록관리(조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10.6)
대부업 관리감독 세부 매뉴얼 마련	-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배포('09.12)
불법피해 예방시스템 구축	- 경찰청에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 기시행
불법채권추심 금지행위 준거기준 구체화	- 불법금융거래 유형 및 해설('09.10)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09.11) 책자 마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적사항 ('09.10)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실적
대부업 등록 등 10개 사무*에 대한 시·도지사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	-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 및 대부업정책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중

* ① 대부업 등록, ② 등록갱신, ③ 등록증의 반납, ④ 변경등록, ⑤ 교육, ⑥ 검사, ⑦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⑧ 실태조사, ⑨ 등록수수료, ⑩ 과태료 부과 등 10개 사무

D. 공정시장과

기관명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국민권익 위원회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수수료 환불 관련 제도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부터 시험 접수후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하고 있음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해석상 시험 접수후 취소한 경우까지 환불불가는 아님 - 향후 법령개정시 환불기간 확대 검토 예정

6. 임직원 퇴직 및 징계 현황

7. 재취업 현황

□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계약직 제외)

성명	퇴직 당시 직위(직급)	채용방식	퇴직일자	재취업 유관기관
김○○	위원장	공채	08.03.05	-
이○○	부위원장	공채	08.03.13	LS네트웍스 고문
이○○	금융정보분석원장	공채	08.03.28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전○○	FIU제도운영과장	공채	08.04.30	은행연합회 감사
김○○	혁신행정과장	공채	08.05.15	법무법인 변호사
김○○	상임위원	공채	08.12.09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	부이사관	공채	09.01.05	금융투자협회 부장
이○○	행정사무관	공채	09.01.09	법무법인 변호사
전○○	위원장	공채	09.01.20	-
홍○○	서기관	공채	09.03.17	법무법인 변호사
양○○	부이사관	특채*	09.03.26	한국자금중개 전무
김○○	행정주사	공채	09.04.30	금융투자협회 과장
나○○	서기관	공채	09.05.13	산업은행 계약직
한○○	서기관	공채	09.05.15	신영증권 상무이사
이○○	서기관	공채	09.07.10	외교통상부 특채
박○○	부이사관	공채	09.09.11	SK C&C 상무
김○○	행정사무관	특채**	09.10.12	-
김○○	금융정보분석원장	공채	09.11.17	증권금융사장
김○○	금융서비스국장	공채	09.12.07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김○○	전산서기보	공채	10.02.17	한국거래소 주임
나○○	행정사무관	공채	10.03.02	한국정책금융공사 팀장
임○○	상임위원	공채	10.04.15	한국은행 금통위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특수학교졸업자격 특채(1978.4.19, 재무부)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변호사자격 특채(2007.4.18, 재정경제부)

□ 징계 현황

징계 현황		처분사유	처분일시
견책	서기관 1명	음주운전	'09.2.27
	행정사무관 1명	음주운전	'09.3.23
경고	행정주사 1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09.10.9
감봉2월	서기관 2명	청렴의무위반	'09.3.19
			'09.3.23

※ 처분당시 직급

8.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검찰·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서(별도제출)

-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경기지방경찰청) 1건
-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수원지방검찰청) 1건
-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울서초경찰서) 1건
-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서울서초경찰서) 1건
-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건
-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울영등포경찰서) 1건

9. 금융위 소관 최근 3년간 소송사건 현황

(진행 · 종료 사건 분리, 원 · 피고, 사건번호 및 사건명 등)

□ 소송사건 진행 현황 (최근 3년간)

2010.9.20 기준

일련 번호	사건명	사건내용(사건번호)	진행내역
1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처분 취소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 취소된 ○○상호 저축은행 외 1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자본잠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소요구 (2006구합15684)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패 3심: 진행 중
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경제개혁연대 외 1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 (2007구합35166)	1심: 일부 패 2심: 금융위 패 3심: 진행 중
3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가 자산양수도 신고 불이행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2백만원을 부과받자 매각 계약이 양해각서에 불과하므로 과징금부과 취소 요구(2008구합43836)	1심: 종선위 패 2심: 종선위 패 3심: 진행 중
4	손해배상(기)	○○이 국가의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에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4,400만원의 손해배상 요구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0600)	1심: 진행 중
5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은 ○○테크(주) 전 대표이사로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 제기 (2009구합26463)	1심: 종선위 승 2심: 진행 중
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네트는 최대주주 변동과 관련된 신고·공시의무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598,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2009구합20076)	1심: 금융위 승 2심: 진행 중
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테크(주)는 최대주주 변동 허위 공시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55,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2009구합36316)	1심: 종선위 승 2심: 진행 중
8	대주주 변경승인 조치통보 취소	○○시멘트(주)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칸사스자산운용(주) 주식 44만주를 추가 취득한 데 대해 금융위원회가 의결권을 제한하자 소 제기 (2009구합39049) <u>*효력정지신청(2010아153) - 각하</u>	1심: 금융위 승 2심: 진행 중
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외 1인이 주식 공개매수 허위공고 및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12,0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자 소 제기 (2009구합52431)	1심: 진행 중

일련 번호	사건명	사건내용(사건번호)	진행내역
10	제제처분 취소	전 ○○은행장 ○○가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소홀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상당 업무정지 통보의 제재를 받자 소 제기 (2009구합54499)	1심: 진행 중
11	의결권 확인	○○시멘트(주)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자산운용(주) 주식 44만주를 추가 취득한 데 대해 금융위가 의결권을 제한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 (2010가합8360)	1심: 국가 승 2심: 진행 중
12	감사보고서에대한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 외 2명이 (주)○○의 재무제표 부실감사로 증권위로부터 직무정지 2년 등의 제재를 받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 제기 (2010구합15001)	1심: 진행 중
13	감사보고서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이 (주)○○커뮤니케이션의 재무제표 부실감사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1년 등의 제재를 받자 소 제기 (2010구합18741)	1심: 진행 중
14	감리결과조치통보처분 취소	○○회계법인 외 3명이 (주)○○의 재무제표 부실감사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받자 소 제기 (2010구합25831)	1심: 진행 중
15	손해배상	○○ 외 150명이 (주)○○테크놀로지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국가의 감독소홀이 있었다며 국가 외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대한민국 이외에 (주)○○테크놀로지, 현○○,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피고로 지정 (2010가합56574)	1심: 진행 중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디자인 외 1명이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 제기 (2010구합26834)	1심: 진행 중
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콤(주)가 선급금 허위계상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소 제기(2010구합28878)	1심: 진행 중
18	조치처분취소	○○이 (주)고제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직무정지 1년 등의 제재를 받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제기(2010구합34743)	1심: 진행 중

□ 소송사건 종결 현황 (최근 3년간)

2010.9.20 기준

종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사건번호)	진행내역
2008	손해배상	동아정기 발행주식에 투자한 ○○ 외 169명이 유가증권 심사과실 등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 (2004가합29649)	1심: 국가 승 2심: 국가 승 종결('08.9.12)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 금융위원회에 자신의 보험사기인지시 스템 등록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 요구 (2007구합43228)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각하, '08.11.11)
"	불공정거래조치 처분취소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면직 요구처분을 받은 동양증권 퇴직자인 ○○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음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 (2007 구합45408)	1심: 증선위 승 2심: 증선위 승 (취하, '08.11.25)
"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 외 1명이 금융위원회 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 임요구)의 취소 요구(2008구합2156)	1심: 금융위 패 (항소포기 종결, '08.11.25)
"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 취소	○○은 ○○수산(주) 前최대주주 ○○(원고의 父) 및 ○○씨에스(주)와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산(주) 주식을 취 득하였으나 대량보유 보고 미 이행으로 증권 선물위원회로부터 주식처분 명령을 받자 소 제기 (2008구합13958)	1심: 증선위 승 (소 취하, '08.05.19)
"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이 금융위원회에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 (2008구합17028)	1심: 금융위 패 (항소포기 종결, '08.11.21)
"	주식처분 명령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 파트너스 외 1명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3276)	1심: 증선위 승 2심: 증선위 승 (취하, '08.12.24)
"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 취소	보험료 유용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가 금융위원회에 제재처분 유효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4453)	1심: 금융위 승 (종결, '08.10.16)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 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2008구합27018)	1심: 증선위 승 (취하간주, '08.11.14)
2009	부당이득금반환 등	○○화학공업(주) 당시 대표이사 ○○이 회 사정리절차 개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회사의 모든 부실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 (2006가합42509)	1심: 국가 승 2심: 국가 승 3심: 국가 승 (기각, '09.4.23)

종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사건번호)	진행내역
2009	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감리조서제출 거부로 벌점 등의 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이 처분 과중을 이유로 증권선 물위원회를 상대로 소 제기 (2006구합29270)	1심: 증선위 승 2심: 증선위 승 3심: 증선위 승 (취하, '09.4.7)
"	손실보전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된 (부산) ○○금고 를 인수하였으나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 아 손실을 입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 전 요구 (2007가합42810)	1심: 국가 승 2심: 국가 승 3심: 국가 승 (기각, '09.5.14)
"	손해배상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동 금 융기관 예금자인 ○○건설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2007가합79195)	1심: 국가 승 2심: 국가 승 (기각, '09.2.12)
"	불합격처분 취소	○○ 외 41명이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 2 차시험 불합격 처분이 자의적임을 이유로 취소 요구 (2007구합38028)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금융위 승 (기각, '09.1.30)
"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 (○○카드 등)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국 가의 감독부실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위 자료 청구 (서울동부 2008가단57563)	1심: 국가(금융위)승 (소 취하, 09.03.11)
"	정직조치요구처분 취소	○○는 ○○증권(주) 서초지점 과장으로 불공 정거래 주문수탁금지 및 일임매매거래 제한위 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조치 를 받자 소 제기(2009구합15944)	1심: 금융위 승 ('09.9.11, 항소취하)
"	손해배상	○○화학공업(주) 당시 대표이사 ○○이 산업 은행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부실로 손해를 입 었다고 주장 (2006가합49593)	1심: 국가 승 2심: 국가 승 3심: 국가승('09.10.15)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주) 대한○○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 (2008구합20383)	1심: 증선위 승 2심: 증선위 승 ('09.11.20)
"	해임요구처분 취소	금감원 퇴직자인 ○○ 외 1명이 금융위원회 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 임요구)의 취소요구 (2008구합6561)	1심: 금융위 패 2심: 금융위 패 ('09.12.9)
2010	감리결과 조치 취소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서 수행한 ○○신 용정보(주)의 회계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 어 증권선물위원회가 원고에게 직무정지 2년 의 처분을 하자 부실감사가 제3자의 범죄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소 제기 (2009구합 3422)	1심: 증선위 승 2심: 증선위 승 ('10.2.18, 항소취하)

종결 년도	사건명	사건내용 (사건번호)	진행내역
2010	감리결과 조치 등 취소 청구의 소	○○회계법인외 3인이 ○○금속(주)에 대한 부실감리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감사보수액의 10%를 손해배상 공동기금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받자 소 제기 (2009구합39865)	1심: 소 취하 (‘10.3.17)
“	시정조치처분취소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을 부과 받 은 (주)○○팔이가 금융위원회에 제재 과중을 주장 (2006구합13961)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금융위 승 (‘10.4.15)
“	계약이전결정 제외 취소	○○는 ○○상호저축은행 예금자로 5천만원이 상 예금자에 대해 계약이전을 제외하는 결정 은 불법이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 제기 (2009구합4517)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금융위 승 (‘10.4.15)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금융위 원회 제재를 받은 (주)○○에너지가 적법요건 결여를 이유로 과징금부과 취소 요구(2008구합 37855)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금융위 승 (‘10.4.15)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주)○○텍에 대한 과징금부과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 하여 취소의 소 제기 (2009구합54673)	1심: 소취하 (‘10.6.17)
“	구상금	○○이 보험모집인 ○○의 행위로 손해를 입 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의 보험업무 감독소 홀이 있었다며 국가 외 2명을 상대로 지급명 령 신청 (2010차1764)	1심: 소취하 (‘10.7.16)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 를 모집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20억원의 과징 금을 부과받자 본인이 투자자 모집을 실질적 으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 제기 (2008구합 51066)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상고포기 종결, ‘10.7.1.)
“	금융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는 소외 ○○에 대한 신용정보의 공개를 금 용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 제 기 - 금융위원회 이외에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전국 은행연합회를 피고로 지정 (2009구합41424)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10.4.27, 항소각하)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은 최대주주 변동 허위공시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0,000,000원의 과 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2009구합40858)	1심: 금융위 승 (종결, ‘10.8.13)

10. 최근 3년(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체감사계획서
및 그 결과(결과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 연도별 감사계획서

- '08년 : 자체감사계획(별첨 1),
신용보증기금 감사계획(별첨 2)
- '09년 : 감사기본계획(별첨 3)
- '10년 : 감사기본계획(별첨 4)

□ 자체 및 산하기관 감사 결과보고서(조치내역 포함)

- 08년 : 자체감사(별첨 5), 신용보증기금(별첨 6)
- 09년 : 금융연수원(별첨 7), 여신금융협회(별첨 8)
- 10년 : 회계기준원(별첨 9), 금융결제원(별첨 10)

※ 금융위원회는 2008. 2 .28 설립되어 2008년부터 감사를 계획함

〈별첨 1〉

‘08년 자체감사 실시계획[안]

〈 목 적 〉

- ◇ 청사 이전비용 집행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을 통하여
위원회 출범 후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1. 감사방법

- ☐ 일부 부서의 업무를 선정하여 표본감사로 실시
- ☐ 수감부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서류점검 위주로 실시
 - 감사반이 필요서류 열람 또는 기초자료 징구
 - 담당 공무원 면담은 가급적 지양하되, 본감사에서는 필요시 면담

2. 감사 실시계획

- ☐ 감사기간 : '08.6.23(월)~6.27(금) (5일간)
- ☐ 감사대상 부서(3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 감사반 구성 : 감사담당관실 전원 (과장1, 5급3, 6급2명)
- ☐ 감사 대상 주요업무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3. 행정사항 및 감사결과 조치

- ☐ 의사운영정보팀은 감사반이 수감부서의 전자문서 열람 가능토록 조치
- ☐ 수감부서에 감사일정(예비감사 및 본감사) 및 점검사항 통보
- ☐ 감사결과 문제점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 모범사례는 격려 및 공지

<별첨 2>

'08년 산하기관 감사 실시 계획

< 목 적 >

- ◇ 산하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및 취약부문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감사개요

- 감사대상 기관 : 신용보증기금

신보를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 배경

- ▶ 최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비등
- ▶ 국회 공기업 특위('08.9)에서 공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
- ▶ 감사(監事)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관내부의 마찰 심화
- * '07년 감사직무수행 평가(기획예산처)결과 1위와 기관내부 마찰과의 상관관계 분석

- 감사 기간 : '08.11.17 ~ 28 (2주간) * 예비조사 : '08.11.3~11.14

- 감사반 구성(9명) : 감사담당관실(과장외 3명), 의사운영정보팀(1명), 외부기관(4명 : 금감원·예보·캠코·기은 각1명)

- 감사방법 : 실지 감사

2. 감사대상 부서, 기간 및 업무범위 등

- 대상부서 : 본부(비서실, 감사실, 경영지원 및 보증사업), 영업점(서울소재)

- 대상기간 및 업무범위 : '06~'08.8 기간중 처리한 업무

-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현황
- 예산편성·집행현황, 각종 행사 및 차량관리 현황
- 구상채권 관리업무
-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행 실태 등

- 금년(3~4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내용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내부통제(감사) 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감사

〈별첨 3〉

2009년도 감사계획

1. 감사 기본방향 및 원칙

◇ 금융위기 극복에 감사역량 집중

- 상반기에는 통상 감사를 정책지원 감사로 전환
 - 산하기관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핵심분야에 대한 이행 점검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용실태 점검

◇ 일반감사는 선택과 집중에 입각하여 최소한으로 실시

2. 감사실시 계획

가. 정책지원 감사

□ 감사대상 및 방법

- 금융공공기관의 정책지원 자체감사 실시(2~3월중) 결과를 토대로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실지 점검

□ 감사시기 및 감사반

- 감사시기 : 4월중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실 (3명)
 - * 필요시 금감원 등 외부기관 인력지원

□ 대상업무

- 금융공공기관이 금년도 주요업무 중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점검
 - * 금감원은 면책제도 운영 실태, 신보·산은·기은 등은 중소기업 보증 및 자금지원 실태 등을 점검

나. 일반(통상) 감사

① 종합감사 : 여신전문금융협회(3/4분기), 금융연수원 (4/4분기)

- (대상업무)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
- (선정기준) 감사대상 기관 중 외부기관의 감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기관중에서 기관의 중요도·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여전협회는 99년, 금융연수원은 '06년 각각 재경부의 수감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음

② 수시감사 : 미정

- (선정기준) 위원장 지시 등 특별히 감사의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선제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예) 신보의 중소기업 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1월 기실시)

3. 기타 사항

- ☐ 정책지원 감사에 대해서는 기관별 자체감사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등 추진

- ☐ 일반(통상)감사는 외부인력을 지원받아 실시

* 감사담당관실 인원현황(총 5명) : 과장1, 5급3, 여직원1

- ☐ 감사계획은 관계기관(감사원, 수감기관, 금융위 관련부서) 통보

1. 금융위원회 본부 감사실시

- ☐ 감사기간 및 감사반 : ‘08.6.23~27, 감사담당관 외 4인
- ☐ 감사대상 업무 :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이전 등의 예산집행 실태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 ☐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조치내용
 - 업무용차량 운영 부적절 ⇒ 운영 효율성 제고 (시정)
 - 숙박비 등 지급 부적정 ⇒ 과다지급액 환수 (현지조치)
 - 재물조사 부실실시 ⇒ 재물조사 재실시 (시정)
 - 비정규직 급여체계 상이 ⇒ 해소방안 마련 (권고)
 - 정책연구과제 관리 미흡 ⇒ 관리 철저 (현지조치)

2. 신용보증기금 감사실시

- ☐ 감사기간 및 감사반 : ‘08.11.17~28, 감사담당관 외 7인*
 - * 감사담당관실 4인, 금감원·예보·자산관리공사·기은 각 1인
- ☐ 감사대상 업무 : 내부통제시스템 및 예산집행 실태,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관리실태
-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중)
 - 박○○ 감사 처신 부적절 ⇒ 기재부 통보 (감사 사표제출)
 -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 ⇒ (주의) 예산과목에 부합한 집행
 - 정·현원 관리의 불합리 ⇒ (권고) 정·현원 일치 운용
 - 구상채권 관리의 부적정 등 ⇒ (권고) 회수 증대 방안 강구

<참고2> 금융위 감사대상 기관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기관규모			수감현황		
		예산('08)	자산('07)	직원('08)	06이전	07년	08년
개별법에 의한 설립 기관 (12)	금융감독원	233,172	311,097	1,605	감	감	
	산업은행	596,200	122,615,945	2,184	감	감	감
	기업은행	2,234,391	119,304,171	9,501		감	감
	신용보증기금	3,073,305	4,217,924	2,159		감	감,금
	기술보증기금	1,597,900	1,680,141	1,013		감	감
	농신보	1,325,000	867,652	381	감		감
	예금보험공사	90,800	14,377	607		감	감
	자산관리공사	236,935	1,686,341	768	감		감
	주택금융공사	82,900	1,284,556	532	감,금	감	감
	휴면예금재단	29,990	-	18	('08.3월 설립)		
	공인회계사회	95,700	6,218	79	금	금	
	여신전문협회	6,412	6,200	40	금		
민법에 의한 설립 법인 (6)	금융결제원	139,824	240,160	716	금	금	
	은행연합회	23,388	20,040	133	금	금	
	금융연수원	21,754	29,837	84	금		
	금융연구원	16,912	6,542	94	금		
	회계기준원	3,139	-	22	금		
	금융보안연구원	4,560	2,957	24	('06.10월 설립)		

* 감 : 감사원 감사, 금 : 금융위(재경부 포함) 감사

<참고 3>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 설립목적

- 회원 상호간 업무협조와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98.3월 설립)

☐ 설립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민법 제32조

☐ 관리·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 회원사(40) : 신용카드사(5), 리스금융(15), 할부금융(16), 신기술금융(4)

☐ 조직 및 정원

임원	여신금융부	신용카드부	정보시스템부	경영지원팀	홍보부 등	계
회장1(비상임) 부회장1(상임) 사무1 (상임)	6	7	8	7	10	40 (비상임 제외)

* 회장(1년): 이○○(롯데카드 사장), 4.18임기 만료, 부회장(3년): 강○○

☐ 주요업무 : 회원 지도·권고, 조사연구, 교육·출판사업, 회원 재무상태 분석, 소비자 민원상담 등 (여전법 제64조)

☐ 재원조달 : 회원사 분담금

☐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E)
수입(a)	4,529	5,541	6,369
법정분담금	-	-	-
회원분담금 등	4,529	5,541	6,369
지출(b)	4,543	5,179	5,651
인건비	1,843	2,124	2,315
홍보비	414	615	331
용역비	784	766	1,085
업무추진비, 회의비	393	539	588
기타(전산비 등)	1,109	1,135	1,332
차이(c=a-b)	△14	362	718

〈참고 4〉

한국금융연수원

□ 설립목적

- 금융인력을 양성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76.6월 설립)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

□ 관리·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 회원사(21) : 시중은행(7), 특수은행(7), 지방은행(6), 종합금융(1)

□ 조직 및 정원

임원	교수 실	종합 기획부	총무부	연수 운영부	통신 연수부	자격검정 사업부	도서 출판부	감사실	계
원장1 (상임) 부원장2(상임)	5	12	22	12	16	6	4	2	82

* 원장(3년): 정○○(전 한은 부총재보), 부원장(3년): 안○○, 차○○

□ 주요업무 : 금융기관 임직원 교육, 금융관련 도서 출판, 금융관련 자격 수여 및 관리 등 (정관 제4조)

□ 재원조달 : 사원분담금, 기타 연수비 등 부대사업 수익금

□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수입(a)	29,039	26,278	28,545
사원분담금	26,452	24,107	23,503
기타 수입	2,587	2,171	5,042
지출(a)	22,544	20,294	22,314
자산취득비	2,522	956	893
인건비	3,810	3,735	4,282
경비	9,481	9,789	11,671
기타	6,731	5,814	5,468
당기순이익(c=a-b)	6,495	5,984	6,231

<별첨 4>

2010년도 금융위원회 감사계획(요약)

◇ 기 본 방 향 ◇

- 자체감사는 부문감사로 수감부서의 '업무부담 최소화'
- 산하기관 감사는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극대화'

□ 금융위와 산하기관중에서 감사원 감사대상을 제외한 산하기관 11개*를 대상으로 '10년 감사계획을 수립

* 휴먼에프재단, 공인회계사회, 여신전문협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회계기준원, 금융보안연구원, 신용정보협회, 신용회복위원회

○ 자체감사(점검)는 회계처리 등 기관운영 중심의 자체감사(7월), 민원 처리실태 점검(11월), 공직기강 점검(수시, 년 4~5회)으로 구분 실시

- 자체감사는 금년도 감사원 정기감사 생략에 대한 대체감사로 실시
-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민원업무세척(연간 1회이상), 공직기강 점검은 「'10년 공직기강 추진계획」에 따라 각각 실시

○ 산하기관 감사대상은 장기미실시 기관, 소관부서의 감사 수요, 감사 가능인력 등을 고려하여 3개 기관을 선정·실시

- 회계기준원(1/4분기), 금융결제원(2/4분기), 은행연합회(3/4분기)
- 감사범위·방법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현지감사

□ 월별 세부일정(예정)

1~2월	3월	4~5월	6월
공직기강 점검	회계기준원 감사	공직기강 점검	금융결제원 감사
7~8월	9~10월	11월	12월
자체감사, 공직기강 점검	은행연합회 감사	민원점검	공직기강 점검

2010년도 금융위원회 감사계획

I. 개요

□ 금융위는 설립법 등에 따라 금감원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 감사대상은 감사원 협의가 필요한 기관 12개*, 금융위가 임의로 감사할 수 있는 기관 11개** 등 총 23개 기관임

* 금감원,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신보, 농신보,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 휴먼예금재단, 공인회계사회, 여신전문협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회계기준원, 금융보안연구원, 신용정보협회, 신용회복위원회

□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감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 및 금융위 산하 임의적 감사대상기관(11개)에 대한 감사를 주로 실시

○ 자체감사 1회, 산하기관 감사 3회, 민원점검 1회, 공직기강점검 6회

구분	주요 감사내용	횟수		비고
		'08	'09	
자체감사	예산집행 적정성 등	1	-	
산하기관감사	기관운영 전반	1	2	신보*, 여전협회, 금융연수원
민원점검	민원 처리실태	-	1	금융위, 금감원
공직기강점검	복무실태 등	3	3	

* 신보는 '08년말 감사원 등과 협의하여 감사 실시

⇒ 중복감사 지양, 효율적 감사, 감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금융위는 자체감사 및 임의적 감사대상 산하기관 중심으로 감사 실시

II. 2010년 감사 세부 시행계획

◇ 기본 방향 ◇

- 자체감사는 부문감사로 수감부서의 '업무부담 최소화'
- 산하기관 감사는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극대화'

1. 자체감사(점검)

① 회계 및 국정과제 감사 (7월)

- ☐ 중점사항 :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정과제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 실시형태 : 서면·부분감사

② 민원 처리실태 점검 (11월)

- ☐ 중점사항 : '09.9~'10.10월말 기간중 처리한 민원 전부 및 전년도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 실시형태 : 서면점검

* 민원업무세척은 연간 1회이상 자체 민원실태에 대한 점검 의무화

* 금감원은 금감원 감사실이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토록 조치

③ 공직기강 점검 (수시, 년 4~5회)

- ☐ 중점사항 : 연말연시등 취약시기와 사정기관 점검시기에 금융위 및 산하기관의 복무상태 점검
- ☐ 실시형태 : 「'10년 공직기강 추진계획」에 따라 현지점검

2.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① 정기감사

- ☐ 대상기관 : 회계기준원(1/4분기), 금융결제원(2/4분기), 은행연합회(3/4분기)
- ☐ 중점사항 : 기관운영 전반(종합감사)
- ☐ 실시형태 : 현지감사

- * 정기감사 대상기관 : 특별법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법인)
- * 선정기준 : 감사 장기미실시 기관, 소관부서의 감사수요, 감사 가능인력 등
 - 회계기준원 : '05년이후 감사 미실시, 예산 37억원('10년), 직원 23명
 - 금융결제원 : '07년이후 감사 미실시, 예산 925억원('10년), 직원 615명
 - 은행연합회 : '08년이후 감사 미실시, 예산 228억원('10년), 직원 128명

② 수시감사

- ☐ 대상기관 : 미 정
- ☐ 감사시기 : 감사의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선제적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사항

- ☐ 산하기관 감사시 필요할 경우 외부인력을 지원받아 실시
- ☐ 관련기관(감사원, 수감기관 및 관련부서)에 감사계획 사전 통보

<참고 1>

금융위 감사대상 주요 기관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기관규모			수감현황			
		예산(10)	자산(09)	직원(09)	07이전	07년	08년	09년
개별 법에 의한 설립 기관 (16)	금융감독원	2,464	3,405	1,499	감	감		감
	정책금융공사		23,139	95	('09.9월 설립)			
	산업은행	5,756	1,227,320	2,133	감	감	감	
	기업은행	20,332	1,509,167	9,715		감	감	
	신용보증기금	42,205	72,702	2,290		감	감,금	
	기술보증기금	15,568	29,458	1,055		감	감	
	농신보	1,200	21,659	380	감		감	
	예금보험공사	1,783	178	552		감	감	
	자산관리공사	16,537	44,252	1,146	감		감	
	주택금융공사	953	34,437	394	감,금	감	감	
	한국거래소	2,708	22,384	717			금	감
	예탁결제원	1,530	17,922	431			감	
	휴면예금재단	2,289	6,080	25	('08.3월 설립)			
	공인회계사회	187	136	80	금	금		
	여신전문협회	74	58('08)	41	금			금
	신용정보협회	16	7	12	('09.10월 설립)			
민법 에 의한 설립 법인 (7)	금융결제원	925	2,311	615	금	금		
	은행연합회	228	322	128	금	금		
	금융연수원	207	365	80	금			금
	금융연구원	177	107	91	금			
	회계기준원	37	86	23	금			
	금융보안연구원	70	22	44	('06.10월 설립)			
	신용회복위원회	321	328	209	('03.11월 설립)			

* 감 : 감사원 감사, 금 : 금융위(재경부 포함) 감사

* 09년말 기준 자산은 결산전 잠정치임

<참고 2>

한 국 회 계 기 준 원

□ 설립목적

- 법률 등에 의한 회계기준 제정업무의 수탁과 회계 및 외부감사 제도와 관련한 주요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관리·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조직 및 정원 : 1실 5팀('10.1월말 현재)

임원 ^{주)}	인식측정팀	금융상품팀	연결표시팀	경영관리팀	국제전략팀	계
원 장 1 상임위원 1	수석연구원 1 선임연구원 3 연구원 3	수석연구원 1 선임연구원 2 연구원 1	책임연구원 1 선임연구원 4	과 장 2 대 리 1 주임기능원 1	책임연구원 1	23

주) 비상임감사 1인, 비상임이사 11인 제외

□ 주요업무 : 회계처리기준에 관한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질의회신 등 관련업무 포함) 외감법시행령§7의2①

□ 재원조달 : 법정분담금 및 회원출연금

□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수입(a)	2,880	3,139	3,499
법정분담금	775	1,386	1,347
회원출연금	1,690	1,410	1,470
이자수익	210	283	377
수익사업	60	60	60
기타	145	-	245 ²⁾
지출(b)	2,851	3,139	3,499
인력관리비	2,039	2,180	2,292
연구관리비	374	402	464
일반관리비	432	486	665
기타	6	71	78
차이(c=a-b)	29	-	-

금융결제원

□ 설립목적

-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 금융기관 고객의 편의제고 ('86. 6월 설립)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인 주무관청 허가)

□ 관리·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참가기관(64) : 사원(11), 준사원(10), 특별참가기관(43)

- * 사원(한은, 산은 등 11개 은행), 준사원(수협 등 8개 은행, 신보 기보)
- 특별참가기관(서민금융기관, 외은지점, 금융투자회사 등 43개 기관)

□ 조직 및 정원

(단위 : 명)

임원	부서장	수석부부장	부부장	과장	사원	계
원장 1 감사 1 전무이사1 본부장4	22	37	65	218	266	615

□ 주요업무 : 여음교환소의 설치·운영, 지로제도 운영, 금융공동망의 구축·운영,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의 개발추진 및 전산처리, 금융기관의 전산업무 지원 또는 대행

□ 재원조달 : 참가기관 회비, 기타(예금이자 등)

□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주)}
수입(a)	106,930	111,831	107,720
회비	93,356	97,776	89,672
기타수입	13,574	14,055	18,048
지출(b)	98,284	101,886	99,228
소유물비	1,013	2,516	-
인건비	46,154	57,573	55,494
경비	33,387	25,989	28,648
전산업무비	17,730	15,808	15,086
당기잉여금(c=a-b)	8,646	9,945	8,492

주) 작성일 현재 결산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금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전 국 은 행 연 합 회

□ 설립목적

-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 금융기관거래처의 신용정보의 집중 관리, 금융인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관리·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 조직 및 정원 : 7부 2실('09.12월말 현재)

임원	부서장	차석부장	팀장	부서원	계약직	계
회 장 1	9	6	5	77	31	128
부 회 장 1						
감 사 1						
상무이사 2						
이사대우 1						

□ 주요업무 :

- 사원은행 경영개선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 사원은행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및 업무개발
- 신용정보집중관리

□ 재원조달 : 사원은행분담금 (은행연합회 정관 제31조)

□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12월말
수입(a)	23,412	23,794	22,692
사원분담금	21,254	21,740	20,899
전기잉여금	750	570	600
기 타	1,408	1,484	1,193
지출(b)	19,889	20,916	20,579
인건비	9,539	10,186	9,650
업무추진비, 회의비	836	935	706
기타(전산비등)	9,514	9,795	10,223
차이(c=a-b)	3,523	2,878	2,113

〈별첨 5〉

'08년 자체감사 실시결과

1. 감사개요

- 기간 및 대상부서: '08.6.23(월)~6.27(금), 혁신행정과 등 3개부서
- 대상 업무: 조직개편 외부감사 결과처리 등 외부기관 관심분야 업무
 - 청사이전 관련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비정규직 운용실태
 -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실태
 - 신·기보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2. 감사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

① 차량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부적정

- 업무용 차량을 중형 위주로 운영
 - ⇒ 에너지 절감 및 차량운영 효율성 방안 강구 (시정)
 - * 공용차량 관리·운영개선방안을 마련('08.7.10)하여 시행 중
- 국외출장중 항공기 숙박시 숙박료 지급, 비대상자에게 대우수당 지급,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
 - ⇒ 숙박료 및 대우수당은 환수하여 국고반납(7.21)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실명 서명토록 공지 (현지조치)

② 재물조사 부실 실시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보유물품과 불일치

⇒ 재물조사 재실시 (시정)

③ 본부와 FIU의 비정규직 급여 체계 및 수준이 상이

⇒ 급여체계 및 수준의 차이 해소방안 강구 (권고)

④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 정책연구과제 관리 및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 등록 철저 (현지조치)

<참 고>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담당 부서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혁신행정과
2	국외출장시 숙박비 초과 지급	현지조치	“
3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서명 미이행	현지조치	“
4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
5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
6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
7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
8	본부와 FIU의 비정규직 급여체계 상이	권고	“
9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은행과 등

〈별첨 6〉

**2008년 신용보증기금 감사
결과 보고서**

2009. 2.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I . 감사개요	1
II . 신용보증기금 현황	2
1. 일반현황	2
2. 신용보증 지원현황	3
III .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5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7
나. 監事의 처신 부적절	8
다. 예산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	12
라. 정/ 현원 운용 부적정	18
마. 구상채권 등 사후관리 미흡	22
※ <참고>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목록	30
3. 감사결과 처리요령	32

I

감사 개요

< 목 적 >

- ◇ 산하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취약부문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1. 감사개요

- 감사 기간 : '08.11.17 ~ 28 (2주간)
- 감사반 구성(9명) : 감사담당관실(과장외 3명), 의사운영정보팀(1명), 외부기관(4명 : 금감원·예보·캠코·기은 각1명)
- 감사방법 : 실지 감사

2. 감사대상 부서, 기간 및 업무범위 등

- 대상부서 : 본부 (비서실, 감사실, 경영지원 및 채권관리부서 등)
- 대상기간 및 업무범위 : '06~'08.10. 기간중 처리 업무
 -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현황
 - 예산편성·집행현황
 - 인력운영의 적정성
 - 구상채권 관리업무 등

※ '08.3~4월 기간중 실시한 감사원 감사 내용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내부통제(감사) 제도 운영 및 구상채권 관리 등 적정성 여부를 중점 감사

II 신용보증기금 현황

1. 일반현황

□ 설립 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조직 및 인원 ('08년 11월말 현재)

○ 조 직

- 본 부 : 5 부문·1 본부·1 연구소
- 영업점 : 9 영업본부, 86 영업점

- 인원(현원) : 총 2,172명 (임원 8명, 직원 2,164명)

□ 업 무

- 신용보증, 신용정보 종합관리, 신용보험 및 산업기반신용보증 등이 있으며 그 중 신용보증업무가 주업무

<기금관리 계정 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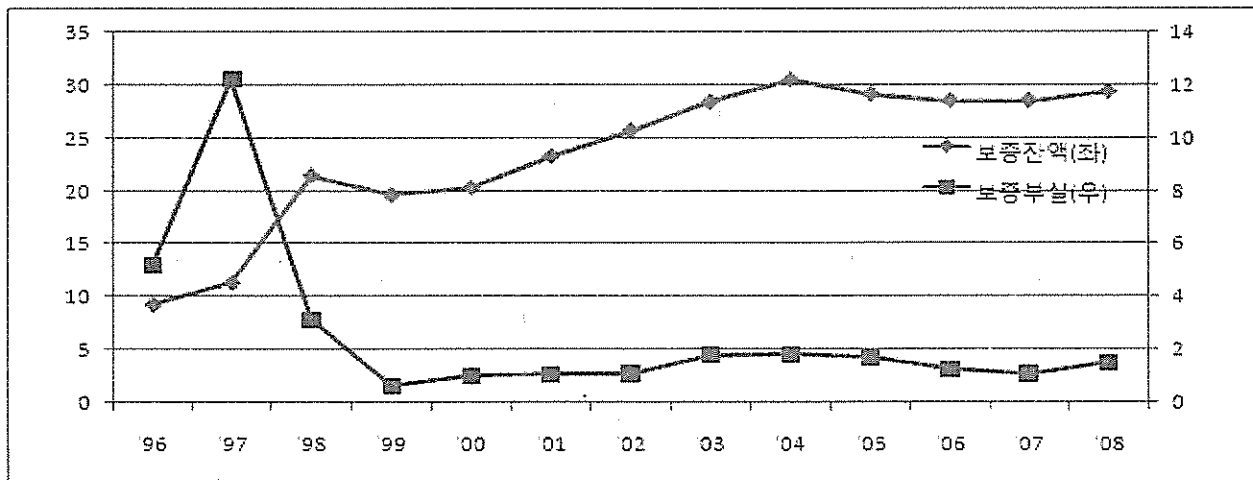
구 분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신용보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설치근거법	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업무감독권	금융위 (산업금융과)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기획재정부 (민자사업관리과)
정원(명)	2,141	127	14
보증잔액(억원)	293,583	36,763	9,355

2. 신용보증 지원현황

- 외환위기 직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보증 지원확대에 따라 보증규모가 급증(21.5조원('98)→ 30.5조원('04))
- '05년 이후 장기·고액·중복보증의 축소를 통해 보증규모를 축소(30.5조('04)→28.5조('07))
- '08.6월부터 경기활성화를 위해 보증공급 규모 확대 노력

<신용보증 잔액 및 부실추이>

(단위 : 조원)



- '08.11월말 현재 보증잔액 29조 3,583억원(전년말대비 +2.9%)중 대출보증이 24.6조원(83.9%)임
- 보증업체수 : 직접보증 184,778개, 위탁보증 5,321개, 재보증 1,126개
- 평균보증비율¹⁾은 83.5%, 보증한도²⁾는 95%이며, 평균보증료율은 1.36% 수준 ('08.1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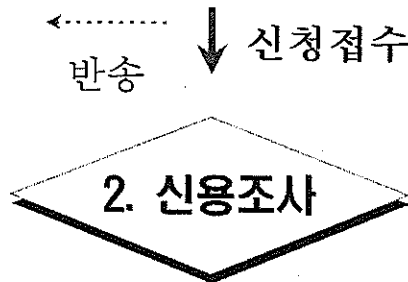
1) '보증금잔액 / 대출금잔액' (100% 전액보증 대상(이행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제외)

2) '08.11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한도를 85%에서 95%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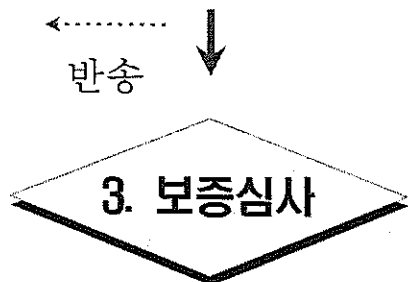
〈참고〉 보증지원 및 사후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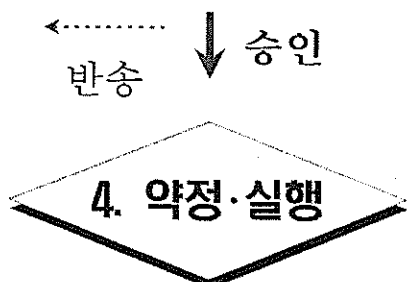
- 보증신청 : 인터넷 or 영업점 방문
- 담당팀 배정 : 영업점장이 배정
- 보증상담 : 고객팀장과 고객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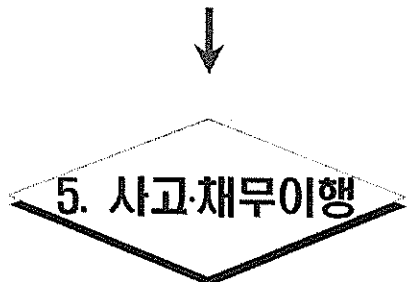
- 자료수집 : 직접수집 & 고객제출
- 예비조사 및 현장조사
- 신용조사서 작성 : 간이 or 표준조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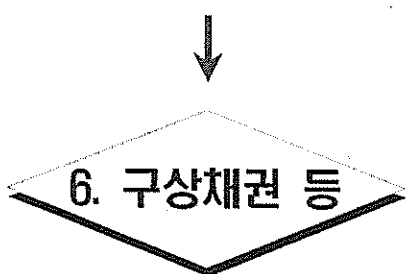
- 신용평가등급 산출 : CCRS or SBSS
- 보증한도 검토 및 심사검토표 작성
- 심사의견 개진 : 담당자 종합의견



- 신용보증 약정 : 채무관계자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 전자 or 서면보증서
- 보증료 수납 : 온라인입금 or 신용카드 가능



- 보증사고 : 당좌부도, 연체 등
- 채무이행심사 : 보증채무 이행 요구
적정성 심사 등
- 대위변제 :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
회사에 변제



-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관리
-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은 상각처리
- 상각 후 10년 경과하면 민간채권 추심
회사에 회수 위임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번 감사는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고, 국회 공기업 특위('08.8월)가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 내부통제시스템 우수기관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코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공공기관 監事 직무평가결과('08.6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신용보증기금을 선정하여 실시하였음
- 신용보증기금은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충을 위하여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시행 및 P-CBO 발행 등 신용보증 업무에 매진하고 있어
 - 감사로 인한 업무부담을 가급적 줄이고, '08.3~4월 기간중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시스템 및 예산집행부문과 구상채권 관리부문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실시 결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 ① 내부통제시스템의 경우 박철용 監事가 취임초기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 ② 예산집행부문의 경우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잘못된 자금지출, 법인카드 분할결제 및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문제가 있었음
- ③ 인력운영 부문의 경우 현원 대비 정원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잉여인건비를 급여인상에 반영하는 등 인력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며
- ④ 구상채권 등 사후관리 부문의 경우 상각채권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지체, 보증채무 이행 관련 양도 담보물 관리의 부적정 등이 발견되었음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금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내용중 주요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감사직무의 독립성, 감사실 운영, 자체감사 실적,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실적 등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

[Ⅲ] 감사 결과

- ☐ 신용보증기금은 監事의 직무 및 감사실 운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인사·예산·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별도기준 마련 또는 감사(감사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 감사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연수·감사원 특정 감사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 자체감사의 경우 '07년 41회, '08년(6월말현재) 24회 실시하였는 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일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됨
 - 감사원 등 외부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음
-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은 전반적으로 양호
 - 다만, 박철용 감사가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서를 제출했던 것은 감사직무 독립성 등을 훼손한 행위였음

나. 監事의 처신 부적절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신용보증기금의 박○○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은 결과, 연기금 부문(12개 기관)에서 1위를 획득한 바 있음 ('08.6월)
- 따라서 박 감사의 직무수행 실적이 다른 금융공기업에 전파하기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박 감사가 취임초기 신보 노조에게 취임 1년 경과후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한 점을 인지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감사하였음

[Ⅲ] 감사 결과

- 신용보증기금 감사 박○○은 기획재정부장관(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임명('06.12.1)*을 받은 후 신보 노동조합원들이 출근을 저지하자, '1년후 중간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노조에게 제출하고 출근을 시작하였음

* 신용보증기금 감사 임면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이었으나(신보법 제1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07.4월)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공운법 제26조제4항)하도록 변경

- 신보 노조는 박감사 취임 1년 후('08.2.18~20) **확약서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박 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 결과, 모집단 2,046명(임원, 임금피크제 및 휴직자 제외)중 1,064명이 응답(응답률 52.0%)하였으며, 설문 문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60%를 상회하고, 긍정적 응답은 10% 미만

- 신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음('08.6월)

- 평가결과 총 67.5점을 획득(100점 만점)하였는바,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부문에서 우수(B⁺)하였고,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부문이 저조(C⁰)하였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평가 결과

구분	기관 수	1위 점수	평균
1분류 기관 (검사 및 문화·국민 부문)	9	76.2	67.4
2분류 기관 (산업 및 교육·연구 부문)	10	80.7	68.8
3분류 기관 (신보 등 연기금 부문)	12	67.5	56.6

- 신보 노조는 '08.9.22부터 노조전임자(6명) 주도하에 박 감사의 출근을 저지하고 감사실 출입을 봉쇄

- 신보 경영진은 노조에게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박 감사의 정상적 직무수행에 협조해 줄 것을 **3차례에 걸쳐 촉구**

* 일부 노조원이 노조 전임자에 동조하여 감사퇴진을 위한 쫓겨대회 등에 참여하였으나, 일과 전·후 등 근무외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복무규정 위반 사실은 발견치 못함

- 신보 외부에서 직무를 수행해 오던 박 감사는 금융위 감사가 실시되면서부터 노조의 출근저지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재개

<지적사항>

□ **(확약서 제출 행위)** 박 감사는 재경부장관에 의하여 신보의 상임감사에 임명되었음에도 임면권자가 아닌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확약한 것은 **법에 의한 임면권자의 고유권한을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처신이었음

□ **(확약서 제출의 영향)** 노조에게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노조의 여론이나 반발을 염려해야 하는 등 **감사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노조의 단체행동도 유발**하는 결과 초래

* 감사는 **감사기준**(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 유지 등)에 따라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야 함 (공운법 제32조,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제8조)

○ 노조의 **정당하지 못한 의견표출을 정당화**시켰으며 향후 임원인사시에도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

○ 신보의 **대내외적 이미지와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여타 신보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함

□ **(박○○ 감사의 태도)** 감사반은 박 감사에게 **확약서의 작성 여부·경위·내용** 등과 이로 인한 감사의 독립성 훼손 등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사실여부 및 의견을 묻는 질문서를 송부했으나,

○ 박 감사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고**”는 의미는 아니었다”, “**확약서 원본이 없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만을 계속하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아니 하였음

- (종합 결론) 박○○ 감사는 감사직 임명의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신보업무의 정상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감사 취임 직후 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노조에게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임명의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 노조의 단체행동을 유발하여 임직원과의 마찰을 초래하는 등 감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냄
 - 현 상황으로 보아 박 감사는 노조뿐만 아니라 신보 임직원들에게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 신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으나, 박 감사 문제가 기관역량을 결집하는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다. 예산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국회(공기업 특위)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었음
- 감사원이 '08.3~4월중 신보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가급적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음
- 또한, 신보가 '08.6월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절한 관행을 지적한 바 있어, 동 자체감사 이후 법인카드 사용의 개선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산과목별 집행실태를 점검하였는바 특히 소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집중 감사
- 또한, 법인카드 사용관행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실시 이후 '08.6~8월(3개월)중 본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의 전표와 사용 목적·장소·일시·등을 비교 분석하였음

【Ⅲ】 감사 결과

① 예산과목에 부적합한 용도로 예산 집행

- 신용보증기금 예산운용요령 제4조제2항 별표를 보면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는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분류하여 집행 용도를 달리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 : 대외기관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섭외성 경비
- 회 의 비 : 운영위원회, 부점간 업무협의, 부점직원 간담회 등 통상적인 대내외 회의비

- 신용보증기금은 '07.1.1~'08.8.31 기간중 업무추진비는 5,904건 1,18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회의비는 동 기간중 5,434건 1,135백만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7년		'08.1~8말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액
업무추진비	3,791	780	2,113	403	5,904	1,183
회의비	3,551	741	1,883	394	5,434	1,135
계	7,342	1,521	3,996	797	11,338	2,318

<지적사항>

- 예산집행은 예산운용요령에 명시된 예산과목별 내용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바, '07.1.1~'08.8.31 기간동안의 업무추진비 총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 영업부·서부기업지원단·강남영업본부 등은 부서간 업무협의, 부점직원 회식 등 회의비 성격의 경비 268건 20백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업무추진비 총건수의 4.5%, 총집행액의 1.3%)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집행 현황

(단위:건, 백만원)

본점		영업점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	2	240	18	268	20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과목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② 법인카드 분할결제 및 실명 미서명

-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카드 사용기준」 제7조제3호는 법인카드 사용시 1건의 거래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최근의 자체감사(대상기간 '08.1.1~5.31)에서 분할결제 사례 516건, 103백만원을 적발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한 바 있음
-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법인카드 사용기준」(신용보증기금) 제8조에 의하면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 신보는 자체감사(대상기간 '08.1.1~5.31)에서 실명 미서명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토록 지도한 바 있음
- 신보 자체감사 이후 법인카드의 분할결제 행위 및 실명 미서명 관행이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08.6.1~'08.8.31(3개월) 기간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점검 실시

<지적사항>

- ① (분할결제) 동일장소에서 동일시간에 집행한 금액*을 특별한 이유없이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결제한 사례가 87건(분할결제전 37건, 11백만원) 발견되었음

* 계정이 다르거나 예산과목이 다른 지출을 동일카드로 사용한 사례는 제외

- 본점(10건)보다는 주로 지점(77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아직도 일선기관에서는 자금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음

② (실명 미서명) 법인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회의비 등 2과목에 대하여 본점의 법인카드 전표를 조사한 결과,

- 실명 미서명 사례*가 전체건수의 1/4을 상회하고 있어 자체감사 실시전(5월)과 비교시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

* 인재개발부, 신보, Kodit 등으로 서명

-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자체감사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직원들의 규정준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 미서명 현황

(단위: 건, %)

구분	'08.5월	'08.6월	'08.7월	'08.8월
법인카드 결제건수(A)	432	497	446	502
실명 미서명 건수(B)	135	138	115	123
실명 미서명 비중(B/A)	31.3	27.8	25.8	24.5

*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 집행실적에 대하여 집계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향후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동일건에 대하여 분할결제를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통보)
- 법인카드 전표에는 반드시 사용자 실명으로 서명토록 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 규정 및 지침

◀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일반지침 제9호 : 구매카드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 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

◀ 법인카드 사용기준 (신용보증기금)

- 제7조제3호 : 1건의 거래를 여러건으로 분할하여 결제해서는 안됨
- 제8조제1항 : 법인카드 사용자는 매출전표에 본인의 실명으로 서명해야 함

라. 정/현원 운용 부적정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08년초부터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인력과 자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인 신보의 인력운용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신보용보증기금의 정/현원 운용의 적정성 및 정/현원 차로 발생하는 남은 인건비의 적정한 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
 - 먼저 정/현원 인력운용 현황 및 인건비 예산편성과 집행 추이를 점검하고, 정/현원 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인건비의 집행 및 부서별 인력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감사

[Ⅲ] 감사 결과

- 정/현원 개요
 - 정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정하는 인력운용 한도로서 조직신설·통폐합 등의 경우 총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됨
 - 현원은 실제운용하고 있는 정규직 인원
 - 비정규직은 정원외로 운용되는 한시적근로자 등 계약직을 말함
 - 정/현원 현황: 정원 2,141명, 현원 2,005명, 差 136명
 - 정/현원 차이를 살펴보면 본부와 영업본부는 정원과 현원이 비슷한 반면, 연수·파견·휴직과 영업지점은 정원 보다 현원을 적게 운용

(‘08.10말 기준, 신용보험 및 SOC보증 제외)

		본 부	영업본부	연수·파견· 휴직 등	영업지점 (채권추심팀, 소송지원 팀 포함)
정원(A)	2,141	303	62	71*	1,705
현원(B)	2,005	307	63	56	1,579
差(B-A)	△136	4	1	△15	△126

* 연수 30명, 파견 9명, 휴직 21명, 별정직 현원 미충원 11명

□ 인건비 편성 및 집행

○ 정부는 05년 이후 기금의 총인건비를 전년도 총인건비예산의 일정률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설정

- 기금(공공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기금과 협의·조정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함

* 04년까지(기금관리기본법 적용 이전)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함

<연도별 정/현원 및 인건비 편성·집행 추이>

	정원	현원	정/현원 차이	인건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1인당 평균임금	평균임금 순증(%)	잔액
04년	2,147	2,085	△ 62	120,952	120,669	57.9		283
05년	2,131	2,030	△101	130,106	130,026	64.1	10.7	80
06년	2,131	1,999	△132	132,579	131,249	65.7	2.5	1,330
07년	2,141	2,003	△138	138,879	138,787	69.3	5.5	92
08.10월	2,141	2,005	△136	137,941	113,007	56.4	-	24,934

* 퇴직급여 및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임

** 08년 1인당 평균임금(4급 25호봉) 69.6백만원

<지적사항>

□ (현원대비 정원의 과다책정 운용 문제) 신보는 05년도 예산 편성시 인건비 예산을 정부의 가이드라인(04년도 인건비예산 총액의 3%증가)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 정원 2,131명보다 101명 적은 현원 2,030명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 05년도 1인당 임금증가율이 10.7%에 달하게 됨

- 이후에도 07년까지 현원 27명을 추가로 감축¹⁾하면서도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전액을 집행하여 05~07년 기간중 예산편성기준 인건비는 총 7%증가하였으나, 1인당 집행된 인건비는 총 18.7%인상²⁾되었음

1) 정규직 퇴직/채용: 31/0명(06년), 31/35(07년)

2) 예산편성기준 인건비는 3.0%(05년), 2.0%(06년), 2.0%(07년) 증가해 온데 비해 1인당 집행인건비는 10.7%(05년), 2.5%(06년), 5.5%(07년) 증가

- 이러한 정/현원 및 인건비 운용의 결과 감사일 현재 인건비 예산은 여유분이 없는 상태이나, 정원은 현원에 비해 과다 책정하여 운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신보는 감사일 이후 경영효율화를 위해 09년부터 12년까지 정원의 13.3%(304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중(08.12월, 경영효율화 방안)

□ (영업지점 인원부족) 또한, 신보의 주요사업이 보증지원 및 구상채권 회수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점의 인원을 정원보다 100명이상 적게 운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력운용을 하고 있음

* 영업지점(정/현원): 05년(1,717/1,547), 06년(1,695/1,533), 07년(1,709/1,540),
08년(1,705/1,579)

본 부(정/현원) : 05년(329/340), 06년(330/333), 07년(323/326), 08년(303/307)

연수·파견·휴직(정/현원): 05년(34/89), 06년(35/68), 07년(37/66)

08년(71/56) : 08년 육아휴직 및 임금피크제 전직예정인원 등
증가에 따라 정원 증원

<조치요구 사항>

-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6조(조직·인력운영의 기본원칙)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인력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직과 인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시켜 운영

마. 구상채권 등 사후관리 미흡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수감으로 인한 보증지원업무 부담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은 구상채권 등 사후관리 부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보증기업의 부실로 인해 기금이 기업을 대신해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고 그에 따라 취득한 구상채권의 관리업무와 관련규정의 투명성, 명료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
 - 먼저 대위변제 현황, 구상채권(상각채권 포함) 현황 및 구상채권 회수금의 회계처리 관련규정 등을 점검하고, 상각채권 관리의 적정성, 대위변제 시기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규정의 투명성, 명료성 등에 대해 집중 감사

〔Ⅲ〕 감사 결과

① 상각채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상각채권 관리 개요

- (개념) 상각채권은 기금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적어 상각 처리한 채권

- 상각기준 :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

* 구상채권(자산)에서 상각되는 채권은 재무제표상 주식으로 표기

- 「직제규정」에서는 용어를 '상각채권'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구상권관리규정」에서는 '특수채권'으로 사용

○ (상각채권 현황) 08.10말까지 누적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는 354조원, 보증사고금액은 21.5조원이며, 대위변제한 금액은 21.9조원으로 동 금액만큼 채무자에 대해 구상채권을 소유

- 구상채권을 상각한 상각채권규모는 12.4조원으로 기본재산 (3.7조원)의 약 3.4배에 이르며 매년 1조원 수준씩 증가 추세

(조원, 08.10말 현재)

보증공급	보증사고	대위변제	구상권 회수	구상채권 잔액	상각채권 잔액
354	21.5	21.9	6.8	3.0	12.4

* 06년 1.3조원, 07년 1.4조원, 08년 1.0조원 상각 처리

- 채권규모증가와 더불어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성화 등에 따라 채무상환 기피 분위기가 나타나고, 채무관련자도 계속 증가

	2005년 (명)	2006년 (명)	2007년 (명)	08.10월말 (명)
계 (전년대비 증가)	318,024	330,489 (12,465)	337,044 (6,555)	340,224 (3,180)
주채무자	155,712	161,879	165,007	166,346
연대보증인	162,312	168,610	172,037	173,878

- (상각채권 회수체계) 신보는 상각채권 사후관리업무를 영업점과 채권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이중 상각채권 회수업무는 상각 후 1년간은 영업점에서, 그 이후 10년까지는 채권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음
- 최근(08.2월)에는 상각처리 후 10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을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여 회수하고 있음

1단계		⇒	2단계		⇒	3단계	
시기	상각 후 1년		상각 후 평균 10년			상각 후 11년 이후	
관리	영 업 점		채권관리팀(21개)			위임 (4개 신용정보회사) (고려, 나라, 미래, 솔로몬)	
규모	3조원		7조원			2조원	
회수	148억(06), 293억(07)		858억(06), 914억(07)			19억(08)	

<지적사항>

- (회수부진) 상각채권 회수는 12조원(07년말 11.5조원)의 채권 중 연간 1천억원 수준을 회수(회수율 1.0%수준)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위임을 통한 회수는 2조원의 채권 중 연 19억원(회수율 0.1%수준) 회수에 그치고 있음
- 회수 가능성이 낮은 다수의 상각채권을 장기간 보유·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증재원의 비효율적 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각채권의 매각, 회수위임 확대 등 회수증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상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용어혼용) 신보는 '상각채권'과 '특수채권'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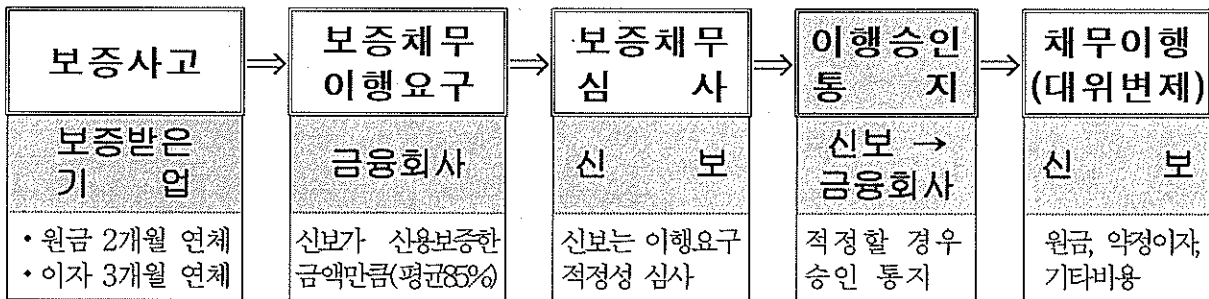
<조치요구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상각채권의 매각, 회수위임 확대 등 회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각채권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구상채권을 상각한 채권을 '상각채권'과 '특수채권'으로 혼용하고 있는 바, 용어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② 보증채무이행(대위변제) 지체

<보증채무이행 절차>

- 신보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신보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 신보는 자체심사를 거쳐 승인통지 및 보증채무 이행 (대위변제)



<지적사항>

- 2007.1.1. 이후 신보가 보증채무이행 승인일(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일까지 10일 이상 보증채무 이행을 지체한 사례(최장 53일)는 33건 3,972백만원임
- 이중 우편물발송을 지연하여 이행승인통지를 지연한 것은 20건 3,510백만원이며, 이로 인해 약정이자 약 10백만원 추가 부담
- * 신보는 보증사고일부터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약정이자(494억원) 부담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약정이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증채무이행을 승인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양수받은 양도담보물 관리 부적정

<양도담보물 관리 개요>

- (개념) 양도담보물은 신보가 보증사고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양도담보 방식으로 취득·인수한 기계시설 등 동산
- (회계처리) 양도담보물 매각대금은 '양도담보물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부분보증*일 경우, "양도담보물 이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와 정산

* 통상 보증금액의 85%는 신보가 보증, 나머지는 취급금융기관이 신용보증

<지적사항>

- 2006.1.1 이후 신보가 채권관계기관으로부터 양수받아 매각한 감정가액 30백만원이상 양도담보물은 78건
- 양도담보물 매각대금을 이전계약서상의 정산예정일보다 7일 이상 지체하여 정산한 경우가 20건이 있었음
- * 사례) 시화지점 (주)팀메이드관련 양도담보물의 매각대금은 이전 계약서상 정산예정일보다 196일 경과 정산 (운용수익 약 15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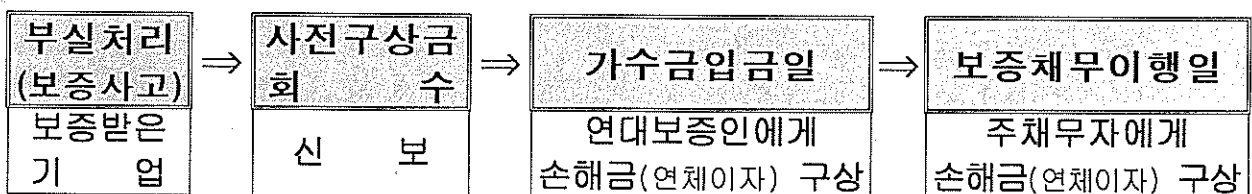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는 채권관계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양도담보물의 매각대금 정산이 이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4 사전구상금 회수관련 가수금 회계처리 부적정

<가수금 회계처리 개요>

- 가수금은 출납과잉금, 유형고정자산 등의 매각대금 중 일부 수입금 등 정당계정 처리를 보류하는 일시수입금(신보 회계처리기준 제57조)
 - 신보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채무관계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회수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보증채무 이행과 동시에 구상채권 등에 충당토록 하고 있는 바,
- * 주채무 이행의무위반, 폐업, 3개월이상 휴업 등의 사유가 생긴 때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금액만큼 사전상환의무 부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 연대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금을 회수하였다가 상환하는 경우, 가수금입금일부터 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하는 주채무 약정이자를 가수금입금일로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는 반면,
 - 주채무자에게는 주채무약정이자를 보증채무이행일자에 회계처리함



<지적사항>

- 2006.1.1 ~ 2008.10.31 채무관계자로부터 입금된 가수금 중 1천만원이상 1개월이상 경과(최장 2년9개월) 정리된 가수금은 185건 85억원(평균 4,600만원/건)이며, 동 가수금이 정리되기까지 신보는 여유자금으로 운용 회계처리 (평균금라 07년 4.54%, 08년 5.67%)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사전상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통일성과 형평성을 결여

○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약정이자를 면제한 사례

(주)포○○★★개발(대표 김○○)의 구상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인 ○○개발(주)로부터 2006.1.25. 965,393,064원을 가수금계정에 입금하고, 2007.3.26. 동 가수금을 정리하면서 당초 가수금입금일자로 기산일 처리하였음 (원금상환일로 처리했을 경우 $168,613,172\text{원} = 965,393,064\text{원} \times 425\text{일} / 365\text{일} \times 15\%$) (신용보증부실관리규정 제24조제1항 단서)

○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약정이자를 부과한 사례

(주)##상사(대표 김○○)의 구상권 회수와 관련하여 2006.6.8. 오○○으로부터 42,000,000원을 회수하여 당일 가수금계정에 입금하였고, 91일 경과한 2006.9.7. 동 가수금으로 보증채무 원금 37,725,025원과 대지급금 4,274,975원을 정리하였으며, 보증채무 원금상환에 충당된 가수금 37,725,025원에 대하여도 원금상환일인 2006.9.7.까지 주채무약정이자 (1,410,810원 = $37,725,025\text{원} \times 91\text{일} / 365\text{일} \times 15\%$)를 부과 (신용보증부실관리규정 제24조제2항)

- *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로부터 사전구상금을 회수하여 가수금 처리하였다가 주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가수금입금일로 주채무 약정이자를 회계처리

<조치요구 사항>

- 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채무관계자로부터 회수한 사전구상금을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구상채권 등에 충당할 경우, 가수금 입금일로부터 보증채무상환일까지 발생하는 주채무 약정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채무관련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참고>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목록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및 조 치 요 구 내 용
1	<p>◇ 監事의 처신 부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에게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임면권을 침해하였고, 노조의 단체행동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초래
2	<p>◇ 예산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p> <p>①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는 집행용도가 상이함에도 이를 혼용하여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p> <p>⇒ 예산과목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 (통보)</p> <p>②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 사용시 1건을 2~3개의 건으로 분할하여 결제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p> <p>⇒ 법인카드 사용시 동일건 분할 결제 금지 (통보)</p> <p>③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카드사용시에는 카드전표에 반드시 사용자 실명을 서명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p> <p>⇒ 법인카드 사용시 사용자의 실명을 서명 (통보)</p>
3	<p>◇ 정/현원 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대비 현원을 과소(정원의 6.3%)하게 운영하고 그 잉여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인력을 운용 <p>⇒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 마련 (권고)</p>

일련 번호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내용
4	<p>◇ 상각채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필요</p> <p>① 상각채권 규모는 12조원이나 되는 반면, 연간 회수는 1천억원 수준에 불과(회수율 1% 수준)</p> <p>⇒ 상각채권의 회수증대 방안 강구 (권고)</p> <p>② 동일한 채권을 직제규정은 상각채권으로, 구상권관리규정은 특수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용어상 혼란을 야기</p> <p>⇒ 혼용 사용하는 용어(상각채권과 특수채권)를 정비 (권고)</p>
5	<p>◇ 보증채무 이행(대위변제) 부적정</p> <p>- 보증채무 이행사유가 발생시 약정기한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여 불필요하게 연체이자 부담</p> <p>⇒ 보증채무 이행 업무의 적시처리 (통보)</p>
6	<p>◇ 보증채무 이행으로 양수받은 양도담보물 관리 부적정</p> <p>-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양도담보 방식으로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경우 지체 없이 채권기관과 정산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체</p> <p>⇒ 양도담보물 정산업무를 적시 처리 (통보)</p>
7	<p>◇ 구상권 가수금 회계처리 부적정</p> <p>- 구상권 가수금 처리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게는 주채무약정 이자를 가수금 입금일로 소급하여 회계처리 하는 반면, 주채무자에게는 보증채무 이행일자로 회계처리 하여 형평성 결여</p> <p>⇒ 사전 구상금 회수관련 가수금 회계처리 방법 개선 (권고)</p>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통보사항은 즉시조치

나. 권고사항은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7〉

**2009년 한국금융연수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09. 12.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I. 감사개요	1
II. 한국금융연수원 현황	2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5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	7
나. 복지부문에 관한 사항	8
다. 회계부문 등 기타 사항	10
3. 조치계획 및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12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3

I

감사 개요

< 목 적 >

◇ 한국금융연수원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취약부문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 법적 근거 : 민법 제37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감사의 성격 : 정기 업무감사

□ 감사실시기간 : 2009. 11. 16 ~ 11. 27 (10일간)

□ 감사대상기간 : '06. 7. 1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

* 재경부 종합감사('06. 3월) 이후 감사 미실시

□ 감사범위 : 업무전반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4명

<강석민, 이문규, 조환석, 김홍(예금보험공사 직원)>

□ 감사중점사항

- 교육훈련 계획, 내용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 자격검증 및 교재출판 사업의 적정성
- 예산편성·집행, 회계처리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II 한국금융연수원 현황

□ 설립 목적(근거) 및 연혁

- 금융인력을 양성하여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1

- 1976. 6. 5 : 한국금융연수원 설립
- 1984. 5. 9 : 전국은행연합회 부설기관으로 개편

□ 사원기관 : 21개사(은행 18개, 신보, 기보, 메리츠증권)

□ 조직 및 정원 : 6부 2실, 80명

- 조직 : 종합기획부, 총무부, 연수운영부, 통신연수부,
자격검정사업부, 도서부, 교수실, 감사실

* 감사 :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겸임(전병렬, 전 금융위 FIU 제도운영과장)

- 원장(김윤환, 49년생) : 한국은행 ADB근무, 17대 대통령직인수위전문위원
- 부원장(안병관, 53년생) : 금융연수원 내부 승진
- 부원장(차원진, 49년생) : 전 한국은행 총무국장

□ 주요업무(한국금융연수원 정관 제4조)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
- 교육과 관련된 교자재 및 금융관련도서의 출판
- 각종 자격의 수여 및 그 관리·운영
- 기타 연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주요 재원조달 : 사원기관 분담금(한국금융연수원 정관 제35조)

□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 고유목적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10. 31 현재)
수입(a)	26,278	28,545	36,280
사원분담금	18,338	17,304	16,454
추가분담금	5,769	6,199	3,014
기 타 ^{주1)}	2,171	5,042	16,812
지출(b)	20,294	22,315	17,071
자산취득비	956	893	91
인건비	3,735	4,282	4,293
경비	9,789	11,672	10,694
기타 ^{주2)}	5,814	5,468	1,993
차이(c=a-b)	5,984	6,230	19,209

주1) 전기이월금, 전입금 등 (2009.10.31현재)에는 리모델링 관련 수입예산 12,000백만원 포함)

주2) 추가교육비 등

○ 수익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10. 31 현재)
수입(a)	6,946	8,404	6,226
수탁교육수강료	4,533	5,535	4,640
검정응시료수입	1,438	1,587	1,335
기 타 ^{주1)}	975	1,282	251
지출(b)	6,747	7,518	2,053
수탁교육비	3,280	3,757	1,291
검정사업비	767	911	762
기타 ^{주2)}	2,700	2,850	-
차이(c=a-b)	199	886	4,173

주1) 기타수입, 이자수익, 잡수입 등

주2) 기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법인세 등

○ 교재출판사업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10. 31 현재)
수입(a)	1,723	2,202	1,919
도서보급수익	1,554	1,976	1,767
영업외이익	169	226	152
지출(b)	1,196	1,368	787
도서보급원가	594	855	607
판매관리비	282	200	129
영업외비용 등	320	313	51
차이(c=a-b)	527	834	1,132

□ 회계별 자금보유현황 (2009.10.31 현재)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자금 보유		
		예금	임차보증금 등
고유목적사업	26,070	24,837	882 (임차보증금), 351(주택구입자금)
수익사업	4,140	4,140	-
교재출판사업기금	2,989	2,989	-
사내근로복지기금	5,146	4,449	697 (직원대여금)
합계	38,345	36,415	1,930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최근 7년간 노동부주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평가에서 최우수훈련기관(A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으로

○ 정부에서 추진중인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및 임금 반납(임원 10%, 일반직원 5%, 년차 50% 의무사용) 등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Global IB Leader 연수를 실시('09.7.17 - 12.19)하여 32명의 IB전문가를 양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취업준비생 200명에 대하여 국가공인 자산관리사(FP) 자격 취득을 위한 무료 사이버연수를 실시

자금세탁방지 과정('06년 - '09년, 3,090명) 연수 실시

○ 조직혁신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운전업무 등을 외주용역 처리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 '06년부터 '09년 10월말 현재까지 직원 15명(15.7%) 감축(95→80명)

○ TGIF(미국), ICMA센터(영국) 등 각국의 금융전문연수기관과 업무협약체결·상호교류하여 연수발전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연수인원은 최근의 금융위기 등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09년도에는 10개 분야 267개 과정(집합연수, 통신연수, 사이버 연수, 해외연수 등)을 개설하여, 21만 3천명을 교육중이며

○ 특히 사이버연수는 개설이후 최다인 약 14만명을 연수

< 금융연수 실적 >

(단위: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1
집합연수	8,229	9,225	9,049	8,463	8,551	10,072	7,778
통신연수	49,571	56,354	54,573	57,917	53,033	52,241	60,715
사이버연수	4,485	6,338	21,398	37,511	42,105	95,871	144,699
해외연수 등*	183	102	572	152	472	66	113
계	62,468	72,019	85,592	104,043	104,161	158,250	213,305

* 아세안공무원 초청연수(고위, 중견과정), IMF연수, 캄보디아중앙은행 초청연수 등

☐ 한편, 자격검정 및 도서출판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을
사원기관 분담금 경감에 활용하고 있음

○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공인자격, 자체자격 및 위탁
자격 등 11개의 자격검정시험 제도를 운영하였고

○ 신용위험관리 외 75종, 금융기관의 불완전 펀드판매 해소
관련 도서 및 녹색금융관련 도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배포함

☐ 계약 및 관리방법 개선*으로 '06~'08년까지 약 6억5천여만원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건수를 총 70건에서 3건으로 간소화 함

* 수시 발주하던 읍셋인쇄 및 조판 계약을 연간 단가 계약방법으로
변경하고 경인쇄 방식을 디지털 복사인쇄 방식으로 전환

☐ 이외에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사무실 제공 등 국가의 중요업무에 적극 지원

⇒ 감사결과 관련 제 규정을 대체로 양호하게 마련·준수

○ 다만, 연수운영, 복지, 회계부문에서 일부 개선이 요구됨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

- '09.11월 현재 사이버연수 개설이후 최다인 약 144천명을 연수하는 등 연중 약 213천명의 연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 연간 연수계획, 사이버연수 운영, 집합연수 강사선정 등 부문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① 연간 연수계획 수립·운영 부적정

- 직제규정은 장·단기 종합경영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으나,
 - '03년 이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07~'09년중 연간 연수계획 대비 실적이 '07년 86%, '08년 73%, '09.10말 43% 초과로 연수의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연수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 수시연수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연수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안 강구 필요(개선통보)

② 사이버연수 운영 개선 필요

- 사이버 연수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05년 이전에 제작한 콘텐츠 5개('02년 제작 4개, '04년 제작 1개)를 계속 사용하여 변화된 학습환경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 사이버 연수 '통합고객만족센터' 운영이 평일 09:00~22:00, 주말 13:00~20:00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불만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관리 및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 오래된 콘텐츠는 변화된 학습환경 등을 반영·재개발하고, '통합고객만족센터' 운용시간 확대와 장애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메뉴얼화 등 서비스의 질적 개선 필요(개선통보)

③ 집합연수 강사선정계획 운영 부적정

- 연수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수준 제고를 위하여 매년 강사 선정기준·강의시간배정계획·과정별강사선정계획을 포함하는 「집합연수 강사선정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나,
 - '06~'09.10말 현재까지 매년도 수립된 강사선정기준별 연간강의 시간한도(평균 400시간)를 초과한 강사가 '06년 2명, '08년 5명, '09.10말 2명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500시간을 초과하는 강사가 '06년 1명, '08년 2명 발견되고 있어 연수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연간강의시간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특정강사 위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개선통보)

나. 복지부문에 관한 사항

- '94년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08말 현재 보유잔액이 약 48 억원(1인당 약 6,666만원)이며, '06~'08년 기간중 수익사업회계에서 매년 8억원씩 출연받았음
 - 동 기금은 직원 학자금, 생활안정자금대출(연 5%), 근로복지연금 지원, 체력단련활동비(1인당 월 10만원이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동 기금외에도 회원사 가입금 및 기타 적립금재원에서 주택임차금대출(9천만원 한도, 무이자), 주택구입자금대출(시세의 70%한도, 2천만원이하 연1%, 초과 연4%)을 지원하고 있음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3조)은 출연율이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 노사합의를 근거로 '06~'08년 기간중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총잉여금의 약 7~8%('06년 8.29%, '07년 8.23%, '08년 7.22%)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서는 바람직지 못함

⇒ 유사한 법인 또는 회원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과다 하게 출연하므로 법이 정한 한도 이내로 출연(개선통보)

② “근로자 위로금” 및 “휴가보조비” 지급 부적정

- ‘07~09.10말 기간중 지급근거 규정없이 “근로자의 날 행사비”로 2,610만원(매년 1인당 10만원)을 예산편성한 후 예산보다 훨씬 많은 총 1억 6,870만원(매년 1인당 70만원)을 “근로자 위로금” 용도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는 승인된 예산을 초과하여 별도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규정에 위배됨
- 휴가 관련 복지 수준*이 유사한 법인 및 회원사에 비해 과다함에도 임의규정인 복지규정(제18조)를 근거로 매년 “휴가 중식비” 명목으로 임직원 1인당 약 55만원씩 ‘07~’09.10말 기간중 총 1억 2,733만원을 지급한 것은 중복지원 등 지나치게 과도함

* 최대 43일의 유급휴가(법정연차 휴가 25 + 휴가일수 변경에 따른 보상 휴가 18일), 하계휴가 명목의 체력단련 무급휴가(2급 이상 3일, 3급이하 5일), 휴가시 임직원의 콘도 무료사용(1인당 약 3일)

⇒ 근거규정이 없는 예산편성, 예산초과 지출은 하지 않도록 하고, 중복적이고 회원사 등에 비하여 과다한 “휴가 중식비” 지급은 중단(업무주의 및 개선통보)

③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부정적

- 「직원주택자금지원업무요강」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기간중 2주택 이상(배우자 포함)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상환하고, 관리자는 적격 여부를 매년 1회이상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 주택자금 차주 3명이 ‘01.3~’04.11월 기간중 2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09.11.27 현재까지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관리자는 제출된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

⇒ 위반자는 규정이 정하는 연체이자 징수등 관련 조치하고(시정 조치),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강구(개선통보)

다. 회계부문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및 관리방법 개선*으로 '06~'08년까지 약 6억5천여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명예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계좌관리, 파견된 교수요원에 대한 지원에서 일부 부적정한 사항이 있었음

① 명예퇴직금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감독 부적정

- 명예퇴직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관(16조, 22조)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나
 - '06.3~'09.2월 기간중 총 15명을 명예퇴직 실시함에 있어 매년 약 6억~10억원씩 총 24억 9,669억원 소요되었음에도 원장의 결정만으로 명예퇴직금이 지급되었고
 - 사후 연도말 결산보고서에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명기하지 않고 총 퇴직급여충당금 입출금 및 총 잉여금 처분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내용만으로 결산승인을 받은 것은 정관에 위배되는 것임
- ⇒ 명예퇴직 등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이사회 등의 사전 승인 또는 결산보고시 구체적 집행내역을 별도로 보고(개선통보)

② 파견교수 수당지급 등 지원 부적절

- 보수규정 등에 따라 파견 교수에 대하여 “연구수당, 차량유지비”만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 '06~'08기간중 연간 책임강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은행 파견 교수요원 5명에게 특별상여금(연 200%), 근로자의날 위로금(년 70만원), 하계휴가 보조금(연 596천원), 중식비(월 100~200천원)를 원장 전결로 추가 지급한 것은 규정에 위배임
- ⇒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비와의 이중지급 등 오해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지급기준 마련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개선통보)

③ 여유자금 운용 관리 계좌 등 운영 부적정

- '08.12월 현재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의 여유자금 약 364억원을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회계담당자 임의로 17개 은행 105개의 다수 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어 위험 및 수익률 저하 소지가 있음

⇒ 여유자금의 수익률 제고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 필요(개선통보)

④ 해외연수 보고서 관리 부적정(현지조치)

- '07~09.10말 기간중 국외연수중 3건이 “우수직원 보상 성격의 연수”임을 감안하여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연수규정(제22조)에 위배되는 사항임

⇒ 정보공유차원에서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토록 주의

3. 조치 계획 및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한국금융연수원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연간 연수계획 수립·운영 부적정	개선통보
2	사이버연수 운영 개선 필요	개선통보
3	집합연수 강사선정계획 운영 부적정	개선통보
4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개선통보
5	“근로자 위로금” 및 “휴가보조비” 지급 부적정	업무주의 및 개선통보
6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부정적	시정 및 개선통보
7	명예퇴직금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감독 부적정	개선통보
8	파견교수 수당지급 등 지원 부적정	개선통보
9	여유자금 운용 관리 계좌 등 운영 부적정	개선통보
10	해외연수 보고서 관리 부적정	현지조치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 개선통보, 시정, 업무주의 사항은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8〉

2009년 여신금융협회 감사 결과 보고서

2009. 9.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I. 감사개요	1
II. 여신금융협회 현황	2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3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IT 관련사업 예산 관련 부적정	5
나.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 부적정	9
다. 규정 미흡 및 인사운영 업무 부적정	15
라. 규정 부적정	23
마. 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리·통제 업무 부적정	26
※ <참고>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목록	32
3. 감사결과 처리요령	34

I

감사 개요

< 목 적 >

◇ 여신금융협회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취약부문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1. 감사 실시계획

- ☐ 감사기간 : 7.6~7.17 (2주간) (예비조사 : '09.6.29(월)~7.3(금))
- ☐ 감사대상업무 : 기관운영 전반 (조직, 인사, 예산, 사업 부문을 포괄)
- ☐ 감사대상기간 : 06.7.1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
 - * 여신금융협회는 재경부 종합감사('99) 이후 감사 미실시
- ☐ 감사반원 : 6명 (감사담당관 포함 5, 금융결제원 직원 1)

2. 감사 방향

- ☐ 여신금융협회가 소규모의 장기 미수감 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통제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감사 실시
 - 관련 규정의 완비 및 기존 규정의 준수 여부
 -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정부위탁 업무 및 자율규제 기구 역할 수행 실태

Ⅱ 여신금융협회 현황

□ 설립목적

- 회원 상호간 업무협조와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98.3월 설립)

□ 설립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민법 제32조

□ 회원사 : 39개사 (카드(5), 리스금융(15), 할부금융(16), 신기술금융(3))

- '09.5월 현재 여신금융사는 총 55개사(협회 가입율 70.9%)

□ 정원 : 40인 (상근부회장, 상무이사 및 직원 38명, 회장 : 비상근)

□ 주요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법령 준수를 위한 회원지도·권고 등*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회원 상호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조사·연구, 이용자 민원의 처리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 재원조달 및 지출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수 입(a)	수입 총액		4,706	5,686	6,587
	회비	카드사	2,765	3,507	3,330
		리스사	732	909	1,093
		할부금융사	819	995	1,293
		신기술금융사	168	188	235
	전기잉여금		222	87	636
지 출(b)	지출 총액		4,471	5,328	5,665
	인건비		1,843	2,840	2,316
	홍보비		182	473	269
	용역비		277	197	380
	업무추진비		168	246	321
	회의비		224	293	277
	카드정보관리비		507	623	707
	기타(전산비 등)		1,270	656	1,395
차 이(c=a-b)			235	358	922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금융위 감독대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하나인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로서
 - 최근 10여년간 장기미수감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여신금융협회의 경영전반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함
- 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탁업무(경영정보공시),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며 금융위 정책집행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
 - 감사결과 위탁업무 등 본연의 업무수행 중 주요한 위법·부당 사례는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경비집행, 카드관련정보 관리·통제에 일부 문제점 발견
- 주요 발견 위규사항인 IT관련사업의 회계처리 부적정 건의 경우 협회는 금융위의 감사실시계획 통보('09.5) 이후 IT회계의 위규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서둘러 행함
 - * '07.10월경 現부회장이 IT사업 회계 위규사항 인지
 - '07.12.28 IT사업 수입·지출 중단 결정
 - '09.2.11 '08년도 결산 이사회에 IT사업 현황 보고
 - '09.6.9 " 신용카드시장단 회의 보고
 - '09.6.16 " 이사회 추가 보고 (관련 임직원 징계)
 - '09.6.23 " 총회 보고('08년 이후 IT사업 수입·지출·잉여금 처분 승인)
- 장기 미수감 비영리법인이 자율적으로 위규관행을 시정하여 회원사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되어 감사의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

□ 금융위 감사로 인해 협회의 예산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업무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정 보완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 마련

□ 감사실시 결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됨

- ① IT 관련사업 예산의 경우 관련 수입·지출을 총회 승인 없이 편성·집행하고 관련 예·결산서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 ② 예산편성 및 집행부문의 경우 임원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 지급한 후 지출증빙 미비, 예산서에 업무추진비 예산명세 및 산출근거 누락, 예산 집행 후 사후전용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 ③ 근거규정이 없거나 미흡·불명료한 상태에서 고문·수석전문위원을 임명하고 계약조건에 없는 경비를 집행한 문제점이 있음
- ④ 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리·통제 업무의 경우 사용자 PC공유 폴더 정보노출 및 DB내 중요정보 암호화 미비 등이 발견되었음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IT 관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협회는 강○○ 現 부회장이 IT 관련사업 예산 관련 위규사항을 인지한 이후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하자를 치유했음을 금융위 감사 착수 이후 보고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감사하게 됨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IT 관련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집행과정에서의 절차 준수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 실시

〔Ⅲ〕 감사 결과

<현황>

- 협회가 한국○○○○결제(주)에 위탁하였던 전산업무*를 '03.8.1 협회가 직접 담당하면서 관련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기 시작함

* 신용카드기맹점공동망운영사업(신용카드사 결제망 공동사용에 대한 중개수행)
국세청용역사업(신용카드영수증복권 자료처리용역 수행)
외환전산망운영사업(여신금융회사와 한국은행간 외환전산망 연결작업 대행)

- 협회는 '03.8~'07년말까지 총 22.6억원의 수입을 총회 등에 보고
하지 않고 상근 부회장의 전결로 총 19.7억원의 지출을 집행하여
왔음(잉여금 2.9억원은 차기 이월)
- 강○○ 現 부회장이 IT 관련사업 예산 관련 위규사항 인지 이후
IT 관련사업 수입의 지출 중단 결정('07.12.28)한 뒤, 자체조사 실시
 - 이사회·신용카드사장단 회의 보고를 거쳐 IT 관련사업 수입·
지출·잉여금에 대하여 총회 승인('09.6.23)을 받았으며, 관련
임직원에게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행함

<지적사항>

① 총회 승인 없이 예산 편성 및 결산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예산총계주의)해야 하며, 예산에
계상되기 위해서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03.6.13 신용카드사장단회의에서 IT 관련사업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결정한 이후, 협회 경영진은 '07년말까지
별도의 총회 승인 없이 IT 관련사업 예산을 운영('03.8~'07년말)
함에 따라 「정관」 제36조를 위반함

② 수입금 집행 시 예산전용절차 등 미준수 및 방만한 운영

-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따르면 협회 예산은 회계간 전용 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함

- '03.8~'07년말까지 IT 관련사업 예산 수입 22.6억 중 19.7억원을 부회장 전결로 집행하였으며, 그 중 8.5억원*을 일반회계 경비로 집행함에 있어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전용함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함

<전용금액의 사용 내역>

인건비	업무추진비	고문료	사무실이전비	여비교통비	기타	총계
4.8억	1.9억	1.0억	0.4억	0.2억	0.2억	8.5억

③ 금융위에 예·결산서 미보고

-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제8조에 의하여 협회는 모든 사업의 예·결산서를 주무관청인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 협회는 '04년부터 '07.12월까지 금융위에 IT 관련사업 관련 예·결산 보고를 누락하여 동 규칙 제8조를 위반함

<미보고 내역>

연 도	미보고 사항
'04	결산서
'05	예산서, 결산서
'06	예산서, 결산서
'07	예산서, 결산서

<조치요구사항>

- 향후 협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시고
- 전용시 이사회 승인 등 전용절차를 준수하시고
- 모든 사업의 예·결산서를 금융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관련 규정 및 지침

- * 「정관」 제36조 ② : 예산은 매사업년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결산은 매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위임전결규정」 별표(직위별 전결사항표)

단위업무명		전결번호	전결권자	보고	기타
2 사업계획 및 예산	4) 예산전용 가. 회계간 전용	02-04-01	회장		<u>이사회</u>

- *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제8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다음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나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 부적정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협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산운영에 대해 공공기관과 같은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음
- 그러나 협회는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바, 회원사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부적정한 예산편성·집행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련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예산집행은 규정에 따라 행해지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 IT 관련사업 예산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가 여타 부문에서도 발생
하는지 여부를 감사할 필요성 존재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예산과목별 편성 및 집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보다는 감사인원과 시간의 제약상 업무와 무관한 사용개연성이 존재하는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소비성 경비에 중점을 두어 감사

[Ⅲ] 감사 결과

1**임원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대내·외업무 추진을 위한 판공비 및 기밀비'로서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업무추진비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용이하도록 통상적으로 업무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함
- 업무추진비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인 인건비와 달리, 업무에 수반되는 경비이므로 사용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용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지적사항>

- 이사회('03.12.11)에서 임원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기 전까지 임원은 주로 업무용 신용카드(기명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옴
 - 이사회 의결 이후, '04년부터 매월 상근부회장에 200만원, 상무 이사에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5년간 1억 8천만원 지급
 -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
-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지출증빙 없이 처리함에 따라 사용용도 검증이 불가능해짐

<조치요구 사항>

-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예산회계규정」 제9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시 팀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명세서(산출근거 명시)를 작성해야 함

<지적사항>

- 업무추진비의 팀별 세부내역(간담회, 대국회업무 등) 및 산출근거가 없이 대외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만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편성이 세부항목별 수요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특별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편성되는 문제점이 발생

<조치요구 사항>

- 업무추진비의 자의적 편성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건별 세부명세를 작성하시고 세부건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관련 규정 및 지침

- * 「예산회계규정」 제9조 【예산의 작성】 ①해당 팀장은 제8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팀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명세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회계규정」 제13조는 예산집행시 팀별 사업계획에 따라 연간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지적사항>

- '06년~'07년 회의비, 홍보비, 여비교통비 등 일부 비목에 대해 편성된
예산을 초과집행하고 부족 금액을 3차례에 걸쳐 사후에 전용

전용일	구분	초과집행내역
2006.07.01	일반회계 회의비	2006.06.30 현재 44백만원 초과집행
	신용카드회계 홍보비	2006.06.30 현재 12백만원 초과집행
2006.11.01	일반회계 구독료	2006.10.31 현재 2백만원 초과집행
	신용카드회계 복리후생비	2006.10.31 현재 3백만원 초과집행
	신용카드회계 홍보비	2006.10.31 현재 8백만원 초과집행
2007.10.25	일반회계 용역비	2007.09.30 현재 5백만원 초과집행
	일반회계 여비교통비	2007.09.30 현재 0.5백만원 초과집행
	일반회계 구독료	2007.09.30 현재 2백만원 초과집행

- 예산편성은 총회의 승인(정관 제36조)을 거쳐야 하는 반면, 목간
전용은 부회장 전결(위임전결규정)로 가능하므로 사후 전용이 남용될
경우, 총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우려가 존재

<조치요구 사항>

- 분기나 월별 결산을 통해 향후 예산 집행 후 사후 전용의 재발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 규정 및 지침

- * 「예산회계규정」 제13조 【집행원칙】 예산집행은 팀별 사업계획에 따라 경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며 연간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 정관 제36조 ② 예산은 매사업년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위임전결규정」 별표(직위별 전결사항표)

단위업무명		전결번호	전결권자	보고	기타
2 사업계획 및 예산	4) 예산전용				
	가. 회계간 전용	02-04-01	회장		이사회
	나. 관간 전용	02-04-02	회장		이사회
	다. 항간 전용	02-04-03	회장		이사회
	라. 목간 전용	02-04-04	부회장		

- 협회 특성상 해외출장시 회원사 및 타기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이 경우 여비를 전액지급하는 것은 중복된 예산 집행임
- 이에 따라 여비의 과다지급을 막기 위해 「여비지급규정」 제7조는 식비 등 국외출장시 타 기관이 숙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요 경비 일부를 보조시 체재비의 30%를 차감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

<지적사항>

- 現 부회장의 베이징올림픽 초청행사 참가 출장('08.8.7~11)시, 타 기관(○○인터내셔널 ####리미티드)이 숙식 등을 포함한 초청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외출장의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함
- 따라서, 체재비의 30%인 \$750(\$150×5일)를 차감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차감 없이 체재비 전액인 \$2,500(\$500×5일)을 지급하여 「여비지급규정」 제7조 위반
 - * 출장일이 동 규정 신설('08.8.1) 이후임에도, 규정 신설일 이전에 행한 출장 품의('08.6.26)에 따라 체재비 삭감 없이 지급

<조치요구 사항>

- 여비차감지급 규정을 준수하시어 여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 규정 및 지침

- * 「여비지급규정」 제7조 【차액여비】 다만, 국외출장의 경우 타 기관이 숙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실제 보조금액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체재비의 3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다 **규정 미흡 및 인사운영 업무 부적정**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규정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규정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 실시
- 협회는 소규모기관이므로 대규모기관에 비해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은 바,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인사운영 및 예산집행이 많은 것으로 예상함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근거규정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근거규정 존재 여부를 살피기보다는, 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근거규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검토
- 특히 채용에 있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위(고문, 연구위원, 수석전문위원)가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 인사 관련규정에 근거하는지를 살핌
- 아울러 승진·징계 등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 관련규정 유무 및 위배 여부, 부적정 존재 여부, 필요한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검토

[Ⅲ] 감사 결과

1**근거규정 없이 고문, 수석전문위원 임명**

- 임명, 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자의적인 인사운영과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에 따라야 함
 - 협회의 채용은 정관, 인사규정 등 근거규정을 따르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채용해야 함

<지적사항>

- 협회의 「직제규정」 제3조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상무이사, 직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5조는 직원에는 사무직원(부장, 팀장, 선임조사역, 조사역)과 별정직원(주임, 연구위원, 연구원)이 있음을 규정
 - 따라서 고문, 수석전문위원은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인사관련 규정에 채용근거가 없음
 - * 여타기관(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은 정관에 고문임명 근거규정 존재, 수석전문위원은 유사사례 없음
- 고문, 수석전문위원 임명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승인, 신용카드사장단회의 결의 등을 통해 임명
 - 협회는 백○○ 前 부회장이 임기 종료 후 퇴임하면서 이사회('07.3) 결의를 거쳐 임기 1년의 고문으로 임명하였으며, 대외홍보활동을 위해 임기 1년의 수석전문위원을 신용카드사장단회의 결의('07.1.29)를 거쳐 임명한 바 있음

- 임명계약에 따르면 고문에게 월 500만원의 자문료, 승용차(기사제외) 리스를 제공하고, 수석전문위원에게 연봉 3천만원, 업무활동비 월 2백만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고문, 수석전문위원 현황>

직위	성명	재직기간	임용사유	임명절차	1년간 소요경비
고문	백○○	2007.4.9~ 2008.4.8	경영자문	이사회승인(2007.3.28)	자문료 연6천만원 업무용차량 리스료
수석 전문위원	임##	2007.2.13~ 2007.3.12	여전업관련 대외(입법기관) 활동 강화	신용카드사장단회의(07.1.29) 이사회보고(07.2.13)	연봉 3천만원 활동비 월2백만원내 사용가능
수석 전문위원	신★★	2007.3.13~ 2007.9.30	여전업관련 대외(입법기관) 활동 강화	신용카드사장단회의(07.1.29) 이사회보고(07.2.13)	연봉 3천만원 활동비 월2백만원내 사용가능

- 근거규정 없이 고문,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함으로써 비계획적인 인사 운영을 초래하고
- 고문, 수석전문위원의 신분(임직원 여부)이 모호하게 되어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예산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초래
- 향후 직위 과다 운영 등 자의적인 인사 운영 가능성 우려가 존재

<조치요구 사항>

- 향후 자의적인 인사 운영 및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고문, 수석전문위원 등 채용 및 인사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2**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업무추진비, 자녀학자금 지급**

- ☐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는 정관, 예산회계규정, 「신용카드관리요령」(업무추진비), 「복리후생제도규정」(복리후생비) 등 근거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
- ☐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면 근거규정에 준하는 기준 (예:임명계약조항)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
 - 고문임명계약('07.4.5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결)에 따르면 고문에게 월 500만원의 자문료, 승용차(기사제외) 리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음

<지적사항>**①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법인카드 제공**

- ☐ 「신용카드 관리요령」이 제정('08.7.1)되기 전까지 법인카드 발급 근거규정이 없었던 바, 임원(기명법인카드), 부서장(기명법인카드), 부서장 미만 직원(공용법인카드), 고문(기명법인카드)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 줌
- ☐ 백○○ 前 고문은 부회장 재임시절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퇴임 후 고문에 임명('07.4)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여 재직기간(1년) 동안 업무추진비 1263만원 사용
- ☐ 「신용카드 관리요령」이 제정('08.7.1)되기 전까지 법인카드 발급 근거규정이 없었으며, 고문에 대한 법인카드 제공은 임명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고문에 대한 법인카드 제공은 지급근거 없는 행위

②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자녀학비보조금 지급

- 협회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복리후생제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규정은 자녀학비보조금, 의료비 보조금 등의 지급기준, 지원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지급대상자는 非명시)
- 협회는 「복리후생제도규정」에 따라 직원에 대해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해 온 바, '07.9 백〇〇 前 고문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상무이사 전결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396만원)
- 「복리후생제도규정」은 지급대상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타 규정의 해석을 통해 지급대상자에 고문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복리후생제도규정」의 근거규정인 「취업규칙」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취업규칙 제1조),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은 직원임
 - 고문이 전직 임원이라는 점, 임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문은 「인사규정」 제8조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고문은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이 아닌 바, 고문에 대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은 근거규정이 없는 행위
 - 고문에 대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은 임명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여타 협회(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고문에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따라서 고문에 대한 자녀학비보조금 지급은 지급근거가 없는 예산집행이며, 이는 「복리후생제도규정」이 명시적으로 지급대상을 특정하지 않아서 초래된 결과라고 판단됨

<조치요구 사항>

- 고문 등에 대해 근거규정·임명계약조건 등 지급근거가 없는 예산집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복리후생제도규정」를 개정하여 지급대상을 명문화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직원에 대한 징계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의 편향된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

* 여타협회의 경우(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심의

-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징계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를 행할 것을 규정함

<지적사항>

- 협회는 現 강○○ 부회장 부임이후, 고문에 대한 업무카드 제공을 이유로 조### 前 경영지원팀장에 대해 ‘주의’조치('08.12.10)

○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은 징계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 ('08.12.10)에 따라 경영지원팀장을 징계조치

○ 「인사규정」 해석상 징계시 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요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 위반

-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목적, 진행절차 등이 상이하므로 이사회 의결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대체했다고 볼 수도 없음

* 인사규정 제22조(인사위원회의 운영은 필요시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의 취지는 회장이 인사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인사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최여부를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조치요구 사항>

-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징계 실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 규정 및 지침

- * 「직제규정」 제3조 【구성원】 협회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상무이사(집행이사 포함)와 직원을 둔다.
- * 「취업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인사규정」 제8조 【채용기준】 직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채용한다.
 - 1. 사무직원 : 대학교 이상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 2. 별정직원 : 기사, 비서, 연구위원 또는 연구원(석사이상학력소지자)등②전항에 불구하고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 * 「인사규정」 제21조 【표창 및 징계의 실시】 ①표창 및 징계는 이사가 상신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회장이 이를 행한다.
- * 「인사규정」 제22조 【인사위원회의 운영】 인사위원회의 운영은 필요시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규정 부적정**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감사대상에는 근거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근거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조직관리, 예산운영 등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되, 특히 과도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사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예산 집행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협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협회 규정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관에 비하여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규정의 적정성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여타 기관에 비해 「여비지급규정」이 현저히 과도한 여비를 규정하는지 여부를 검토

[Ⅲ] 감사 결과

- ☐ 「여비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국외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체재비, 준비금 및 기타여비(통신비, 접대비)로 구성되며, 교통비와 숙박비, 기타여비는 실비로 지급
- ☐ 식비를 별도로 실비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재비의 주된 용도는 식사 소요비용으로 판단됨

- 협회 해외출장시 회원사 및 타기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단체식사 소요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빈번함

- 따라서 체제비의 주된 용도는 개인식사 소요비용에 한정

- 「여비지급규정」 별표2는 체제비와 준비금을 직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해서는 체제비(일별 \$500), 준비금(\$1200)을 지급하도록 규정

<지적사항>

- 체제비와 준비금 용처를 고려시 「여비지급규정」 별표2의 임원에 대한 체제비와 준비금 책정금액은 과다함

- (체제비) 체제비의 용처가 단체식사 소요비용을 제외한 개인식사 소요비용임을 감안하면 일별 \$500은 과다

- (준비금) 여권 및 입국사증 등 출국수속비(여비지급규정 제16조)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준비금의 용처가 별로 없음

- 임원에 대한 체제비와 준비금이 여타 협회와 비교시 과다하게 책정됨에 따라 임원에 대한 여행경비가 필요이상으로 지급*됨

* '06~'08년간 여행준비금, 체제금 지급액이 부회장(4,910만원), 상무(2,090만원)

<협회별 체제비, 준비금 현황>

(단위:\$)

	체제비(일별) * 일비, 식비 포함	준비금	계 (5일 출장 기준시)
여신금융협회	500	1200	3700
은행연합회	290	600	2050
손해보험협회 (부회장기준)	130	750	1400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10	600	1150

<조치요구 사항>

- 「여비지급규정」을 개정하시어 임원의 체재비, 준비금 금액을 여타 협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마 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리·통제 업무 부적정

1 중요정보 유출 관련사항 점검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 및 주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DDoS공격 등 사고와 관련하여, 중요정보 관리실태 및 전산 시스템 보호대책에 대한 점검 필요성 존재
-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실태점검 시행(2008.5)'과 관련하여 협회가 제출한 자체점검표에 명시된 사항을 감사대상으로 선정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사용자PC 내에 저장된 중요정보의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요정보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자 내부 사용자PC 점검 및 서버의 중요정보 암호화 적용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검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자PC에 대하여 샘플링(10%)검사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 : CoolCheck Desktop v.181(개인정보검색 프로그램)
 - 검사대상 : 직원 5명(협회 내 직원 10% 선정)
 - 검사정보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 내부 네트워크 구간에서 다른 사용자PC로의 공유폴더 접근을 통해 패스워드 설정여부 및 파일실행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였음

☐ 파일 송수신 및 DB저장시 중요정보 데이터의 암호화 적용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였음

〔Ⅲ〕 감사 결과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1항 13호에 따르면 개인용컴퓨터에 중요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책임자의 승인 요)

☐ 개인정보검색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샘플링(10%) 검사 실시 결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정보의 대량 데이터는 PC에 존재하지 않았음

* 협회보유 중요정보의 과거 유출여부 파악은 개인 이메일 검사 등이 필요한 바, 기술적·현실적 문제점이 존재하여 개인정보 대량 보유여부 검사로 갈음

<중요정보 보관 여부 검사 결과>

(단위 : 건)

구분	주민등록 번호	법인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기타	계
사용자 A	0	0	2	5	2	0	9
사용자 B	0	0	0	11	0	0	11
사용자 C	0	0	5	0	2	0	7
사용자 D	0	0	0	3	0	0	3
사용자 E	0	0	0	3	0	1	4
계	0	0	7	22	4	1	34

<지적사항>

① 사용자PC 개인정보 검색 및 공유폴더 점검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1항 13호에 따르면 개인용 컴퓨터를 공유하지 아니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책임자의 승인 요)
- 협회 내부 네트워크 구간에 접속된 사용자PC(35대)의 공유폴더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 사용자PC에서 공유폴더에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파일이 실행되는 등 정보 노출이 있음

<조치요구 사항>

- 향후 개인용 컴퓨터를 공유치 않도록 하며, 필요시 정보 공유폴더에 대해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 규정 및 지침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전산자료 보호대책)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3. 개인용컴퓨터(PC)에 중요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개인용컴퓨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개인용컴퓨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사유·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 승인을 받을 것)

② DB 저장시 중요정보 암호화 미적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1항 3호에 따르면 해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화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용하여야 함

<지적사항>

- 신용카드 정보 및 가맹점 정보 등 업무처리시 협회와 참가기관간 정보송수신의 경우 VPN장비를 통하여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으나,
- DB 저장 데이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프로그램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음

<조치요구 사항>

- DB 저장시 중요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적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관련 규정 및 지침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해킹 방지대책)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킹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내부사용자에 의한 대량의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관리대책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 허가되지 않은 외부사용자에 의한 불법적인 접근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신망 보안대책의 점검 필요성이 있음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협회의 「전산업무규정 및 관련 전산보안지침」(2008.12월)의 보안대책 사항에 대해 적절성 확인 및 실시여부 점검
- ☐ 무선공유기 및 자동 무선네트워크 설정 기능에 의한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접속하여 점검 실시

[Ⅲ] 감사 결과

- ① 사용자PC의 USB, 외장형하드디스크, 디스켓, CD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통제기준이 없어서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제받지 않고 사용 가능
- ② 외주용역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시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외주용역보안관리 대책이 미비함

③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르면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에 해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무선 LAN사용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

- 이에 따라 현재 자동 무선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노트북 등 일반 사용자PC에서 별도의 유선LAN 연결 없이도 무선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함

<지적사항>

- 휴대용 저장매체관리, 외주용역관리, 무선LAN사용 등 내부 사용자 통제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조치요구 사항>

- 내부사용자 통제 강화를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관리, 외주용역관리, 무선LAN사용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관련 규정 및 지침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에 해킹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용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목록

일련번호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내용
IT 관련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	<p>◇ IT 관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p> <p>① 총회 승인 없이 예산 편성 및 결산 ② 수입금 집행 시 예산전용절차 등 미준수 및 방만한 운영 ③ 금융위에 예·결산서 미보고</p> <p>⇒ .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 얻을 것 . 전용시 이사회 승인 등 전용절차를 준수 . 모든 사업의 예·결산서를 금융위에 보고 (기관주의)</p>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 부적정	<p>◇ 임원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p> <p>- 영수증 없이 처리하여 사용용도 검증 불가능</p> <p>⇒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카드 사용 (권고)</p>
	<p>◇ 업무추진비 예산명세 및 산출근거 미비</p> <p>- 예산 편성시 팀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명세서를 명시하도록 규정함에도 미이행하여 자의적으로 편성</p> <p>⇒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시 부서별로 건별 세부명세 작성 및 세부 건별 산출근거 명시 (권고)</p>
	<p>◇ 예산 집행 후 사후 전용</p> <p>- 사후 전용시 예산편성에 필요한 총회의 승인 절차 회피 우려</p> <p>⇒ 분기나 월별 결산을 통해 예산 집행 후 사후 전용 재발 방지 (통보)</p>
	<p>◇ 여비차감 지급규정 미이행</p> <p>- 타 기관이 소요경비 일부 보조시 체제비 차감규정 미이행</p> <p>⇒ 여비차감지급 규정 준수 (통보)</p>
규정 미흡 및 인사운영 업무 부적정	<p>◇ 근거규정 없이 고문, 수석전문위원 임명</p> <p>- 자의적인 예산 집행 및 인사 운영 초래 가능</p> <p>⇒ 고문, 수석전문위원 임명 근거규정 마련 (권고)</p>

	<p>◇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업무추진비, 자녀학자금 지급 - 근거규정·임명계약규정 등에 근거가 없는 행위 ⇒ · 고문 등에 대해 근거규정·임명계약조건 등 지급근거가 없는 예산 집행 자제 (통보) · 복리후생제도규정을 개정하여 지급대상 명문화 (권고)</p> <p>◇ 징계절차 위배 - 징계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이행 ⇒ 징계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통보)</p>
<p>규정의 적정성</p>	<p>◇ 임원의 체재비와 준비금 규정 - 체재비와 준비금을 현행처럼 높게 지급할 근거가 미약하므로 ⇒ 여비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의 체재비, 준비금을 여타 협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 (권고)</p>
<p>카드관련 중요정보 관라통제 업무 부적정</p>	<p>◇ 중요정보 유출 관련사항 점검 ① 일부 사용자PC에서 공유폴더에 패스워드 미설정, 파일이 실행되는 등 정보 노출 존재 ⇒ 개인용 컴퓨터 공유방지, 정보 공유폴더에 패스워드 설정 조치 (통보) ② DB 저장 데이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정보가 암호화 미비 ⇒ DB 저장시 중요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적용 등 적절한 조치 (권고)</p> <p>◇ 정보보호 관리대책 미비 - 휴대용 저장매체관리, 외주용역관리, 무선LAN사용 등 내부사용자 통제 강화를 위한 적절한 보안대책 미비 ⇒ 휴대용 저장매체관리, 외주용역관리, 무선LAN사용 등 적절한 보안 대책 마련 (권고)</p>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통보사항은 즉시조치

나. 권고사항은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9〉

2010년 한국회계기준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0. 4.

금 용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I. 감사개요	1
II. 한국회계기준원 현황	2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5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조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8
다.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0
3. 조치계획 및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12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3

I

감사 개요

〈 목 적 〉

◇ 한국회계기준원의 위탁사무 처리현황 및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 법적 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14조(지휘·감독)

*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

※ 외감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업무(제·개정, 해석, 질의회신)를 회계기준원에 위탁

□ 감사성격 : 정기 업무감사

※ (舊)금융감독위원회는 2005년 11월 회계기준원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동 기관에 대한 감사는 미 실시

□ 실시기간 : 2010. 3. 29 ~ 4. 6 (7일간)

□ 대상범위 : '06.1.1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의 조직운영·관리,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위탁업무 처리상황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4명*

* 감사담당관실 2명, 공정시장과 2명

II

한국회계기준원 현황

□ 설립목적 및 연혁

○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 1999. 9. : 한국회계기준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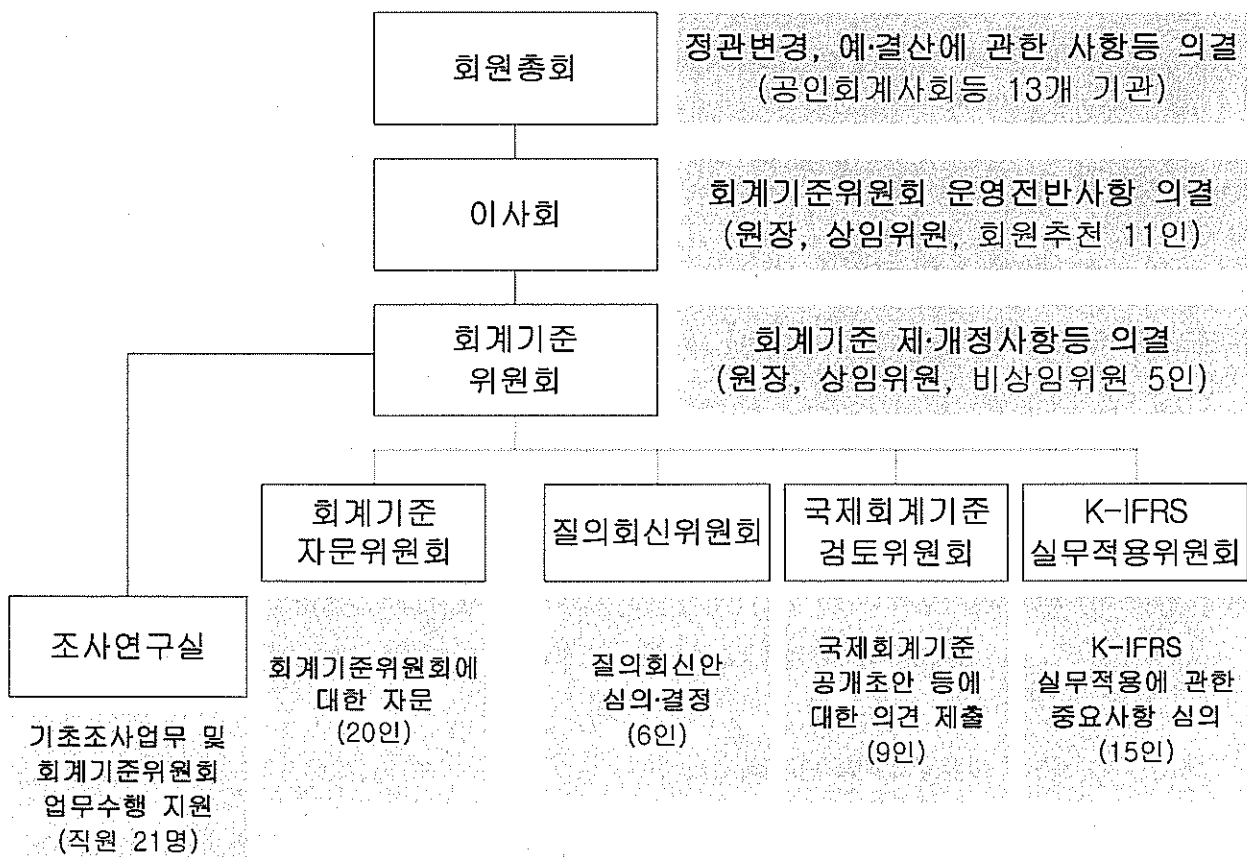
- 2000. 7. :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업무 등 수탁(외감법시행령)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 원장(서○○, 55년생) : ○○대 경영대학 교수(現), 한국○○학회 부회장

□ 회 원 : 13개 기관(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등)

□ 조직·정원 : 1실 5팀, 23명(원장, 상임위원, 직원 21명)



□ 주요업무

-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질의회신

□ 연도별수입·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E)
운영수익(a)	2,475	2,880	3,400	3,720	3,692
• 법정분담금 ¹⁾	693	775	1,306	1,661	2,310
• 회원분담금 ²⁾	1,560	1,690	1,268	1,317	1,093
• 기타(이자 등)	222	415	826	742	289
운영비용(b)	2,477	2,851	3,359	3,242	3,692
• 인력관리비	1,750	2,039	2,155	2,167	2,399
• 연구관리비	334	374	354	451	550
• 일반관리비등	393	438	850	624	743
차이(c=a-b)	△2	29	41	478	0

- 1) 법정분담금: 외감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유가증권발행분담금의 5%)중 법정적립금('06년까지는 50%, '07년부터는 30%)을 제외한 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별 법정분담금	'04	'05	'06	'07	'08	'09	'10(E)
운영경비	800	750	693	775	1,306	1,661	2,310
적립금	800	750	693	418	560	712	990
합 계	1,600	1,500	1,386	1,193	1,866	2,373	3,300

- 2) 회원분담금: 각 회원사는 '02년 이후 동결된 분담금액에 따라 연2회 균등분납(1.31, 7.31)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는 법정분담금 증액(4% → 5%)에 따라 회원 분담금 축소 조정

'10년 회원별 분담금 예산규모	금액(백만원)	분담율(%)
코스닥협회, 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212	19.2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61	24.0
전국경제인연합회	135	12.4
한국금융투자협회	154	14.1
한국거래소	331	30.3
회원별분담금 총액	1,093	100.0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 한국회계기준원은 정부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해석, 질의회신 포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 독립기구(비영리 사단법인)로서
 -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

【2009년 주요 위탁업무 처리현황】

- ①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개정 관련 업무
 - 회계기준 개정·공포(6건), 공개초안 심의·의결(9건), 일반 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발표(7건), 회계기준 적용 의견서 발표(2건) 등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관련 업무
 - 제·개정(7건), 공개초안 의결(11건), 국제회계기준 검토의견 제출(27건) 등
- ③ 질의접수·회신 건수 : 총 65건 접수(35건 회신, 30건 철회)

- ☐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의 정원(2010년 4월 현재)은 원장, 상임위원(1), 조사연구실(21명) 등 총 23명으로,
 - '06 ~ '09 기간중 연간 평균 집행경비는 29.8억원이며 인건비(연평균 20.3억원 68%), 연구개발비 및 일반관리비로 구성됨
- ⇒ 감사결과 조직운영·관리,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위탁업무 수행 부분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다만, 각 부문별로 일부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조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장, 상임위원(1) 및 조사연구실(5팀, 21명)등 23명으로 운영되며, 조직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시간외근무·연차유급휴가제도 운용, 급여결정시스템 및 직원연수제도 등 일부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① 시간외근무 및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용 부적정

- '06년~'09년 기간중 직원 2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 178.5일과 '07.12~'09.12 기간중 직원 22명의 초과근무 12,600 시간 발생 및 관련 보상 미실시

⇒ 휴가사용 촉진을 통해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차후 불가피한 시간외근무 및 휴가 미사용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필요(개선통보)

② 급여결정시스템 미흡

- 매년 직원과의 연봉계약 체결시 전년도 개인별 연봉금액에 당해연도 인건비 총액 인상을 및 다면평가 등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직원의 연봉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직급별 연봉등급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는 등 급여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직급별 연봉등급 및 연봉결정기준 등이 반영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급여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개선통보)

③ 직원의 국내외 연수제도 운영 개선 필요

- '04년 이후 기준원의 지원을 받아 연수를 완료한 직원은 4명(국내연수 2명, 국외연수 2명)으로 이들에게 지원된 경비는 3.2억원에 달하나 이 중 3명(국내연수 1, 국외연수 2)은 의무복무기간(연수기간의 2배)을 채우지 못하고 1년여만에 퇴직함으로써 연수효과 퇴색

⇒ 연수전 최소 복무기간, 연수기간 및 지원금반환규정 개선등 연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개선통보)

나. 예산집행·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연간 평균 운용경비는 29.8억원이며, 운용경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집행(연평균 20.3억원, 68%)되고 있고, 05년도 감사결과에 따라 '업무추진비집행시행세칙'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인건비예산 편성방식, 비상임위원회에 대한 수당지급방식 및 업무추진비 집행방식 등 일부에 개선이 필요함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① 예산 편성시 인력관리비 비목의 구체화 필요

- 지출예산의 인력관리비중 상근임직원 급여 과목에 직급별 세부 인건비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인건비 총액으로만 계상하여 예산 승인을 받음

⇒ 직급별 인건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계상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심의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개선통보)

②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지급수당 개선 필요

-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안전심의 및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시 이를 인건비 항목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실제 지급에 있어서도 매월 월정액(275만여원)을 급여성으로 지급

⇒ 관련 예산 편성시 '안전심의·검토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안전심의 및 회의참석 실적에 따라 실비로 지급토록 개선(개선통보)

③ 클린카드 도입등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

- '업무추진비 집행 시행세칙'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심야시간대(밤 12시 이후)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사용장소에 제한이 없는 일반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

⇒ 클린카드 도입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현지조치)

다.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처리절차·과정·내용 등에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다만, 질의회신위원회 의결절차 등 일부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① 질의회신위원회 의결절차 개선 필요

- 질의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질의회신위원의 의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미비

⇒ 질의회신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질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 및 의결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개선통보)

② 장기 미상환 차입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비용 발생 개선

- '05년도 발생한 차입금(5.4억원)이 '10년 3월 현재까지도 상환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발생

⇒ 차입금 상환자금을 검토하여 조기 상환계획 마련 필요
(개선통보)

③ 회계기준위원회 회의 관련

-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외부인이 공개회의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음

⇒ 회계기준 제·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 관련 자료의 사전 홈페이지 공개 확대등 외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함이 필요(현지조치)

3. 조치 계획 및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시간외근무 및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용 부적정	개선통보
2	급여결정시스템 미흡	개선통보
3	직원의 국내외 연수제도 운영 개선 필요	개선통보
4	예산편성시 인력관리비 비목 구체화 필요	개선통보
5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지급수당 개선 필요	개선통보
6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클린카드 도입 등)	현지조치
7	질의회신위원회 의결절차 개선 필요	개선통보
8	장기 미상환 차입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비용 발생 개선 필요	개선통보
9	회계기준위원회 회의 공개 관련	현지조치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통보 :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첨 10>

정기종합감사

2010.5.31~6.14

**2010년 금융결제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0. 8.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I. 감사개요	1
II. 금융결제원 현황	2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4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기본재산 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5
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7
다. 예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8
라. 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0
마.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2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3

I

감사 개요

〈 목 적 〉

◇ 우리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

□ 법적 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 감사성격 : 정기 업무감사

※ 금융결제원에 대하여는 그 기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03년, '05년, '07년등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왔음

□ 실시기간 : 2010. 5. 31(월) ~ 6. 14(월) (10일간)

□ 대상범위 : '07.1.1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의 내부통제, 고유·수익사업, 예산·회계, 급여·복지, 중요시설 관리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7명*

* 감사담당관실 3명, 금융정책과 1명, 규제법무담당관실 1명, 금융감독원 2명

□ 중점 감사사항 : 기본재산 관리, 고유·수익사업 운영, 예산·회계처리, 급여·복지, 정보시스템 등

II

금융결제원 일반현황

□ 연 혁

○ '86. 6.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설립

* 전국어음교환관리소('84.5)와 은행지로관리소('77.6)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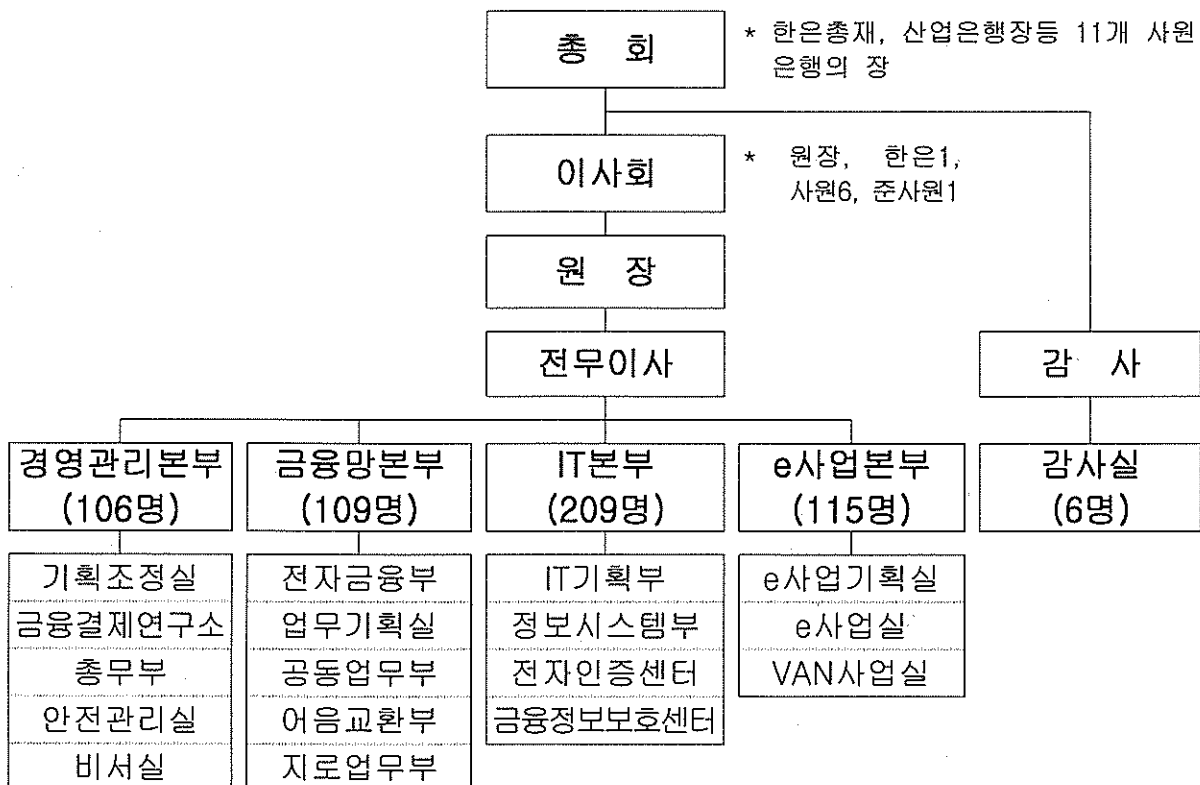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한국은행 강남지점 건물)

□ 조직 및 인원(정원) : 4본부 7부 8실 1연구소 2센터 6지역
본부, 615명(임원 7명)

* 원장 : 송창헌(59세) / 서울대(법학과), 한국은행 부총재보('07.4 ~ '10.3)

감사 : 진석규(56세) / 연세대, 기재부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조직 및 인원(현원 기준)】



부산경남지역본부(4명) / 충청지역본부(3명) / 광주전남지역본부(5명) /
경기강원지역본부(4명) / 대구경북지역본부(5명) / 전북지역본부(4명)

□ 주요업무

- 어음교환소 설립·운영 및 지로제도 운영
- 금융공동망(CD, 전자금융, 타행환등) 구축·운영
-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공인인증등)
- 신용카드 관련 부가통신사업(VAN) 등 수익사업

□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현황('09년도)

고유사업: 1,077억원				수익사업: 869억원			
회비 (898억원)	■ 기본회비 (134억원) * 11개 사원은행(한은 40%)			매출 (745억원)	■ 상품매출 (27억원)		
	■ 업무별회비 (764억원) * 사원(11), 준사원기관(10), 참가기관(43)이 서비스망 이용실적에 따라 분담				■ 카드VAN수수료 (439억원)		
					■ CMS수수료 (228억원)		
수익사업 잉여 전입 (102억원)				영업외수익 (124억원)			
기본재산 운용수익 (75억원)							
잡수입등 (2억원)							
↓				↓			
인건비 (51.5%)	경비 (26.6%)	전산비 (14.0%)	잉여* (7.9%)	원가 (39.5%)	인건비 (12.8%)	경비 (17.6%)	잉여** (30.1%)

수익사업 매출증가 현황	'07	'08	'09
(억원 / 증가율, %)	527(7.3)	610(15.7)	745(22.1)

* 고유사업 잉여: 전액 차기년도 회비로 전입(회비경감)

** 수익사업 잉여: 50%는 고유사업 전입, 나머지는 이익준비금 및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09말 현재 이익준비금 125억원, 임의적립금 246억원)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구축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간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 공동망 참가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등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잠재적 리스크 증대 등 다양한 내·외적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2,300만건, 76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지급결제업무량을 심각한 시스템 장애나 오류 없이 처리하는 등 고유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금융결제원 업무처리실적】

(단위: 백만건, 조원)

구 분	2007		2008		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어음교환	805	4,406	748	5,180	649	5,445
지 로	1,108	335	1,157	374	1,120	394
금융공동망*	3,320	10,102	3,875	12,912	4,218	15,998
e사업**	1,183	133	1,201	156	1,189	162
합 계 (일평균)	6,417 (21)	14,975 (52)	6,982 (23)	18,622 (65)	7,175 (23)	21,999 (76)

* CD, 타행환, 전자금융, K-CASH, 계좌이체PG, CLS

** CMS, 직불카드, 전자어음, 물품대금, 신용카드

- 다만, ①기본재산 관리, ②수익사업 운영, ③예산집행·계약, ④급여·복지, ⑤정보시스템 등의 부분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가. 기본재산 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10년 5월 현재 가입금, 참가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재산은 2,323 억원으로 이의 처분·사용에 관한 규정 없이 총회 의결로 사용

- '09년도에 33개 참가기관의 금융기관 공동코드 체계개편 소요 비용(419억원)을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등 '01 ~ '10.5월 기간중 1,004억원 규모의 기본재산을 총회 의결로 사용

- 특히, '01년 및 '09년에는 각각 110억원 및 237억원의 직원 퇴직금을 기본재산으로 지급(정관 30조제1항* 위배)

* (정관 제30조 제1항) “결제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운영수익과 사원, 준사원, 특별참가기관의 회비 및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기본재산(예산외) 적립·사용현황】

(단위: 억원)

	'01~'06	'07	'08	'09	'10.1~5
적립	835.9	8.2	57.1	659.1	627.4
사용	298.0	43.1	4.5	653.8	5.2
잔액	1,672.3	1,637.0	1,696.9	1,702.8	2,322.5

* '09년 이후 적립액 증가는 증권사의 참가금에 기인(4천억, 5~7년간 분납)

* '09년 사용은 퇴직금(237억원) 지급 및 금융기관 공동코드 개편(419억원)

- ⇒ i) 기본재산의 처분·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고
ii)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필요 **[개선]**

②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 원장 및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된 업무는 결제원이 직접 수행함이 타당하나, 모집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를 한국은행이 수행
- 또한, 원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2조에는 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 제8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나 '04.3.31, '07.3.22, '10.3.16 위원회에서는 자체결의로 의사록 미작성

⇒ i)원장 및 원장후보추천위원 선임과 관련한 사무는 결제원이 직접 수행하고, ii)원장후보추천위원 선임시 적격성 심사 및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작성 등을 철저히 수행 [주의]

③ 전자금융위원회등 각급 위원회 운영 부적정

- 결제원은 정관 제22조에 따라 본부에 어음교환심사, 지로운영, 전자금융, 전산, 기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설치·운영
 - '07.1~'10.5 기간중 5개 위원회는 총 227회 개최되었으며, 이 중 63%가 전자금융위원회*(78회) 및 전산위원회**(64회)에 집중
 - * 전자금융위: 금융공동망, 모바일, 공인인증, PG, B2B, 금융IC, 전자어음 등
 - ** 전산위: CD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무역망, 금융정보보호, 주택청약, CLS 등
 - 한편, 같은 기간 5개 위원회의 회의는 66%(150회)가 서면결의 이었고 대면회의는 34%(77회)에 불과했음

⇒ 전자금융 및 전산위원회를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등 각급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시행 [개선]

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수익사업 범위 포괄적 규정(정관) 및 이사회 의결 없이 수행

- 정관 제4조제2항제1호는 수익사업 범위를 “고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동 사업의 일부 또는 그 부대사업”으로 포괄·규정하여 별도의 정관변경 없이 다양한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

* 결제원은 신용카드VAN, CMS, 전자금융, 전자어음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결제원의 경우 수익사업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화될 경우 법인의 설립취지가 퇴색될 우려

< 금융결제원 고유사업 수입 및 수익사업 매출현황 >

07년		08년		09년	
고유사업	수익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수익사업
934억 (64%)	527억 (36%)	1038억 (63%)	610억 (37%)	973억 (57%)	745억 (43%)

- 특히, 정부기관 통합 빌링 ASP서비스사업('08) 등을 이사회 의결 없이 추진(정관 37조 위배)

- 한편, '08년 이후 수익사업 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미흡

구 분	'07	'08년	'09년
수익사업 이익잉여금	42억원	147억원	262억원

- ⇒ i)정관상 수익사업 범위를 사업단위로 구체화하고, ii)'중장기 수익사업 관리방향' 마련을 통해 수익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iii)이익잉여금의 사용기준(계획)을 마련·시행할 필요 **[개선]**

다. 예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①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비는 결재원 회계규정(제16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사전에 건별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결의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그러나 건별 지출원인행위 없이 1개월간의 카드사용전표를 지출결의서에 일괄·첨부하였고, 사용목적도 부실하게 기재

⇒ 집행건별로 집행품의를 하고, 지출결의서에 업무관련성 입증이 가능토록 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 **[개선]**

② 용역비에서 직원의 사내 면접위원회등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 용역비는 결재원 회계규정(시행세칙 별표 제1호 과목해설)에 따라 시설 관리·유지 용역 등 외부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함

- 그러나 결재원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회의체* 운영시마다 참석 직원에게 각각 10 ~ 30만원씩의 참석수당을 용역비에서 지급

* ‘신입채용면접위원회’, ‘직무별연수평가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

⇒ 용역비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외부용역 대가에 한정하여 집행되어야 함 **[주의]**

③ 6시그마컨설팅 계약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등 부적정

○ 결재원 회계규정(제36조)에 따라 수의계약은 엄격히 제한되며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결제원은 추정가격 22억원 규모의 '6시그마컨설팅 사업 ('05.1.27 원장 전결)'을 1~5차에 걸쳐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전부 내부직원만으로 구성하여 1차 사업자를 선정(제한 경쟁)하고, 2~5차 사업은 1차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 향후 거액의 장기·연속계약 체결시에는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입찰에 있어 전문성·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 **[주의]**

④ 분당신축공사 설계변경 과다

- 분당센터 신축공사('04.12~'07.3)와 관련, 총 64건의 설계변경(62건은 시공사 요청)이 있었고 이로 인해 10.1억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

⇒ 향후 공사 추진시에는 엄격한 설계관리로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주의]**

⑤ 입찰공고방법 및 공고기간등 개선 필요

- 결제원 회계규정(시행세칙 제54조)에 의할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로부터 10일(긴급한 경우나 재공고는 5일) 전에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조달청)를 이용토록 규정

- 그러나 결제원은 상당수 계약을 1개의 일간신문에 회계규정상의 최소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입찰참가자들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입찰공고는 일간신문 및 G2B를(조달청)를 함께 활용하는 한편 공고기간도 국가계약법령 수준(최장 40일)으로 개선 **[권고]**

라. 임직원 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①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운용 부적정

- 기업회계기준(제27조)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함
- 그러나 결제원의 적립비율은 '07(37.8%), '08(40.2%), '09(11.4%) 등으로 매우 저조하며 이마저도 일부(약 21억원)를 직원주택 구매 지원(무상대여)으로 운용
- 특히, '01년 및 '09년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하여 각각 110억원 및 237억원의 직원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및 희망퇴직금)을 기본재산으로 지급(정관 제30조 위배)

⇒ 적정수준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확보하고 적립목적에 부합토록 관리 [개선]

②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

- '08년부터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을 부서장 및 팀장급으로 한정하고 5개 등급중 최고등급(340%)과 최저등급(290%)간 지급율 차이가 50%에 불과

구 분	E	A2	A1	A0	B
배분율(%)	5	10	15	40	30
지급율(%)	340	320	310	300	290

⇒ 성과상여금 제도의 도입취지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및 '등급간 지급격차' 확대 [개선]

③ 학자금 및 전세보증금 지원 관련 규정 불합리

-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해당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사망직원에 대하여도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해당 직원의 정년퇴직 예정시까지 지원
- 한편, 학자금 및 전세보증금 지원시 기혼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

⇒ 사망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사망원인에 따라 차등화하고, 학자금, 전세보증금 지원시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 개선 [개선]

④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부적정

- 소득세법(시행령 12조)은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자가운전보조비’를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으로 인정
- 이에 따라 결제원은 직원들이 교통비(월 15만원)와 자가운전보조비(직급별 월 15만원 ~ 40만원)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그러나, ‘09년도 자가운전보조비 수령자 305명(퇴직자등 제외)중 254명(83.3%)은 당해 연도 시내출장이 0회였고, 시내출장이 확인되는 나머지(51명) 또한 연중 출장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자가운전보조비는 업무특성상 시내출장 업무가 많은 영업사원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함이 타당

⇒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개선 [개선]

마.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① 정보시스템 도입시 규모산정방식 부적정

○ ‘전자세금계산서 WAS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교체의 경우, 규모 산정시 ‘교체’에 대한 규모산정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시스템 교체시 ‘신규도입시의 규모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규모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정보시스템 교체시 합리적인 규모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 산정방법에 ‘교체’에 관한 사항 반영 **[개선]**

② 전자인증센터 정보시스템 관리 미흡

○ 유사시 업무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이 되어 있음에도 전자인증센터 정보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례* 발생

* 2007년(3회 / 185분), 2008년(3회 / 223분)

⇒ 업무정지 발생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 **[주의]**

③ 전산기기 도입시 기술평가위원 구성 개선 필요

○ 전산기기 도입에 따른 기술평가지 외부전문가를 기술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전문가 참여사례는 미미

구 분	2007	2008	2009	2010.4
○ 전산기기 도입건수	22	88	81	26
■ 기술평가건수	4	16	16	7
■ 외부전문가 위촉 건수	-	1	-	1

⇒ 기술평가위원 구성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방안 마련 **[권고]**

11. 최근 3년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에 대한 상세내역

□ 2007년 결손처분 10건, 177백만원 현황

(단위:원)

개인/단체명	부과금액	위반내용	부과일	사유	기타사유	비고
(주)까치라인	14,850,000	증권거래법 위반	'00-07-24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03.11.19 폐업	
(주)현민시스템	31,905,000		'00-07-14		무재산, '03.09.13 폐업	
(주)아인텍	2,364,000		'00-12-26		무재산, '01.11.28 폐업	
(주)퍼시픽텔레콤	85,220		'00-12-26		무재산, '03.01.05 폐업	
라임정보통신(주)	29,835,300		'01-02-12		무재산, '03.09.25 폐업	
(주)3W투어	74,167,150		'01-07-14		무재산, '04.04.28 폐업	
메디밸리(주)	7,500,000		'01-10-27		무재산, '03.10.23 폐업	
(주)와우프리 커뮤니케이션	12,338,400		'01-12-31		무재산, '04.02.17 폐업	
(주)새길정보통신	2,000,000		'02-04-26		무재산, '05.12.27 폐업	과태료
(주)아이아이나라	2,000,000		'02-05-28		무재산, '02.12.08 폐업	
합 계(10건)	177,045,070					

□ 2008년 결손처분 38건 2,016백만원 현황

(단위:원)

개인/단체명	부과금액	위반내용	부과일	사유	기타사유	비고	
(주)GPS	6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02.06.14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07.02.12 법원파산선고 청산종결		
(주)GPS	139,500,000		`03.06.25				
(주)아이벙스테크놀로 지	42,000,000		`02.10.23		무재산, '03.11.18 폐업		
(주)올에버	797,858,970		`02.12.13		무재산, '03.12.31 폐업		
(주)세림아이텍	30,000,000		`02.12.17		무재산, '03.01.27 폐업		
(주)디지털피앤씨	10,000,000		`02.12.18		무재산, '05.11.17 폐업	과태료	
엠바이엔(주)	746,400,000		`03.04.25		무재산, '04.04.23 폐업		
(주)신한 SIT	51,400,000		`03.07.2		무재산, '04.07.15 폐업		
0광현	4,000,000	금융실명제 위반	`99.02.04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주민등록 말소 행방불명	과태료	
0홍철	5,000,000		`98.11.25				
0동원	4,000,000		`03.12.01				
0의규	5,000,000		`99.03.16				
0병택	4,000,000	금융실명제 위반	`99.11.03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주민등록 말소 행방불명	과태료	
0영렬	3,000,000		`02.11.25				
0영철	3,000,000		`02.07.19				
0상범	5,000,000		`99.10.13				
0대호	5,000,000		`02.05.20				
0신노	5,000,000		`00.10.25		무재산, 07..07.26 사망		
0용재	3,000,000		`03.05.12				
0상오	5,000,000		`03.02.03				
0하용	5,000,000		`02.11.25		무재산, 행방불명		
0은만	5,000,000		`03.06.10		무재산, '02.10.16 사망		
0지원	5,000,000		`03.02.06		무재산, 주민등록 말소 행방불명		
0은상	5,000,000		`01.04.23				
0진원	5,000,000		`98.08.05		무재산, '08.03.24 사망		
0천석	3,000,000		`03.11.03		무재산, 주민등록 말소		
0병옥	3,000,000		`99.03.02				

0동현	4,000,000		02.07.19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0수연	5,000,000		03.02.07			
0광중	4,000,000		03.05.12			
0병주	4,000,000		02.04.03			
0진현	5,000,000		02.11.25			
0문선	5,000,000		01.02.14		무재산, '04.07.09 사망	
0경인	5,000,000		99.03.18		무재산, 주민등록 말소 행방불명	
0명기	5,000,000		03.06.10		무재산, '07.03.30 사망	
0복식	5,000,000		99.02.24		무재산, 주민등록 말소 행방불명	
0승보	5,000,000		03.10.20			
0영희	4,000,000		99.09.29			
합 계(38건)	2,016,858,970					

주) 금융실명제위반 과태료는 08.2.29 정부조직개편으로 (구)재정경제부에서 이관 받음.

□ 2009년 결손처분 57건 834백만원 현황

(단위:원)

개인/단체명	부과금액	위반내용	부과일	사유	기타사유	비고
0병하	5,000,000	금융실명제 위반	94.12.31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과태료
0인식	3,000,000		95.05.23			
0재목	5,000,000		96.06.05			
0정남	4,000,000		96.11.04			
0광희	5,000,000		97.01.20			
0정자	3,000,000		97.01.20			
0문식	5,000,000		97.01.22			
0선곤	5,000,000		97.02.19			
0성기	4,000,000		97.04.01			
0순석	4,000,000		97.04.01			
0종복	4,000,000		97.04.01			
0상용	4,000,000		97.04.01			

0영주	3,000,000	금융실명제 위반	` 97.04.01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과태료
0건영	5,000,000		` 97.04.21			
0만식	5,000,000		` 97.04.21			
0영기	5,000,000		` 97.04.21			
0윤복	2,000,000		` 97.05.07			
0인자	3,000,000		` 97.05.07			
0해일	2,000,000		` 97.05.07			
0현중	2,000,000		` 97.05.07			
0미선	3,000,000		` 97.05.07			
0승양	2,000,000		` 97.05.07			
0남철	3,000,000		` 97.05.07			
0용규	2,000,000		` 97.05.07			
0수인	2,000,000		` 97.05.07			
0연화	3,000,000		` 97.05.07			
0용만	2,000,000		` 97.05.07			
0용민	3,000,000		` 97.05.07			
0원석	2,000,000		` 97.05.07			
0부덕	2,000,000		` 97.05.07			
0부자	2,000,000		` 97.05.07			
0국현	5,000,000		` 97.07.01			
0황규	3,000,000		` 97.07.04			
0백만	3,000,000		` 97.07.04			
0수열	5,000,000		` 97.08.16			
0인수	3,000,000		` 97.08.16			
0상식	2,000,000		` 97.08.16			
0노순	3,000,000		` 97.08.16			
0경이	1,000,000		` 97.08.16			
0상운	3,000,000		` 97.08.16			
0정권	4,000,000		` 97.08.16			
0양은	1,000,000		` 97.09.03			
0홍구	5,000,000		` 97.09.03			

0민성	5,000,000	금융실명제 위반	`97.09.03	소멸시효 완성	무채산	과태료
0홍호	5,000,000		`97.09.08			
0일경	5,000,000		`97.10.02			
0의관	4,701,520		`97.10.08			
0수영	5,000,000		`97.11.26			
0향미	3,000,000		`97.11.26			
0현수	1,500,000		`97.11.26			
0홍준	5,000,000		`97.11.26			
0희순	3,000,000		`97.11.26			
0승철	3,000,000		`97.12.03			
0광열	5,000,000		`97.12.03			
0병학	3,000,000		`97.12.03			
0정길	5,000,000		`97.12.11			
(주)신한 SIT	639,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09.05.22		무채산, '04.07.15 폐업	
합 계(건)	834,201,520					

권 택 기 의원

1. 햇살론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이 징구하는 서류 목록

① 재직 및 근로소득 증명서류

구 분			서류명칭	발급주체(방법)
근로소득 신고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 로자 제외)	직전년도 이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고용주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당해년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3. 급여통장 원본	고용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민원 (www.nhic.or.kr) 본 인
	일용근로자		1. 근로(고용) 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고용주 고용주 본 인
	근로소득 미신고자		1. 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영업하기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고용주 고용주 본 인
※1. 급여통장은 금융기관 취급자가 직접 복사, 원본대조필하고, 전자통장 등 통장 실물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지점장 직인으로 확인한 거래내역명세서 원본 접수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재직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의함 예)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소득 및 근로사실이 기재된 “공공근로사용증명서” 등 3.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는 재직을 증명하는 유사명칭의 서류를 포함				

근로(고용) 확인서

□ 피고용자 및 고용자

피고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고용일자		월급여	
고용자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당사 근무중임을 확인합니다.

일	일	일
---	---	---

고용자 : (인)

※ 첨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1부.

②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 제출서류

접수서류 목록	접 수 기 준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으로 접수 ※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공통	<div data-bbox="649 768 963 804"><저신용 자영업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원본 <div data-bbox="649 884 963 920"><무등록 자영업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중기청 고시)」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별첨)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div data-bbox="309 1382 620 1420">사업사실 확인서류</div> <div data-bbox="649 1404 952 1440"><인적용역제공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p><농림어업인></p> <p>◦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실제 종사자에 한함) 확인서</p> <p>▪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독립가 증명서 (시·군 발급)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산림청 발급) -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 농지원부(시·군·구청) - 영농확인서(영농회장, 이·통장) -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취급금융기관 현황조사서 또는 영농회장 확인서) - 어선어업(모두 구비) : 어선원부(시·군), 어업허가증·선박증서·선박검사증서 사본 - 양식어업(증명서 중 하나) :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면허증 사본,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 (어촌계) - 맨손어업 : 신고필증(시·군) - 영어사실확인서(어촌계장)
저소득 자영 업자	저소득 증빙서류	<p>◦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중 하나</p> <p>▪수급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급)</p>

		<p>▪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및 사업시행기관 발급)</p> <p>→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p>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자활사업 참여자(동법 제9조 제5항)</p> <p>-의료급여 2종(「의료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3조)</p> <p>-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p> <p>*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 포함</p> <p>-「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동법 시행령 제30조)</p> <p>-「영유아보육법」 상 보육료 지원 대상(동법 제34조제1항)</p> <p>-「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4호 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을 경감 받는 자</p> <p>▪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 아래의 서류 중 하나</p> <p>-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3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3개월 이상)</p>
창업자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p>◦정부, 공공기관 등 창업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이수 확인서류</p> <p>*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과정,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 소상공인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별로 소재), 근로복지공단 창업교육</p>
	창업준비 소요 자금 증빙서류	<p>◦임대차계약서, 공사(인테리어 등)계약서, 납품계약서 (냉동기·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설비 및 상품)</p> <p>◦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원본</p>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1. 신청인(본인작성)

상호명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폰 번호	
상시근로자수 (*해당자에 한함)	명	업종(취급품목)	()		
사업장소재지 (구체적으로)					

2. 사업사실 확인(확인자 작성)

상기인이 위의 장소에서 실제사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5px;"> 년 월 일 </div>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서명
직장명(직위) (*해당자에 한함)		직장주소 (*해당자에 한함)		
※ 사업사실 확인자 - 시장상인 : 상인회장 - 노상점포 : 사업장 소재지 통·반장 또는 인근 고정사업주, 부녀회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 보증 신청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2. 1995년 폐지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서민들을 위해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 서민지원 차원에서 서민금융확대 외에 저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알고 있음
- 다만, 근로자 재산형성저축과 같은 상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정부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수반되므로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

3. '06년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조정혐의로
고발한 펀드매니저 및 자산운용회사 명단,
혐의점, 처벌근거법령 조항

□ 처벌근거법령 조항

- 자본시장법 제176조 및 제426조 및 시행령 제376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06조의3 및 시행령 제90조의4)

□ 고발한 펀드매니저 및 자산운용회사 명단, 혐의점

- 동 사항은 공개될 경우 검찰에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으로 수사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펀드매니저 개인 및 당해 자산운용사의 명예를 훼손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자율 상한선이 44%로 낮아진 이후, 캐피탈업계 및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신용이 낮은 사람은 대출을 얻기 더욱 힘들어져, 미등록 대부업체로 몰릴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의견

□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취약하여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일부 저신용 서민들이 사금융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 캐피탈 및 저축은행 업계의 효율성 제고 감안시 이자율 인하에 따른 공급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서민금융회사의 보증부대출(햇살론) 확대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흡수한다면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5. 역대 이자율 상한선 변화 추이와 그 이유, 등록대
부업자 수 변화 추이, 외국(미국, 유럽, 일본, 중
국)의 이자율 상한 및 역대 금리 인하 내역

□ 역대 이자율 상한선 변화 추이

○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를 강화한
결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사채업자 등에 의한 고리대금행위와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성행하여 서민 금융이용자의 피해 증가

⇒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제정('02.8)

- 최고 이자율은 법상 연 70%, 시행령상 연 66%(적용대상 : 대부업자)

○ 시행령상 최고이자율 연 49%로 인하('07.10)

- 서민들의 금리부담 경감 필요

○ 시행령상 최고이자율 연 44%로 인하('10.7)

-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시는
최고이자율에 근접한 높은 이자를 수취하여 서민층에게
과도한 부담 초래

- 또한 '07.10월 최고이자율 인하(66%→49%) 이후 한은 기준
금리 및 시장금리 인하추세 감안시 최고이자율 인하 필요

□ 등록 대부업체 현황 : '09.12월말 현재 14,783개 업체

구 분	'05말	'06말	'07.9말	'08.3말	'08.9말	'09.3말	'09.12말
등록업체수	14,556	17,539	18,197	17,713	16,120	15,723	14,783

□ 외국의 이자율 상한 및 역대 금리 인하 내역

국가	최고이자율 규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업법 : 연 109.5%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 • 출자법 : 연 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3백만엔 이하 벌금) • 이자제한법 : 연 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부분은 무효
홍콩	• 연 60% (대부업법), 위반시 형사처벌
미국	• 연방 차원에서 최고이자율 규제는 없으며, 주별로 상황에 맞게 규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한 최고이자율 규제 없음 - 단, 소비자신용법에 의하여 불공정관계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계약의 재체결을 명할 수 있음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한 최고이자율 규제 없음 - 단, 법원의 판례에 의해 폭리라고 인정한 금리수준(대출 유형별 평균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12%초과)의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시장금리 + 1/3 수준으로 매분기 결정(소비법) * 대출금액에 따라 이자상한을 차등 적용
중국	• 기준금리의 4배 수준으로 지역마다 다름

○ 일본은 출자법(우리나라의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54년 109.5%에서 '10년 20%까지 56년에 걸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인하

* 출자법상 금리상한: 109.5%('54) → 73%('83) → 54.75%('86) → 40%('91) → 29.2%('00) → 20%('10)

6. 최근 5년간 수협의 경영상태와 2002년 수협에 출자
된 정부자금 1조 1,58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계획

□ 별도제출

7.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의 차이점

- 각 금융회사별로 고유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대부업체·저축은행·상호금융간 신용평가시스템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 다만, 관련 협회(저축은행중앙회, 대부업협회, 신협중앙회 등)를 통해 각 금융회사들이 (개인)대출심사시 주요 심사항목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 개인대출 심사시, 금융회사들은 공통적으로 신용등급(신용점수), 총 대출 건수 및 잔액, 신용카드 개설 건수, 연체여부 등을 고려함
 - 다만, 대출관련 정보의 활용에 있어, 대부업체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정보만을 활용 중
 - 이는 신용정보법상 대부업체에 대해 신용정보 집중의무를 아직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
- < 별첨 > 대부업체·저축은행·상호금융사의 대출심사시 주요 조사 항목

가. 대부업체의 대출심사시 조사 항목

- ① 채무불이행건수 및 금액
- ② 신용개설정보 : 신용카드 및 신용개설 총건수 등
- ③ 대부업 대출 총건수 및 금액
- ④ 대부업 연체건수 및 금액
- ⑤ 총신용조회건수 및 업권별 신용조회건수
- ⑥ CB스코어(신용점수)

나. 저축은행의 대출심사시 조사 항목

- ① 고객신상정보 : 주민번호, 주소, 주거형태, 거주기간, 소득, 연락처, 결혼여부, 직업, 고용형태 등
- ② 고객신용정보 : 신용등급, 타금융기관 여신현황(보증 포함), 신용개설정보, 연체현황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

※ 중앙회 표준 신용평가시스템 기준이며, 대출상품별로 조사항목 및 심사결과 반영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다. 상호금융회사(신협)의 대출심사시 조사 항목

- ① 고객의 직장, 주소, 연간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 ② 총 대출 건수 및 금액, 연체 건수 및 금액
- ③ 채무불이행 건수 및 금액, 채무조정 정보, 채무보증 건수 및 금액
- ④ 신용카드 개설 건수,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등 신용개설 정보
- ⑤ 신용조회 건수, CB신용평점 및 CB신용등급

※ 신협 중앙회를 통해 제출받은 사항으로 타 상호금융업권도 유사한 형태일 것이나, 대출심사 항목과 방법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임

8. 금융기관이 일반적인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과 정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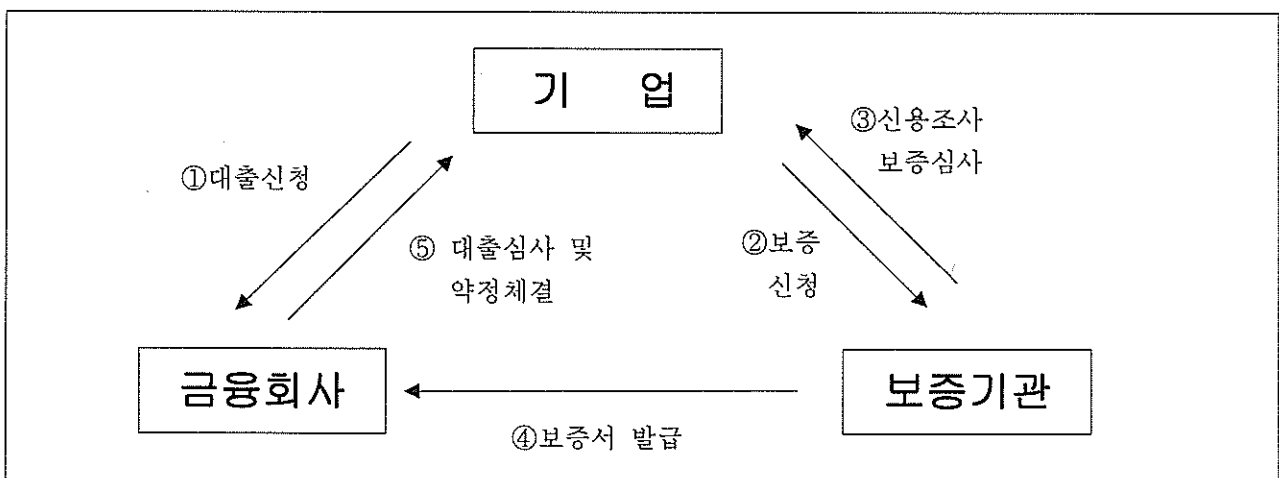
□ 신·기보의 보증이 대부분 부분보증(신규보증의 경우 50~85%)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 보증부대출의 경우에도 미보증 부분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심사과정이 일반 기업대출과 동일

※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기준 및 절차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하는 바에 다르므로 은행별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차이 상존

□ 다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신용등급의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반기업대출에 비하여 전결권한이 완화되는 등 일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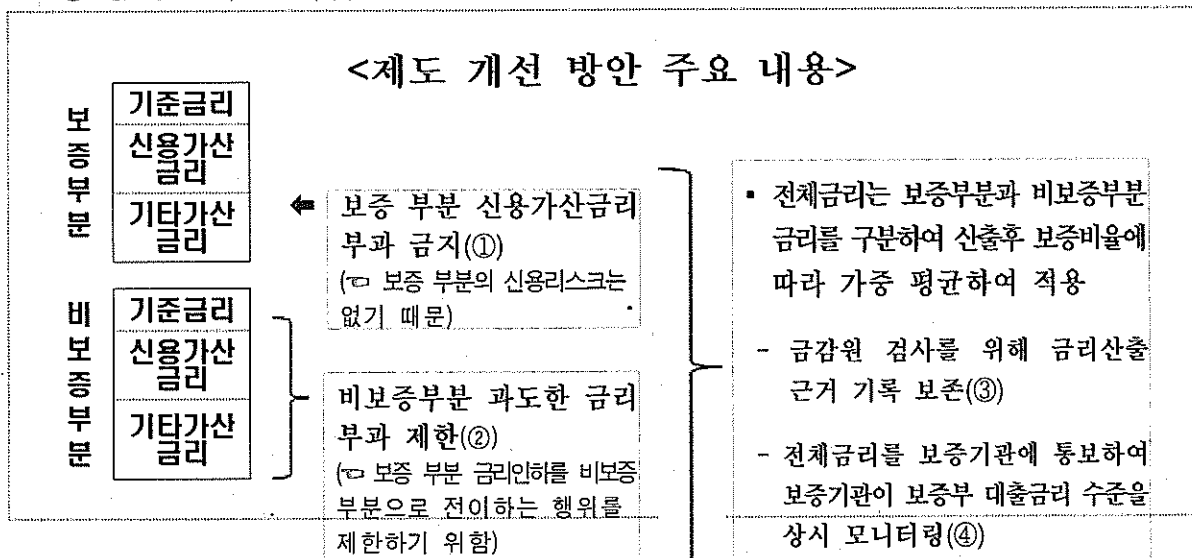
< 참고 : 보증부대출 업무처리 절차 >



9.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기업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선을 설정하여 고금리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 지난해부터 국회 등에서 일부 은행이 보증부 대출에 대하여 금리를 과도하게 높게 부과하는 문제점을 지적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10.4월 보증부 대출 금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10.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



□ 동 방안 시행에 따라, 보증부 대출 금리가 상당 부분 인하 된 것으로 파악

* '10. 7월 중 신·기보에 통보된 보증부 평균대출금리는 6.21%로 '09. 11월 평균 금리 6.73% 대비 52bp 낮은 수준

* 전액보증의 경우 8%초과 대출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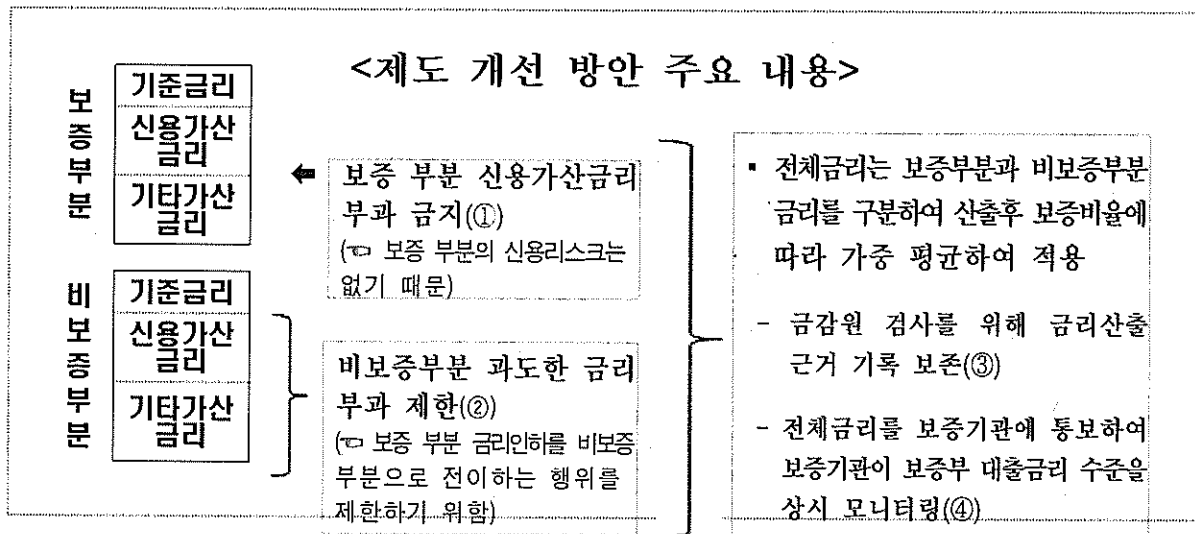
□ 한편, 은행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강제적인 확정 금리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

○ 이번 제도개선 방안처럼 보증기관 등을 통하여 금리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10.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보증 기금이 보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금리를 설정 하고, 대위변제시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금융 위원회의 의견

□ 지난해부터 국회 등에서 일부 은행이 보증부 대출에 대하여
금리를 과도하게 높게 부과하는 문제점을 지적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10.4월 보증부 대출 금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10.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감



□ 동 방안 시행에 따라, 보증부 대출 금리가 상당 부분 인하 된
것으로 파악

* '10. 7월 중 신·기보에 통보된 보증부 평균대출금리는 6.21%로 '09. 11월 평균
금리 6.73% 대비 52bp 낮은 수준

* 전액보증의 경우 8%초과 대출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은행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강제적인 확정 금리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

○ 이번 제도개선 방안처럼 보증기관 등을 통하여 금리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11.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는 보증서에 금융기관명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금리쇼핑을 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 현재 기업은 보증서 발급을 전제로 이자율 등에 대해 다수 은행과 상담 후, 가장 좋은 조건의 은행을 선택하여 보증기관에 보증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

* 현재도 사전에 보증기관에 먼저 방문 상담하여 보증조건 등을 알아본 후 은행을 방문하여 보증부대출 금리를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기업은 필요한 경우 사전적으로 보증기관의 한도거래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한도거래보증 : 기업의 보증 최고한도를 보증기관이 미리 승인해 두고 그 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이 있을 때, 조사 및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주채무 내용에 따라 즉시 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는 제도

※ 한도거래보증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7월
신 보	46,986	51,514	67,948	28,222
기 보	5,370	6,127	10,991	2,970
합 계	52,356	57,641	78,939	31,192

12. 미소금융 출범 이후,대출 상담자(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 별도 표기),서류접수자,서류 통과자,탈락자(유형별 구분),대출 성공자
- 기업계열 재단과 은행계열 재단으로 구분

□ 2010.8.16 현재, 미소금융 관련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대출상담	서류접수	심사중	탈락자	대출실행	
					건수	금액
기업재단	14,805	1,087	143	109	835	7,541
은행재단	11,365	872	83	95	694	5,725
지역지점재단	11,400	919	50	329	540	3,907
합 계	37,570	2,878	276	533	2,069	17,172,600

- 대출상담은 방문,전화,인터넷 상담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별도로 분류하여 집계·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탈락자의 경우는 본인 요청에 따라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기타 미소금융의 지원요건(자기자본 ,부채비율 및 재산보유, 금융채무불이행,사업성 적격등)부적격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미소금융의 지원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여타 서민금융지원 수단(신용회복지원,보증부대출,전환대출)을 이용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저축은행업계에서 요구하는 '저축은행의 비과세 예금 허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 ☐ 비과세 예금의 경우 서민들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으로 그 목적 달성이 전제될 경우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최근 저축은행 예수금의 대부분이 5천만원 이하의 정기예금으로 서민들의 저축 수단이기 보다는 고액자산 보유자들의 고금리 저축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
- ☐ 따라서, 비과세예금 혜택을 저축은행의 모든 예금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허용하기 보다는
 - 예금주가 저소득 서민층인지 여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며,
 - 비과세 예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서민금융지원에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14.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정책 및 향후 계획

□ '10.4.7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따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을 공급

○ 햇살론은 '10.7.26. 출시하여 대부업 등에게 30~4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 기대

□ 또한,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관련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이와 함께, 그간 저축은행의 서민대출에 있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중

* (예)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10.8월 입법예고중)

- 소액신용대출을 영업구역내 의무여신한도(50%) 산정시 배제
-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총당금 적립기준을 일반대출과 같게 조정

**15. 저축은행이 '채무자 회생 지원을 위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채무감면액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
- 은행의 경우와 비교**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금융기관간 합의에 따라 내국법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의 경우
 - 면제한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이는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임

**16. 은행 및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취급 실적을 감독
당국의 경영실태평가시 반영하는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자산의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 금융기관의 경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 은행·저축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민대출 취급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 구체적인 반영방법 및 반영정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17. '08년 이후 개최한 대부업정책협의회 회의록

-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대부업정책협의회 회의록

제4차 대부업정책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회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1.29(화) 16:00~17:00, 장소 : 재경부 7층 대회의실

1. 주요 논의결과

①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 지방의 행정력, 경찰력, 세무서 등을 통해 대부업체를 관리·감독·단속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 현재 시·도별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

②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를 마련

③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 다음 실태조사시에는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대부시장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도 포함
- 대부업체 이용자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신용도, 연체정도, 사금융 이용 용도 등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 대안금융을 제공할 대상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금융에도 발굴

4] 관계법령 개정 노력

- 대부업법, 유사수신규제법 등 대부업 및 유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2. 향후 추진계획

- ☐ 대부업자와 사금융이용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08.2~3월)
- ☐ 상반기중 지자체 인력충원을 마무리
- ☐ 상반기중 대부업법·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제5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개최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6.3(화)

1. 주요 논의결과

① 등록 대부업체와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그 동안 사금융 시장 규모는 각 연구소 등에서 18~45조원으로 추산
 - 그러나 동 추정치는 90년대 통계치, 등록 대부업체 조사 등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정책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 ➡ 이에 전국민과 사금융 이용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시행
- 사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현황 자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조사결과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전 국민(20세 이상 3,500만명)의 5.4%인 약 189만명인 것으로 추정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5조원으로 추정됨

-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이고,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

② 경찰과 검찰은 작년에 이어 금년 3~4월중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 '08.1~4월중 1,185명을 단속

- 하반기에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가하여 실시하되
 -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
-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적발해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공정위에서는 그 동안 대부업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07.6~12)하여 시정권고·명령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

③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대부업체 DB구축, 지자체 대부업 전담인력 보강*, 시·도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지속 추진중

*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인력을 '07~'08.5월중 26명까지 확보

** 16개 시도중 12개 시도 개최

○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정보의 DB화**를 완료('08.2)

- 향후 관계부처가 단속·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국민이 대부업체 여부 확인시 동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④ 대부업법 개정('08.3 시행)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되었음

* 2개 이상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경우,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 이에따라, 금감원의 관련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현재 지자체를 통해 검사대상 대부업자 현황을 파악중이며, 직권검사 대상 업체에게 설명회를 통해 검사내용 등을 안내
-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권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계획임

⑤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추진

- ① 국민연금 기납부액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②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통한 창업·취업지원, 신용대출, ③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연체채무 재조정 및 고금리 채무 환승 지원, ④ '신용회복지원중' 기록말소, ⑤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
- 이를 위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도 논의

2. 향후 추진계획

- ①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후 6~7월중 최종방안 발표)
- ② 대부업체DB를 활용한 상시관리시스템 및 사이트 운영에 대한 실무자 회의 개최 ('08.6~7월중)
- ③ 단속기관은 서로간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제6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9.9(화) 15:00~16:00, 장소 : 금융위 5층 회의실(513호)

1. 주요 논의결과

① 대부업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대부업법 입법예고 기간 중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필요

② 제4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추진 계획 및 지자체 파견 전문검사역 활동성과

- 금감원의 지자체 파견 전문검사역 활동성과 보고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④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지자체 인력 확대가 어렵고 아직까지 대부업에 대한 시도의 관심이 미흡한 상황

- 대부업 상시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

⑤ 대부업 정책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

- 대부업 정책 협의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협의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만큼 연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필요
- 우선, 실무단계에서 지자체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선정한 후 정책 협의회에 상정할 필요

2.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으로 사금융에 의한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각 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 대부업체 DB를 활용한 상시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실무자 회의 개최('08.9월중)

제7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7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12.15(월) 15:00~16:00, 장소 : 금융위 5층 회의실(513호)

1. 주요 논의결과

①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지자체 연말 포상 실시

- 대부업 관리·감독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언론사·금융위 공동으로 지자체장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 포상 실시
- 「서민금융대상」을 「서민금융 우수 감독 대상」으로 조정하고, 포상대상에 금감원 등을 추가할 필요

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④ 대부업상시관리시스템의 구축

- 대부업체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등록대부업체 DB화 등 대부업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⑤ 제4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

- '08년 하반기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2. 향후 추진계획

- ☐ 「서민금융대상」을 「서민금융 우수 감독 대상」으로 조정하고, 포상대상에 금감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 사회적으로 사금융에 의한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각 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제8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3.30(월) 17:00~17:40, 장소 : 금융위 부위원장실

1. 주요 논의결과

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대부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대부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대부계약시 제출받는 소득증명서류의 범위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②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 대부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추진실적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④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⑤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 대부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

⑥ 사이버금융감시반 운영 현황

- 사이버금융감시반의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2. 향후 추진계획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제9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회의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9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4.24(금) 08:00~09:40, 장소 : 금융위 20층 식당 별실

1. 주요 내용

① 금융권을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강화 대책

- ① 저신용자에게 생활자금 대출 지원
- ② 보유재산 담보부 생계비 저리융자
- ③ 은행 「저신용자 전용대출 상품」 활성화

② 불법 사금융 단속강화 및 사후구제 확대

가. 유관기관 합동의 불법 사금융행위 총력 단속 실시

- ① 불법 대부업 상시 집중단속 강화
- ②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지급제도 신설
- ③ 금융감독기관과 수사기관간 공조강화(금감원·경찰청 협약식 체결)
- ④ 불법 혐의정보 수사기관 즉각 제보
- ⑤ 세금탈루 대부업자 세무조사 및 연중 사업자 등록정비
- ⑥ 대부업자 탈세신고세터 개설

나.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강화

- ① 등록 대부업 DB 인터넷 공개
- ② 무등록업체 광고활동 모니터링 및 수사기관 정기 통보
- ③ 금감원 직권검사 강화 및 지자체에 현장점검 및 상담 지원
- ④ 대부거래 및 보증 표준약관 제정·보급
- ⑤ 업계 자율규제 강화

다.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 ① 개인회생·파산절차 무료지원
- ②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한 무료소송지원

③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8.7)전 홍보

나. 서민금융정책 및 피해예방 홍보

- ① 서민금융안내 책자 및 리플렛 발간
- ② 서민금융포털사이트 활용도 제고
- ③ 방송광고 실시

2. 주요 논의결과

□ 법무부

-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
- 불법 대부행위를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체계의 강화가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 (On-line 홍보) 사채 등에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즉각 검색 되도록 하는 등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피해구제 방법도 인터넷 포털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약관) 대부거래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 인터넷 계약의 경우 대부이용자에게 계약서 송부를 의무화하여 채무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함

□ 경찰청

-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을 통해 사회안정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불법대부행위가 내밀하게 이루어져 단속이 어려움
-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신고활성화를 기할 것임
- 별도의 신고피해전화를 개설하기 보다는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존의 신고전화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국세청

-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홈페이지의 탈세 신고방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별도로 구분 신설할 것임

□ 금융감독원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고리사채를 치면 바로 「서민금융 119」로 연결되도록 조치하고, Cyber 홍보 등을 지속추진할 것임

□ 금융위

- 신설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향후 지자체와 연결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할 것임
-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각 부처는
 - 올 8월 시행예정인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 대부업 관리·감독, 엄정한 단속과 처벌, 피해자 사후구제 등 일련의 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상호공조를 공고히 하여 주시기 바람

3. 향후 추진계획

- 금일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국무회의('09.4.28)에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보고

제10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0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10.15(목)

- 각 부처의 국정감사 일정으로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모두 전체 안건에 대해 “이견 없음”으로 합의

주요내용

①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추진실적

② 대부업 관련제도 개선 추진동향

- 대부업 실태조사 시기를 업무보고서 작성 시기에 맞춰 현재 3월, 9월에서 6월, 12월로 변경

③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추진 실적

④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 상한제한 적용 사례 및 대부업법의 실무 적용 관련 해석사항

⑤ 대부업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 소재불명 대부업자 일제 정비 추진 및 대부광고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생활정보지와 협조체제 구축

제11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0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12.30(수)

- ☐ 각 부처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모두 전체 안건에 대해 “이견 없음”으로 합의

주요내용

① 서민금융감독대상 포상계획(안)

-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실시

②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연 60% → 연 50%)
- 대부업 등록요건에 고정사업장 요건 추가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채권추심 관련폭행·상해죄를 저지른 자의 대부업 고용제한 등

③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④ 사금융 종합애로지원센터 개소

- 경찰청(수사), 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 합동으로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실시

제12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0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12.30(수)

- 각 부처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가 '서민금융사 보증부 대출'의 원활한 추진, 등록대부업체 검색시스템 정착 및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 음성화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주요내용

①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②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5%p 인하
(연 60% → 연 50%)

제13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3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10.7.23(금)

□ 각 부처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회의를 개최

주요내용

- ①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및 계획
- ②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현황
- ③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행위 근절방안
 -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단속 강화
 - 대부업계의 자율 시정노력
 - 관련 기관별 피해예방 홍보 강화
- ④ 제7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18. 세계 각국의 금리현황 및 역대 금리 인하 내역

- 대부업체 대출심사시 조사항목

□ 외국의 이자율 상한 및 역대 금리 인하 내역

국가	최고이자율 규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업법 : 연 109.5%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 • 출자법 : 연 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3백만엔 이하 벌금) • 이자제한법 : 연 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부분은 무효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60% (대부업법), 위반시 형사처벌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차원에서 최고이자율 규제는 없으며, 주별로 상황에 맞게 규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한 최고이자율 규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소비자신용법에 의하여 불공정관계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계약의 재체결을 명할 수 있음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한 최고이자율 규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법원의 판례에 의해 폭리라고 인정한 금리수준(대출 유형별 평균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12%초과)의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시장금리 + 1/3 수준으로 매분기 결정(소비법) * 대출금액에 따라 이자상한을 차등 적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의 4배 수준으로 지역마다 다름

- 일본은 출자법(우리나라의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54년 109.5%에서 '10년 20%까지 56년에 걸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인하

* 출자법상 금리상한: 109.5%('54) → 73%('83) → 54.75%('86) → 40%('91) → 29.2%('00) → 20%('10)

□ 대부업체 대출심사시 조사 항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채무불이행건수 및 금액
- ② 신용개설정보 : 신용카드 및 신용개설 총건수 등
- ③ 대부업 대출 총건수 및 금액
- ④ 대부업 연체건수 및 금액
- ⑤ 총신용조회건수 및 업권별 신용조회건수
- ⑥ CB스코어(신용점수)

**19. 06년 이후 '서민금융 실태조사' 및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자료**

- ☐ 서민금융 전반을 다룬 실태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대부업실태조사결과

제5차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I. 개 요

□ '09. 3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5,723개로 '08. 9월말 (16,120개) 대비 2.5% (△397개) 감소*

* 자진 등록취소 및 지자체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대부업체를 직권 등록취소함에 따라 개인 대부업체가 큰폭으로 줄어든 데 기인

- '08. 3월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08. 3월말 17,713개 → '08. 9월말 16,120개

□ 이중 10,632개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 (응답률 67.6%) 하여 '08. 9월말 (64.5%) 대비 3.1%p (234개) 상승

* 자산 70억원 이상 96개, 자산 70억원 미만 849개, 개인 9,687개

※ 보고서 제출율 : '08. 3월말 53.3% → '08. 9월말 64.5%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 개, %, %p)

구 분		'08. 9월말 (A)		'09. 3월말 (B)		증 감 (B-A)	
		등 록	제 출 (율)	등 록	제 출 (율)	등 록	제 출 (율)
법 인	자산 70억원이상	92	91 (98.9)	100	96 (96.0)	8	5 (△2.9)
	자산 70억원미만	1,107	813 (73.4)	1,131	849 (75.0)	24	36 (1.6)
개 인		14,921	9,494 (63.6)	14,492	9,687 (66.8)	△429	193 (3.2)
합 계		16,120	10,398 (64.5)	15,723	10,632 (67.6)	△397	234 (3.1)

II.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10,632개중 대출잔액이 없거나(2,744개) 작성 오류가 심한 업체(62개) 등 2,806개를 제외한 7,826개를 대상으로 분석('08.9월말기준 분석대상 대비 1,168개 증가)

1 전국 대부업체 영업 현황

대출 및 거래자 현황

□ '09.3월말 현재 7,826개 분석대상 대부업체가 1,431,656명에게 5조 1,576억원을 대출

○ '08.9월말 대비 보고서 분석대상 업체가 증가(1,168개) 하였음에도 대출금은 감소* (△8.0%, △0.4조원)

※ 보고서 분석대상업체수 증가분(1,168개)을 제외할 경우에도 대출금은 감소 (△1.8%, △858억원)

○ 한편, 자산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가 소액신용대출 위주 영업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1인당 대출금은 3.6백만원으로 '08.9월말(4.3백만원) 대비 70만원 감소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거 래 자			대 출 금			1인당 대출금 (백만원)
	'08.9월말	'09.3월말	증 감 (율)	'08.9월말	'09.3월말	증 감 (율)	
자산 70억원 이상	1,068,118	1,212,652	144,534 (13.5)	47,675	44,748	△2,927 (△6.1)	3.7
자산 70억원 미만	66,946	55,725	△11,221 (△16.8)	4,563	3,092	△1,471 (△32.2)	5.5
개 인	172,207	163,279	△8,928 (△5.2)	3,827	3,737	△90 (△2.4)	2.3
합 계	1,307,271	1,431,656	124,385(9.5)	56,065	51,576	△4,489(△8.0)	3.6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 신용대출이 4조 361억원으로 전체 대출금(5조 1,576억원)의 78.3%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이 1조 1,215억원으로 21.7%를 차지

○ '08. 9월말 대비 신용대출은 증가* (12.7%, 4,561억원) 하였으나, 담보대출은 감소 (△44.7%, △9,050억원)

* 대형 대부업체가 소액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

□ 1인당 평균 신용대출금은 3백만원이고, 담보대출금은 9백만원

□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8.4%로 '08. 9월말 대비 0.5%p 하락 하였으며, 담보대출 평균 금리 (15.6%) 도 1.1%p 하락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08. 9월말 (A)	'09. 3월말 (B)	증 감 (B-A)
자산 70억원 이 상	신용대출금	32,073	36,802	4,729
	금 리	38.9	38.4	△0.5
	담보대출금	15,602	7,946	△7,656
	금 리	11.1	10.2	△0.9
자산 70억원 미 만	신용대출금	2,162	1,928	△234
	금 리	35.4	34.1	△1.3
	담보대출금	2,401	1,164	△1,237
	금 리	31.9	30.2	△1.7
개 인	신용대출금	1,565	1,631	66
	금 리	43.1	42.3	△0.8
	담보대출금	2,262	2,106	△156
	금 리	39.0	37.7	△1.3
합 계	신용대출금	35,800	40,361	4,561
	금 리	38.9	38.4	△0.5
	담보대출금	20,265	11,215	△9,050
	금 리	16.7	15.6	△1.1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96개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겸업업체로서 대출잔액이 없는 8개를 제외한 88개를 대상으로 분석('08.9월말기준 분석대상 대비 5개 증가)

대출 상대별 현황

- '09.3월말 현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금은 4조 4,748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86.8%를 차지
 - 거래자수는 1,212,652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84.7%
 - 대출금 및 거래자 비중 모두 '08.9월말 (85.0%, 81.7%) 대비 증가
 - 신용대출은 3조 6,802억원으로 이들 대부업체 총 대출금의 82.2%를 차지하고, 전체 대부업체 신용대출금 (4조 361억원)의 91.2% 차지
 - 담보대출은 7,946억원으로 이들 대부업체 총 대출금의 17.8%
- ※ 신용대출거래자 : 1,206,604명 (99.5%), 담보대출거래자 6,408명 (0.5%)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상대별 대출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거 래 자			대 출 금		
		'08.9월말	'09.3월말	증 감(율)	'08.9월말	'09.3월말	증 감(율)
개 인	신 용	1,055,837	1,203,311	147,474(14.0)	26,080	29,563	3,483(13.4)
	담 보	6,358	4,434	△1,924(△30.3)	8,827	5,924	△2,903(△32.9)
	소 계	1,062,195	1,207,745	145,550(13.7)	34,907	35,487	580(1.7)
법 인	신 용	4,685	3,293	△1,392(△29.7)	5,993	7,239	1,246(20.8)
	담 보	1,238	1,614	376(30.4)	6,775	2,021	△4,754(△70.2)
	소 계	5,923	4,907	△1,016(△17.2)	12,768	9,261	△3,507(△27.5)
전 체	신 용	1,060,522	1,206,604	146,082(13.8)	32,073	36,802	4,729(14.7)
	담 보	7,596	6,048	△1,548(△20.4)	15,602	7,946	△7,656(△49.1)
	계	1,068,118	1,212,652	144,534(13.5)	47,675	44,748	△2,927(△6.1)

대출금액별 현황

- 차주 1인당 5백만원 이하 대출은 2조 5,106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출의 56.1%를 차지 ('08. 9월말 46.9%)
- 5백만원 이하 신용대출 (2조 5,076억원) 은 전체 신용대출금의 68.1%를 차지

※ 5백만원 이하 거래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2백만원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금액대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5백만원 이하 거래자 (비율)		5백만원 이하 대출금 (비율)	
	'08. 9월말	'09. 3월말	'08. 9월말	'09. 3월말
신용대출	1,018,978 (96.1)	1,155,104 (95.7)	22,327 (70.6)	25,076 (68.1)
담보대출	2,076 (27.3)	2,121 (35.1)	47 (0.3)	30 (0.4)
합 계	1,021,054 (95.6)	1,157,225 (95.4)	22,374 (46.9)	25,106 (56.1)

주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신용, 담보, 총대출에서 5백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임

연체 현황

- '09. 3월말 현재 연체율*은 17.9%로 '08. 9월말 (13.9%) 대비 4.0%p 상승

* 1일 이상 연체율

- 담보대출 연체율 (38.8%)이 신용대출 연체율 (13.6%)의 3배 수준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08. 9월말 연체비율 (A)	'09. 3월말			비율증감 (B-A)
			전 체	연 체	비 율 (B)	
대출금	신용대출	10.2	35,009	4,751	13.6	3.4
	담보대출	21.5	7,246	2,808	38.8	17.3
	계	13.9	42,255	7,560	17.9	4.0
거래자	신용대출	9.1	1,204,868	159,188	13.2	4.1
	담보대출	23.1	6,048	1,870	30.9	7.8
	계	9.2	1,210,916	161,058	13.3	4.1

신규대출 이용자

- '08. 10월 ~ '09. 3월중 신규대출 (6,870억원) 이용자의 40.4% (2,776억원)가 회사원이고, 15.7% (1,079억원)는 자영업자임
- 주요 대출 목적으로는 생활비 충당 (1,937억원, 28.2%) 및 사업자금 조달(1,819억원, 26.5%)이 많음

대출이용자별 신규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직업	대출목적					계 (점유비)
	사업자금	타대출상환	물품구매	생활비	기타	
자영업	564	78	16	135	286	1,079 (15.7)
공무원	29	165	19	182	428	823 (12.0)
회사원	117	375	178	1,338	768	2,776 (40.4)
학생·주부	21	40	13	216	216	506 (7.4)
기타	1,088	71	80	66	381	1,686 (24.5)
합계	1,819	729	306	1,937	2,079	6,870 (100.0)

대출이용기간

- '08. 10월 ~ '09. 3월 이용자 (대출상환액 기준) 중 46% (5,874억원)는 3개월내 대출금을 상환하고, 1년 초과도 25.1% (3,200억원)나 됨

대출상환액의 대출기간별 현황

(단위 : 억원, %)

대출상환액	3월 미만	3~6월 미만	6~12월 미만	1년 이상
12,772	5,874	1,473	2,223	3,200
(비율)	(46.0)	(11.5)	(17.4)	(25.1)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는 296개 ('08. 9월 대비 91개 감소), 개인 대부업체는 7,442개 ('08. 9월 대비 1,254개 증가) 를 대상으로 분석

대출 및 거래자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296개) 의 대출금은 3,092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6.0% 차지

○ 업체당 평균 대출금은 10.4억원*, 평균 거래자수는 188명

* 이들 업체는 신용대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여의치 않아 신용대출 비중이 62.4%로 전체 평균 (82.2%) 보다 낮은 등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5.5백만원

□ 개인 대부업체 (7,442개)의 대출금은 3,737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7.3% 차지

○ 개인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은 50백만원, 평균 거래자수는 22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3백만원

자산 7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체의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건, 억원, %, %p)

구 분	자산 70억 미만			개 인		
	'08. 9월말	'09. 3월말	증 감	'08. 9월말	'09. 3월말	증 감
거래자	66,946	55,725	△ 11,221	172,207	163,279	△ 8,928
대출금	4,563	3,092	△ 1,471	3,827	3,737	△ 90
신용 (점유비)	2,296 (50.3)	1,928 (62.4)	△ 368	1,565 (40.9)	1,631 (43.6)	66
담보 (점유비)	2,267 (49.7)	1,164 (37.6)	△ 1,103	2,262 (59.1)	2,106 (56.4)	△ 156
1인당 대출금	6.8	5.5	△ 1.3	2.2	2.3	0.1

지역별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296개) 는 서울 (166개, 56.1%), 경기 (42개, 14.2%), 인천 (8개, 2.7%) 등 수도권이 216개로 73%를 차지

※ 개인 대부업체 (7,442개) 는 수도권이 3,739개로 50.2%를 차지

○ 거래자 (55,725명) 는 서울 (40,518명, 72.7%), 경기 (3,355명, 6.0%), 인천 (1,601명, 2.9%) 등 수도권이 45,474명으로 81.6% 차지

※ 개인 대부업체 거래자 (163,279명) 는 수도권이 73,002명으로 44.7% 차지

○ 대출금 (3,092억원) 은 서울 (2,218억원, 71.7%), 경기 (289억원, 9.4%), 인천 (167억원, 5.4%) 등 수도권이 2,674억원으로 86.5% 차지

※ 개인 대부업체 대출금 (3,737억원) 은 수도권이 2,613억원으로 69.9% 차지

자산 70억 미만 및 개인 대부업체의 지역별 대출현황

(단위 : 건,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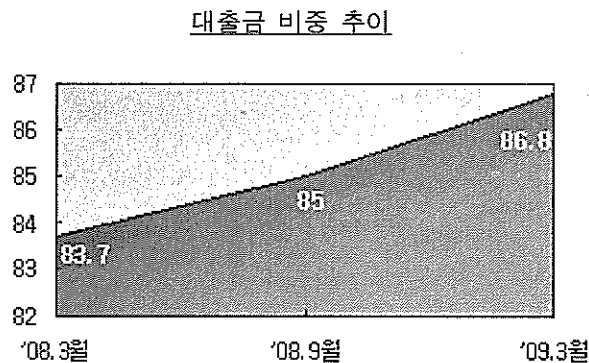
구 분	자산 70억 미만 법인				개 인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1인당대출금 (백만원)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1인당대출금 (백만원)
서울	166	40,518	2,218	5.5	2,052	35,064	1,685	4.8
경기	42	3,355	289	8.6	1,416	29,567	807	2.7
인천	8	1,601	167	10.4	271	8,371	121	1.4
강원	4	75	11	14.7	250	4,811	93	1.9
충북	3	78	2	2.6	185	2,162	49	2.3
충남	11	360	42	11.7	274	2,278	73	3.2
대전	7	342	25	7.3	271	4,287	99	2.3
전북	6	504	46	9.1	151	1,878	59	3.1
전남	0	0	0	0	219	3,762	43	1.1
광주	5	59	3	5.1	190	4,623	80	1.7
경북	1	58	4	6.9	238	5,410	76	1.4
대구	9	212	31	14.6	537	12,970	85	0.7
경남	4	898	31	3.5	352	11,679	114	1.0
부산	22	7,158	151	2.1	734	29,802	253	0.8
울산	3	260	20	7.7	249	5,048	65	1.3
제주	5	247	52	21.1	53	1,567	38	2.4
계	296	55,725	3,092	5.5	7,442	163,279	3,737	2.3

Ⅲ. 평가 및 시사점

□ (대출규모) 대형 대부업체로의 집중도 지속

- 최고 이자율 인하(66% → 49%) 및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홍보효과 등으로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대부업체로의 집중화가 점차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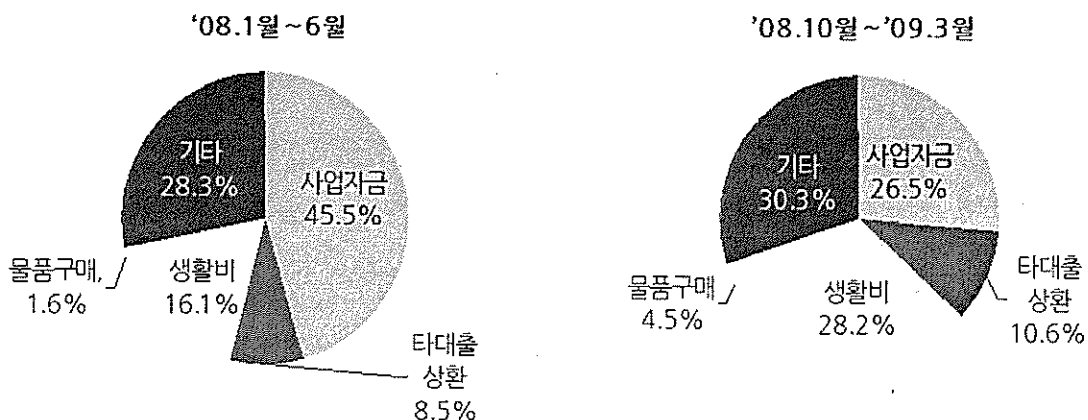
<자산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비중 추이(%)>



⇒ 특히, '08년 말 이후 검찰·경찰의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으로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대형 대부업체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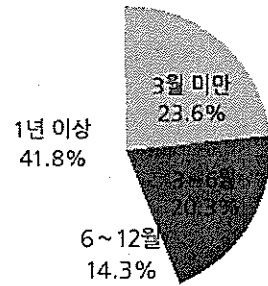
□ (대출형태) 신용대출 및 단기·소액 대출의 비중 증가

- 경기침체에 따라 생활비관련 대출은 증가한 반면, 사업자금 관련 대출은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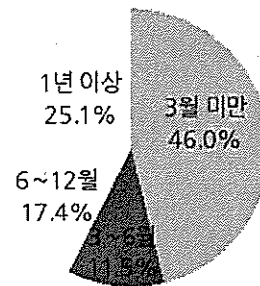


- '08.1월 ~ 6월 기간중에는 1년이상 이용자가 41.8%로 가장 많았으나, '08.10월 ~ '09.3월 기간에는 3월 미만 이용자가 46.0%로 가장 많았음

'08.1월~'08.6월



'08.10월~'09.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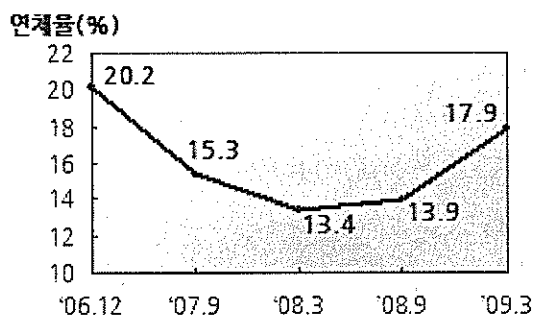


-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 수요 증가와 더불어 법인 대부업체들의 보수적(소액화) 운용에 따라 단기·소액·신용대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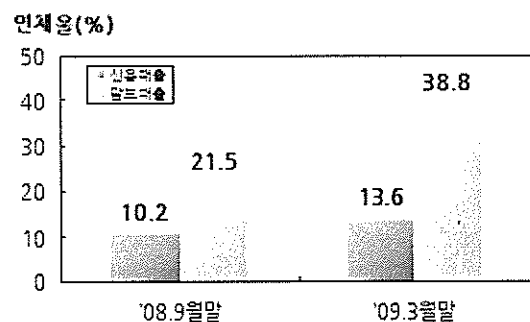
□ (연체율 상승)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형 법인의 연체율 상승

- 특히, 담보대출 연체율(38.8%)이 신용대출 연체율(13.6%)의 3배 수준

전체 연체율 추이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추이



-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소득원은 적으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용대출보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제6차 ('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I. 개 요

- '09.12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는 14,783개사로 '09.3월말 (15,723개) 대비 6.0% (△940개) 감소
 - 영업형태별로는 대부업체가 10,904개, 대부 및 대부중개 겸업업체가 2,075개, 대부중개업체가 1,804개임
- 이중 10,554개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 (응답률 71.4%) 하여 '09.3월말 (67.6%) 대비 3.8%p 상승

* 자산 70억원 이상 100개, 자산 70억원 미만(지점포함) 920개, 개인 9,534개

※ 보고서 제출율 : '08.9월말 64.5% → '09.3월말 67.6% → '09.12월말 71.4%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 개, %, %p)

구 분		'09.3월말 (A)		'09.12월말 (B)		증 감 (B-A)	
		등 록	제 출 (율)	등 록	제 출 (율)	등 록	제 출 (율)
법 인	자산 70억원이상	100	96 (96.0)	100	100 (100.0)	-	4 (4.0)
	자산 70억원미만	1,131	849 (75.0)	1,251	920 (73.5)	120	71 (△1.5)
개 인		14,492	9,687 (66.8)	13,432	9,534 (71.0)	△1,060	△153 (4.2)
합 계		15,723	10,632 (67.6)	14,783	10,554 (71.4)	△940	△78 (3.8)

II.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10,554개사중 대출잔액이 없거나(2,710개) 작성 오류가 심한 업체(151개) 등 3,094개사를 제외한 **7,460개사**(대부업 6,688개, 대부중개업 610개, 겸업 162개)를 대상으로 분석

1 전국 대부업체 영업 현황

대출 현황

□ '09.12월말 현재 **6,850개*** 대부업체가 **1,674,437명**에게 **5조 9,114억원**을 대출

* 분석대상업체 7,460개 중 대부중개업체(610개) 제외

- '09.3월말 대비 분석업체가 감소(△976개) 하였음에도 대출금은 증가(↑14.6%, ↑7,538억원)
- '09.3월 실태조사 분석대상과 동일한 업체(3,206개)의 대출추이 비교시에도 '09.3월말 대비 증가(↑7,581억원)

□ **1인당 대출금은 3.5백만원**으로 '09.3월말(3.6백만원) 대비 **10만원 감소**

- 일부 대형 대부업체에서 소액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거 래 자			대 출 금			1인당 대출금 (백만원)
	'09.3월말	'09.12월말	증 감 (율)	'09.3월말	'09.12월말	증 감 (율)	
자산 70억원 이상	1,212,652	1,397,805	185,153 (15.3)	44,748	50,722	5,974 (13.4)	3.6
자산 70억원 미만	55,725	106,590	50,865 (91.3)	3,092	4,627	1,535 (49.6)	4.3
개 인	163,279	170,042	6,763 (4.1)	3,737	3,765	28 (0.7)	2.2
합 계	1,431,656	1,674,437	242,781 (17.0)	51,576	59,114	7,538 (14.6)	3.5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 신용대출이 4조 6,445억원으로 전체 대출금 (5조 9,114억원) 의 78.6%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이 1조 2,669억원으로 21.4%를 차지
 - '09.3월말 대비 신용대출은 15.1% (↑6,084억원), 담보대출은 13.0% 증가 (↑1,454억원)
- 1인당 평균 신용대출금은 3백만원이며, 담보대출금은 1천만원
-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1.2%로 '09.3월말 대비 2.8%p 상승* 하였으며, 담보대출 평균 금리 (19.5%) 도 3.9%p 상승**

* 고금리 신용대출(법정최고이자 49% 수취) 취급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

** 일부 저금리(10%미만) 담보대출 취급 업체가 신규대출을 제한하여 대출 비중이 줄어든 데 기인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09.3월말 (A)	'09.12월말 (B)	증 감 (B-A)
자산 70억원 이 상	신용대출금	36,802	42,152	5,350
	금 리	38.4	41.6	3.2
	담보대출금	7,946	8,570	624
	금 리	10.2	12.4	2.2
자산 70억원 미 만	신용대출금	1,928	2,790	862
	금 리	34.1	37.9	3.8
	담보대출금	1,164	1,837	673
	금 리	30.2	36.6	6.4
개 인	신용대출금	1,631	1,503	△128
	금 리	42.3	35.7	△6.6
	담보대출금	2,106	2,262	156
	금 리	37.7	32.6	△5.1
합 계	신용대출금	40,361	46,445	6,084
	금 리	38.4	41.2	2.8
	담보대출금	11,215	12,669	1,454
	금 리	15.6	19.5	3.9

2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현황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100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심업체, 겸업업체로서 대출잔액이 없는 업체 등 21개사를 제외한 7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대출 현황

□ '09.12월말 현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79개) 의 대출금은 5조 722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85.8%를 차지

- 거래자수는 1,397,805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83.5%
- 대출금 및 거래자 모두 '09.3월말 대비 증가 (각 ↑13.4%, ↑15.3%)
 - 업체당 평균 대출금은 642억원, 평균 거래자는 17,694명

□ 신용대출 (4조 2,152억원) 은 이들 대부업체 총 대출금의 83.1%를 차지하고, '09.3월말 대비 14.5% 증가

- 담보대출 (8,570억원, 총 대출의 16.9%) 은 '09.3월말 대비 7.9% 증가

□ 개인대출은 증가* (↑20.1%) 한 반면, 법인대출은 감소 (△12.6%)

* 대형 대부업체가 개인신용대출 (↑24.2%) 위주로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상대별 대출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거 래 자			대 출 금		
		'09.3월말	'09.12월말	증 감 (율)	'09.3월말	'09.12월말	증 감 (율)
개 인	신 용	1,203,311	1,385,649	182,338 (15.2)	29,563	36,707	7,144 (24.2)
	담 보	4,434	7,156	2,722 (61.4)	5,924	5,919	△5 (△0.1)
	소 계	1,207,745	1,392,805	185,060 (15.3)	35,487	42,626	7,139 (20.1)
법 인	신 용	3,293	3,587	294 (8.9)	7,239	5,445	△1,794 (△24.8)
	담 보	1,614	1,413	△201 (△12.5)	2,021	2,651	630 (31.2)
	소 계	4,907	5,000	93 (1.9)	9,261	8,096	△1,165 (△12.6)
전 체	신 용	1,206,604	1,389,236	182,632 (15.1)	36,802	42,152	5,350 (14.5)
	담 보	6,048	8,569	2,521 (41.7)	7,946	8,570	624 (7.9)
	계	1,212,652	1,397,805	185,153 (15.3)	44,748	50,722	5,974 (13.4)

대출금액별 현황

- 차주 1인당 5백만원 이하 대출금은 3조 428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출의 60.0%를 차지 ('09.3월말 56.1%)
 - 5백만원 이하 대출 중 신용대출 (3조 359억원) 이 99.8%를 차지
 - 5백만원 이하 거래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3백만원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금액대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5백만원 이하 거래자 (비율)		5백만원 이하 대출금 (비율)	
	'09.3월말	'09.12월말	'09.3월말	'09.12월말
신용대출	1,155,104 (95.7)	1,309,488 (94.3)	25,076 (68.1)	30,359 (72.0)
담보대출	2,121 (35.1)	3,155 (36.8)	30 (0.4)	69 (0.8)
합 계	1,157,225 (95.4)	1,312,643 (93.9)	25,106 (56.1)	30,428 (60.0)

주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신용·담보·총대출에서 5백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임

연체 현황

- '09.12월말 연체율은 13.2%로 '09.3월말 (17.9%) 대비 4.7%p 하락
 - 연체율 하락은 대출금이 증가 (↑5,974억원) 하고, 연체금이 감소 (△1,313억원) 한 데 기인

※ 영업유형별 연체율 : 전업업체 13.9%, 겸업업체 4.6%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09.3월말 연체비율 (A)	'09.12월말			비율증감 (B-A)
			전 체	연 체	비 율 (B)	
대출금	신용대출	13.6	42,152	4,672	11.1	△2.5
	담보대출	38.8	8,570	2,025	23.6	△15.2
	계	17.9	50,722	6,697	13.2	△4.7
거래자	신용대출	13.2	1,389,236	165,268	11.9	△1.3
	담보대출	30.9	8,569	3,312	38.7	7.8
	계	13.3	1,397,805	168,580	12.1	△1.2

신규대출 이용자

- '09.7월 ~ '09.12월중 신규대출 (1조 3,685억원) 이용자의 57.4% (7,855억원)가 회사원이고, 18.9% (2,582억원)는 자영업자임
- 주요 대출 목적으로는 생활비 충당 (4,583억원, 33.5%) 및 사업자금 조달 (2,760억원, 20.2%) 이 많음

대출이용자별 신규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직업	대출목적					계 (점유비)
	사업자금	타대출상환	물품구매	생활비	기타	
자영업	1,018	300	63	500	701	2,582 (18.9)
공무원	17	83	13	182	118	413 (3.0)
회사원	408	1,353	361	3,333	2,400	7,855 (57.4)
학생·주부	69	88	16	394	248	815 (6.0)
기타	1,248	93	86	174	419	2,020 (14.7)
합계	2,760	1,917	539	4,583	3,886	13,685 (100.0)

대출이용기간

- '09.7월 ~ '09.12월 이용자 (대출상환액 기준) 중 45.2% (4,192억원)는 1년 이상 거래를 유지하고, 24.3% (2,252억원)는 3개월 내 상환

대출상환액의 대출기간별 현황

(단위 : 억원, %)

대출상환액	3월 미만	3~6월 미만	6~12월 미만	1년 이상
9,266	2,252	1,304	1,518	4,192
(비율)	(24.3)	(14.1)	(16.4)	(45.2)

주 : 평균대출기간을 응답한 63개사의 '09.7~12월 중 대출상환액 기준임

업체별 현황

- 영업형태별로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79개) 중 전업업체가 55개사 (69.6%); 겸업업체*가 24개사 (30.4%)

* 대부업 이외 제조업 등 기타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겸업업체로 분류

- 전업업체 대출금이 4조 6,959억원으로 이들 업체 대출금의 92.6%를 차지(겸업업체 : 대출금 3,763억원, 비중 7.4%)

※ 1인당 대출금: 전업업체 (3.5백만원), 겸업업체 (8.4백만원)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전업·겸업업체 대출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 분	전업업체 (55사)	겸업업체 (24사)	합 계 (79사)
거래자	1,353,173 (96.8)	44,632 (3.2)	1,397,805 (100.0)
대출금	46,959 (92.6)	3,763 (7.4)	50,722 (100.0)

주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전체 거래자, 대출금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 한편, 취급상품별로는 신용대출 전문업체*가 43개사 (54.4%), 담보대출 전문업체가 26개사 (32.9%), 신용 및 담보대출 전문업체가 10개사 (12.7%)

* 전체 대출금중 해당 대출금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 전문업체로 분류

- 대출금은 신용대출업체가 82.8% (4조 2,005억원), 담보대출업체가 14.3% (7,240억원), 신용 및 담보대출업체가 2.9% (1,477억원)

※ 1인당 대출금 : 신용대출업체 (3백만원), 담보대출업체 (53백만원),
담보 및 신용대출 업체 (42백만원)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영업형태별 대출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신용대출업체 (43사)	담보대출업체 (26사)	신용및담보대출업체 (10사)	합 계 (79사)
거래자	1,380,677 (92.7)	13,589 (1.0)	3,539 (0.3)	1,397,805 (100.0)
대출금	42,005 (82.8)	7,240 (14.3)	1,477 (2.9)	50,722 (100.0)

주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전체 거래자, 대출금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는 411개사 (대부업 395개, 중개업겸업 16개), 개인 대부업자는 6,360개사 (대부업 6,214개, 중개업겸업 146개)를 대상으로 분석

대출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411개) 의 대출금은 4,627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7.8% 차지
 - 업체당 평균 대출금은 11.3억원, 평균 거래자수는 259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4.3백만원
- 개인 대부업자 (6,360개)의 대출금은 3,765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6.4% 차지
 - 개인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은 59백만원, 평균 거래자수는 27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2백만원
- 자산 70억원 미만(60.3%) 및 개인 대부업자(39.9%)의 신용대출 비중은 자산 70억원 이상 업체 신용대출 비중(90.8%)을 크게 하회
 -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에 비해 대출심사 노하우,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등 인적·물적 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어 영세업체의 경우 신용대출 취급이 어려움

자산 7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의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p)

구 분	자산 70억 미만			개 인		
	'09.3월말	'09.12월말	증 감	'09.3월말	'09.12월말	증 감
거래자	55,725	106,590	50,865	163,279	170,042	6,763
대출금	3,092	4,627	1,535	3,737	3,765	28
신용(점유비)	1,928 (62.4)	2,790 (60.3)	862(Δ2.1)	1,631 (43.6)	1,503 (39.9)	Δ128(Δ3.7)
담보(점유비)	1,164 (37.6)	1,837 (39.7)	673 (2.1)	2,106 (56.4)	2,262 (60.1)	156 (3.7)
1인당 대출금	5.5	4.3	Δ1.2	2.3	2.2	Δ0.1

지역별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411개) 는 서울 (231개, 56.2%), 경기 (66개, 16.1%), 인천 (13개, 3.2%) 등 수도권이 310개로 75.5%를 차지
 - 개인 대부업자(6,360개)는 수도권이 3,319개로 52.1%를 차지
- 거래자 (106,590명) 는 서울 (71,314명, 66.9%), 경기 (7,161명, 6.7%), 인천 (2,643명, 2.5%) 등 수도권이 81,118명으로 76.1% 차지
 - 개인 대부업자 거래자(170,042명)는 수도권이 85,904명으로 50.5% 차지
- 대출금(4,627억원)은 서울 (3,491억원, 75.4%), 경기 (417억원, 9.0%), 인천 (201억원, 4.3%) 등 수도권이 4,109억원으로 88.8% 차지
 - 개인 대부업자 대출금(3,765억원)은 수도권이 2,654억원으로 70.5% 차지

자산 70억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의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자산 70억원 미만 법인				개 인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1인당대출금 (백만원)	업체수	거래자수	대출금	1인당대출금 (백만원)
서울	231	71,314	3,491	4.9	1,864	45,654	1,742	3.8
부산	21	19,466	163	0.8	686	27,973	278	1.0
대구	12	898	34	3.8	320	12,549	91	0.7
인천	13	2,643	201	7.6	264	9,829	142	1.4
광주	15	407	25	6.1	155	3,587	78	2.2
대전	16	2,890	134	4.6	280	4,228	87	2.1
울산	1	3	0.05	1.7	153	4,607	45	1.0
경기	66	7,161	417	5.8	1,191	30,421	770	2.5
강원	3	41	8	19.5	218	4,022	75	1.9
충북	1	45	1	2.2	160	2,673	55	2.1
충남	9	353	22	6.2	183	2,520	91	3.6
전북	6	263	13	4.9	153	1,991	54	2.7
전남	1	21	0.03	0.1	120	2,089	39	1.9
경북	3	67	13	19.4	200	4,264	57	1.3
경남	7	665	45	6.8	373	12,620	143	1.1
제주	6	353	59	16.7	40	1,015	18	1.8
계	411	106,590	4,627	4.3	6,360	170,042	3,765	2.2

4 전국 대부중개업체 영업 현황

법인 대부중개업체 54개사(중개업 38개, 대부업겸업 16개), 개인 대부중개업체 718개사(중개업 572개, 대부업겸업 146개)를 대상으로 분석

□ '09.7월 ~ '09.12월중 대부중개업체 (772개)의 대부중개 금액은 7,479억원 (중개건수 250,814건)

○ 법인 업체 (54개)의 대부중개 금액은 6,131억원, 중개건수는 225,891건

- 중개실적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중개금액의 66.8%(4,999억원) 차지

○ 개인업체 (718개)의 대부중개 금액은 1,348억원 (중개건수 24,923건)

□ 업체당 평균 중개금액은 9.7억원, 평균 중개건수는 325건

※ 법인 업체별 : 평균 중개금액 114억원, 평균 중개건수 4,183건

개인 업체별 : 평균 중개금액 1.9억원, 평균 중개건수 35건

□ 동 기간중 대부중개업체는 총 454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 (전체 중개금액의 6.1%)

○ 법인 업체가 404억원 (중개금액의 6.6%), 개인 업체가 50억원 (3.7%)

법인 및 개인 대부중개업체 중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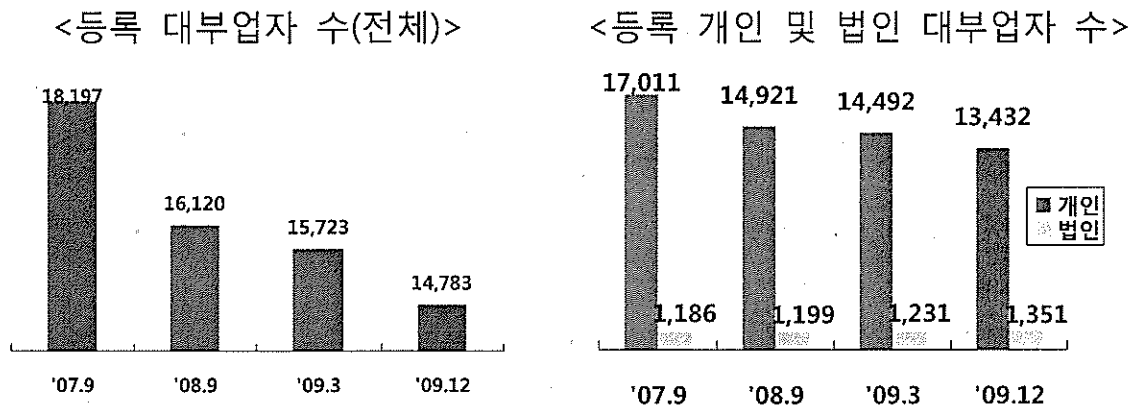
(단위 : 개, 건, 억원, %)

구 분	업체수	중개건수	중개금액	수입수수료	(율)
법 인	54	225,891	6,131	404	6.6
개 인	718	24,923	1,348	50	3.7
합 계	772	250,814	7,479	454	6.1

Ⅲ. 시사점

① 등록 대부업자 수 지속 감소

- 불법 대부업자 단속 강화 및 등록증 재교부시('09.4~7월)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의 자진폐업 증가로 등록 대부업자 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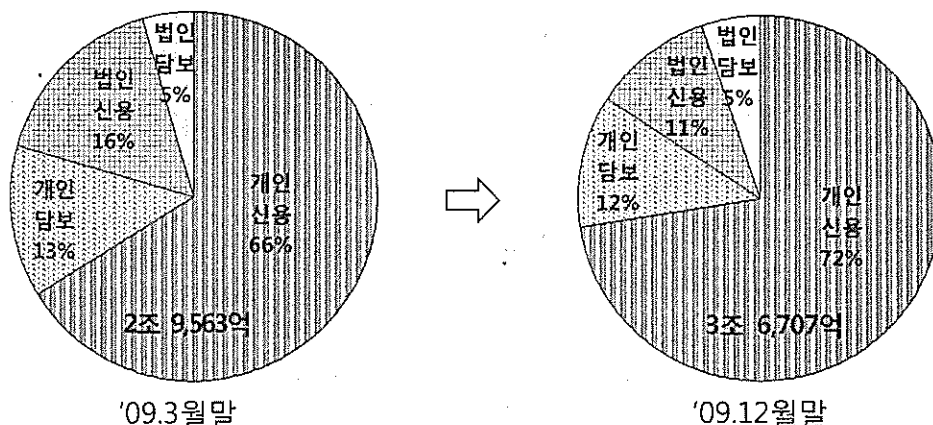
- 향후에도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대출 확대 및 최고이자율 인하(연 49% → 연 44%) 등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중·소형 대부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폐업 대부업체가 음성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필요

② 개인신용대출 확대

- 대형 대부업체가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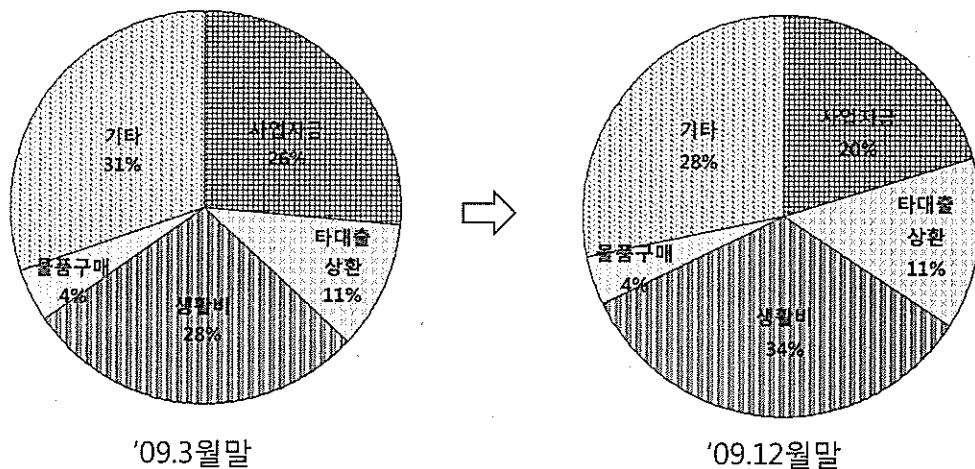
<개인신용대출 추이 (자산 70억원 이상 업체 기준)>



-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연 49%)에 근접*한 개인신용대출의 확대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금리 상승

* 전업업체 55개사중 30개사가 연 45% 이상 금리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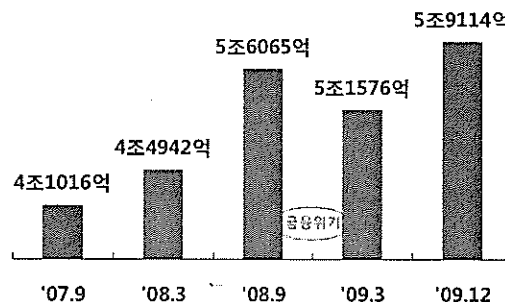
- 대부업자들의 개인신용대출 확대에 따라 소액인 생활비 목적 대출 비중 증가



③ 대부업체 수익성 개선

- 경기 회복세에 따라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대출규모 증가

<대부 시장 규모>



- 특히 이자율이 높은 개인신용대출이 크게 확대되어 대부업자들의 이익 증가

⇒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대출잔액이 있는 79개 업체)의 경우 '09 회계연도 중 3,1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

20. LTV, DTI 관련

- LTV, DTI 시행 관련 근거 및 구체적인 시행 경과
- '08년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자료, 당정협의 자료

① LTV, DTI 시행 관련 근거 및 구체적인 시행 경과

□ LTV, DTI 시행 관련 근거

- 「은행업 감독규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붙임1)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 : (붙임2)

□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추이

- LTV비율 60% 이내로 규제('02.9~10)
- 투기지역 등에 대해 LTV비율을 50% 이내로 규제('03.5.28.)
→ 40%이내로 강화('03.10.30)
- 비은행금융기관 LTV규제 강화(60~70%→50%) ('06.11.15.)
- 수도권(투기지역 제외) LTV 비율 규제 강화(60% → 50%) ('09.7.6)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추이

- 투기지역 일정조건* 의 담보대출시 DTI비율을 40% 이내로 규제 ('05.8.30.)
*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기혼차주 및 만 30세 미만 미혼 차주
- DTI비율을 40% 이내로 규제('06.3.30.)
*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 수도권(투기지역외)에 대하여 DTI비율 규제(서울 50%이내, 경기·인천 60%이내) ('09.9.7.)

② '08년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자료, 당정협의 자료

-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보도자료 : (붙임3)
-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보도자료 : (붙임4)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보도자료: (붙임 5)

붙임 1 「은행업 감독규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신규대출”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과 기존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라.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이라 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마.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이라 함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바. “투기지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 “투기과열지구”라 함은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2.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금융기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만 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기타 지역	
	주택 ¹⁾	아파트	주택 ¹⁾	아파트	주택 ¹⁾	아파트
3년이하 ²⁾	50%이내	40%이내 ²⁾	50%이내	50%이내 ²⁾	60%이내 ¹⁾	60%이내 ^{2) 4)}
3년초과 ~ 10년이하	60%~	40%~	60%~	60%~	60%~ ⁴⁾	60%~ ⁴⁾
10년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	60%~	40%~	60%~	60%~ ⁴⁾	60%~ ⁴⁾
	담보가액 6억원이내	60%~	60%~	60%~	60%~ ⁴⁾	60%~ ⁴⁾
10년이상 분할상환 ³⁾	70%~	70%~	70%~	70%~	70%~	70%~

주: 1)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제외한 주택을 말함

2) 아파트 중도금대출 및 이주비대출의 경우 만기 구분없이 해당비율 적용

3) 1년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 유동화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 총부채상환비율 40% 이하)을 말함

4) 2008.6.10.까지 분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도권외지역의 주택으로서 2008.6.11.부터 2009.6.30.까지 신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경우에는 70% 이내에서 적용. 이 경우 금융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미분양주택확인서의 사본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분양가 10%포인트 이상 인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의 자구노력확인서 사본을 차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동 인화된 분양가액(납부조건 완화의 경우 포함)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종전 차주의 대출을 인수한 경우에는 종전 차주에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이 중액 또는 금융기관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총부채상환비율(DTI)

3. (적용대상 및 기준) 금융기관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가.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다만,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나.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다만,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 투기지역 및 수도권외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되는 당해 아파트 신규 취득 목적의 가계대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대출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소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3개월이 경과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다만, 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조합원명부 변경신청일 또는 지분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

(3)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5천만원 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

(나) 5천만원 초과 대출로서 긴급한 사업자금 마련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여신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은 대출

(다)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4) 취득후 3개월이 경과한 주택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받게 되는 이주비 및 추가분담금 대출

제4장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

4.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제한) 금융기관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규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기존의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 동 아파트를 담보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추가대출(후순위담보)의 경우

나.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차주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 매입계약과 관련하여 신규 대출 취급후(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아파트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2년 이내에 기존 주거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기존 대출의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특약이 체결되는 경우 <2008.11.7. 개정>

5.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제한) 금융기관은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가계자금대출 기준)이 2건 이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시 최초로 만기도래하는

대출부터 차례대로 회수하여 동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을 1건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만기 도래시 1년 이내에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차주가 특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유예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대출채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나. 2건의 대출 중 기존 아파트담보대출의 만기가 중도금 대출(이주비 대출을 포함한다)의 만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대출의 만기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유예기간(1년) 내에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후 중도금대출 만기 도래시에도 유예기간(1년) 내에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다. 보유 아파트가 모두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보유 아파트중 전매제한이 먼저 종료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고 유예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추가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차주)과 다른 주소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자녀·배우자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다만 총 1건에 한한다.

(2) 법원의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화재·천재지변에 의한 주택의 멸실, 공동상속인 및 공동지분권자의 매각반대 등으로 인해 보유주택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마. 제4호나목에 의한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대출 및 기존주택(처분대상)의 담보대출의 경우

6.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담보취득 제한)

가. 금융기관은 대출취급일 현재 미성년자(기혼자 제외)에 대하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에서의 대출 또는 미성년자가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금융기관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제3자 담보제공의 경우 포함)의 만기 도래시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다. 대출 취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만기 도래시(1년 유예기간 종료시를 포함한다)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7.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 제한) 금융기관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2008.11.7. 개정>
8. (주택담보대출 심사의 원칙)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의한 전반적인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붙임 2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

I.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심사 및 리스크관리 기본원칙”

(여신심사 및 승인)

1. 주택담보대출의 심사·승인시에는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 전반적인 신용도, 담보를 비롯한 2차 상환자원 등 차주의 제반 리스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특히 소득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한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동금리조건 대출의 경우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원금상환 유예형 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개시시점의 상환금액 증가가 차주의 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주택담보대출은 가급적 소득 등 차주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환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 및 활용)

5. 금융기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부채상환비율, 소득대비 부채비율 등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그 적용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6. 금리 유형, 상환방식, 소득의 객관적인 입증여부 등 리스크 수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의 적용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7.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를 활용함에 있어 차주, 담보 및 대출의 성격 등 유형*에 따라 리스크 특성에 상응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① 자영업자, 영세창업자, 비정규직, 사회 초년생, 고령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일정가액 이하 담보대출, 건당 일정금액 이하 대출 등

(소득의 신고 · 입증 및 확인)

8. 소득 신고 및 입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차주에게 있으며, 금융기관은 차주 소득정보의 신빙성을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은 차주의 소득, 자산보유 수준 등에 대한 입증 및 확인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 · 운영하여야 하며, 소득 확인 및 검증 결과는 대출서류와 함께 보관 · 유지 하여야 한다.

9. 중병 등에 의한 객관적 확인이 곤란한 신고 소득을 기초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소득정보의 적정성 여부를 최대한 검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 운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대출한도, 금리, 상환방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10.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 및 대출의 특성 등 고려 가능한 포트폴리오별로 그 취급 규모 및 집중도와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II.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 및 기준 모범사례(예시)”

1.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 및 기준

가. 총부채상환비율(DTI)

□ 주요 사례

구 분			산 식	적용기준	
한국	현행 DTI 규제 ¹⁾		(당해 주택담보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연이자 상환추정액)/ 연소득	≤ 40%	
	주택금융공사 보급자리론				
미국	Fannie Mae Freddie Mac		모든 부채의 매월 원리금 상환액 / 월소득	≤ 36% ⁴⁾	
	은 행 ²⁾	매각조건부대출 (Agency) ³⁾		≤ 40% ⁴⁾	
		Alt-A ⁵⁾		거치식 변동금리	≤ 45%
				변동금리	≤ 50%
일본	연소득 300만엔 미만		"	≤ 25%	
	300 ~ 400만엔			≤ 30%	
	400만엔 이상			≤ 35%	
홍 콩			"	≤ 60%	

주 1) 투기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신규 아파트 구입시 적용

2) 은행 모기지의 경우 중병소득 기준이며, 신고소득 기준시 5% 차감 적용

3) Fannie Mae 등에 매각하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모기지

4) 한도 기준이 아닌 가이드라인임(일정요건 구비시 동 가이드라인 초과
대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 리스크 관리 실시)

5) 중간정도의 신용등급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 비표준형 모기지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통계를 기초로 한 試算

* 통계청의 '06.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수지자료 기준

- 평균 월소득(A) : 3,423(천원)
- 생계비 등 주거비 이외 평균 월소비지출(B) : 2,077(천원)
- 주거비 등 월 지출가능금액 (C=A-B) : 1,346(천원)

→ 대출원리금 재원 가능 최대규모 (C/A) : 39.3(%)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연소득 41백만원 기준으로 DTI 40% 적용시
154백만원 대출 가능(만기 15년, 금리 연 6.8% 가정)

나. 소득대비 부채비율

□ 주요 사례

구 분	산 식	적용기준
영 국	소득배수(income multiples) = 대출금액 / 연소득	표준 ¹⁾ : 3~4.5 배 특별 ²⁾ : 3.25~6 배
한 국	부채비율(%) = 총대출금액/연소득	부채비율 250% 초과대출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50%→60%)

주 1) 일반적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기준(실제 소득배수 평균은 3.6배 수준)

2) 신용도가 매우 우수한 차주에게 적용되는 기준

□ 소득대비 부채비율과 DTI와의 관계

- DTI 40% = 소득대비 부채비율 375%
(만기 15년, 금리 연 6.8% 전제)

다. 기타 고려 요소

- 금융기관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등급(CSS), 외부 신용평가
(CB)등급, 금융자산 등 기타 상환재원 보유현황 등

2. 주요 사안별 적용 예

가. 자영업자*

- *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은 기본적으로 기업대출로서 DTI, LTV 규제를 받지 않고 취급 가능
(’06.11.~12월중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중 사업자금 용도는 3%대 수준)

□ 소득입증 : 다음의 방법 중 차주 희망에 따라 선택 적용하
되 실제 소득수준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

-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빙되는 소득

-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공공기관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기신고 소득* (은행이 검증)

- * 다만, 선진국의 경우 자기신고소득(stated income)을 기준으로 하는 경
우 DTI 5% 차감 적용

□ 검증 : 다음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검증

- 대출 심사자의 논리적·전문적 판단에 의한 방법

- * 업체의 업력·위치·규모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이나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내역 등 현금흐름 입증자료 등을 활용

- 국세청 등 공공 기관의 관련 통계를 이용하는 방법

- *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시 표준소득월액표, 통계청 고시 지역별·업종별 매
출영업이익률 통계 또는 국세청 고시 업종별 경비율 등을 이용한 추정

-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방법 등

- * 은행 자체 금융거래 기록 등 보유정보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통계적 모형을 개발 활용(현재 카드회사에서 유사모형 이용중)

나. 영세창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

☐ 소득 입증·검증 등의 절차는 자영업자와 같음

- 다만, 주택담보 외에 소득입증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 여신심사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도시가계 최저생계비에 의한 소득추정 등도 고려 가능

※ 최저생계비(4인기준 월 120만원) 기준 DTI 40% 적용시 대출가능금액은 54백만원 수준(만기 15년, 금리 연 6.8% 가정)

☐ 차주의 상환의지를 담은 확약서* 징구 등 자금용도 및 자금소요규모 심사 철저

* 담보자산의 처분 등에 대한 채무상환계획 포함

다. 소득 변동 가능성이 큰 차주(사회초년자, 고령자 등)

☐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심사·승인 기준에 따라 취급

- 다만, 소득 또는 고용의 안정성과 함께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쳐 향후 소득의 변동 가능성을 추가 감안 가능

라. 국민주택규모로서 일정가액 이하 담보대출 또는 건당 일정금액 이하인 대출

☐ 일반적인 심사·승인 기준에 따라 취급

- 다만, 금융기관이 당해 포트폴리오를 低 리스크 群으로 인정하는 경우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일정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

(예) 국민주택규모·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 대출금액 1억원 이하 대출인 경우 DTI비율 20%p 내외 상향 적용

III. 적용 방법 및 시기

□ 채무상환능력에 의한 여신심사체계 구축은 감독당국의 직접규제가 아닌 금융기관의 자율 추진사항

○ “기본원칙” 및 “모범사례”의 금융권 공유

○ 유형별 세부 적용사례는 은행연합회(여신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자율 마련

□ 국내 금융경제 여건, 소비자 수용능력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우선 일부 지역 및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07. 3. 2. 시행)

○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담보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 다만 일정규모(국민주택규모 · 3억원이하) 주택담보대출 또는 일정금액범위(대출금액 5천만원~1억원) 대출에 대해서는 DTI비율 20%p 내외 상향 등 완화 적용

- 일정금액(5천만원)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 배제

□ 비투기지역, 수도권이외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이외 주택 등에의 확대 적용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로드맵(Road Map)을 마련하여 추진

※ 비은행권으로의 확대여부 및 시기는 은행권 시행 결과, 비은행권의 수용능력,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

<참고 1>

채무상환능력 평가체계 개선 전후 비교

	현 행	개 선 후	
		최초 도입시	도입완료후
<input type="checkbox"/> DTI규제 대상 대출 ○ 적용대상 ○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 ○ 대출한도 및 효과	(감독당국의 직접 규제) -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6억원 초과아파트 신규구입자금 -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기혼차주 또는 만30세미만 미혼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 총부채상환비율(DTI) - DTI 40% 초과 금지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반 주택담보대출 ○ 적용대상 ○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 ○ 대출한도 및 효과 ○ 심사결과 활용	- 별도의 채무상환능력 지표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 개인신용평가등급(CSS)을 산정, 대출여부에 활용 (외부CB등급 자료 부분적 활용)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은행자율기준) -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담보 신규대출 (단, 일정규모 이하 담보대출 및 일정 금액 이하 대출은 완화 가능) - 지역, 주택가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담보 대출에 채무상환능력 평가 적용 - 총부채상환비율(DTI) - 소득대비 부채비율 - 자체 개인신용평가 등급(CSS) - 외부 CB평가자료 - 금융자산 등 기타 상환재원 - 절대적 단일기준이 아닌 다양한 채무상환능력 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율 운용 - 대출한도 산정, 대출금리 차등화 등 대출조건 결정 - 은행 자체 리스크관리에 활용	

<참고 2>

채무상환능력 평가체계 개선 전후 상세 비교

< 직접규제 >


구분		현행	개선후
<DTI>	적용지역 및 주택형태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현행과 같음)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대출용도	신규구입자금	
	대출한도	DTI 40% 이내	

< 자율적용 >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대상)

구분					현행	개선후*
<DTI>						
주택 가격	6 억 원 초 과	기존주택 담보 신규대출	대출 금액	1억초과	-	40% 수준 내외
				5천만~ 1억		60% 이내
				5천만이하		(적용 배제)
	3억원 ~ 6억원**		대출 금액	1억초과	-	40% 수준 내외
				5천만~ 1억	-	60% 이내
				5천만이하	-	(적용 배제)
	** 3 억 원	국민주택 규모초과	대출 금액	1억초과	-	40% 수준 내외
				5천만~ 1억	-	60% 이내
				5천만이하	-	(적용 배제)
	이 하	국민주택 규모이하	대출 금액	1억초과	-	60% 이내
				5천만~ 1억	-	60% 이내
				5천만이하	-	(적용 배제)
<소득대비 부채비율>					-	400% 수준 내외

*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은행이 자율 적용

** 신규구입자금 및 기존주택담보 신규대출 대상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h2 style="text-align: center;">배포시부터 보도 가능</h2>
---	---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가계신용전담반		
책 임 자	김영대 국장(3145-8020)	담 당 자	최인호 팀장 (3145-8080)
배 포 일	2009. 7. 6.(월)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8~91) 총 3매

제 목 :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09.7.6. 은행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7.7.부터 시행토록 요청하였다.
-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제시한 내용에는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만, 서민·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번 LTV 강화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증가 등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 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예시) 1부. 끝.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예시)

가. 적용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 다만, 現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

나. LTV 강화 내용 : 60%이내 → 50%이내

-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 · 담보가액 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이내로 차등적용
- 만기 3년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이내로 차등적용

만기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포함)		주 택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3년이하		60%이내	50%이내	60%이내	50%이내
3년초과~10년이하		60%이내	50%이내	60%이내	좌동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	60%이내	50%이내	60%이내	좌동
	담보가액 6억원이내	60%이내	좌동	60%이내	좌동
10년 이상 분할상환*		70%이내	좌동	70%이내	좌동

* 1년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 유동화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 (거치기간 1년 이내, 총부채상환비율 40%이하)을 말함

다. 적용배제

- 5천만원 이하(전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

라. 시행시기 : '09.7.7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하여 적용

- 시행일 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여 '09.7.6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

《 참고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강화 적용대상 지역

구분	적용 지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역 <p><제외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역 <p><제외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 · 중면 · 장남면 · 백학면 · 왕징면 -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 · 서신면 제부리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역 <p><제외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 · 삼산면 · 서도면, 옹진군 대청면 · 백령면 · 연평면 · 북도면 · 자월면 · 덕적면 · 영흥면

〈붙임 4〉

“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h1>브리핑 자료</h1> <h2>배포시부터 보도 가능</h2>
---	--------------------------------------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가계신용전담반		
책임자	김영대 국장(3145-8020)	담당자	최인호 반장 (3145-8080)
배포일	2009. 9. 4.(금)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8~91) 총 3매

제 목 :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 ☐ '09.7.7일 시행된 수도권 LTV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 및 금융 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추가로 강화하여 9.7.부터 시행토록 요청하였음
- ☐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제시한 내용에는 현재 투기지역(강남 3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담고 있음
 - 다만, 서민·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번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

붙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추가 강화방안(예시) 1부. 끝.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추가 강화방안(예시)

가. 적용대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은행권 아파트 담보대출

* 다만, 現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접경·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

나. 리스크관리 강화 내용

☐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 비율을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

구 분		DTI 기본 비율		
담보가치	대출금액	현행	확대적용	
		투기지역	서울 (투기지역제외)	인천·경기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5천만원초과	40%	50%	60%
	5천만원이하	-	-	-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개월 경과)	1억원초과	40%	50%	60%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0%		
	5천만원이하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억원초과	40%	50%	60%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0%		
	5천만원이하	-		
3억원 이하	1억원초과	40%	50%	60%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0%		
	5천만원이하	-		
	국민주택 규모초과	50%	50%	60%
	국민주택 규모이내	-		

다. 적용배제 대상

- 5천만원 이하(전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라. 시행시기 : '09.9.7일 시행

- (경과적용) 시행일이전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여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

《 참고 》

주택담보대출 추가 리스크 강화 적용대상 지역

구분	적용 지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역 <p><제외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역 <p><제외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 · 중면 · 장남면 · 백학면 · 왕징면 -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 · 서신면 제부리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역 <p><제외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 · 삼산면 · 서도면, 옹진군 대청면 · 백령면 · 연평면 · 북도면 · 자월면 · 덕적면 · 영흥면

〈붙임 5〉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0. 8. 29(일) / 총 19매	
담당 부처	국토해양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책과장 진현환, 사무관 성호철 ☎ (02)2110-8231, 6217~6220 • 주택기금과장 김수상, 서기관 표용철 ☎ (02)2110-8238, 8242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정책팀장 이장로, 사무관 이재우 ☎ (02)2150-4650, 4652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제과장 김종열, 사무관 최영전 ☎ (02)2150-4210, 4211 • 금융정책과장 도규상, 사무관 홍성기 ☎ (02)2156-9710, 9715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금융과장 김학수, 사무관 송병관 ☎ (02)2156-9750, 9755 • 지방세운영과장 전동훈, 사무관 서정훈 ☎ (02)2100-3938, 3946
보 도 일 시		2010년 8월 30(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방송은 8.29(일) 10:00 이후 보도가능	

주택거래 정상화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 정부는 8.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지난 7.21일 관계장관 회의 이후 입주실태와 대출 에로
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당정협의(8.28)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추진배경 】

-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 또한,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고 미입주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주택 관련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대책의 주요내용 】

- 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세계 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년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득·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③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다.

- 또한,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건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주요내용 〉

대 책	주 요 내 용
①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 거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11.3월말까지 시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11.3월말까지 시행) ·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구입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11.3월말까지 시행) ·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범위확대(5천만원→1억원)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시킨 2년 연장 · 취·등록세 감면시킨 1년 연장 추진 ·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임대호수 5→3호 이상, 임대기간 10→7년 이상 등)
②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③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예약 물량 축소(80→50% 이하) 및 예약시기 탄력조정 · 민영주택 공급비율(25%) 상향조정, 85㎡ 이하도 건설
④ 건실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BO·CLO 순차발행 (3조원 규모) ·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 기대효과 】

-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서민·중산층의 거래·임주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집값 안정기에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가을 이사철 전세금 마련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붙임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10. 8. 29.

기획재정부 · 국토해양부 · 금융위원회

|| 목 차 ||

I.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II. 대응방안	6
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6
2.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9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10
4.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11
III. 추진계획	12

I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주택거래 및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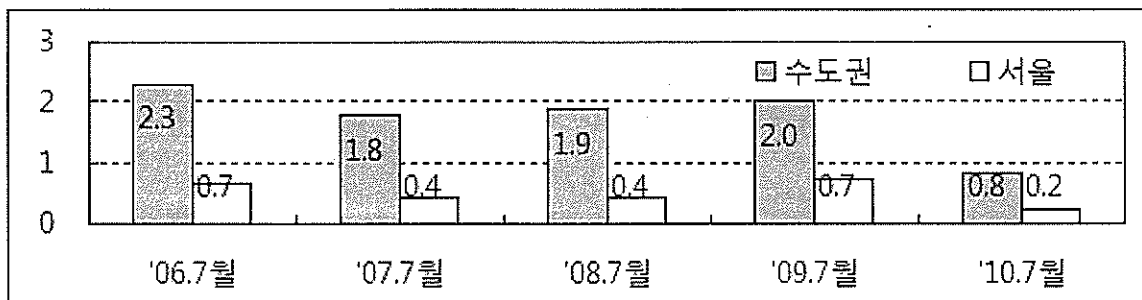
□ 아파트 거래가 수도권 중심으로 '09.10월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감소폭이 확대 (다만, 지방은 예년 수준을 유지)

○ 6~7월에는 수도권·서울 모두 예년대비 50% 이상 감소하여 금융위기('09.1월) 이후 최저 수준

< 아파트 거래량 증감률 추이(% , '06~'09년 동월평균비) >

구 분	'10.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 국	18.3	7.7	-0.6	-4.7	-29.2	-28.9	-20.2
수도권	-14.3	-26.2	-35.5	-46.2	-59.6	-60.7	-55.4
(서울)	(-1.9)	(-13.5)	(-35.5)	(-54.9)	(-66.7)	(-65.2)	(-58.8)
지 방	41.5	34.4	30.1	33.6	0.4	-0.5	10.4

< 아파트 거래 건수(만건) >



□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54.4%) 보다 강북권(-60.8%)이 큰 폭으로 감소('10.1~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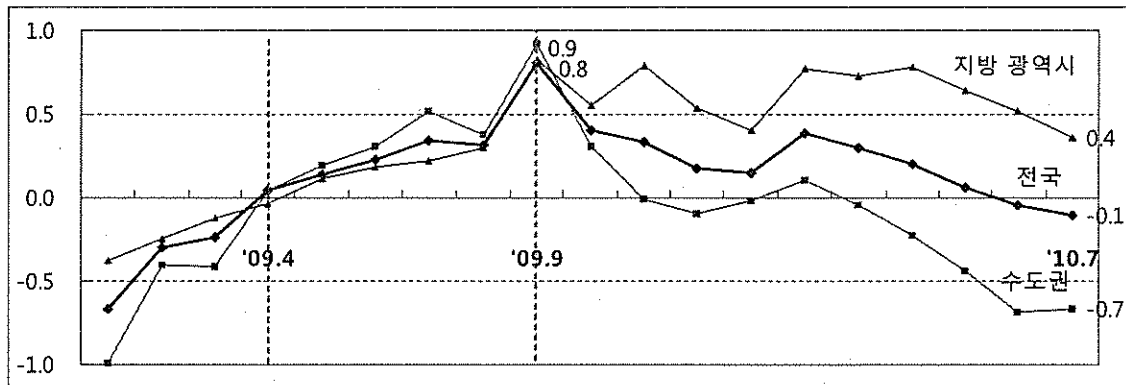
○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63.4%) 등 서울 인접지역의 거래가 크게 위축

* 7월에 서울 25개구중 20개, 경기 31개 시군중 20개, 인천 8개구중 6개 지역에서 50% 이상 감소

□ 주택가격은 '09.9월 이후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수도권은 3월 중순 이후 25주 연속 하락세 지속

* 지방의 경우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

<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



□ '05~'06년중 크게 상승했던 과천·분당 등은 고점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체감하락률이 높은 상황

○ 최근 신규입주가 집중된 고양·용인 등도 하락폭이 커지면서 분양당시 가격보다 시세가 낮은 단지도 발생

*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시세가 분양가보다 5천만원~1억원 정도 하락

<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

구분	수도권	서울	강남	강북	강남3구 재건축	과천	분당	고양	용인
'10.3~7월중	-2.0	-1.6	-1.6	-1.7	-6.5	-6.0	-3.5	-4.6	-3.2
고점대비	-3.8	-1.5	-1.6	-2.5	-9.2	-11.4	-15.6	-8.3	-14.7

○ 이에 따라 신규주택 시장도 위축되어 대부분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저조하고, 분양물량**도 감소

* 1~7월 민간분양 130개 단지중 청약미달 94개(수도권 46, 지방 48)

** 수도권 7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최근 5년 동월평균 대비 39% 감소

○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 대법원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

구분	'10.1월	3월	5월	7월
서울	84.0	83.3	79.6	78.4
경기	82.2	81.1	75.8	74.1

□ 최근 주택가격 안정세는 그간 상승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으로 평가

○ 가격 안정은 금년 입주물량 증가, 집값하락 기대심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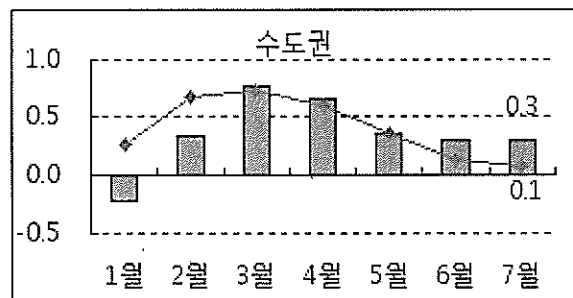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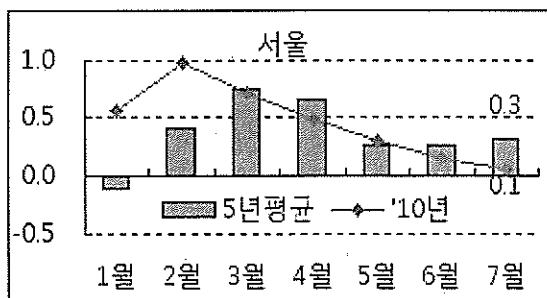
○ 수급여건*을 감안할 때,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 '10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17.5만호)은 '07~'09년 평균의 116% 수준이며, 이중 54%가 하반기에 입주 예정

□ 전셋값은 2~3월중 상승하다가 4월 이후 안정화되고 있음

○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수요 증가 예상

* 입주물량이 풍부한 은평(6~8월중 -2.6%), 파주(-2.3%), 고양(-1.9%)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 하락현상도 발생



2. 주택건설 및 입주 동향

- 주택건설(인허가)은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던 작년보다는 증가했으나, 예년보다 저조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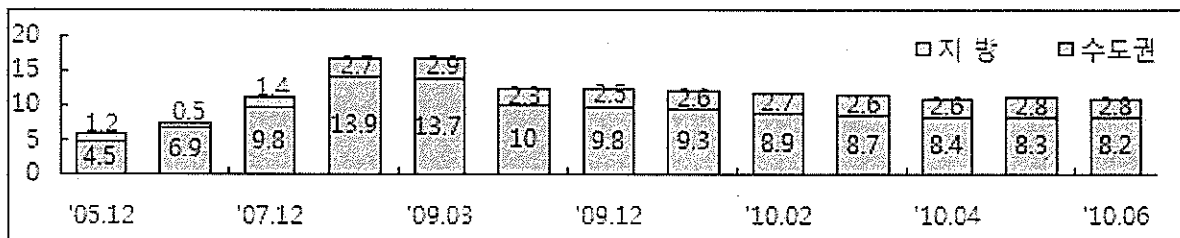
<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 (단위 : 만호) >

구 분	'05~'09년 평균		'09년		'10년		
	연간	1~7월	연간	1~7월	1~7월	예년동기비	전년동기비
실 적	44.9	18.2	38.2	12.2	12.7	-30.2%	4.2%

- 미분양은 장기평균(7~8만호) 보다 많은 11만호로 적체 지속

- 특히, 준공후(47%)와 중대형(60%) 비중이 높아 시장기능을 통한 해소에 한계

< 미분양 아파트 현황 (단위 : 만호) >



- 신규아파트 입주율은 거래위축에 따른 기존주택 매각에로 등으로 평균 40% 수준에 불과

- 특히, 지방과 중소기업체 아파트의 입주율이 더욱 낮은 상황

< 입주실태 조사결과(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설사) >

구 분	단지	총세대	분양세대(A)	입주세대(B)	입주율(B/A)
계	76	31,525	25,755	10,451	40.6%
지역별	수도권	43	15,268	5,941	43.7%
	지 방	33	16,257	4,510	37.1%
업체 규모별	대형업체	23	13,123	6,956	63.4%
	중소업체	53	18,402	3,495	23.7%

[입주지정 종료일 기준]

- 업체들은 선입주-잔금납부 유예, 입주기간 연장(2→6개월), 연체이자 감면 등 입주촉진을 위한 자구노력 시행중

3. 평 가

- 집값 안정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실수요 중심의 시장재편 등 긍정적 효과 발생
- 그러나, 거래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입주예정자와 기존주택 처분희망자를 중심으로 입주·거래불편이 심화
 -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도 거래가 안 되어 이사 곤란
 - 신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도 기존주택 거래 위축으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로 입주지연 증가
 - 대출을 받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한 가구도 기존주택 매도가 안 되어 상당한 금융비용 부담 발생
- 거래침체에 따른 미입주 증가 등으로 주택업체의 어려움 가중
 -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하도급·자재업체 등도 동반 위축되고 있으며,
 - 이사·중개·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종사 업종도 침체되면서 서민경제 위축
 - * '10.상반기 경기도 폐업 중개업소는 3,833개(경기전체 등록업소의 15%)
 - * '10.6월말 서울 이삿짐업체는 969개로 전년동월비 6% 감소
 - * '10.5월 기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건수 전년동월비 25% 감소

⇒ 최근의 주택시장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마련이 시급

Ⅱ

대응방안

- ◇ 현재의 집값 안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
- ◇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보완적·한시적 대책 마련
- ◇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강화

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① 주택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총 1조원)

- ①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 구입자금 지원요건 완화 (4.23 대책 보완)

- (적용대상 기존주택)

·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 소유주택 →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입주일)의 소유주택도 포함

· 85㎡ 이하, 6억원 이하 → 85㎡ 이하 (금액제한 폐지)

- (구입자 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시행기간) '10년말까지 → '11.3월말까지

* 지원조건은 현행 유지

(호당 2억원 한도, 연 5.2%, 20년 상환, 투기지역 제외)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10.9)

②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기금에서 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 (신설)

- (지원대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 (지원조건)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 적용
- (지원시기) '11.3월말까지 한시 지원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10.9)

②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투기지역 제외)

- (지원대상)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
* 주택취득후 2년 이내 매도조건 부과
- (대상주택)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 (적용기한) '11.3월말까지

※ LTV(담보인정비율)는 현행 유지

⇒ 금융회사 내규 개정('10.9)

②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금액
1억원까지 소득증빙을 면제 (현재 5천만원까지 면제)

⇒ 감독규정 개정, 금융회사 내규 개정('10.9~10)

③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일반세율 6~35%)의 일몰시한('10년말 종료)을 2년 연장

* 다주택자 중과세율 : 2주택 50%, 3주택 60%

※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 연장

- ②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 완화

< 수도권(서울제외) 매입임대 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

구 분	현 행	확 대
임대호수	5호 이상	3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 주택면적 기준 85㎡ 이하는 현행 유지

- ③ 취득·등록세 50% 감면 시한('10년말 종료)을 1년 연장 추진

-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 등에 대해서는 9월중 별도방안 마련 예정 (행안부)

* '06.9~'10.12월까지 취득세 2→1%, 등록세 2→1%로 감면중

2.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① 주택기금의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4,900 → 5,600만원)
 -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5,600 → 6,300만원)
 - * (대상) 60㎡이하, 보증금 8천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
 - 서민들의 전세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0.5→0.25%p)
 - * (대상) 85㎡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6천만원
-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10.9)

②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 * (현행) 전세금의 70%와 연간인정소득의 1~2.5배중 적은 금액
 - (개선)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중 적은 금액
 - 보증시 소득입증이 어려운 서민층의 소득입증방법 다양화
 - * (현행)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등 소득증빙자료로 확인
 - (개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환산한 방식 등 추가
-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10.10)
- 주신보 보증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금리실태 점검 등 감독 강화
-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약관 개정 등('10.9~10)

③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 임차인의 이사 등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금 부족자금 대출에 주신보가 보증

* (보증대상) 9억원 이하 주택 임대인, (보증한도) 주택당 5천만원, (보증기한) 2년, 연장시 최장 4년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10.10)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12년까지 수도권 60만호, 지방 14만호)대로 사업승인 등 추진

- 다만, 금년 하반기 지정예정인 4차 지구는 3차지구(광명시흥) 이월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구수 축소 검토

* (1~3차) 각 4~6개 지구 지정 → (4차) 2~3개 지구수준 지정

- 현재 주택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줄이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 조정

- 3차 지구 사전예약('10.11) 물량은 80 → 50% 이하로 축소하고, 4차 지구 사전예약('11.상) 물량·시기는 추후 조정

-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현행 25%)은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

- 민영주택도 수요·지구여건 등을 감안, 85㎡ 이하 건설 허용

4.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① P-CBO(또는 CLO)를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총 3조원규모의 P-CBO · CLO*(건설업 비중 50%**) 발행 추진
 - '10년 하반기부터 발행하되 1차로 5천억 규모를 발행하고, 수요를 보아 가며 추가발행 추진
- * Primary Collateralized Bond · Loan Obligations : 건설사 및 기타 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하여 신보 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
- ** 건설업외에 비건설업을 50% 편입하여 업종편중에 따른 위험 완화
- 후순위증권은 발행기업, 건설관련 기관 · 단체, 신용보증기금이 순차적으로 부담

② 미분양주택 매입조건 완화 (4.23 대책 보완)

-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과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 매입대상 : 공정률 50 → 30% 이상 (지방 미분양주택)
 - * 하반기 매입실적을 보아가며 수도권(서울제외)으로 확대여부 검토
 - 매입한도 : 업체당 1,500 → 2,000억원
- ⇒ 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을 거쳐 차기 매입시부터 적용
- 미분양 리츠 · 펀드 매입대상을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인 미분양까지 확대하고,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

Ⅲ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①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기금 융자요건 완화(4.23 보완)	기금운용계획 변경	'10.9	국토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10.9	국토부
· 주택 실수요자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감독규정, 금융회사 내규개정 등	'10.9~10	금융위 금감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 연장	소득세법 개정	'10.하	재정부
·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	'10.10	재정부
·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	지방세법 개정	'10.하	행안부
②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10.9	국토부
· 주신보 전세자금 대출보증 지원 확대	주택금융공사 내규 등 개정	'10.9~10	금융위 금감원
·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	'10.10	금융위
③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 사전예약 물량·시기 조정 등 공급 보완		'10.하~	국토부
④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P-CBO 발행 지원	금융위지침 통보	'10.9~	금융위
·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4.23 보완)	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	'10.9~	국토부
·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4.23 보완)		'10.9~	국토부

21. '10년 6월말 기준, 각 은행이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기관명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매출규모 등 상세기제)	지원실적	
			업체수	지원금액 (억원)
기업은행 ¹⁾	여신 지원	상시 근로자수 300명~1천명 미만 또는 매출액 1천억~1조 미만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범주 초과 기업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이 아닐 것 ²⁾	565	40,267
정책금융공사	“중소·중견기업 지원용” 특별 On-lending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6~11등급, 직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설립 후 3년경과 중견기업 ³⁾	2	200
	중견기업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2	143
	중견기업 지원 전용펀드	중견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회사채 인수를 위한 펀드	8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6,500억원을 출자할 예정	
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보증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고 30대 주채무계열에 속하지 않는 기업	88	9,380
기술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⁴⁾	상시종업원 1천명이하이고 총자산 1천억원이하 기업	12	217

1) '10. 7월 현재 지원현황, 나머지는 '10. 6월 현재 지원 현황

2)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분류가 없음, 따라서 중견기업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3)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졸업한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집단 소속기업 제외]중 종업원수 1,0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조원 이하

4)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졸업이후에도 상시근로자 1천명, 총자산 1천억원을 초과하기 전까지 기술신용보증 계속지원 가능

22.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내용
- 시장효율화위원회('09.12.22) 회의록

1.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가. 거래수수료 체계 개선(안)

☐ 거래수수료 체계 변경

- KRX의 거래서비스와 관련하여 업무단계상 분리 가능한 서비스는 청산결제 서비스임
- 현행 거래수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 징수항목을 청산결제수수료와 접속(프로세스)수수료로 세분화 필요

☐ 수수료 징수방식

- 주요 해외거래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래대금기준 수수료 징수체계를 근간으로 유지 필요

☐ 기타 거래수수료 징수방법 변경안

- 현물·파생상품시장 징수방식 「정률제」로 일원화
- 파생상품회원의 자기/수탁거래간 차등징수 폐지

나. 적정 거래수수료율 및 거래수수료 증가시 처리방안

☐ 적정 거래수수료율

- '05~'07년 증권관련업 영업이익률(영업이익/영업수익)을 적용한 최저보장 영업수익을 근거로 추정할 경우 10%이하 가능성 제시
- 현물시장은 17개 거래소중 6번째로 낮고 KOSPI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은 세계 최저수준

☐ 거래수수료 증가시 처리방안

- 일정수준 이상의 영업수익 초과분 중 일부를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
- 해외 주요거래소와 같이 배당 또는 자사주 취득을 활용하여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도 모색

2.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내용

☐ 주주·회원사 기획담당임원회의 : 2회('09.10.23, 11.30)

- 제1회 ('09.10.23) : 수수료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 추진 경과와 연구용역 결과 설명
- 제2회 ('09.11.30) : KRX의 구체적인 거래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설명

☐ 회원사 실무자대상 의견수렴 ('09.11.11 ~ 11.13)

3. 시장효율화위원회('09. 12. 22) 회의록 : 별첨 참조

〈별첨〉

'09-2차

시 장 효 율 화 위 원 회 의 사 록

- 일 시 : 2009. 12. 22(화) 10:00
- 장 소 : 금융투자협회 22층 회의실

시장효율화위원회

'09-2차 시장효율화위원회 개요

1. 일 시 : 2009. 12. 22(화) 10:00

2. 장 소 : 금융투자협회 22층 회의실

3. 참석자 명단

위 원 장	서울대	조재호 교수
위 원	법무법인 태평양	서동우 변호사
	삼정회계법인	서지희 상무
	성균관대	정태명 교수
	단국대	오재인 교수
	한양대	김명직 교수

금 융 위 원 회	이현철 과장
	전요섭 서기관

유관기관	한국거래소	최홍식 이사
		김철모 팀장
	한국예탁결제원	최주섭 본부장
		박문규 파트장
		최정철 파트장
		윤관식 파트장

조재호 (위원장) 10:00에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 2009년도 제2차 시장효율화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심 의 안 건

제 1 호 의 안 :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체계 개편(안)

조재호 (위원장) 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한국거래소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다.

최홍식 (거래소)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하여 설명하다.
(안건 별첨자료 설명)

조재호 (위원장) 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김명직 (위원) 회원사들이 거래수수료 80%, 청산결제수수료 10%, 접속수수료 10%의 원가배분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최홍식 (거래소) 수수료 개편이 회원사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원사 기획담당 임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동 협의회를 통해 수수료 개편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현재 체계개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다만 접속수수료와 관련하여 소형사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본 프로세스 이용료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하하였다. 따라서 불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조재호
(위원장) 이런 수수료 체계 개편이 결국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가?

최홍식
(거래소) 그렇게 생각한다.

오재인
(위원) 과거에 청산결제수수료 및 접속수수료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있는가?

최홍식
(거래소)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감사원에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수수료체계를 세분화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에 따라 금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 하지만 거래소 비용을 특정 수수료와 대응시키고 세분화시키는 것이 너무 복잡하였다.
이번에는 원가배분,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 방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서지희
(위원) 거래수수료 수입 감축액 550억원은 세분화된 수수료 중에서 거래수수료 인하만을 통해서 감소된 금액인가?

최홍식
(거래소) 아니다.
거래수수료 부분에서 16%, 프로세스이용료 부분에서 4% 인하하여 총 20%가 인하 되었다.
이를 종합 감안했을 때 수수료가 55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지희
(위원) 거래수수료 인하 시 재무현황은 거래수수료만이 아닌 개편된 세가지 수수료 모두를 반영하여 나온 수치인가?

최홍식
(거래소) 그렇다.

조재호 (위원장) 수수료 중 제일 많은 부분이 주식, 선물, 옵션 중 어떤 것인가?

최홍식 (거래소) 통상 거래수수료 중 파생상품 50%, 현물 50% 정도이다.
유가증권부분이 코스닥 부분의 2~2.5배 정도이며, 상품별로는 코스피 200 옵션이 제일 많다.

서동우 (위원) 기타 체계개편 부문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최홍식 (거래소) 일단 수수료 체계를 이용자 입장에서 간편화 하였다.

서동우 (위원) 금액의 변동 부분은 예측해 보았는가?

최홍식 (거래소) 이 부분은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금액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김명직 (위원) 수수료 인하 효과가 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회원사 기획담당 이사 협의체에서 논의가 있었는가?

최홍식 (거래소) 그런 논의는 없었다. 협의체에서 일률적으로 논의를 하면 공정 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기존 거래소 수수료 인하 시의 사례를 보면 협의체 등을 통한 일괄적인 고객수수료 인하는 없었지만, 회원사 자율적으로 고객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태명 (위원) 거래소 수수료 20% 감축 시 연구보고서 등에 수수료 인하 20%가 증권사 및 일반투자자에게 수치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효과 등의 내용도 있는가?

최홍식 (거래소) 현재 그런 연구내용은 없다.
다만,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시 회원사들에게도 고객수수료 인하를 권고할 수는 있으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정태명 (위원) 단지 20% 인하해준다는 것보다 20% 인하가 투자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즉 거래소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증권사 및 일반투자자도 혜택을 보고 그리고 이러한 혜택이 다시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거래가 활성화 되는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최홍식 (거래소) 그런 연구는 없었다.

최주섭 (예탁원)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와 시장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정확한 일치 여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큰 영향은 있을 것이다.
증권회사의 수수료 인하가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에 증권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실제 준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태명 (위원) 증권회사의 수수료는 당연히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그 인하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최홍식 (거래소) 거래소 간 경쟁에 따른 현상을 보면, 첫째, 비용 절감 부분이 있고 둘째, 시스템 개선 부분이 있다.

비용이 낮아진다면 당연히 거래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원사 기획담당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도 거래소 등의 수수료가 낮아진다면 고객들이 회원사에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 대한 영향 부문은 사후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태명
(위원) 거래소 수수료 인하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수지전망 예측치에도 변동이 있을 것 같다. 수수료 인하가 거래증가를 가져온다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수지전망을 예측하여야 할 것 같다.

최홍식
(거래소) 시황이라는 것이 거래수수료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변동성도 너무 크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김명직
(위원) 일반제조업도 미래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거래소의 경우는 변수가 너무 많아 성과를 예상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조재호
(위원장) 시장의 탄력성에 대한 부문인 것 같다.

정태명
(위원) 선물이라는 것이 예측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래소가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치를 통해서 향후의 추정치까지 제시되면 더 좋을 것 같다.

김명직
(위원)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주로 배당이나 수수료 보다는 시장의 변동성 부분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20% 인하가 생각보다 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최홍식
(거래소) 명목적인 비용보다 암묵적인 비용 또한 많다. 따라서 20% 인하가 시장활성화에 생각보다 큰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나 거래소에서 시장에서의 비용인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정태명
(위원) 잉여금이 많다면 시스템 개선 등 서비스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오재인
(위원장) 최근에는 공기업의 수익성 또한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거래소도 공기업이므로 수익성을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 수수료 체계 변경 시 수익구조 변화에 대한 추정을 해보았는가?

최홍식
(거래소) 10년도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으나, 이 추정치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점, 거래소 수수료 인하에 따른 거래량 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보고서 상의 추정치보다는 당기순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수익성 감소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현철
(간사) 생각보다 개편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 단일체계의 거래수수료를 세분화했다는 부분에서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혜택이 시장 참여자 전체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탄력성이 크진 않겠지만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동우
(위원) 개편과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최홍식
(거래소) 그렇다.

서지희
(위원) 금융연구원 연구결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하율 이외에는 없는가?

최홍식
(거래소) 대부분 연구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다만, 감사원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원에서 제시한 인하율보다 10% 더 인하를 하였다.

조재호
(위원장) 추가 의견은 없는가?

조재호
(위원장) 추가의견이 없으므로 제1호 의안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제 2 호 의 안 :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체계 개편(안)

조재호
(위원장) 제2호 의안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다.

최주섭
(예탁원)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하여 설명하다.
(안건 별첨자료 설명)

조재호
(위원장) 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정태명
(위원) 시스템 개편 준비는 완료되었는가?

최주섭
(예탁원)

시스템 준비는 완료되었다. 공청회를 2개월 전에 개최하였고 공문 발송을 통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하였다.

정태명
(위원)

거래소의 시스템 준비는 어떠한가?

최홍식
(거래소)

실무적으로 준비 중이다. 거래소의 문제는 없고 회원사가 시스템을 변경해야하므로 일정에 맞춰 준비 중이다.

조재호
(위원장)

업무 원가에 차세대 시스템 구축으로 93억원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년 발생하는 것인가?

최주섭
(예탁원)

차세대 시스템 구축 비용이 약 400억원이며, 내용연수 기간 4년 감안 시 4년간 연 100억원씩 발생하는 것이다.

서동우
(위원)

안건 15페이지의 증권회사 수수료 경감액은 6개월간 감면액을 반영한 것인가?

최주섭
(예탁원)

그렇다.

정태명
(위원)

기존에 없었던 결제건수에 따른 수수료는(500원은) 왜 신설된 것인가?

최주섭
(예탁원)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이 원가에 연동하라는 것이었다.

모든 프로세스를 세분화 할 수 없으므로 대표적인 요인들을 세분화 하였고 결제건수를 대표적인 요인으로 본 것이다.

정태명
(위원)

결제건수 500원의 원가계산은 어떻게 한 것인가?

최주섭
(예탁원)

금융연구원에서 일단 1,00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당초 회계법인에서 단위원가당 수익 대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계산을 한 후 금융연구원에 제시하였고 금융연구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시한 원가이다. 연구용역 당시에 해외사례를 조사하였는데 외국 사례에 비해 낮은 수준인 1,000원을 제시하였는데 개편안에서 다시 50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태명
(위원)

예탁결제원은 독점적인 공기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해서 숫자 제시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결제건수 비용은 결제 시 들어가는 시스템 비용이므로 시스템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 같다.

오재인
(위원)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인하율이 20%로 같은데 사전 협의가 있었나?

최홍식
(거래소)

사전 협의를 했던 것은 아니고, 이번 개편안이 감사원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예탁원과 같이 20% 정도를 적정선으로 판단한 것 같다.

최주섭
(예탁원)

원가에서 적정 이익률을 구하는 방식에서 시작했고 그 적정이익율이 현행에서 20% 인하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것 같다.

조재호 (위원장) 수수료체계 개편이 2010년 1월 4일부터 전부 시행되는 것인가?

최주섭 (예탁원) 그렇다. 증권회사수수료는 2010년 1월 4일부터, 예탁수수료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현철 (간사) 체계 자체는 해외사례를 참고했기 때문에 진일보한 것 같다. 다만, 독점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 대비 인하된 부분만 논의되었지만 향후에는 위원회에서 현재 변경된 체계 및 요율 등이 적정한지, 방향은 옳은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조재호 (위원장) 추가 의견은 없는가?

조재호 (위원장)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제2호 안건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보 고 안 건

제 3, 4 호 의 안 :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및 채권ETF 거래수수료 징수면제 보고(안)

조재호 (위원장) 제3, 4호 의안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및 채권ETF 거래수수료 징수면제 보고(안)』에 대하여 한국거래소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다.

최홍식 (거래소) 한국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채권ETF 거래수수료 징수면제 보고(안) 대하여 설명하다.

(안건 별첨자료 설명)

조재호 (위원장) 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김명직 (위원) '09년 중 거래수수료 면제금액 약 600억원은 심의안건 상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 것인가?

최홍식 (거래소) 재무제표 상의 금액은 '09년 중 회비를 면제없이 징수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사실 징수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는 기업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기업공개 후에는 회원사와 주주와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면제가 어려울 수 있다.

정태명 (위원) 개인적으로 징수면제도 좋지만 대신에 증권회사의 보완시스템 지원을 해주고 증권시장의 안정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최홍식 (거래소) 비용지원 부분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무상 지원 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될 가능성도 있다.

조재호 (위원장) 추가적인 의견 없는가?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 계속하여 진행하다.

**제 5, 6 호 의 안 :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및 채권ETF
증권회사수수료 징수면제 보고(안)**

조재호 (위원장) 제5, 6호 의안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및 채권ETF 증권회사 수수료 징수면제 보고(안)』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다.

최주섭 (예탁원)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 및 채권ETF 증권회사 수수료 징수면제 보고(안) 대하여 설명하다.
(안건 별첨자료 설명)

조재호 (위원장) 위원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서동우 (위원) 이번 개편안은 증권회사만 혜택을 보고 은행과 보험권은 수수료가 오히려 인상되었는데, 불만은 없는가?

최주섭 (예탁원) 실제 금융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익 대비 원가 비율이 약 70%이며, 정확한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 30% 이상 추가 인상을 해야 한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현재 국내의 경우 은행, 보험사 등 일반예탁자에 대한 수수료가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외국계 은행권에서도 체계개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며, 신규
예탁부분부터 적용되므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상황을
살펴본 후 은행권 등에 큰 부담이 되면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명직
(위원)

채권 ETF 거래는 활성화 되고 있는가?

최홍식
(거래소)

아직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조재호
(위원장)

추가적인 의견 있는가?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므로 11:30에 2009년도 제2차 시장효율화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23.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 '06년 이후 월별, 증권회사별,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내역

☐ 한국거래소를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월별 증권회사 수수료 납부내역(한국거래소)>

(단위: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06년	325	269	248	248	242	231	184	191	196	173	195	189	2,691
07년	219	204	247	267	286	392	405	393	271	424	399	269	3,776
08년	352	230	299	300	250	234	288	213	206	0	0	0	2,372
09년	218	248	276	382	324	314	303	329	367	304	1	1	3,067
10년	272	215	241	269	302	260	268	272	-	-	-	-	2,099

☐ 보다 상세한 내용의 제출을 위해서는 개별 민간 금융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4.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 '06년 이후 월별, 증권회사별,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내역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월별 증권회사 수수료 납부내역(한국예탁결제원)>

(단위: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06년	104	78	69	71	67	53	45	48	53	50	56	53	748
07년	55	54	63	79	79	114	114	103	74	129	114	76	1,053
08년	86	65	72	87	65	57	64	47	49	0	0	0	592
09년	48	59	67	107	96	82	81	92	104	77	7	0	821
10년	55	43	50	55	55	49	55	52	-	-	-	-	414

☐ 보다 상세한 내용의 제출을 위해서는 개별 민간 금융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5.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수료 체계 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의견 개진한 내용

1.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의견 개진한 내용

- ☐ 수수료체계는 한국거래소의 재무구조 및 성장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자본시장 파급효과도 크므로, 정책 당국 및 회원사와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주식회사의 영리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주권익 등을 현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2.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위원회에 의견 개진한 내용

- ☐ 기본 개편방향
 - 감사원 요구사항과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수료체계 정립 및 시장참가자의 부담경감 추진
- ☐ 증권회사수수료 개편방향
 - 증권회사수수료에서 예탁수수료를 분리 징수하고, 징수 기준(거래대금)에 결제건수(건당 500원)를 추가
- ☐ 예탁수수료 개편방향
 - 예탁수수료 징수대상에 증권회사를 포함하고, 징수기준(보관잔량)에 계좌대체건수 추가, 부과구간·요율 조정

□ 대용증권관리수수료 개편방향

- 선물옵션거래의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상품별. 현행 수수료를 20% 인하

김 영 선 의원

1. 2010년도 8월 현재 업무보고 자료집

☐ 붙임참조

제28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 무 현 황

2010. 2. 18



금 융 위 원 회

</

I.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 설립

재정경제부(금융, 15과)	금융감독위원회(12과)	금융위원회(21과)
금융정책국(1국 1심의관 7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1국 2과) 금융정보분석원(1원 6과)	1관 1실 2국 12과	본부(1관 2국 1대변인 1심의관 15과)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 1원 6과)

* '09.8.24, 금융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1국 2팀) 설치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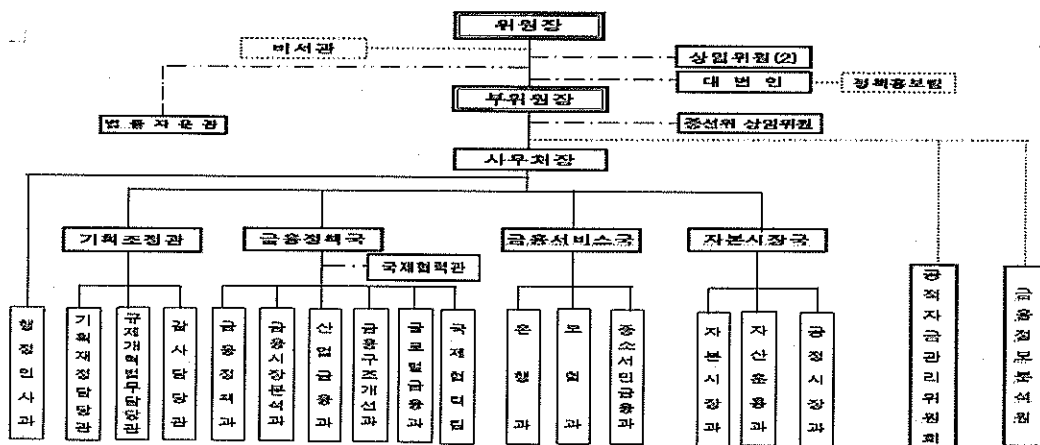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5과 2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 정 원 : 230명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계
합계	2	203	4	7	14	230
본부	2	145	4	-	13	164
금융정보분석원	-	46	-	7	1	54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	12	-	-	-	12

- 예 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122억원, 세출예산 3조 1,464억원(10년)

II. 최근 금융시장 동향

1 국제 금융시장 동향

◇ 국제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다가 EU의 그리스 사태 해결원칙 표명 등에 따라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

□ 국제 금융시장은 EU의 그리스 사태 해결원칙 표명(2.17일) 등을 계기로 최근 들어 변동성이 다소 축소

< 글로벌 주가와 변동성 지수 추이 >

	'08.12말	'09.9말	12말	'10.1말	2.4일	2.5일	2.16일
다우(미)	8,776	9,712	10,428	10,067	10,002	10,012	10,269
FTSE(영)	4,434	5,134	5,413	5,189	5,139	5,061	5,244
닛케이(일)	8,860	10,133	10,546	10,198	10,356	10,057	10,034
변동성지수(VIX)	40.00	25.61	21.68	24.62	26.08	26.11	22.25

○ 특히, 주요 경기지표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 확대되었던 불안심리도 최근 들어 다소 진정

* 美, 10.1월 실업률이 9.7%로 하락하며 09.8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09.12월 10.0%) 하였으나, 비농업부문 취업자는 2만명이 감소하는 등 당초 시장 전망치를 하회

□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 가치도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

* 달러인덱스(주요6개국 통화대비 달러화의 평균가치) :
('08.9말) 106.11 (12말) 90.65 ('09.6말) 96.34 (9말) 76.65 (12말) 77.86
('10.1말) 79.46 (2.4) 79.92 (2.5) 80.44 (2.15) 80.33 (2.16) 79.65

□ 글로벌 단기자금 사정은 주요국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월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

○ 과거 리먼 사태와 달리 아직 거래 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 확대 등 유동성 경색 우려는 크지 않음

* Libor금리(USD) : ('08.12말)1.43 ('09.9말)0.29 (12말)0.25 ('10.1말)0.25 (2.4)0.25 (2.5)0.25 (2.16)0.25
* TED 스프레드 : ('08.12말)1.35 ('09.9말)0.18 (12말)0.20 ('10.1말)0.18 (2.4)0.17 (2.5)0.16 (2.16)0.16

2 국내 금융시장 동향

◇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

□ (주식시장) 글로벌 증시 조정 등에 따라 국내 주가와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다소 진정

< 국내주가와 외국인 매매 동향 >

	'08.12월	'09.6월	9월	12월	'10.1말	2.4일	2.5일	2.17일
코스피	1,124	1,390	1,673	1,683	1,602	1,616	1,567	1,627
외국인매수(조원)	△5.3	10.8	14.8	5.6	0.7	0.1	△0.2	0.04

* 코스피 주가는 기간말 기준, 외국인 순매수는 기간 중 합계(2월은 당일까지 누계)

○ 주요국 대비 주가는 중국, 대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적음

<주요국 주가상승률 비교('10.2.16일 기준,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대만
10년 중	△4.9	△1.5	△4.9	△3.1	△7.9	△9.1
09년 이후	423	17.0	133	183	658	621

○ 외국인 투자도 여전히 금년 중 순매수 기조를 유지

<주요국 외국인 순매수 비교('10.2.16일 누적, 억불)>

	한국	대만	인도	인니
10년 중	△2.6	△24.9	△4.9	△0.1
09년 중	244.5	1562	191.1	65.6

○ 증시주변 자금의 경우 주식형 펀드가 순매수로 전환되는 등 수급여건도 다소 개선

<고객예탁금 및 거래대금 추이(기간누계, 조원)>

	'08.9월	'09.11월	12월	10.1월	2.4	2.12
고객예탁금(잔고)	9.0	12.3	11.8	13.1	12.6	12.0
주식형펀드 순유입	0.3	△0.7	△3.0	△1.8	0.4	0.8

○ 주가수익비율(PER)도 주요국 대비 양호

* 주요국 PER(2.3일 기준) : (韓)9.7 (日)19.9 (美)13.8 (中)12.6 (대만)10.3

□ **(채권시장)**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美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시중 금리는 대체로 안정적

○ CD 금리는 2월 정책금리 동결 등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

○ 외국인 채권투자도 금년 들어 순매수 기조가 지속

* 재정거래유인(통안채1y-CRS1y, bp) : (08말)275 (09말)127 (10.1말)159 (2.12일)150 (2.16일)149

< 채권시장 주요 금리 추이(%) >

	'08.12말	'09.9말	12말	'10.1말	2.4일	2.5일	2.16일
CD(91일)	3.93	2.75	2.86	2.88	2.88	2.88	2.88
국고채 3년(A)	3.41	4.39	4.41	4.27	4.26	4.22	4.12
외국인 채권순매수 (당월/누계, 조원)	△0.5	6.7	4.8	5.3	0.2	0.5	3.3

* 외국인 채권투자는 월중 합계('10.2월은 월중 당일까지 누계)

□ **(외환시장)**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된 원-달러 환율도 최근 다소 안정

○ 그 동안 환율의 하락세를 견인했던 외국인 투자와 무역수지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140원대로 하락

* 무역수지 동향(억불) : (09.1월)△37.7 (3월)28.0 (6월)65.2 (9월)41.7 (12월)30.9 (10.1월)△4.7

○ 엔화 대비 달러화의 상대적 약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엔-원 환율도 최근 1,260원대 수준

<주요 환율 추이>

	'08.12말	'09.9말	12말	'10.1말	2.4일	2.5일	2.17일
달러/원	1,259.5	1,178.0	1,164.5	1,161.8	1,150.9	1,169.9	1,142.2
달러/엔	90.65	89.77	93.08	90.26	90.91	89.55	90.30
100엔/원	1,389.4	1,312.2	1,251.1	1,287.2	1,266.0	1,306.4	1,264.9

참고 1

남유럽사태 관련 주요 동향 및 전망

- 유럽 재정위기 우려와 그리스 공기업 노조의 총파업 선언(24일)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폭 확대

* 10년 재정적자 규모 전망(GDP대비,%) : (그리스)△12.2 (포르투갈)△8.0 (스페인)△10.1 (이탈리아)△5.3

* 24일 주요국 증시 변화(전일비,%) : (그리스)△3.3 (포르투갈)△5.0 (스페인)△5.9 (이탈리아)△3.5 (美)△2.6 (英)△2.2 (獨)△1.8

* 25일 한국 증시 변화(전일비,%) : △3.0%

- 그리스·포르투갈 등 위기국가가 단기간 내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

- 과도한 재정·경상적자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신뢰 할 수 있는 재정긴축 방안 마련·추진

- 위기국가의 문제해결이 지연될 경우 위기가 여타 지역과 시장으로 확산되므로 EU 등의 지원을 통해 사태가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그리스 등 남유럽 4개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 등이 크지 않아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

* '09.9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남유럽 4개국에 대한 익스포저' 금액은 6.5억\$로 전체 대외 익스포저의 1.2%에 불과(그리스 3.8억\$, 스페인 0.6억\$, 이탈리아 1.9억\$, 포르투갈 0.2억\$)

- 향후 관련국 사태의 진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신용불안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

Ⅲ. 2010년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 기본방향과 6대 중점 추진과제 >

□ 2010년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은

- G-20 개최 의장국의 위상에 걸맞게 조기에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가운데
- 위기 이후 미래를 대비한 금융선진화 노력을 강화하여 따뜻하고 강한 선진 일류 금융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중점과제를 설정·추진

- 첫째, '기업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
- 둘째,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체질 개선 유도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
- 셋째, 위기 전개과정에서 노출된 금융시스템상의 취약 요인을 재정비하여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
- 넷째, 금융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
- 다섯째, 위기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하는 등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주력
- 여섯째, G-20의 의장국으로서 높아진 국가위상을 활용,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노력을 강화

1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 금융공기업과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투자자금 등을 원활히 공급하고, 녹색금융도 활성화

가. 금융공기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 자금공급

□ 산은·기은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23조원)을 원활히 공급

□ 적정수준 자금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

○ 국책은행 및 보증기관 전체적으로 93.7조원* 공급

* '08년 80.6조원 대비 13.1조원 증가, '09년 위기대응시 대비 5조원 감소

□ 금융위기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보증확대조치를 단계적 정상화

○ 경기회복기반 공고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보증 만기 연장*, 유동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등을 유지

* 자생력 취약기업은 선별적·제한적 만기연장을 통해 구조조정 유도

○ 상향된 보증비율을 금년초부터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 일반기업 기존 보증 : ('09년) 95% → ('10.1월부터) 90% → ('10.7월부터) 85%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

○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 방식(On-lending)을 통해 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시 기업에 대한 기보의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10.1.4)

나.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금공급 확대

□ 회사채 등 증권 발행여건 개선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 판매정보시스템(일명 '채권몰', 2.1일 서비스 개시) 구축 등 채권 유통체계를 개선
- 적격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공시의무(증권 신고서 제출 등)를 면제하는 등 적격투자자(QIB) 제도 도입

□ 우량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투자자금 조달 지원

- 新성장동력기업의 상장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활성화를 통해 비상장 우량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 투자 펀드 등 자금공급 수단 확충

-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펀드 재산의 50%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설립 추진
- 중소·중견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주체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산유동화제도 개편

다. 녹색금융 활성화

□ 녹색 세제지원 및 녹색기업 인증제 시행(10.4월)을 바탕으로 녹색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금융공기업의 정책금융을 녹색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기준,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 등을 마련

*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 목표 : (09년) 4.3조원 수준 → (10년) 5.0조원 수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금융지원을 '녹색기술·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탄소 저감 사업'으로 적극 확대*

* 탄소포집시설 등 온실가스 저감 사업 및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ESCO)에 대해 저리자금지원, 신용보증 우대 등 금융 인센티브 제공 등

2 기업 구조조정 강화

◇ 시장의 잠재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체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강화

□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 현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업체가 신속히 경영정상화 되도록 적극 독려

* 지난해 591개 업체(건설·조선·해운 46개, 개별 대기업 33개, 중소기업 512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중

- 아울러, 금호그룹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 신용위험 상시평가(6월 예정),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2/4분기 예정) 등을 통해 상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

○ (기촉법 개정) 법률 존속기한(10년말) 연장,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 체제 구축

○ (평가기준 개선) 재무적 요소와 함께 산업 특수성·영업전망 등 비재무적 요소도 감안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한편, 기업재무안정 PEF,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도 적극 유도

3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 유동성 및 외환분야 등 잠재된 취약요인에 선제적 대응 체제를 보강하고, G20, FSB 등 국제적 논의와 연계하여 건전성 규제체제를 재정비
- ◇ 예금보험제도의 사전적 부실확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해 단기자금시장 체계를 개편

가.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은행예대율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을 마련

* 예대율(CD제외)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 은행권에 대해 외화유동성 리스크 및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등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 시행(10.1.1)

* 단,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화 가중치 부여, 외화안전자산 보유 등은 '10.7월 시행

- 국제 논의를 보아가며 외환분야 레버리지 규제 도입 검토

□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를 지속
 - 주택담보대출의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 발생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 예대율 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

참고 2

가계대출 현황 및 리스크 평가

- **(현황)** 그 동안 가계대출*은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빠르게 증가**한 측면

* 09.9말 현재 675.6조원으로 은행권이 405.0조원, 제2금융권이 270.6조원

** 9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14.6%)은 경상 GDP 증가율(7.8%)을 상회

- **(위험성 평가)** 아직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1% 미만으로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

* 가계대출 연체율(은행, %) : (07말)0.55 (08말)0.60 (09.3)0.73 (9)0.55, (12)0.42 (10.1)0.51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9.9말 기준, %) : 은행권 0.41 (美 상업은행 모기지 9.46)

- 가계대출 구성 및 거시·금융 여건 등도 양호한 수준으로 단기간내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 (i) 최근 수년간 가계대출은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우량 신용등급 및 고소득층 중심 증가

* 우량등급(1~4등급) 대출 비중(은행+비은행, %) : (05년) 55, (08년) 61, (09.7월) 66

- (ii) 선제적 규제 도입으로 주요국에 비해 LTV비율도 낮음

* 주요국 LTV 비율(09.7말) : 韓 47.1%, 美 74.9%, 英 85.2%(07.12말)

- (iii) 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도 대체로 양호

* 은행 당기순이익(조원) : (08.3Q) 1.5, (4Q) △0.5, (09.1Q) 0.6, (2Q) 2.1, (3Q) 2.3

* BIS 비율(%) : (08.3Q) 10.9, (4Q) 12.3, (09.1Q) 12.9, (2Q) 13.7, (3Q) 14.2

-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의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 필요

- **(대응방향)** 가계대출 증가세가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

- 특히,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

나. 건전성 감독을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

□ 국제 논의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

< FSB/BCBS 등에서 논의중인 과제중 도입 검토대상 예시 >

- BIS자기자본비율과 함께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있는 보통주 중심의 자본적정성 규제 제도
- 경기변동에 따른 완충적 자본적립 제도 및 장기예상손실에 근거한 대손충당금 제도
- 조건부 자본(contingent capital)* 등의 도입 방안
* 위기시 자본으로 전환됨을 전제로 발행되는 채권(평상시에는 부채)
- 레버리지 비율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 제도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
* 추가적 자본 · 유동성 · 레버리지 규제의 강화 등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

-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권고한 「건전한 보상원칙 및 이행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업권별 「보상원칙 모범규준*」 마련(10.1월)

* (주요내용) ①보상위원회 설치 ②리스크 관리 · 준법감시 담당 부서의 독립성 강화 ③보상과 리스크의 연계 ④보상관련 정보의 공개 등

- 보수체계를 장기성과 및 리스크에 연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행위 제한

-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금년부터 시행하고, 금융당국은 이행실적 점검후 경영실태평가 등에 반영 예정

* 금융지주회사 : 7개 모두 / 은행 : 18개 국내은행 / 증권 : 자산 5조원 이상(10개)/ 보험 : 자산 10조원 이상(6개)

- 주요국 시행 추이 및 국내 시행성과 등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 업권 및 금융회사 단계적 확대 검토

다. 예금보험기능 강화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관리 외에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감시·지도 등 사전적 부실방지 기능을 강화
 - 금융회사 및 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평가 강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실시 등 위험감시기능을 강화
 -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단기적·사후적 점검 방식에서 장기적·사전적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 전환
- 금융신상품 출현에 따른 보호대상 예금범위 등을 개선
-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2014년)을 위해 객관적인 차등평가 기준개발, 연도별 로드맵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

라. 단기자금시장 체계 개선

- 금융회사의 단기자금조달이 콜시장(1일물 무담보 콜)에 편중되어 콜시장 위축시 전체 금융권의 단기유동성에 문제 발생
- ⇒ 위기 재발시 리스크 완화 및 단기자금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단기자금시장 체계 개선 (현행 콜·CP시장위주 → RP·단기사채시장 육성)
- ① **RP(환매조건부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채권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유도
 - * 자산운용사 등의 RP 매매 규제완화, RP시장 참여기관 확대, 각종 거래인프라 개선 등
 - ② 금융회사의 과도한 콜거래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 ③ **CP(기업어음) 거래수요는 전자화된 단기채권으로 흡수하여 시장 투명성 강화, 자금조달의 신속성·적시성 제고**
 - *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CP와 유사한 발행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유통성은 더욱 강화된 단기채권 도입 등

4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이 위기 이후 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
 - 영업규제 개혁, 금융공기업 민영화 및 금융인프라의 개선을 지속 추진
- ◇ 위기극복 이후를 대비하여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장단기 발전전략을 마련

가.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

-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 유도
 - 경기회복 등에 따라 예금유치·자산확대 등 무리한 외형 경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 구조조정기금(10년 기금운용계획 10조원 한도)과 민간메드뱅크를 통한 부실채권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
-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경영효율화 및 수익기반 확충** 지원
 - * 정기적 스트레스테스트, 위기대응계획 수립,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등
 - ** (은행) 신상품 개발, (증권) 수익구조를 위탁매매 위주에서 IB업무로 다양화 등
- 은행권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을 현행 등기임원뿐 아니라 집행임원에게도 확대 적용

*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해임·면직된 경우 5년간 임원자격 결격 등

참고 3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선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OECD·BCBS 등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

* 리스크 관리실패, 단기 성과주의 등 이사회 의 비효율성을 금융위기 원인으로 지적('09.2 OECD, '09.6 BCBS)

○ 국내적으로도 '98년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경과되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과 자기권력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09년초부터 사외이사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해외 모범사례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추진

* 금융연구원, 학계 전문가, 금융당국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

○ 지난 1.25일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기준」을 발표하였으며, 개별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은 금년 주총부터 사외이사 선임에 적용할 계획

□ 모범기준은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인 '주주 및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

○ 또한, 국제적인 권고인 「원칙준수·예외공시(Comply or Explain)」에 따라 바람직한 관행(Best Practice)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배구조 및 사외이사의 활동 공시를 강화

□ 향후 금번 사외이사 모범기준이 바람직한 관행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 추진 노력

※ 사외이사 모범규준 요약

주요항목		현행	모범규준
사외이사 결격사유 확대		—	대주주(§6①3호) 및 비계열 금융사 사외이사(§6①4호) 포함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추상적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언론 전문가로 구체화(§6③)
사외이사후보로 본인 추천시 의결권 제한		—	본인 추천시 의결권 제한(§8③)
연임 추천시 종전 평가결과 고려		—	반드시 고려(§9④)
주주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주권상장 은행 등만 인정	상장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은행 등이 인정(§9⑤)
사외이사 임기상한		임기 : 3년 총 재임기간 : 제한없음	임기 : 2년(단, 연임시 1년)(§11①) 총 재임기간 : 5년(§11②)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자율	매년 사외이사의 1/5 교체(§12)
기부내역 이사회보고 및 공시		—	사외이사등 소속 비영리법인등이 은행등(계열회사 포함)으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 이사회에 사전보고(§15⑥) 및 공시(§18, 별표2)
은행장(지주회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제한		—	겸임시 선임사외이사 선임(§16①)
이사회 의장 임기		—	1년(§16①)
소위원회 연임제한		—	평가보상위 등 2년초과 재임 금지(§17)
사외이사 평가		자율	자기·이사회·직원 평가제 도입(§19①)
사외이사 보수를 경영성과에 연동		자율	스톡옵션, 성과급 등 금지(§20②)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자율	반드시 지정(§21①)
공시	사외이사 후보 추천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만 공시	구체적 사항(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회사와의 관계 등) 공시(§10)
	사외이사 활동내역	참석 및 찬반여부만 공시	구체적 사항(찬반이유, 교육이수 등) 공시(§18)
	사외이사 평가방법	없음	있음(§19②)
	사외이사 보수	총액만 공시	구체적 사항(내역, 위원회별 보수) 공시(§20③)
	이사회 운영현황	정기보고서 공시	보다 구체적 사항(사외이사 활동 시간·교육연수실적 등) 공시(§25)

나. 영업규제에 대한 개혁을 지속 추진

□ 금융업 신규진입 및 업무범위 확대

- 시장리스크와 투자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 신규진입 및 업무확대 단계적 허용
- 저축은행의 자산운용규제 합리화(장부상기준 → BIS 기준) 및 영업구역 확대(11→6단위)

* (현행) 서울, 경기/인천,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광주/전남, 전북, 제주, 대전/충남, 충북
→ (변경)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 단위신협과 중앙회간 연계대출 제한을 완화*하여 신협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신용리스크 분산 유도

* 중앙회의 대출한도 : (현행)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 초과분
(개선)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50% 초과분

□ 영업활동 관련 규제 개선

- 그 동안 금산법상 출자승인(법§24)제도 운영과정에서 제시된 반복민원에 대해 해석 지침 등 마련

* 금융상품 투자성격의 출자 및 투자시 금산법상 승인면제 등 규제 간소화

- 신탁법(법무부 소관)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수탁가능 재산 및 업무 위탁규제 등 신탁업 감독제도를 대폭 정비

* 새로운 유형의 신탁도입 등 신탁법 체계를 전면 수정

- 경영신탁회사의 부동산 신탁 취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

다. 금융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기업 매각 촉진

□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추진

- 금년 상반기중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수립을 목표로 민영화 추진 가속화

*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및 국내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검토

□ 산업은행 민영화를 착실히 준비

- 본격적인 민영화 착수이전에 글로벌 추세에 맞는 비전을 정립하고 체질 개선을 우선 추진

□ 구조조정기업 지분매각의 본격 추진

- M&A 시장 여건 및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12개 구조조정기업중 4개* 기업의 지분매각을 우선 추진

*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 상기 민영화 및 지분매각은 자본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조정

라.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 신용평가의 품질·투명성 제고 및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 평가결과 공시체계 강화, 신용정보 활용기준 재정비, 긍정적 정보반영 유도 등을 통해 평가의 품질 및 정확성 제고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장외파생상품 거래 인프라 선진화

- IFRS 특성에 맞춰 연결감리 확대 등 회계감리제도 전면 개편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중앙청산소(CCP)설립 등 제도 개편 방안 마련

* CCP(Central Counter Party)를 통한 장외 파생상품 청산(G20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CCP 설립·감독 방안을 마련('12년까지 CCP 설립 예정)

마. 금융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마련

□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체계 전면 개편 등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

○ 이에 우리도 금융시스템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금번 위기과정에서 노출된 구조적 취약요인을 보완

○ 그러나, 드러난 문제를 정비하는 데에만 주력할 경우 금융 산업을 성장동력으로서 육성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

- 중국 등 경쟁국들이 자국의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움직임이 분주해진 상황에서, 우리도 금융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검토·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필요

□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위는 지난 '09.7월 금융연구원 등 3개 연구원에 공동 작업을 의뢰하여 7개월간의 연구 끝에 3개 연구원은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10.2.8)

○ '아시아 금융리더로 도약'을 금융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

- ① 금융규제개편, 예금보험제도 등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② 기능별 규율,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강화 등 인프라 확충
 - ③ 금융산업 해외진출 및 현지화 등 글로벌화 전략 추진
 - ④ 글로벌 은행·IB 육성, 서민금융 강화 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⑤ 단기금융시장, 코스닥, 퇴직연금 등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 심화

□ 금융위는 연구결과에 대해 별도의 정책화 과정을 거칠 예정

○ 연구원 제안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구체화해 나가면서 정책화 여부와 방향성 및 세부추진 방안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

① 금융시스템 안정

- 외환 등 구조적 취약부분을 철저히 개선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 감독 강화
- 규제차익, 규제공백 제거를 위한 기능별 규율 및 감독 체계 확립*
 - * 소비자 보호, 대주주 적격성, 제재 등을 업권별로 통일적 규율
- 감독기관의 투명성, 전문성 등 역량 제고
- 중장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부실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② 금융 인프라 선진화

- 사외이사제도 개선,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 금융회사 지배 구조 선진화
-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
 - * 공시, 약관, 광고, 판매 등 영업행위 관련제도 전반을 재검토·개선, 제재 및 사후적 피해구제 기능 강화, 민간자율기구의 소비자 교육 강화 등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수준의 감독 적용
 - * ① 모자회사금융그룹 ②외국계금융그룹 ③금산복합체로 구분 가능

③ 글로벌화 전략 추진

- 금융중심지 정책을 해외금융회사 유치 중심의 전략(Hub)에서 해외진출(Spoke)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Hub&Spoke)으로 수정
- 금융인프라(거래소, 예금보험제도, 부실자산처리, 구조조정 등) 및 제조업 수출과 연계하여 해외 동반진출 방안 모색
- 교포 중심의 단순 영업에서 벗어난 현지화 모델 마련

④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은행) 우리지주 민영화 추진 등을 계기로 글로벌화된 '아시아 리딩뱅크' 육성
- (금융투자) 합병 등을 통해 아시아 선도 투자은행(IB)을 육성하고 특화·전문화된 중소형사 등장을 유도
- (보험) 상장 등을 계기로 우량보험사 출현을 지원하고 고령화사회를 맞아 신성장 영역(건강, 간병, 연금 등)을 개척
- (서민금융) 각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활성화*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전사 등 각 금융권역별로 서민금융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

⑤ 금융시장의 효율화

- 불투명한 기업어음(CP)을 단기사채 시장으로 흡수하고, 환매 조건부채권매매(RP) 활성화 등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추진
- 코스닥시장의 상장·공시·매매제도를 유가증권시장과 차별 적용함으로써 미래 핵심유망산업 지원기지화
- 탄소배출권 시장을 구축하고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립을 추진

5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서민층에 대한 금융비용부담을 완화
-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집행체제도 실효성 있게 정비

가. 서민층 금융지원 확충

□ 미소금융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상반기 중 미소금융지점을 50여개 이상으로 확대
 - 기업·은행계 재단의 지부를 설립(상반기중 12~16개)하고, 미소금융의 취지, 지원요건 등 홍보 강화
- 전문인력 양성 강화, 미소금융 지점 감독 효율화, 유관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 서민금융회사의 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하여 서민대출기능 회복 유도
- 신탁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예금혜택을 서민 대출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

□ 대부업체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영업 유도

- 대부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및 영업방식 투명성 제고
- 시장영향이 큰 대형업체의 영업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관리감독시스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검토

나.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강화

□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강화 및 제도 선진화

- 고금리(20%이상) 채무를 저금리(12%내외)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신용회복기금)의 지원대상 확대(7등급→6등급이하)(10.1.1)
-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
 -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만명) : ('08.12) 227 → ('09.3) 221 → ('09.6) 211 → ('09.10) 202
-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금융지원 확대
- 개인회생·파산 신청전 사전상담제도를 강화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체계를 선진화

다. 중산·서민층의 금융이용부담 완화

□ 가계대출 관련 금융비용 경감

-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유도하여 가계의 금리변동 리스크 부담 경감
 - * 은행별 고정금리대출 활성화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대한 점검 강화
 - CD금리연동 대출의 지나친 편중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기준금리를 개발토록 유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 * 다양한 기준금리 상품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토록 유도
- ⇒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출 기준 금리인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 공시(10.2.16)

□ 펀드투자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도록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인하 유도

- 신설펀드의 상한 하향조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09.12.21) 취지에 맞도록 기존펀드의 보수 인하를 유도
 - * 펀드 판매보수 : 연 5% → 연 1% / 펀드수수료: 연 5% → 연 2%

□ **대부업체 고금리의 점진적 인하 유도**

-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효율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고금리 인하 환경 조성
-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

□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 대형 할인점과의 경쟁 등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각 카드사별 자율적 수수료율 인하 유도('10. 1/4분기)

참고 5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주요내용('10.1.4 발표)**

- 재래시장가맹점* : 「대형할인점」 수준으로 인하 유도

➡ (현행) 2.0 ~ 2.2% → (개선) 1.6 ~ 1.9%

* 전체 재래시장 점포(18만6천개)중 약 8만6천개가 신용카드가맹점인 것으로 추정

- 중소기업가맹점* :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인하 유도

➡ (현행) 2.3 ~ 3.6% → (개선) 2.0 ~ 2.4%

* 연매출액 9,600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 4,800만원의 2배) ⇒ 약 90만개 신용카드가맹점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다만, 약 65만 가맹점은 간이과세자로서 '07.8월부터 수수료율 인하혜택(2.0% ~ 2.3%)을 기 적용]

-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계획 이행여부 점검 실시

-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제출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계획 이행 여부를 감독당국이 면밀히 점검

- 가칭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설치

- 재래시장·중소 가맹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처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금감원내 설치

※ 중기청, 국세청 등을 통해 전국 재래시장(1,550여개)내 가맹점 현황 및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등)이 파악되는 대로,

- 카드사별 인하계획을 제출토록하고 카드사 전산시스템 반영 등 1/4분기중 시행

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 흐름에 걸맞게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를 재정비

○ 상반기중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전반에 걸쳐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예 : 상품공시, 판매, 약관, 광고 등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관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감독행정체계를 보강

- 독립본부로 격상된 금감원의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확충하고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전담인력을 보강

□ 체계적인 금융교육 추진을 위해 금융교육 추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교육 실시

* 금융교육협의회,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등

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 제고

□ 고령층의 실버타운 거주 활성화를 위해 실버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역모기지’) 제공 (‘10.7월부터 실시)

* 현재 실버타운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

□ 노후생활대비 개인연금보험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방안 강구

6 G-20 회의를 계기로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전환

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

□ G-20 정상회의 준비과정과 FSB 등 국제회의시 선진·신흥국간 가교역할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그간의 실적) 금융위는 FSB에서 신흥국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글로벌금융 안전망 구축을 제안(09.9월)하여 논의중이며, FSB 총회 유치노력을 통해 '10.1월 총회에서 '10.10/11월 총회 한국개최 확정(신흥국 중 최초)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여 의제 발굴, 주요 의제에 대한 국가간 이견 조정 등에 적극 기여
- 특히, 금융분야 의제에 대한 국제적 의견 수렴을 위해 아시아 국가 금융당국간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

□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각종 금융분야 주요 회의도 G-20 회의 준비와 연계하여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G-20로부터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아 각국 규제감독당국 및 국제규범제정기구(BCBS, IOSCO, IAS 등)와 함께 국제기준을 마련·점검하는 기구

- 최근 FSB는 ①건전성규제 강화 ②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규제 강화 ③보상원칙 이행 ④회계기준 개선 ⑤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

* <참고 6> FSB 등 금융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나. 특색있는 금융중심지 육성

□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여의도)과 부산(문현)을 자생력 있는 금융특화지역으로 육성

-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부이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
- 해외 우수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해외 금융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 예: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도입, 금융회사의 외국인 전담창구 확대유도 등('10.1.13)

□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

- 효과적인 인력양성 정책 마련을 위해 시장수요를 반영한, 보다 정밀한 수급전망을 실시
- 금융 MBA과정, 실무금융인력 양성사업 등을 통해 녹색 금융, 퇴직연금 등의 부문에서 글로벌 수준의 전문인력 육성

다. 금융의 글로벌화 적극 추진

□ 한국형 증권시장 인프라의 해외수출을 확대하여 아시아 역내증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증권업의 해외진출 지원

* 라오스 및 캄보디아 거래소 설립 지원,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 향후 남미, 중앙아시아 등 증시관련 시스템 개선 수요 발생시 사업수주 적극 추진

- 금융회사 진출 희망국의 현지법령·시장정보 등의 적기 제공 및 필요시 해당국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
- 싱가포르·일본 등 국내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있는 지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방안 모색

* 양국간 펀드 등록 및 상장 절차 등을 완화하여 상호진출을 활성화

- 해외진출 은행의 현지화 촉진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해외진출 사전감독 시스템 정비 및 사후감독 강화

라. 금융투명성 제고(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 금융투명성 제고 위해 자금세탁방지 법령·제도를 선진화

-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의 인하* 등 제도개편 (상반기)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현행 2천만원 → 1천만원)
-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 (하반기)
 - * (보고법) 자금세탁방지 의무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 (공협법) 테러조직/테러행위자 자금지원 금지, 테러자산 동결 등

□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적 역할 확대 추진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국과 G20 의장국으로서 G20와 FATF의 협력활동,** 이를 통한 국제적 입지 강화
 -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OECD 회원국 중심 33개국과 2개 기구(EC, GCC)로 구성,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정회원국으로 가입
 - ** G20 요청으로 FATF가 추진 중인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 지정활동 등
- 자금세탁방지제도 후발국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 *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PG)의 요청에 따라 몽골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몽골정부 방문협의 추진(3월 중 예정)

마. 금융감독서비스 선진화

□ 금융감독·검사 관행 및 행태 개선

-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감독·검사서비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검사행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 투명성·실효성 제고

- 제재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10.2월)

□ 기능별 감독 및 검사 강화

- 겸업화 및 부수업무 확대 등에 대응하여 권역별·칸막이식 감독 및 검사에서 탈피하여 권역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참고 6 FSB 등 금융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1. 건전성 규제 강화

□ 금번 위기사 다수의 은행이 부실화되고, 공공자금이 투입되면서 자본규모의 적정성 문제와 유동성 기준 도입 필요성 대두

- ① 자본의 손실 흡수 능력에 한계 → 자본의 질, 양 강화
- ②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심화 → 완충자본 레버리지 비율 도입
- ③ 유동성 기준 부재 → 유동성 기준 도입

2.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실물경제 등에 영향을 감안, 부실 대형 금융회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공공자금 투입

⇒ 대형금융회사 감독강화와 원활한 정리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추진

3. 보상규제 강화

□ 단기성과 위주, 비대칭적* 보상체계가 과도한 위험부담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

* 성과급 등 보수체계가 양(+)의 성과만 있고 음(-)의 성과가 없음

⇒ '09.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시 FSB의 보상원칙 집행기준을 채택하고, '10.3월까지 각국 이행상황 점검후 필요시 추가조치 검토

4. 회계기준 개선

- ☐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와 발생기준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경기순응성을 심화

⇒ 국제회계기준위(IASB)와 재무회계기준위(FASB)는 회계기준 일원화 추진

5. 장외파생상품시장(OTC derivative market) 규제 강화

- ☐ CDS 등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이 미흡하여 금번 금융위기가 증폭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위험축소 방안 추진

6. 금융권 분담방안 마련

- ☐ 금번 금융위기사 투입한 공공자금 손실부담과 향후 위기사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권 분담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IMF에서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며 IMF는 '10.6월 G-20 정상회의(캐나다)에서 방안을 제시할 예정

참고 7 美 오바마 금융개혁안의 시사점

□ 오바마 美 대통령은 은행의 고위험 투자업무 제한하고, 과도한 외형확장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10.1.21)

① (영업범위 규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헤지·사모펀드 (PEF) 투자·운영 및 자기자본 투자(proprietary trading) 금지

② (대형화 규제) 대규모 금융회사의 인수·합병시 적용되는 예금상한선 규제에 여타 부채의 규모도 포함 검토

⇒ 예금자 보호 등 공적지원하에 은행권이 금융중개 기능을 외면하고,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 및 대형화를 추구함으로써 경제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

□ 국제적으로도 G-20,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대형 금융회사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자본·유동성 규제 강화, 영업범위 제한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 FSB는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업무범위와 규모 제한 방안에 대해 검토중 ('10.10월까지 대책마련)

○ 우리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인 방안과 G-20, FSB 등 국제적으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국내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

첨 부**금융위원회 간부현황**

직 명	성 명	연 락 처
위 원 장	진동수	2156-9500
부위원장	권혁세	2156-9501
금융위 상임위원	이종구	2156-9503
금융위 상임위원	임승태	2156-9504
증권위 상임위원	최규연	2156-9505
사무처장	김주현	2156-9502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최수현	2156-9400
대 변 인	진웅섭	2156-9540
기획조정관	정지원	2156-9600
금융정책국장	추경호	2156-9700
금융서비스국장	홍영만	2156-9800
자본시장국장	조인강	2156-9801
국제협력관	이헌석	2156-9701
공자위 사무국장	최상목	2156-9440

업 무 현 황

2010. 4. 1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1. 최근 금융시장동향

1. 국제 금융시장 동향 1

2. 국내 금융시장 동향 2

II. 주요 현안

1. 서민금융종합대책 추진 4
2. 카드수수료율 인하 추진 8
3. 가계대출 동향 및 대응방안 9
4. 보험관련 농협법 개정추진 동향 12
5. 공적자금 관리 현황 14
- 〈붙임〉 : 금융위원회 간부현황 16

I. 최근 금융시장 동향

1 국제 금융시장 동향

◇ 美·EU 등 주요국 경제지표 개선과 유럽 재정위기 완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

□ 연초 약세를 보이던 주요국 증시는 주요지표 개선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3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

○ 특히 美 다우지수는 4.12일 11,000선을 돌파하여 '08.9월 수준 회복

* 3월 美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전월대비 16.2만명 증가('07.3월 이후 최고치)

* 3월 美·英 제조업지수가 시장전망치를 상회

[美 ISM 제조업지수 59.6(전망 57), 英 PMI 제조업지수 57.2(전망 56.8)]

	'08말	'09말	'10.1말	2말	3말	4.12	전년말대비
다우(美)	8,776	10,428	10,067	10,325	10,857	11,006	5.5%
FTSE(英)	4,434	5,413	5,189	5,354	5,680	5,778	6.7%
변동성지수(VIX)	40.00	21.68	24.62	19.50	17.59	15.58	△28.1%

□ 美 국채금리(10yr)는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으로 연초 다소 하락하였으나, 3월 이후 주요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다소 상승

(%)	'08말	'09말	'10.1말	2말	3말	4.12	전년말대비
LIBOR(3M)	1.425	0.251	0.249	0.252	0.292	0.30	0.05%p
Ted Spread	1.35	0.20	0.18	0.14	0.14	0.15	△0.05%p
UST(2yr)	0.76	1.14	0.81	0.81	1.01	1.03	△0.11%p
UST(10yr)	2.05	3.84	3.58	3.61	3.82	3.84	-

□ 美 달러화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 美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EU의 그리스 지원 합의 등으로 다소 둔화

* 달러인덱스 : ('09말) 77.9 ('10.1말) 79.5 (2말) 80.4 (3말) 81.1 (4.12일) 80.6

** EU는 3.25일 그리스 지원에 합의(4.11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에 합의 : 최대 300억유로, 금리 5%내외 지원)

2 국내 금융시장 동향

◇ 해군 초계함 사고(3.26일)가 발생하였으나 금융시장 영향은 미미하며, 경기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모습

□ (주식시장) 초계함 사고 영향은 미미(3.29일:△5.7p)한 가운데

- 3월 이후 경기 회복세와 기업실적 개선기대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외국인 매도전환 등으로 다소 조정

	'08말	'09말	'10.1월	2월	3월	4.8	4.13	전년말대비
코스피(p)	1,124	1,683	1,602	1,595	1,693	1,734	1,711	1.6%

- 특히, 3월 이후 주가상승을 주도한 외국인 순매수는 환율 하락·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4.9일부터 장중 순매도로 전환

* 외국인 순매수(일평균) : (3.2~4.8) 2,437억원 → (4.9~13, 장중)△575억원

< 주체별 순매수 동향 >

	'08년	'09년	'10년	'10.1월	2월	3월	4.1~13
외국인(조원)	△33.6	32.4	9.0	0.6	0.0	5.4	3.0
기관(조원)	23.3	△26.3	△4.2	△1.4	0.1	△1.1	△1.8
개인(조원)	2.8	△2.0	△3.3	0.9	△0.2	△3.9	△0.1

* 순매수 동향은 체결일 기준(4.13일 17:00 기준)

□ (채권시장) 국고채(3yr) 금리는 저금리 기조 지속 전망 및 해외자금 유입* 등에 따라 연중 하락세 유지

* 국내채권 외국인 순유입(조원) : ('10.1월) 0.4 (2) 2.3 (3) 2.6 (4.1~12일) 0.1

%	'08.12말	'09.12말	'10.1말	2말	3말	4.13	전년말대비
CD(91d)	3.93	2.86	2.88	2.88	2.78	2.45	△0.41%p
CP(91d)	6.39	3.07	3.10	3.09	2.90	2.70	△0.37%p
국고채(3yr)	3.41	4.41	4.27	4.10	3.89	3.83	△0.58%p
회사채(3yr, AA-)	7.72	5.53	5.39	5.24	4.89	4.81	△0.72%p
(3yr, BBB-)	12.02	11.58	11.46	11.30	10.93	10.86	△0.72%p

- 한편, 회사채 금리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신용위험 우려 완화 및 고금리 채권 수요 증가로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

- 회사채(AA-)와 국고채간 스프레드는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08.7.14일 이후 최저치)

* AA-국고채(3yr, bp) : ('08.7.14) 100 ('08말)431 ('09.12말)114 ('10.3말)100 (4.13) 98

BBB-국고채(3yr, bp) : ('08.7.14) 383 (08말)861 ('09.12말)733 ('10.3말)704 (4.13) 703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3월 중 유럽 재정위기 우려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으나

- 3월말 경부터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 확대, 위안화 절상 기대, 유럽 재정위험 완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08.9월 이후 최저치(4.12일 1,114원/\$)를 기록

- 엔-원 환율은 日 금융완화 확대* 등에 따라 3월 이후 엔 약세가 지속되며 1,190원대까지 하락

*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유동성 공급 한도를 10조엔에서 20조엔으로 확대(3.17일)

<주요 환율 추이>

	'08.12말	'09.12말	'10.1말	2말	3말	4.13	전년말대비
원-달러	1,259.5	1,164.5	1,161.8	1,160.0	1,131.3	1,123.9	△-3.5%
엔-달러	90.68	93.01	90.27	88.93	93.46	92.82	-0.2%
원-100엔	1,389.0	1,252.0	1,287.0	1,304.4	1,210.5	1,210.8	△-3.3

* 엔-달러, 원-100엔은 4.13일 오후 15:00 기준

II. 주요 현안

1 서민금융 종합대책 추진

가. 추진배경

□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이용기회 감소

-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는 '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서민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기업 관련 여신을 주로 취급

※ 신용 6등급이하 대출 비중(%) : 은행 21, 상호금융 36, 저축은행 87, 대부업 91

□ '09년말 출범한 「미소금융」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창업·운영 자금 지원 개시

- 지난 3개월간 약 2만명이 방문·상담하는 등 서민층의 관심이 매우 컸으나, 그 금융수요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한계

□ 저신용 서민들의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금리 부담 등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조원) : 4.1('07.9) → 5.6('08.9) → 5.9('09.9)

□ 이에 따라 저소득 서민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및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완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서민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본연의 서민금융기능 강화를 유도해 나갈 필요

나. 서민금융 정책 방향

〈 서민금융 대상 및 현황 〉

공 의 의 서 민 금 융	대상 및 자금 수요		현 제도	해당기관
	• 신용 1~5등급, 은행 이용 가능	➡	일반금융	시중 은행
	• 6~10등급, 은행 이용 곤란 → 생계자금 · 사업자금	➡	서민금융	서민금융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 7~10등급, 2금융권도 이용 곤란 → 창업자금 등 자활자금	➡	미소금융	미소금융재단, NGO 등
	• 9~10등급, 전금융권 이용 곤란 → 생계자금	➡	신용회복지원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 경제활동 능력 없음 → 생계자금	➡	기초생활보장	정부

〈 서민금융 정책방향 〉

공급주체	기본 역할	현 황	정책 방향
상호 금융	· 지역·회원 관계 금융	· 낮은 예대율(유가증권 투자, 중앙회 예치)	· 보증부 서민대출 확대 ·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저축 은행	·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 서민대출 위축 · 외형 확대 및 PF 등 고위험 대출로 부실화 우려	· 보증부 서민대출 확대 ·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 건전 경영 유도
미소 금융	· 저신용층 창업자금 지원	· 서민의 자금수요 충족에 한계	· 다른 서민금융지원과 연계 강화 · 지점확대, 홍보강화
대부업	· 私 금융	· 서민금융시장의 공백으로 규모 확대, 소비자피해 증가	· 금리부담 완화 · 대형 대부업체 감독 강화

다.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 민간과 정부의 출연제원*을 바탕으로 서민금융회사 창구를 통한 보증부 대출 확대(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

* 서민금융회사와 정부(지자체 포함)가 각각 매년 2천억원씩(5년간 1조원) 출연하여 재원조성 계획

□ 신용회복 대상자의 안정적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확대(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

-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신규 지원을 개시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기존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성실 채무상환자에 대해 자금지원 추진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추진(49%→44%로 5%p 즉시 인하후 경제여건을 보아 추가 5%p 인하 추진)

□ 미소금융으로 지원할 수 없는 서민에 대하여는 미소금융 창구에서 보증부 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

- 아울러 미소금융 지방지점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소금융의 교육 및 컨설팅 능력 강화

□ 서민금융회사가 충실한 여신심사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신용평가역량을 확충

* 예시) 저축은행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저축은행의 여신정보를 집중하고 대부업체의 여신정보를 통합·활용

라.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로 건전경영 유도

- 부동산 관련 대출로의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PF대출 여신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총대출의 30%(현행) → 25%('11년중) → 20%('13년중)

- 확대된 외형에 맞춰 대형 저축은행부터 BIS 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강화

* 적기시정조치 대상 BIS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

□ 부실방지를 위한 검사·감독 강화

-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검사(현행 2년)
- 예보의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를 대폭 확대

□ 저축은행의 예금보호제도 개선

- 저축은행의 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0.35%→0.4%('11)) 하고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화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고 여전사에 準하는 수준의 감독 강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이용자 금리부담 완화

* 자산 100억원이상 외감대상 법인('09.12말 97개) 등 일정규모·기준 이상의 대부업체를 금융위에 등록 추진

2 카드수수료를 인하 추진

□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0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를 인하를 추진

○ 그러나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요구도 지속 제기

□ 이에 정부는 카드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 방안 발표('10.1.4)

○ 재래시장(2.0% ~ 2.2%)은 대형마트(1.6% ~ 1.9%) 수준으로, 중소가맹점(2.3 ~ 3.6%)은 대형백화점(2.0 ~ 2.4%) 수준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를 유도

○ 카드사들의 원활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 국세청 등을 통해 재래시장* 가맹점 및 중소 가맹점 (연 매출 9,600만원 미만) 현황 조사('10.1~3월)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자체 등록 재래시장

□ 10.4.1일부터 각 카드사별로 재래시장·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백화점 카드수수료 수준 이하로 인하

*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시스템 개발 등으로 인하여 4월 중순경부터 인하 예정

○ 이번 인하에 따른 '10년 재래시장·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는 약 1,000억원 내외로 예상

□ 재래시장·중소 가맹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처리할 전담 조직(가맹점 애로 신고센터)을 금감원내 설치·운영(4.1)

3 가계대출 동향 및 대응방안

가. 가계대출 동향

□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

○ '09.12월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잔액은 658조원으로 은행권 408조원(62.0%), 비은행권 250조원(38.0%)으로 구성

*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98년 이후 가계 대출은 경상 GDP 증가율(7.8%)을 상회하는 빠른 증가세(14.6%)를 시현

□ 08.9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

* (08.9월 → 09.9월, 조원) 가계대출 : 617.0 → 647.0 (4.9%), 주택담보대출 : 310.2 → 343.2 (10.6%)

○ 다만, 09년 하반기 LTV·DTI 등 규제 강화 이후 증가세는 다소 둔화

	08년	09.1~8월	09.9~12월	10.1월	10.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감(월평균, 조원)	1.5	2.6	1.1	△0.3	0.7

나. 가계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1% 미만으로 전반적인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

* 가계대출 연체율(은행, %) : (07말)0.55 (08말)0.60 (09.3)0.73 (9)0.55, (12)0.42 (10.1)0.59, (2)0.63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9말, 은행) : 0.33% (美 상업은행 모기지 10.80)

- **가계대출 구성 및 거시·금융 여건 등도 양호한 수준으로**
단기간내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i) 최근 수년간 가계대출은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우량 신용등급 및 고소득층 중심 증가**

* 우량등급(1~4등급) 대출 비중(은행+비은행, %): (05말)49.7, (08말) 50.3, (09년말) 56.9

(ii) 선제적 규제 도입으로 **주요국에 비해 LTV비율도 낮음**

* 주요국 LTV 비율(09.7말): 韓 47.1%, 美 74.9%, 英 85.2%(07.12말)

(iii) **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도 대체로 양호**

* 은행 당기순이익(조원): (08.4Q) △0.5, (09.1Q) 0.6, (2Q) 2.1, (3Q) 2.9, (4Q) 1.5

* BIS 비율(%): (08.4Q) 12.3, (09.1Q) 12.9, (2Q) 13.7, (3Q) 14.2, (4Q) 14.4

- **다만, 향후 금리 상승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대출 부실화 방지노력 지속 필요

다. 대응방향

- **가계대출 증가세가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

- 특히,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

- ※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및 저금리 전환대출 등 지원 등을
통해 **저신용층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 ※ 미소금융의 성공적 정착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보증부 서민대출 활성화로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

〈 가계대출 기준금리체계 개선(코픽스) 추진 현황 〉

가. 추진 경과

□ 10.2월, 은행권은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로서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를 도입(2.16일 최초 공시)

□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주요 9개 은행*의 가중평균조달금리를 잔액기준 및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출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 2.17이후 개별 은행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규 대출 상품 출시

* 대출금리 = 기준금리(COFIX) + 가산금리(조달비용 차이, 관리비, 리스크프리미엄 등)

나. 추진 효과

□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에 코픽스가 추가 도입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 확대

○ CD연동대출의 고가산금리 부과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시중금리 반영도가 높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변동성이 낮은 잔액기준 코픽스, 고정금리 중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는 금리 선택이 가능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유형별 실적 (10.3.1~26일) >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대출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CD연동	COFIX 연동	기타금리 연동	
대출실적	0.2조원	1.1	1.1	0.9	3.3
(비중)	(5.2%)	(33.5%)	(34.1%)	(27.2%)	(100%)

※ 7개 시중은행 기준(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SC제일, 외환)

□ 금리변동주기도 다소 길어지면서* 금리상승기 이자부담 급증 위험도 개선

* CD금리의 경우 3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나 코픽스의 경우 금리 변동주기가 3~12개월로 다양화

4 보험관련 농협법 개정 추진 동향

가. 추진경과

- ☐ 09.6.9일 농식품부, 농협의 사업분리계획 발표
- ☐ 10.28~11.31일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처협의
 - 현재 농협이 영위중인 공제를 보험사로 이전, 공제사업 폐지
- ☐ 12.15일 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농협법 개정안 중 보험관련 사항>

- ☐ 61년부터 농협이 공제사업을 영위하였음을 감안, 농협 공제
부문의 보험사 전환시 보험업법에 대한 일부 특례 인정
 - 보험사 설립에 대한 허가 의제, 농협은행과 조합을 금융
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의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내용

- ① 판매상품 :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기업(단체)보험, 자동차
보험* 판매 불가

* 자동차보험의 경우 농협이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향 없음

- ② 판매방식 및 판매인 수 : 점포 밖 모집 불가, 점포당 2인 제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규제는 농협보험사 설립
5년후부터 농협은행과 조합에 적용
- 농협 보험사 설립후 5년간 퇴직연금보험 판매 금지
- 그밖에 기존 공제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 공제상담사를
보험설계사로 2년간 자격인정

나. 관련기관 입장

<농협>

- ☐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닌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할 필요
 - 향후 5년 후 조합은 현재 판매중인 보장성보험 및 기업(단체)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수료수입 감소
 -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퇴직연금을 보험사 설립 후 즉시 취급허용
- ☐ 기존 공제계약을 보험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공제계약으로 유지
 - * 예금자보호법 적용에 따라 예보요율 인상(0.18%→0.25%)

<정부>

- ☐ 정부안은 장기간 농협 및 보험업계는 물론 정부내 국무회의 등 다양한 절차 및 협의를 거쳐 농협개혁의 대명제하에서 대승적으로 도출된 것임을 감안, 정부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
 - 농협공제는 업계 4위의 대형사로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외국에서도 농협공제의 처리결과를 예의 주시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농협의 일부 특수성(농기계보험 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방카슈랑스 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곤란
- ☐ 통일적인 금융감독권 행사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공제계약은 보험계약으로 간주될 필요
- ☐ 퇴직보험 판매 금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5년간 유예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농협 요구 수용 곤란

5 공적자금 관리 현황

가. 추진경과

□ 구조조정기금 조성(09.5월)과 공자위 출범(09.8월)으로 공적 자금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 부실채권 인수 등 지원과 M&A, 블록세일 등 회수를 병행 추진 중

< 공적자금 지원·회수 내역(10.2월 기준) >

	중점 과제	지원	회수	회수율
공적자금 I	회수	168.6조원	96.2조원	57.0%
공적자금 II	지원	1.1조원	0.3조원	27.9%

□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경제상황이 조기에 회복됨에 따라 자금지원 소요가 크게 줄었으나 기금조성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 부실채권 1.8조원을 0.9조원에 인수, 선박 18척을 0.2조원에 인수

□ 공적자금 지원 금융회사와 기업 지분 매각도 적극 추진 중

(우리금융지주) 09.11월, 10.4월 2차례의 블록세일을 통해 공적 자금 2조원을 회수하고 지분율을 73%에서 57%*로 축소

* 총 7.9조원 규모(10.4.12일 종가 17,250원)

(10.4.12일 현재, 단위:억원)

지원	회수						계
	공모	제1차 블록세일 (04.9월)	제2차 블록세일 (07.6월)	제3차 블록세일 (09.11월)	제4차 블록세일 (10.4월)	배당금 등	
127,663	3,672	3,240	9,168	8,660	11,606	16,139	52,665

(대우인터내셔널) 09.10월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10.3월 예비 입찰절차를 거쳐 최종입찰대상자(Short-list) 선정 완료

○ 현재 최종입찰대상자들이 예비실사 진행 중

* 공동매각협의회 68.2%, 2.3조원(10.4.12일 종가 34,500원), 이중 캡코지분은 35%, 1.2조원

나. 향후 추진계획

□ 공적자금 지원 금융회사와 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

(대우인터내셔널) 금년 내 매각 종결을 목표로 추진

- 5월~6월 : 최종입찰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하반기 : 계약체결 후 매각종결

(우리금융지주) 상반기 중 민영화 계획 마련

- 4월~6월 : 분산매각, 인수·합병, 자회사 분리매각 등 주요 매각 방안별 장단점 비교, 국내외 민영화 사례, 국내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자위에서 충분히 논의

*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연구원 등 관련전문가들이 공자위 논의를 지원

- 6월 : 민영화 추진 계획 마련
- 하반기이후 : 민영화 절차 착수

(기타 소수지분 매각) 제주은행, 한국전력 등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소수지분*도 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면서 조속히 매각 추진

* 제주은행(21.4%, 272억원 상당), 한국전력(5%, 1조1,708억원 상당)

□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은 향후 경기상황, 시장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융회사와 기업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

- 다만, 지원 시급성,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공자위에서 철저히 심의

붙임
금융위원회 간부현황

직명	성명	연락처
위원장	진동수	2156-9500
부위원장	권혁세	2156-9501
금융위 상임위원	이종구	2156-9503
금융위 상임위원	임승태	2156-9504
증권위 상임위원	최규연	2156-9505
사무처장	김주현	2156-9502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최수현	2156-9400
대변인	진웅섭	2156-9540
기획조정관	정지원	2156-9600
금융정책국장	추경호	2156-9700
금융서비스국장	홍영만	2156-9800
자본시장국장	조인강	2156-9801
국제협력관	이헌석	2156-9701
공자위 사무국장	최상목	2156-9440

업 무 현 황

2010. 6. 22



금 융 위 원 회

I. 일반 현황	1
II.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1.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3
2. 금융산업 현황	7
III.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 지원	11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13
3.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14
4.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6
5.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8
6. 국제적 금융규제개혁 논의에 적극 대응	22
IV. 주요현안	
1.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24
2.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27
3. 주요입법의 차질없는 추진	29
[붙임1] 금융위 소관법률 현황	32
[붙임2] 금융위 간부 현황	33

I.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 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 설립

재정경제부(금융, 15과)		금융감독위원회(12과)		금융위원회(21과)
금융정책국(1국 1심의관 7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1국 2과) 금융정보분석원(1원 6과)	+	1관 1실 2국 12과	⇒	본부(1관 2국 1대변인 1심의관 15과)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 1원 6과)

* '09.8.24, 금융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1국 2팀) 설치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 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3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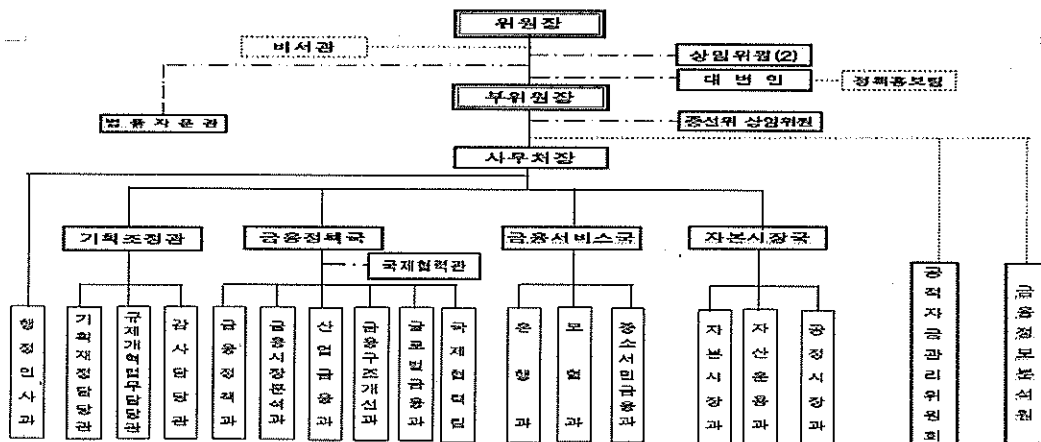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5과 2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4 인 원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계
합계	2	203	4	7	14	230
본부	2	145	4	-	13	164
금융정보분석원	-	46	-	7	1	54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	12	-	-	-	12

II.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1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가. 국제 금융시장 동향

◇ 국제 금융시장은 5월 이후 유럽 재정 위기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들어 점차 안정세를 회복

□ 글로벌 증시는 5월 이후 남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유럽 각국의 긴축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세

○ 6월 들어서도 헝가리의 디폴트 가능성(6.4)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주요국 경제지표 개선* 및 유럽 재정우려 완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中 수출(yoy, %): (10.3)24.3 (4)30.5, (5)48.5 / EU 산업생산(yoy, %): (10.2)4.1 (3)7.7 (4)9.5

** 스페인 35억 규모 국채 발행 및 유로존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개 합의(6.17)

	'09년말	'10.3월말	4월말	5월말	6.4	6.11	6.18	전월말비(%)
다우(美)	10,428	10,857	11,009	10,137	9,932	10,211	10,451	3.1
FTSE(英)	5,413	5,680	5,553	5,188	5,126	5,164	5,251	1.2
독 일	5,957	6,154	6,136	5,964	5,939	6,048	6,217	4.2

○ 5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변동성 지수(VIX)도 최근 들어 소폭 하락 전환

* VIX 지수 : ('09말)22 (10.3월말)18 (4월말)22 (5월말)32 (6.4)35 (6.11)29 (6.18)24

□ 5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단기금리는 6월 들어 보합세인 반면, 美 국채금리는 5월 이후 글로벌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하락세 지속

	'09년말	'10.3월말	4월말	5월말	6.4	6.11	6.18	전월말비(bp)
LIBOR(3m)	0.25	0.29	0.35	0.54	0.54	0.54	0.53	△1
UST(2y)	1.14	1.02	0.96	0.77	0.73	0.73	0.70	△7
UST(10y)	3.84	3.83	3.65	3.28	3.20	3.23	3.21	△7

나. 국내 금융시장 동향

- ◇ 국내 금융시장은 남유럽 재정위기 제부각(5월), 헝가리 디폴트 언급(6.4)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해 주가와 환율 등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
- 대내 요인으로 천안함 피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 하였으나,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주식시장) 5월 이후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하락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외국인이 순매도 (5월 △6.3조원)하면서 국내 증시는 하락

- 다만, 주요국 증시에 비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5월 중 등락율(%) : (韓) △4.7 (美) △9.1 (日) △8.3 (中) △8.6 (英) △4.1 (대만) △7.2

	'09년 말	'10.3월말	'10.4월말	'10.5월말	6.4	6.11	6.21	전월말비
KOSPI	1,683	1,693	1,741	1,641	1,664	1,675	1,740	+6.0%

- 또한, 6월 들어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중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도 순매수로 전환(6.1~21일 중 12,863억원 순매수)

< 투자자별 주식시장 순매수 현황 > (단위 : 억원)

	'09년	'10년	3월	4월	5월	6.1~21
외국인	323,903	62,417	53,611	52,153	△62,680	12,863
기관	△262,716	△44,465	△11,366	△35,507	13,781	1,241
개인	△20,295	△3,471	△38,565	△207	41,903	△13,447

* KOSCOM 체결일 기준(6. 21일 17:00기준)

□ (채권시장) 국고채(3y) 금리는 5월 중 대외요인에 불구하고 안정세를 지속하였으며,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소폭 하락

- 6월 들어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되었으며, 韓銀의 물가안정 언급 등에 따른 금리인상 기대로 상승세

- 반면, CP 및 회사채(AA-) 금리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5월 이후 상승세

< 주요 금리 추이 >

%	'09년말	'10.3월말	4월말	5월말	6.4	6.11	6.21	전월말비
국고(3y)	4.41	3.89	3.61	3.58	3.68	3.68	3.88	+30bp
CD(91d)	2.86	2.78	2.45	2.45	2.45	2.45	2.45	0
CP(91d)	3.07	2.90	2.62	2.69	2.69	2.70	2.70	+1bp
회사채(AA-)	5.53	4.58	4.24	4.66	4.75	4.71	4.77	+11bp

- 한편, 외국인은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채권 보유잔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금리 안정에 기여

* 6월 들어 3.6조원(6.10일)이 만기상환되면서 보유잔고가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조만간 재투자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 외국인 국내 채권보유 잔고 >

	'09말	'10.3월말	4월말	5월말	6.18	전월말비
잔고(조원)	56.5	61.8	65.5	69.0	68.3	△0.7
보유비중(%)	5.57	5.83	6.12	6.40	6.30	△0.10%p

- (외환시장) 환율은 5월 중 외국인 주식 순매도, 역외 달러 매수 등으로 상승하여 한때 1,250원을 상회(5.26일 1,253.3원)

- 6월에도 헝가리 재정불안(6.4) 등에 따른 역외 달러 매수 등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하향 안정세

< 주요 환율 추이 >

	'09년말	'10.3월말	4월말	5월말	6.4	6.11	6.21	전월말비
원-달러	1,165	1,131	1,108	1,203	1,202	1,246	1,172	-2.6%
원-100엔	1,252	1,211	1,181	1,318	1,292	1,360	1,292	-2.0%

참 고

남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에의 영향

-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 코스피 : (09년말)1,683 (10.4말)1,741 (5말)1,641 (6.11) 1,675 (6.21)1,740
환율(원/\$) : (09년말)1,165 (10.4말)1,108 (5말)1,203 (6.11)1,246 (6.21)1,172

- 남유럽 국가에 대한 익스포저, 차입규모가 크지 않아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① '10.4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전체 익스포저(533억\$) 중 남유럽 4개국에 대한 익스포저는 1.2%(6.5억\$) 수준

* 그리스(5.4억\$), 스페인(0.2억\$), 이탈리아(0.9억\$), 포르투갈(0.04억\$)

- ② '10.3월말 현재 국내은행이 남유럽 4개국에서 차입한 규모도 전체 외화차입금(1,041억\$)의 0.3%(2.9억\$)에 불과

* (그리스)0.3억\$ (스페인)1.8억\$ (이탈리아)0.8억\$ (포르투갈) 없음

- ③ 외국인 전체 국내 증권보유액(주식 275.7조원, 채권 69.7조원) 중 남유럽 4개국 자금은 0.3%(0.9조원)에 불과(6.4일 기준)

- 다만, 남유럽국 재정위기가 유럽 he지역으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

- 필요시 단계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

2

금융산업 현황

은행

□ 국내외 경기회복 국면 및 자체 자본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으로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상황

- '10.3월말 국내은행 BIS비율은 14.70%로 08.9월말 이후 상승세 유지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월말	08.9월	08.12월	09.3월	09.6월	09.12월	10.3월
BIS 비율	10.86	12.31	12.92	13.74	14.36	14.70

- '10.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45%이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27% 수준으로 손실흡수능력 양호
- '10.3월말 대출 연체율은 1.07%로 지난해말 0.74%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

<국내은행 연체율 추이(%)>

연(월)말	'03	'04	'05	'06	'07	'08	'09	'10.3
연체율	2.0	1.7	1.2	0.7	0.7	1.03	0.74	1.07

□ '08.3분기 이후 감소추세이던 당기순이익은 '10.1분기 3.4조원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조원)>

분 기	'08.1Q	'08.2Q	'08.3Q	'08.4Q	'09.1Q	'09.2Q	'09.3Q	'09.4Q	'10.1Q
당기순이익	3.3	3.4	1.5	△0.6	0.6	2.1	2.9	1.5	3.4

보 험

□ FY'09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경기회복 등으로 FY'08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

○ '10.3월말 생보(271.1%) 및 손보(302.5%)의 지급여력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56.8%p, 27.3%p 상승

- 생보사 상장 등에 따른 자본확충(2.1조원) 및 당기순이익(4.0조원) 시현에 주로 기인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단위 :%)

구 분	'07.3월말	'08.3월말	'09.3월말	'09.6월말	'10.3월말
생명보험회사	232.9	237.1	214.3	228.9	271.1
손해보험회사	281.0	288.4	275.2	289.2	302.5
계	245.1	250.4	230.5	245.0	279.6

□ FY'09 당기순이익은 4.0조원(생보 2.5조원, 손보 1.5조원)으로 전년대비 112.5%(2.1조원) 증가

○ 금리 하락 및 주가 상승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이익 등 투자이익이 전년 대비 3.1조원(생보 2.6조원, 손보 0.5조원) 증가한데 주로 기인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구 분	FY'06	FY'07	FY'08	FY'09
생명보험회사	1.9	2.1	0.6	2.5
손해보험회사	1.1	1.7	1.3	1.5
계	3.0	3.7	1.9	4.0

금융투자업

□ (증권사) '10.3월말 현재 총 62개사가 영업중

- 총자산은 177조원(자기자본 35.3조원)으로 FY'08대비 19% 증가하는 등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580%(적기시정조치대상 150%미만)로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 유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거래규모 증가 등 주식시장 회복으로 당기순이익은 FY'08대비 47.3% 증가

< 증권산업 주요 경영 지표 >

구 분	FY'05 ('06.3월말)	FY'06 ('07.3월말)	FY'07 ('08.3월말)	FY'08 ('09.3월말)	FY'09 ('10.3월말)
총자산(조원)	68.2	95.8	130.9	148.8	177.0
자기자본(조원)	19.6	22.1	29.7	31.8	35.3
당기순이익(조원)	3.7	2.6	4.4	2.0	2.9
영업용순자본비율(%)	688	606	591	617	580

□ (자산운용사) '10.3월말 현재 총 71개사가 영업중

- 총 수탁고(순자산가치)는 주가회복에도 불구하고 펀드환매 지속 등으로 '10.3월말 현재 329.0조원 수준 유지
- 당기순이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506.1%로 안정적인 수준

< 자산운용산업 주요 경영 지표 >

구 분	FY'05 ('06.3월말)	FY'06 ('07.3월말)	FY'07 ('08.3월말)	FY'08 ('09.3월말)	FY'09 ('10.3월말)
총 수탁고(조원)	218.2	242.9	326.7	323.3	329.0
당기순이익(억원)	2,453	2,632	5,038	4,025	4,578
영업용순자본비율(%)	355.8	383.2	504.4	532.0	506.1

비은행

: 신용카드사·저축은행·신협

- (신용카드사)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

< 신용카드사 주요 경영지표 >

	'07말	'08말	'09말	'10.3말
총자산(조원)	39.3	42.7	44.4	47.9
당기순익(조원)	2.4	1.7	1.9	0.5
조정자기자본비율(%)	26.1	23.9	29.1	28.1
연체율(%)	3.8	3.4	2.2	2.0

* 전업카드사(6) 기준

- (상호저축은행) 최근 3년간 자산규모가 연평균 17%씩 빠르게 성장

- 최근 PF대출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PF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

* PF대출잔액(조원) : ('08.6말)12.2→('09.6말)11→('10.3말)11.9

PF대출연체율(%) : ('08.6말)14.3→('09.6말)9.6→('10.3말)13.7

< 저축은행 주요 경영지표 >

	'07.6말	'08.6말	'09.6말	'10.3말
총자산(조원)	55.0	63.6	75.1	85.5
당기순이익(억원)	6,882	3,782	469	1,484
BIS 비율(%)	9.7	9.4	9.6	9.4
연체율(%)	14.7	14.0	15.1	14.7

- (신협) '09년 중 단위 신협은 비과세예금 한도 확대(2천→3천만원)로 수신은 전년대비 31.3% 증가하였으나 대출규모는 11.4% 증가에 그침

- '09년 단위신협의 당기순이익은 1,840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하는 등 수익구조 개선

< 신용협동조합 주요 경영지표 >

	'07말	'08말	'09말	'10.3말
총자산(조원)	27.1	30.9	39.7	40.9
수신(조원)	23.3	26.5	34.8	36.2
여신(조원)	17.6	20.3	22.9	23.4
당기순익(조원)	0.14	0.12	0.18	0.09
연체율(%)	9.2	8.1	6.9	8.1

Ⅲ.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지원

◇ 금융공기업과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투자자금 등을 원활히 공급하고, 녹색금융도 활성화

가. 금융공기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 자금공급

□ 산은·기은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

○ '10.5월까지 9.4조원 공급('10년 계획 23조원)

□ 적정수준의 자금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

* (국책은행) '10.5월까지 21.1조원 공급('10년 계획 41.1조원)

* (보증기관) '10.5월까지 26.9조원 공급('10년 계획 52.6조원)

□ 금융위기대응을 위한 만기연장, 보증비율 상향조정 등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

○ 보증확대조치 정상화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보완대책 강구

○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용보증제도 운용 개선

□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정책금융공사가 수은·수보 등과의 공조를 통해 원전사업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수행 등을 위한 자금 지원 강화

* 정책금융공사·수보간 수출·해외투자 등 국내기업의 해외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 체결(6.11)

나.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금공급 확대

☐ 회사채 등 증권 발행여건 개선

- 채권판매 정보시스템 구축(10.2월) 및 채권거래 전용시스템(10.4월) 등 채권 유통체계를 개선
- 적격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공시의무(증권신고서 제출 등)를 완화하는 등 적격투자자(QIB) 제도 도입

☐ 우량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투자자금 조달 지원

- 新성장동력기업의 상장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활성화를 통해 비상장 우량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 투자 펀드 등 자금공급 수단 확충

-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펀드 재산의 50%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제도 마련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완료(3.12, 6.11)

- 중소·중견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주체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산유동화제도 개편

다. 녹색금융 활성화

☐ 녹색 세제지원 및 녹색기업 인증제 시행('10.4월)을 바탕으로 녹색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녹색산업에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금융공기업의 정책 금융 지원 대상 기준,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 등을 마련

*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 목표 : (09년) 4.3조원 수준 → (10년) 5.0조원 수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금융지원을 '녹색기술·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탄소 저감 사업'으로 적극 확대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시장 잠재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지난해 총 4,874개 기업에 대한 채권단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591개사*를 대상으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 건설(29) · 조선(7) · 해운(10), 개별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33), 중소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512)

○ 유동성 우려가 제기된 9개 대기업그룹과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자율구조조정(계열사 매각 등)을 적극 유도

□ 금년에도 41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거쳐 재무구조가 취약한 9개 그룹을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5월)

○ 건설 · 조선 · 해운사를 포함한 1,985개 개별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상시평가 실시(4~6월)

* 특히, 부실 우려가 제기된 건설 · 조선 · 해운업에 대해서는 사업전망, 우발채무 등 비재무적 요소도 감안하여 엄격한 평가를 실시토록 지도

○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위험평가(7~10월)를 거쳐 워크아웃 등을 추진할 계획

□ 향후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 금융당국은 하반기중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적극 독려

- ◇ 유동성 및 외환분야 등 잠재된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성 규제체제를 재정비
- ◇ 예금보험제도의 사전적 부실확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해 단기자금시장 체계를 개편

가.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건전성 규제 재정비

□ 은행예대율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에 대한 직접 규제* 추진

* 예대율(CD제외)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13년말 유예기간 부여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 은행권에 대한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및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 시행('10.1.1)

* 단,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화 가중치 부여, 외화안전자산 보유 등은 '10.7.1일 시행

- 후속조치로 중장기 외화자금관리 강화, 외은지점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유도 등 2차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10.6.13)

□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 금융부문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

□ 국제적 논의 등을 반영하여 건전성 규제체제 재정비

- 금융회사의 임직원보상체계개편방안 시행 및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 마련

나. 예금보험기능 강화

- ☐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관리 외에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감시·지도 등 사전적 부실방지 기능을 강화
 - 금융회사 및 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평가 강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실시 등 위험감시기능을 강화
 -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단기적·사후적 점검 방식에서 장기적·사전적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 전환
- ☐ 금융신상품 출현에 따른 보호대상 예금범위 등을 개선
- ☐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2014년)을 위해 객관적인 차등평가 기준개발, 연도별 로드맵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

다. 단기자금시장 체계 개선

- ☐ 금융회사의 단기자금조달이 콜시장(1일물 무담보 콜)에 편중되어 콜시장 위축시 전체 금융권의 단기유동성에 문제 발생
- ⇒ 위기 재발시 리스크 완화 및 단기자금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단기자금시장 체계 개선 (현행 콜·CP시장위주 → RP·단기사채시장 육성)
- RP(환매조건부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채권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유도
 - * 자산운용사 등의 RP 매매 규제완화, RP시장 참여기관 확대, 각종 거래인프라 개선 등
 - 금융회사의 과도한 콜거래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 CP(기업어음) 거래수요는 전자화된 단기채권으로 흡수하여 시장 투명성 강화, 자금조달의 신속성·적시성 제고
 - * CP와 유사한 발행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유통성은 더욱 강화된 단기채권 도입 등을 위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

4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이 위기 이후 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
 - 영업규제 개혁, 금융공기업 민영화 및 금융인프라의 개선을 지속 추진

가.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

□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 유도

- 경기회복 등에 따라 예금유치·자산확대 등 무리한 외형 경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 구조조정기금(10년 기금운용계획 10조원 한도)과 민간메드뱅크를 통한 부실채권의 지속적 감축을 유도

□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경영효율화 및 수익기반 확충** 지원

* 정기적 스트레스테스트, 위기대응계획 수립,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등

** (은행) 신상품 개발, (증권) 수익구조를 위탁매매 위주에서 IB업무로 다양화 등

□ 기능면에서 동일하지만 개별업권마다 다르게 규정된 사항*의 통일적 정비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가칭)」 제정 추진

* 예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은행·금투) 0.05%, (보험) 0.5%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논의동향을 반영하고, 사외이사 등 기존 제도를 진단·평가하여 개선

* 예시) 이사·사외이사·집행간부 등 결격요건, 사외이사 전문성·책임성 강화, 내부통제제도, 위험관리제도,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복합그룹의 지배구조 등

나. 금융업 신규진입 및 업무범위 확대

- 시장리스크와 투자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 신규진입 및 업무확대 단계적 허용(10.5월)

* 전문·특화 소형 증권회사 신설 및 시장리스크가 적은 장외파생업무 등을 추가 허용

- 저축은행의 자산운용규제를 합리화(장부상기준→BIS 기준) 하고 영업구역을 확대(11→6단위)

* (현행) 서울, 경기/인천,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광주/전남, 전북, 제주, 대전/충남, 충북
→ (변경)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 단위신탁과 중앙회간 연계대출 제한을 완화하여 신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신용리스크 분산 유도

* 중앙회의 대출한도 : (현행)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 초과분
(개선)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50% 초과분

다.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 신용평가의 품질·투명성 제고 및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 신평사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신용평가의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
- 신용정보 활용기준 정비 및 공공정보 확충 등을 통해 신용도 산정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

- 회계감리제도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인프라 선진화

- IFRS 특성에 맞춰 연결감리 확대 등 회계감리제도 전면 개편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중앙청산소(CCP : Central Counter Party) 설립('12년까지 설립 예정) 등 제도개편 방안 마련

- ◇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서민층에 대한 금융비용부담을 완화
-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집행체제도 실효성 있게 정비

가. 서민층 금융지원 확충

□ 미소금융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미소금융지점의 지속 확대(상반기 중 50개 이상), 지원 요건·절차 개선 및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미소금융을 활성화
 - 그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개선하고 자금수요가 많은 전통시장 상인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미소금융활성화 방안 마련(10.5)
 - * 2천만원이하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완화(50%→30%) 등
- 전문인력 양성 강화, 미소금융 지점 감독 효율화, 유관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법적·제도적 인프라 개선

□ 서민금융회사의 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하여 서민대출기능 회복 유도
-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증부 서민대출을 통해 서민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
 - '10년 하반기부터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되, 보증재원(2조원)은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1조원씩 출연
- 상호금융회사의 변동금리부 대출금리에 시장금리 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 변경을 정기화 하는 등 여신 체제 합리화 유도

□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유도

- PF 등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 강화**
 - PF여신 한도를 단계적 축소(30%→25%(‘11년)→ 20%(‘13년))하고, 부동산 관련 여신 비중에 대한 포괄적 한도(50%) 신설
- 대형 저축은행부터 **BIS 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 ‘15년까지 기준 BIS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
- 대주주 자격에 대한 주기적 심사(Dynamic fit & proper test) 제도의 철저한 시행(‘10.9월)을 통해 부적격 대주주 퇴출

□ 대부업체의 건전영업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 시장영향이 큰 대형업체의 영업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관리감독시스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검토

나.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강화 및 제도선진화

□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만명) : (‘08.12) 227 → (‘09.3) 221→ (‘09.6) 211 → (‘09.12) 193

- 신용회복 신청시 취업을 지원하고, 1년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대출을 확대

□ 개인회생·파산 신청전 사전상담제도를 강화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체계를 선진화

다. 중산 · 서민층의 금융이용부담 완화

□ 가계대출 관련 금융비용 경감

-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유도하여 가계의 금리변동 리스크 부담 경감
 - * 은행별 고정금리대출 활성화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대한 점검 강화
- CD금리연동 대출이외 새로 도입된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연동대출상품 개발을 지속 유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 * 은행연합회에서 10.2.16부터 매월 15일 COFIX 금리를 공시

□ 대부업체 고금리의 점진적 인하 유도

- 대부업체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10.7월 시행계획)
- 대부업체간 이용자 신용정보 공유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효율화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고금리 인하 환경 조성
-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

□ 중소가맹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등 추진

- * 가맹점이 여러 카드사로부터의 카드대금 입금내역 등을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카드대금 입금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매출자료 관리·분석 및 세무 신고(부가세, 소득세 등) 등에 활용 가능

※ 한편, 10.4월 각 카드사별로 재래시장·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백화점 카드수수료율 수준 이하로 인하

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 흐름에 걸맞게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를 재정비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전반에 걸쳐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예 : 상품공시, 판매, 약관, 광고 등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관련

- 이를 토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감독행정체계를 보강

□ 체계적인 금융교육 추진을 위해 금융교육 추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형교육 실시

* 금융교육협의회,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등

- 금융교육시범학교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경제·금융 교육 강화

- 고령화에 대비하여 주택연금(역모기지), 개인연금저축·보험의 활용 등을 포함하는 은퇴후 자산관리 설계 및 안정적인 자산운용 방법 등 교육 강화

6 국제적 금융규제개혁 논의에 적극 대응

◇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FSB 등 금융규제개혁*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①건전성 규제 강화, ②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강화, ③보상원칙 이행, ④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강화, ⑤회계기준 개선 등

가. 건전성 규제 강화

□ 자본규제(Basel II) 강화 및 유동성 규제 등 도입

○ 자본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의 질(Quality)과 양(Quantity)을 강화

○ 유동성 기준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 등을 새로이 도입

⇒ '10.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각국은 경기회복을 전제로 '12년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

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원활한 정리 및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

* ① 추가자본 부과 등 부실위험 감축(사전예방), ② 부실화시 신속한 정리(사후정리), ③ 전염위험 축소를 위한 인프라 개선(전염차단)

⇒ '10.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SIFI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

다. 보상원칙 이행·점검

- '09.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FSB의 보상원칙을 채택하고, '09.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이행기준을 채택

⇒ 우리나라는 보상원칙 모범기준을 마련('10.1월)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이행상황 점검중

* '10.3월 FSB 상호평가(peer review) 결과, 원칙과 기준 도입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

라. 장외파생상품시장(OTC derivative market) 규제 강화

-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party risk) 축소방안 마련을 추진

* 투명성 제고 :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
* 거래상대방 리스크 축소 :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

⇒ 우리나라는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10.2월)하고 현재 T/F 운영중

마. 금융권 분담방안 마련

- 국가간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분담방안 원칙(principle) 수립 시 고려사항*에 합의(부산 G-20 재무장관회의)

* ① 납세자의 비용 부담 방지 ② 금융시스템 리스크 축소, ③ 경기 호황기 및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신용공급 유지, ④ 개별국가 상황 고려 ⑤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촉진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국내 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

바. 회계기준 개선

- 재무정보의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1.6월까지 국제회계기준 단일화를 위한 방안마련 추진

* 국제회계기준위(IASB)와 재무회계기준위(FASB)는 기준 단일화를 위한 작업을 지속 추진중

IV. 주요현안

1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환부문의 취약요인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1차) 마련·시행('10.1월)

< 1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

	2010년 이전		2010년 이후	대상
외화유동성 비율	7일·1개월·3개월 이내 만기도래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을 일정수준 유지	⇒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부여 ('10.7.1일 시행)	국내 은행
중장기 재원 조달 비율	$\frac{1년이상외화차입금}{1년이상외화대출} \geq 80\%$	⇒	$\frac{1년초과외화차입금}{1년이상외화대출} \geq 90\%$	국내 은행
외화안전자산 보유	관련 규제 없음	⇒	위기시 2개월간 자금유출 가능액 또는 총 외화자산의 2% 이상 ('10.7.1일 시행)	국내 은행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규제 없음	⇒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 비상자금조달 계획 사전 수립	국내 은행
외환파생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관련 규제 없음	⇒	실물거래의 125%이상 선물환거래 억제	국내은행 외은지점

- 동 방안 시행 후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실현

* 외화유동성비율(%) : ('09.12말)105.1 ('10.2말)105.1 (3말)105.5 (5말)106.0

- 다만, 은행권 외화자금 조달의 장기화 및 외은지점의 외화 유동성 관리 등의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

* 10.3월말 외은지점은 총조달(1,054억불) 중 외화조달(829억불)이 79%를 차지하는 반면, 총운용(1,023억불) 중 원화운용(585억불)이 51%를 차지하고 있어 자산·부채간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

⇒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2차) 마련(6.13일)

2. 세부 방안

□ 국내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외화유동성비율 규제'와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를 강화

○ (외화유동성 비율) 은행은 자율적*으로 일별 관리하고, 그 현황을 금융당국에 월별 보고하도록 하여 모니터링을 강화

* 외화유동성 비율 일별관리 실적은 감독상 모니터링 지표로만 활용하고, 위반여부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월 말일기준 적용(월별관리)을 유지

○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로 강화하여 자금조달의 장기화 유도

- 비율 산출시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고,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 외은지점에 대해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유도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 장기화 및 자체적인 안정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 유도

○ 다만,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약속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 면제

* 외은지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내용은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하되, 외은지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예정

*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자금조달원 다변화, 위기상황분석 및 비상조달계획 등

□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국내은행·외은지점 공통)

<참고>**기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1]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은행 등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운영

* 선물, 외환·통화스왑, NDF 등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

- (국내은행·증권·종금사)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 (외은지점) 전월말 자기자본의 250%(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 결정)

☐ 은행 부담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부여 및 기존거래분 예외 인정

- 시행후 3개월의 유예기간 설정, 유예기간 중에는 포지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 기존 거래분으로 인하여 포지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분은 예외를 인정(최장 2년까지 허용(필요시 연장))

[2] 외화대출 관리 강화☐ 신규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하되,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하에 허용

- 다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에서 외화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

☐ 아울러, 외화대출 증가율이 클수록 외화대출에 대한 감독 수준을 높여가는 단계별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3] 자본유출입 대응능력 확충**☐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종합 예측모형(EWS) 마련 및 보완), 금융안전망 구축(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구축), 외환보유액 관리(급격한 자본유출 발생시에도 적절히 대응)

2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가. 추진경과

□ 구조조정기금 조성(09.5월)과 공자위 출범(09.8월)으로 공적 자금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 부실채권 인수 등 지원과 M&A, 블록세일 등 회수를 병행 추진 중

< 공적자금 지원·회수 내역(10.4월 기준) >

	중점 과제	지원	회수	회수율
공적자금 I ¹⁾	회수	168.6조원	97.9조원	58.0%
공적자금 II ²⁾	지원	1.16조원	0.35조원	30.5%

※ 1) 1997년 경제위기 이후 2002년까지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자금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조성한 자금

□ 부실채권 매입, 선박인수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 부실채권 1.8조원을 0.9조원에 인수, 선박 23척을 0.3조원에 인수

□ 공적자금 지원 금융회사와 기업 지분 매각도 적극 추진 중

(우리금융지주) 09.11월, 10.4월 2차례의 블록세일을 통해 공적 자금 2조원을 회수하고 지분율을 73%에서 57%*로 축소

* 총 7.2조원 규모(10.6.21일 종가 15,600원)

(10.6.21일 현재, 단위:억원)

지원	회수						계
	공모	제1차 블록세일 (04.9월)	제2차 블록세일 (07.6월)	제3차 블록세일 (09.11월)	제4차 블록세일 (10.4월)	배당금 등	
127,663	3,672	3,240	9,168	8,660	11,606	16,139	52,486

(대우인터내셔널) '09.10.28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10.5월 최종 입찰절차를 거쳐 '10.5.14 (주)포스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향후 추진계획

□ 공적자금 지원 금융회사와 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

(우리금융지주) 상반기 중 민영화 계획 마련

- 주요 매각 방안별 장단점 비교, 국내외 민영화 사례, 국내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자위에서 충분히 논의

*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및 국내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검토

- 하반기이후 : 민영화 절차 착수

(기타 지분 매각)

- 대우인터내셔널은 7~8월 실사 조정 및 계약체결 등 금년내 매각종결을 목표로 추진

- 예보 보유 소수지분*도 시장여건 등을 보아 조속히 매각 추진

* 제주은행(21.4%, 266억원 상당), 한국전력(5%, 1조 790억원 상당) 등

□ 향후 구조조정기금은 금융회사 부실채권, 해운사 선박, 부동산 리츠·펀드에 투자를 지속하되

- 경제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회사와 기업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원하도록 운용

- 또한, 지원 필요성,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사후관리 등에 대해 공자위에서 철저히 심의

3 주요입법의 차질없는 추진

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10.4.8 정무위 회부)

☐ 제정필요성

- 현행 기업어음증권(CP)시장의 문제점(불투명·유통시장발제한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

☐ 주요내용

- (개념) 전자단기사채는 1년이하 만기, 사채 금액 1억원 이상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추고 전자적으로 등록된 것
- (발행·유통) 실물발행 없이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발행되고, 계좌부를 통해 양도, 부수적 권리관계(담보·신탁) 처리
- (편의성 제고) 이사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상법상 사채원부 작성의무 등이 면제되어 발행 및 관리가 편리
- (정보공개) 발행되는 단기사채의 종류, 종목, 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예탁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 향후계획

- 금년중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

나. (가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하반기 국회 제출예정)

□ 제정필요성

- 현행 개별법상 개별업권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

* 예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은행·금투) 0.05%, (보험) 0.5%

-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주요내용

- '지배구조'의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개별업권마다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통일적으로 정비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

* 예시) 금융회사 보상제도, 사외이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등

- 그동안 운영되어 온 지배구조제도*에 대해 평가하여 필요시 제도를 개선

* 예시) 이사·사외이사·집행간부 등 결격요건, 내부통제제도,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복합그룹의 지배구조 등

□ 향후계획

- 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업권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률제정(안)을 만들어 하반기 국회제출

* 금융연구원은 6.23일(거래소, 14:00~) 그동안 T/F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다.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하반기 국회 제출 추진예정]

□ 제정필요성

- 개별 금융업권(제조업권)과 관계없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을 정립하고,
 - ※ 상품·서비스의 실질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 체계를 실현하고 업권별 규제차익과 규제공백을 제거
- 소비자 보호 목적에서 운용 중인 판매규제-분쟁조정-소비자 교육 등 각종 제도·정책을 하나의 법에서 유기적으로 결합·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원칙 명확화, 판매행위 규제 재정립* 및 금융소비자 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 모든 금융상품을 (업권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의 위험도·이해 가능성 등에 따라 재분류하고, 실질에 맞는 판매·권유행위 규제 도입

□ 향후계획

-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TF 및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6.30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공청회* 개최 예정
 - * KDI·자본연·서울대 주관으로 6.30일(거래소, 1400~)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가급적* 올해내 국회제출을 추진
 - * 현행 개별법상 영업행위규제 검토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 의견 수렴 필요성 등 방대한 입법작업 고려 필요

붙임 1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구 분	법 률
금융정책 관련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산업금융 관련 (6)	·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5)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글로벌금융 관련 (1)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6)	·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보험 관련 (2)	·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 관련 (7)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이체에 관한 특별법,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 관련 (6)	· 공사채등록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회계 관련 (2)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정보분석원 (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계 (40)	

붙임 2
금융위 간부현황

직 명	성 명	연 락 처
위원장	진동수	2156-9500
부위원장	권혁세	2156-9501
금융위 상임위원	이종구	2156-9503
금융위 상임위원	최종구	2156-9504
증선위 상임위원	최규연	2156-9505
사무처장	김주현	2156-9502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최수현	2156-9400
대변인	진웅섭	2156-9540
기획조정관	정지원	2156-9600
금융정책국장	정은보	2156-9700
금융서비스국장	고승범	2156-9800
자본시장국장	조인강	2156-9801
국제협력관	이헌석	2156-9701
공자위 사무국장	최상목	2156-9440

2. 2010년 예산 자료 및 결산자료

☐ 별도첨부

2010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개요

2010. 1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1
Ⅱ. 일반회계 세입예산	3
Ⅲ. 일반회계 세출예산	4
1. 총 괄	4
2. 인건비	5
3. 기본경비	5
4. 사업경비	6
5. 내부거래	7
〈별 첨〉 사업별 설명자료	8

I 금융위원회 일반현황

1 목적 및 기능

가. 설립경위

- ☐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금융행정시스템을 전면 재조정('08.3)
 - 재정부 금융정책기능과 금감위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분리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금감원의 독립성도 강화

나. 설립목적

- ☐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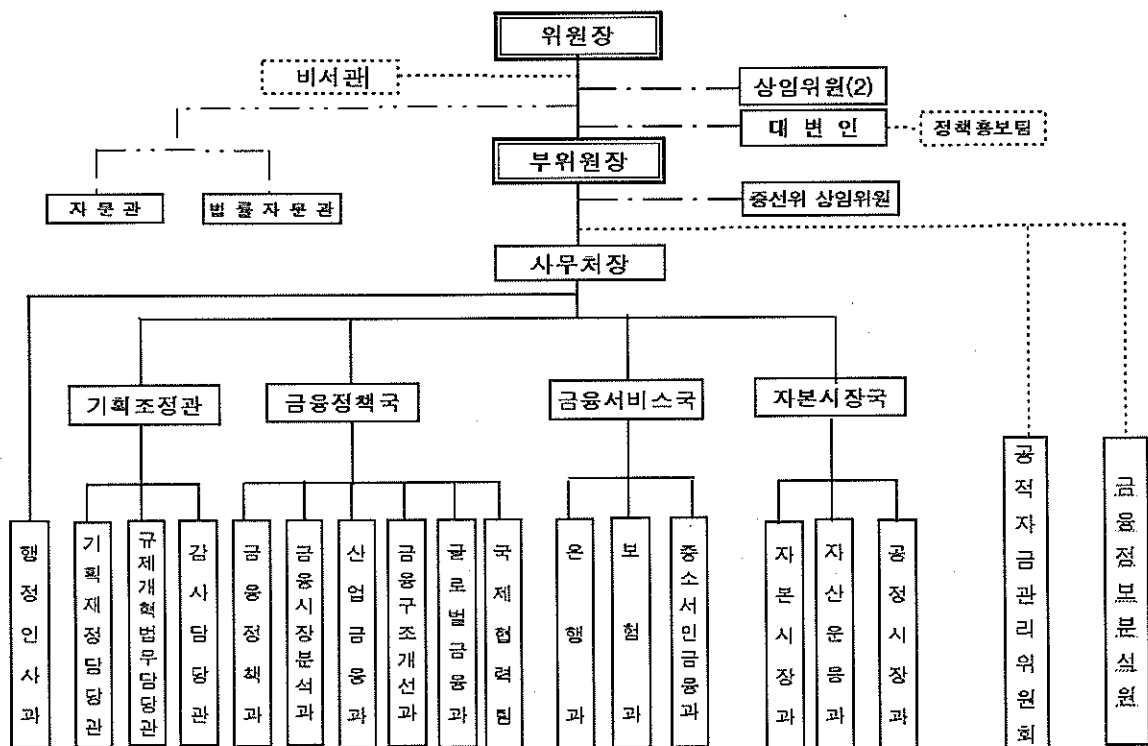
다. 주요기능

-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조직 및 정원

가. 조직

-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
 -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소속으로 설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
- ☐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6과,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 분석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나. 정 원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계
합계	2	203	4	7	14	230
본부	2	145	4	-	13	164
금융정보분석원	-	46	-	7	1	54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	12	-	-	-	12

Ⅱ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억 93백만원으로 09년도 예산대비 11억 20백만원 감소(△8.4% 감)

(단위 : 백만원)

구 분(항)	'09예산(A)	'10예산(B)	증감액 (B-A)	증감률 (%)
합 계	13,313	12,193	△ 1,120	△ 8.4
전대차관 원금회수	895	1,110	215	24.0
전대차관 이자수입	197	127	△ 70	△ 35.5
벌 금 및 물 수 금	12,130	10,875	△ 1,255	△ 10.3
가 산 금	91	81	△ 10	△ 11.0

□ 주요 증감내역

○ 전대차관 원금 회수('09년 대비 215백만원 증액)

- 기준환율 상승(1,100원 → 1,150원)을 반영

○ 전대차관 이자수입('09년 대비 70백만원 감액)

- 미상환 재전대 원금 감소 및 기준환율 상승(1,100원 → 1,150원) 반영

*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의 IBRD전대차관(8,895,694불) 및 공인회계사회 IBRD전대차관(129,020불)를 '04년부터 10년간 분할 상환

○ 벌금 및 몰수금('09년 대비 1,255백만원 감액)

- 최근 4년간('05년~'08년) 벌금 및 몰수금의 수입액 평균치 반영

○ 가산금('09년 대비 10백만원 감액)

- 최근 4년간('05년~'08년) 가산금 수입액 평균치 반영

Ⅲ 일반회계 세출예산

1. 총괄

□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1,463억 91백만원으로 09년도 예산대비 2,595억 84백만원 증가(9.0% 증)

○ 금융위원회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1,431억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9% 감소(작년 산은출자 9천억원, 기은출자 8천억원, 자산관리공사출자 6천억원, 주택금융공사출자 4천억원 등 2조 7천억원 중에서 산은 100억원, 기은 300억원을 제외한 2조 6,600억원 삭감)

○ 반면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3조원을 반영(전년대비 3,714% 증)

(단위 : 백만원)

구분	'09예산(A)	'10예산(B)	증감액 (B-A)	증감율 (%)
합계	2,886,807 (700,000)*	3,146,391	259,584	9.0
□ 금융위원회 운영	2,804,937	143,103	△2,661,834	△94.9
○ 인건비	14,313	15,028	715	5.0
○ 기본경비	8,597	7,141	△1,456	△16.9
○ 사업비	2,782,027 (700,000)*	120,934	△2,661,093	△95.7
□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81,870	3,003,288	2,921,418	3,568.4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78,660	3,000,000	2,921,340	3,713.9
○ IBRD차관 원금 상환	2,636	2,948	312	11.8
○ IBRD차관 이자 상환	574	340	△234	△40.8

* 09년 추경증액분

2. 인 건 비

- 2010년 인건비 예산은 150억 28백만원으로 09년도 예산대비 7억 15백만원 증가(5.0%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A)	'10예산(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14,313	15,028	715	5.0
○ 인 건 비	13,437	14,112	675	5.0
○ 직무수행경비	876	916	40	4.6

□ 증감 주요내역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자위 사무국 신설 등 정원증가(10%증 : 209명 → 230명)에도 불구하고 5% 증가에 그침

3. 기본경비

- 2010년 기본경비 예산은 71억 41백만원으로 09년도 예산 대비 14억 56백만원 감소(16.9% 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A)	'10예산(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8,597	7,141 ¹⁾	△ 1,456	△ 16.9
○ 기획조정관실	7,536	5,550	△ 1,986	△ 26.4
○ 대변인실	208	185	△ 23	△ 11.1
○ 금융정책국	329	370	41	12.5
○ 금융서비스국	524	289 ²⁾	△ 235	△ 44.8
○ 자본시장국	0	287 ²⁾	287	순증
○ 공자위	0	459	459	순증

1) 청사이전에 따른 금년 이사 관련비용 19억 39백만원 삭감

2) 금융서비스국에서 자본시장국 직제분리에 따른 증감

□ 증감 주요내역

- 공자위 사무국 신설 및 정원증가(21명)에 따른 기본경비 4억 83백만원 증가

4. 사업경비

□ 2010년 사업경비 예산은 1,209억 34백만원으로 09년도 예산 대비 2조 6,610억 93백만원 감소(95.7% 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A)	'10예산(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2,782,027 (700,000)	120,934	Δ2,661,093	Δ95.7
○ 금융업법체계개편	79	79	0	0.0
○ 금융중심지추진	300	298	Δ2	Δ0.7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450	500	50	11.1
○ 금융관련 국제협력	373	637	264	70.8
○ 금융전문인력양성	1,500	1,900	400	26.7
○ 녹색금융		150	150	순증
○ 한국산업은행출자	900,000	10,000	Δ890,000	Δ98.9
○ 한국중소기업은행출자	800,000 (300,000)	30,000	Δ770,000	Δ96.3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600,000 (200,000)	-	Δ600,000	Δ100.0
○ 저축의날행사및저축장려	72	74	2	2.8
○ 모기지론이차보전	3,903	4,563	660	16.9
○ 역모기지론출연	3,000	-	Δ3,000	Δ100.0
○ 농어기목돈미련저축장려 기금출연	65,000	65,200	200	0.3
○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400,000 (200,000)	-	Δ400,000	Δ100.0
○ 금융정보분석원 운영	1,102	1,256	154	14.0
○ FIU전산망구축운영	4,757	4,656	Δ101	Δ2.1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127	121	Δ6	Δ4.7
○ 정보화지원	604	570	Δ34	Δ5.6
○ 정책연구개발	500	600	100	20.0
○ 금융정책알리기	260	330	70	26.9

□ 증감 주요내역

-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모기지론이차보전사업비 증가('09년 대비 6억 60백만원 증)

-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G-20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총회 등 참석에 소요되는 국제업무여비 및 국제금융감독 기구에 납부하여야 하는 국제분담금 등 국제협력사업비 증가('09년 대비 2억 64백만원 증)
-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과 녹색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자금지원 확대 방안 및 정책수립을 위한 녹색금융사업비 150백만원 신규편성
- 금융위기극복을 위하여 편성하였던 산은 등에 대한 출자 예산 감액 편성('09년 대비 2조 6,600억원 감)

5.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2010년 내부거래 예산은 3조 32억 88백만원으로 09년도 예산 대비 2조 9,214억 18백만원 증가(3,568.4%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A)	'10예산(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81,870	3,003,288	2,921,418	3,568.4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78,660	3,000,000	2,921,340	3,713.9
○ IBRD차관 원금 상환	2,636	2,948	312	11.8
○ IBRD차관 이자 상환	574	340	△234	△40.8

□ 증감 주요내역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09년 대비 2조 9,213억원, 3,714% 증액)
- IBRD차관 원리금 상환('09년 대비 78백만원, 2.4% 증액)
 - 기준환율 상승(1,100원 → 1,150원) 및 '04년부터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 반영

<별첨> 사업별 설명자료

【금융정책국】

1. 금융업법 체계개편	9
2. 금융중심지추진	10
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11
4. 금융관련 국제협력	12
5. 금융전문인력 양성	13
6. 녹색금융	14
7. 한국산업은행 출자	15
8. 중소기업은행 출자	16

【금융서비스국】

9.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17
10. 모기지론 이차보전	18
1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19

【금융정보분석원】

12. FIU운영	20
13. FIU 전산망 구축·운영	21

【본 부】

1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2
15. 정보화 지원(정보화)	23
16. 정책연구개발	24
17. 금융정책알리기	25

【회계기금간 거래】

18.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26
19. IBRD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27

1 금융업법 체계개편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68	79	79	-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업종별 금융업법체계를 기능별 체계로 개편하고 규제합리화와 제도개선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화를 이룩함

□ 사업내용

- 중장기 과제로 기능별 통합작업을 계속 (2, 3단계)

< 금융업법 체계개편의 단계 >

① 업권별 통합법 제정(1단계)	② 기능별 법 통합 작업(2단계)	③ 금융통합법 제정 (최종 단계)
- 지통법 제정(자본시장 관련법 통합) → 완료 - 은행법·보험업법 정비	-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진입· 퇴출에 관한 법 등 제정	- 장기적으로 추진

..... 향후 추진 분야

- 단기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G-20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국제적인 규제·감독정책 논의 흐름에 걸 맞는 효과적·효율적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의 재정비를 통해 건전성 규제 합리화

* 정책연구개발 사업(7100-7133-260-00)으로 실시

2 금융중심지추진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287	300	298	△2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

□ 사업내용

-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자산운용의 국제화, 글로벌 플레이어의 출연 및 국내금융시장 진입여건 개선”이라는 목표를 설정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07.12)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금융중심지 정책의 법적 추진체계 마련
-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설치('08.4)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시행령 §11 ④)
- 금융관련 법령의 영문화 작업을 통해 영문법규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함으로써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을 활성화

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450	450	500	5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경영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조성을 촉진

☐ 사업내용(중심지법 §13 ①)

- 외국 금융기관 국내 진입지원
 - 외국사 등의 국내 영업상 불합리한 제도, 애로사항 원스탑 서비스 지원 및 외국계 금융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화채널 운영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 외국의 법규·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데이터베이스화) 및 감독 규정, 시행 세칙에 대한 영문화 서비스 제공
-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세제, 출입국, 교육 등 행정사항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및 영어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고충처리

4 금융관련 국제협력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193	373	637	264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최근 국제금융환경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감독기구 활동 등 글로벌스탠다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긴밀한 국제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각종 금융감독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무형의 자산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 및 적극적인 이해관계 반영 필요성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비하여, FTA체결 다변화를 통한 실용적·능동적 개방 및 FTA·WTO 등 양자·다자간 금융협상에 적극 대응의 필요
- 최근 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해외투자자 설명회(IR) 개최 등의 지속적인 추진

5 금융전문인력 양성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1,500	1,500	1,900	4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산업의 본질상 금융인력이 핵심자원이므로 금융전문가 양성은 중심지 조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 “금융전문교육기관 확충을 통해 금융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음.”[국정과제 금융산업 발전방안 (Ⅱ-3-6)]

□ 사업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 등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 특히 녹색금융을 중장기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녹색금융 MBA, 녹색금융실무, 녹색금융 자격증 등 녹색금융 관련 전문인력도 중점 육성

6

녹색금융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	-	150	15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녹색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모색

☐ 사업내용

- 정부의 국정과제인 녹색성장을 위해선 녹색산업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들어 갈 수 있게끔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녹색금융 사업이 필수임
- 녹색금융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해외의 우수사례에 대한 조사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
- 이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녹색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른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마련
- 방안이 마련되면 실행에 옮겨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기 개선을 통해 아시아 탄소금융시장을 선점하고, 녹색금융 상품의 활성화와 적합한 인프라 구축으로 녹색산업 부문의 선진화를 도모

7 한국산업은행 출자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	900,000	10,000	△890,0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은의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지원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하여 정부 예산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지원

☐ 사업내용

- '09.7.2 정부 발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 방안」에 따라,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은, 기은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특별 설비투자펀드를 조성('09.8월)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산은 1.4조원(정책금융공사 0.8조원 포함), 기은 0.6조원

※ <산업은행 출자 개요>

- 사업비 : 400억, 사업기간 : 2009~2010년
- 시행주체 : 산업은행, 지원형태 : 출자

8 중소기업은행 출자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	800,000 (300,000)	30,000	△770,0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은의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지원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하여 정부 예산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지원

☐ 사업내용

- '09.7.2 정부 발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 방안」에 따라,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은, 기은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특별 설비투자펀드를 조성('09.8월)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산은 1.4조원(정책금융공사 0.8조원 포함), 기은 0.6조원

※ <기업은행 출자 개요>

- 사업비 : 400억, 사업기간 : 2009~2010년
- 시행주체 : 기업은행, 지원형태 : 출자

9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장려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56	72	74	2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축의 날 행사 및 저축홍보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저축의식을 고양하고, 국내투자재원의 조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내실있는 경제성장을 도모

□ 사업내용

- 한국은행이 적자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이관을 요청해옴에 따라 '08년부터 동 업무를 우리위원회에서 직접 수행
- 건전한 소비문화와 더불어 건전한 저축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여 금융자원의 원활한 유통 증진
- 저축유공자 포상을 매년도 기념행사와 더불어 실시하여 저축 미담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며, 어린이 금융생활길잡이 등 저축 교육 실시

10 모기지론 이차보전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1,889	3,903	4,563	66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모기지론의 이차를 보전

☐ 사업내용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하여 모기지론 금리를 차등(0.5~1.0%p) 우대
 - '05.10.31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출시(1년간 한시 판매)
 - '07.8.27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재개

〈 소득수준별 금리우대 내역 〉

	차입자 연소득		
	16백만원 이하	16백만원 초과 ~ 18백만원 이하	18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모기지론 기준금리	만기별 기준금리		
이차보전금리	1.0%	0.75%	0.5%

1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89,206	65,000	65,200	2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장려금* 지급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출연

* 일반농어민 : 연 1.5 ~ 2.5%, 저소득농어민 : 연 6.0 ~ 9.6%

☐ 사업내용

- '10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 예상소요액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산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에 의거 정부는 매년도 마다 저축장려금 예상소요액의 1/2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함

12 금융정보분석원(FIU) 운영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1,131	1,102	1,256	154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한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 지원
- 테러자금방지와 관련된 국제적 협조시스템 강화,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국제적 기준 준수 등 국제공조와 강화에 부응하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 제고

□ 사업내용

- 9.11테러 이후 테러자금조달 억제와 관련한 국가간 공조체제 강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 및 국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예산

○ 세부사업 내용

- 비정규직 보수 : 98백만원
- 관서운영비 : 454백만원
- 여비 : 211백만원
- 업무추진비 : 62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 155백만원
- 해외경상이전(국제분담금) : 257백만원
- 비정규직 보험료, 자산취득비 등 : 18백만원

13 FIU 전산망 구축·운영

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4,044	4,757	4,656	△101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3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IT기술을 지원
 - * 혐의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가 권고하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화 추진
 -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사업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회적인 환경변화를 신속히 FIU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 6천개 금융기관이 사각지대 없이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FIU 전산망의 기능을 개선
- 세부사업 내용
 - 장비 임차료 : 2,900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비 : 810백만원
 - 위탁사업 및 컨설팅 : 858백만원
 - 전산망 통신료 : 36백만원
 - 노후 장비 교체 등 수용비 : 52백만원

* FIU 전산망은 보안유지 필요성 등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 이관대상이 아님

14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76	127	121	△6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조직비전 공유를 위한 다양한 창의 혁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능력개발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창의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행정효율성 및 능력 개발을 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 사업내용

- 위탁전문교육, 금융전문가 강의 및 혁신강의,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 금융포럼 개최, 혁신학습단 운영
- 조직비전 공유 및 직원들의 변화관리, 창의역량 제고 등 기관 역량 강화 및 정책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 조직 혁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업무유공자 및 변화관리·규제 개혁 우수부서 포상

15 정보화 지원(정보화)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555	604	570	△34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화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도모
-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부내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보완 및 정보시스템 확충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 금융위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운영·관리 실시
 - * 공정위,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대부분의 부처가 위탁운영 실시
- 전용회선 사용료 및 보안USB, 프린터 공유기 등 전산소모품 구입
- 금융회사가 정보보호 수준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보호 수준 측정 및 취약부분 개선 촉진
 - 전자금융 사고신고, 사이버 위기상황전파 등 긴급 상황을 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함으로서 신속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358	500	600	1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정책제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 및 정책현안에 대한 용역 수행을 통하여 정책 수립·집행의 객관성을 도모

☐ 사업내용

- 금융복합화에 따른 그룹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규제·감독 선진화에 관한 연구
-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감시단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금융기관 여신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BIS 자기자본비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과 연계한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제재 실효성 제고방안
- IT기술발전에 대응한 금융보안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등

<참 고>

- ☐ 금융정책에 대한 수요가 날로 다변화·고도화되고 있어 고품질의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필요

17 금융정책알리기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	260	330	7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금융이용자 보호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책을 국민과 시장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대국민 이해도 제고
- 종래 금융이라는 차가운 이미지에서 탈피, 따뜻하고 다가서는 親서민 금융정책 이미지를 부각하여 정부 정책 신뢰성 제고

□ 사업내용

- 정책블로그 개편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홍보하는 '금융 정책알리미'의 확대 개편 및 운영
- 국내외 금융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광고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및 개발
-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과 개인정보보호 준수, 해킹방지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 소액서민금융지원 및 녹색금융 정책 홍보 실시

18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20,000	78,660	3,000,000	2,921,34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위기 이후 집행된 공적자금의 채무상환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제고

□ 사업내용

- 정부보증채(예보채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 만기도래액*중 재정 부담분 49조원('02말 기준)을 국채로 전환**하고

* 공적자금 부채 97조원('02말 기준)중 회수 가능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은 재정과 금융권에서 각각 49조원 및 20조원 분담

** 국채 전환(49조) : (03년) 13조, (04년) 12조, (05년) 12조, (06년) 12조

-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2조원('02년말 현재가치 기준) 수준을 지원받아 25년(2003년~2027년) 이내에 상환
- 적정수준의 일반회계 출연이 안될 경우 국채발행을 통하여 부족자금을 충당하여야 하며, 25년간('03~'27) 일반회계(재정)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전출)할 예정

19 IBRD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08결산	'09예산(A)	'10예산(B)	증감(B-A)
3,113	3,210	3,287	77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98년 IBRD로부터 전대차관자금을 도입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및 증권시장 선진화,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기술지원차관의 원리금 상환

□ 사업내용

- 원금상환 : 2,947백만원
- 이자상환 : 3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직조원금(\$)	2010년도 상환규모		
		계(A+B)	원금(A)	이자(B)
합 계	23,959,720	3,287	2,947	340
①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지원 등	23,542,703	3,227	2,896	331
② 증권시장발전연구	168,737	24	21	3
③ 회계감사제도개선	248,280	34	30	4
④ 수수료		2	-	2

2009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

2010. 9

금 융 위 원 회

목 차

일반회계

I. 세입 결산	3
II. 세출 결산	5

추경사업

기 금

1. 공적자금상환기금	15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19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4. 신용보증기금	26
5. 기술신용보증기금	31
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5
7. 부실채권정리기금	39
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3
9. 구조조정기금	48

일 반 회 계 결 산

I. 세입 결산

1. 총괄

□ 200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3억 13백만원이며, 수납액은 88억 33백만원임

- '09년도 징수결정액 : 319억 28백만원(전년도 이월액 163억 53백만원 + 당해연도 부과액 155억 75백만원)
- 과징금 납부기한 미도래 재력부족 등에 따른 미수납액 : 222억 61백만원
- 과징금·과태료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 : 8억 3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B-A)
합계	13,313	31,928	8,833	834	22,261	△4,480
전대차관 원금회수	896	1,175	1,175	0	0	280
전대차관 이자수입	196	185	185	0	0	△11
과징금·과태료	12,130	30,274	7,252	834	22,188	△4,878
가산금	91	88	88	0	0	△3
기타경상이전수입	0	206	133	0	73	133

2. 수납액 내역

- 전대차관 원금회수 1,175백만원
- 전대차관 이자수입 185백만원
- 과징금·과태료(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등 위반 과징금 등) 7,252백만원
- 가산금(과징금 납부연체료) 88백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사업 불용액 회수 등) 133백만원

3. 불납결손 사유

- 시효완성(과징금 및 과태료 시효완성 등) 834백만원

4. 미수납액 사유

- 증권거래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기한 미도래 4,283백만원
- 증권거래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업체의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15,394백만원
- 징수유예 2,584백만원

Ⅱ. 세출 결산

1. 총괄

□ 200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조 8,868억 7백만원임

○ 이 중 2조 8,837억 72백만원(99.9%)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29억 75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60백만원을 이월처리하였음

- 이월내역은 금융허브 사업 계획변경 60백만원임

- 주요 불용내역은 모기지론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금 지급사유 미발생 11억 93백만원, 기본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억 89백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3억 12백만원, 금융관련 국제협력 사업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5백만원 등임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액	이체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A-B)
2,886,807	0	361 △361	489 △489	0	2,886,807	2,883,772	60	2,975

2.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세목	금액	내역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미대상)	일반수용비	99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출법에 따른 동 위원회 및 사무국 기본경비 총당
	공공요금및 제세	3	
	임차료	97	
	국내여비	2	
	관서업무비	10	
	자산취득비	15	
	소계	226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일용임금	17	
	특근매식비	2	
	복리후생비	2	
	가타운영비	2	
	월정직책급	5	
	소계	28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월정직책급	4	정원증가로 인한 본부 기본경비 월정 직책급 총당
대변인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미대상)	일반수용비	15	대변인실 일반수용비 부족액 총당
금융허브	연구개발비	40	금융허브사업의 정책연구용역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총당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미대상)	연금지급금	1	정원증가에 따른 연금지급금 부족 예 산 총당
FIU운영	연금지급금	8	사무보조원(1명) 퇴직에 따른 연금 지급금 부족분 총당
	국제부담금	14	에그몽 그룹의 국제부담금 자급에 따른 부족분 총당
	국제부담금	26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 정회원 가입에 따른 특별회비 15,000 유로 총당
합 계		361	

3. 이용내역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세목	금액	내역
IBRD차관 원금상환	전대차관원금상환	482	환율인상에 따른 IBRD 전대차관 원금상환 예산 부족액 총당
FIU운영	기타직보수	6	금융정보분석원 기타직 보수 부족액 총당
합 계		488	

4.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10예산	B/A
	예산(A)	결산(B)		
합 계	2,886,807	2,883,772	3,146,391	99.9
□ 금융위원회 운영	2,804,937	2,801,501	143,103	99.9
○ 인 건 비	14,313	13,589	15,028	94.9
○ 기 본 경 비	8,597	7,655	7,141	89.0
- 인건비(일용직)	478	487	670	101.9
- 운영비	5,082	4,948	4,544	97.4
- 직무수행경비	283	291	314	102.8
- 여비	431	216	427	50.1
- 업무추진비	794	633	755	79.7
- 보전금	6	1	2	16.6
- 민간이전	57	58	116	101.7
- 건설비	1,137	761	51	66.9
- 기타유형자산	329	260	262	79.0
○ 사 업 비	2,782,027	2,780,257	120,934	99.9
- 금융중심지 추진	300	177	298	59
- 금융전문인력 양성	1,500	1,408	1,900	93.9
- 산업은행 출자	900,000	900,000	10,000	100
- 기업은행 출자	800,000	800,000	30,000	100
-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600,000	600,000	-	100
- 주택금융공사 출자	400,000	400,000	-	100
- 농어가목돈 출연	65,000	65,000	65,200	100
- 모기지론 이차보전	3,903	2,710	4,563	69.4
- FIU 운영(전산망포함)	5,859	5,757	5,912	98.3
- 정보화 지원	604	585	570	96.9
- 정책연구개발	500	499	600	99.8
- 기타	4,361	4,121	1,891	94.5
□ 내부 거래(회계기금간 거래)	81,870	82,271	3,003,288	101.7

5. 이월 내역

□ 200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총 60백만원이며,

○ 이월내역은 금융허브 사업 계획변경 60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세목	금액	내역
금융허브	일반수용비	20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과정 만족도 조사(10), 홍보 브로셔 제작비(10)
	연구개발비	40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발전 방향' 연구 용역(40)
합 계		60	

6. 불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계	2,975	
지급사유 미발생	1,194	· 모기지론이차보전 사업 미집행 금액 1,193백만원 등
예산절감	485	·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집행잔액	866	· 인건비, 운영비, 용역비, 직무수행경비 등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430	· 회계연도 중 사업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

추 경 사 업 결 산

1.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년 결산 현황								비고
	당초 예산	추경	잔고 이월액 (예비비)	예산잔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1,100,000	700,000	-	1,800,000	1,800,000	-	-	100	
① 중소기업은행 출자	500,000	300,000	-	800,000	800,000	-	-	100	증액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400,000	200,000	-	600,000	600,000	-	-	100	증액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200,000	200,000	-	400,000	400,000	-	-	100	증액

2. 2009년 추경편성시 중점목표 및 추경 편성방향

- 적극적인 중소기업지원, 부실채권인수, 실물경제지원 등을 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에 대응

3. 추경편성에 대한 부처 전반적 성과

- 추경편성 예산을 통하여 원활한 중소기업지원, 부실채권 인수, 실물경제지원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함
 - 중소기업은행은 개선된 자본기반을 바탕으로 '09년중 중소기업에 전년(29.1조원) 대비 22.3% 증가한 35.6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
 - 자산관리공사의 증자된 자본금을 활용하여 '09년도에 총 3.3조원(매입액 기준 2.5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
 - 주택금융공사 보증자리론의 지속적 공급을 통해 서민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유동화증권 발행 확대 · 보증자리론 금리 인하 · 장기고정금리 보증자리론 공급확대를 통하여 서민 금융부담 완화

기 금 결 산

1

공적자금상환기금

가. 2009年度 收入 決算

□ 총 괄

- 2009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액 11조 362억원 대비 수입규모는 10조 8,941억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A)	수입액(B)	계획액과수입액 대비 (B/A, %)
계	11,036,237	10,894,172	△142,065 (98.7)
일반회계전입금	78,660	78,660	0 (100)
세계잉여금	1,284,455	1,284,500	45 (100)
특별회계전입금	51,652	51,652	0 (100)
부실채권정리기금전입금	650,000	650,000	0 (100)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8,956,620	8,746,000	△210,620 (97.6)
여유자금회수	-	76,196	76,196 (100)
여유자금운용수입	14,850	7,164	△7,686 (48.2)

□ 수입내역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8조 7,46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 6,50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787억원, 세계잉여금 1조 2,845억원, 특별회계전입금 516억원임
- 기타수입으로 여유자금 회수(전년도 이월여유자금) 762억원, 여유자금운용수입 72억원임

나. 2009年度 支出 決算

□ 총 관

- 2009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액 11조 362억원 대비 지출규모는 10조 8,941억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11,036,237	11,036,237	11,036,237	10,894,172	149,439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11,036,222	11,036,222	11,036,222	10,886,794	149,428
(원금)	8,546,700	8,546,700	8,546,700	8,447,700	99,000
(이자)	2,489,522	2,489,522	2,489,522	2,439,094	50,428
여유자금운용	-	-	-	7,374	-
기금운영비	15	15	15	4	11

□ 지출내역

- 공공자금예수금 원리금상환은 10조 8,868억으로 원금 8조 4,477억원, 이자 2조 4,391억원을 집행
- 기타지출로는 여유자금운용 74억, 기금운용비 4백만원임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계	10,894,172
○ 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8,447,70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 상환	8,447,700
○ 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2,439,094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 상환	2,439,094
○ 여유자금 운용	7,374
- 한국은행 예치	74
- 통화금융기관 예치	7,300
○ 기금운영비	4
- 운영비	4

□ 불용내역

○ 불용액 1,494억원의 세부내역은

- 세계잉여금 전입에 따른 조기상환으로 원금 990억, 예수이자율 하락 등에 따른 이자 504억원, 기금운영비 예산절감액 11백만원 등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계	11,036,237	10,894,172	149,439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11,036,222	10,886,794	149,428	
- (원금)	8,546,700	8,447,700	99,000	예수원리금조기상환
- (이자)	2,489,522	2,439,094	50,428	예수이자율하락 등
○ 기금운영비	15	4	11	
- 운영비	11	4	7	경비절감 노력에 따라 미집행
- 여 비	3	0	3	
- 업무추진비	1	0	1	

다. 2009年度 基金運用計劃 變更

- 2009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조달재원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기업의 매각 차질로 인해 감소 (3조→0.65조원)됨에 따라,

- 그 부족재원(2.35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증액(1.07조원) 및 2008년도 세계잉여금(1.28조원) 출연으로 보전하기 위함

□ 2009년도 운용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009계획		증 감 (B-A)
		당초(A)	수정(B)	
수 입	○ 전입금	3,130,312	780,312	△2,350,000
	- 일반회계전입금	78,660	78,660	-
	- 특별회계전입금	51,652	51,652	-
	- 부실채권정리기금전입금	3,000,000	650,000	△2,35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7,891,075	8,956,620	1,065,545
	○ 세계잉여금	-	1,284,455	1,284,455
	○ 이자수입	14,850	14,850	-
합 계		11,036,237	11,036,237	-
지 출	○ 기금운영비	15	15	-
	○ 예수원금상환	8,546,700	8,546,700	-
	○ 예수이자상환	2,489,522	2,489,522	-
합 계		11,036,237	11,036,237	-

가. 2009年度 收入 決算

□ 총 괄

- 2009년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수입계획액 1,560억 43백만원
대비 수입규모는 1,560억 43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A)		수입액(B)	계획액과 수입액 대비(B/A,%)
	당초	수정(A)		
합 계	154,448	156,043	156,043	100%
○ 자체수입	54,114	54,464	54,464	100%
- 한국은행 출연	53,300	53,300	53,300	100%
- 여유자금 운용수입	814	1,164	1,164	100%
- 융자원금 회수				100%
○ 정부내부수입	65,000	65,000	65,000	100%
- 일반회계 전입	65,000	65,000	65,000	100%
○ 여유자금회수	35,334	36,579	36,579	100%
- 한국은행 회수	4	9	9	100%
- 예금은행 회수	35,330	36,570	36,570	100%

□ 수입내역

- 일반회계 전입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¹⁾ 저축장려금 지급예정액의 1/2 이상을 정부로부터 출연 받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650억원을 수납
- 한국은행 출연금은 정부 출연금 및 여유자금 운용 수익 외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금액을 출연 받는 것으로 계획대로 533억원을 수납하였음
- 여유자금 운용수입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액으로 11억 64백만원을 수납
- 기타 여유자금 회수는 전년도말 현재 한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중인 기금의 여유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365억 79백만원을 수납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

정부는 매년도마다 저축장려금 소요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결과 생긴 결손금은 다음연도에 전액 보전하여야 한다.

나. 2009年度 支出 決算

□ 총괄

- 2009년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지출계획액 1,560억 43백만원 대비 지출규모는 1,560억 43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지출액 (B)	증감 (B-A)	(B-A)/A (%)
	당초(A)	수정			
합계	154,448	156,043	156,043	1,595	1.03%
○사업비	128,169	129,003	129,003	834	0.65%
-경상지출(저축장려금지급)	128,169	129,003	129,003	834	0.65%
-자본지출	0	0	0	-	-
-용자지출	0	0	0	-	-
○기금운영비	1	1	1	0	0.00%
-기금운영비	1	1	1	0	0.00%
○여유자금운용	26,278	27,039	27,039	761	2.90%
-한은예치	8	9	9	1	12.50%
-통화금융기관예치	26,270	27,030	27,030	760	2.89%

□ 지출내역

- 저축장려금 지급은 당초 계획 대비 0.65%(8억 34백만원) 증가한 1,290억 3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2009년말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당초계획 대비 2.90%(7억 61백만원) 증가한 270억 39백만원임

가. 2009年度 收入 決算

□ 총 괄

- 2009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액 1조 1,168억 13백만원 대비 수입규모는 1조 2,962억 20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		수입액(B)	계획액과수입액 대비 (B/A, %)
	당초	수정(A)		
계	1,116,813	1,116,813	1,296,220	179,407(116.1)
자체수입	676,477	676,477	696,936	20,459(103.0)
정부내부수입	3,000	3,000	3,000	-(100.0)
여유자금회수	437,336	437,336	596,284	158,948(136.3)

□ 수입내역

- 자체수입은 금융기관출연금, 구상채권회수금, 보증료 및 여유자금 운용수입 등으로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료수입 증가 및 금융기관출연금 증가로 계획대비 3.0% 증가한 6,969억 36백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정부출연금으로 30억 원을 수입하였음
- 여유자금회수는 자체수입 증가와 사업비 감소 등으로 여유자금운용 규모가 증가하여 계획대비 36.3% 증가한 5,962억 84백만원 회수

나. 2009年度 支出 決算

□ 총 괄

- 2009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액 1조 1,168억 13백만원 대비 지출규모는 1조 2,962억 20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1,116,813	1,116,813	1,116,813	1,296,220	208	121,966
사업비	306,413	306,413	306,413	190,313		116,100
기금운영비	43,896	43,896	43,896	38,854	208	4,834
차입금상환	45,345	45,345	45,345	44,313		1,032
여유자금운용	721,159	721,159	721,159	1,022,740		

□ 지출내역

- 사업비는 대위변제, 구상권관리비 및 보증료환급으로 건전보증 공급확대 노력과 사후관리 강화로 인한 사고잔액 감소에 따른 대위변제액의 감소로 계획대비 1,161억원이 감소한 1,903억 13백만원을 집행
- 기금운영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를 통한 경비절감 등으로 예산현액대비 50억 42백만원 감소한 388억원 54백만원을 집행

- 차입금상환(IBRD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은 리보금리*하락으로 인해
계획대비 10억 32백만원 감소한 443억 13백만원을 집행

* 리보금리 : (계획) 4% ⇒ (실적) 2%

- 여유자금운용은 수입규모 확대와 지출감소에 따라 1조 227억 40백만원
으로 계획대비 3,015억 81백만원이 증가함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계	1,296,220
○ 사업비	190,313
- 대위변제	172,455
- 보증료환급	8,588
- 구상권관리비	9,270
○ 기금운영비	38,854
- 기금관리비	34,622
- 위탁수수료	4,232
○ 차입금상환	44,313
- 차입금원금상환	28,000
- 차입금이자상환	16,313
○ 여유자금운용	1,022,740
- 통화금융기관예치	417,823
- 국공채매입 등	604,917

□ 불용내역

- 불용액 1,219억 66백만원중 그 세부내역은
 - 대위변제 발생 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로 1,161억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를 통한 경비절감 등으로 44억 16백만원, 개인보증료수입 감소에 따른 위탁수수료 감소로 4억 18백만원, 리보금리 하락으로 인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액 감소로 10억 32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계	1,116,813	1,296,220	121,966	
○사업비	306,413	190,313	116,100	
- 대위변제	280,690	172,455	108,235	건전 보증공급 확대와 사후관리 노력을 통한 사고잔액 감소
- 보증료환급	12,241	8,588	3,653	보증료인하 및 보증환급 비율 감소로 환급액 감소
- 구상권관리비	13,482	9,270	4,212	지급명령활성화에 따른 소송비용 감소 및 대위 변제 감소에 따른 채권 보전조치 비용 감소
○기금운영비	43,896	38,854	4,834	
- 인건비	23,364	20,887	2,477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로 인한 경비절감 및
- 기타경비	15,882	13,735	1,939	보증료수입감소에 따른
- 위탁수수료	4,650	4,232	418	보증위탁수수료 감소
○차입금상환	45,345	44,313	1,032	리보금리하락으로 인한 상환금액 감소

가. 2009年度 收入 決算

□ 총괄

- '09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실적은 계획 5조 7,897억 17백만원 대비 6,084억 82백만원 증가한 6조 3,981억 9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획		실적(B)	증감(B-A)
	당초	수정(A)		
자체수입	2,055,098	2,060,087	2,943,247	883,160
신용보증료	492,500	497,489	591,748	94,259
구상권회수	606,780	606,780	719,379	112,599
이자수입	150,613	150,613	148,243	△2,370
금융기관출연금	770,700	770,700	812,363	41,663
기타수입	34,505	34,505	671,514	637,009
정부내부수입	900,000	1,980,000	1,980,000	-
여유자금회수	1,749,630	1,749,630	1,474,952	△274,678
합계	4,704,728	5,789,717	6,398,199	608,482

□ 수입내역

- 자체수입은 보증료 수입 및 구상권회수 증가, 금융기관 특별출연 등으로 계획 대비 8,831억 60백만원 증가한 2조 9,432억 47백만원
- 정부내부수입은 정부출연금으로 1조 9,800억원
- 여유자금 회수는 유가증권매각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계획 대비 2,746억 78백만원 감소한 1조 4,749억 52백만원

나. 2009年度 支出 決算

□ 총 괄

- '09년도 신용보증기금 지출실적은 계획 5조 7,897억 17백만원 대비 6,084억 82백만원 증가한 6조 3,981억 9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전년 이월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	불용
	당초	수정					
사업비	2,299,708	3,735,408	-	3,735,408	2,058,556	3,194	1,673,658
대위변제	2,142,200	3,564,345	-	3,564,345	1,891,214	-	1,673,131
보증연계투자	10,000	10,000	-	10,000	10,000	-	-
신보운영	147,508	161,063	-	161,063	157,342	3,194	527
기금운영비	274,287	274,287	1,186	275,473	253,164	1,747	20,562
여유자금운용	2,130,733	1,780,022	-	1,780,022	4,086,479	-	-
합계	4,704,728	5,789,717	1,186	5,790,903	6,398,199	4,941	1,694,220

□ 지출내역

- 사업비는 보증부실 감소에 따른 대위변제 감소 등으로 2조 585억 56백만원 집행하고 1조 6,736억 58백만원 불용하였으며, 건물 보수공사 미완료로 31억 94백만원은 차년도로 이월
- 기금운영비는 2,531억 64백만원 집행하고 임직원 임금삭감 및 연차 의무사용,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 등을 통해 205억 62백만원 절감하였으며, 전산시스템개발 미완료 등으로 17억 47백만원은 차년도로 이월
- 여유자금운용은 수입규모 증가 및 사업비 지출규모 감소에 따라 지출계획 대비 2조 3,064억 57백만원 초과한 4조 864억 79백만원 집행

□ 불용내역

○ 불용액 1조 6,942억 20백만원 중 그 세부내역은

- 사업비는 보증부실률이 당초 예상 보다 감소함에 따른 대위변제 미발생 등으로 1조 6,736억 58백만원 불용
- 기금운영비는 임직원 임금삭감 및 연차 의무사용, 경비절감 노력을 통해 인건비 57억 28백만원, 기타운영비 148억 34백만원 절감

다. 2009年度 基金運用計劃 變更

□ 1차 변경('09. 3. 11, P-CBO보증 등 계정 통합 → 자체변경)

- 변경사유 : 금융위원회의 'P-CBO보증 계정' 통합지침에 따라 P-CBO 보증대위변제' 및 '중소·중견P-CBO보증 대위변제' 통합
- 변경내역 : 신보 대위변제사업 중 P-CBO보증과 중소중견 P-CBO 보증을 통합하고, 사업명칭을 유동화회사보증으로 변경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세부사업	변경전(A)	변경후(B)	증감(B-A)
신보대위변제	2,142,200	2,142,200	-
일반보증	2,091,700	2,091,700	-
유동화회사보증 (舊 P-CBO보증)	7,200	50,500	43,300
중소중견P-CBO보증	43,300	-	△43,300

□ 2차 변경('09. 4. 29, 추가경정예산 편성 → 국회의결)

- 변경사유 : 보증규모 확대 및 시장안정특별보증 시행에 따른 보증료 수입 변경, 보증부실률 증가 예상에 따른 일반보증 대위변제 증액 및 시장안정특별보증대위변제 사업 신설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변경전(A)	변경후(B)	증감(B-A)
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95,570	500,559	4,989
	면허료및수수료	495,087	500,076	4,989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900,000	1,980,000	1,080,000
	전입금	900,000	1,980,000	1,080,000
계		4,704,728	5,789,717	1,084,989
지출	산업금융지원	2,299,708	3,735,408	1,435,700
	신보 대위변제	2,142,200	3,577,900	1,435,700
	일반보증	2,091,700	3,283,200	1,191,500
	시장안정특별보증	-	244,200	244,200
	여유자금운용	2,130,733	1,780,022	△350,711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080,282	729,571	△350,711

□ 3차 변경('09. 5. 26, 국내여비 증액 → 자체변경)

- 변경사유 : 보증업무 급증에 따른 국내여비 예산 부족
- 변경내역 : 기금관리비(세부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 절감분을 여비로 전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세부사업/목	변경전(A)	변경후(B)	증감(B-A)
기금운영비(신용보증기금)	274,287	274,287	-
기금관리비	92,208	92,208	-
운영비	77,029	76,429	△600
여비	3,710	4,310	600

□ 4차 변경('09. 6. 9, 일용임금 증액 → 기획재정부 협의 변경)

- 변경사유 : 정부의 보증확대 정책으로 보증업무 급증함에 따라 청년인턴 활용을 통해 업무량 경감
- 변경내역 : 기금관리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비 절감분을 인건비의 일용임금으로 전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세부사업/목	변경전(A)	변경후(B)	증감(B-A)
기금운영비	274,287	274,287	-
기금관리비	92,208	92,208	-
인건비(일용임금)	1,261	2,937	1,676
운영비	76,429	74,753	△1,676

□ 5차 변경('09. 12. 14, 보증료환급 증액 → 자체변경)

- 변경사유 : 보증규모 급증에 따른 보증료 수입 증가와 보증기한 만료전 보증해지 증가로 보증료환급 규모 증가
- 변경내역 : 보증료환급 증가에 따라 항 범위내에서 세항 조정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단위/세부사업	변경전(A)	변경후(B)	증감(B-A)
산업금융지원	3,735,408	3,735,408	-
신보대위변제	3,577,900	3,564,345	△13,555
유동화회사보증	50,500	36,945	△13,555
신보운영	147,508	161,063	13,555
보증료환급	73,379	86,934	13,555

가. 2009年度 收入 決算

□ 총괄

- 2009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액 2조 4,406억 13백만원 대비 수입규모는 3조 2,667억 66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획		실적(B)	증감(B-A)
	당초	수정(A)		
자체수입	1,027,613	1,027,613	1,333,011	305,398
금융기관출연금	429,100	429,100	470,217	41,117
이자수입	55,200	55,200	72,090	16,890
구상채권회수	290,000	290,000	291,087	1,087
보증료수입	227,465	227,465	259,930	32,465
기타수입	25,848	25,848	239,687	213,839
정부내부수입	200,000	720,000	720,000	-
여유자금회수	693,000	693,000	1,213,755	520,755
합계	1,920,613	2,440,613	3,266,766	826,153

□ 수입내역

- 자체수입은 금융기관출연금 수입 및 기타수입 증가 등으로 계획 대비 29.7% 증가한 1조 3,330억 11백만원을 수입
- 정부내부수입은 본예산 2,000억원 및 추경예산 5,200억원을 수납
- 여유자금회수는 유가증권 매각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계획 대비 75.1% 증가한 1조 2,137억 55백만원을 회수

나. 2009年度 支出 決算

□ 총괄

- 2009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액 2조 4,406억 13백만원 대비 지출규모는 3조 2,667억 66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획		전기 이월	예산 현액	실적	차기 이월	불용
	당초	수정					
사업비	1,199,155	1,771,755	18,924	1,790,679	965,359	7,923	817,397
대위변제	1,103,800	1,676,400	-	1,676,400	866,602	-	809,798
중소기업투자	10,000	10,000	-	10,000	9,009	-	991
기보운영	85,355	85,355	18,924	104,279	89,748	7,923	6,608
기금운영비	142,506	142,506	-	142,506	126,091	1,157	15,258
여유자금운용	578,952	526,352	-	526,352	2,175,316	-	-
계	1,920,613	2,440,613	18,924	2,459,537	3,266,766	9,080	832,655

□ 지출내역

- 사업비는 부실감소에 따른 대위변제 및 구상권관리비 감소 등으로 계획 대비 54.5% 수준인 9,653억 59백만원을 집행
- 기금운영비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등을 통해 계획 대비 164억 15백만원이 절감된 1,260억 91백만원을 집행
- 여유자금운용은 수입규모 확대와 지출감소에 따라 계획 대비 1조 6,489억 64백만원이 증가한 2조 1,753억 16백만원을 운용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계	3,266,766
□ 사업비	965,359
○ 기보대위변제	866,602
○ 중소기업투자(보증연계투자)	9,009
○ 기보운영	89,748
- 구상권관리	41,325
- 기술평가	2,810
- 본점신축	19,737
- 보증료환급	25,876
□ 기금운영비	126,091
- 인건비	87,053
- 기타경비	39,038
□ 여유자금운용	2,175,316
- 통화금융기관	1,826,528
- 비통화금융기관	165,000
- 국채매입	16,493
- 국채외채권매입	167,295

□ 불용내역

○ 불용액 8,326억 55백만원 중 그 세부내역은

- 사업비는 대위변제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대위변제지출 감소 및 구상권관리비 절감 등으로 8,173억 97백만원을 불용
- 전사적 경상경비 절감노력에 따라 기금운영비 152억 58백만원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계	1,933,185	1,091,450	9,080	832,655	
사 업 비	1,790,679	965,359	7,923	817,397	
대위변제	1,676,400	866,602	-	809,798	지급사유 미발생
중소기업투자	10,000	9,009	-	991	
기보운영	104,279	89,748	7,923	6,608	사업비 절감 등
기금운영비	142,506	126,091	1,157	15,258	경비 절감 등

다. 2009年度 基金運用計劃 變更

□ 1차 변경사유

○ '09년 추경편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4.29일)

- (수입) 당초 보증잔액 14.5조원 보다 2.6조원 확대한 17.1조원으로 보증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출연금 5,200억원 증액
- (지출)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보증사고율의 증가(8.0% → 11.0%) 예상에 따라 대위변제사업비 5,726억원 증액 및 여유자금운용 526억원 감액 연동조정

□ 2차 변경사유

○ 청년인턴 채용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6. 8일)

- 정부의 「2. 12 대책」 세부계획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한정된 인력을 보증업무에 집중·재배치함에 따른 추가인력(청년인턴) 채용재원 840백만원 증액

*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원 마련 : 840백만원

□ 3차 변경사유

○ 본점사옥 사업부지 조성사업비 납부대금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11.27일)

-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신시가지 조성사업의 부지조성사업비가정산을 통한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

* 본점신축 세부사업 내 목간 조정 : 건설비(건설가계정) △1,316백만원
→ 토지매입비 1,316백만원

가. 2009年度 收入 決算

□ 총 괄

- 2009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액 2조 912억 8천 6백만원 대비 수입규모는 2조 201억 8천7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A)	수입액(B)	계획액과수입액 대비 (B/A, %)
계	2,091,286	2,020,187	△71,099(96.6)
○ 자체 수입	479,346	445,053	△34,293(92.8)
- 금융기관출연금	174,600	174,187	△413(99.8)
- 이자수입	47,104	47,099	△5(100.0)
- 구상채권회수	197,682	170,713	△26,969(86.4)
- 수입보증료	56,578	50,207	△6,371(88.7)
- 기타수입	3,382	2,847	△535(84.2)
○ 정부내부수입	909,500	909,500	0(100.0)
○ 여유자금회수	702,440	665,634	△36,806(94.8)

□ 수입내역

- 자체수입은 구상채권회수 및 보증료 수입의 감소 등으로 계획대비 92.8%인 4,450억 53백만원임
- 금융기관출연금은 출연대상 대출금 평잔의 감소로 계획대비 99.8%인 1,741억 87백만원을 수입

- 이자수입은 계획대비 100.0%인 470억 99백만원 수입
- 구상채권회수는 대위변제의 감소 등 회수자원의 부족으로 계획대비 86.4%인 1,707억 13백만원 수입
- 수입보증료는 보증잔액의 감소에 따라 보증료 수입이 감소하여 계획대비 88.7%인 502억 7백만원 수입
- 기타수입은 계획대비 84.2%인 28억 47백만원 수입
- 정부내부수입은 정부출연금으로서 계획대로 9,095억원 출연함
- 여유자금회수는 계획대비 94.8%인 6,656억 34백만원 회수함

나. 2009年度 支出 決算

□ 총 괄

- 2009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액 2조 912억 8천6백만원 대비 지출규모는 2조 201억 8천7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1,991,286	2,091,286	2,091,286	2,020,187	549,211
사업비	905,372	926,747	926,747	380,357	546,390
기금운영비	53,302	54,302	54,302	51,481	2,821
여유자금운용	1,031,612	1,110,237	1,110,237	1,588,349	-

□ 지출내역

- 사업비는 보증관리 강화로 대위변제가 감소하여 계획대비 5,463억 90백만원 감소한 3,803억 57백만원을 집행
- 기금운영비는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계획대비 28억 21백만원을 절감한 514억 81백만원을 집행
- 여유자금운용은 대위변제 감소에 따른 운용규모 확대에 지출계획 대비 4,781억 12백만원 증가한 1조 5,883억 49백만원 운용함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계	2,020,187
○ 사업비	380,357
- 대위변제	370,704
- 소송및법적절차비용	3,664
- 보증료환급	5,989
○ 기금운영비	51,481
- 인건비	35,905
- 기타경비	15,576
○ 여유자금운용	1,588,349
- 금융기관예치 등	1,588,349

다. 불용내역

- 불용액 5,492억 11백만원 중 그 세부내역은
 - 대위변제 감소로 5,443억 71백만원, 소송및법적절차비용 감소로 9억 36백만원, 보증료환급 감소로 10억 83백만원, 기금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28억 21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계	981,049	431,838	549,211	
○사업운영비	926,747	380,357	546,390	
- 대위변제	915,075	370,704	544,371	보증관리 강화로 대위변제 감소
- 소송및법적비용	4,600	3,664	936	법적절차비용 감소
- 보증료환급	7,072	5,989	1,083	중도상환 감소
○기금운영비	54,302	51,481	2,821	
- 인건비	35,909	35,905	4	
- 기타경비	18,393	15,576	2,817	경비절감으로 감소

3. 2009年度 基金運用計劃 變更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09추경으로 정부출연금 1,000억원 증액
- 농신보 대위변제 예산중 19억원을 전용하여
 -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체 구상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를 확대 실시(연2회)하기 위하여 소송및법적절차비용 19억원 증액

가. 2009年度 收入 決算

□ 총 괄

- 2009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수입계획액 1조 2,085억 95백만원 대비 수입규모는 1조 4,385억 5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A)	수입액(B)	계획액과수입액 대비 (B/A, %)
계	1,208,595	1,438,554	229,959(119.0)
○ 자 체 수 입	337,448	567,407	229,959(168.1)
부 실 채 권 등 처 분	209,036	407,465	198,429(194.9)
이 자 수 입	105,113	135,138	30,025(128.6)
기 타 수 입	23,299	24,804	1,505(106.5)
○ 여 유 자 금 회 수	871,147	871,147	-(100.0)

□ 수입내역

- 자체수입은 부실채권등처분 및 이자수입 등으로 5,674억원임
 - 부실채권등처분은 보유 부실채권 정리로 1,668억원을 회수하고, 보유유가증권 정리로 2,407억원을 회수하여 계획 대비 194.9%인 4,075억원을 회수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이자수입 및 대우캐피탈CRV 사채이자 수입으로, 부실채권등처분 증가에 따른 여유자금 증가로 계획 대비 128.6%인 1,351억원을 회수
- 기타수입은 대우조선해양 등의 출자전환주식 배당수익 및 선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대한 회수액으로 248억원을 회수
- 여유자금회수는 전기이월 여유자금으로 8,712억원임

나. 2009年度 支出 決算

□ 총괄

- 2009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지출계획액 1조 2,085억 95백만원 대비 지출규모는 1조 4,385억 54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3,892,843	1,208,595	1,208,595	1,438,554	8,497
기금운영비	349,633	123,579	123,579	115,082	8,497
공적자금상환	3,000,000	650,000	650,000	650,000	
금융기관반환금	490,808	106,342	106,342	106,342	
여유자금운용	52,402	328,674	328,674	567,130	

□ 지출내역

- 기금운영비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타경비, 자산관리비 및 자산매각비로서 계획 대비 93.1%인 1,151억원을 집행
 - 이중 2008년도부터 과세법인 전환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법인세비용이 1,013억원으로 비중이 88%임
- 공적자금상환 및 금융기관반환금은 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으로, 기금 출연비율에 따라 정부(공적자금상환기금)에 6,500억원을, 금융회사에 1,064억원을 각각 반환
- 여유자금운용은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계획 대비 172.6%인 5,671억원임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계	1,438,554
○ 기금운영비	115,082
- 인건비	5,871
- 기타경비	4,571
- 자산관리비	104,320
- 자산매각비	320
○ 공적자금상환	650,000
○ 금융기관반환금	106,342
○ 여유자금운용	567,130

□ 불용내역

- 2009년도 불용액 규모는 85억원으로 전액 기금운영비의 불용에 따른 것이며,
- 인건비·기타경비 67억원, 업무량 감소에 따른 자산관리비용 18억원 등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계	123,579	115,082	8,497	
○ 기금운영비	123,579	115,082	8,497	
- 인건비	7,388	5,871	1,517	기금분담률 감소
- 기타경비	9,798	4,571	5,227	
- 자산관리비	106,043	104,320	1,723	보유업무량 감소
- 자산매각비	350	320	30	

다. 2009年度 基金運用計劃 變更

□ 1차 변경('09.4.29, 국회의결)

-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보유기업의 매각차질로 수입이 2조 6,842억원 감소함에 따라 기금 잔여재산·반환규모를 축소(3조 4,908억원 → 7,564억원)하고 기금운영비 및 여유자금운용규모를 연동 조정

□ 2차 변경('09.5.19, 자체변경)

- 쌍용건설주식 매각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자산관리비 3억원을 자산매각비로 변경

□ 3차 변경('09.8.27, 기획재정부 협의변경)

- 2009년도 상반기 세무조정결과 중간예납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예산 초과분 94억원을 여유자금운용에서 자산관리비로 변경

가. 2009年度 收入 決算

□ 총괄

-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계획액 11조 7,819억 49백만원 대비 수입규모는 9조 9,734억 8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계획액(A)	수입액(B)	계획액과수입액 대비 (B/A, %)
계	11,781,949	9,973,485	△1,808,464(84.7)
기초보유자금	777,496	584,177	△193,319(75.1)
회수자금	3,155,721	2,600,167	△555,554(82.4)
상환기금채권 발행	7,000,000	5,860,000	△1,140,000(83.7)
특별기여금	775,025	865,568	90,543(111.7)
이자수입 등	73,707	63,573	△10,134(86.3)

□ 수입내역

- 기초보유자금은 전기이월 여유자금으로 계획대비 75.1%인 5,841억 77백만원임
- 회수자금은 출자주식 매각, 융자원금 회수, 배당수익 및 파산 배당금 등으로 계획대비 82.4%인 2조 6,001억 67백만원을 회수

- 상환기금채권 발행은 소송 미종결 등으로 인한 금융구조조정 지원 감소와 출자주식의 성공적인 매각 등으로 계획대비 83.7%인 5조 8,600억원 발행
- 특별기여금은 계획대비 111.7%인 8,655억 68백만원 수납
- 이자수입 등은 보유자금의 운용 수익 등으로 계획 대비 86.3%인 635억 73백만원이 발생

나. 2009年度 支出 決算

□ 총 괄

-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계획액 11조 7,819억 49백만원 대비 지출규모는 9조 9,734억 85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11,781,949	11,781,949	11,781,949	9,973,485	761,781
금융구조조정 지원	747,217	-	747,217	120,119	627,098
채권원리금 상환	8,054,220	-	8,054,220	7,948,771	105,449
차관원리금 상환	148,944	149,012 (68)	149,012	148,957	55
기금운영비	52,063	-	52,063	22,884	29,179
기말 보유자금	2,779,505	2,779,437 (△68)	2,779,437	1,732,754	-

□ 지출내역

- 금융구조조정 지원은 소송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송의 미종결 및 승소 등에 따라 1,201억 19백만원을 집행
- 채권원리금은 '09년 만기도래하는 상환기금채 원리금을 전액 상환
- 차관원리금은 1,489억 57백만원 상환
- 기말보유자금(차기이월여유자금)은 회수실적 저조 등에 따라 계획 대비 1조 466억 83백만원 감소한 1조 7,327억 54백만원임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계	9,973,485
○ 금융구조조정	120,119
- 출 연	3,756
- 자산매입	116,084
- 보험금 지급	279
○ 채권원리금상환	7,948,771
- 상환기금채권 원금	6,500,000
- 상환기금채권 이자	1,448,771
○ 차관원리금상환	148,957
○ 기금운영비	22,884
○ 기말 보유자금	1,732,754

□ 불용내역

○ 불용액 7,617억 81백만원의 세부내역은

- 출연,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승소 또는 미종결 등으로 인한 금융구조조정 지원 미집행 6,270억 98백만원, 상환기금채 발행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원리금상환 미집행 1,054억 49백만원, 정리자문비용 등 기금운영비 미집행 291억 79백만원 등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계	9,002,512	8,240,731	761,781	
○ 금융구조조정	747,217	120,119	627,098	
- 출 연	547,892	3,756	544,136	금융구조조정 관련 소송 승소 및 미종결 등에 따른 미집행
- 자산매입	198,845	116,084	82,761	
- 보험금 지급	480	279	201	
○ 채권원리금상환	8,054,220	7,948,771	105,449	상환채 발행금리 하락
○ 차관원리금 상환	149,012	148,957	55	
○ 기금운영비	52,063	22,884	29,179	
- 인건비	12,870	11,763	1,107	경비 절감 노력에 따라 미집행
- 기타경비	6,450	4,276	2,174	
- 정리자문비용 등	14,242	390	13,852	출자주식 매각수수료 등 절감
- 소송비용	18,501	6,455	12,046	소송 승소 및 미종결에 따라 미집행

다. 2009年度 基金運用計劃 變更

- 기금운용계획상 환율 추정치와 실제 환율의 차이로 인해 IBRD 차관 관리수수료 지급액이 기금운용계획보다 초과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 IBRD차관 관리수수료 68백만원 증가
 - 기말보유자금 68백만원 감소

가. 2009年度 收入 決算

□ 총 관

-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수입계획액 20조 2,352억원 대비
수입규모는 1조 1,603억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A)	수입액(B)	계획액과수입액 대비 (B/A, %)
계	20,235,250	1,160,365	△19,074,885(5.7)
○ 자 체 수 입	115,250	325,872	210,622(282.8)
부실자산등정리	115,200	257,294	142,094(223.3)
기타경상이전수입	-	63,662	63,662(-)
이 자 수 입	50	4,916	4,866(9832.0)
○ 차입금(기금채권)	20,120,000	834,493	△19,285,507(4.1)

□ 수입내역

- 자체수입은 부실자산등정리 및 이자수입 등으로 3,259억원임
 - 부실자산등정리는 은행권 PF대출채권의 유동화에 따른 회수 및
선박투자회사 출자금 배당 등을 통해 2,573억원을 회수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공사회계로부터의 전입금(617억원) 등 637억원을 회수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이자수입 및 인수채권 정산대금 이자수입 등 49억원

○ 차입금은 기금채권 발행자금 8,345억원임

나. 2009年度 支出 決算

□ 총 괄

-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지출계획액 20조 2,352억원 대비 지출규모는 1조 1,603억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20,235,250	20,235,250	20,235,250	1,160,365	19,142,898
구조조정지원	20,000,000	20,000,000	20,000,000	1,066,719	18,933,281
기금운영비	38,711	38,711	38,711	5,036	33,675
차입금이자상환	186,940	186,940	186,940	10,998	175,942
여유자금운용	9,599	9,599	9,599	77,612	-

□ 지출내역

- 구조조정지원은 금융구조조정지원을 위한 8,286억원, 기업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2,381억원 등 총 1조 667억원 집행
- 기금운영비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타경비, 자산관리비로서 51억원 집행
- 차입금이자상환은 110억원 지출
- 여유자금운용은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617억원 운용등 776억원으로 차기 이월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액
계	1,160,365
○ 구조조정지원	1,066,719
- 금융구조조정지원	828,608
- 기업구조조정지원	238,111
○ 기금운영비	5,036
- 인건비	2,828
- 기타경비	1,915
- 자산관리비	293
○ 차입금이자상환	10,998
- 국공채이자상환	10,971
-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27
○ 여유자금운용	77,612

□ 불용내역

- 2009년도 불용 규모는 선제적 구조조정에 따른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구조조정 지원 수요가 줄어들어 따라 발생한 것으로,
 - 구조조정지원 18조 9,333억원, 기금운영비 337억원, 차입금이자상환 1,759억원 등 총 19조 1,429억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계	20,225,651	1,082,753	19,142,898	
○ 구조조정지원	20,000,000	1,066,719	18,933,281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지원 수요 축소
- 금융구조조정지원	15,000,000	828,608	14,171,392	
- 기업구조조정지원	5,000,000	238,111	4,761,889	
○ 기금운영비	38,711	5,036	33,675	
- 인건비	7,608	2,828	4,780	
- 기타경비	6,667	1,915	4,752	
- 자산관리비	24,436	293	24,143	
○ 차입금이자상환	186,940	10,998	175,942	

3. 언론스크랩 현황(2009. 9 ~ 2010. 8)

□ 별도 제출

4. 서면답변 파일(2009. 6 ~ 2010. 8)

☐ 별도 제출

김 용 태 의원

1. 임직원 퇴직, 재취업, 징계 현황

1. 임직원 퇴직, 재취업, 징계 현황

☐ 퇴직 및 재취업 현황(계약직 제외)

성명	퇴직 당시 직위(직급)	퇴직일자	퇴직 당시 재취업기관
김○○	위원장	08.03.05	-
이○○	부위원장	08.03.13	LS네트웍스
이○○	금융정보분석원장	08.03.28	한국거래소
전○○	FIU제도운영과장	08.04.30	은행연합회
김○○	혁신행정과장	08.05.15	법무법인
김○○	상임위원	08.12.09	금융감독원
정○○	부이사관	09.01.05	금융투자협회
이○○	행정사무관	09.01.09	법무법인
전○○	위원장	09.01.20	-
홍○○	서기관	09.03.17	법무법인
양○○	부이사관	09.03.26	한국자금중개
김○○	행정주사	09.04.30	금융투자협회
나○○	서기관	09.05.13	산업은행 계약직
한○○	서기관	09.05.15	신영증권
이○○	서기관	09.07.10	외교통상부 특채
박○○	부이사관	09.09.11	SK C&C
김○○	행정사무관	09.10.12	-
김○○	금융정보분석원장	09.11.17	증권금융
김○○	금융서비스국장	09.12.07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김○○	전산서기보	10.02.17	한국거래소
나○○	행정사무관	10.03.02	한국정책금융공사
임○○	상임위원	10.04.15	한국은행

□ 징계 현황

징계 현황		처분사유	현 근무처
견책	서기관 1명	음주운전	기획조정관실
	행정사무관 1명	음주운전	파견
경고	행정주사 1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획조정관실
감봉2월	서기관 2명	청렴의무위반	휴직, 본부

2.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서 사본

□ 최근 5년간 경영평가결과 사본

- 신보, 기보 등 준정부기관 : 2006년 이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첨부)
-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 : 2007년 이후 경영평가
 결과 공문사본 (별도제출)

* 2006년 이전에는 각 국책은행별 자체적으로 경영 평가 수행

※ 금융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주관

- 신보, 기보 등 준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舊 재정경제부)
- * 국책은행 기관장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평가를 하나 기관장 인
 사관련 참고 자료로만 활용
-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 : 금융위 (舊 재정경제부) 경영에
 산심의회

○ 평가결과 활용 : 임직원 성과급 지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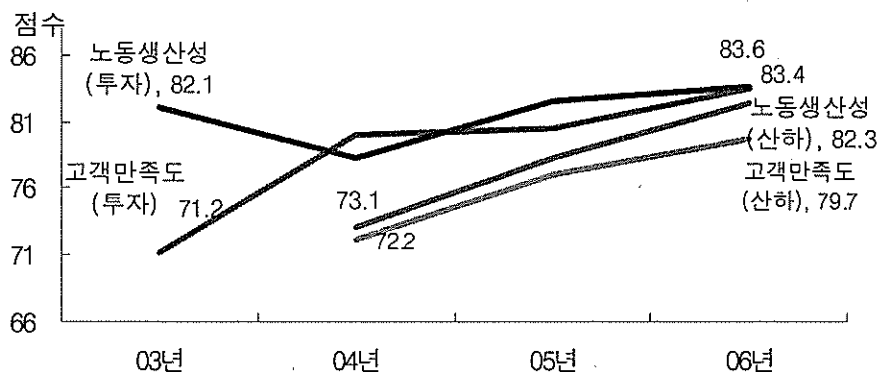
공공기관 경영혁신이 경영성과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으로 가시화

◇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

* 투자기관 평균 : ('04) 4.2단계 → ('05) 4.8단계 → ('06) 5.1단계

* 산하기관 평균 : ('04) 2.5단계 → ('05) 3.3단계 → ('06) 4.3단계

◇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경영성과지표가 지난 4년간 지속개선



◇ 금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그간 공공기관이 추진해온 경영혁신 노력이 대국민 접점 서비스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Ⅰ 기획예산처는 '07.6.20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
 -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과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단은 '07.2~6월중 14개 정부투자기관과 75개 정부산하기관의 '06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
 - * 금년도 평가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에 따라 기존 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체제로 실시하는 마지막 평가이며, 내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 실시

②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상세결과는 <붙임1> 참조)

① 14개 정부투자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수준

	'06년(A)	'05년(B)	증감(A-B)
최고(점)	83.5	83.4	+0.1
최저(점)	69.3	70.5	-1.2
평균(점)	77.8	77.0	+0.8

② 기관별 평가결과 (순위 · 성과급 지급률 등)

기 관 명	2006년		
	순위	점수(A)	성과급(%)
한국도로공사	1	83.5	500.0
한국조폐공사	2	83.4	499.2
한국관광공사	3	83.2	495.0
한국석유공사	4	80.4	435.8
한국전력공사	5	78.9	404.2
농수산물유통공사	6	78.5	394.5
한국수자원공사	7	78.3	390.1
한국토지공사	8	77.4	371.0
대한주택공사	9	77.3	369.2
대한광업진흥공사	10	76.6	35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76.2	346.6
한국철도공사	12	73.8	296.3
한국농촌공사	13	72.7	272.6
대한석탄공사	14	69.3	200.0

③ 정부산하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상세결과는 <붙임2> 참조)

- ① 75개 기관을 8개 유형으로 구분한 후 해당 유형내에서 평가
→ 평균점수는 72.3점으로 '05년 평가보다 소폭 상승

	'06년(A)	'05년(B)	증감(A-B)
▪ 평균(점)	72.3	68.9	+3.4
▪ 최고(점)	84.5 (한국정보사회진흥원)	87.8 (에너지관리공단)	△3.4
▪ 최저(점)	52.8 (한국주택금융공사)	50.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7

* 점수 상승기관(47개) > 하락기관(25개), 신규기관(3개)

② 8개 유형별 최상위·하위기관 및 성과급

유형(기관수)	최상위(1위)기관			최하위기관		
	기관명	점수	성과급(%)	기관명	점수	성과급(%)
①검사검증(11개)	한국전기안전공사	80.7	181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63.0	113
②금융수익(7개)	대한주택보증(주)	80.3	180	한국미사회	69.3	119
③문화국민생활(10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79.7	18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2.0	112
④산업진흥(13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84.4	184	광해방지사업단	59.9	110
⑤연수교육훈련(5개)	한국청소년수련원	81.0	181	한국청소년상담원	59.5	110
⑥연구개발지원(6개)	한국학술진흥재단	80.4	180	요업기술원	57.4	107
⑦건설시설관리(8개)	한국철도시설공단	81.0	181	부산항만공사	62.3	112
⑧연기금융운용(15개)	기술신용보증기금	80.5	180	한국주택금융공사	52.8	103

④ 그동안 정부가 지속 강조해 온 경영혁신·고객만족경영이 확산되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

- 금년도 경영평가결과 발굴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다양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기관별 상세 우수사례는 <붙임3> 참고

<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우수사례 >

① 한국도로공사

- (기존) 출퇴근 시간대 및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지정체 심각
 - (개편) 고속도로 지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
 - IC 설치 등 시설개량, 신호체계 개선, 영업인력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톨게이트 시간당 처리차량이 전년대비 6.5% 향상
 - 연휴기간 교통혼잡정보 종합DB 구축, 교통혼잡캘린더 제작·배포로 고속도로 이용의 효율성 제고
- * 서울~부산간 30분, 서울~목포간 40분 단축

② 한국조폐공사

- (기존)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주 사업인 화폐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경영상 위기에 직면
- (개편) 비전을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으로 바꾸고 지속적 경영혁신을 추진
 - 홀로그램·은선 등 첨단 위변조 방지장치가 적용된 세계 최고수준의 새은행권을 차질없이 제조·공급
 - 전자여권 및 전자주민증 사업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첨단 보안신분증 생산 인프라 구축

③ 한국관광공사

- (기존)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저조하여 국제관광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 (개편)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 전개
 - 한국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소개하는 ‘구석구석 캠페인’을 추진하여 관광 신상품 개발 역량을 강화
 - 국내 최초 내비게이션 기반의 관광전문 전자지도를 개발하여 전국의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우수사례 >

① 한국전기안전공사(검사·검증유형 1위)

- (기존) 관행적으로 해오던 정부 위탁업무만 수행했을 뿐, 국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개발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노력은 소홀
- (개편) 국민 불편사항 발생시 24시간 대기중인 직원이 즉시 출동하여 무상으로 응급 지원하는 고충처리제(Speed-Call) 도입

② 대한주택보증(주)(금융·수익유형 1위)

- (기존) 고객이 관할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류를 작성하고, 보증서 수령을 위해 재방문하는 등 보증이용 절차가 복잡
- (개편) 영업점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무방문 보증서비스’ 실시

③ 한국정보문화진흥원(문화·국민생활유형 1위)

- (기존) 고객 요구파악이 부족하여 통신중계서비스(TRS)의 이용활성화가 미흡

* 통신중계서비스 :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비장애인과 전화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 (개편) 청각장애인 맞춤서비스인 온라인 메신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

* 통신중계서비스 월 평균 이용건 수 '05년 대비 81.89% 증가한 2,321건 기록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문화·국민생활유형 2위)

- (기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항생제·주사제 처방율과 제왕절개 분만율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될 소지

- (개편) 모든 의료기관의 항생제·주사제 처방율과 제왕절개 분만율을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

* 공개결과 항생제처방률($\Delta 3.3\%p$), 주사제 처방률($\Delta 2.8\%p$)과 제왕절개 분만율($\Delta 0.9\%p$)이 점차 감소

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산업진흥유형 1위)

- (기존)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중소 IT벤처기업들이 사업 착수후 대금입금 시점까지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개편) 중소기업체들의 시급하고 민감한 자금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계약서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계약대금 대출보증제도'를 도입

⑥ 에너지관리공단(산업진흥유형 2위)

- (기존) 에너지사용량 신고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여 빈번한 담당자 교체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오류발생 등의 문제 발생

- (개선) 신고업무의 주체를 지자체→ 공단으로 이관하고, One-Stop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도록 개선

⑦ 한국청소년수련원(연수·교육훈련유형 1위)

- (기존) 우수한 시설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영역이 다각화되지 못하였다는 한계
- (개편) 소외계층에 대한 수련기회 확대, 글로벌 빌리지의 운영을 통한 국제적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타 수련기관과는 차별화된 영역을 확대

⑧ 한국학술진흥재단(학술·연구지원유형 1위)

- (기존) 구성원의 전문성과 핵심역량 제고 등 인적 자원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미흡
- (개편) 1부서 1학습조직화를 추진하여 구성원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회에 환원

⑨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시설관리유형 1위)

- (기존) 국가 철도망 전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미비
- (개편) 역사상 최초로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DB화하여 국가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대 마련

⑩ 기술보증기금(연·기금운용유형 1위)

- (기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미흡
- (개편) 인터넷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보증서를 전송하는 ‘On-line 접수제도’와 ‘전자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보증업무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운영

5 향후 계획

-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관련 유공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표창 수여
 - * 투자기관 : (기관장·임원) 기본연봉의 0~200%, (직원) 월기본급의 200~500%
 - * 산하기관 : (기관장·임원) 기준연봉의 20~100%, (직원) 월기본급의 100~200%
- 금년 7월중 피평가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실적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한편,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07.4)을 계기로 경영평가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
 - 현행 단년도 실적위주 평가에서 기관의 설립목적에 충실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사업계획 수립, 실행과정의 노력·행위 등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재설계를 추진중
 - 이 과정에서 해외선진사례 검토, 피평가기관·관련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

〈붙임1〉 정부투자기관 200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1. 기관 평가결과

① 14개 정부투자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수준

	'06년(A)	'05년(B)	증감(A-B)
최고(점)	83.5	83.4	+0.1
최저(점)	69.3	70.5	-1.2
평균(점)	77.8	77.0	+0.8

② 부문별 평가결과

○ 경영혁신, 고객만족도, 생산성 등 전반적인 성과가 향상

* 경영혁신수준(평균) : ('05) 4.8단계 → ('06) 5.1단계 (+0.3)

* 고객만족도 향상(평균) : ('05) 80.4점 → ('06) 83.4점(+3.0)

* 노동생산성(평균) : ('05) 82.5점 → ('06) 83.6점 (+1.08)

○ 대부분 정부투자기관이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

* 조폐(24년만에 새 화폐발행), 수공(홍수시 과학적 방류량 산정으로 홍수피해 최소화), 도공(정체구간 집중투자로 평균통행시간 단축), 주공·토공(행복도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 연봉제·팀제·성과관리 등 경영관리 제도도 전반적으로 향상

▪ 특히, 인건비 과다인상 사례가 대폭 축소

* 인건비 정부지침 위반 기관 수 : ('04) 5 → ('05) 1개 → ('06) 1개

③ 기관별 평가결과

기 관 명	2006년		2005년		A-B
	순 위	점 수(A)	순 위	점 수(B)	
한국도로공사	1	83.5	3	79.9	3.6
한국조폐공사	2	83.4	5	78.7	4.7
한국관광공사	3	83.2	8	76.5	6.7
한국석유공사	4	80.4	7	76.6	3.8
한국전력공사	5	78.9	2	82.6	△3.7
농수산물유통공사	6	78.5	10	75.8	2.7
한국수자원공사	7	78.3	11	74.5	3.8
한국토지공사	8	77.4	1	83.4	△6.0
대한주택공사	9	77.3	6	77	0.3
대한광업진흥공사	10	76.6	12	74.1	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76.2	4	79.5	△3.3
한국철도공사	12	73.8	14	70.5	3.3
한국농촌공사	13	72.7	9	75.9	△3.2
대한석탄공사	14	69.3	13	73.1	△3.8

2.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

① 대체로 기관평가 결과와 유사하나, 수자원공사·철도공사는 기관 평가결과보다 사장 평가결과가 우수

* 수자원공사는 기관 7위/사장 3위, 철도공사는 기관 12위/사장 7위,
'05년대비 수자원공사·관광공사·철도공사는 평가결과가 대폭개선

② 각기관별 사장 평가결과

기 관 명	2006년		2005년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도로공사	1	85.1	3	80.7	4.4
한국관광공사	2	84.7	8	79.4	5.3
한국수자원공사	3	81.3	12	75.6	5.7
한국전력공사	4	81.0	2	81.8	△0.8
한국조폐공사	5	78.7	5	80.0	△1.3
농수산물유통공사	6	76.6	10	78.1	△1.5
한국철도공사	7	76.0	14	74.2	1.8
한국석유공사	8	76.0	6	80.0	△4.0
한국토지공사	9	75.9	1	84.4	△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74.8	4	80.2	△5.4
대한주택공사	11	74.4	9	79.2	△4.8
한국농촌공사	12	72.6	7	79.7	△7.1
대한광업진흥공사	13	72.0	13	75.4	△3.4
대한석탄공사	14	66.0	11	76.5	△10.5

〈붙임2〉 정부산하기관 200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1. 평가결과 개요

① 지속적 경영혁신 노력으로 평균점수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3.4점)

	'06년(A)	'05년(B)	증감(A-B)
평균(점)	72.3	68.9	+3.4
최고(점)	84.4 (한국정보사회진흥원)	87.8 (에너지관리공단)	△3.4
최저(점)	52.8 (한국주택금융공사)	50.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7

② 유형별로는 「학술·연구지원」 유형을 제외한 7개 유형의 평균점수가 개선

기관유형	'06평균(A)	'05평균(B)	증감(A-B)
금융·수익(7)	75.1	71.1	4.0
연·기금운용(15)	73.2	69.0	4.2
학술·연구지원(6)	73.1	73.5	△0.4
산업진흥(13)	72.5	69.2	3.3
검사·검증(11)	72.0	68.9	3.1
건설·시설관리(8)	71.2	66.7	4.5
문화·국민생활(10)	71.2	67.8	3.4
연수·교육훈련(5)	69.3	65.6	3.7
전체 (75개)	72.3	68.9	3.4

2. 기관별 평가결과

① 검사·검증유형(11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전기안전공사	1	80.7	1	79.3	1.4
한국가스안전공사	2	77.6	2	79.1	△1.5
선박검사기술협회	3	77.0	3	77.4	△0.4
한국석유품질관리원	4	76.2	5	74.3	1.9
한국전파진흥원	5	75.8	4	74.8	1.0
축산물등급판정소	6	74.0	8	66.8	7.2
교통안전공단	7	70.1	6	69.6	0.5
한국소방검정공사	8	68.6	12	53.1	15.5
산업기술시험원	9	64.9	7	66.8	△1.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0	63.8	9	66.1	△2.3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	63.0	4	67.3	△4.3

② 금융·수익유형(7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대한주택보증(주)	1	80.3	3	76.3	4.0
한국지역난방공사	2	79.5	1	80.9	△1.4
한국전력거래소	3	75.9	6	72.3	3.6
한국방송광고공사	4	74.6	9	65.1	9.5
한국감정원	5	73.4	8	69.4	4.0
대한지적공사	6	73.0	2	77.8	△4.8
한국마사회	7	69.3	7	70.1	△0.8

③ 문화·국민생활유형(10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79.7	1	82.1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78.4	2	74.5	3.9
국민건강보험공단	3	78.1	7	69.9	8.2
국제방송교류재단	4	70.2	6	71.1	△0.9
한국소비자원	5	70.0	5	71.2	△1.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6	69.7	4	72.5	△2.8
국립공원관리공단	7	69.4	9	68.8	0.6
독립기념관	8	67.3	11	64.4	2.9
한국과학문화재단	9	66.7	3	73.5	△6.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0	62.0	10	66.4	△4.4

④ 산업진흥유형(13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	84.4	2	82.9	1.5
에너지관리공단	2	83.6	1	87.8	△4.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3	78.2	4	73.6	4.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76.1	3	80.9	△4.8
한국산업단지공단	5	72.9	11	65.6	7.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6	72.7	8	70.0	2.7
한국환경자원공사	7	72.0	6	70.8	1.2
한국인터넷진흥원	8	71.3	7	70.1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	69.8	5	71.4	△1.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0	69.0	10	66.7	2.3
한국디자인진흥원	11	68.1	15	60.8	7.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2	64.9	12	62.6	2.3
광해방지사업단	13	59.9	13	61.5	△1.6

⑤ 연수 · 교육훈련유형(5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청소년수련원	1	81.0	1	72.2	8.8
한국산업인력공단	2	76.8	3	68.3	8.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67.6	4	62.3	5.3
한국노동교육원	4	61.8	5	55.3	6.5
한국청소년상담원	5	59.5	-	-	-

⑥ 학술 · 연구지원유형(6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학술진흥재단	1	80.4	3	68.5	11.9
한국과학재단	2	80.1	1	84.2	△4.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3	79.5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72.7	4	68.1	4.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5	68.7	2	80.4	△11.7
요업기술원	6	57.4	10	65.5	△8.1

⑦ 건설 · 시설관리유형(8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철도시설공단	1	81.0	1	80.0	1.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75.4	2	77.1	△1.7
산재의료관리원	3	74.7	8	55.7	19.0
환경관리공단	4	73.4	3	69.4	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	71.0	5	66.7	4.3
인천항만공사	6	67.6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64.0	7	57.5	6.5
부산항만공사	8	62.3	6	60.1	2.2

⑧ 연·기금운용유형(15개)

기관명	'06년도 평가결과		'05년도 평가결과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기술신용보증기금	1	80.5	11	66.6	13.9
신용보증기금	2	79.9	12	66.1	13.8
한국수출보험공사	3	79.8	1	84.9	△5.1
한국자산관리공사	4	78.4	2	77.1	1.3
예금보험공사	5	78.4	3	75.9	2.5
정보통신연구진흥원	6	78.0	4	74.3	3.7
한국산업안전공단	7	75.6	7	70.5	5.1
근로복지공단	8	74.0	8	69.3	4.7
국민연금관리공단	9	73.6	6	70.9	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0	72.5	5	72.0	0.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1	70.1	9	68.8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	69.9	16	56.1	13.8
국민체육진흥공단	13	68.5	14	60.6	7.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4	65.9	13	63.2	2.7
한국주택금융공사	15	52.8	10	68.8	△16.0

3. 평가결과 주요내용

① 종합경영부문

① 경영혁신, 고객만족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

* 경영혁신수준(평균) : ('05) 3.3단계 → ('06) 4.3단계 (+1.0)

* 고객만족개선도(평균) : ('05) 77.0점 → ('06) 79.7점 (+2.7)

* 노동생산성(평균) : ('05) 78.2점 → ('06) 82.3점 (+4.1)

② 전반적으로 이사회 활성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노력 개선

▪ 이사회 심의·견제기능 강화

* 회의안건의 사전배포·설명, 경영현안 수시설명, 수정의결비율 증가

▪ 경영공시 항목확대, 정보공개요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부서·담당자 지정

② 주요사업부문

① 다수 기관이 핵심 주력기능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단이 개발한 직종별 직업능력표준을 활용
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추진체계 재설계

②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개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가동원자력의 노후화, 핵테러 위협 등 경영
환경 변화를 감안, 핵심주력기능 설정하고 현안관리체계 구축·운영

③ 경영관리부문

① 신규사업 발굴, 해외사업 등 추진을 통해 자체수익을 확대하는 등 재무관리 지표 개선

- (대한지적공사) 바닷가 실태조사·관리사업, 군부대 자산관리 체계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해외사업 추진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컨설팅사업, 지역 산업인력양성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허가·특허지원, 지역식품산업체 지원, 온라인교육 등 중장기 수입다변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

② 인건비, 관리업무비 등 경영관리 지표 개선 노력은 소폭상승

- 계량인건비(평균) : ('05) 72.9점 → ('06) 73.04점 (+0.14)

〈붙임3〉 주요 경영실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1. 정부투자기관

① 차별화된 고속도로 서비스 개발 (한국도로공사)

① 고속도로 지정체 획기적 개선

-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고속도로의 지정체가 심각하고, 명절 등 연휴기간의 특정시간대·특정노선에 교통량이 집중하는 등 문제
 - * 판교IC의 출퇴근 통행속도 : 시속 14.25km
 - * '05년도 명절연휴기간 교통량의 43%가 경부선에 집중
- 수도권 고속도로 톨게이트 18개차로 등 지정체 구간 위주로 하이패스* 확대, 판교 등 23개 IC 집중개량 및 부가차로 신설
 - * 달리는 차 안에서 무선 또는 적외선 통신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전자요금징수시스템
- '고속도로 교통혼잡 Calendar'를 개발하여, 과거 3개년의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혼잡구간·시간·정도 등을 인터넷과 리플릿을 통해 제공
- 추진결과, 고속도로 지정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됨
 - 판교IC 출퇴근 통행속도 3배 증가 : 14.25km/h → 41.54km/h
 - '06년도 휴가철 및 추석연휴 교통량 분산으로 통행시간 단축 (서울~부산간 30분, 서서울~목포간 40분 단축)

② 차별화된 고속도로 서비스 개발

-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 : 30~50원/ℓ ('06.8월)
 - * 도공(임대료 인하), 정유사(공급가격 인하), 주유소(서비스 개선)
- ⇒ 고객(연간 245억원 유류비 절감)과 주유소(판매량 20% 증가)간 상생 달성
- 청각장애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3D 수화(手話) 교통정보 인터넷방송 (Hi-아바타) 실시
- ⇒ 사회적 약자의 고속도로 교통정보 접근성 강화(일평균 8,000회 접속)
- 무하차 Toll Drive Service 운영
 - * 톨게이트에서 고객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통행료 수납 이외의 용무(전자카드 충전 등)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원처리 프로세스
- ⇒ 평균 민원처리시간 60% 단축(5분 → 2분)

②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으로 도약 (한국조폐공사)

① 비전재설정 및 목표 구체화

- 단순히 은행권 제조사라는 전통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안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비전을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으로 재설정
- ‘매출액 5천억원 달성, 핵심기술 5건 개발, 부패 Zero 추진’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

② 조직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

- 사무직, 기술직의 직계를 폐지하여 벽없는 조직을 만들었으며, 고객, 품질, 효율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팀제를 도입하는 등 조직혁신을 단행
- 제품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고 과학적 문제해결 방법을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6시그마 혁신기법을 도입

③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새 은행권 제조·공급을 완벽한 품질로 짧은 기간내에 완수
- 향후 매출액의 40%이상을 차지하게 될 전자여권 등 ID제품 사업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첨단 보안 신분증 생산인프라 구축

④ 조직문화 혁신

-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 혁신기구 ‘화백회의’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
- 장기 해외 마케팅 체험연수 등을 통해 구성원의 혁신역량을 강화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포브스 품질경영 대상, 기술혁신대상 수상, 4년 연속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상 수상 등 14개 분야 기관표창, 창사이래 최대인 3,315억원의 매출액, 400억원의 영업이익 달성

③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관광산업의 육성(한국관광공사)

① 한국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소개하는 ‘구석구석 캠페인’ 전개

- 부산다대포, 전남 순천만, 한강 선유도공원, 대관령 풍력발전소 등 9개 지자체의 12개 관광지를 발굴·소개
 - 전남 순천만의 경우 소개되기 전보다 2-3배의 관광객이 증가, 한강선유도공원도 캠페인이 시작된 후 방문객이 59%증가
-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카페를 운영, 네티즌들의 생생한 국내여행정보를 공유
- ‘내 삶에 쉼표, 자녀에게 느낌표!’ 라는 슬로건의 내나라 여행박람회 개최(148개의 업체 및 지자체 참여)

② 국내 최초 내비게이션 기반의 관광전문 전자지도 개발

- SK폰 내비게이션 네이트드라이브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 만도맵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전국의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③ 1330 관광안내 전화서비스 운영

- 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 전화 관광안내 및 통역서비스 기능을 영어·중국어·일본어로 24시간 제공

④ 관광 투자유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

- 국제관광투자 컨퍼런스인 APTIC 2006(Asia Pacific Tourism Investment Conference 2006)을 개최하는 등 관광투자유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 지자체 관광개발 프로젝트 및 제주 중문단지 투자유치를 성사

⑤ 고객만족경영시스템 고도화

- 고객의 소리(VOC) 처리시간을 '05년 19.45시간에서 '06년 1.99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

2. 정부산하기관

① 고객의 눈으로, 고객의 말씀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①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제도(Speed-Call) 도입

- 그간 정부위탁업무(주거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만을 수행했을뿐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생활서비스를 개발하고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소홀한 측면이 있었음
- 전문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이란데 착안하여 24시간 대기중인 직원이 즉시 출동하여 무상으로 응급 지원을 실시하는 고충처리제도(Speed-Call) 도입
 - * '05.1월 제주지역에서 최초 시범실시 후 '06년부터 강원영서지역으로 확대, '07년에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저소득층 전기설비로 확대 시행중
- 시범실시 이후 제주지역 고객만족도조사 93.2점(평균보다 10점 이상 상회), 설문조사 결과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100% 응답

② 검사업무 리콜(Recall)제도 도입

- 검사·점검기관으로는 최초로 고객이 검사결과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내부 감사시 판정오류가 규명된 사항에 대해 다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업무 리콜(Recall)제도 도입
- '05년 리콜실적 5건에 이어 '06년에는 대상업무 확대와 홍보노력을 통해 50건으로 대폭 확대
- ※ 고객만족도지수 76.1점('04년) → 82.5점('06년),
청렴도지수 8.62점('04년) → 9.03점('06년)으로 향상

② 고객과 윈-윈(Win-Win)하는 협력적 동반자관계 구축(대한주택보증)

① 주택사업자 및 분양계약자 부담 경감을 위한 분양보증료 인하

- 보증손실 감축 노력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의 결과로 최근 5년간 대규모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경영성과를 고객 및 국민에게 환원하고자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료를 인하('06.4월)

종 전	개 전	보증실적('06.4.12)	종전 보증료	개선후 보증료	차액
0.31% ~0.64%	0.25% ~ 0.50%	331,616억원	2,820억원	2,257억원	56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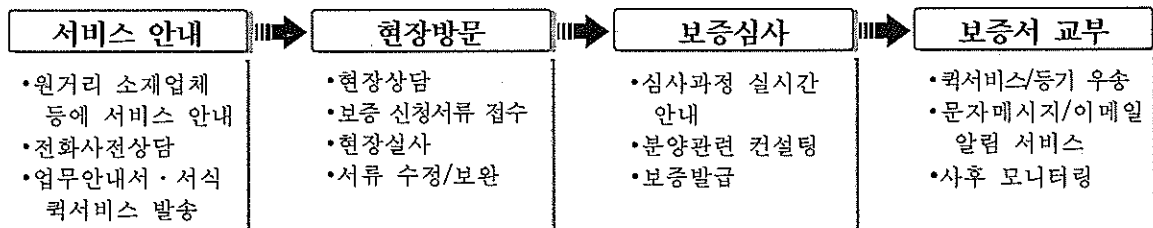
* '06년중 14만세대 563억원의 보증료 인하효과 발생

- 주택사업자의 보증료 부담 경감 및 분양가 인하로 분양계약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경영성과 환원을 통하여 고객과 회사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강화

주택사업자	주택건설사업비 최대 0.14% 절감 효과 (사업비 1천억원 기준, 1.4억원 절감)
분양계약자	주택분양가 최대 105만원 인하 효과 (분양가 3억원 기준)

② 무방문 보증(ONE CALL, ALL GUARANTEE)

- 영업점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무방문 보증서비스” 실시('06.7)



- 신속한 보증서 발급과 보증심사의 내실화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도가 향상됨

* 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90.3점 ⇨ 90.9점(+0.6)

③ 고객이 중심에 있는 창조적 사업혁신 (한국정보문화진흥원)

① 청각, 언어장애 고객중심의 통신중계서비스 개선

-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비장애인과 전화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통신중계서비스(TRS)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중심적인 서비스혁신의 필요성 증대
- 고객접점에 있는 통신중계사를 활용한 고객모니터링 결과, 대다수 청각장애인이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다는 점을 파악, 이와 연계한 서비스를 개발

②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한 자유로운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중계서비스 중계 및 운영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고객접점 담당자 회의(6.23) 및 실태조사(9.27) 등을 통해 대부분의 청각, 언어장애 고객이 즐겨찾는 네이트온 서비스와 연계를 추진
-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민간기업과 합의함으로서 청각 및 언어장애 고객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 개발

③ 주요 성과

- 통신중계서비스 월 평균 이용건 수 '05년 대비 81.89% 증가(2,321건)

④ 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 선택권 제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① 항생제·주사제처방률, 제왕절개분만을 전면 공개

-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높은 항생제·주사제 처방률과 제왕절개분만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함
 - * '05년에는 처방률이 낮은 긍정적인 의료기관만을 공개하였으나, '06년에는 모든 의료기관을 공개함
- 인터넷을 통하여 내가 다니는 의료기관의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및 제왕절개분만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 선택에 도움을 줌
 - * 국민 조회건수가 ('05)9만회 → ('06)50만회로 567% 증가
-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이 공개 전·후 비교에서 크게 낮아졌으며, 제왕절개분만률도 점차 감소하고 있음

구 분	공개 전		공개 후	증 감
항생제처방률	28.4%	→	25.1%	3.3%p↓
주사제처방률	26.0%	→	23.2%	2.8%p↓
제왕절개분만율	36.7% ('02년)	→	35.8%	0.9%p↓

②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진료비 확인서비스' 실시

-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부담되었는지 확인 신청하는 경우 의료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문적으로 심사·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국민 권리찾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부의 업무시스템을 신속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결과, 고액진료건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이 급증하고 있음
 - * ('04) 2,894건 → ('05) 4,159건 → ('06) 7,559건 접수('05년대비 81.8%↑)
- '06년도에는 2,670건에 대하여 총 21억 2천만원의 잘못된 진료비를 확인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었으며, 향후 국민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추진할 계획임

⑤ 중소 IT 벤처기업의 협력적 동반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① 중소기업 계약대금 대출 보증

-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중소 IT 벤처기업들이 사업착수 후 사업대금 입금 시점까지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서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계약대금 대출보증제도'를 도입
 - 소프트웨어 공제조합과 정보사회진흥원과의 협약으로 매출채권 (계약서 등)을 담보로 계약금액의 85%까지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대출서비스 제공
- '06년 제도 도입 후 한해 동안 약 10억원의 대출서비스 완료

② 사업비 집행정보 실시간 제공

- 사업비 집행정보가 주사업자에게만 제공됨에 따라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체들은 사업비가 언제 입금되고 집행되는지 알 수 없는 문제 발생
 - 사업비 집행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를 통해 사업비 집행시 전체 컨소시엄 참여기업에게 문자메세지 및 e-Mail로 관련 정보를 자동발송
 - 집행금액, 입금계좌, 집행일자 등을 통보받게 되어 중소기업은 신속한 자금정보를 통해 원활한 자금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 * '06년 SMS(문자서비스) 660건제공, 사업비 집행여부 문의 전년 대비 82% 감소

※ 고객만족도지수 74.3점('05.9년) → 86.5점('06.12)

⑥ 에너지사용량 신고업무의 획기적 개선(에너지관리공단)

① 에너지사용량 신고업무 개요

- 연간 2,000toe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당해 연도 에너지사용량을 해당 지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함
⇒ 신고내용은 지자체에서 취합하여 공단으로 이관되고 전산화 및 오류점검 과정을 거쳐 국내 에너지사용량 통계로 활용됨
- 지자체의 경우 담당자의 교체가 빈번하고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 기업 입장에서는 수기 작성방식으로 인하여 자료작성 및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자료 제출 후에도 수많은 추가 요청자료에 대응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② 프로세스 개선 : 신고업무의 주체를 지자체 → 공단으로 이관

- 고객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추가 요청 사항을 공단에 내던 이원화된 불편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전문성이 높은 공단 직원과 직접 관련 업무를 상담하게 되어 빠른 신고서 작성이 가능해졌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변경된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함

③ 고객서비스 개선 : One-stop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을 통해 업무절차를 분석하고, One-stop 전자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직접 인터넷에서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도록 개선

④ 주요성과

- 에너지사용량 통계 구축 시기가 244일 → 142일로 단축
- 공단 지사의 12명의 인력이 절감되어 핵심사업으로 전환

⑦ 전문성과 핵심역량 중심의 지식조직 구축(한국학술진흥재단)

① 정부산하기관 최초 전체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채 실시

- 내부 직위공모 자격을 2급 이상 간부에서 3급 이상 일반직원으로 확대
 - 3급 직위공모 보직비율이 '05년 10%에서 '06년 45%로 현격히 증가
 - * 공공부문의 모범 혁신사례로 평가
 - 독일 기센대 박사출신의 4급 직원을 연구사업조정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중심의 발탁인사 시행
- 지식정보센터장, 국제교류팀장, 정책홍보팀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3개 직위는 외부 직위공모 실시

② 지식조직화를 통한 지식경영 구현

- 지식정보 전문가를 영입하고, 지식경영의 허브 역할을 하는 지식정보센터를 설치·운영
-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 인사조직·연구기획·재무회계·경영정보시스템 등 4과목을 개설하여 자체 MBA 운영
- 1부서 1학습조직화를 추진하여 총 23개 학습조직을 구성하고 136회 학습활동을 실시하여 구성원의 학습역량 강화
- 그룹웨어 및 지식관리시스템(KMS)를 활성화하여 학습 및 교육결과 지식의 공유 및 확산 촉진

③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식환원 : '방과후 학교' 운영

- 학술 및 교육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
- 소외지역 중학교(경기도 안성중학교)와 협약체결, 관련 전공 석박사 22명이 참가하여 논술·영어·수학·과학 등 강의

⑧ 창의적 조직문화 혁신운동 전개 (한국철도시설공단)

1 국가철도망 확충 및 시설관리 효율화

- 철도 100년 역사 최초로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DB화하여 국가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경부선 전구간 전철화, 전국의 모든 열차운행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 설립, 의정부~동두천 복선전철화사업 개통 등으로 수도권 등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2 철도산업의 시너지 창출

- '05년 중국 수투선 감리용역에 이어 '06년 무한~광주여객전용선의 감리용역을 수주하여 공단이 보유한 철도의 기술역량을 입증 받았고 '미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시범노선 구축사업자로 선정되는 성과 창출

3 설계VE, ERP 등을 통한 업무혁신

- 6시그마, 설계 VE, 시공공법 개선 등을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6,700억원 상당의 재무효과를 달성
- 공단 전 업무분야를 통합한 빅뱅방식의 ERP를 구축하여 Paperless office 실현, 650개 건설현장과 실시간 업무공유시스템 구축

4 조직 및 인사혁신

- '06.1월 기능중심 조직을 공단 사업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중심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직렬폐지·승진과 승격 분리·경력개발제도(CDP) 도입 등 성과와 능력중심의 신인사제도 실현

⑨ 고객을 최우선하는 혁신조직으로 탈바꿈 (기술보증기금)

① 고객지향적 조직개편

- 고객인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 고객지원팀을 이사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CS-Level Up위원회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CS조직을 확충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렴한 불편사항을 즉시 제도개선에 반영

②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대폭 개선

- 고객 편의를 위해 신청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On-line접수제도’와 전자방식으로 보증서를 전송하는 ‘전자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함
 - 보증신청에서 보증서발급까지 이르는 보증지원소요시간을 단축시켜 고객의 불편사항을 대폭 줄임
 - * 소액보증기업은 보증서 발급까지 2~3회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줄여 1회 방문만으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보증 또는 기술평가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즉시 고객에게 통보
- 기술력이 우수한 A+기업 등에 대하여는 기보 직원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서 보증을 해주는 ‘무방문보증제도’를 도입
-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공지원을 위해 기보 직원을 지정도우미로 선정하여 기술·경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업전담 서포터즈제도’ 등을 운영중임

※ 고객만족도지수가 78.8점('05년) → 83.1점('06년)으로 크게 향상

③ 보증지원 프로세스 변경

- 모든 보증신청기업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증지원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기술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보증지원 외에도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
 - * 기술평가에 의한 벤처·INNO-BIZ 선정기업(개) : ('05년) 4,301 → ('06년) 8,441

〈붙임4〉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 평가지표

① 정부투자기관 2006년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가중치 부문	건설 및 서비스 기관			제조 기관			진흥 기관		
	계량	비계량	계	계량	비계량	계	계량	비계량	계
종합경영부문	15	15	30	13	17	30	10	20	30
주요사업부문	15	20	35	17	18	35	20	15	35
경영관리부문	10	25	35	10	25	35	10	25	35
합 계	40	60	100	40	60	100	40	60	100
대 상 기 관	한전, 도공, 주공, 수공, 토공, 철도(6개)			조폐, 석탄, 석유(3개)			광진, KOTRA, 농기반, 농유공, 관광 (5개)		

② 정부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지표

지표분야	지표명 <계량지표산식>	평가방법	가중치
책임경영	가. 책임경영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20> 10
	나. 지배구조 적정화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4
	다. 고객만족경영 실천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6
혁신경영	가. 혁신 리더십 및 비전과 전략	9등급평가	<15> 7
	나.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8
윤리경영	가. 윤리경영 실천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15> 7
	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노력과 성과	9등급평가	8
조직 경영성과	기관 종합평가의 결과 반영		<50>
계			100

③ 정부산하기관 2006년 경영실적평가지표

구 분	유 형 분 류	부문 가중치			계량여부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계 량	비계량
기본가중치		34	40	26	35	65
수익추구 성격이 강한 기관	(1) 검사·검증	34	40	26	35	65
	(2) 금융·수익	34	40	26	35	65
	(3) 문화·국민생활	39	35	26	30	70
산업진흥 등 공익성 기관	(4) 산업진흥	39	35	26	30	70
	(5) 연수·교육훈련	34	35	31	30	70
	(6) 학술·연구 지원	34	40	26	30	70
투자시설관리	(7) 건설·시설관리	29	40	31	35	65
별도의 평가시스템 운용	(8) 연·기금 운용	34	35	31	35	65
	일부 ¹⁾	34	40	26	35	65

〈붙임5〉 경영평가단 구성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50명)

< 총괄반 >

- 단장 박완규(중앙대, 재정학), 총괄간사 신완선(성균관대, 산업공학) · 박재하(금융연구원) 계량간사 정민근(안진회계) 등 11인

< 비계량반 >

- (인사조직관리팀) 팀장 정진호(노동연구원, 노동경제) 등
- (재무예산관리팀) 팀장 서영호(경희대, 경영) 등
- (주요사업1,2,3팀) 팀장 박순애(서울대, 행정) 등

< 계량반 >

- 팀장 고종권(한양대, 회계), 간사 안숙찬(덕성여대, 회계) 등

2.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105명)

< 종합경영반 >

- 단장 송희준(이화여대, 정책), 총괄간사 조택(이화여대, 행정) 등

< 주요사업반 >

- 최종원(서울대, 정책), 김재호(에너지연구원, 정책) 등

< 경영관리반 >

- 김호섭(아주대, 행정), 김창수(중앙대, 경영) 등

< 계량반 >

- 김완희(경원대, 회계), 신현걸(가톨릭대, 경영) 등

기획재정부 <small>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small>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8. 6.20(금) 17:00 이후	
배포일시	2008. 6.20(금) 10: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담당과장	박성동(2150-5550)	담당자	이종석 서기관(2150-5551) 변민정 사무관(2150-5554) 윤윤국 사무관(2150-5553)

제 목 : 공기업·준정부기관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 기획재정부는 101개 공공기관(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에 대한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였음

1. '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요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는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 경영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139명)로 경영평가단(단장 : 현오석 현 고려대점임교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 '07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특징은

○ 금년부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24개)과 준정부기관(77개)을 통합하여 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준정부기관까지 전면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였음

2. 경영실적 평가결과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주요사업 실적 부진, 경영관리 비효율 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하락
- ◇ 기관장의 평가결과도 책임경영 노력 미흡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

【 공기업(24개 기관) 】

- ① 24개 공기업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주요사업 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

< 공기업 평가결과 >

구 분	'07년(A)	'06년(B)	증감(A-B)
최 고(점)	80.0	83.5	△3.5
최 저(점)	60.2	62.3	△2.1
평 균(점)	73.2	75.7	△2.5

② 유형별 평가결과

- 한국전력공사(공기업1)는 정전시간 49% 단축과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사업 호조, 한국지역난방공사(공기업2)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1위 차지
- 대한석탄공사(공기업1)는 재무구조 취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공기업2)는 효과적 투자유치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최하위

③ 기관장 평가결과

- 24개 공기업 기관장 평가결과는 책임경영 및 이사회 활성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저조

< 공기업 유형별 기관장 평가결과 >

	'07년(A)	'06년(B)	증감(A-B)
공기업1	74.1	77.5	△3.4
공기업2*	67.6	-	-
공기업 전체	71.4		

* 종전 정부산하기관인 공기업2 유형은 금년에 기관장 평가 처음 실시

【 준정부기관(77개 기관) 】

- ① 77개 준정부기관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책임경영 미흡과 경영관리 비효율 등으로 전년보다 하락

< 준정부기관 평가결과 >

구 분	'07년(A)	'06년(B)	증감(A-B)
최 고(점)	81.8	83.6	△1.8
최 저(점)	57.8	52.8	5.0
평 균(점)	71.4	72.4	△1.0

② 유형별 평가결과

- 에너지관리공단(산업진흥1)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DB구축, 에너지 절약 촉진 등의 성과로 준정부기관 전체 1위 차지
- 증권예탁결제원(산업진흥1)이 예산 관리의 비효율, 경영 정보 관리의 취약 등으로 최하위

③ 기관장 평가결과

- 금년에 기관장 평가를 처음 실시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가점수는 67.9점으로 공기업(71.4점)보다 저조
- 유형별로는 산업진흥1 유형이 71.7점으로 상위 수준, 산업진흥2 유형이 65.8점으로 하위 수준

< 준정부기관 유형별 기관장 평가결과 >

유형	기관수	평균	유형별 순위
검사·검증	12개	67.5	3
문화·국민생활	15개	67.2	5
산업진흥1*	11개	71.7	1
산업진흥2**	15개	65.8	6
교육훈련·연구지원	11개	67.2	4
연·기금운용	13개	68.8	2
준정부기관 전체	77개	67.9	-

* 정원 300인 이상

** 정원 300인 미만

3. 평가결과 후속조치

①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 지급

-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은 지급한도내에서 지급률을 결정하여 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한도 >

구분	공기업1 (종전 정부투자기관, 14개)	공기업2 (종전 정부산하기관, 10개)	준정부기관* (77개)
직원	월기본급의 200~500%	월기본급의 250~500%	기준월봉의 100~200%
상임이사	기본연봉의 0~100%	기본연봉의 0~100%	기준연봉의 20~100%
기관장	기본연봉의 0~200%	기본연봉의 0~200%	

* 다만 종전 정부투자기관인 준정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은 공기업1 유형의 성과급 지급한도 적용

②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 16개 우수기관(8개 유형별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는

-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및 차년도 경비예산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1%이내에서 증액

- 15개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 기관경고 및 차년도 경비예산을 1% 삭감
-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조치하고

* 부진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지원을 위해 경영컨설팅 전문가풀을 구성·운영

-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점검

< 유형별 부진기관 현황 >

- 공기업(2) :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준정부기관(13) :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과학문화재단, 독립기념관,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우정사업진흥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산업기술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선정기준 : 유형별 하위 20%이내 기관중 평가점수가 66.7점(만점대비 2/3) 미만

4.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음

□ 아울러, '09년부터는 경영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를 통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 평가지표를 기능별 지표에서 과정별 지표로 변경하고,

* (기능별 지표)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

(과정별 지표) 리더십·전략(계획) - 경영시스템(집행) - 경영성과(결과)

○ 평가방법도 보다 객관적인 6단계 등급으로 전환하는 등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

첨부 : 공기업·준정부기관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기획재정부 대변인

6월 20일(금) 17:00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008. 6. 20

기 획 재 정 부

목 차

I. 평가개요	1
II. 경영실적 평가결과	2
1. 공기업	2
2. 준정부기관	4
III. 평가결과 후속조치	6
1.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6
2.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7
IV. 향후 추진계획	8
< 참 고 >	9

I. 평가개요

① 평가목적

- 경영실적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에 활용

② 평가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③ 평가대상 및 평가기간

- 평가대상 : 공기업·준정부기관(참고1)
- 평가기간 : 매년 3.20~6.20까지

④ 평가 추진체계 및 평가절차

-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활용하여 실시(참고2)
- 평가절차
 - ① 평가편람 시행('06년도말)
 - * '07.12월, 평가편람을 수정의결하여 시행
 - ② 공기업·준정부기관별 기관운영('07년)
 - ③ 경영평가단 구성('08.3월, 현오석 단장 및 총괄간사 2명 등 139명)
 - ④ 경영실적보고서 검토, 현장실사 등 평가실시(매년 3월~6월)
 - * 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경영계약이행실적을 평가(참고3, 4)
 - 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평가결과 확정(매년 6.20까지)

II. 경영실적 평가결과

1. 공기업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① 기관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

- 주요사업 실적 부진과 경영관리 비효율 등으로 전년대비 경영평가결과가 저조

	'07년(A)	'06년(B)	증감(A-B)
공기업1	74.6	78.4	△3.8
공기업2	71.2	72.8	△1.6
공기업 전체	73.2	75.7	△2.5

- 부문별로는 주요사업부문의 점수 하락수준이 종합경영 및 경영관리부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주요사업부문 득점이 공기업1은 ('06년) 81.4% → ('07년) 74.3%(△7.1), 공기업2는 ('06년) 81.6% → ('07년) 78.6%(△3.0)으로 하락

② 유형별 평가결과

- 한전은 정전시간 49% 단축과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사업 호조, 지역난방공사는 신생에너지 활용, 지방 신사업 진출 등으로 1위
- 광진공, 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는 흑자전환 또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노동·자본생산성 제고 등으로 각 유형의 상위권 차지
- 대한석탄공사는 재무구조 취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효과적 투자유치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최하위권

< 공기업 기관 경영실적 평가내용 >

분류	공기업1 (14개)	공기업2 (10개)
우수 (4개)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양호 (10개)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산재의료관리원
보통 (8개)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부진 (2개)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 기관장 평가결과도 기관 평가결과 및 책임경영성과 부진 등으로 저조

- 공기업1 유형은 공기업2 유형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책임경영 및 이사회 활성화 성과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하락

	'07년(A)	'06년(B)	증감(A-B)
공기업1	74.1	77.5	△3.4
공기업2*	67.6	-	-
공기업 전체	71.4	-	-

* 종전 정부산하기관인 공기업2 유형은 금년에 기관장 평가 처음 실시

2. 준정부기관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① 기관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

- 전반적인 경영실적 저조와 일부 신규 평가기관의 경영관리 비효율 등으로 인해 준정부기관 평가점수 평균이 전년대비 1.0점 하락
- 부문별로는 종합경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부문은 하락

구분	'07년(A)	'06년(B)	증감(A-B)
검사·검증	71.6	72.1	△0.5
문화·국민생활	69.9	70.9	△1.0
산업진흥1	72.3	76.2	△3.9
산업진흥2	69.9	71.4	△1.5
교육훈련·연구지원	70.7	71.4	△0.7
연·기금운용	74.3	73.2	1.1
준정부기관 전체	71.4	72.4	△1.0

② 유형별 평가결과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DB 구축,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개발 촉진 등 실적이 우수한 에너지관리공단(산업진흥1)이 준정부기관 전체 1위
- 예산관리, 경영정보관리 등이 취약한 증권예탁결제원(산업진흥1)이 준정부기관 전체 최하위

< 준정부기관 기관 경영실적 평가내용 >

분류	검사·검증 (12개)	문화· 국민생활 (15개)	산업진흥1 (11개)	산업진흥2 (15개)	교육훈련 · 연구지원 (11개)	연·기금운용 (13개)
우수 (12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정보문화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철도시설공단	소프트웨어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건설교통평가원 과학재단	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양호 (26개)	대한지적공사 전파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석유품질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정보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산업안전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학술진흥재단 산업인력공단 요업기술원 청소년수련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통 (26개)	축산물등급판정소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우편사업지원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비자원	산업단지공단 전력거래소 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광해방지사업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보건산업진흥원 환경기술진흥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기술평가원 해양수산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주택금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진 (13개)	소방검정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과학문화재단 독립기념관 원자력문화재단	우정사업진흥회 증권예탁결제원	산업기술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청소년상담원 노동교육원	문화예술위원회

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 종전 정부산하기관인 준정부기관은 금년에 기관장 평가를 처음 실시
- 기관장 평가점수 평균은 67.9점으로, 공기업(71.4점)보다 저조
 - 유형별로는 산업진흥1 유형이 71.7점으로 준정부기관 중 우수, 산업진흥2 유형이 65.8점으로 하위 수준

유형	기관수	평균	유형별 순위
검사·검증	12개	67.5	3
문화·국민생활	15개	67.2	5
산업진흥1	11개	71.7	1
산업진흥2	15개	65.8	6
교육훈련·연구지원	11개	67.2	4
연·기금운용	13개	68.8	2
준정부기관 전체	77개	67.9	-

Ⅲ. 평가결과 후속조치

1.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 금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은 유형별로 성과급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률을 결정

구분	공기업1 (종전 정부투자기관 14개)	공기업2 (종전 정부산하기관 10개)	준정부기관* (77개)
직원	월기본급의 200~500%	월기본급의 250~500%	기준월봉의 100~200%
상임이사	기본연봉의 0~100%	기본연봉의 0~100%	기준연봉의 20~100%
기관장	기본연봉의 0~200%	기본연봉의 0~200%	

* 다만 종전 정부투자기관인 준정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은 공기업1 유형의 성과급 지급한도 적용

- 성과급 지급률은 평가순위보다는 평가점수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 되도록 성과급 지급기준 적용

【 성과급 지급기준 】

- 직원 및 상임이사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률 산정
 - 직원 : (월기본급 또는 기준월봉) × (지급률)*
 - 상임이사 : (기본연봉 또는 기준연봉) × (지급률)*
- * 지급률(%) = 지급률하한 + { (기관점수-최저점수) / (최고점수-최저점수) } × (지급률상한-지급률하한)
- 기관장 :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률 산정
 - 기관장 : (기본연봉 또는 기준연봉) × (지급률)*
- * 지급률(%) = 지급률하한 + { (기관점수-최저점수) / (최고점수-최저점수) } × (지급률상한-지급률하한)

2.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① 우수기관(16개 기관)에 대한 조치

※ 우수기관은 8개 유형별로 상위 2개 기관을 선정

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관련 유공자표창 포함)

- 유공자 표창은 추후 기관별 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

② 차년도 경비예산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1%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② 부진기관(15개 기관)에 대한 조치

※ 부진기관은 유형별 하위 20% 기관 중 평가점수가 66.7점미만(만점대비 2/3)인 기관을 선정

① 기관경고 및 차년도 경비예산을 1% 삭감하여 편성

②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조치

* 부진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지원을 위해 경영컨설팅 전문가풀을 구성·운영

③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점검

IV. 향후 추진계획

- ① 경영실적 평가결과 주무부처 및 기관 통보
- ②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명회 개최(8월중)
- ③ 최종 평가보고서 대통령·국회 보고

<참고1> 공공기관 평가유형 분류(금년도 평가대상 101개 기관)

□ 공기업(24개 기관)

유형	기관명
공기업1 (14개)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공기업2 (10개)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산재의료관리원,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준정부기관(77개 기관)

유형	기관명
검사·검증 (12개)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파진흥원
문화·국민생활 (15개)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진흥1 (11개)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우정사업진흥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농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산업진흥2 (15개)	광해방지사업단,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교육훈련·연구지원 (11개)	요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기금운용 (13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참고2> 경영평가단 명단

부 문 유 형	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계량
단장·총괄간 사(기관수)	단장 : 현오석(고려대 겸임교수) 총괄간사 : 신완선(성균관대, 산업공학), 조택(이대, 행정)			
공기업1 (14)	김준기(서울대, 행정) 박진(KDI대학원, 경제) 홍동표(김&장법률, 경제) 이병태(KAIST, 경영공학) 윤영원(안진회계, 회계신) 박노옥(조세연, 성과관리) 백동현(한양대, 경영학)	박순애(서울대, 행정) 박환용(경원대, 도시계획) 이석준(건국대, 경영학) 박선규(성균관대, 토목공학) 홍성훈(전북대, 산업공학) 이강석(한서대, 항공교통) 안승범(인천대, 교통) 변재현(경상대, 산업공학)	이창우(서울대, 회계학) 배수현(한국공공연구원, 경영) 이정현(명지대, 경영) 권선국(경북대, 회계학) 박중구(서울산업대, 경제학) 임병곤(임병곤세무회계, 세무) 유민봉(성균관대, 행정학)	안숙찬(덕성여대, 회계) 최준빈(안진회계) 손해진(삼일회계) 이민재(성도회계) 윤재원(홍익대, 회계)
공기업2 (10)	고종권(한양대, 회계) 김연성(인하대, 경영) 김수옥(서울대, 경영) 송진규(라이프, 법학) 하혜수(상주대, 행정) 윤병섭(벤처정보대, 회계)	김진욱(건국대, 도시공학) 정형곤(KIEP, 경제) 김홍식(충남대, 경영학) 정명기(한남대, 경제) 김창봉(중앙대, 국제물류)	이영면(동국대, 경영) 이창길(세종대, 행정) 최진욱(고려대, 행정학) 이기환(해양대, 경영학) 홍철규(중앙대, 회계학) 김태규(한남대, 정보통계)	신승표(인하대, 회계) 정대길(삼정회계, 회계) 배성규(한영회계, 회계) 송석창(충정회계, 회계)
검사·검증 (12)	이명석(성대, 행정) 신은종(단대, 경영) 이동규(경희대, 경영) 조만(KDI, 경제) 차동욱(성대, 경영)	윤진호(과기원, 기술정책) 오양호(태평양법무, 법률) 정재희(산업대, 안전학) 안선웅(한양대, 산업학)	이원희(한경대, 행정) 송수영(중앙대, 경영) 오영균(수원대, 행정) 전영섭(서울대, 경제) 허찬영(한남대, 경영)	이성엽(다산회계, 회계) 이기화(다산회계, 회계) 강재희(신한회계, 회계)
문화· 국민생활 (15)	오재인(단국대, 경영) 이상철(부산대, 행정) 이근주(이대, 행정) 김추찬(광운대, 행정) 박종보(한양대, 법학) 홍길표(백석대, 경영)	오철호(숭실대, 행정) 이승길(아주대, 법학) 이기효(인제대, 보건) 김정인(중앙대, 경제) 주효진(현도대, 문화정책)	조경호(국민대, 행정) 김제훈(산업대, 행정) 송종길(경기대, 신방) 김종우(한양대, 경영정보) 윤태화(경원대, 회계)	라현주(삼일회계, 회계) 양현승(신한회계, 회계) 이제경(세빛회계, 회계) 최원석(시립대, 회계)
산업진흥1 (11)	이종원(카톨릭대, 행정) 박석화(카톨릭대, 행정) 김영신(충남대, 소비자) 반병길(경영조직연, 경영) 조만형(한남대, 행정)	이명호(연세대, 경제) 왕성우(백석대, 농경제) 이영재(경북대, 교량공학) 이상복(서경대, 산업공학)	이의영(군산대, 경제) 김태영(경희대, 행정) 박성용(예일회계) 박진우(고려대, IT) 서진완(인천대, 행정)	김용운(삼일회계, 회계) 최대규(성도회계, 회계) 김상부(친지회계, 회계)
산업진흥2 (15)	원윤희(서울시립대, 세무) 김태일(고대, 행정) 임승빈(명지대, 행정) 손원익(조세연, 경제) 정준금(울산대, 행정)	김동욱(서울대, 행정) 김정원(강원대, 경영) 장진규(과기원, 경제) 황선웅(중앙대, 경영)	홍성걸(국민대, 행정) 김신곤(광운대, MIS) 정순관(순천대, 행정) 성명재(조세연, 경제) 박재환(중앙대, 회계)	김완희(경원대, 회계) 김문현(외대, 경영) 유기석(삼정회계, 회계) 전홍(삼일회계, 회계)
교육훈련 ·연구지원 (11)	서원석(행정연, 행정) 고기영(연대차연, 경영) 노시평(서경대, 행정) 유한주(숭실대, 경영) 이상학(국민대, 경제)	전주상(배제대, 정책) 조동호(이대, 경제) 조국현(동북아역사, 기술정책)	배용수(공주대, 행정) 최훈석(성대, 심리) 이장희(충북대, 회계) 원종학(조세연, 경제) 황혜신(행정연, 행정)	유봉환(프로티비티, 회계) 윤여충(삼덕회계, 회계) 정형록(카톨릭대, 회계)
총139명	42명(단장등포함)	33명	38명	26명

<참고3>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

유형	공기업1유형		공기업2유형 및 준정부기관	
평가 부문	평 가 지 표	점수 (점)	평 가 지 표	점수 (점)
종합경영	<35>		<35>	
	○ 책임경영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6	○ 책임경영 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	6
	○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10	○ 이사회 (위원회) · 감사 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4
	○ 이사회 · 감사기능의 활성화 노력과 성과	4	○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10
	○ 생산성			
	- 노동생산성 <부가가치/평균인원>	5	○ 고객만족도 ① 고객만족 개선도 ② 고객만족경영체제 구축노력과 성과	5 5
	- 영업비용 관리 <영업비용/매출액>	5		
주요사업	※기관별 주요사업	<35>	○ 설립목적과 사업과의 연계성 * 기관별 주요사업	6 <35>
경영관리	<30>		<30>	
	○ 조직관리	2	○ 조직 및 인사 · 보수관리의 합리성 ① 조직관리	3
	○ 인사관리	4	② 인사 · 보수관리	4
	○ 보수관리		③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	1
			④ 계량인건비	2
	- 보수관리의 합리화	2	○ 노사관계의 합리성	4
	-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	3	○ 재무 및 예산관리의 합리성 ① 자산운용의 적정성	4
	- 계량인건비 <인건비/매출액>	2	② 예산관리	4
			②-1 계량관리업무비	3
	○ 노사관리	4	○ 경영정보관리의 합리성	2
	○ 재무정책	5		
			○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성	3
	○ 예산운용	3		
	- 계량관리업무비 <관리업무비/매출액>	5		

<참고4> 기관장 경영계약이행실적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점수
책임경영	<15>	
	· 책임경영 노력과 성과	8
	· 지배구조 적정화 노력과 성과	3
	· 고객만족경영 실천노력과 성과	4
혁신경영	<15>	
	· 혁신리더십 및 비전과 전략	7
	·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8
윤리경영	<10>	
	· 윤리경영 실천 노력과 성과	5
	· 사회적 책임성 강화 노력과 성과	5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10>
조직 경영성과	· 기관 종합평가의 결과 반영	<50>

<참고5> 유형별 최상위기관(8개) 주요 평가내용

유형	기관명	주요 평가결과
공기업1	한국전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계전력피크 억제와 전력 최대수요 패턴분석을 통한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성 제고 ▪ 해외사업 추진 성과가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제르바이잔 민자발전사업권 획득, 배전기술·시스템의 수출 확대
공기업2	한국지역난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 모델 개발 - Heat Pump 활용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실적 우수 * 미활용 온도차 에너지자원인 하수처리수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 공기업 최초로 전 사업장에 대한 ‘한국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인증(지식경제부 주관)을 획득하는 등 고객만족경영 수준 우수
검사 검증	한국가스안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기반 검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수행 -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사이버지사를 운영 - 행정관청 가스안전 지원시스템(G-Topia) 구축을 통한 가스 안전관리 위탁업무 관련 행정업무 대폭 간소화 * G-Topia : 공사의 안전관리 DB를 행정관청과 연결, 정보 공유
문화 국민생활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험급여비 지출모니터링 강화 - 급여조사통합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운영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부당청구로 확인된 청구금액 규모가 전년대비 61% 증가) - 부당수급 사후관리를 통한 부당진료비 환수 강화(환수결정액이 전년대비 21.7% 증가)
산업 진흥1	에너지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협약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실적이 우수 - 청정개발체제 컨설팅 및 진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DB 구축 - 산업계에 업종별 대책반 구성 및 전문교육 실시
산업 진흥2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29.9%→40.6%로 향상 * 중소기업 보호·육성 관련배점을 5점→10점으로 확대
교육훈련 연구지원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조 및 사업상호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선택과 집종의 원칙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 - 사업구조를 기존 나열식 16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축소하여 집중 관리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대형실용화 VC사업* 중점 추진 * VC-10 사업 : 스마트하이웨이, 도시형자기부상열차 등 사업
연기금 운용	한국수출보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거래 지원실적 확충 - 국내기업(LG전자, 삼성등)의 신규 해외재판매 법인 발굴 등을 통해 재판매 수출거래실적이 전년대비 11% 증가 ▪ 통합적 리스크관리와 사업비 지출한도의 설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절감 노력 강화(계획 대비 지출을 23.4% 절감, 632억원 규모)

<참고6> 유형별 최하위기관(8개) 주요 평가내용

유형	기관명	주요 평가결과
공기업1	대한석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취약 전체 차입금 중 6월이내 만기 차입금이 66%로 재무위험에 노출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27%로 부채상환에 어려움 예상 정부의 인건비 인상을 가이드라인(2%) 위반
공기업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운영 성과 미흡 및 경영공시 활동 저조 서귀포미항 1단계공사 추진실적 저조 및 개발사업 추진노력 부진 인력활용의 팀별/업무별 인원재배치 노력이 부족
검사 검증	한국승강기안전 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관련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 매출액영업이익율(-3.9%), 총자산순이익율(-5.1%) 및 자기자본순이익율(-7%) 등이 저조 '06년 당기순이익 7.8억원 → '07년 당기순손실 9.8억원으로 전환
문화 국민생활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경영정보관리체계 미흡 및 사용편이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 고도화 노력 부족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ERP 사용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34%) 정부의 인건비 인상을 가이드라인(2%) 위반
산업 진흥1	증권예탁결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섭외성 경비의 과도집행 등 방만경영 심각 유형경비의 법인카드 집행, 골프접대비, 상품권 구매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지출 과다 정부의 인건비 인상을 가이드라인(2%) 위반
산업 진흥2	한국부품소재산업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경영관리시스템 효율성 미흡 '05.7월 신설기관으로 보수체계의 단순화, 팀장에 대한 권한위임 등 합리적 조직관리 추진실적 저조 개발사업 기술료 관련 어음의 회수관리 부실 등 재무 및 예산관리체계 취약
교육훈련 연구지원	한국노동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사업의 구체적 추진전략 타당성 부족 직급체계, 결재단계 간소화 실적 미흡 및 동기부여·조직문화 성과 등 전반적인 조직관리 합리성 저조 연봉제 적용직급의 확대(기존 1~2급→3급 교수직 포함) 노력 부족 및 성과중심 임금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연기금 운용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실적 저조 기금사업 지원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사업 신청건수는 전년대비감소 체계적 예산관리 노력 부족 종합적 예·결산 차이분석에 따른 예산편성 피드백 미흡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미도입 정부의 인건비 인상을 가이드라인(2%) 위반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09. 8. 31(월) 18: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담당과장	홍두선 (2150-5550)	담당자	류중재 사무관(2150-5551) 변민정 사무관(2150-5554)

제 목 : 2007년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및 사후조치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8.31)을 거쳐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의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수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조치사항을 시달
-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석유공사('09.6) 및 한국철도공사('09.7)의 '07년도 경영실적자료 오류를 정정하여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기 위한 것임
- * 한국석유공사 : '02-'06년 외국납부법인세를 '07년도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처리하여 부가가치 과소 산정
 - * 한국철도공사 : '07.12월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 평가시 누락하여 경영실적자료 작성

- 금번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후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석유공사 】

-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 기 관 : (당초) 79.382점 → (수정) 78.758점 (△0.624)

- 직원에 대해 성과급 지급률을 수정(490.8% → 481.3%(△9.5%p))하고
과다지급된 성과급(△4억여원)을 환수하도록 하며, 「기관경고」
조치하였음

【 한국철도공사 】

- '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 기 관 : (당초) 79.632점 → (수정) 76.382점 (△3.25)

- 직원에 대해 성과급 지급률을 수정(494.6% → 445.2%(△49.4%p))하고
과다지급된 성과급(△317억여원)을 환수하도록 하며, 「기관경고」
조치하였음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경영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 경영실적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 사후적으로 허위·오류의 경영실적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률 삭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
하겠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9. 6. 19(금) 15:00		
배 포 일 시	2009. 6. 19(금) 15: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담당과장	강승준(2150-5550)	담 당 자	류중재 사무관(2150-5551) 김장훈 사무관(2150-5552) 변민정 사무관(2150-5554)

제 목: '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 기획재정부는 '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09.6.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

I. '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08년도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실시하였음

○ 이 과정에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기관장과 기관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 '09.3월, 평가단 구성 (기관장평가 45명, 기관평가 139명) < 참고 2 >

· 기관장평가 단장 : 이만우 교수(고대), 기관평가 단장 : 이창우 교수(서울대)

* '09.4~6월초, 서면평가 및 기관실사(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평가 실시

□ '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특징을 보면,

○ 기관장평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와 연계토록 하였으며

○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지나친 순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기관별 순위평가가 아닌 등급평가 방식으로 실시하였음

II. '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 기관장 평가 】

① 평가대상 : 92개* 공공기관장의 경영계획서 및 선진화 계획 이행 실적

* 전체 117개 기관 중 '09. 3월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 <참고1>

② 평가방식

○ '08.8월 이후 시행된 일련의 기관장 평가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임기 중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사업인 기관 고유과제와 선진화·경영효율화 등 공통과제*로 구분하여 각각 50%의 가중치로 평가

* 선진화 : 민영화, 통폐합·기능조정

경영효율화 : 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출자 정리, 청년인턴채용

○ 기관장 평가결과는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

* 아주우수(90이상), 우수(70이상~90미만), 보통(50이상~70미만), 미흡(50미만)

③ 평가결과

○ 기관장 평가결과 등급 분포를 보면,

미흡 4명, 우수 24명, 보통 64명이며, 아주우수는 없음

< 기관장 평가결과 등급 분포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90점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50점미만
0	0	24	47	17	4
(0%)	(0%)	(26.1%)	(51.1%)	(18.5%)	(4.3%)

※ < 참고3 > '08년도 기관장평가 등급별 기관분포

【 기관 평가 】

① 평가대상 : 공기업(24개) · 준정부기관(76개)의 '08년도 경영실적

② 평가방식

○ '07.12월 시행된 기관 평가편람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SOC, 산업진흥, 연기금운용 등 9개 평가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평가

* 평가지표를 『리더십 · 전략 - 경영시스템 - 경영성과』 부문과 같이
계획 - 집행 - 성과 등 과정별로 구분하여 활용 (3개부문 30여개 지표)

○ 기관의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S, A~E)

③ 평가결과

○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를 보면, A등급 18개, B등급 38개, C등급 27개, D등급 16개이고 E등급은 1개임

< 유형별 평가결과 등급 분포 >

	기관수	S	A	B	C	D	E
▪ SOC	14	-	2	4	7	1	-
▪ 서비스진흥제조	10	-	1	5	2	2	-
▪ 검사검증	6	-	-	3	1	2	-
▪ 문화국민생활	9	-	2	1	4	2	-
▪ 산업진흥1	10	-	1	3	6	-	-
▪ 산업진흥2	6	-	-	2	2	2	-
▪ 교육훈련연구지원	6	-	1	3	1	1	-
▪ 연기금운용	14	-	3	8	1	1	1
▪ 중소형기관	25	-	8	9	3	5	-
합 계	100	-	18	38	27	16	1

※ < 참고 4 > '08년도 기관평가 등급별 기관분포

Ⅲ. 평가결과 후속조치

①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조치

- 당초 기관장 평가지침대로 50점 미만인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 (4명)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 '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해임건의한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1건에 불과

-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7명(50점이상 ~ 60점미만)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

②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 경영평가결과 등급제 취지에 맞춰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경기침체, 재무실적 저조 등을 감안하여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20% 삭감

< 성과급 지급최대한도 하향 조정 >

- ① 기관장 : · 공기업 : (당초) 기본연봉 200% → (조정) 160%이내
· 준정부* : (당초) 기본연봉 60% → (조정) 48%이내

- ② 직 원 : · 공기업 : (당초) 월기본급 500% → (조정) 400%이내
· 준정부 : (당초) 기준월봉 200% → (조정) 160%이내

* 7개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기본연봉의 100% → 80%이내(△20%p)

⇒ 금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

① 기관장평가 대상기관 (92개)

유형	기관명
공기업 (19개)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공사
준정부기관 (61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신용보증기금,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기타 공공기관 (12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술의전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투자공사

② 기관평가 대상기관 (100개)

유 형		기 관 명
공 기 업	SOC (14개)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서비스·진흥·제조 (10개)	대한주택보증, 한국산재의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준 정 부 기 관	검사·검증 (6개)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파진흥원
	문화·국민생활 (9개)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진흥1 (10개)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산업진흥2 (6개)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교육훈련·연구지원 (6개)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기금운용 (14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중소형기관 (25개)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독립기념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계		100개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6개)

참고 2

기관장 평가단 및 기관 평가단 명단

1 기관장 평가단 (45명)

유 형	평 가 위 원	인원 (45명)
단장	이만우(고려대 경제)	1명
총괄간사	조택(이화여대 행정)	1명
SOC (11개)	조명현(고려대 경영, 간사), 박순애(서울대 행정, 간사), 김신곤(광운대 경영), 이견창(성균관대 경영), 이상학(국민대 경제)	5명
서비스·진흥·제조 (9개)	김진영(고려대 경제), 김창호(글로벌경영연구소 대표), 우원석(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우윤석(숭실대 행정)	4명
검사·검증, 문화·국민생활, 교육훈련·연구지원 (15개)	오철호(숭실대 행정, 간사), 문옥륜(인제대 보건), 오영균(수원대 행정), 이강균(서경대 산업공학), 이영재(경북대), 황용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6명
산업진흥1, 2 (14개)	박영범(한성대 경제), 김수욱(서울대 경영), 김영신(충남대 소비자학), 박용성(단국대 행정), 윤태화(경원대 경영), 이광민(법무법인 해우 변호사)	6명
연기금운용 (13개)	김동원(고려대 경영), 김호대(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이동기(국민대 법학), 김동헌(고대, 경제), 강석훈(울촌 변호사)	5명
중소형기관 (19개)	이근주(이화여대 행정), 김광희(중소기업연 연구원), 이영면(동국대 경영), 정규석(강원대 경영), 정순관(순천대 행정), 이승태(H-Core 대표), 홍동표(김&장 고문)	7명
기타공공기관 (13개)	백승관(홍익대 경제학 금융), 강황선(전국대 행정), 이종욱(서울여대 경제), 정영배(인천대 산업공학), 정준금(울산대 행정)	5명
계량반	손해진(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장영순(딜로이트회계법인 부대표), 박길호(세일회계법인 대표), 정봉관(대주회계법인 회계사), 조광현(일신회계법인)	5명

2 기관 평가단 (139명)

유형	부문	리더십/전략	주요사업	경영효율화	계량
단장		이창우(서울대, 경영)			
총괄간사		신완선(성균관대, 산업공학), 오재인(단국대, 경영)			
SOC (14개)		박진(KDI, 경제) 박중규(서울산업대, 경제) 백동현(한양대, 경영) 이병태(KAIST, 경영공) 권혁주(서울대, 행정) 최준욱(조세연, 경제)	이우일(서울대, 기계공) 박선규(성균관대, 토목공) 안승범(인천대, 교통) 홍성훈(전북대, 산업공) 김근용(국토연, 연구위원) 김의재(국민대, 경영) 이원우(에너지경제연)	권선국(경북대, 회계) 유민봉(성균관대, 행정) 최진욱(고려대, 행정) 김장현(동양대, 경영) 박상욱(서울대, 경영) 이상철(부산대, 행정)	고종권(한양대, 회계) 윤재원(홍익대, 회계) 이민재(성도회계) 나철호(재정회계)
서비스 진흥·제조 (10개)		김진욱(건국대, 경제) 김태규(한남대, 정보통계) 홍철규(중앙대, 회계) 박경래(형사정책연, 행정) 임영균(광운대, 경영)	김홍식(충남대, 경영) 이기환(해양대, 경영) 정형곤(KIEP, 경제) 이기영(경기대, 경제) 장원창(인하대, 경제)	이원희(한경대, 행정) 윤병섭(서울벤처정보, 회계) 하혜수(경북대, 행정) 임효창(서울여대, 경영) 조성욱(서울대, 경영)	윤영원(안진회계, 회계) 전규인(숭실대, 회계) 배성규(한영회계, 회계) 김인근(화인경영회계, 회계)
검사 · 검증 (6개)		이명석(성균관대, 행정) 최홍석(고려대, 행정) 유길상(기술교육대, 인력개발)	이동규(경희대, 경영) 신은종(단국대, 경영) 곽대우(엘리오&컴퍼니, 경영) 남기찬(서강대, 경영) 김주찬(광운대, 행정)	박정수(이화여대, 행정) 강일준(한림대, 식품영양학) 이태진(한국사이버대, 경영)	정대길(삼정회계, 회계) 강재희(신한회계, 회계)
문화· 국민생활 (9개)		김동욱(성균관대, 통계) 반병길(경영조직연구원, 경영) 김연철(한남대, 정치언론국제) 김재일(단국대, 행정)	박순애(서울대, 행정) 조승우(서울시립대, 경영) 김정인(중앙대, 산업경제) 박상규(중앙대, 통계)	노용진(서울산업대, 경영) 오승훈(인사이트그룹, 경영) 최현자(서울대, 소비자) 김흥기(우송대, 철도경영)	김갑순(동국대, 회계) 양현승(신한회계, 회계) 윤규섭(삼일회계, 회계)
산업진흥1 (10개)		정철용(상명대, 경영) 이태호(숙명여대, 경영) 김태영(경희대, 행정) 박석희(기톨릭대, 행정) 양희동(이화여대, 경영) 홍길표(백석대, 경영)	이명호(KAIST, 경영) 왕성우(백석대, 경영) 김창봉(중앙대, 무역) 김병량(단국대, 도시계획)	홍성걸(국민대, 행정) 박성용(예일회계, 회계) 전영현(서울대, 행정) 송영출(광운대, 경영)	유봉원(새빛회계, 회계) 김상부(천지회계, 회계) 최대규(성도회계, 회계)
산업진흥2 (6개)		임승빈(명지대, 행정) 이창길(세종대, 행정) 장정주(서울대, 경영)	윤태범(방송통신대, 행정) 박재환(중앙대, 경영) 공은배(충남대, 전기정보통신)	이종원(기톨릭대, 행정) 성명재(조세연, 경제) 성태경(경기대, 경영정보)	전홍(삼일회계, 회계) 정형록(경희대, 회계세무)
교육훈련· 연구지원 (6개)		한경석(숭실대, 경영) 황혜신(행정연구원, 행정) 이강성(삼육대, 경영)	전주상(배재대, 행정) 박영일(이대, 디지털미디어) 박대호(한양대, 토목공학)	배용수(공주대, 행정) 김승열(법무법인삼영, 법률) 송인국(단국대, 경영정보)	김완희(경원대, 회계) 이성엽(다산회계법인, 회계) 정성호(삼정회계법인, 회계)
연기금 운용 (14개)		정현숙(상명대, 가족복지) 이덕민(건국대, 경제) 오세진(강남대, 경영) 전영섭(서울대, 경제) 한상록(능률협회컨설팅, 경영) 장시영(성균관대, 경영)	윤덕룡(KIEP, 국제금융) 전성훈(서강대, 경제) 정지민(상명대, 금융경제) 장진호(연세대, 경영) 고동원(성균관대, 법률) 조기용(단국대, 정치외)	김동욱(서울대, 행정) 이상휘(경희대, 무역) 김병곤(남서울대, 경영) 김용훈(수원대, 행정) 서진원(인천대, 행정) 강준호(서울대, 체육교육) 서현식(단국대, 경영)	이주현(안진회계, 회계) 김철희(삼일회계, 회계) 조승우(신한회계, 회계) 양일근(예일회계, 회계)
중소형 기관 (25개)		-	-	-	안성열(삼덕회계, 회계) 홍태호(한영회계, 회계) 김상현(단국대, 경영)

참고 3

'08년도 기관장평가 등급별 기관분포 (92개)

등급	기관명	소계
아주우수 (90이상)	-	-
(80이상 - 90미만)	-	-
우수 (70이상 - 80미만)	<p>(공기업 3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p> <p>(준정부 17개)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p> <p>(기타 4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투자공사</p>	24개
보통	<p>(공기업 10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p> <p>(준정부 31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p> <p>(기타 6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은행</p>	47개
	<p>(공기업 5개)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p> <p>(준정부 10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p> <p>(기타 2개) 예술의전당, 한국국제교류재단</p>	17개
	<p>(공기업 1개) 한국산재의료원</p> <p>(준정부 3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p>	4개
미흡 (0 - 50미만)		

참고 4

'08년도 기관평가 등급별 기관분포 (100개)

등급	기관명	소계
S	-	-
A	<p>(공기업 3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p> <p>(준정부 7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p> <p>(중소형 8개) 독립기념관,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p>	18개
B	<p>(공기업 9개)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p> <p>(준정부 20개)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p> <p>(중소형 9개)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p>	38개
C	<p>(공기업 9개) 대한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산재의료원</p> <p>(준정부 15개) 교통안전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p> <p>(중소형 3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p>	27개
D	<p>(공기업 3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p> <p>(준정부 8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파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p> <p>(중소형 5개)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청소년상담원</p>	16개
E	(준정부 1개) 영화진흥위원회	1개

기획재정부 대변인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0. 6. 14(월) 16: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담당과장	홍 두 선 (2150-5550)	담당자	류종재 사무관 (2150-5551) 김장훈 사무관 (2150-5552) 태원창 사무관 (2150-5554)

제목 :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는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10.6.14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

I.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0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를 실시하였음

* 기관장 평가 : 총 96명 (공기업 20, 준정부기관 64, 기타공공기관 12)

** 기관 평가 : 총 96개 (공기업 23, 준정부기관 73)

- 이 과정에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기관장*과 기관**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 기관장 평가단 : 단장 이만우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총 55명

* 기관 평가단 : 단장 이창우 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총 130명

□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3월 공표된 4대 중점운용방향*에 따라 이루어졌음

* '10.3.12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0년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운용방향」 참고

① **[평가단 구성]** 평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을 조기에 완료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

* 관계부처·전문가 추천 등을 거쳐 평가단을 작년보다 1개월 정도 일찍 구성 (2월중순)하고, 평가위원 워크숍을 조기에 개최

② **[평가단 운영]** 평가단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도화 (10.3.11일)

*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 ▲피평가기관으로부터의 연구 용역, 강의, 기타 청탁 등을 금지, ▲윤리 서약서, 상피제 서약서 작성 등

③ **[평가과정]**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 기관장 예우 차원에서 기관장 인터뷰는 평가단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분량을 축소 : '08년도 600p 이내 → '09년도 550p 이내

④ **[평가제도]** 성과중심의 계량평가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량평가지표 비중 확대

: ('08년도) 공기업(45%), 준정부(40%) → ('09년도) 공기업(50%), 준정부(45%)

* 계량평가만 하는 중소형기관의 범위를 정원 100인미만에서 500인미만으로 확대

: 중소형기관 수 ('08년도) 25개 → ('09년도) 40개 (+15개)

Ⅱ.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 '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개선

【 기관장 평가 】

① **평가대상 : 96명*** 공공기관장의 경영계획서(선진화 계획 포함) 이행 실적

* 평가대상 기관장 중 재임기간이 6개월미만은 제외 <참고1>

② 평가방식

- ▲기관장 리더십, ▲공공기관 선진화(경영효율화, 노사관계), ▲고유과제로 구분하여 각각 20%, 40%, 40%의 가중치로 평가
- 기관장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

평가등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종합점수	90점 이상	80~90점	70~80점	60~70점	50~60점	50점 미만

*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성과급 지급률 차등화 등 합리적 후속조치를 위해 당초 "보통" 구간(60-80점)을 공운위의 의결을 거쳐 "양호"(70-80점)와 "보통"(60-70점)으로 세분화

③ 평가결과

- 우수 5명, 양호 26명, 보통 45명, 미흡 19명이고 아주미흡 1명
- '08년에 비해 양호이상 기관장 비중이 증가하는 등 평가결과가 개선

< 기관장 평가결과 등급 분포 >

(명)

연도	기관수 (비중)	등급 분포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09년	96 (100%)	0 (0%)	5 (5.2%)	26 (27.1%)	45 (46.9%)	19 (19.8%)	1 (1.0%)
'08년	92 (100%)	0 (0%)	0 (0%)	24 (26.1%)	47 (51.1%)	17 (18.5%)	4 (4.3%)

※ < 참고 2 > '09년도 기관장평가 등급별 현황

【 기관 평가 】

① **평가대상** : 96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09년도 경영실적 <참고1>

② **평가방식**

- 『리더십 · 전략(계획) - 경영시스템(집행) - 경영성과(산출)』 3개 부문 20~30개 지표로 평가
- 기관의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 (S, A~E)

③ **평가결과**

- S등급 1개, A등급 22개, B등급 44개, C등급 16개, D등급 12개이고 E등급은 1개
- '08년에 비해 A등급이상 기관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

<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

(개)

	기관수	S	A	B	C	D	E
'09년	96	1	22	44	16	12	1
▪ 공기업	23	1	7	9	1	5	-
▪ 준정부기관	33	-	10	14	6	3	-
▪ 중소형기관	40	-	5	21	9	4	1
'08년	100	-	18	38	27	16	1

※ < 참고 3 > '09년도 기관평가 등급별 현황

Ⅲ. 평가결과 후속조치

①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조치

- 평가결과가 “아주미흡”(50점 미만)인 기관장(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 평가결과가 “미흡”(50점이상 ~ 60점미만)인 기관장 19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 평가결과가 미흡인 기관장 19명중 3명은 2년연속 경고이나, 현재 모두 공석으로 경고조치

②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

① 기관장 성과급

-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
- * 종합점수 = 기관 경영 평가(50%) + 기관장 평가(50%)
- 다만, “아주미흡”(50점 미만)인 기관장은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2년연속경고되는 기관장은 성과급을 50% 삭감 지급

② 임·직원 성과급

- 올해부터 기관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기관장 평가결과도 고려하여 성과급 지급률 산정
- * 기관장 평가결과가 보통인 경우 기관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그대로 인정하되, 양호 이상인 경우는 가산하고, 미흡 이하인 경우는 차감

IV. 향후 추진계획

- ① 금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
 -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평가지표 개선·발굴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선진화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 한편 이면합의 등 노사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향후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별도 해임 건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
- ② 아울러, ▲성과중심 평가지표로의 개선, ▲평가단 구성·운영시 투명성·윤리성 확보, ▲평가수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공공기관의 핵심성과와 연계성이 낮은 평가지표나 유사성격의 평가지표 통폐합 등을 통해 성과위주로 평가체계를 단순화
 - 올해 제도화된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욱 보장
 - 경영평가수용도 조사 등을 통해 평가위원을 매년 일정규모씩 교체해 나가고 평가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는 평가위원은 중도 해촉하는 등 평가 모니터링도 강화
 - 평가지표 중 계량평가비중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공공기관의 평가수검부담을 완화

① 기관장평가 대상기관 [96개]

	평가대상 기관
I 유형 (공기업) 20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조폐공사
II 유형 (검사검증/ 비금융형연기금) 17개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III 유형 (문화국민) 20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IV 유형 (산업진흥) 21개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V 유형 (기타/금융형 연기금) 18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중소기업은행,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투자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기관평가 대상기관 [96개]

		평가대상 기관
공기업	SOC (13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서비스·진흥 · 제조 (10개)	대한주택보증, 한국산재의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준정부기관	검사검증 (4개)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문화국민생활 (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진흥 (6개)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거래소, 한국환경공단
	연·기금 운용 (15개)	(금융형기관 6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비금융형기관 9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중소형 (40개)	(검사·검증 8개)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문화·국민생활 14개) 독립기념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산업진흥 18개)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고 2

'09년도 기관장평가 등급별 현황 (96개)

등급	기관명
탁월 (100~90점)	-
우수 (90~80점) (5개)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양호 (80~70점) (26개)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에너지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보통 (70~60점) (4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환경관리공단
미흡 (60~50점) (19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촌어향협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자원공사
아주미흡 (50~0점) (1개)	한국시설안전공단

* 등급내 기관 순서는 가나다순

참고 3

'09년도 기관평가 등급별 현황 (96개)

등급	기관명
S (1개)	한국전력공사
A (22개)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B (44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지적공사,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거래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에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 (16개)	공무원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D (12개)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E (1개)	한국전파진흥원

* 등급내 기관 순서는 가나다순

참고 4

기관장 평가단 및 기관 평가단 명단

1 기관장 평가단 [55명]

	평가단 명단
단장	이만우(고려대)
총괄간사	조택(이화여대)
부문간사 (5명)	박순애(서울대), 박영범(한성대), 손해진(삼일회계), 신완선(성균관대), 오철호(숭실대)
팀장 (5명)	김동현(고려대), 배용수(공주대), 이강군(서경대), 이상학(국민대), 이종욱(서울여대)
평가위원 (48명)	강석훈(울촌법무), 강혜영(포스코연구원), 구문모(한라대), 김병덕(금융연구원), 김수욱(서울대), 김승열(양현법무), 김신곤(광운대), 김주섭(노동연구원), 김주찬(광운대), 김창호(글로벌연구소), 김철영(씨에스법무), 문명재(연세대), 박길호(세일회계), 박만섭(고려대), 박상규(중앙대), 박석희(카톨릭대), 박용성(단국대), 박용승(경희대), 박종희(고려대), 박희준(서울대), 반병길(경영조직연), 배근호(동의대), 손원익(조세연), 신성환(홍익대), 우윤석(숭실대), 윤성호(한양대), 이건창(성균관대), 이기환(해양대), 이병태(KAIST), 이승태(HCore), 이정(외대), 이정동(서울대), 이철수(서울대), 장영순(딜로이트법무), 전주상(배재대), 정규석(강원대), 정봉관(대주회계), 정용남(한림대), 정준금(울산대), 조광현(일신회계), 조승우(신한회계), 차문중(KDI), 허식(중앙대)

② 기관 평가단 (130명)

	리더십/전략	주요사업	경영효율화	경영성과	소계
단장	이창우(서울대,경영)				1명
간사	곽체기(동국대,행정), 오재인(단국대,경영), 이명호(KAIST, 경제), 김완희(경원대,회계)				4명
공기업1 (SOC)	김진욱(건국대,경제) 백동현(한양대,경영) 홍성훈(전북대,산업공) 장현준(KAIST,에너지) 이은형(국민대,경영) 이진무(전임CEO,경영)	이우일(서울대,기계공) 김근용(국토연구원) 이원우(에너지경제연) 김지홍(KDI,경제) 남익현(서울대,경영)	권선국(경북대,회계) 유민봉(성균관대,행정) 조성욱(서울대,경영) 금현섭(서울대,행정) 김장환(동양대,경영)	전규안(숭실대,회계) 윤영원(안진,회계) 나철호(재정,회계) 이성엽(다산,회계) 공영철(삼정,회계) 최원석(시립대,회계)	22명
공기업2 (서비스· 진흥·제조)	홍철규(중앙대,회계) 김태규(한남대,정보통계) 박경래(형사정책연,행정) 강응선(경원대,경제) 김태승(인하대,경제) 박성용(에일,회계)	한경석(숭실대,경영) 정형근(KIEP,경제) 조영재(세종법무법인) 윤병섭(서울벤처정보) 신은종(단국대,행정) 이충기(고려대,지역경제) 이상엽(한서대,행정)	하해수(경북대,행정) 박상욱(서울대,경영) 장원창(인하대,경제) 박주석(경희대,경영) 김철희(한남대,행정) 강준모(홍익대,경제)	배성규(한영회계) 홍길표(백석대,경영) 이민재(성도,회계) 김인근(화인경영,회계) 김문현(외대,회계) 박종성(숙대,회계)	25명
준정부1 (검사·검 증/산업 진흥)	정철용(상명대,경영) 황혜신(행정연구원,행정) 이덕만(건국대,경제) 김우진(고려대,무역) 김연철(한남대,정치언론국제)	이원희(한경대,행정) 김창봉(중앙대,무역) 이희상(성균관대,기술경영) 이상휘(경희대,무역) 한도숙(인천대,재정) 최형재(고려대,경제)	한상록(능률협회,경영) 강일준(한림대,식품영양학) 오승훈(인사이트그룹,경영) 성태경(경기대,경영정보) 최경규(동국대,경영)	김갑순(동국대,회계) 최대규(성도,회계) 이수미(삼일,회계) 조진호(한영,회계)	20명
준정부2 (문화· 국민생활)	임승빈(명지대,행정) 이강성(삼육대,경영) 홍필기(서울디지털대,경영) 양원근(전임CEO,재정)	김동욱(성균관대,통계) 조승우(서울시립대,경영) 홍석표(보사연,복지) 김정인(중앙대,산업경제) 김계현(인하대,자원공학)	송인국(단국대,경영정보) 최현자(서울대,소비자) 임효창(서울여대,경영) 김병일(강남대,세무)	김상부(천지,회계) 정형록(경희대,회계) 김은영(삼정,회계)	16명
연기금 운용	정현숙(상명대,가족복지) 남기찬(서강대,경영) 박선규(성균관대,토목) 유평준(연세대,행정) 이성우(동아대,금융법) 박덕배(현대경제연,금융) 박진우(외대,국제금융) 백승관(홍대,경제)	이동규(경희대,경영) 정지만(상명대,금융경제) 고동원(성균관대,법률) 이의영(군산대,경제) 박철(서울대,경영) 전영순(중앙대,회계) 오은진(여성정책연,인사) 윤창현(서울시립대,금융)	윤덕룡(KIEP,국제금융) 최준욱(조세연,경영) 오세진(강남대,경영) 김경엽(국가발전전략연,재정) 이기영(경기대,경제) 강준호(서울대,체육교육) 원승연(명지대,경영) 구민교(연세대,행정)	이주현(안진,회계) 정대길(삼정,회계) 김철희(삼일,회계) 정도진(중앙대,회계) 양일근(에일,회계) 박제환(안진,회계) 조원덕(삼정,회계)	31명
중소형 기관	-	-	-	김용운(삼일,회계) 안성열(삼덕,회계) 김상현(단국대,회계) 김정기(신정,회계) 안섭(화인,회계) 김태훈(조세연,회계) 임미영(안진,회계) 김동수(삼일,회계) 남혜정(동국대,회계) 강정구(동국대,회계) 조성연(한영,회계)	11명
소계	34명(단장·간사포함)	31명	28명	37명	130명

3. 외부기관에 위탁한 각종 연구용역 리스트

□ 연구용역 발주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발주과제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주기관	비고
08년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08.7.4~ 08.10.3	30	한국금융연구원	
08년	외환시장 발전방향	08.7.11~ 08.8.29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8년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실태 연구	08.7.22~ 08.12.21	40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8년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08.7.28~ 08.10.26	30	한국금융연구원	
08년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08.7.28~ 08.11.20	2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08년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08.8.1~ 08.12.24	40	법무법인(유) 태평양	
08년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08.8.6~ 08.11.04	46	(사)국제금융센터	
08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 효율화 방안	08.8.13~ 08.12.12	37	언스트앤영 어드바이저리(주)	
08년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	08.8.18~ 08.10.17	20	한국금융연구원	
08년	홈페이지 개편	08.10.31~ 08.12.20	30	(주)사이버이미지네이션	
08년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08.11.27~ 08.12.26	25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08년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전문가 의견조사	08.12.12~ 08.12.29	19	한국개발연구원	
09년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3.16~ 09.12.16	45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금융상품판매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09.4.13~ 09.8.14	30	자본시장연구원	

연도	발주과제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주기관	비고
09년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4.21~ 09.8.28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09년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5.13~ 09.11.30	30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9년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5.28~ 09.11.11	28.8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09.6.1~ 09.8.31	20.5	자본시장연구원	
09년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 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6.10~ 09.8.15	4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09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7.9~ 09.11.30	35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8.5~ 09.12.2	32	자본시장연구원	
09년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09.8.28~ 09.12.28	35	아주대 산학협력단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09.9.16~ 09.11.16	20	자본시장연구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09.9.18~ 09.12.17	20	보험연구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09.9.30~ 09.12.5	20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09.10.7~ 09.12.6	30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09.10.8~ 09.12.23	20	한국금융학회	
09년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09.10.15~ 09.12.17	4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9년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 및 정책적 과제	09.11.11~ 09.12.10	23	한국채권연구원	
10년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10.3.15~	30	서울대 산학협력단	
10년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10.3.26~	30	한국개발연구원	

연도	발주과제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주기관	비 고
10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10.4.9~	30	자본시장연구원	
10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10.4.13~	45.5	한국개발연구원	
10년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10.4.19~	40	한국개발연구원	
10년	우리나라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10.4.20~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 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10.5.1~	2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10.5.28~ 7.31	30	법무법인 율촌	
10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연구	10.6.9~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10.8.30~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금융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수급전망	10.9.1~	50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4. 장애인, 여성, 보훈대상자 고용 현황

☐ 장애인, 여성, 보훈자 고용현황

연도	총 현원*	여성 현황 (비율)	장애인 현황 (비율)	유공자 현황 (비율)
2010년 9월 현재	238명	43명 (18%)	6명 (2.5%)	4명 (1.7%)

* 경찰, 관세청, 국세청, 법무부 등 타기관으로부터 파견자 25명 제외

김 정 의 원

**1. 주택담보대출 비중과 연체율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어 금융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책자료**

□ 그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채무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
하는 한편,

*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및 저금리 전환대출 등 지원 등을 통해
저신용층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

*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의 성공적 정착 등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의 긴급 자금수요를 충족하고 고금리 부담을 완화

○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다양화, 장기고정금리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차주의 이자부담 변동위험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기고정금리 대출 및 잔액기준 COFIX 연동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별로
계획수립 지도 및 이행상황 점검 중

○ 아울러 경기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 등을 통해
투자 및 고용촉진 등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노
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중자금흐름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 금융위 직원 징계 현황

□ 금융위 직원 징계 현황

징계 현황		처분사유	처분일시
견책	서기관 1명	음주운전	'09.2.27
	행정사무관 1명	음주운전	'09.3.23
경고	행정주사 1명	품위유지의무 위반	'09.10.9
감봉2월	서기관 2명	청렴의무위반	'09.3.19
			'09.3.23

※ 처분당시 직급

3. 햇살론 관련

3-1. 햇살론 출시 이후 대출현황(인원, 금액, 등급별 대출금액, 보증재원 현황, 첫 이자 발생시기와 시작되었다면 연체율)

☐ 총 대출인원 및 대출금

- 7.26. 햇살론 대출개시 후 9.15.까지 총 89,890명에게 약 8,160억원이 대출

☐ 등급별 대출금액

(‘10.9.15. 기준 / 단위 : 억원)

등급	1	2	3	4	5	6	7	8	9	10
금액	43	112	186	535	1,354	2,488	2,339	889	177	40

☐ 보증재원현황

- 햇살론 보증재원 2조원으로 서민금융회사가 ‘10. 9.부터 6년간 1조원 출연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11년부터 5년간 1조원을 출연

☐ 첫 이자 발생시기 및 연체율

- 첫 이자는 대출 개시 1월 경과 시점인 ‘10. 8. 26. 발생하였으며, 연체율 관련 자료는 현재 취합 중임

3. 햇살론 관련

3-2. 햇살론 취급기관별 출시 이후 월별 대출현황

□ 취급기관별 월별 대출현황

('10. 9. 14. 기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건수	대출액	건수	대출액	건수	대출액	건수	대출액	건수	대출액	건수	대출액
7월	1,597	128	60	5	0	0	541	43	394	32	348	26
8월	23,962	2,061	945	83	147	11	10,937	1,001	19,443	1,804	3,289	260
9월	8,820	825	438	41	169	14	5,078	496	9,768	967	1,498	131

3. 햇살론 관련

3-3. 햇살론 출시 이후 현재까지 대출형태(사업운영, 창업, 생계) 월별 대출현황

□ 자금별 월별 대출현황

(‘10. 9. 14. 기준)

	생계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월	2,881	227	59	6	0	0
8월	41,058	2,704	17,641	1,695	24	3
9월	12,284	1,451	13,467	1,837	21	4

4. 개인워크아웃 관련 자료

- 4-1. 현재 개인워크아웃 제도 현황(개인회생, 파산 포함)(종류, 시행시기, 특성, 주관부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년도별 신청건수 및 인정건수 거부건수 등)
- 4-2. G20 주요국 개인파산, 개인회생 이용현황(최근년도기준)
- 4-3.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사한 개인회생 및 파산 광고 홍보물 현황
- 4-4. 개인파산자 증가로 인한 신용질서 혼란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 향후 대책

4-1-1.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파산 현황

구 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주관부서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2. 10.	2004. 9. 23.	1962. 1. 20.
대상채권	협약가입채권기관* 보유채권 *10. 8월현재 3,546개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신청채무 범위	5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 없음
채무조정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까지 감면 • 8년 이내 분할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 후 면책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법적효력	사적조정에 의해 변제완료 시 면책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은행연합회 '연체등'정보 해제여부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연체 등' 정보 해제	변제계획 인가 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금융지원 • 취업알선 • 신용관리교육 등의 사업을 함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제도는 2005. 3. 31 「개인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통합됨 • 제3편 : 파산절차, 제4편 : 개인회생절차 	

4-1-2.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파산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건)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7월 말	누 계
개 인 워 크 아 웃	신청	505	62,550	287,352	193,698	85,826	63,706	79,144	101,714	48,224	922,719
	확정	42	35,500	268,451	208,231	86,890	61,597	73,264	93,402	45,216	872,593
	반송	26	753	3,323	7,003	4,159	3,082	4,592	7,476	3,329	33,743
개 인 파 산	신청	2,336	3,856	12,317	38,773	123,691	154,039	118,643	110,915	52,609	617,179
	인가	-	-	-	-	66,971	118,184	133,995	100,851	45,005	-
	기각	-	-	-	-	54	1,424	4,846	3,512	2,370	-
개 인 회 생	신청	-	-	9,070	48,541	56,155	51,416	47,874	54,605	26,174	293,835
	인가	-	-	-	-	49,028	46,184	40,994	44,865	24,279	-
	기각	-	-	-	-	1,475	4,861	4,351	4,989	3,579	-

자료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 파산(2004년 이후) - 법원

4-2. G20 주요국 개인파산,개인회생 이용현황

- ☐ G20 주요국 개인파산,개인회생 이용현황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4-3.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사한 개인회생 및 파산 광고 홍보물 현황

- ☐ '10.6 개인회생 및 파산관련 광고실태조사 자료(붙임)

4-4. 개인파산자 증가로 인한 신용질서 혼란 가능성에 대한 향후 대책

- ☐ 채무자 본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적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원의 채무자 구제 제도 신청전 민간 조정기구의 사전 상담 또는 조정제도* 를 거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미국 : 파산 신청전 신용상담 의무, 프랑스 : 파산 신청시 과채무위원회 조정의무,
독일 : 파산 신청시 성실상환 노력 증명 의무

- ☐ 이와 관련,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 할 계획입니다.

<< 붙임 >>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광고실태 조사

2010. 6.

신용회복위원회

I. 조사 방법

1. 조사기간 및 지역

- ① 조사기간 : '10.2.1 ~ '10.2.22 (3주간)
- ② 조사지역 : 서울, 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

2. 조사대상 및 내용

- ① 조사대상
 - 시내버스(마을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 지하철 무가지, 무료생활정보지 등 서민이용 언론매체
 - 주요 도로, 등산로, 공공게시판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 인터넷 광고 등
- ② 조사내용
 - 광고매체별 홍보방법, 홍보물의 종류 및 내용
 - 노출빈도 및 적법성 여부 등

II. 광고 실태

1. 시내버스 광고

- 서울 및 광역시 운행 버스 904개 노선 중 562개를 조사
 - 562개 노선 중 38.3%인 215개 노선에서 홍보물이 발견됨
 - 서울지역의 경우, 조사를 실시한 150개 노선의 77.3%인 116개 노선에 홍보물이 설치
 - 인력부족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마을버스의 경우, 대다수에서 법적구제제도 홍보물이 부착
- ⇒ 차량내부 전면(운전기사 옆), 좌우측 면(하차문), 의자 뒷면 등에 접착식 코팅 포스터가 수개 씩 부착
- (예, '빛탕감! 전화주시면 바로 부채문제 해결해드립니다. 비용 분할납부 가능 등)

시내버스 광고현황

구 분	총 노선	조사노선	광고설치	설 치 위 치
서 울	382	150	116	버스내부 포스터 형태, 좌석뒷면 광고
부 산	155	155	49	
인 천	138	28	6	
대 구	139	139	35	좌석시트, 내부측면 법무사 : 김재완, 장길식, 배호광, 노상석
광 주	90	90	9	좌석시트
합 계	904	562	215	

2. 지하철 광고

□ 수도권 지하철 역사의 대부분에 기둥 및 액자 광고가 설치

- 액자 또는 원통형의 홍보물이 많으며, 부천역의 경우 승차장(플랫폼)에 대형 철재 구조물도 설치

□ 객차 내부에는 1량당 돌출형 액자(조명설치) 및 포스터가 2~3개씩 부착

- 객차 내 액자 및 벽면에는 상호 없이 전화번호와 '수임료 45만원, 분할상환가능' 등의 문구가 인쇄 되어 있는 불법 명함이 수십개 씩(수량파악 불가) 씩 부착

구 분	조사노선	광 고 현 황
서 울	1~7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7호선은 차량내 액자형 광고(허가 설치)가 대부분 ○ 2호선은 불법 전단지 및 명함이 대량 살포 ○ 특히, 법원 인근역(서초, 교대 등)에서는 직접적인 리플렛 배포도 발견
	8호선, 분당선	역사 내 기둥 광고, 창문 스티커 부착광고
인 천	1호선	역사 내 광고(부천역)
부 산	1~3호선	지하철 차량 내 광고 없음
대 구	1,2호선	지하철 차량 내 광고 없음
광 주	1호선	광고 없음
대 전	1호선	광고 없음

3. 지하철 무가지 및 생활정보지

- ☐ 지하철 무가지에 홍보문구 수개 씩 게재
 - 메트로, AM 7 등의 무가지에 홍보문구 다수 게재
- ☐ 주택밀집지역에 배포되는 생활정보지에 광고 다량 게재
 - 교차로, 가로수 등의 모든 지면에 광고 게재

4. 유동인구 밀집지역

- ☐ 구청의 공공게시판에 홍보용 포스터가 상당 수 부착
(예, '신용불량자는 냉큼 오시오! 면책 받아드리고 신용회복 시켜드립니다.' '휴일 출장상담', '빚청산', '부채증명서 무료발급 대행' 등)
- ☐ 전국 각지의 국도 및 지방도로에 개인회생·파산신청을 권유하는 홍보용 현수막이 산재함
 - 서울 및 근교의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관악산 등의 주요 등산로에서 현수막이 다수 발견
- ☐ 서민밀집 주거지역(주택가)에 전단지 및 명함이 다량 살포
-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주변에서, 위원회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명함 살포행위가 다수 발생

5. 인터넷 광고

- ☐ 변호사 및 법무사사무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
- ☐ 주로 법률사무소 직접 홍보, 카페, 블로그를 통해 광고
 - 줄광고, 스폰서링크, 파워링크, 비즈사이트 형태로 운영 (무방문, 저렴한 수임료(후불제, 분납가능) 높은 면책율 등으로 소개)
 - 카페를 통한 광고의 경우, 직접 또는 카페매니저가 관리
 - 블로그 광고는 직접 또는 배너광고 형태로 운영

6. 케이블 TV 광고

- ☐ 서울지역 등 일부 케이블 TV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막광고 실시중

5. 신용회복관련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주)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변제금 납입
현황(인원, 금액 등)
- 2006년 이후 24회 이상 성실납부자(년도별 인원 기관별)
- 2005-현재까지 변제금 납입 불이행으로 회복절차에서
탈락한 인원(년도별)
- 2005-현재까지 신용회복 신청 거부 인원 및 주요사례
(자격미달 등)

□ 년도별 채무조정자 수 및 변제금 납입액

(단위:명, 억원)

기관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말	계
신용회복위원회	인원	205,809	83,868	61,597	73,264	93,402	52,226	570,166
	납입액	10,604	11,224	11,487	11,212	10,712	7,669	62,908
한국신용평가	인원	56,463	47,253	28,198	19,080	16,017	13,591	180,602
	납입액	786	773	489	314	221	128	2,711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원	334,185	127,108	72,514	72,101	103,220	63,586	772,714
	납입액	3,571	3,716	3,086	2,928	3,199	2,236	18,736

□ 2006년 이후 24회 이상 성실납부자(년도별 인원 기관별)

(단위:명)

기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말
신용회복 위원회	74,221	250,735	341,755	383,541	407,587
한국신용평가	14,492	15,061	7,737	4,982	2,432
한국자산 관리공사	302	38,461	16,124	12,635	7,735

□ 2005-현재까지 변제금 납입 불이행으로 회복절차에서
탈락한 인원(년도별)

(단위: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말	계
신용회복 위원회	55,171	41,914	27,444	18,308	14,206	10,616	167,659
한국신용 평가	9,101	12,764	7,077	6,773	9,452	3,055	48,222
한국자산 관리공사	2,423	43,215	55,862	43,767	41,957	31,083	218,307

□ 2005-현재까지 신용회복 신청 거부 인원 및 주요사례

(단위: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말	계
본인취소 요청	2,388	1,614	1,843	3,161	4,703	2,800	16,509
금융회사 부동의	878	605	776	1,505	2,008	866	6,638
연락두절	838	389	236	327	279	130	2,199
협약외채무 20%초과	319	208	154	304	446	163	1,594
개인회생 신청	133	134	98	94	177	101	737
파산신청*	-	-	36	71	71	50	228
보유재산 경매중	116	53	53	67	54	18	361
소득부족	107	75	45	31	95	45	398
협약외채권자 가압류	42	19	19	21	26	16	143
기 타**	3,678	638	583	991	1,751	733	8,374
계	8,499	3,735	3,843	6,572	9,610	4,922	37,181

※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임(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신용평가(주)는 주요사례 없음)

* '06년이전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자 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미통보

** 기타 : 대부분이 신청거부사유 확인불가

6. 청년인턴십 채용현황

○ 기관 채용현황

구 분	채용인원	채용예산
2009	8명	22,000,000원
2010	5명	15,000,000원

○ 세부 개인별 현황

구분	성명	나이 (채용시)	채용기간 만료 후 진로현황
2009	구OO	27	대학원진학
	라OO	26	취업준비 중
	이OO	28	취업준비 중
	이OO	25	취업(SC제일은행)
	박OO	23	취업(키움증권)
	박OO	27	취업준비 중
	정OO	28	취업(엘지 이노텍)
	조OO	25	취업(현대 캐피탈)
2010	정OO	28	취업(미소금융중앙재단)
	전OO	29	취업(엘지 씨엔에스)
	이OO	27	취업준비 중
	강OO	30	진행 중
	임OO	24	진행 중

7.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 별도 첨부

<별첨>

7.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 2008년도 국외출장 현황

① 혁신행정과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	룩셈부르크,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김○○	혁신행정과	주무관	8.24~9.2	4,205
2	영국 ICMA Centre의 Investment Banking Program 참석	영국	김○○	혁신행정과	사무관	8.30~9.7	3,857
3	2008년도 일본 인사원 훈련 과정 참가	일본	최○○	혁신행정과	기록연구사	9.28~10.5	141
4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이집트, 그리스, 터키, 스페인	진○○	중공교 파견	국장	10.13~25	10,319

② 대변인실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북경 IR 참가	북경	유○○ 조○○ 이○○	대변인실 자본시장과	대변인 사무관 과장	10.21~22	3,703

③ 기획조정관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핀란드, 스웨덴	전○○	규제개혁 법무담당	사무관	8.25~9.1	3,059
2	OECD한국 경제검토회의 참석	파리	이○○	규제개혁 법무담당	과장	11.10~15	3,533

④ 금융정책국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제13차 한-캐나다 FTA 금융협상 참석	캐나다	이○○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3.25~29	2,682
2	제10차 한-인도 CEPA 협상 참석	인도 뉴델리	이○○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4.1~4.4	1,768
3	대통령 미국 순방 수행	뉴욕, 워싱턴	전○○ 김○○ 이○○ 오○○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국장 과장 사무관	4.15~4.21	16,874
4	WTO DDA 및 제7차 한-EU FTA 협상 참석	제네바, 브뤼셀	이○○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5.5~5.15	3,949
5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중국 금융당국과의 회담	베이징, 상하이	전○○ 유○○ 이○○ 고○○ 오○○ 김○○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대변인 과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6.12~13	8,293
6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	뉴욕	임○○		사무처장	6.17~6.22	2,447
7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투자설명회 참석	런던 프랑크푸르트	이○○		상임위원	6.18~6.22	1,988
8	한-EU FTA 서비스분과 회의 참석	홍콩	이○○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6.27~6.29	2,994
9	제11차 한-인도 CEPA 협상참여	뉴델리	오○○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7.29~7.31	1,768
10	주요국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산업 선진화 노력 현지조사	호주, 싱가포르, 홍콩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8.23~8.30	4,116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1	증권연수원의 GCMA 프로그램 해외연수 참가	홍콩	오○○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8.28~9.5	3,147
12	한국시장 IR 참석 및 CBRC 등 주요 당국자간 회담	중국 베이징	전○○ 이○○ 고○○ 신○○	글로벌금융과 위원장실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과장 사무관 사무관	10.22	6,293
13	한국 금융-경제 현황 설명회 참석	싱가폴	이○○ 이○○ 오○○	부위원장실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 사무관 사무관	10.23~25	7,549
14	한국 금융시장 및 경제현황 설명회 참석	뉴욕, 보스턴	이○○ 최○○ 오○○	금융시장분석과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 과장 사무관	11.2~6	13,668
15	제2차 한·중 경제통상협력 공동작업반 회의 참석	북경	김○○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11.10~13	1,581
16	한국시장 IR 참석 및 FRB NY 총재, FSA의장 등 주요 당국자간 회담	런던, 뉴욕	전○○ 이○○ 최○○ 이○○ 이○○ 오○○ 신○○	글로벌금융과 금융시장분석과 위원장실 자본시장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과장 과장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11.16~20	20,508
17	한국경제 IR 참석	런던	이○○ 이○○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과장	11.16~19	11,194
18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화를 위한 한중일 워크숍 참석	동경	김○○	금융정책국	국장	11.25~26	1,779
19	한국 금융시장 및 경제현황 설명회 참석	홍콩	이○○ 박○○ 오○○	금융정책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과장 서기관	12.1~3	7,021
20	제5차 금융안정화 포럼(FSF) 참석	홍콩	이○○	글로벌금융과	과장	12.14~16	1,506
21	한-EU FTA 확대수석대표 회담 참석	비엔나	김○○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12.15~19	2,994

⑤ 금융서비스국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제4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	노르웨이	김○○	공정시장과	주무관	4.7~13	3,126
2	제3차 아주지역보험감독자회의참석	싱가포르	윤○○	보험과	사무관	4.23~26	1,331
3	제33차 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APRC 의장 출마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전○○	금융서비스국	위원장	5.25~5.30	42,615
			홍○○	글로벌금융과	국장		
			이○○	글로벌금융과	과장		
			이○○	위원장실	서기관		
			이○○	자본시장과	사무관		
4	ADB 워크숍 참석	북경	빈○○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5.26~29	1,453
5	방중 정상회담 지원	베이징, 칭다오	장○○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6	한·영 미래포럼 참석	영국 런던	임○○	글로벌금융과	사무처장	5.27~30	1,457
7	Asian Banking and Finance Conference 참석	샌프란시스코	김○○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6.1~5	8,547
			손○○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8	OECD 보험 및 사적연금회의 참석	파리	박○○	은행과	사무관	6.17~22	3,268
9	IOSCO 전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참석	스페인	유○○	대변인	대변인	6.25~29	3,142
10	제5차 국제회계감독기구회의 참석	남아공	홍○○	금융서비스국	국장	9.15~19	9,495
11	CLSA 홍콩 Investors' forum에 참석	홍콩	최○○	금융서비스국	서기관	9.20~27	1,177
12	IAIS 제15차 연차총회 참석	형가리	김○○	공정시장과	사무관	9.24~26	935
13	한국경제설명을 위한 국외 출장	동경/홍콩	권○○	상임위원	상임위원	10.13~19	13,883
14	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회의 참석	발리	이○○	보험과	사무관	10.20~22	2,843
			주○○	은행과	사무관		
			박○○	은행과	사무관		
			전○○	위원장	위원장		
15	Golbal Asset Management Program 교육 참석	런던	홍○○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정책관	10.31~11.1	8,220
			최○○	보험과	서기관		
			고○○	위원장실	사무관		
15	Golbal Asset Management Program 교육 참석	런던	목○○	자산운용과	주무관	11.13~21	4,057

⑥ 금융정보분석원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2008 FATF 제19기 2차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프랑스	양○○ 마○○ 김○○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실장 사무관 사무관	08.2.24~08.3.2	14,288
2	2008년 상호평가훈련 워크숍 참석	싱가포르	기○○ 이○○ 마○○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08.3.16~08.3.22	7,629
3	강화된 AML제도 해외 사례조사	미국, 영국	이○○ 윤○○ 전○○ 김○○	제도운영과 심사분석실 제도운영과 기획행정실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08.6.10~08.6.18	10,549
4	제19기 제3차 FATF 총회 참석	프랑스	양○○ 이○○ 이○○ 이○○ 장○○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기획행정실	실장 검사 사무관 사무관 에디터	08.6.15~ 08.6.22	23,489
5	World Bank 주관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참석	태국	안○○ 강○○ 김○○ 위○○ 안○○ 임○○ 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실	팀장 사무관 원장 검사 팀장 사무관 주무관	08.6.23~08.6.27	3,015
6	제11차 AFG연차 총회 참석	인도	안○○ 이○○ 강○○ 이○○ 박○○ 김○○ 김○○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2과	팀장 사무관 원장 검사 팀장 사무관 주무관	08.7.7~08.7.12	13,573
7	싱가폴 상호평가자 교육	싱가포르	안○○ 이○○ 강○○ 이○○ 박○○ 김○○ 김○○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심사분석2과	팀장 검사 검사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08.8.10~08.8.16	5,369
8	FATF 실무그룹회의 참석	캐나다	안○○ 이○○ 강○○ 이○○ 박○○ 김○○ 김○○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심사분석2과	팀장 검사 검사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08.9.12~08.9.20	24,078
9	FATF 총회 및 실무회의 참석	브라질	양○○	기획행정실	실장	08.10.10~08.10.20	42,470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이○○	심사분석실	검사		
			윤○○	심사분석실	사무관		
			마○○	기획행정실	사무관		
			장○○	기획행정실	에디터		
			류○○	기획행정실	주무관		
			윤○○	심사분석3과	경감		
10	에그몽 실무회의 참석	캐나다				08.10.19~08.10.25	6,728
11	감독,검사업무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미국	김○○	제도운영과	사무관	08.11.08~08.11.15	4,182
12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연구용역	미국	이○○	심사분석실	검사	08.11.29~08.12.07	8,978

○ 2009년도 국외출장 현황

① 본부(행정인사과, 기제단)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1. 해운시장동향 파악 및 선박가치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 2. 선박매입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은행상대 홍보 및 아시아시장의 현지반응 조사	싱가포르	송○○	기업재무개선 지원단	사무관	7.6 ~ 7.9	1,327
2	국가정보원 주관 중앙행정기관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자의 국외정책연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행정인사과	주무관	11.29 ~ 12.12	5,036

② 대변인실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홍콩 비즈니스 포럼 참석 및 해외IR	홍콩	유○○ 이○○	대변인실	대변인 사무관	6.24 ~ 6.25	3,162
2	프랑스 현지언론 인터뷰 등 홍보지원	프랑스 파리	이○○	대변인실	전문 계약직	9.13 ~ 9.16	2,605

③ 공자위

- 해당사항 없음

④ 기획조정관실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제4차 고위공무원 정책과정	일본	조○○	기획조정관	국장	1.15~17	143
2	영국대사관 주관 런던집합연수	런던	이○○	기획재정 담당관실	사무관	4.27~5.1	4,054
3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스페인, 이탈리아	조○○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사무관	8.26~9.2	3,246

⑤ 금융정책국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한국경제 바로알리기 IR 개최	일본(동경), 싱가폴	이○○ 신○○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1.21~23	10,847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2	세계 경제포럼(Davos) 참석	스위스(다보스)	이○○		부위원장	1.28~2.1	6,692
3	G-20 WG1 및 한국금융바로알리기	영국, 스위스	이○○ 이○○ 신○○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서기관 사무관	1.31~2.6	13,733
4	제10차 동경라운드 테이블 참석	동경	박○○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3.1~4	2,073
5	한-GCC FTA 협상 참석	사우디 (리야드)	오○○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3.7~11	3,497
6	한국경제바로알리기 미국 IR 개최	미국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이○○ 신○○	상임위원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3.11~21	14,547
7	영국 4대 언론 IR 개최	영국(런던)	이○○ 신○○ 오○○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 과장 사무관	3.11~15	10,739
8	홍콩 아시아 투자컨퍼런스 참석	홍콩	이○○ 신○○ 고○○ 류○○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 과장 사무관 사무관	3.24~27	5,673
9	IFSB 연례회의 참석	싱가폴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5.6~8	1,769
10	한-페루 FTA 협상 참석	페루(리마)	김○○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5.10~16	3,259
11	글로벌 금융위기 세미나 참석	파리	진○○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5.17~23	3,467
12	한-호주 FTA 협상 참석	호주(캔버라)	신○○	글로벌금융과	과장	5.17~21	2,303
13	FSB 오리엔테이션 참석	스위스(바젤), 프랑스(파리), 홍콩	이○○ 신○○ 김○○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과장 사무관	5.25~28	16,598
14	홍콩비즈니스 강연 및 FSB 총회 참석	스위스(바젤), 홍콩	진○○ 이○○ 김○○ 신○○ 오○○ 김○○	위원장실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상임위원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6.24~27	30,746
15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현황 파악	독일(프랑크푸르트)	추○○	금융정책국	국장	6.29~7.4	10,979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프랑스(파리)	김○○	산업금융과	사무관		
16	한중일 거시경제 워크숍 참석	중국 (상하이)	이○○ 류○○ 신○○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자문관 사무관 사무관	6.30~7.2	1,334
17	제12차 APC연차총회 참석	호주(브리즈번)	이○○	금융정책과	사무관	7.7~12	2,436
18	FSB 운영위 참석	영국(런던)	이○○		상임위원	8.26~29	7,213
19	FSB 상임위 참석	영국(런던)	이○○		국제협력관	9.7~9	3,361
20	FSB 총회 참석	프랑스(파리)	진○○ 신○○ 김○○ 박○○ 김○○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과장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9.13~15	21,095
21	중국 금융정책 및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 파악	상하이	이○○	국제협력팀	사무관	9.20~23	2,072
22	한-페루 FTA 협상 참석	페루(리마)	신○○ 박○○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과장 주무관	10.19~24	8,053
23	FSB 운영위 참석	이탈리아(로마)	이○○ 류○○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10.24~28	10,307
24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	영국(세인트앤드류)	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11.4~9	3,871
25	한-GCC FTA 회기간 협상 참석	두바이	박○○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11.15~19	2,503
26	한-호주 FTA 협상 참석	호주(캔버라)	신○○ 박○○ 박○○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과장 법률자문관 주무관	12.1~6	9,264
27	한일 고위급 정례회담 참석	일본(동경)	이○○ 김○○ 진○○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서기관 사무관	12.17~18	4,597
28	제7회 동아시아권퍼런스 참석 및 주요 아시아금융당국 면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이○○ 류○○		상임위원 사무관	12.3~12	8,885

⑥ 금융서비스국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세계저축은행협회 회의참석	칠레 산타아고	임○○ 서○○	중소과	상임위원 사무관	4.27~5.4	16,282
2	영국재무성 및 FSA 관계자 면담출장	영국 런던	김○○ 유○○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국장 서기관	5.17~5.21	4,459
3	제2차 한중일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워크숍 참석	중국 상해	신○○	은행과	사무관	7.1~7.3	1,060
4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회의 참석	프랑스 파리	권○○	보험과	사무관	7.7~7.10	3,700
5	AGP 유형론 워크숍 참석	캄보디아	신○○	은행과	사무관	10.24~10.30	1,638
6	태평양 보험회의 회의참석	태국, 베트남	성○○ 제○○	보험과 보험과	과장 사무관	11.01~11.8	4,075
7	태국, 싱가포르, 홍콩 투자자 사전 설명회	태국, 싱가포르, 홍콩	조○○	은행과	사무관	11.16~11.22	2,400
8	OECD 보험 및 사적연금 회의 참석	프랑스 파리	김○○ 김○	보험과 보험과	사무관 주무관	11.29~12.6	7,963
9	IMF 법무부서 세미나 참석	미국 워싱턴D.C.	신○○	은행과	사무관	11.29~12.5	3,722
10	OECD 무역위원회 회의참석	프랑스 파리	마○○ 정○○	은행과 은행과	사무관 주무관	12.14~12.19	6,189

⑦ 자본시장국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FTSE 선진지수 편입관련 Roundtable 참석	일본 동경	전○○	자본과	사무관	3.10~11	1,226
2	국제회계감독기구(IEAR) 회의참석	스위스 바젤	김○○	공정과	사무관	4.25~5.1	3,503
3	영국대사관 주관 런던 집합연수	영국 런던	김○○	자산과	사무관	4.26~5.3	4,048
4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	이스라엘 텔아비브	김○○ 변○○	자본과	증선위원 사무관	6.6~6.12	8,456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참석						
5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및 일본 금융청 방문	일본 동경	이○○ 이○○	자본과 증권위원회	부위원장 사무관	9.7~9.8	2,898
6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 및 상해금융감독당국 라운드테이블 참석	중국 상해	김○○ 전○○	증권위원회 자본과	증권위원회 서기관	9.7~9.10	3,147
7	국제회계감독기구(IFAR) 회의참석	싱가포르	윤○○	공정과	주무관	9.13~9.16	1,523
8	사범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 회의 참석	스위스 제네바	전○○	자본과	사무관	10.4~10.8	3,754
9	국제연금감독기구(IOPS) 연차총회 참석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정○○	자산과	과장	10.13~10.19	3,775
10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참석	호주 멜버른	김○○	자산과	사무관	10.21~10.24	1,958
11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중국 국영 자산관리공사주관 킴페런스 참석	중국 베이징	이○○ 김○○	공정과 자산과	과장 주무관	11.17~11.20	-
12	아시아지역 펀드교류 협력방안 논의	홍콩, 베트남	김○○ 김○○	자산과 자산과	사무관 사무관	12.17~12.22	2,710

⑧ 금융정보분석원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FATF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프랑스	김○○ 박○○ 이○○ 이○○ 박○○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원장 실장 서기관 사무관 에디터	2.22~3.1	27,634
2	에그몽 그룹 실무그룹회의 참석	파테말라	이○○ 전○○ 박○○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점사 주무관 경정	3.1~3.8	12,976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3	카지노 AML/CFT 검사체계 수립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마카오, 뉴질랜드, 호주	이○○ 이○○	제도운영과 제도운영과	과장 사무관	4.26~5.7	12,158
4	FATF 상호평가자 회의	호주	김○○ 강○○ 이○○ 이○○ 이○○ 김○○ 박○○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실장 검사 검사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에디터	5.3~5.8	20,059
5	제17차 에그몽 그룹 총회 참석	카타르	김○○ 이○○ 김○○ 박○○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1과	원장 서기관 사무관 경정	5.24~5.29	13,146
6	상호평가보고서 및 정회원 가입 논의를 위한 FATF 총회 참가	프랑스	김○○ 이○○ 강○○ 이○○ 전○○ 김○○ 김○○ 박○○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제도운영과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원장 서기관 검사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에디터	6.20~6.28	38,779
7	APG 연차총회 참석	호주	정○○ 손○○ 김○○ 김○○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실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7.5~7.12	12,656
8	APG 주관 상호평가자 교육 참가	호주	이○○ 김○○ 유○○ 강○○ 이○○ 김○○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사무관 사무관 원장 실장 검사 사무관 사무관	8.15~8.23	2,741
9	FATF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프랑스	김○○ 박○○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실장 실장	10.11~10.17	18,633
10	APG 유형론 워크숍 참석	캄보디아	박○○	심사분석실	실장	10.24~10.30	10,010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이○○	심사분석실	사무관		
			최○○	심사분석실	주무관		
11	FATF 상호평가자 교육 워크샵 참여	캐나다	유○○	기획행정실	실장	11.1~11.9	5,513

○ 2010년도 국외출장 현황

① 본부(행정인사과, 기재단)

- 해당사항 없음

② 대변인실

- 해당사항 없음

③ 공자위

연번	출 장 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몽골 금융감독기구 및 부실채권정리기구 업무 협의	몽골, 울란바토르	김○○	운영기획팀	사무관	7.18~7.21	1,789

④ 기획조정관실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해외 연수	헝가리, 슬로바키아	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주무관	6.22~6.29	3,320
2	제3차 국장급 공무원 싱가포르 방문 프로그램(외교부 주관)	싱가포르	정○○	기획조정관실	국장	8.23~8.27	378

⑤ 금융정책국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FSB 총회 참석	스위스(바젤)	진○○ 신○○ 박○○ 서○○ 김○○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과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1.8~11	22,757
2	국제적 정부주도 금융구제 현황 등 논의	스위스, 룩셈부르크	우○○	산업금융과	과장	1.10~14	3,530
3	FSB 상임위 참석	영국(런던)	이○○		국제협력관	1.16~19	6,527
4	아시아 금융권퍼런스 참석	홍콩, 일본(동경)	이○○ 김○○		상임위원 사무관	1.19~22	4,851
5	위기 이후 주요 금융중심지 현황조사 및 정책 벤치마킹	더블린, 아테네	정○○	국제협력팀	사무관	2.7~13	4,576
6	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참석	싱가포르	이○○ 황○○		국제협력관 사무관	3.3~5	4,462
7	FSB 운영위원회 및 한-영 경제협의회 참석	스위스, 영국	이○○ 서○○ 고○○		상임위원 사무관 사무관	3.7~11	14,947
8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 회의 및 세미나 참석	일본(동경)	이○○ 최○○		상임위원 과장	3.16~17	2,596
9	미국 금리체계·제도 운용현황 조사	시애틀,	박○○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4.11~18	6,114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0	CICI(국제지배구조혁신센터) 컨퍼런스 참석	캐나다(워털루)	이○○ 류○○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5.1~7	4,144
11	한국금융 IR	싱가포르, 호주	권○○		부위원장	5.10~12	15,090
			최○○		상임위원	5.12~15	
			윤○○	국제협력팀	팀장	5.10~15	
			이○○	대변인실	외신대변인	5.10~15	
			손○○	금융정책과	서기관	5.10~12	
			정○○	국제협력팀	사무관	5.10~15	
			황○○	국제협력팀	사무관	5.10~15	
12	한-뉴질랜드 FTA 협상 참석	뉴질랜드(웰링턴)	박○○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5.10~16	3,163
13	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 참석	스위스(바젤)	이○○ 김○○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5.11~15	11,662
14	FSB 운영위 참석 및 OECD 한국경제검토회의 참석	이탈리아(로마), 프랑스(파리)	이○○ 서○○ 오○○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사무관	5.15~22	14,407
15	독일재무부 주관 국제컨퍼런스 참석	독일(베를린)	전○○ 최○○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과장	5.19~21	13,886
16	한-호주 FTA 협상 참석	호주(캔버라)	박○○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5.23~27	2,318
17	아시아 신흥국 은행규제 및 금융안정 컨퍼런스 참석	중국(베이징)	이○○ 김○○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5.25~27	1,582
18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주관 아시아 컨퍼런스 및 은행감독자 회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김○○ 신○○	본부	사무처장 사무관	6.6~10	8,998
19	FSB 감독강화 워크숍 참석	캐나다(오타와)	이○○	글로벌금융과	과장	6.8~13	7,800
20	IIIF(국제금융연합회) 춘계총회 참석	오스트리아(비엔나)	이○○ 류○○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6.8~12	10,689
21	FSB 총회 참석 및 미국금융당국 방문	캐나다(토론토), 미국(워싱턴)	전○○ 최○○ 서○○ 정○○ 고○○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과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6.13~17	34,320
22	WTO DDA 서비스 협상 참석	스위스(제네바)	류○○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6.27~7.1	3,486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23	독일경제개발협력부 주최 국제회의 참석	독일(베를린)	이○○ 이○○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7.4~8	3,240
24	몽골 금융감독기구 및 부실채권정리기구 업무협의	몽골	이○○	금융정책과	서기관	7.18~21	1,789
25	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 및 워크숍 참석	독일(프랑크푸르트) , 영국(런던)	이○○ 서○○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8.29~9.2	10,839
26	FSB 외장 및 주요회원국과 G20 서울정상회의의 금융규제개혁 분야 의견 조율 및 업무 협의	독일(프랑크푸르트) , 프랑스(파리), 이탈리아(로마)	이○○ 최○○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과장	8.29~9.2	13,998
27	G20 서울정상회의 및 FSB 금융규제개혁분야 주요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 및 업무 협의	일본(동경)	진○○ 이○○ 이○○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관	9.8	6,501
28	동경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 참석	일본(동경)	이○○ 권○○	자본시장과	사무관 부위원장	9.6~9.7	1,064
29	중국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 참석 및 중국 금융당국 정책협의	중국(심천 북경)	정○○ 이○○ 제○○	자본시장과 외신팀 보험과	과장 외신대변인 사무관	9.8~9.11	7,536
30	2010 FSS Korean Finance Job Fair 참석	미국(뉴욕)	김○○	국제협력팀	주무관	9.10~9.14	3,060
31	FSB 운영위원회 참석	스위스(바젤)	이○○ 이○○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9.12~9.15	10,980

⑥ 금융서비스국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국제보험학회(IIS) 총회참석	스페인 마드리드	성○○	보험과	과장	6.5~6.11	3,958

⑦ 자본시장국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장외파생상품 감독자포럼 참석	미국 뉴욕	이○○ 진○○	자본과 자본과	과장 사무관	1.14~1.17	5,932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참석	영국 런던	김○○	공정과	사무관	1.16~1.21	3,424
3	국제회계감독기구(IFIA) 워크숍 참석	프랑스 파리	구○○	공정과	사무관	2.8~2.13	4,153
4	국제회계감독기구(IFIA) 제7차 정기회의 참석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이○○ 윤○○	공정과 공정과	과장 주무관	3.20~3.25	4,909
5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연차총회 참석 및 미국 투자은행(IB) 기관 방문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뉴욕	최○○ 이○○	자본과	상임위원 사무관	6.6~6.13	14,067
6	시장감시교육프로그램 참가	요르단 암만	이○○	공정과	사무관	6.14~6.18	3,066
7	산동기업 한국상장 설명회 참석	중국 제남, 북경	송○○	자본과	서기관	6.30~7.2	1,029
8	장외파생상품 국제컨퍼런스 참석	프랑스 파리	정○○	자본과	과장	7.7~7.9	2,656
9	국제회계기준(IFRS) 컨퍼런스 참석	일본 동경	최○○	공정과	과장	7.28~7.29	1,208

⑧ 금융정보분석원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1	중앙기 정보화계획 수립관련 호주 FIU 방문	호주	이○○ 김○○ 최○○	심사분석실 기획행정실	팀장 사무관 원장	1.19~2.22	7,165
2	FATF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APG 공동의장 면담	UAE, 싱가포르	최○○ 이○○ 김○○	심사분석2과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	과장 사무관 사무관	2.14~2.20	16,439
3	몽골 고위급 협의 방문	몽골	최○○ 이○○	기획행정실	원장 사무관	2.28~3.3	4,204
4	에그몽 그룹 실무그룹회의 참석	모리셔스	김○○ 강○○	기획행정실 심사분석실	사무관 팀장	2.28~3.6	4,059
5	OECD 재정위원회 8차연차 소그룹회의 참석	프랑스	손○○	심사분석실	사무관	3.9~3.14	13,564

연번	출장명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자	소속	직위 (직급)	출장기간	집행액 (천원)
6	심사분석 업무 개선을 위한 일본 FIU 방문	일본	진○○	심사분석실	주무관		
7	심사분석 업무 개선을 위한 일본 FIU 방문	일본	박○○	심사분석실	실장	5.23~5.26	3,459
7	카지노·금융회사 AML/CFT 검사체계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관방문	미국	김○○	심사분석실	주무관		
8	우리나라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 등을 위한 FATF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가	미국	송○○	제도운영과	과장	5.23~5.31	12,347
8	우리나라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 등을 위한 FATF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가	미국	이○○	제도운영과	사무관		
9	에그몽 그룹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네덜란드	이○○	기획행정실	실장	6.19~6.26	13,926
9	에그몽 그룹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네덜란드	김○○	기획행정실	사무관		
9	에그몽 그룹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네덜란드	김○○	심사분석2과	사무관		
9	에그몽 그룹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네덜란드	최○○	원장	원장	6.26~7.4	26,381
9	에그몽 그룹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네덜란드	이○○	기획행정실	서기관		
9	에그몽 그룹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네덜란드	임○○	기획행정실	사무관		
9	에그몽 그룹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네덜란드	윤○○	심사분석실	검사역		
10	APG 연차 총회 참석	싱가포르	최○○	원장	원장	7.11~7.17	8,570
10	APG 연차 총회 참석	싱가포르	임○○	기획행정실	사무관		
11	APG/IMF 상호평가자 교육 워크숍 참석	싱가포르	이○○	심사분석1과	사무관	8.22~8.27	2,306
11	APG/IMF 상호평가자 교육 워크숍 참석	싱가포르	차정현	기획행정실	사무관		

8. 관사(숙사), 콘도, 골프회원권 등 보유 및 임차 현황, 차량구매 및 임차현황(최근 3년간)

☐ 관사(숙사), 콘도, 골프회원권 등 보유 및 임차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차량구매 및 임차현황(최근 3년간)

차량종류	임차 시기	비고
에쿠스 35허 XXXX	08.3	임차
체어맨 56허 XXXX	08.4	"
그랜저 26허 XXXX	08.3	"
SM5 35허 XXXX	08.3	"
SM5 35허 XXXX	08.3	"
카니발 72허 XXXX	08.8	"
아반떼 50허 XXXX	09.6	"
모닝 35허 XXXX	08.12	"
총 계	8대	최근3년간 임차차량 총계

9. 선택적 복지비용 예산 및 개인별 지급액(2008~현재, 2010년은 배정액) 및 직원 1인당 연간 선택적 복리제도상 지급금액, 단체상해질병보험 계약회사 및 계약금액, 전체 대상직원 중 단체상해질병 보험 가입제외자

□ 금융위원회 선택적 복지포인트 집행 기준

○ 산정기준 : 최저 300포인트~최대 1,000포인트

공통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직원 : 300P (일률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근속당 10P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P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 100P 부모/첫째자녀 : 1인당 50P 둘째자녀 : 100P 셋째자녀 : 150P (최고 400P배정)

* 1포인트 = 1,000원

* 근속포인트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7(정근수당) 준용

* 가족포인트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0(가족수당) 준용

* 기준일 : 포인트 배정은 2010. 1. 1일 기준으로 확정

(연도중 복지점수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음)

☐ 금융위원회 복리후생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2008년도	126,041	87,155
2009년도	126,626	115,482
2010년도	218,900	107,916

☐ 단체상해질병보험 계약회사 및 계약금액

○ 메리츠 화재 보험, 23백만원(소속기관 포함)

☐ 전체 대상직원 중 단체상해질병 보험 가입제외자 : 해당 없음

10.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10-1. 자문형 랩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투자일임은 1:1계약이란 특성으로 인해 분산투자 규제 등 운용상 자율성은 큰 반면, 투자자 보호제도는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

○ 즉 수수료의 과다 책정, 투자자에 대한 운용정보의 불충분한 제공 등 투자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 1:1계약으로서 투자자에 맞는 운용되어야 함에도 마치 펀드와 같이 집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이에 정부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집합운용의 문제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우선 ①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②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내용을 확대하여 투자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였음

*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경우 매매회전율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발생(美國-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음)

- 또한 투자자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극적 요건을 강화하고, 일임재산운용에 투자자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음

- 투자자의 투자일임정보가 대외적으로 유출되어 증권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정보의 사내공유를 제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 세부내용은 별첨

- 정부는 향후에도 투자일임제도가 새로운 투자대안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증권시장의 안정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6조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한다.

1. 5,000억 원 미만 :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2. 5,000억 원 이상 : 3개월간, 6개월간,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⑨ 투자일임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일임 또는 신탁관련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를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0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투자자 재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특정 투자종목과 비중을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등 사실상 투자자 재산의 운용에 준하는 투자자문을 받는 행위

제4-6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특정 투자종목과 비중을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등 사실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준하는 투자자문을 받는 행위

제4-73조제1호 중 “계약의”를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항”을 “사항 및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

회) 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7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5.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지 않는 행위. 이 경우 투자자의 유형분류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이 최종확인하여야 한다.

6. 제4-73조제2호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7.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8. 성과보수를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10.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 투자권유·투자광고시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특정 투자종목과 비중을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등 사실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준하는 투자자문을 받는 행위
13. 투자일임재산을 채권 등 만기일이 존재하는 투자대상에 운용하면서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4-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8조의2 (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① 제4-73조제2호에 따라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대면·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78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4.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5.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6.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7.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8. 매매회전률
9.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제4-93조제11호 중 “월 1회 이상”을 “매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운용내역”을 “운용내역(신탁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은 제4-78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19호부터 제2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신탁재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특정 투자종목과 비중을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등 사실상 신탁재산의 운용에 준하는 투자자문을 받는 행위
20. 신탁재산을 채권 등 만기일이 존재하는 투자대상에 운용하면서 수시입출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1.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22.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23. 투자권유·투자광고시 특정 신탁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24. 성과보수를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이 경우 투자자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이 최종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제3-66조제8항은 6월 경과 후 시행한다.

② 제4-77조제4호 및 제5호, 제4-93조제21호 및 제27호는 1년 경과 후 시행한다.

③ 제4-77조제13호와 제4-93조제20호는 6월 경과 후 시행한다.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①영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		
	항을 말한다.	-----		
1.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	1. -----		
	토의견(월별 업무보고서의 경우	-----		
	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		
				다만,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
				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감
				독원장이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
				고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시
				에만 제출한다.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만	
			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	
			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운용하	
			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에 따	

<신 설>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1. ~ 14.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한다.

1. 5,000억 원 미만 :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2. 5,000억 원 이상 : 3개월간, 6
개월간,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⑨ 투자일임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일임 또는 신탁관련 통계조
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를 금융
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출하여야 한다.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

15. 투자자 재산을 운용할 목적
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특
정투자종목과 비중을 주기적
으로 제공받는 등 사실상 투
자자 재산의 운용에 준하는
투자자문을 받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1. ~ 4. (생략)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영 제98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1. ~ 4. (현행과 같음)

5.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특정투자종목과 비중을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등 사실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준하는 투자자문을 받는 행위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1. -----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2. 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3. ~ 6. (생략)

<신 설>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3. (생략)

<신 설>

2. -----

-----사항 및 투자
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
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

3. ~ 6. (현행과 같음)

7.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
지) -----

1. ~ 3. (현행과 같음)

4.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

<신 설>

<신 설>

<신 설>

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5.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
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
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
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
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
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
지 않는 행위. 이 경우 투자
자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이 최종확인하여야
한다.

6. 제4-73조제2호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
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
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
는 행위

7.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
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
관리계좌(이하 “맞춤식 자산관
리계좌(Wrap Account)”라 한
다)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

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
하는 행위

8. 성과보수를 기준지표(제
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
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
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
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
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
게 상담하는 행위

10.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
일임재산간 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 투자권유·투자광고시 특
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목
적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특정투자종목과 비중을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등 사실상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준하는 투자자문을 받는 행위

13. 투자일임재산을 채권 등 만기일이 존재하는 투자대상
에 운용하면서 수시입출방식
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
는 행위

제4-78조의2 (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①제4-73조제2호에 따라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②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대면·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78조(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 사항 등) ① 영 제10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10. (생략)

제4-78조(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 사항 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4.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 제한사항

5.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6.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7.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8. 매매회전률

9.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② (현행과 같음)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1. ~ 10. (현행과 같음)

11.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하여 월1회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정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 1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1. -----
-----매분기별
1회이상-----운용내역
(신탁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은 제4-78조를 준용한다)을

12. ~ 18. (현행과 같음)

19. 신탁재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특정 투자종목과 비중을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등 사실상 신탁재산의 운용에 준하는 투자자문을 받는 행위

20. 신탁재산을 채권 등 만기일이 존재하는 투자대상에 운용하면서 수시입출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1.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22.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

<신 설>

<신 설>

<신 설>

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
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
위

23. 투자권유·투자광고시 특
정 신탁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
을 제시하는 행위

24. 성과보수를 기준지표(제
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
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
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5.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투
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
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
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
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
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이 경우 투자자의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이 최종확인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0. 9.16(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책 임 자	신현준 과장 (2156-9890)	담 당 자	김종훈 사무관 (2156-9893)
배 포 일	2010. 9. 15(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 (2156-9544) 총 9 매

제 목 :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

1. 투자일임업 개요

□ (意義) 투자일임업은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재산의 운용권한을 투자일임업자가 위임받아 운용하는 영업을 의미

-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6⑦)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전화주문, HTS 등의 방식으로 위탁운용

- * 일부 전업 투자일임사의 경우 투자자가 은행에 개설한 특정금전신탁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투자일임과 펀드의 주요 차이점 비교>

구 분	투자일임(자문형 랩)	주식형 펀드
동일종목 투자한도	없음	펀드재산의 10% 이내
주식 최저편입제한	없음	펀드재산의 50% 이상
성과보수	제한없음	엄격히 제한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조회	수시조회 가능	운용보고서(매 3개월)로 조회
고객의 운용지시	가 능	불가능
편입종목수	약 8~15종목	약 40~60종목
환매(계약해지)수수료	대부분 없음	대부분 징구

※ 투자일임업은 펀드에 비해 투자자유성은 높은 반면, 투자자 보호규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참고>

투자일임과 랩 어카운트의 구분

(1)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의 개념

□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중개와 투자일임의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권계좌를 지칭하는 실무*상 개념

* 법령에는 랩 어카운트의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 랩 어카운트는 투자일임업무를 포함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 투자일임과 랩 어카운트가 혼동되는 경향이 있으나 개념상 구분할 필요

(2) 투자일임과 랩 어카운트의 규제상 구분필요성

□ 랩 어카운트와 같이 투자중개와 투자일임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매매회전률을 높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

* 미국은 Wrap Fee Program의 정의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

<증권사 랩 어카운트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09.3	'10.3	'10.6(A)	'10.7(B)	증감(B-A)	
일 임 형 랩	주식형 랩	16,732	26,146	24,008	26,696	2,688	(11.2)
	맞춤형 랩	6,610	23,822	32,385	32,338	△47	(△0.1)
	채권혼합형 랩	1,467	3,130	4,896	7,859	2,963	(60.5)
	채권형 MMW	68,159	96,825	127,023	120,287	△6,736	(△5.3)
	CMA형 MMW	28,271	42,941	52,583	57,366	4,783	(9.1)
	펀드 랩	8,674	17,607	19,990	24,895	4,905	(24.5)
	기타 랩	2,607	3,192	1,319	3,262	1,943	(147.3)
자문형 랩		284	6,519	22,922	24,289	1,367	(6.0)
합 계		132,804	220,182	285,159	296,990	11,831	(4.1)

* 채권형 MMW는 일부가 증권금융 예금으로 운용되며, 기간물 채권 등에 운용할 경우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 문제의 검토가 필요

** CMA형 MMW는 증권금융 등의 예금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손실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음

2. 투자일임 제도개선 필요성

- ◇ 투자자가 높은 일임수수료를 대가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에 걸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나,
 - 현행 투자일임계약은 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펀드와 같이 집합운용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

① 투자자 보호의 문제

- 투자일임이 분산투자 등 운용규제를 받지 않아 고수익을 추구하는 이면에는 특정종목 집중투자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존재
 -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자일임 보고서 정보내용도 충분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측면
- 랩 어카운트는 위탁매매수수료 수입제고를 위해 과당매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
 - 성과보수의 경우 호황장세 등으로 일임업자의 운용능력에 기초하지 않은 성과가 난 경우에도 수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

② 집합운용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

- 최근 투자일임업계의 집합운용 논란은 주문의 효율성을 위해 허용('07년)한 집합주문과의 개념혼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집합운용과 집합주문의 명시적인 구분기준을 마련할 필요
 - * 집합주문은 개별계좌의 운용을 위한 주문을 단순 취합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07년 처음 도입된 제도임

③ 자문형 랩의 법률상 쟁점

- 증권사가 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계좌를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 만일 투자자문사의 자문내용과 동일하게 계좌의 자산구성을 하는 방식이라면 투자일임업자의 의무위반에 해당함

3. 투자일임 제도개선 기본방향

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투자일임 제도개선을 통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체계를 구축
 - 투자일임사 상호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투자자의 알권리 보장도 추진
- 투자일임 보수체계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투자자 이익보호

② 맞춤형 서비스의 발전기반 구축

- 투자일임계약 등 1:1계약의 맞춤형성을 강화하여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하고 새로운 투자방식으로서의 정착을 유도
- 이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도입하는 등 투자일임업 발전기반의 구축이 필수

③ 펀드와의 구분기준 마련

-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집합투자업의 구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 이는 중·장기적으로 각 업역이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성화됨으로써 경쟁적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정책은 각 업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진입장벽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펀드운용 등을 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원칙에 위배

4.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동 제도개선방안은 금감원, 자본시장연구원, 협회, 전업투자일임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의 전문가·실무자로 구성된 제도개선 T/F에서 해외사례 등에 대한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마련됨

1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 (적극적 요건)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

*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금융자산(투자일임)의 비중 등

※ 적극적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전산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1년간 시행을 유예

- (소극적 요건)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또한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 (最少加入金額) 당초 최소가입금액 제한은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 법규에서 이를 정하기 보다는 업체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방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 다만 향후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소가입금액의 도입여부를 재검토할 방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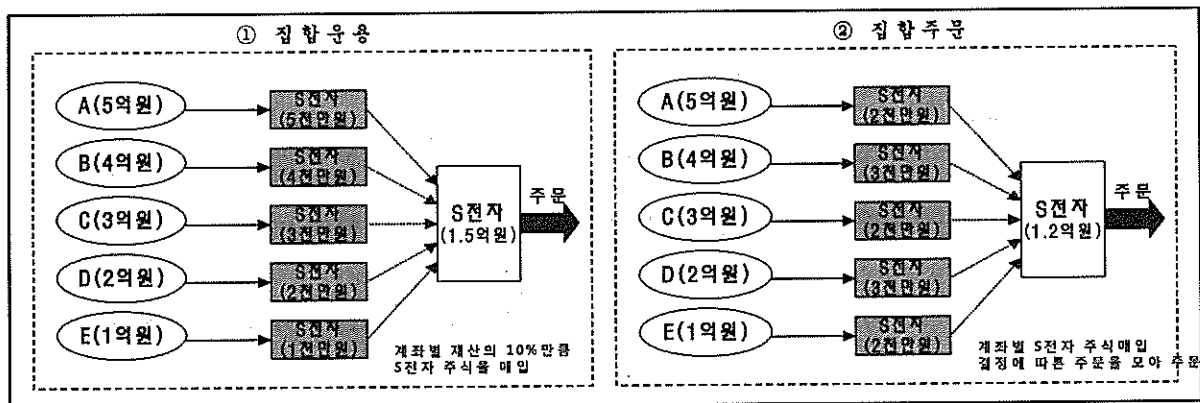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마련

-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하여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 (그림①)

* 例) 자문사로부터 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의 재산비중에 따라 주문이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

- 각 계좌별 투자판단이 달리 이루어지고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만을 집합할 경우는 집합주문으로 간주 (그림②)

* 다만 업계의 관행적 집합주문방식 등을 감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할 예정



3

랩 어카운트의 보수체계 조정

-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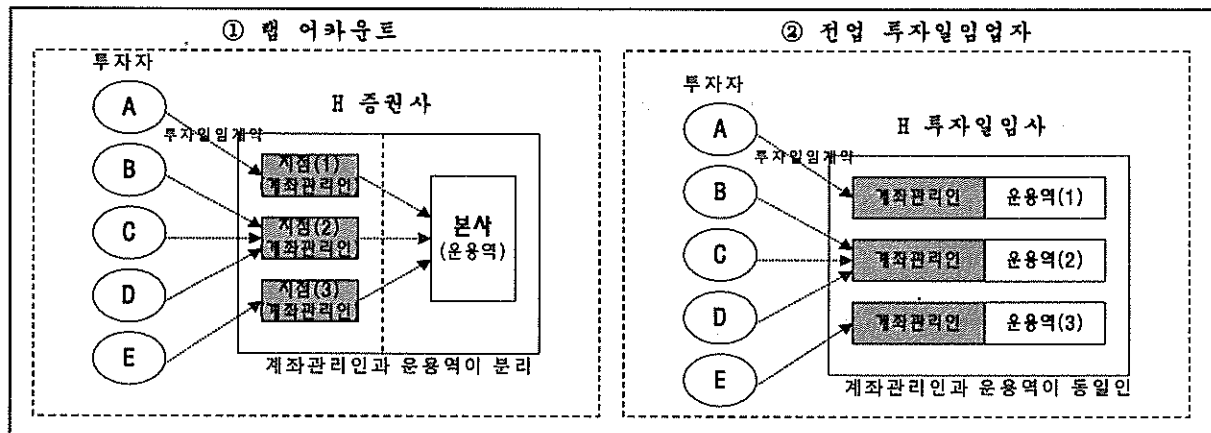
- 이를 통해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이해 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성과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 기준지표(예: 주가지수)보다 초과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일임업자의 능력에 의한 성과로 인정하여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4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으로 한정
 - * 계좌관리인은 투자권유, 투자자의 재산상황·투자목적 등의 파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등 계좌운용과 관련없는 업무로 한정
- 랩 어카운트의 운용정보가 증권사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로의 이전을 제한
-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부문과 투자일임재산부문에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방안을 신중히 검토



5 투자자문사의 자문내용 차등화

- 투자자문사의 고객을 ①금융투자업자와 ②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자문내용을 차등화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자 대상 자문의 경우 '종목과 비중'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운용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은 엄격히 제한
 - * 예) 투자자문사가 자산운용사 등에 '종목과 비중'을 매일 제공하고 자산운용사 등이 이를 그대로 실행할 경우 투자자문사가 사실상 펀드 등을 운용하는 문제점이 발생
 - 일반투자자에 대한 자문은 현재와 동일하게 '종목과 비중'의 주기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

① 투자일임보고서의 개편

- 발생비용·수수료 현황, 매매회전률 등 객관적 지표와 투자 전략·고객의 투자성향 평가 등 주관적 요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고서 체계를 확대개편

② 광고행위의 규제

- 투자권유·광고시 특정계좌의 수익률이나 평균수익률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금지

③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 투자일임계약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의 근거규정 마련

④ 신탁업에의 적용

-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은 신탁계약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특성에 맞게 적용할 예정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의 신탁업 적용>

1) 불특정금전신탁에만 적용되는 제도개선방안

- ① 적극적 맞춤성 요건의 구체화

2) 불특정·특정금전신탁 모두 적용되는 제도개선방안

- ②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 ③ 신탁운용보고서 개편
- ④ 투자광고의 규제
- ⑤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 ⑥ 투자자문사 자문내용 차등화

* 사내 정보교류 제한의 경우 신탁업자에 이미 적용되고 있음

5. 향후 추진일정

□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최종 반영할 예정

* 제도개선 T/F를 통해 각 업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개선안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진행

○ 동 의견청취 절차는 규정개정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계획

* 규정개정 예고기간동안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용검토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개선방안 시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임

○ 개정안 중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일부내용*을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적시성을 확보

* ① 적극적 맞춤성 요건, ②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 시행을 유예한 '적극적 맞춤성 요건'의 모범규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9월 중 T/F를 구성할 예정

* 금융위, 금감원, 협회, 업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

○ 모범규준 제정안을 내년 1/4분기 중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고 집합운용의 소지가 있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등 집중점검할 계획

○ 특히 적극적 맞춤성 요건 적용의 유예기간 중 점검을 강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박 병 석 의원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 2010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첨부



2010년 업무계획

경제활성화와 금융선진화를 위한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2009. 12. 16



금융위원회

목 차

I. 2009년 업무계획 추진실적과 평가	1
1.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현황	1
2. 금년도 중점과제 추진실적	2
3. 성과와 반성	4
II. 2010년 대내외 금융여건 전망	7
1. 금융시장	7
2. 금융산업	9
III.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11
1. 기본방향과 6대 중점 추진과제	11
2. 세부 추진과제	13
<제1과제>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13
<제2과제> 기업 구조조정 강화	17
<제3과제>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18
<제4과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24
<제5과제>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32
<제6과제> G-20회의를 계기로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41
※ (별도과제)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49

I. 2009년 업무계획 추진실적과 평가

1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현황

□ 금년도 업무계획상 핵심과제로 설정했던 금융시장안정,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구조조정 강화 등 대부분의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

○ 41개 세부과제 중 36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이나 일부 과제 (5개)는 법률안의 국회계류 등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

핵심과제	세부과제		추진상황	
			정상	지연
1. 금융소비자 및 소비자 보호	10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담 완화, 금융소비자 지원 등 ■ 불완전 판매 방지, 금융교육 강화 등 	8	2 ¹⁾
2.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	7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회계제도 개선 등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신·기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자금공급 확대 	7	-
3. 금융시장 안정 도모	12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안펀드, 증시안정펀드 운용, 외화유동성 지원 등 ■ 금융회사 자구노력 강화, 은행 자본 확충,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 매입 등 	11	1 ²⁾
4. 금융 인프라 개선	8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 규제개선, 투자자 보호체계개선 등 ■ 발행공시 제도 선진화, KPI 제도개선 등 	7	1 ³⁾
5. 글로벌 협조체제 및 녹색성장 지원	4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Action Plan 추진, 해외홍보 IR 등 ■ 녹색산업 금융지원 강화 등 	3	1 ⁴⁾

1)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보호 강화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보험판매인력의 전문성 제고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2) 새로운 채권상품 도입 : 단기사채법 제정 추진중(입법예고 완료)

3)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 G-20 등의 논의를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

4) 해외 금융당국과의 MOU체결 확대 : 카자흐스탄·영국 등 상대국 내부사정으로 체결 지연(현재 협의 진행중)

□ 금년중 국회입법절차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주력하는 한편 세부과제의 충실한 이행 및 성과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

2 금년도 중점과제 추진실적

① 당면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추진

① (금융시장 안정)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기반을 공고화

- *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은행 외화표시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
- ** 단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MMF 규제 개선 등

②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 되도록 금융회사의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정리 지원

- *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구조조정기금 조성·운용과 금융안정기금 설치근거 마련 등

③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신용경색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

- * 중기대출 만기 전액연장, 보증공급 확대(55.4조원),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 중소기업 외화환산 특례 적용 등

④ (기업구조조정) 불확실성 조기 해소 및 위기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 *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및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 등 제도적 기반 구축

② 금융시장의 취약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

①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금융건전성 확보 및 주택시장으로의 급격한 자금유입 억제를 위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

- * (은행권) LTV 강화(수도권 60→50%), DTI 강화(서울 50% 여타수도권 60%)
- * (비은행권) LTV 강화(수도권 보험 60→50%, 기타 70→60%), DTI 강화(서울 50%, 여타수도권 60%)

② (외환 건전성 제고)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마련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강화, 외화파생거래 한도 신설 등

③ (국제협력 강화) FSB(금융안정위원회) 등 글로벌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FSB 운영위원 선출,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정회원 가입 등

③ 금변 위기로 금융이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

① (서민금융 사각지대 최소화)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사업을 추진

* 재계 기부금 및 휴면예금 출연금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

② (금융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기금 등을 활용,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및 저금리 전환대출 등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09.11월말 현재, 개인워크아웃 82만여명, 약 26조원의 채무를 18.6조원으로 조정

* (신용회복기금) 09.11월말 현재, 채무재조정 7.1만여건(2,983억원), 전환대출 1.4만여건(1,317억원)

③ (기타) 영세상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등 추진

* 재래시장 등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09.1월) 등

④ 위기 이후 경제 제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금산분리 완화, 산은민영화를 위한 산은지주·정책금융공사 설립 등

※ 09년 주요 제도개선 실적 : 총 18개 법률 제·개정

① 금산법·자산관리공사법·공적자금 특별법 개정 : 금융안정기금·구조조정기금 설치 및 공자위 설치 등

②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금산분리 완화

③ 산은법 개정 및 정책금융공사법 제정 : 산은 민영화 등

④ 대부업법 및 여전법 개정 : 서민·중산층 보호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3 성과와 반성

가. 업무추진 성과

①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주요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시현

- 실물경제는 금년들어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전기비)을 시현

* 09.3Q GDP 전년동기비 성장률(%) : 韓 +0.6, 美 Δ 2.5, 英 Δ 5.1, 日 Δ 5.1, 獨 Δ 4.8

- 주가 상승 및 CDS프리미엄 하락 등 금융·외환시장도 안정세

* KOSPI : (08말) 1124.5 \rightarrow (09.11말) 1555.60 \rightarrow (12.15) 1665.85

* CDS프리미엄 : (08말) 316 \rightarrow (09.2말) 437 \rightarrow (09.11말) 104 \rightarrow (12.14) 86.5

* 08말 대비 주가 상승률(%12.14기준) : 韓 +48.1, 美 +19.7, 英 +19.9, 獨 +20.6, 日 +14.1

-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완화되면서 금융회사 및 기업의 자금사정도 빠르게 개선

* 은행채 스프레드(AAA, BP) : (08말) 222 \rightarrow (09.11말) 77 \rightarrow (12.14) 77

* 회사채 스프레드(AA-, BP) : (08말) 431 \rightarrow (09.11말) 111 \rightarrow (12.14) 110

* 08말 대비 회사채 스프레드(AA-(α AA), 3y, BP) : (韓) Δ 250, (美) Δ 86, (英) Δ 172, (日) Δ 25

② 금번 위기사 보여준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에 대해 외국계 기관 및 언론 등도 긍정적인 평가 (첨부1)

- 특히,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은 금융시장의 빠른 안정이 실물 경제의 건조한 회복에 기초가 되었다는 평가

* IMF 09년 한국 연례협의(8월) :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정책 및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신용경색 및 경제침체를 효율적으로 극복

* OECD 경제전망(11월) : 자본확충, 무수익여신 및 부실자산 매입, 정책 금리 인하 등으로 은행시스템이 건전화되고,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

- ③ 이에 따라 최근 해외투자자의 우리경제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도 점차 해소되고 위기 직후 급격히 유출된 글로벌 자금도 빠르게 환류

* 09년중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 (억불, 괄호안은 시가총액대비 %, 12.14기준)
: 韓 237.9(3.0), 대만 129.2(1.9), 태국 12.0(0.7), 인니 11.5(0.5), 인도 167.9(1.3)

나. 반성

- ① 과거 외환위기 경험에도 불구하고,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여전히 단기 외화차입 증가 및 만기연장 에로 등 국내금융회사 외환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나타남
- 최근의 두바이 사태와 같은 대내외 금융불안의 재연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부문 건전성 등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
- ② 각종 금융지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서민층은 아직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이용이 쉽지 않는 등 금융시장의 온기가 서민층으로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위기 전개과정에서 더욱 취약해진 서민층에 대한 금융 지원 노력을 배가할 필요
- ③ 당면한 금융위기 대응에 주력한 결과, 금융·기업부문 체질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위기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는 가운데 위기 이후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강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요구

<첨부 1> 금융정책에 대한 해외 반응 및 평가

1. 국제기구

① IMF(미션브리핑 결과, 12.8일)

- 금융·재정·통화정책 대응은 민간수요 주도 경기회복의 발판이 되었으며,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강화조치를 환영한다고 언급

② OECD (경제전망, 11.19일)

- 적극적 유동성 공급과 함께 자본확충, 부실자산 매입 등 금융 안정 대책 등으로 은행시스템이 건전화되면서 빠른 회복 시현

2. 주요 외신

① Business Week (11.11일)

- 한국경제는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빠르게 반등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음

② Wallstreet Journal (8.3일)

- 정책당국의 적극적 노력으로 한국의 경기지표가 빠르게 개선

3. 국제 신평사 및 외국계 투자자(IB)

① Fitch(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 9.2일)

- 경기침체에 대응한 신속하고 적절한 금융 및 재정정책으로 외화유동성 및 거시경제지표 개선

② Morgan Stanley(9.3일)

-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 등으로 거시경제여건이 빠른 속도로 회복

II. 2010년 대내외 금융여건 전망

1 금융시장

가. 국제 금융시장

- ①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국제금융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기관	전망시기	세계		미국		유로		일본		중국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IMF	10월	△1.1	3.1	△2.7	1.5	△4.2	0.3	△5.4	1.7	8.5	9.0
OECD	11월	△1.7	3.4	△2.5	2.5	△4.0	0.9	△5.3	1.8	8.3	10.2

- ②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불안요인 등이 상존하고 있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상존

- 최근 두바이월드 채무상환 유예 요청(11.25일)으로 인해 그간 금융 시장 호조세가 반전 또는 둔화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 상존

* 두바이 사태 익일 유럽 주요국(英·獨·佛) 증시 전일대비 3% 이상 급락

- 美 상업용 모기지 부실 확대에 의한 중소형 은행 파산 증가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美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09.9월 현재 고점대비 42.9% 하락)과 모기지 연체율 상승 지속(07.3분기 2.00%→09.1분기 6.45%→09.3분기 8.74%)

- 유가 상승, 달러가치 하락 및 글로벌 금리 상승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나. 국내 금융시장

- ① 주식시장은 국내외 실물경기 개선과 함께 기업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낙관적 전망이 우세

* 500대 국내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FNguide, 09.12.14기준)
: ('09) 61조원 → ('10) 82조원 (34.4% 증가)

- 다만, 글로벌 금융불안재개 및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가능성 등 약세 요인도 함께 있는 상황

- ② 채권시장은 국채발행 축소 및 전조한 외국인 투자증가세 등 원활한 수급여건을 감안할 때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

* 국고채 순발행규모가 축소('09년 : 52조원, '10년 : 38조원)되고,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국채지수 편입 시 외국인 투자도 100~200억\$ 유입될 것으로 예상(기획재정부, 09.6월)

- 특히, 회사채 발행은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신용 스프레드가 점차 축소되어 호조세를 보일 전망

* 회사채(AA-3y,bp) 스프레드: (08.9말)202 (09.3말)219 (6말)123 (9말)114 (11말)111 (12.14)110

- 다만, 선진국의 금리 조기 인상 및 신용경색 재연 등에 따른 기업 자금시장의 불안 가능성도 상존

- ③ 외환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과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등에 따라 대체로 안정세 지속 전망

* VIX : (08.9말)39.4 (09.3말)44.1 (9말)25.6 (10말)30.7 (11말)24.5 (12.11)21.6

- 다만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캐리 트레이드 추세가 반전될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① (수익성) 경기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인해 수익 여건은 금년에 비해 대체로 개선추세를 보일 전망

- 은행은 대출금리 상승 및 고금리 수신 만기도래 등에 따른 **예대마진 개선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금융투자회사는 증시회복에 따른 **고객예탁금 증가**, **주식형 펀드의 자금순유입 전환** 등을 통해 **수수료 수입 호조** 전망

	08.4Q	09.1Q	09.2Q	09.3Q	09.11월
* 고객예탁금(기말, 조원)	9.2	12.9	12.7	13.8	12.3
* 주식형펀드(기종, 억원)	△609	△1,007	△13,830	△49,865	+2,386

- 보험사는 실물경제여건 개선에 따라 **보험료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본시장 호조** 등으로 **자산운용수익률**도 다소 개선될 전망

- * 수입보험료 : FY06 94.6조 → FY 07108.4조 → FY08 110.45조
- * 자산운용수익률 : FY06 0.97% → FY07 1.07% → FY08 0.49%

<당기순이익 추이>

	08.3Q	08.4Q	09.1Q	09.2Q	09.3Q
* 은행(조원)	1.5	△0.5	0.6	2.1	2.3
* 증권(조원)	0.9	1.4	2.0	1.1	1.9
* 자산운용(억원)	1,304.8	596.4	574.4	960.7	1,718.2
* 보험(조원)	1.8	2.0	1.9	1.2	2.5

② (재무건전성) 금융회사의 수익성 개선 및 자본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재무건전성 추이>

	08.3Q	08.4Q	09.1Q	09.2Q	09.3Q
* 은행(BIS 비율)	10.86%	12.31%	12.94%	13.74%	14.07%
* 증권(NCR 비율)	538.5	584.2	617.2	584	557.9
* 자산운용(NCR 비율)	534.7	564.8	532.0	489.6	456.6
* 보험(지급여력 비율)	204.3	220.4	230.7	245	261.9
* 저축은행(BIS 비율)	8.5	9.4	9.7	9.53	9.58

③ (리스크요인) 시장쏠림의 재연, 중소기업 여신부실화,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 금융산업 불안요인 잔존

-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금융회사간 외형경쟁과 쏠림현상 재연 가능성
- 또한 금리상승, 기업구조조정 지속 및 비상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등으로 중소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연체율·부실채권비율 등 자산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우려

* 연체율(은행) : 1.08%(08년말) → 1.19%(09.6월말) → 1.17%(10월말)

* 부실채권비율(은행) : 1.14%(08년말) → 1.51%(09.6월말) → 1.52%(10월말)

- 대내외 불안요인 지속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추가부실화 가능성도 잠재

* 총대출 대비 비중 : 50.5%(08.6월) → 50.2%(08년말) → 50.6%(09.6월말)

〈 종 합 〉

- ◇ 대내외 경기 회복 등에 따라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금융회사의 수익여건도 대체로 개선세를 보일 전망
- ◇ 다만, 미국·유럽 등의 소비 및 고용부진 지속 등에 따른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과 과도한 정부부채 등 경제기초체력 취약국가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글로벌 불안요인이 잠재
- ◇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착실히 뒷받침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선진일류국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

Ⅲ.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1 기본방향과 6대 중점 추진과제

□ 내년도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은

- G-20 개최 의장국의 위상에 걸맞게 조기에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가운데 위기 이후 미래를 대비한 금융선진화 노력을 강화하여
- 따뜻하고 강한 선진 일류 금융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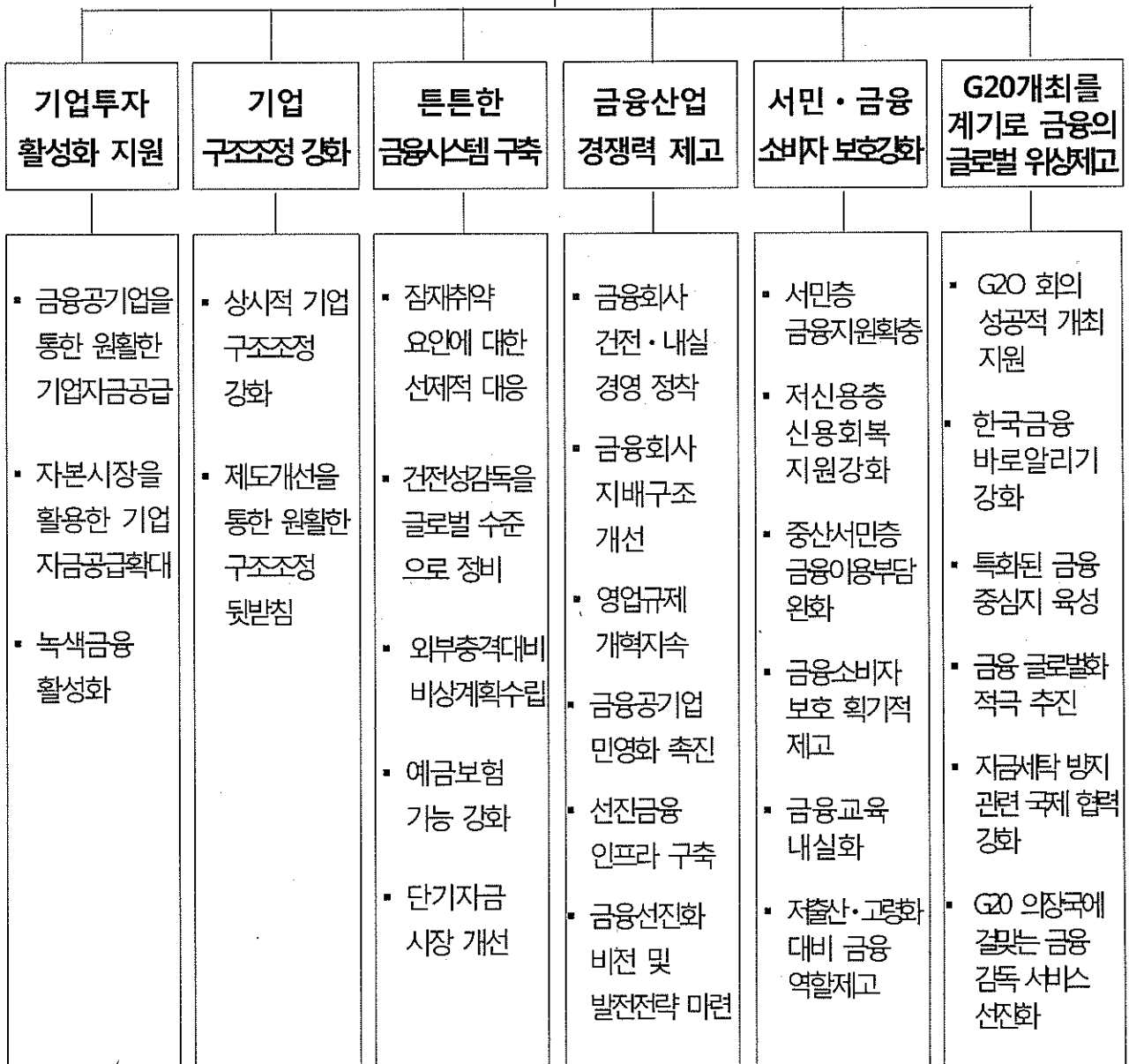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중점과제를 설정·추진

- 첫째, '기업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
- 둘째,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체질 개선 유도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
- 셋째, 위기 전개과정에서 노출된 금융시스템상의 취약 요인을 재정비하여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
- 넷째, 제조업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금융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
- 다섯째, 위기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하는 등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주력
- 여섯째, G-20의 의장국으로서 높아진 국가위상을 활용,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전환

따뜻하고 강한 선진일류 금융으로의 도약 기반 구축



성공적인 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



2 세부 추진과제

제1과제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 ◇ 금융공기업과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투자자금 등을 원활히 공급하고, 녹색금융도 활성화

가. 금융공기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

① 금융공기업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원활히 공급

- 산업은행 9.5조원, 기업은행 8.0조원, 정책금융공사 1.35조원, 신·기보 3.7조원 등 총 23조원의 설비 금융을 공급

* 08년 23조원, 09년 19.4조원(11월말기준) 대비 3.6조원 증가

②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자금을 공급

- 국책은행 및 보증기관 전체적으로 93.7조원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

* 08년 80.6조원 대비 13.1조원 증가, 09년 위기지원시 대비 5조원 감소

- (국책은행) 기업은행 29.0조원, 산업은행 10.0조원, 정책금융공사 2.1조원 등 총 41.1조원을 공급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52.6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③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 2010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보증 만기연장 조치를 유지 하되(Fast-Track도 10.6월까지 연장), 자생력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제한적 만기연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
- 09년에 상향된 보증비율(일반기업 95%, 핵심분야 100%)은 내년초 부터 점차 하향조정하여 '10.7월부터 위기이전 수준으로 환원

* (기존보증) : (09년) 95% → (10.1월부터) 90% → (10.7월부터) 85%
(신규보증) : ('10.1월부터) 신용등급별 50~85% 차등적용 (위기이전 수준)

④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 제고

- (정책금융공사) 민간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을 활용 하는 간접대출(온렌딩(On-lending) 방식) 확대를 통해 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 (보증기관)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시 기업에 대한 기보의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

* 기보가 해당기업 경영진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연대보증 의무를 완화

- 은행의 보증부 대출금리 적용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추진

* 은행의 신·기보 보증부대출시 대출총액중 신용위험이 없는 보증부분에 대해 신용위험 가산금리 부과여부를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

나.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금공급 확대

① 회사채 등 증권발행여건 개선

- 회사채 공모시 기업실사 및 인수실적 공개 등을 통해 주관사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발행가격 결정관행을 개선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 판매정보시스템(채권몰) 구축 등 채권 유통체계를 개선
- 적격투자자 대상 발행·유통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증권 신고서 제출 등)를 면제하는 등 적격투자자(QIB) 제도를 도입
- 원유·원자재·녹색 ETF 등 다양한 형태의 ETF 및 파생 결합증권의 개발·공급 활성화를 유도

② 우량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투자자금 조달 지원

- 新성장동력기업에 대해 기술평가제도 개선, 진입·퇴출 요건 완화 및 IR 확대 등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활성화*를 통해 비상장 우량기업이 신속하게 공모자금을 조달·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

* SPAC 공시심사 지침 마련, 합병실패 위험·경영진과 이해상충·피합법인 사전 지정 등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③ 중소·중견기업 투자 펀드 등 자금공급 수단 확충

-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펀드 재산의 50%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설립 추진
- 중소·중견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주체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산유동화제도 개편

다. 녹색금융 활성화

① 녹색기업 인증제 시행(10년부터)을 계기로 녹색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 녹색예금·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자금 지원을 확대

*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등(현재 조특법 개정안 국회 심의중)

- 금융공기업의 정책금융을 녹색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기준,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 등을 마련

*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 목표 : (09년)최대4.3조원 → (10년)최대5.0조원

② 10년부터 시행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에서도 착실히 지원

- 녹색금융지원을 '녹색기술·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탄소 저감 사업'으로 적극 확대

- 온실가스 저감 사업* 및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ESCO)에 대해 저리자금지원, 신용보증 우대 등 금융 인센티브 제공

* (예시) CO₂ 포집·저장·활용 플랜트 설치,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 설치, 기업간 용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 등

-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PF대출 보증 및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보증료 우대 실시

◇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여 기업 체질개선을 지속 유도**① 시장의 잠재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체질개선 유도를 위해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강화**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속 추진

-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 시 평가기준에 현금흐름,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

- 채권금융회사 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추진

② 제도개선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 뒷받침

- PEF 규제완화(기업재무안정 PEF 도입 포함)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지원체계 마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존속기한('10년말 종료) 연장

- 부실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기업회생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제3과제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 위기 발생시마다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으로 지적된 **유동성 및 외환분야** 등 잠재된 취약요인에 선제적 대응체제를 보강
 - 특히, 위기재발방지를 위해 **G20, FSB** 등 국제적 논의와 연계하에 **건전성 규제체제**를 재정비
- ◇ **사전적 부실확산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해 **단기자금시장 체제**를 개편

가.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① 은행예대율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을 마련

* 10년부터 CD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② 금번위기과정에서 취약성이 노출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를 추진

- 은행권에 대해 외화유동성비율, 외화파생상품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등 **외환건전성 감독강화방안***을 시행

* 외화유동성 비율 강화, 중장기재원조달 비율의 단계적 강화, 외화파생상품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 외화안전자산 최소보유비중 설정 등

- 은행권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비은행권에 확대 적용

- 국제 논의를 보아가며 **외환분야 레버리지 규제** 도입 검토

③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TI)를 지속
 - 주택담보대출의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발생시 주택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 예대율 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

나. 건전성 감독을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

① 국제 논의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

<FSB/BCBS 등에서 논의중인 과제중 도입 검토 대상 예시>

- BIS 자기자본비율과 함께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보통주 중심의 Tier1 비율 등)한 자본적정성 규제 제도
- 경기변동에 따른 완충적 자본적립 제도 및 장기예상 손실에 근거한 대손충당금 제도
- 조건부 자본* 등 추가적인 자본확충 수단의 도입방안
 - * 위기시 자본으로 전환됨을 전제로 발행되는 채권(평상시에는 부채)
- 레버리지 비율 규제 및 유동성 비율 규제 제도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를 지정하여 리스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
 - * 추가적 자본·유동성·레버리지 규제의 강화 등

②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개편

- FSB가 권고한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 및 이행기준^{*}」에 맞추어 동 이행기준의 국내도입방안을 추진

* ①보장상여금 및 퇴직상여금 제한, ②보상금 이연지급 및 환수조항 설정, 비현금 지급의무 등을 통해 보상과 장기성과와의 연계, ③ 건전성이 미흡한 경우 변동보상 지급상한 설정, ④ 공시 및 감독강화 등

- 기본적으로 현행 단기성과위주의 보상체계를 장기성과와 리스크 부담에 상응하도록 개편
- 국내 임금구조 및 관련 법제, 선진국 도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1/4분기 중 국내 금융업권별로 모범 기준을 마련·시행

③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 (금융투자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을 제정하고 금감원의 위험평가에도 반영하여 단기 유동성 관리 강화
- (보험회사) 획일적 위험계수 대신 회사별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를 내실화
- 글로벌 기준 및 위험요인별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보험 회사 통합리스크 산출기준 개선을 검토

다. 외부충격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 마련

① 시스템리스크를 적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 금융시장 조기 경보모형(EWS)의 개선 추진

② 외부충격 단계별 비상조치계획(Contingency Plan) 마련

- 금번 글로벌 위기대응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contingency plan) 준비 필요성을 절감
- 이에 따라 다양한 외부충격의 형태를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나리오별 대응과제와 계획을 수립
 - 외부충격이 시장별·금융주체별로 미칠 파급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금융당국과 재정당국간 협력과제 및 대응체계를 미리 정립할 필요
 - 비상상황에 대비한 은행별 비상자금 조달계획 수립 및 충분한 양질의 유동성 자산보유 의무화 등 포함

라. 예금보험기능 강화

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관리 외에 부보 금융회사의 리스크 감시·지도(risk adviser) 등 사전적 부실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

- 금융회사 및 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평가 강화
 -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실시 등 위험감시기능을 강화
 - 금융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경영개선계획 심의 등 적기 시정조치 과정에 조기 참여하여 정리비용 최소화
 -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단기적·사후적 점검 방식에서 장기적·사전적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 전환
- * 단기성장보다 장기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무목표 및 임원보수체계를 장기성과와 연계하도록 개편하고, MOU 정밀점검 도입 등 점검방식도 개선

② 금융신상품 출현에 따른 보호대상 예금범위 등을 개선

③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차질없이 시행(2014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차등평가 기준 개발, 연도별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

마. 단기자금시장 체계 개선

① 금융회사의 단기자금조달이 콜시장(1일물 무담보 콜)에 편중되어 신용경색 등으로 콜시장 위축시 전체 금융권의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리스크 우려

○ 선진국과 달리, 채권 등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시장(환매 조건부채권(RP)시장)이 미발달하여 채권시장 활성화 및 담보 관리 등 다양한 금융업 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

⇒ 따라서 위기 재발시 리스크를 완화하고, 단기자금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단기자금시장 체계 개선 대책 마련(현행 콜·CP시장위주 → RP·단기사채시장 육성)

① RP시장 활성화를 통해 채권을 매개로 한 자금조달 유도

※ 자산운용사 등의 RP 매매 관련 규제완화, RP 시장 참여기관 확대, 각종 거래 인프라 개선 등

② 금융회사의 과도한 콜거래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③ CP(기업어음) 거래수요는 전자화된 단기채권으로 흡수하여 시장 투명성 강화, 자금조달의 신속성·적시성 제고

※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CP와 유사한 발행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유통성은 더욱 강화된 단기채권 도입 등

-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이 위기 이후 新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유도
 - 영업규제 개혁, 금융인프라의 개선 및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지속 추진
 - 위기극복 이후를 대비,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장단기 발전전략을 마련

가. 금융회사의 건전·내실경영 정착을 유도

- ①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성장 유도
 - 경기회복 등에 따라 예금유치·자산확대 등 무리한 외형경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 구조조정기금(10년 10조원 한도 조성 계획)과 민간배드뱅크를 통한 부실채권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
- ②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 강화 유도
 - 각 금융회사별 정기적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
 - 리스크 관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하고 은행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 관리 평가체계 정비 및 통합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모범기준(Best Practice)을 마련

③ 금융회사의 경영효율화와 수익기반 확충 지원

- (은행) 신상품 개발 및 새로운 수익원 확충과 경상경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 강화를 유도
- (증권회사) 수익구조를 위탁매매 위주에서 IPO, M&A 등 IB 업무로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기업재무안정PEF 및 SPAC 시장 활성화 등

- (자산운용사) 펀드 합병절차 간소화 및 등록유지요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규모 펀드의 통폐합을 유도하여 수익성 제고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추진

① 은행권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이해상충 방지요건 강화 및 활동내역·평가 공시
- 임기상한 설정, 겸직금지 및 순환보직제 도입 등 추진
-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10년 주총부터 적용

②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을 현행 등기임원뿐 아니라 집행임원에게도 확대 적용

*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해임·면직된 경우 5년간 임원자격 결격 등

다. 영업규제에 대한 개혁을 지속 추진

①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감독은 국제논의 흐름에 맞추어 강화해 나가되, 비합리적인 영업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완화

- 금융위원회내에 매분기별로 금융규제개혁 추진 회의를 운영하여 금융규제 정비과제를 발굴·개선

② 금융업 신규진입 및 업무범위 확대

- 시장리스크와 투자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 신규진입 및 업무확대를 단계적으로 허용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확대* (11 → 6단위)하고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

* (현행) 서울 경기/인천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광주/전남 전북 제주 대전/충남 충북
→ (변경)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 자기자본기준 변경(장부상기준→BIS 기준) 등

-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확대하여 수익원을 다변화

- 단위신협과 중앙회간 연계대출 제한을 완화*하여 신협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신용리스크 분산 유도

* 중앙회의 대출한도 : (현행)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 초과분
(개선)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의 50% 초과분

③ 영업활동 관련 규제 개선

- 금융상품 투자성격의 출자 및 투자시* 금산법상의 승인면제 등 규제를 간소화

* 例 : 금융회사의 뮤추얼 펀드 및 PEF의 LP투자 등

- 그동안 금산법상의 제도운영(법 §24)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해석지침**을 공표

- 신탁법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수탁가능 재산 및 업무 위탁규제 등 신탁업 감독제도를 대폭 정비

* 새로운 유형의 신탁도입 및 신탁규제 유연화 등

- 겸영신탁회사의 부동산 신탁 취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

라. 금융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기업 매각 촉진

①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가속화

- 지배지분매각은 합병, 다수에 대한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검토하되
 -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기타 소수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조속히 매각 추진

② 산업은행 민영화를 착실히 준비

- 본격적인 민영화 착수이전에 글로벌 추세에 맞는 비전을 정립하고 체질 개선을 우선 추진

③ 구조조정기업 지분매각의 본격 추진

- M&A시장 여건 및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12개 구조조정기업중 4개* 기업의 지분매각을 우선 추진

*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 상기 민영화 및 지분매각은 자본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조정

마. 선진적 금융인프라의 구축

① 기업신용평가의 품질과 투명성 제고

- G20 등 최근 국제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신용평가사 표준내부통제기준(09.10.2일)

-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평가직원의 순환보직, 특정회사에 대한 과도한 평가 금지, 등급평가 위원회 설치 등 포함

- 신용평가회사별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및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공시체계*를 강화하여 신용평가 회사간의 질적 경쟁 유도

* 평가과정 및 방법, 평가회사간 평가결과 비교 등을 포함

②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한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 부정적 정보(연체정보 등) 위주의 평가관행을 개선하여 긍정적 정보(상환 실적 등)를 신용도 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

- 개인의 정확한 신용도 산정을 위해 합리적 신용정보 관리·활용 체계 수립

- 특히, 현행 신용정보 활용 기준*을 재정비하여 신용등급 산정의 신뢰도를 제고

* 연체 기간, 연체 금액, 현금서비스 등 대출 실적, 신용정보 조회기록 등

- 다양한 공공정보를 신용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 정보범위 및 제공절차를 마련
- 신용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등 정보 오·남용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③ 국제회계기준(IFRS)의 차질없는 도입 등 회계제도 개선

- 'IFRS 정착 추진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 부담 경감방안 등을 지속 추진
- 연결중심·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특성에 맞춰 연결감리 확대 등 회계감리 제도를 전면 개편
-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품질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인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추진

④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마련

-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 설립 등 제도개편 방안 마련

* CCP를 통한 장외 파생상품 청산(G20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CCP 설립·감독 방안을 마련(12년까지 CCP 설립 예정)

바.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

① 금번 금융위기로 성장전략에 한계를 노출한 외국과 달리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한 우리나라 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

○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감안한 금융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성장전략 수립에 예측가능성을 제고

* (예시) 규제완화 → 금융시스템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강화
겸업화 → 전업주의 논의 대두
대형화 → 레버리지 규제를 통한 무분별한 대형화 억제
증권화 → 과도한 증권화 억제 및 공시 강화

○ 금번 금융위기로 경쟁상대가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

* 미국·영국 등 금융강국들은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되어 있고 세계 금융시장에서 아시아 신흥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② 이를 위해 지난 '09.7월부터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중

- ①금융시스템 안정화, ②금융시장 효율화, ③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④금융인프라 선진화 등 4대부분 과제에 대해 선진화 전략을 연구
-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권역별 특성분석(SWOT)을 바탕으로 구체적 발전전략을 마련·추진

③ 내년 1월중 작업결과를 발표(3개 연구기관 공동)하고

○ 금융시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금융위내 금융선진화를 위한 합동회의 운영)한 후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정책화를 추진

제5과제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서민층에 대한 금융비용부담을 완화
- ◇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집행체계를 실효성있게 정비하고 금융교육을 내실화

가. 서민층 금융지원 확충

① 미소(美少) 금융의 성공적 착근

- ① 자활의지가 있으나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대**

* 지역·기업법인을 전국적으로 설립(향후 200~300개 목표)하여 접근성 제고

- 금융지원, 신용관리 교육, 맞춤형 창업·운영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수요자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

- ② **미소금융사업자에 대한 공통업무 매뉴얼 제공^{*}(12.3일) 및 실무진 교육강화 등 내실있는 운영 도모**

* 설립예정 지역법인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 배포 및 집합교육 실시중(12.3~4, 14~18)

- 미소금융 사업자간 정보연계 강화 및 운영시스템 공유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 특히 서류심사, 면접, 현장심사 등 밀착형 대출심사와 주기적인 사업장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

⇒ 미소금융 사업이 초기부터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글로벌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

② 소액보험의 지원규모·대상 확대 및 다양한 보장 등을 통해 불의의 사고 발생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 '09년중 휴면보험금(40억원)을 재원으로 6,800명의 차상위계층 빈곤아동·부양자(한부모 조손 가정 등)의 상해·생명보험 가입 지원

③ 서민금융회사의 금융 공급기능을 활성화

-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역량 제고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금융서비스 역량을 강화
- 서민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혜택이 서민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④ 대부업체 감독을 강화하여 대부업체의 건전영업 유도

-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영업방식의 투명성**을 제고

* 고정사업장 보유 의무화 범죄조직 관련 처벌받은 자 등 종사자 결격요건 확대 등
** 제3자 담보제공시 확인의무 신설 등

- 시장영향이 큰 대형업체*의 영업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관리감독 시스템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검토

*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100개) 비중이 전체 대부업체(15,723개사) 대출금액의 86.8% 차지('09.3월말)

나.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강화

①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강화 및 제도 선진화

○ 고금리(20%이상) 채무를 저금리(12%내외) 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신용회복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7등급→6등급이하)

○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만명) : ('08.12) 227 → ('09.3) 221→ ('09.6) 211 → ('09.10) 202

-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금융지원 확대

○ 개인회생·파산 신청전 사전상담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체계를 선진화

다. 중산·서민층의 금융이용부담 완화

① 가계대출 관련 금융비용 경감

○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유도하여 가계의 금리변동 리스크 부담 경감

* 은행별 고정금리대출 활성화 이행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에 대한 점검 강화

○ 연체이자·가산금리 부과체제 개선 유도

- 연체이자 부과기간을 '한편넣기'로 변경하고 공휴일이
납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가계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례 방지

- 금융회사의 대출실행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체계에
대한 대고객 정보제공·설명 노력 강화를 지도

○ CD금리연동 대출의 지나친 편중 완화를 위해 다양한 기준금리를 개발토록 유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 다양한 기준금리 상품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토록 유도

②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및 공시제도 합리화

-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등을 통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저신용층이 다수 이용하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사별 금리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체제 개선

③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기존펀드에 적용토록 유도

* 펀드 판매보수 : (현행) 연 5% → (개선) 연 1%
펀드 수수료 : (현행) 5% → (개선) 2%

- 펀드 보수·수수료 체제를 개편*하고 펀드발행 분담금 제도를 개선**

* 판매 보수제 대신 계좌관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

** 주요국 사례조사를 통해 발행 분담금 부과 주체 및 기준 개선

- 한국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의 증권거래관련 수수료 인하 등 수수료체계 개편작업을 차질없이 시행

④ 대부업체 고금리의 점진적 인하 유도

-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효율화 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고금리 인하 환경 조성
- 대형대부업체의 불법 중개수수료 단속을 강화하여 금융 이용자 부담완화

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획기적 제고

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 흐름에 걸맞게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를 재정비

○ 내년 상반기중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전반에 걸쳐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예시) 상품공시, 판매, 약관, 광고 등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관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감독행정체계를 보강

- 금융위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

- 독립본부로 격상된 금감원의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확충하고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전담인력을 보강

* 예시: 민원정보를 감독에 적시반영하는 등 민원의 피드백 강화

- 금감원의 분쟁조정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를 확대

②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지속 개선

○ 자본시장법상의 소비자보호장치(적합성원칙, 상품설명 의무 강화 등)를 보험분야 등에 추가 적용

○ 민원다발분야인 보험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민원발생의 구조적 감축 유도

-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대폭 강화

* 예시 : 광고기준을 위반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수입보험료의 20%까지) 부과

- 보험 판매채널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제재를 받은 법인대리점의 소속 임원이 제재 효력이 완료되기 전 다른 대리점 임원 등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인대리점의 공사보고의무 강화

* 보험대리점 소속 임원·모집사용인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 제재근거를 마련

③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공시감독도 강화

○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와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등 공시위반에 대한 금전제재를 강화 추진

* 유통공시 위반에 대한 행위자 과징금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예정

○ 현물·선물 연계거래 및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해 법적 구성요건 등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

④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 '사금융에로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고리사채·불법 추심 등의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운동을 통해 피해상담·신고·구제 등을 한자리에서 제공(One-stop 서비스)

마. 금융교육 내실화

① 투자자 보호제단의 기능을 확충하여 금융교육기능을 강화

- 금융상품·금융회사 등에 대한 소비자 평가업무(Consumer Report)도 수행

② 금융교육 추진 네트워크를 활성화

- 금융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의 금융교육 추진협의회를 제정·활성화

-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강사 풀(pool) 구축, 교육자료 공유 등 교육여건을 제고하고 교육인원도 확대

* 금감원, 금융회사, 협회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실시

③ 금융유관기관을 통한 수요자별 맞춤교육 실시

- 금감원 및 금융교육 유관기관을 통해 주부, 직장인, 어린이·청소년 등 수요자별 맞춤교육 실시
-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저소득층, 농·어민, 실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
- 초·중·고교 금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학생·교사 등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 제고

① 고령층의 노후대비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

- (은행) 고령층의 실버타운 거주 활성화를 위해 실버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역모기지’) 제공 (‘10.7월부터 실시)

* 현재 실버타운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

- (보험) 노후생활대비 개인연금보험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지원방안 강구

- (신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형 신탁제도 마련

* 경제적 취약계층 등이 신탁 가입할 경우 신탁운용 결과 손실 발생시 최소금액 보장 등

-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강구

②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유도

- (은행) 다자녀가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 일정수 이상(예 : 3명) 자녀보유 가구에 대해 예금금리 추가제공 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인하 등

- (보험)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 할인

* 교육 및 생존보험 등에 있어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할인 등

- (펀드) 자녀교육비 저축 목적용 펀드를 활성화

* 영국은 Child-Trust Fund 제도를 ‘05년부터 도입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 등 세제지원,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6과제

G-20 회의를 계기로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전환
 - 글로벌 시각에서는 아직 한국금융의 위상이 낮음(첨부2)

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 ① G-20 정상회의 준비과정과 FSB 등 국제회의시 선진·신흥국간 가교역할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그간의 실적) 금융위는 FSB에서 신흥국 금융시스템 안정에 관한 이슈인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여 다수 회원국의 공감대 형성(09.9월)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여 선진·신흥국의 공통의제 발굴, 주요 의제에 대한 국가간 이전 조정 등에 적극 기여
- 특히, 금융분야 의제에 대한 국제적 의견 수렴을 위해 아시아 국가 금융당국간 상시대화채널*을 구축하고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

* FSB 아시아 회원국간 대화채널을 우선 추진하되, FSB 비회원국 등으로의 확대도 검토

- ② FSB(금융안정위원회),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각종 금융분야 주요회의도 G-20 회의준비와 연계하여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G20 회의의 한국개최와 연계한 FSB 총회 한국 개최 추진

나. 한국금융 바로 알리기(IR) 노력 강화

① 해외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WEF(세계경제포럼)등과 같은 해외 금융관련 지수 평가에 적극 대응

- 우리 금융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정확한 정보와 최신통계자료 등 제공

* 금융위, 기재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② (한국금융바로알리기) 해외언론·IB·신평사 등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 노력 강화

- 부정적 기사와 보고서 발표후의 사후적·방어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사전적·적극적 IR활동을 전개

- 단기적 해외투자자금 유치보다 주요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 신뢰확보에 중점

- 이를 위해 해외 주요언론, 애널리스트 및 여론주도층 인사 등으로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

- 정확한 정보의 선제적·적극적 제공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오해가능성을 차단

* 주로 해외관심사항 등에 관한 정례적인 컨퍼런스를 및 금융 관계기관 합동 글로벌 IR 행사 등 활용

- 위기상황 발생시 이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신뢰관계 구축

다. 특색있는 금융중심지 육성

①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여의도)과 부산(문현)을 자생력 있는 금융특화지역으로 육성

-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부이행계획을 착실하게 추진
- 해외 우수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해외 금융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

* 예: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도입, 금융회사의 외국인 전담창구 확대유도 등

② 금융위기 이후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 파생상품과 자산운용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금융중심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보완·발전

*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회장 (09.11월) : 한국은 파생상품이나 자산운용 같은 분야에 특화하면 "아시아의 시카고"가 될 수 있을 것

③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

- 시장수요를 보다 철저히 분석, 정밀한 금융인력 수급전망을 통해 향후 금융인력 양성 정책방향 마련
- 금융 MBA과정, 실무금융인력 양성사업 등 지원을 통해 녹색금융, 퇴직연금 등의 부문에서 글로벌 수준의 전문인력 육성

라. 금융의 글로벌화 적극 추진

① 금융위기 극복과정 등에서 축적된 금융 노하우(know-how)를 신흥국에 전수

- 금융·기업구조조정과 시장안정 조치, 부실자산정리
경험 등을 신흥국에 전수

- 한국형 증권시장 인프라의 해외수출을 확대하여 아시아
역내증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증권업의 해외진출 지원

* 라오스 및 캄보디아 거래소 설립 지원,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10년이후 지속 추진)

** 향후 남미, 중앙아시아 등 증시관련 시스템개선 수요 발생시 사업수주 적극 추진

- 우리의 공적 신용보증 시스템 운영 경험 등을 전수하여
신흥국의 중소기업 발전 및 경제개발을 측면 지원

②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

- 인프라 및 플랜트건설 관련업체 등 제조업과의 동반
진출 모색

- 제조업체 기진출국 및 증시인프라 수출국 등을 금융
회사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 해외진출 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정부와의
협약 강화

- 금융회사 진출 희망국의 현지법령·시장정보 등의 적기
제공 및 필요시 해당국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

- 싱가포르·일본 등 국내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있는 지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방안 모색

* 양국간 펀드 등록 및 상장 절차 등을 완화하여 상호진출을 활성화

- 해외진출 은행의 현지화 촉진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해외진출 사전감독 시스템 정비 및 사후감독 강화

마.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 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09.10.14일)으로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협의체 일원으로서 활동 가능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89년 G7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현재 32개국(OECD국가 25개국), 2개 국제기구로 구성

-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높여,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

- ② FATF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일부 국제기준 미달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 ①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의 인하 등 제도개편 추진

* 현행 2천만원(외화거래 1만불)인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

- ②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 금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편

바. G20 의장국 위상에 걸맞는 금융감독서비스 선진화

① 금융감독 · 검사 관행 및 행태 개선

-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감독 · 검사서비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 · 검사행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 금융위 · 금감원 · 예보 · 정책금융공사 등의 업무수행 행태 · 방법 등에 대해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실시
- 평가 결과 및 주요 시정조치 사항은 대외공표

②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 투명성 · 실효성 제고

- 제재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을 대폭 확대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신분적 제재 방식에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방식으로 점차 전환

③ 기능별 감독 및 검사 강화

- 겸업화 및 부수업무 확대 등에 대응하여 권역별 · 칸막이식 감독 및 검사에서 탈피하여 권역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④ 검사서비스 품질제고 추진

- 상시 감시업무의 충실도 제고 및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평가 강화 등 사전예방적 검사체제 강화
- 검사품질관리제도(Quality Assurance)를 도입, 상시감시 및 감시업무의 적정성을 제3자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첨부 2> 글로벌 시각에서 본 한국금융

◇ 낮은 글로벌 위상, 외환위기 낙인효과 등에 따른 불안감 등 한국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며 여러 취약요인이 지적되고 있음

① 낮은 글로벌 위상

○ 금융부문 글로벌화가 아직은 초보적 단계

- 국내 은행의 국제화 지수*가 낮은 수준이며,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플레이어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

* TNI (Trans National Index): 韓 4.3%, 美 24.7%, 英 40.3%, 獨 42.7%, 佛 37.5%
($TNI = [(해외자산/총자산) + (해외수익/총수익) + (해외인력/총인력)] \times 100 \div 3$)

** 세계 1000대 은행수(개) : 美 159, 日 97, 中 52, 인도 32, 대만 28, 韓 10

○ 그간 글로벌 금융협력 논의시 수동적 참여에 그치고 주도적 역할은 아직 초기 단계*

* 금융안정위원회(FSB)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 규제설정자로서 역할 등

○ 이에 따라 금융부문 국제 경쟁력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의 평가도 낮은 수준

* WEF 금융발달지수 09년 55개국 중 23위

* IMD 국제경쟁력 평가(금융부문)는 09년 57개국 중 33위

②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의 가시적 성과가 아직은 미흡

○ 금융시장규모, 생활환경 · 법률 등 인프라, 금융전문인력 등의 측면에서 그간의 금융중심지 추진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 GFCI 순위(09년) : 런던(1), 뉴욕(2), 홍콩(3), 싱가포르(4), 서울(35)

③ 우리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 높은 대외의존도, 외환위기 낙인효과(stigma effect) 등으로 한국 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
- 특히, 리먼사태 이후 국내금융시장의 여건이 양호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사 및 외신 등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시장 불안을 증폭
- * 피치 (08.11월) :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stable→negative)
- * S&P (08.10월) : 국내 7개 금융회사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stable→negative)
- * FT (08.10월) : 국내은행의 높은 예대율, 대외채무, 민간부채 등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 제기 ("Sinking Feeling")

④ 금융 감독에 대한 낮은 신뢰

- 글로벌 투자자들은 종종 비일관적이며 경직적인 금융 감독 방식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

⇒ 외국인 우려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노력과 함께 한국 금융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그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극복하고 우리 금융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

① 금융위 등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사업 적극 참여

(금융위·금감원·금융공기업)

-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지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각 기관별로 「중대형차 홀짝제 운행」, 「10% 에너지 절감」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행

*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홍보전광판 심야소등, 경차·하이브리드카 구입, 적정 냉·난방 온도 관리(동계 19℃, 하계 27℃) 등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참여

-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하여 절감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

* 에너지-사랑+ 캠페인 :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적정온도 준수, 조명 끄기, 대기 전력 차단 등)에 따른 절감실적이 5% 이상일 경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금 적립

* 09년중 우체국, 이마트, 국민은행 등 민간·공공기관 8,700여개 건물 참여

- 특히 전력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LED 조명*에 대한 투자를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확대**

* 소비전력 및 수명 비교 : (할로겐)20~75W, 3,000h (LED)3~17W, 50,000h

** 현재 산업은행 등에서 일부조명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내년부터 교체규모 확대 예정

② 민간 금융권의 에너지 절감노력 확산 유도

- 국내외 금융권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권역별로 자율적 에너지 절감 계획을 시행토록 유도

※ 국민은행 탄소배출량 관리 시스템

(KB-CEMS, Carbon dioxide Emission Management System)

- 본점 및 영업점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물자 사용량 정보를 수집한 후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계
- 탄소배출관리지침을 통해 전기, 자동차유류 등 이용량 절감

※ 美 HSBC의 Eco Branch (태양광 시범점포)

- 태양광 발전설비를 영업점에 설치하여 해당 영업점을 이용하는 기업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모델 역할(넛지 효과*)

* 넛지효과(Nudge Effect) : 모범사례에 자주 접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부드러운 개입효과

③ 친환경 금융상품 보급 확대

- 금융상품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친환경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

※ 친환경 금융상품 예시

- (예금) 승용차 요일제 참여 고객에 ATM 수수료 등 면제
친환경 차량(LPG, 하이브리드카 등) 소유고객 금리 우대
- (대출) 경차보유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출금리 감면
- (보험)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보험료 감면

2.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상황

☐ 붙임참조

2009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사항 처리결과

목 차

1.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관련

- 1) 외환관리에 있어 예대율 관리, 통화스왑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7
- 2)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등 세계경제의 침체(더블딥) 우려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7
- 3)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치(기금, 펀드 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8
- 4)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8

2. 미소금융 및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 1) 미소금융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 9
- 2)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9
- 3) 미소금융재단 이사회가 방만경영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0
- 4)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인력의 전문 능력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10
- 5) 미소금융이 기존의 서민금융(희망홀씨 대출 등)과 중복, 상충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 6) 서민에 대한 대출시 정부의 보증을 통한 신용을 보장하는 방안과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 11

3. 녹색금융추진관련

- 1) 녹색금융의 정의와 지원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 11

4.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관련

- 1)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감독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MOU 점검방식의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12

5. 한국은행법 개정관련

- 1)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MOU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부여 등이 우리 금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12

6. 신용카드 관련

-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하여 원가공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13
- 2)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 3)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15

7. 주택담보대출관련

- 1)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DTI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8.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 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 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꺾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16
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원실적이 미흡하므로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 16
10. 중소기업지원관련
 - 1) 향후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신·기보 적정 보증 규모 확보 등)의 마련과 함께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 18
 - 2)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를 미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T/F 구성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8
 - 3)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19
11. 현행 대출금리의 산정기준인“CD+가산금리”체계에 대하여 CD금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가산금리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금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 및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 20
12.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 해소와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20
13.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21

14.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2

15.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면책기록의 보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

16.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1)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정책 수립)하고, 금융민원의 원활한 해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23

17.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 등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24

18. 금융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4

19. 펀드 관련

1) 대리인에 의한 펀드 개설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

2)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펀드 운용보수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6

3)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방지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6

4) 펀드 판매회사가 높은 판매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지속되므로, 숨겨진 비용인 판매보수 폐지 및 판매수수료와의 이중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

- 5)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위한 미스터리쇼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28
20. 은행의 DCDS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 28
21. 은행연합회를 공적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단체로 은행 법상에 규정하되,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 구조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29
22. 금융보안체계 구축 관련
- 1) 인터넷공간에서 해킹 등에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보안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30
23. 신용평가사의 자회사가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로 오인될 활동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30
24.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협회의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연수교육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1
25. 금융위원회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해당 부서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잦은 인사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
- 1)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 31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관련	
1-1) 외환관리에 있어 예대율 관리, 통화스왑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강화 방안' 시행('10.1.1일)</p> <p>*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 및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 강화,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신설,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 신설</p> <p><input type="checkbox"/> '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시행('10.8.1일)</p> <p>* 외화유동성비율 일일 관리 및 중장기 외화 자금관리 추가 강화,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신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추가 강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각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p>
1-2)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침체(더블딥) 우려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노력* 강화</p> <p>* 금융회사 외화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마련, 글로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적극 참여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시장의 잠재적 취약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p> <p>○ 또한, G20, FSB 등 국제적 논의와 연계 하에 국내 금융 건전성 규제체제 정비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3)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치(기금, 펀드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비상조치*의 내실 있는 운용과 점검 추진</p> <p>*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구조조정 기금,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등</p> <p>○ 아울러 경제·금융 여건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정상화 추진</p> <p>* 은행 외화채무지급보증 종료('09.12)</p> <p>* 중소기업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10.7)</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아직 불안요인이 진존하는 만큼 비상조치를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p>
<p>1-4)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비상조치 환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카우기 위한 노력을 추진</p> <p>○ 중소기업 활성화·설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적 경기 회복기반 마련</p> <p>○ 기업구조조정추진 등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추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미소금융 및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2-1) 미소금융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행의 기부금은 자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재출연되어 각 기업·은행재단이 자율적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수행중 ○ '10.9.28 현재, 75개 기업·은행권 재단 및 지역지점 설립이 완료 ○ 기업·은행이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은행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2-2)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중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정비를 추진 중 ○ 휴면예금법 개정안 국회심의('10.9.14,정무위 상정) □ 또한 미소금융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선정위원회 (7인)」를 외부전문가(5인) 중심으로 기 재편하고 사업자 선정기준도 이사회에서 사전결정 ○ 1차('09.12)·2차('10.4) 지역법인 대표자 공모 과정에 기 적용했고 앞으로도 선정 기준·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3) 미소금융재단 이사회가 방만 경영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재단의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 (금융위원회는 당연직 이사로 미소금융재단이사회에 참석)</p> <p>* '10.2월, 6월중 감사원의 미소재단 감사실시</p>
<p>2-4)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의 전문 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운영인력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운영인력의 전문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방안을 시행중</p> <p>○ 예) 미소희망봉사단을 통한 전문인력 재능기부, 현대차미소학습원 운영, 금융연수원과 공동으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p>
<p>2-5) 미소금융이 기존의 서민금융 (희망홀씨 대출 등)과 중복, 상충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과 희망홀씨대출은 대출자금의 용도가 상이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p> <p>○ 미소금융 : 창업자금·운영자금 등 희망홀씨대출 : 생계비 등 일반대출</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지점 방문자 중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희망홀씨대출 등 기타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병행 중</p> <p>○ 다만, 과도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연계 관리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6) 서민에 대한 대출시 정부의 보증을 통한 신용을 보장하는 방안과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을 출시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생계자금, 사업자금을 지원('10.7.~) <input type="checkbox"/>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보증을 통해 저소득층·저신용층 서민을 위한 대출(햇살론)을 확대 <input type="checkbox"/>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실시중
<p>3. 녹색금융추진관련</p>	
<p>3-1) 녹색금융의 정의와 지원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과거 벤처 거품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책금융기관들이 인증대상 녹색기술·녹색사업(지경부 고시)을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지원을 하도록 조치 <input type="checkbox"/> 또한, 금년 4월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하여, 세제혜택(민간투자자)을 받는 민간금융회사의 녹색금융상품 지원 대상을 녹색인증사업 등으로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녹색금융 및 녹색펀드의 운용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기준」, 「녹색펀드 판매·운용 모범기준」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p>4-1)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MOU 점검방식의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예금보험공사는 MOU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MOU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1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체결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방식을 개선하여 예방기능을 강화 ○ MOU 재무목표 부여방식과 재무지표 산정방식 개선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예보가 MOU 이행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적절한 사후 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리 감독하겠음</p>
5. 한국은행법 개정관련	
<p>5-1)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MOU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부여 등이 우리 금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정보공유 MOU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보 등 각 기관은 관련정보를 원활히 공유하고 있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5개 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정보공유 협회 등을 통해서 MOU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개선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신용카드 관련</p> <p>6-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하여 원가공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① (재래시장 가맹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상한을 20~22%에서 1.6~1.8%로 인하</p> <p>*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재래시장 (약 1,550개)</p> <p>○ 다만, 유흥주점, 무도장, 성인오락실, 귀금속점 등 영세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가맹점은 제외(중소 가맹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p> <p>※ (참고) 현재 서울시내 3대 대형마트 신용카드수수료율 : 1.6~1.9%</p> <p>② (중소 가맹점)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p> <p>○ 신용카드사별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이 2.0~2.15%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기존에 2.0~2.3%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가맹점 (간이과세자)도 일부 인하</p> <p>※ (참고) 현재 서울시내 3대 대형백화점 신용카드수수료율 : 2.0~2.4%</p>
<p>6-2)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p> <p>□ (현금서비스 이자율) '10년 9월기준 카드사는 취급수수료 폐지(8개사) 또는 일부 인하 등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카드사별 인하폭(취급수수료 포함)은 0.3%p~4.06%p 수준이며, 평균 현금 서비스 금리도 '09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 지속</p> <p>* 26.4%('09.1Q)→25.9%('09.2Q) → 25.7%('09.3Q) →25.7%('09.4Q)→24.6%('10.1Q)</p> <p>○ '10년 3/4분기 중 취급수수료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 인하한 카드사 중</p> <p>- 일부 카드사가 추가로 취급수수료 폐지할 예정(10개사)</p> <p>⇒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급수수료 폐지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지속 유도</p> <p>□ (체크카드 수수료율) 다음과 같이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既 마련</p> <p>○ 기존에는 직불·체크카드 결제 가능 범위를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로 한정(신용카드 결제 가능 범위와 동일)하고 있었으나 결제 가능 범위 규정을 네거티브 형태로 변경하는 한편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체크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 등도 결제가 가능토록 결제 범위를 확대</p> <p>* 신용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에 대해 결제 금지</p> <p>② 2010년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율 차별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0.1.1)</p> <p>* 신용카드 : 20%, 체크카드 : 25%</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카드사의 체크카드 수수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p> <p>*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비중</p> <p>· 29%(’05)→6.0%(’07)→9.9%(’09)→10.8%(’10.1Q)</p>
<p>6-3)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p>	<p>< 향후 추진계획 ></p> <p>□ 최근 포인트·마일리지의 사용처가 다양화되고 그 이용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p> <p>○ 금융당국은 거래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포인트 등 발행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음</p> <p>□ 또한,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성남 의원)이 발의되어 있는 바</p> <p>○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갈 계획</p>
<p>7. 주택담보대출관련</p>	
<p>7-1)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DTI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각 개별법에 근거한 감독규정으로 규제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추이 등 관련동향을 보아가며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p>
<p>8.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 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꺾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2010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을 영업점 경영실적평가 기준(KPI)에서 제외('10. 1. 11) 하여 영업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과당 유치 유인 구조를 개선</p> <p><input type="checkbox"/> 불완전 판매 방지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캠페인 등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실수요자 중심의 영업 추진</p>
<p>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원 실적이 미흡하므로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08년 9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2년째 운영 중</p> <p><input type="checkbox"/> 그동안 지원센터는 금융기관의 질의·건의사항 처리와 애로사항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금융환경개선에 노력</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해왔으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심지 정책 홍보를 위한 해외 IR ('09.11월, '10.5월)을 실시 - 서울시-맥쿼리그룹간 한국내 사업 확대를 위한 MOU('09.11월) 및 부산시-칼리온 은행간 선박금융 협력강화 MOU 체결 지원('09.11월) - 부산시-佛 Orbeo社간 탄소배출권시장 협력을 위한 MOU 체결지원('10.5월) ○ 또한, 금융감독법규 영문화('09.12월), 금융거래 가이드북 발간('10.1월), 금융회사 외국인 임원의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10.4월)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p><향후 추진계획></p> <p>□ 앞으로도 국내사의 해외진출과 외국사의 국내진입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 중소기업지원관련</p> <p>10-1) 향후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신·기보 적정 보증 규모 확보 등)의 마련과 함께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한시적 확대지원조치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10년 업무계획에 반영</p> <p>○ '10년중에도 위기이전인 '07~'08년 보다 확대 보증지원</p> <p>* 신·기보 보증공급(조원): ('07) 40.6 → ('08) 41.6 → ('09) 55.4 → ('10) 52.6</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도 병행 추진 ⇒ '10년 업무 계획에 반영</p> <p>○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제한적으로 보증 만기연장</p> <p>○ 비효율적 부문(한계기업 고액·장기보증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보증감축 및 구조조정 유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위기대응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 상황과 중기대출·보증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한계기업 등의 구조조정 촉진</p>
<p>10-2)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를 미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T/F 구성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4.21일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방안" 발표</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주요내용) ① 보증부분에 신용기산금리 부과 금지, ② 보증부 대출 금리 보증기관에 통보, ③ 보증부 대출 금리관련 은행 내부통제 강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방안 시행 및 사후 점검</p> <p>○ 또한 여신거래약정서 주요사항 기재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p>
10-3)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정부는 금융위·기재부·지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육성 방안 발표(3.18)</p> <p>* (주요내용) ①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범위 규정(지경부), ② 중견기업 조세 부담 완화(기재부), ③ 중견기업 금융 부담 완화(금융위)</p> <p>○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중견기업 자금 공급, 신기보 보증 종료 부담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 개정 즉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완료</p> <p>* 정책금융공사 : 자금공급 기준 마련 * 신·기보 : 보증 종료 부담 기준 마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 개정과 동시에 중견기업 지원 개시</p>
<p>11. 현행 대출금리의 산정기준인 "CD+가산금리" 체계에 대하여 CD 금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금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 및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은행연합회가 '10.2월부터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를 고시하고, 시중 은행이 이를 이용한 대출상품을 출시</p> <p>○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코픽스 연동 대출 도입으로 고가산금리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p> <p>※ CD연동 대출의 코픽스 전환 허용으로 기존 차주의 고가산금리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p> <p><input type="checkbox"/> 다만, 금리는 시장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나, 코픽스 도입 전후 신규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p> <p>* (1월) 5.88 (3월) 5.47 (5월) 4.78 (7월) 4.70</p>
<p>12.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 해소와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의 고금리 서민대출 문제 해소를 위해</p> <p>○ '10.4.7 저축은행의 보증부 서민대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p> <p>○ 이러한 보증을 통해 서민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유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화 방지를 위해 감독 및 검사 강화방안*을 포함한 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 의결('10.3.22 공포, '10.9.23 시행)</p> <p>*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Dynamic fit & proper test) 실시 등 소유·경영 지배구조 개선,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한도 설정 등 자산운용 규제 강화 등</p> <p>○ 아울러, '10.4.9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시행령 및 감독규정 반영완료 '10. 9.)</p> <p>- 저축은행의 PF 등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강화</p> <p>- 저축은행의 외형 확대에 걸맞는 건전성 기준 강화(예: BIS비율을 5%에서 7%로 단계적 상향조정 등)</p>
<p>13.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활용도 제고('09.11월)</p> <p>○ 구조조정기금 투입 비율을 상향(40% → 60%)하고 건조 중 선박*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운영방식 개선</p> <p>*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는 지원을 약정하고, 건조완료 후 매입대금 지급 및 인수</p> <p>○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 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0.8월까지 7척(건조중 선박 2척 포함)을 매입하였고, 이중 6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금 투입비율 상향조정(40%→60%)</p> <p><input type="checkbox"/> 한편, 금년 해운업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6월말)를 통해 1개사(C1)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p> <p>○ 워크아웃 추진 업체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10년 하반기에도 선박펀드 등을 통해 해운사 선박 매입을 지속 추진</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추진중인 워크아웃 등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채권단을 적극 독려</p>
<p>14.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서민금융활성화 대부업분과 TF 운영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논의('10.2~)</p> <p>○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발표('10.4)</p> <p>-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이원화하는 제도 개선 방향 포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TF 등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세부방안 마련</p>
<p>15.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면책기록의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09.10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추가 단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채무상환의지 약화 등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며</p> <p>○ 금융소비자 본인의 신용관리는 물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p> <p><input type="checkbox"/> 또한, 민간 배드뱅크의 과잉·불법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음</p>
<p>16. 금융소비자보호관련</p>	
<p>16-1)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정책 수립)하고, 금융민원의 원활한 해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KDI, '10.04.13.)</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KDI)을 토대로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가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7.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 지역 등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올해부터 실무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의 전문인력양성을 지원(전체 교육비의 35%)</p> <p><부산지역 교육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145명 교육에 총 3.7억원 지원 ○ 과정: 선박금융·국제금융(교육기관 : 금융연수원) 해양파생상품, 녹색산업(금융투자협회), 해상보험(보험연수원)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p>
<p>18. 금융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분야 자격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09.12월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고, '10.2.4일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협회 내에 전문인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 및 시험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중임 <p>* 금융투자분야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며, 자격제도는 자율규제사항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하고 운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참고 : 자격제도 개편안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을 20종 → 7종(시험은 11종 → 6종)으로 대폭 통폐합함으로써 자격제도를 단순명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였음 ○ 이번 개편안은 영업현실을 반영하되, 시험 내실화 및 보수교육 강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였음 <p>□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제도로써 업무감독과 교육은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부터 전문인력 양성확대를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1,000명으로 100%확대했으며 2007년에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였음 <p><향후 추진계획></p> <p>□ 금융투자분야 전문인력은 향후로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인력위원회와 전담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해나갈 계획임</p>
19. 펀드 관련	
19-1) 대리인에 의한 펀드 개설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처리결과 및 개선방안></p> <p>□ 대리인을 통한 펀드가입시 절차 관련 국내 실태 및 외국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음</p> <p>□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표준 투자권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준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판매절차 개선 TF 논의 결과)</p> <p>* (예시)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성향 파악을 허용하는 방안 등</p>
<p>19-2)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펀드 운용보수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 펀드 판매 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하였음('09.12.21 시행)</p> <p>○ 판매 보수 : (종전) 연 5.0% 이내 → (변경) 연 1.0% 이내</p> <p>* 체감식인 경우 1.5%까지 허용하되, 2년 이후부터 1.0%이내로 인하</p> <p>○ 판매 수수료 : (종전) 연 5.0% 이내 → (변경) 연 2.0% 이내</p> <p>□ 신설펀드에 준해서 기존펀드 판매보수도 자율적으로 인하('10.5.3부터 단계별 시행중)</p>
<p>19-3)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p><처리결과></p> <p>□ 인덱스펀드의 이해상충 발생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p> <p>○ 인덱스펀드의 운용사는 미리 발표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자산을 편입하는 소극적 운용을 담당하므로 이해상충 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한편, 계열사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원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으며,</p> <p>○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가 존재</p> <p><향후 추진계획></p> <p>□ 인덱스펀드 출현으로 인해 수익자와 계열그룹간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임</p>
<p>19-4) 펀드 판매회사가 높은 판매 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지속 되므로, 숨겨진 비용인 판매보수 폐지 및 판매 수수료와의 이중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p>	<p><처리결과></p> <p>□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을 설정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발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p> <p>○ 판매보수를 완전히 없앨 경우 판매 수수료가 올라가는 풍선효과 등을 감안하여 판매보수제 자체는 존치하되, 판매보수 상한을 설정(연간 1.5% 이내) 하였음</p> <p><향후 추진계획></p> <p>□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 인하에 따른 시장변화를 보아가며, 판매보수추가 인하 및 판매보수·수수료 일원화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9-5)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스터리쇼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09년중에 미스터리쇼핑을 2차례 실시한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3~ 4월) 20개 판매사, 200개 지점 ○ (제2차: 9~10월) 30개 판매사, 450개 지점 ※ '10년 미스터리쇼핑은 6월중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중임 <input type="checkbox"/> 한편, 실시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등을 개별금융회사에 서면통지함으로서 판매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사항 등의 이행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임 <input type="checkbox"/> 감독역량, 효과 극대화 요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 판매사 및 점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임
<p>20. 은행의 DCDS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p>	<p>< 처리결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현재 DCDS 업무가 은행의 부수업무로 영위가 가능한지, 보험업의 일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에 DCDS 취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조항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있어, 계속 논의중에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은행의 부수업무에 DCDS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박종희 의원안, 09.9.9)이 발의되었으나,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대안폐기되었음</p>
<p>21. 은행연합회를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단체로 은행법상 규정하되,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p>	<p>< 향후 추진계획 ></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시스템 측면에서 은행연합회에 대한 자율규제기능의 법적 부여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 규제기관을 통합·일원화하는 국제적 경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 <p><input type="checkbox"/> 또한,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법상 모든 금융업권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기관으로서의 객관성 및 대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p>* 신용정보협의회 구성 및 운용 개선, 자문위원회 설치 등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2. 금융보안체계 구축 관련</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 보안 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p>	<p><처리결과 및 개선방안></p> <p><input type="checkbox"/> 행안부 및 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11년 정보화 인력을 일부 확충(7급 1명) 하였고, 향후 사이버 테러의 증가 등 위기 대응 업무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화 인력 추가 확충 및 금융보안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p>
<p>23. 신용평가사의 자회사가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로 오인될 활동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p>	<p>< 처리결과 ></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신용정보법('09.10월 시행)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산정하는 행위”를 “신용조회업”에 명확히 포함하여 감독당국의 규율범위에 편입</p> <p>○ 신용조회업에 편입될 경우, 법적요건 구비 후 금융위 허가 취득, 업무에 대한 감독 등을 받음</p> <p>○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겸업 가능하며,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직 및 업무체계 구비 필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4.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협회의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p><input type="checkbox"/> 현재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업무를 할 수 있음</p> <p>○ 추가적인 정부업무 위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협회의 조직과 인원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음</p>
<p>25. 잦은 인사 관련</p> <p><input type="checkbox"/>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p>	<p><처리결과 및 개선방안></p> <p><input type="checkbox"/>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이직,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 등으로 불가피한 보직 이동이 있었으나</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정기 인사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금융위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p>

3. 가장 최근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

□ 별첨 자료 참고

- 별첨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심포지엄 개최 보도자료(2010.2.8)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보 도 자 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 2.8(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보험연구원

담당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담당자	손상호 박사 (3705-6358) 김필규 박사 (3771-0631) 오영수 박사 (3775-9012)
배 포 일	2010. 2. 5 (금)	배 포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합동

제목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심포지엄 개최

1. 개요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8(월)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후원: 금융위원회)을 개최

- ◇ 일시 : 2010. 2. 8(월), 14시~18시
- ◇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 내용

▶ 세션1. 우리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사회 : 윤석현(한림대), 발표 : 구본성(금융연구원)
토론 : 이인호(서울대), 장경덕(매일경제 논설위원),
추경호(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세션2. 국내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사회 : 선우석호(홍익대),
발표 : 이병운(금융연구원), 신보성(자본시장연구원),
오영수(보험연구원), 정찬우(금융연구원)
토론 : 박경서(고려대), 이봉주(경희대), 홍영만(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세션3. 국내 금융제도와 시장의 발전방향

사회 : 김대식(한양대), 발표 : 손상호(금융연구원), 김필규(자본시장연구원)
토론 : 채희율(경기대), 김영익(하나대투증권), 조인강(금융위 자본시장국장)

▶ 종합토론

사회 : 윤석현(한림대)
토론 : 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이장영(금감원 부원장),
선우석호(홍익대), 김대식(한양대), 노태식(은행연합회 부회장),
장건상(금융투자협회 부회장)

2. 논의의 배경 및 의의

① 위기 이후 금융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 등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 금융부문의 취약요인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할 시기

-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편논의의 국내수용 가능성 수준과 우리 금융 고유의 구조적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

② 다만 글로벌 차원의 금융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건전성 감독 규제 강화 문제와 드러난 문제를 정비하는 데에만 주력할 경우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육성할 기회를 놓칠 우려

- 중국 등 경쟁국들이 자국의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움직임이 분주해진 상황에서 우리도 금융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검토·논의를 본격화할 필요
- 특히 우리나라 금융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으로 금번 위기 과정에서 선진국 금융이 다소 위축되는 현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음

- ③ 아울러 G20 의장국으로서 위기 이후 전개될 금융환경 변화에 걸맞게 금융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고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제고하는 노력도 중요
- ④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지난 7월 금융위로부터 향후 10년간 우리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안 검토를 의뢰 받은 이후 3개 연구기관의 30여명의 연구진들이 7개월에 걸쳐 외부전문가와 수많은 토론 및 내부회의를 거쳐 금번 비전을 마련
- 첫째, 이번 작업은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의 논의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금융의 종합적인 비전을 마련
 - 둘째, 금융관련 3개 연구기관이 최초로 공동용역 연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각 권역별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
 - 셋째, 기존의 분석틀에서 벗어나 금융수요자 관점에서 우리 금융시장의 이슈 및 당면과제를 권역별, 기능별로 즉 도매금융(whole-sale finance) 및 소매금융시장(retail finance)으로 재분류하여 조금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였음
- ⑤ 금번 작업은 우리나라 금융을 대표하는 3개 연구기관 입장에서 우리 금융의 주요 이슈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 이번 작업을 바탕으로 정책당국은 광범위한 여론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 등을 거쳐 과제별로 차근차근 정책화를 추진하기를 기대

- 특히 금번 작업을 토대로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학계·언론 등 각계 각층의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금융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과제와 세부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

※ 별첨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주요 내용

<별첨>

2010.2.8(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주요 내용

2010. 2. 8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목 차

I 장.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	1
II 장. 우리나라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4
1. 금융의 역할 및 평가	4
2.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	9
3. 우리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14
III 장. 정책과제	21
[과제1] 금융시스템 안정	21
[과제2]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31
[과제3] 금융의 글로벌화	37
[과제4]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41
[과제5] 금융시장 효율화	57

I 장.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

1. 금융환경의 변화와 전망

1. 금변 금융위기로 글로벌 Paradigm이 근본적으로 변화

- 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간 금융감독 및 운용체계의 철학적 근간을 이루었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의 한계점이 노정되면서 경제 및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 * 자유주의적 시장원리 강조 → 시장실패 보완을 위한 정부역할 강조
- * 규제 완화 일변도 → 시스템리스크·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 * 대형화·겸업화·글로벌화 중시 → 안정적 성장 중시

- ② 특히, 글로벌 금융규제 체계도 전면적인 재정비가 요구

- 기본적으로 건전성 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감독 도입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감독 강화방안에 대한 국제 논의가 진행중

- 특히, 그간 기업자율적 경영사항으로 인식되던 금융회사의 보상 체계·지배구조도 금융 공공성 차원에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

- 최근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이 금융위기 책임론으로 이어져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기 책임부담금 징수 논의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를 계기로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기능 규제와 관련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또한 금변 위기를 계기로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책임강화, 독립 전담 기구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규제·감독의 주요 과제로 부각

2.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

- 이번 위기 과정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회복이 빠른 신흥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부상
- 또한 위기를 계기로 시스템 리스크의 확대 등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향후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겸업화 추세는 약화될 전망
 - 거대 다국적 금융회사(too-big-to-fail cross border institutions)에 대한 규제강화 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의제로 부각

3. 금융산업의 수익성·성장세 둔화 및 구조적 변화 진행

- ① 은행 : 전통적 상업은행 기능 강화(투자은행 기능 축소), 리스크 관리 및 예수금 확대 노력 강화
- ② 금융투자업 : 대형화 추세 둔화 및 전문화된 소형투자은행 활성화, 시장 및 영향력 축소, 리스크관리 강화 등
 - * 기업금융 중심의 전통적인 투자은행 시장은 지속 성장 전망
- ③ 보험 : 전통적 보험 영역에서의 다양한 상품개발 노력, 자산운용다각화 추진 등
 - * 주요국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이므로 과거(80~90년대)와 같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④ 펀드 : 헤지펀드의 보수적 운영(뮤추얼펀드와 유사한 전략 추구), 사모펀드 규제 강화 및 안정적 운영 등

4. 글로벌 여건 변화와 함께 우리의 특수한 금융 흐름도 존재

- ① 새로운 금융수요 등장 : 가계·기업의 금융수요 다양화, 고령화 및 연금의 성장, 녹색금융 등
- ② 글로벌화 진전 : 글로벌화 대상국가의 다변화(선진국에서 동아시아 국가로 확대), 국내자본의 해외이동 증가 등
- ③ 대형화·겸업화 진전 :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므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진전이 불가피
- ④ 규제완화 : 선진국에 비해 발달이 늦은 분야는 추가적인 규제정비를 통해 선진금융과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

2. 향후 과제

- ☐ 우선 위기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시스템 불안정 예방 장치를 마련할 필요
- ☐ 다만 드러난 문제점 해결에만 주력하는 경우 실물 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함께 위기이후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 과제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논의할 필요
- ☐ 특히 글로벌 금융규제 및 세계 금융시장의 재편 모습을 감안한 금융산업의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

II 장. 우리나라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1. 금융의 역할 및 평가

가. 비전 수립 관련 고려사항

①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vs. 금융의 독자산업화

- ☐ 기본적으로 양립 가능한 목표이나 상충가능성도 존재
- ☐ 실물지원 기능(자금중개·지급결제·위험관리 등)과 독자산업의 기능(고부가가치·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조화롭게 달성
 - * 개방된 시장에서 선진금융회사와의 경쟁·생존을 위해서도 필요

② 겸업주의 vs. 전업주의

- ☐ 그간 국내 금융회사의 겸업화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전개
 - ※ 자회사 방식 : 업종간 상호진출 원칙적 허용
 - 업무제휴·위탁 방식 : 본질업무 위탁 금지
 - 내부겸영방식 : 은행-증권-보험간 본질업무 겸영 제한
- ☐ 금융업종 간 겸업화가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 업종간 겸업화는 현행 수준을 유지
 - 향후 겸업화는 리스크관리를 감안하여 지주회사방식으로 유도(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겸영은 현행 수준을 유지)
 - ※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60%) 규제는 현행 유지

③

대형화 여부

□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규제 논의가 진행 중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이후 FSB 등을 중심으로 대형금융 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와 함께 투자은행 업무와 상업은행 업무 간 차단벽 등의 규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등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아직 미국 정부의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데다 세부 방안과 관련 각국별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미국 개혁방안대로 국제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 미국 방안대로 은행의 고위험투자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더라도 우리의 경우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대형화 등 규모제한 문제의 경우 유럽 등 금융 선진국의 경우 상당수가 국가 규모에 비해 금융회사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정책적 견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형화'의 규모자체에 대한 규제 논의 전개는 쉽지 않을 전망

○ 특히, 선진국의 초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아직 규모 및 레버리지 비율 면에서 현저히 작은 신흥국 금융회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

⇒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글로벌 추세와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대형화' 문제를 접근

- 국내 금융회사와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격차를 감안할 때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추세는 불가피할 전망
- 다만,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높은 레버리지 또는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은 억제하고, 특히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고위험 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논의과정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

④ 금융규제의 완화 vs. 규제강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기조는 원칙적으로 유지

- 특히, 외국에 없거나 글로벌 수준에 비해 과도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

※ 특히,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만큼 동 시장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

□ 다만, 금융시스템 리스크 방지 차원의 건전성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글로벌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강화

- 실제로 규제를 제도화하고 실행하는 문제는 주요 금융 선진국보다 한발 앞서나가기 보다, 이들 국가의 제도화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추진할 필요

1. 제언 배경

- 미국에서는 금번 금융위기가 대형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와 외형확장 등 도덕적 해이*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인식 하에 이를 억제하는 차원의 금융개혁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형 금융회사가 부실화되어 파산될 경우 경제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부실화되더라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TBTF))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 특히, 위기이후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대규모 공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금융회사들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반발하면서 아직도 예금보험과 같은 공적 안전장치를 바탕으로 과도한 위험에 투자하는 과거의 잘못된 금융관행(old practices)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2. 주요내용

- 최근 오바마 美 대통령이 제안한 금융개혁방안은 크게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와 규모에 대한 규제로 구성되어 있음

- 우선 업무범위 규제(Limit the Scope)와 관련하여서는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헤지펀드, PEF 및 고객과 무관한 自社 이익을 위한 자기자본투자(proprietary trading operation) 부문을 소유·투자 또는 지원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

-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규모에 대한 규제(Limit the Size)와 관련하여서는

- 대규모 금융회사의 인수·합병(consolidation)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

3. 시사점

□ 현재 국제적으로 미국 규제 강화방안이 나온 배경과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임에 따라 FSB 등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세부방안과 관련, 각 국별로 다양한 입장이 있음에 따라 국제적 기준 마련에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 우선 영업범위(Scope)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은행권의 고위험 투자행위 자체는 미미한 수준임

○ 헤지펀드의 경우 설립실적이 없고, PEF의 경우도 '04년 제도 도입 12건 7,450억원으로 총자산(1,899조원)의 0.04% 수준에 불과

○ 또한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60%), 자회사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5%) 등 직접적인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은행권의 트레이딩 자산비중은 총자산의 5.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총자산 대비 트레이딩자산 비중 : 국내은행 5.2%, 씨티 19.5%, JP모건체이스 23.4%

⇒ 국내은행권의 경우 미국과 달리 전업주의 체제하에 예대업무 위주의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미국 방안대로 국제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영업범위 규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다음으로 규모(Size) 제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각국별로 시장집중도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며 우리의 경우 규모 면에서도 세계 100대 은행은 3개 밖에 없는 수준**

* 은행권 시장 집중도(CR3, World Bank('07)) : 한국(53%), 미국(34%), 일본(46%), 영국(60%), 독일(71%), 프랑스(58%), 싱가포르(94%)

** 세계 100위 은행권 내 국내은행은 3개에 불과, 1위인 국민은행도 74위 수준

⇒ 각국별로 처한 현실에 따라 입장차이가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규모제한 규제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나.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 (금융의 4대 기능 및 평가)

① 금융의 실물부문 지원 기능 측면

① 금융의 근본적 역할인 자금중개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취약한 실정

○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 취약

* GDP대비 직접금융(07년, %) : 日2.87, 英3.63, 스페인2.41, 이탈리아2.43, 韓1.56

- 특히, 고수익 채권시장 위축 및 유가증권시장의 신규 상장 정체 등으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효율적 자금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자본시장 미발달로 시장 규율을 통한 경영투명성 및 주주책임을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역시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취약한 상태이며 중기대출 등은 정부 보증 등에 과다하게 의존함에 따라 은행을 통한 선별 및 리스크 관리 기능도 취약

* GDP 대비 간접금융의 비중은 0.9로서 여타 선진국의 50~80% 수준이며, 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중은 2007년말 30개 OECD 국가중 16위

② 이러한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한 데에는 금융회사의 심사역량 부족 및 신용정보시스템 미비 등으로 금융을 통한 위험분산 및 관리기능이 미흡한 것도 일요인

③ 국내의 지급결제 시스템도 아직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데다 규율체계도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 규율이 없는 상태

② 금융의 新성장동력 기능 측면

① 국내금융회사의 규모, 수익구조, 세계화 정도 및 금융전문인력 등 측면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아직까지 취약

○ 우선 규모 측면에서 자산·자본 규모 등 국내 금융회사의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아직까지 작은 수준

* 세계 1000대은행(08년, 개) : 미국 159, EU 258, 일본 97, 중국 52, 인도 32, 대만 28, 한국 10

○ 수익구조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취약

- 은행의 경우 순이자마진 하락, 비이자수익원 미흡 등 이익 창출 능력 지속 저하

* 명목 순이자마진 : 2005년 2.81% → 2009.6월말 1.85%

-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 수수료에 과다하게 의존하며 투자은행업 및 자산관리서비스 부문 등 고부가가치 수익원은 부족

* 운영업수익 중 위탁매매수수료가 약 60%, 자기매매수익이 20%를 차지

- 보험사의 경우 다양한 위험 보장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수익원 다각화가 미흡

○ 국내은행의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TNI지수(Trans National Index)는 4.3%로서 주요 선진국의 1/10 정도의 수준으로 글로벌화 미흡

* TNI 지수(%) : 미국 24.7, 영국 40.3, 프랑스 37.5, 독일 42.7

$(\text{TNI지수} = (\text{해외자산}/\text{총자산}) + (\text{해외수익}/\text{총수익}) + (\text{해외인력}/\text{총인력}) \times 100 \div 3)$

○ 금융인력은 아시아 경쟁국인 홍콩·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금융전문인력 보다 보조 인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질적으로 미흡한 수준

* 금융인력 중 비중(보조인력/전문가+관리자, %) : 영국 71.2/28.4, 홍콩 37.0/63.0, 싱가포르 30.8/69.1, 한국 86.7/13.3

- ② 특히 국내시장에서 과당경쟁 및 쏠림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한편, 높은 부가가치 창출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은 미미

③ 금융소비자 수요충족 측면

①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 KIKO 사태, 비전문적 판매채널 등에 따른 펀드 및 보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② 아울러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이 미흡

- 상품설계 역량 부족 및 중장기 위험헷지 시장 미발달 등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공급 기능이 미흡

③ 저신용·저소득층 등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도 낮은 상태

- 그간 서민금융에 대한 상대적 관심 미흡 등으로 제도권 서민금융공급이 위축
-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소외자가 다수 발생하고 신용불량자 양산 및 가계파산 등으로 이어져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심화
- 특히, 서민금융공급 부족 → 사금융이용 증가 → 신용불량자 편입 → 경제적 자립기반 붕괴로 이어져 재환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초래

④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

-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금융감독 강화 노력 등으로 금번 글로벌 위기과정에서 우리 금융의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 다만,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금번위기 과정에서 외화 및 원화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
-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상흑자 및 외환보유고 확충, 중장기 재원 조달비율 개선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통화 미사용, 높은 대외의존도 등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며 금번 위기시 외환시장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
 - 자산운용사의 과다 환헷지 관행, 제정거래유인에 따른 외은지점 단기 차입확대 등 실물경제흐름과 무관한 단기외채 급증 등 차입구조의 취약성이 시장불안심리를 확대
- 또한 자산확대 경쟁 등에 따른 국내은행의 높은 예대율 등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확대되며 리만사태 이후 은행채 스프레드 급등·차환율 하락 등 은행권 원화유동성이 악화
 - 이와 함께 은행권의 자금확보 노력으로 자금이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무담보 콜시장 위주의 단기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며 은행·회사채·CP 등의 투매 현상 등으로 제 2금융권의 원화 유동성 상황도 악화
- 금융·통화당국의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 대책으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회복하였으나 우리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 제기

나. 한국금융의 SWOT 분석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준 높은 인력 ▪ 소매금융 역량 및 경쟁력 ▪ IT기술 경쟁력 및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금융IT 인프라 수출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전문인력의 부족 ▪ 간접금융 중심의 자금중개기능 ▪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유사한 수익구조로 인한 과당경쟁 피해 ▪ 금융시장의 인프라 취약 ▪ 소규모 개방금융의 구조적 취약성 ▪ 국제화 추진 미흡 및 글로벌 네트워크 부재 ▪ 조직문화 및 관행 등 소프트웨어의 후진성 ▪ 조직 저변에 효율성 중심의 사고방식 결여 ▪ 금융상품 설계 능력 취약 및 상품의 다양성 부족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율과 자체고용유발계수 ▪ 노후대비 금융수요의 확대 추세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금융수요 급성장 가능성 ▪ 위기이후 선진금융강국 위축 ▪ 수출경제에 보완적인 금융의 역할 지속 필요 ▪ 금융중심지 추진 등 글로벌화를 통한 발전 가능성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동북아 금융중심지 역할 ▪ 외환시장을 통한 국제적 금융위기의 파급 가능성 상존

2. 우리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

◇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우리 금융의 취약요인을 감안, 금융선진화를 위한 좌표를 재설정할 필요

가. 금융강국의 발전 및 시사점

- 금융강국들의 경제구조, 금융하부구조, 금융경쟁력, 금융위기 경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성장모델을 모색
- 글로벌 주도형(美, 英), 지역주도형(호주, 싱가포르), offshore형 (스위스), 위기극복형(북구3국), 위기취약형(아일랜드)

나. 금융비전과 정책과제

① (비전) “아시아 금융리더로 도약”(지역주도형)

- 단기 : 5년후 아시아 지역 regional player 출현 목표
- 중장기 : 10년후 글로벌 player 출현: ‘금융글로벌화’

<비전달성 목표(예시)>

목표 지표	현재	2015년	2020년
• 국제기관의 경쟁력 지표 ¹⁾	30위권	20위권	10위권 이내
• 금융 및 관련서비스업 비중 ²⁾	21%	23%	25%
• 글로벌자산시장 점유율 ³⁾	1.2%	2%이상	3%이상
• 아시아 top10 은행의 수	0	1개이상	2-3개이상
• TNI지수	4.3%	8%	15%

주: 1) IMD, WEF 금융부문 국제경쟁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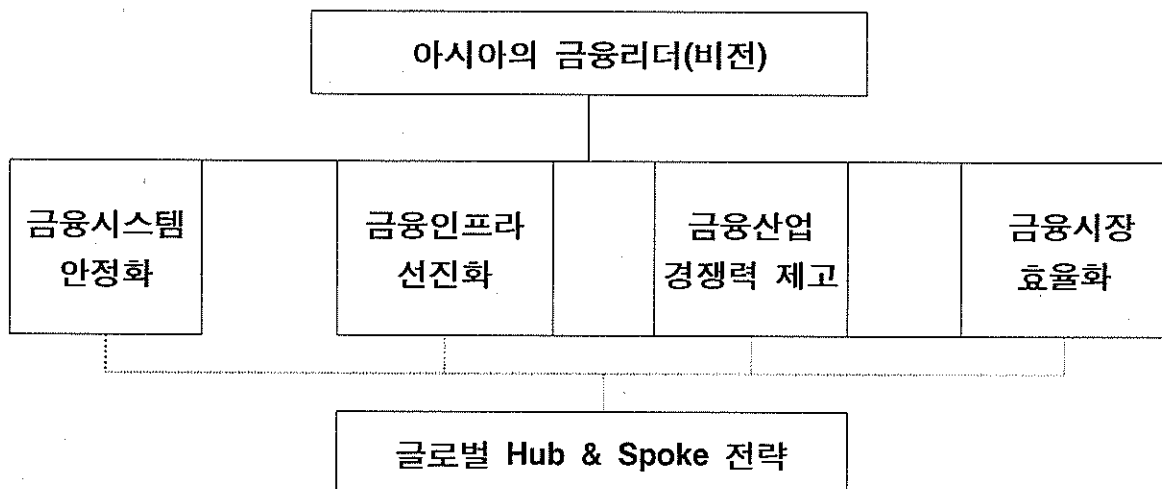
2) 2007년 기준 OECD자료

3) 펀드 순자산(2008),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②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 ① (금융시스템 안정) 구조적 취약요인 개선 및 시스템 리스크 감독 강화
- ②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산업과 시장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인력·지원체계 개선
- ③ (글로벌화 전략 추진) 금융허브 전략 + 적극적 해외진출
- ④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및 대형화
- ⑤ (금융시장의 효율화)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

<금융비전 및 정책목표>



1. 성장 모델

□ 금융선진국의 성장모델은 크게 글로벌주도형, 지역주도형, 단독국가형, 위기극복형, 위기취약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① 글로벌주도형은 G5 이상의 경제권에 속하는 국가(영국, 미국, 독일, 홍콩 등 주요 통화권 경제)

* 홍콩의 경우 영미와 중국경제에 의한 글로벌시장으로 평가될 수 있음.

② 지역주도형은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토대로 인접시장 또는 글로벌시장과의 연계성을 확대하는 형태(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 호주의 경우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뉴질랜드 경제권을 편입하고 아시아시장으로 기반 확대

* 싱가포르는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홍콩의 제도약으로 역할이 축소 가능성

* 캐나다의 경우 미국 경제와의 인접성과 대내시장을 토대로 금융부문을 성장시켜 왔음

③ 단독국가형(또는 offshore형)은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형 금융산업을 유치한 형태(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④ 위기극복형은 금융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제고한 사례(북구3국, 칠레 및 브라질 등 남미 일부 국가)

* 위기극복형 금융경제는 주로 부동산위기 또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 개혁과 제도개선, 외환정책의 개편을 통해 금융안정성을 회복한 형태

*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산의 대내외 확충을 통해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정책대응을 모색한 측면

⑤ 위기취약형은 금융서비스의 확대에 의한 경제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취약성이 노정된 유형(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2. 시사점

- 금융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거시경제 구조, 국내 금융경쟁력의 가능성과 한계, 금융위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장모델을 모색할 필요
 - 국내 거시경제 구조는 글로벌 개방경제의 성장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금융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
 - 국내 금융경쟁력은 글로벌 주도형 금융강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시장에서의 리더십과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장모델을 추구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취약성과 대응력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금융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위기극복형 금융강국의 장점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
- 이에 따라 향후 국내금융은 실물부문을 기반으로 관련 해외지역에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지역형 글로벌화를 중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강국들과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실물부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형 글로벌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할 필요
 - 특히,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수출형 전략(naked approach) 보다도 국내 실물부문의 금융수요를 글로벌시장을 통해 충족하는 연계형(linked approach) 구조를 고려
 - *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의 경우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라틴 지역에 국한된 글로벌화를 추구하여 글로벌 top 10으로 부상

다.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본 비전의 기능별 체계

① 가계금융 이슈 (retail finance)

① 가계대출 적정관리

-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대출이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정관리 강화할 필요
- ⇒
 - 선제적 금융감독 및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
 - 저소득층 채무상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지속
 - 장기·분할·고정금리 확대(MBS 활성화, DTI 규제)

② 서민금융체계 개선

- 제도권 서민금융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서민층의 금융소외 심화 및 신용불량자 증가·가계파산 증가 등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심화
- ⇒
 - 제도권 서민금융공급 기능을 강화
 - 은행 : 자회사방식으로 저신용층 대상 소비자금융 진출
 - 저축은행 : 서민금융특화, 부실화 억제를 위한 감독 강화
 - 상호금융 : 연합회·중앙회 중심 발전전략, 조합간 합병
 - 여전사 : 소비자금융업 추가
 - 시장원리에 따른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신용층 문제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해소
 - 미소금융 등 대안금융 활성화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및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 개선

③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그간 우리는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도·감독·관행·인식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홀

- ⇒ ▪ 국제기준에 맞는 사전적·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마련
- 민간자율기관(예:투자자보호재단 등)의 자율규제기능 대폭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 확충
- 금융교육 강화

④ 금융서비스 다양화

-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이 미흡
- ⇒ ▪ 신상품 개발 : 고령화 대비 신상품 개발 등
- 은행·보험사의 고객군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 펀드시장 경쟁구조 정착(펀드 판매채널 확대/자산운용사 신규진입 확대)

⑤ 퇴직연금 시장

-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보수적 자산운용 규제 등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
- ⇒ ▪ 퇴직연금시장 확대 유도(퇴직금→퇴직연금제도 전환 유도)
-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 확정기여형의 주식투자제한(40%) 완화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대한 운용규제 지속 완화

② 기업금융 이슈 (whole-sale finance)

① 금융회사 및 대기업

- 무담보 콜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외부충격 발생시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 불안정성이 심화
- ⇒ ▪ RP 시장 활성화, 단기금융시장 지표 금리 개발, CP 수요를 단기사채수요로 전환 유도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

○ 채권시장을 통한 장기안정적 기업자금 지원기능이 미흡

⇒ ▪ 채권 수요확대 및 발행시장 활성화

▪ 효율적인 채권유통시스템 구축

② 중소기업

○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비효율성 및 민간 영역과의 마찰 문제 등 개선과제가 대두

○ 특히 위기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보증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

⇒ ▪ 정책금융 기관간 협조·연계강화 등을 통한 정책금융 역할·지원방식 등 효율화

▪ 한시적·예외적 보증확대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정체, 고수익회사채 시장 미발달 등으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중개 기능 미확립

⇒ ▪ 우량기업상장 확대/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 KOSDAQ의 기능 정상화

③ 도매금융 능력 제고방안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은행업 기능이 취약함에 따라 자금중개 역할 미흡

⇒ ▪ 자본확충 및 전문화·특화를 통해 모험투자 자본 원활한 공급 및 다양한 자금 조달요구를 충족

④ 기업구조조정

○ 금번 위기를 거치면서 사전적·예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자보상비율이 낮은 기업 등)이 남아 있고 구조조정 추진방식도 다기화되어 있는 상황

⇒ ▪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체제 마련

▪ 체계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III장. 정책과제

[과제 1] 금융시스템 안정

1-1 건전성 규제 및 감독

가. 현황

- ☐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건전성 규제·감독의 기본틀 재편 논의에 G-20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 금융부문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향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

나. 정책과제

<국제적 논의동향>

- ① 자본건전성 강화 : Tier1 자본과 Tier2 자본의 속성을 차별화하고 규제자본비율을 다변화하여 보통주 자본비율 중심으로 전환
- ② 유동성 규제 및 감독 강화 : 단기지표로 30일간 유동성커버리지 비율과 장기지표로 순안정자본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도입
- ③ 레버리지 규제 및 감독 강화 : 자본은 Tier1 자본 또는 보통주 자본 등 협의의 자본개념을 사용하고 자산은 가급적 포괄적으로 규정
- ④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식별방식, 규제방식 등에 대해 초기단계 논의 진행중

<단기과제>1)

- ☐ 향후 BCBS, FSB 등의 논의, 각국의 영향분석(QIS)를 통해 국제적 최종합의안 도출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영향분석, FSB논의 참여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중
- ☐ 우리의 경우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할 때 국제적 건전성규제 강화를 상대적으로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영향분석후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회사들에게 적절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없이 시행할 필요 (단기)

1) 단기과제는 금년 또는 내년 중 검토·시행될 필요가 있는 단기과제를 지칭

가. 현황

- ☐ 금번 위기과정에서 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 증폭 및 대외신인도 하락 등 외환부문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
 -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국제통화 미사용 등 근본적 취약요인이 있기는 하나 실물흐름에 벗어난 과도한 단기차입금 증가도 금번 외환유동성 부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지난 10년간 경상수지 흑자국임에도 단기외채가 05년이후 급증한 데는 선박선수금 등 실물요인도 있으나, 급격한 외화자금 유입(주식·채권) 및 펀드 해외투자 급증(환헤지수요 급증) 등 비실물적 요인도 작용
-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09.11월)하고 금년부터 시행중

나. 정책과제

① 외환부문 건전성 감독 강화 (단기)

- FSB 등 국제 논의동향을 보아가며 국내은행외의 여타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 및 외화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
- 외화차입금 운용 등 외화자금시장 모니터링 강화
- 외화유동성 비율규제를 말잔기준 → 평잔기준으로 변경(중장기)²⁾
- 현·선물, 역외선도거래(NDF), 스왑시장, 주식·채권시장간 연계감독 강화 (중장기)

② 과도한 선물환 헤지 감축노력 강화 (중장기)

- ※ 수출업체의 환헤지 다양화 유도 및 수출·수입기업간 네팅방식 활용 등

③ 스왑시장의 불균형 해소 등 (중장기)

- ※ 통화스왑시장의 재정거래유인 축소방안 강구, 원화국제화노력 강화 등

2) 중장기과제는 정책화하기까지 1~2년 이상의 연구 논의 등이 필요한 과제

(1) 가계부채

가. 현황

□ 09.9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 675.6조 + 판매신용 37.2조원)은 712.8조원으로 GDP대비 69.6%, 가처분 소득대비 12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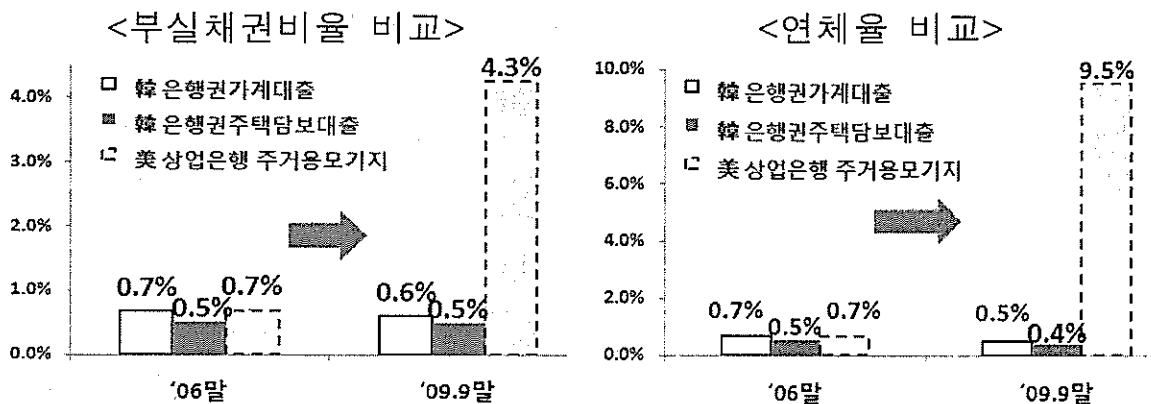
- 지난 98년 이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비해 빠르게 증가

(98~08년중)	가계대출	(은행)	(제2금융권)	경상GDP
* 연평균 증가율	14.6%	22.1%	8.7%	7.8%
* 98년말 대비	3.9배	7.3배	2.3배	2.1배

- * 지난 01년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244조원)의 약 71.6%가 주택담보대출 증가(174.7조원)에 기인

□ 건전성 등 질적 측면에서 미·영 등 주요국가에 비해 양호함에 따라 전면적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태

- 부실채권비율 및 연체율이 미국 등에 비해 양호



- 최근 수년간 증가한 가계대출도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우량신용등급 및 고소득층 중심으로 증가

* 우량등급(1~4등급) 대출 비중(은행+비은행, %): (05년) 55, (08년) 61, (09.7월) 66
(미국의 경우 비우량 차입자 대상의 서브프라임대출 비중 확대(01년 86%→06년 20%))

* 08.9월이후 가계대출 증가분 중 66.2%는 소득 5분위(상위 20%)에서 발생

- 담보인정비율(LTV, 02년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05년도입) 등 규제 시행으로 주요국에 비해 LTV비율도 낮은 상태
* 주요국 LTV 비율(09.7말) : 韓 47.1%, 美 74.9%, 英 85.2%(07.12말)
- 금융회사 수익성 개선 및 자본확충노력 등으로 충격흡수능력도 대체로 양호하고 가계금융자산중 유동성이 높은 현금·예금비중이 높아 유사시 대응능력도 양호(韓 44.3%, 美 16.8%, 英 26.3%)
- 다만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일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중 변동금리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은 데다 일시상환방식이 많은 점은 개선요인으로 지적

나. 정책과제

①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노력 강화 (단기)

- 강화된 DTI·LTV규제를 유지하고 소득증가 대비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감독 강화
- 필요시 가계대출규모를 금융안정기의 DTI 추세수준 등을 감안 상한선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중장기)
- 저소득층 등의 원리금 상환능력 제고를 지원

※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억제, 만기연장,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

②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유도 (중장기)

- 장기·고정금리 모기지대출에 대한 MBS발행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강화
- *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대 → 모기지 채권 매입 확대 → MBS 발행 활성화

(2) 기업구조조정

가. 현황

- ☐ 금번 기업구조조정은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의 사전적·예방적 차원에서 추진
 - 특히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제도 등)을 추진
- ☐ 다만 아직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자보상비율이 높은 기업 등)이 남아 있고 구조조정 추진방식도 다기화되어 체계화 필요

나. 정책과제

①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체제 강화 (단기)

- 채권금융회사 중심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재정비
 - ※ 기촉법 시한(2010년말 종료) 연장,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
- 은행지점장 성과평가(KPI)시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개선
 - ※ 워크아웃이나 퇴출등급 부여시 해당 지점장의 KPI(Key Performance Index)가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개선

② 체계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중장기)

- 기촉법, 대주단협약 등 다양한 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촉법 체계로 정비 방안 강구

가. 현황

- ☐ 예금보호대상·방식의 획일화 등 예금보험제도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채 도입 당시의 기본틀이 그대로 유지
- ☐ 특히 일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저축은행계정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예방 기능 보다는 예금보험금 지급 및 사후적 부실처리에 중점

나. 정책과제

① 예금보호대상 및 운영방식 개편 (단기)

- 예금보험대상을 열거주의 → 포괄주의로 전환
-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일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 예금보험공사의 사전감시 강화, 보험료 인상 등해 도덕적 해이 방지

②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부실방지 기능 강화 (단기)

- 부실금융회사 정리절차에 조기 참여(적기시정조치 부과시부터)
-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공동검사 등 모니터링 강화

③ 기타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조기 도입(2014년 시행 예정) 등 (중장기)

- 기금운용방법 다각화 등 기금의 안정성·수익성 제고

④ 금융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예금보호방식 강구 등 (중장기)

-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감안, 보호방법 차별화 검토
 - * 보험회사 파산시 예금보험금으로는 충분한 계약자 보호가 불가
-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검토
- 금융회사의 예금보험 가입 승인 및 적용 종료제도 도입 검토

가. 현황

- ① 금번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시스템리스크를 조기에 파악·대처하는 감독장치가 미흡
- ② 감독의 사각지대 및 권역별 규제차익 발생, 리스크의 여타부문 확산시 효과적 대처 미흡 등 권역별 감독체제의 부작용 노정
 - * 개별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동 행위가 집단적으로 나타날 경우(예: 쏠림현상 등) 금융시장 불안 초래
- ③ 기존 감독기능은 수요자 위주의 시각이 부족하고 감독역량이나 제도도 아직 선진수준에 비해 미흡

나. 정책방향

① 체계적 거시건전성 감독시스템 마련 (단기)

- 시스템리스크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등 모니터링 체제 구축
-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비상조치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등
- 쏠림현상 등 시스템리스크에 대비한 선제적 감독장치 마련
 - ※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금융회사간 '공식약정'을 체결하되 필요시 감독당국이 직접 '시정조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

② 권역별 감독체제 → 기능별 감독체제로 전환 (중장기)

- 우선 거시건전성 감독, 복합금융그룹 감독, 소비자보호 등의 영역에서부터 기능별 감독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점차 확대
 - 특히 외국의 통합감독기구(예: 英 FSA) 사례를 감안, 리스크별·수요자중심(예: 도매금융, 소매금융) 감독·검사체계 구축
- 증권시장 감시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증권시장 감시기능을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운영 검토(예: 日 금융청의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등)

③ 권역별 금융업법 체제 →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 (중장기)

- 우선 개별 금융업법과 별개로 기능별 입법을 추진(예: 영국, 호주 등)하되 추후 각 금융업법을 기능별 법체제로 점차 전환

※ (예시) 인·허가부문(설립·주요주주·임원요건 등), 금융상품 판매 부문,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부문, 제재부문 등

④ 감독 패러다임 개선과 역량 강화 (중장기)

- 금융감독·검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

※ (예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공표

- 리스크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한 감독역량 강화

- 직무교육 강화 및 외부 리스크전문가 채용 확대

- 종합검사 → 취약부문 중점검사, 현장검사 → 서면검사, 위규적 발중심 → 리스크 중심의 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 특히 검사인력의 전사적 활용체계(공동 풀제)를 확립하고 각 금융회사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필요 부문에, 적기에, 필요인력만을 투입하는 효율적 검사체제 구축

- 감독·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제도 개선

- 개인 : 신분적 제재 →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

※ 특히 불완전 판매, 자산운용한도 의무 위반, 부실경영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과징금체제로 변경

-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자율규제 강화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⑤ 기능별 감독·규율(법률)체제, 리스크중심·수요자 친화적 감독·검사체제 확립 (중장기)

가. 현황

- ☐ 개별법으로 지급결제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통일적·체계적 규율 측면에서 미흡(특히 일부사항은 법률이 아닌 내부규정으로 규율)

※ BIS 핵심원칙에 의할 경우 지급결제의 정의, 참가자 적격성기준, 참가 규정·절차, 시스템리스크 방지, 보안 등의 체계적 규율이 미흡

나. 정책과제

① BIS 핵심원칙을 반영한 체계적 규제·감독시스템 확립 (단기)

- 지급결제 정의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급결제 감시·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 공통의 지급결제 준수기준 마련, 지급결제 운영기관의 세부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 심사 및 필요시 변경 명령 등 지급결제관련 정책 및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통일된 지급결제 참가자 적격성기준을 마련하고 지급결제 관련기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

※ 참가자 및 지급수단 적격성은 국제결제은행(BIS) 핵심원칙에 기초

※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 등 지급결제 관련 기본 인프라를 운영하고 공인인증 등 업무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규율장치는 사실상 전무 → 법적 기구화 추진

-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지급결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관간 효율적 역할체제를 정립

② 글로벌 스탠다드(예: BIS 핵심원칙 등)에 맞는 지급결제 관련 감독시스템 확립 (단기)

③ 국제기구(CPSS, Committee on Payment & Settlement System) 가입추진 (중기)

가. 현황

-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효율성 및 민간영역과의 마찰 문제 등 개선과제가 대두
- 특히 위기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보증을 점차 정상화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

나. 정책과제

① 산은 민영화 추진에 따른 정책금융공백 최소화 및 보증확대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단기)

- 시장마찰 문제 해소를 위한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회사 개편 등에 따른 정책금융공사 기능 정립 및 효율적 자금지원체제 마련
- 벤처투자 유도를 위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
- 한시적·예외적 보증확대조치의 점진적 정상화

② 정책금융의 역할 및 지원방식 등의 효율화 (중장기)

-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리스크 등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예: 미래성장산업 또는 발전 초기단계 산업인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
- 정책금융기관간 또는 민간금융회사와의 업무중복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민간금융회사를 활용한 지원방식(예: 전대방식) 추진
- 투자(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보증 지원 확대
- 보증리스크 관리시스템 개선, 신용보증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처리방안(예: 전담기구 설치 또는 아웃소싱 등) 강구

③ 정책금융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중장기)

- ※ 정책금융공사, 신·기보, 기업은행 뿐 아니라 각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금융기관간 중복지원 방지 및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연계강화방안 검토

[과제 2]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2-1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가. 현황

- ☐ 글로벌차원에서 금변위기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개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중

* OECD 권고안('09.6월), 英 Walker review ('09.11) 등에서는 이사회 경영진 견제 역할 및 책임강화 등을 제시

* FSB는 단기성과위주의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건전 보상체계 원칙'을 마련하여 권고

- ☐ 우리도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과 중장기리스크를 감안한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이미 마련·시행중

나. 정책과제

① 증권·보험 등 비은행권 사외이사제 개선방안 강구 (중장기)

② 임원,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 강화 (중장기)

- 임원 등의 적격성 요건에 대한 주기적 심사제도 강화

- 은행법상의 적격성요건을 재점검하여 객관성을 강화

- 저축은행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되 업권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

③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개선 (중장기)

-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감사와의 역할 구분 명확화

- 리스크관리조직의 독립성 및 전담임원의 역할·지위 강화

- 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④ 연기금·공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및 소유구조와 연계한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색(중장기)

가. 현황

- ☐ 위기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강화되는 추세
 - *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청(CFPA) 설립방안이 논의중
- ☐ 그간 우리는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도·감독·관행·인식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홀

나. 정책방향

① 국제기준에 맞는 사전적·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마련 (단기)

- 공시, 약관, 광고,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전적 보호제도 재정비
- 특히 상품설명 의무, 판매채널 자격요건·보수·교육 및 불완전판매 책임 등을 대폭 강화
- 분쟁조정과 검사·제재 연계, 위법행위자 처벌 강화, 금전적 제재(과징금 등) 도입 등 사후적 보호제도 강화

② 자율규제기능 대폭 강화 (단기)

- 민간자율기관(예: 투자자보호재단 등)의 교육·홍보·소비자평가(Consumer Report)기능 확충방안 마련
- ※ 금융회사는 협회 및 민간자율기관(예: 투자자보호재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검토

③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 확충 (단기)

- 현행 감독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감독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
- ※ 금융위내 금융소비자보호전담부서 운영, 기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금감원의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역량 강화 등

④ 통합적 규율체제 마련 (중장기)

- 추후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⑤ 금융교육 강화 및 체계적 추진 (중장기)

가. 현황

-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우리의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

* 14세미만 인구대비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2020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회하고 2050년에는 일본, 독일을 추월할 전망

- 반면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 건강·간병보험 등 새로운 금융상품과 자산관리를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자산 확보 및 금융 서비스 제공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나. 정책과제

①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여건 조성(중장기)

- 신탁, 보험 등이 연계된 복합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율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 국공채, MBS, 물가연동채 등 장기채 시장 육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장기 자산운용을 지원

② 고령화 관련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채널을 선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 (중장기)

- 현행 판매채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거쳐 종합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이 경우 금융회사 퇴직자 등 금융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창업 및 취업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

- 금융자문서비스의 경우 고도의 중립성·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판매채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높은 진입요건을 부과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

- 연금, 장기보험, 보장상품에 대한 수급권 강화를 위해 관련 금융회사 재무건전성을 지속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검사·제재 강화

③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중장기)

- 개인연금제,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형 상품에 대한 현행 세제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가. 현황

- ① 금번 위기 이후 글로벌차원에서 신용평가의 신뢰성, 이해상충, 과점체제, 등급산정의 불공정성, 규제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
- ②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유기반 확대 및 신용도 정확성 제고 필요

나. 정책과제

①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단기)

- 신용평가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투명성 제고, 공시·감독 강화, 자회사·관계회사간 방화벽 설치 등

② 신용정보 수집 채널 확대 및 분석능력 제고 (중장기)

- 우량정보 공유 유인 제고, 공공정보 수집 및 활용제한 개선, 신용분석 도구 개선, 해외기업 정보 확대 등 정보공유 기반 확대
- 기업CB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은행권에서 신용카드, 신용보증회사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업권별 협회와의 제휴를 통해 참여회사 확대
- 정보분석능력 제고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신용정보 축적 확대

③ 신용정보와 신용평가는 보호대상, 정보제공 방법·목적 등이 상이하므로 신용정보법과 신용평가법으로 분리 (중장기)

2-5**녹색금융**

- ① 녹색금융 지원기준, 리스크관리기준 마련 (단기)
- ② 민간자금의 녹색부문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속 발굴 (단기)
 - 보증우대 등으로 민간대출 규모 확대
 - 우수녹색기업 중심의 녹색산업주가지수 개발, ETF 상장 유도
 - 산업별 감축의무 할당에 따른 탄소저감시설 투자자금, 친환경 건물·도시 건축자금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 (중장기)
- ③ 범아시아지역 통합 탄소배출권거래소로 발전 (중장기)

2-6**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①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중장기)
 - 금융경영전문대학원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추진

2-7**금융산업의 공익성**

- ①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중장기)
 - 금융회사에 내부위원회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수립 및 업무수행시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
 - 경영실태평가에 사회공헌활동을 감안

가. 현황

- ☐ 현재 법원중심 제도(개인회생, 파산)와 사적제도(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바, 지나친 채무자 친화적(debtor-friendly) 구제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신용질서를 훼손할 가능성

나. 정책과제

① 신용질서 확립과 채무자 회생지원이 균형된 제도 확립 (중장기)

-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은 회생·파산 신청시 채무자들의 성실한 사전 자구노력 여부 확인
- 주택담보채권 별채권 제한은 그 부작용을 감안, 신중히 접근
- 대부업 등 사적구제제도 비참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마련

①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체계적 감독강화 (중장기)

※ ① 모자회사금융그룹 ②외국계금융그룹 ③금산복합체로 구분 가능

- 지배주주의 독점적 경영 및 비정상적 거래 등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체계적 규율을 위한 법적 정비 추진

②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시너지 및 업무효율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장기)

- 중복업무 통합을 위한 자회사 설립요건을 완화
- 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검토

* 결산기가 상이한 자회사들도 연결납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연결납세 기준(현행 100% 지분율의 경우에만 허용)을 완화하는 한편 그룹 내부 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

[과제 3] 금융의 글로벌화

1 현황

① IMF이후 해외자본의 국내유치 위주의 개방화 전략은 급속히 진행된 반면 현지화를 통한 해외진출은 미흡

- 금융 중심지를 위한 노력은 그 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님
-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05년 이후 펀드를 중심으로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금번 위기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② 위기이후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 및 금융시장 변화는 후발주자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선진국시장과 달리 아시아 자산운용시장은 향후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임에 따라 아시아시장을 겨냥한 글로벌화전략은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임
 - ※ 중국·한국 연금시장은 연평균 20% 내외로 급증하고 아시아신흥국 및 중동지역 등의 국부펀드도 급성장 추세
- 이에 따라 중국, 일본 등 금융위기 피해가 적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

중국	①중국공상은행 ·남아공 최대 Standard Bank 지분 20%(56억불) 인수 (07.10) ·태국 ACL은행 M&A(14억불) 추진 발표 (09.6) ·캐나다 Bank of East Asia 지분 70%(7200만불) 인수 (09.6) ②중국초상은행 ·홍콩 Wing Lung Bank 지분 53%(47억불) 인수 (08.6)
일본	①미쓰비시 UFJ그룹 ·미국 Morgan Stanley 지분 21%(96억불) 인수 (08.10) ②노무라홀딩스 ·Lehman Brothers 아시아법인(2.25억불) 인수 (08.9)
호주	①ANZ ·영국 RBS 아시아네트워크(5.5억불) 인수 (09.5)

- ◆ 기존 "inbound"중심의 "Hub"전략에서 "outbound"를 동시에 추진하는 "Hub&Spoke"전략으로 변경
- 특히, 아시아 국가의 높은 성장률 및 역내 자산증가세 등을 감안, 아시아지역을 겨냥한 중심지 전략 추진

가. 금융중심지 정책

① 특성화된 중심지 전략 추진 (중장기)

- 자산운용업 중심의 기존 전략과 함께 파생상품, 인덱스 펀드, IT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

② 국내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중장기)

- 서울-부산 등 중심지간 경쟁보다는 연계강화를 통한 집단적 경쟁력 확보에 주력
 - * 뉴욕-시카고-보스턴, 런던-에딘버러-맨체스터-더블린 등의 사례 참조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 마련
 - 세제, 법률, 회계 등 관련 인프라 및 주거환경 동반 개선

나. 금융회사 및 금융자산의 글로벌화

① 아시아 금융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장기)

- 아시아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지화와 업무기반 확충, 포트폴리오 투자 등 아시아 금융네트워크 구축에 주력
- 이를 위하여 금융인프라 패키지 수출 및 이와 연계한 국내금융회사의 해외 동반진출방안을 모색

※ 매매거래·예탁결제 등 자본시장시스템(거래소·증권금융·예탁결제원·Koscom), 예금보험, 부실자산처리, 구조조정, 정책금융지원체계 등

② 국내 금융회사별 차별화된 글로벌화 전략을 마련·추진할 필요 (중장기)

- 은행은 현지화기조를 강화하여 현지영업기반을 마련

※ 산탄데르 은행사례

- 우선 언어·관습 등 문화적 관점에서 시장침투가 용이하고 잠재적 성장성이 높은 남미지역을 대상으로 현지화전략 추진
- 이를 위해 현지의 중소은행 인수 → 현지인력 흡수 및 현지 영업 네트워크 구축하여 대형은행 인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 현지법인 경영진의 현지화 및 국가간 유연한 브랜드 마케팅 실시
- 이러한 과정을 겪은후 대형은행 인수를 통해 시장지배력 확보

- 금융투자회사는 우선 해외자금 조달 및 유치 중개에 주력하되 이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아울러 아시아시장의 현지화도 추진
- 보험업은 국내시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시장을 중심으로 점진적 국제화를 도모

※ 효율적 글로벌화 추진 방향

- 글로벌화 전략은 현지화 전략, 지역전략, 퇴출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 → 글로벌화 조기 정착, 글로벌화 비용 최소화

<현지화 전략>

- 1단계 : 정보수집 및 사무소 설립, 글로벌 인재 육성
- 2단계 : 현지의 국내지점과 소형금융회사 간 M&A, 국내 임원과 관리자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 3단계 : 현지 대형금융회사와의 M&A, 현지인과의 공동 혹은 단독 경영체제 구축

<지역 전략>

- 1단계 : 인접국가 및 신흥국가 중심의 선별적 진출
- 2단계 : 주요 선진시장 소규모 진출
- 3단계 : 선진 및 신흥시장에 대한 적극적 진출

<퇴출 전략>

- 부실하거나 영업이 부진한 사무소 및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통합, 폐쇄 등의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 고려
- 정부는 당국간 공조를 통해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초점

③ 과도한 해외진출로 인한 부실화 방지를 위해 유동성 및 건전성 감독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 (중장기)

④ 금융자산의 글로벌화는 외환시장 안정성, 국내 자산시장의 안정화, 금융산업의 글로벌 투자역량, 해외자산 관리체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중장기)

- **미시적 측면의 필요성** : 글로벌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글로벌 투자역량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개선, 현지화에 대한 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
- **거시적 측면의 필요성** : 자산시장의 안정화, 중장기 자본계정의 자유화 여건 조성, 환율관리비용의 완화, 국가위험의 완화에 기여
- 다만, 금융자산의 글로벌화가 국내자산 투자에 대한 유인 축소와 해외로 급격한 자본이탈(sudden outflow) 초래,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 확대 등을 초래하여 환율변동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해외자산에 대한 효과적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과도한 쏠림현상 등에 대한 거시감독을 강화할 필요
- 금융자산의 전략적 해외투자과 관련,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역할을 제고하되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추진계획을 마련

[과제 4]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은행산업

가. 현황

① (건전성) 금번 위기과정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취약요인이 노정

-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외화유동성문제가 재발
- 원화유동성도 그간의 자산확대 경쟁으로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위기과정에서 은행채 상황 애로에 봉착
- 특히 이러한 자산확대경쟁 결과 예금은행의 예대율(CD 제외)은 08.9말 139.4%를 시현

② (수익성)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데다 금융투자회사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수신경쟁이 격화되는 등 이익창출여건이 악화되는 추세

- 명목순이자마진은 05년 2.81% → 09.6말 1.85% 수준으로 하락
- 핵심이익률은 04년 2.71% → 09.6말 1.80% 수준으로 하락

③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의 규모는 영세한 상황

- ※ 세계 1000대은행(The Bank지)에서 우리금융(81위), 국민(87위), 신한(89위)를 차지하여 우리 경제규모(08년 명목GDP기준 세계15위)에 비해 영세
- ※ 08년 우리금융의 총자산 규모는 세계1위 은행의 6.6%, 10위 은행의 12.25%, 50위은행의 53.1%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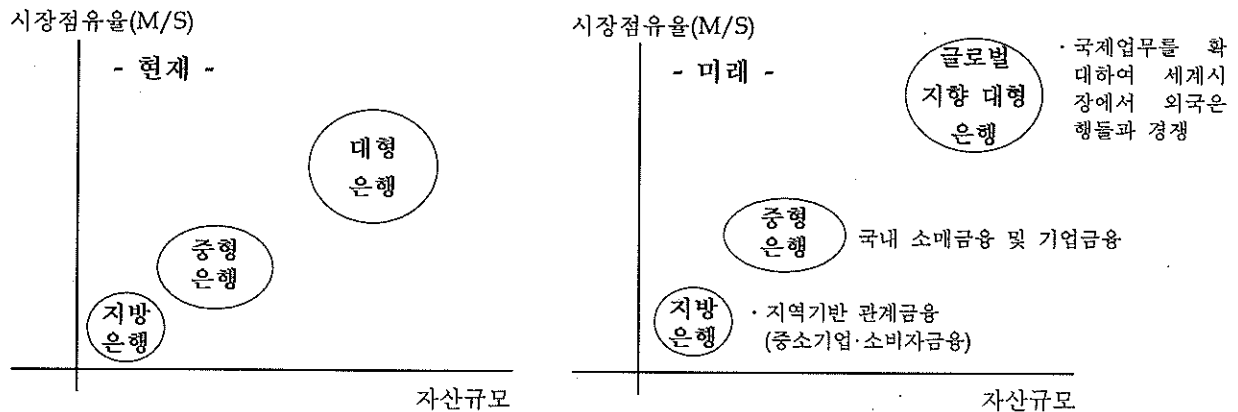
④ 글로벌화 측면에서도 외국은행에 비해 열세에 있는 상황

- ※ 국제화정도를 나타내는 TNI(Transnationality Index)는 외환은행이 11.1%로 국내에서 가장 높으나 UBS(76.5%), Citigroup(43.7%) 뿐 아니라 일본의 Mitsubishi UFJ(28.9%)보다도해 현저히 낮은 수준

나. 발전방향

□ 은행별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경로를 차별화하고 대외경쟁력 제고

- (대형은행) : 글로벌화, 겸업화, 합병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의 리딩뱅크 출현
- (중형은행) : 국내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 업무에 주력
- (지방은행) : 지역기업 및 고객 등을 중심으로 관계금융 강화



다. 정책과제

① 정부소유 은행 민영화 추진 (단기)

- 우리지주회사 민영화를 우선 추진하고 산은은 우선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재무구조 및 수익구조 개선 등 체질개선 후 민영화 본격 추진

② 은행의 안정적 성장 유도 (단기)

- 경영효율화 노력 강화
-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구조조정기금의 효과적 운영, 중소기업 상시신용위험 평가의 내실화 등

- 은행 및 은행산업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파악 및 측정 정교화
- 국제적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내부유보 확보, 보통주 증자 확대 등 자본의 질 제고
- 신용평가 기준 개선, 대출심사자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신용 평가능력을 제고 (중장기)

③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저원가성 수신기반 강화 등 수익기반 확충

- 펀드판매 관련 소비자 신뢰 회복 (단기)
- 안정적 수신기반 확보 지원 (단기)
- 영업이익경비율(cost-to-income ratio) 개선 (중장기)
-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단일직군제를 복합직군제로 전환 검토 (중장기)

④ 국내은행의 '글로벌화'를 내실있게 추진 (중장기)

- 해외진출 은행의 현지화 촉진 등 해외진출 적극 지원
 - 제조업 기진출국 등 제조업과의 동반진출 방식 활용
 - 해외진출시 컨소시엄 구성, 합자 방식 등 현지은행과의 공조체계 구축

- 국내은행은 해외진출에 앞서 핵심역량 강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 해외진출 대상국 및 진출업종의 신중한 선정으로 쏠림현상 완화 필요

- 효과적 현지화를 위해 단계적 현지화 전략 추진

- * 스페인 Santander은행은 중남미 시장 공략시 '지점설치 → 현지 중소형은행 인수 → 현지 대형은행' 등의 방식으로 현지화 추진

- 정부는 진출지역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

- ※ 국내은행 본점과 해외점포를 통합하는 종합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 등

가. 현황

<증권산업>

① (수익구조) 위탁매매 중심의 취약한 수익구조

- 위탁매매 비중이 너무 높고 초대형 M&A 자문, 유가증권 인수 등 투자은행업 비중이 낮음

* 전체 증권사의 부문별 순 영업수익 현황을 보면, 위탁매매가 평균적으로 60% 전후의 수익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은행 부문은 5~7%로 가장 낮은 수익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② (글로벌 경쟁력) 자본규모가 영세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및 전문 인력도 부족

- '08년 기준 국내 3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글로벌 IB에 비해 영세한 수준

*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자기자본 규모는 각각 660억달러와 730억달러로 우리나라 대형 3사 자기자본 규모의 30배를 넘는 규모

-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해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영업

* '08년 기준 국내 증권사의 국내지점 수는 1,755개이고 해외현지 법인 및 지점, 해외사무소가 각각 37개와 33개

- 전문인력 자격제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저하

<펀드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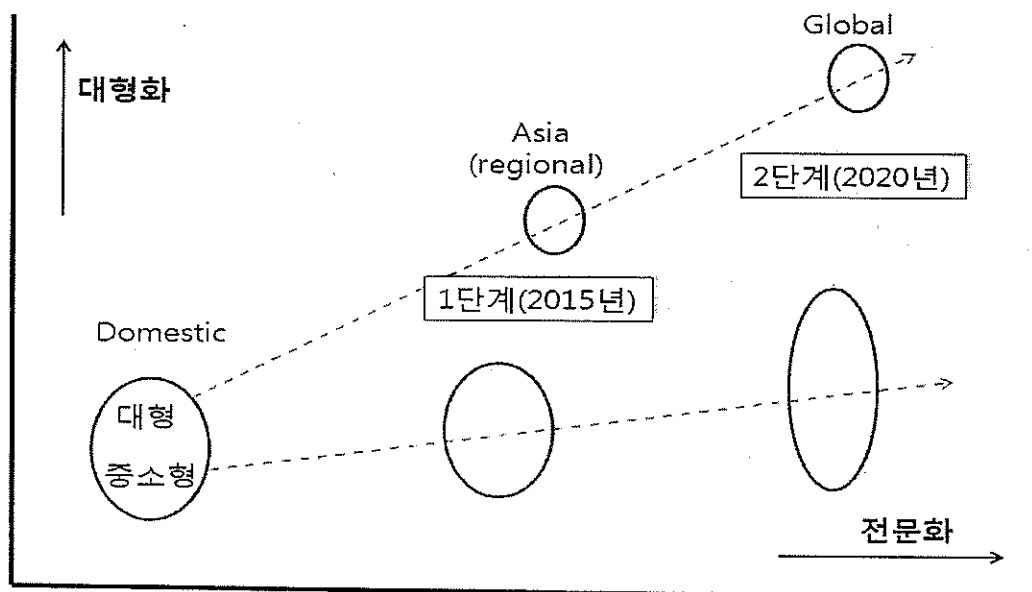
① (글로벌 경쟁력) 국제적 네트워크 및 지명도를 갖춘 자산운용사 부재

② (시스템리스크) 급변 위기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유출(fund run)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은 제기

나. 발전방향

<증권산업>

- ☐ 자본규모 확충 및 전문화·특화를 통해 모험자본을 원활히 공급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
- (1단계)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투자은행이 나타나고 중소형 증권회사의 특화가 충분히 심화
- (2단계) 글로벌 투자은행이 탄생됨과 동시에 특화된 증권회사의 세계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



<펀드산업>

- ☐ 해외진출 역량이 확보된 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판로를 적극 개척하여 펀드의 대형화·글로벌화를 추진

다. 정책과제

<증권산업>

① 합병 등을 통한 자본규모 확충과 함께 전문화 유도 (단기)

- 대형사는 자발적 합병 및 자본확충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충분한 위험인수능력을 확충
- 독창적 금융투자상품 개발에 대한 권리보호 등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의 전문화 지원
 - 전문인력 및 특화된 사업계획 등 질적 평가를 바탕으로 신설증권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② 자격증제도 정비, 증권사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전문인력을 양성 (중장기)

③ 아시아 등 지역시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글로벌화 추진 (중장기)

-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아시아 역내의 진출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역내 시장의 투자은행업무를 주도하는 regional player로 성장

< 펀드산업 >

① MMF 안전장치 강화 (중장기)

- 긴급한 경우 펀드환매 일시 중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집중투자 규제 및 펀드의 유동성관리 장치 보완

③ 펀드시장의 경쟁구조 정착 (단기)

- 펀드 판매채널 확대,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확대, 수익률·보수·수수료 등 펀드정보 공시 강화 등

④ 자산운용사의 대형화·글로벌화 (중장기)

- 개인연금·퇴직연금시장 확대를 통해 국내 성장기반 마련
- 해외자회사 설립 등 해외판로를 적극 개척
- 중국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

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규제를 원칙적으로 일원화하되 국제적 논의 동향을 감안하여 시스템리스크 및 투자자 보호 규제는 강화 (중장기)

가. 현황

① 불완전 판매 등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부족

- * 최근 보험회사와 모집조직 간 '제판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보험소비자 보호나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②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수익구조 다각화 미흡

- * 획일적 사업모형, 전문성 미흡, 해외진출 부진 등으로 성장동력 발굴이 미흡하며, 업무영역 제약으로 수익원이 다각화 되어 있지 못함.

③ 국내영업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화가 부진

- * 보험회사 해외사업 비중('09.6월말) : 생명보험 0.28%, 손해보험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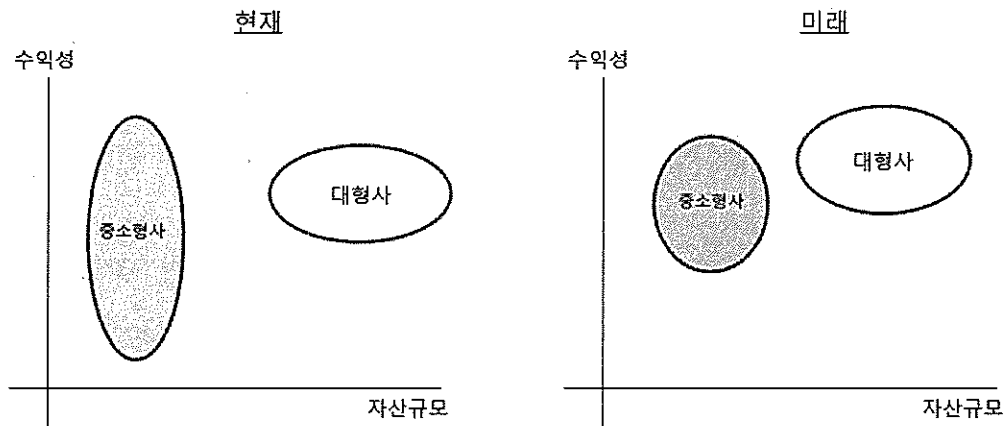
④ 경제·사회·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리스크 확대 우려

- *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등으로 비재무적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변화에 따라 위험노출 규모도 확대

나. 발전방향

- ☐ 대형사는 상장,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화된 우량회사로 성장하고 중소형사는 전문영역에 특화하여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 강화

- ☐ 이와 함께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 수행



다. 정책과제

① 보험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제고

- 모집조직 · 보험금 지급기준 · 약관 · 분쟁조정 등의 분야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 (중장기)
- 특히, 모집조직의 부실판매에 대한 자기책임, 보험판매채널의 자격요건, 보수교육 등의 강화를 통해 모집조직을 선진화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 · 검사 강화 (단기)
- 장애인 · 고령자 · 고위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보험 개발 확대 (중장기)

※ 장애인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금 또는 세제혜택 확대,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②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 · 간병 · 연금 등의 상품과 사회적 위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의 개발 지원 · 촉진

- 노후 대비 건강보험상품의 다양화 지원 (단기)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세제지원 확대 등 검토 (중장기)

-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에 대한 법규 강화를 검토하고 거대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중장기)

③ 보험회사의 글로벌화 및 전문화 촉진 (중장기)

- 대형사는 상장 등으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여, 신흥시장에서 보험회사 인수·합병 등을 통해 해외진출 활성화
- 중소형사는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화 추진

④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단기)

- 거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통계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 공제계약 정보의 집적 등을 통해 보험사기 인지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 강화

가. 현황

① (저축은행) 전통적 영업기반인 서민금융보다 PF대출 등 고위험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리스크가 확대

- 특히, 외형확대 과정에서 자산은 증가하였으나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여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화 심화

② (상호금융기관) 개별조합의 취약한 인력구조 등으로 자체적인 성장능력 취약

③ (여신전문금융회사)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자금력 향상, 자본시장의 발전 등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시설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의 도입 취지가 다소 퇴색

- 일부 여전사의 경우 부수업무인 기업·가계 대출 등의 취급을 확대하고 있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업종과의 차별성 약화

④ (서민금융) IMF 위기이후 금융소외자가 다수 발생

- 서민금융은 상업적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려운데다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가 외형확대 및 고위험자산 투자에 주력하여 서민금융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위축

- 서민금융공급 부족 → 사금융이용 증가 → 신용불량자 편입
→ 경제적 자립기반 붕괴의 악순환 초래

나. 발전방향

□ (저축은행)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성장

- 개별 저축은행이 각각 특성에 따라 서민 및 저신용 중소기업 대상의 최적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
- 저축은행은 자산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지역기반을 토대로 소매 금융업에 주력하는 내실경영 유도

□ (상호금융) “지방의 조합원과 서민대상의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금융회사”로 발전

- 중앙회 중심의 부실조합 구조조정, 자산운용 체제 구축

□ (여신전문회사) “자본력과 신용도에 근거한 종합여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장

-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을 4개 업종(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으로 구분
- (제1안) 대부분의 여전사가 2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및 소비자금융업을 묶어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
- (제2안) 할부금융, 시설대여 및 신기술 사업금융업을 현재와 같이 임의등록제로 하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금융업을 강제 등록제로 운영하는 등 규제 차등화를 위해 현행 4개의 여신전문금융업종에 소비자 금융업을 신규추가

* 소비자금융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 및 무담보 대출(어음할인 포함)을 의미

□ (서민금융) 제도권금융회사의 서민금융공급체계 우선 구축

- 시장기능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등 대안적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장기능을 보완

< 저축은행 >

① 저축은행 부실화 억제를 위한 감독 강화 (단기)

- 무리한 자산확대 억제하고 대형 저축은행은 지방은행 수준으로 건전성 감독 강화
- 소규모 저축은행은 외형확대 억제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발전 유도
- 부실채권 정리 및 신용평가시스템 공동개발 등 중앙회 역할 강화

②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기능 강화 (단기)

- 부동산PF 등 도매금융 성격의 거액여신을 축소하고, 서민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기능 강화
- *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취급 한도를 총자산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거액여신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 소매금융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③ 부실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은행 등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 (중장기)

< 상호금융회사 >

① 연합회·중앙회 역할 제고 (단기)

- 단위 조합의 취약한 인력구조를 감안하여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앙회·연합회의 조합 지원기능 강화
- 연합회·중앙회의 비대화 방지와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예: 70%) 도입

② 1 기초단체당 1 조합의 원칙하에 조합간 합병 추진 (중장기)

< 여신전문금융회사 >

① 여신전문금융업 개편 (중장기)

- (제1안)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및 소비자금융업을 묶어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
- (제2안) 현재 4개로 구분된 여신전문금융업에 소비자금융업을 신규 추가

② 저신용자 금융서비스 공급 (중장기)

- 여전사의 본업무에 소비자금융업무를 추가하고 대출업무 취급 비중 완화

③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체크카드·직불카드 결제범위를 대폭 확대 (단기)

< 서민금융 >

① 금융권별 역할을 정립하여 공급측면 중층구조 확립 (단기)

-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소비자 금융시장 진출 유도 (단기)
- 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저신용층에 대한 서민대출을 확대하도록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단기)
- 여전사는 제도개편(소비자금융업 신설)을 통해 소비자금융을 직접 취급토록 유도 (중장기)
- 대부업 감독강화로 시장규모를 축소하고, 대형대부업체는 중층구조 확립 이후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 검토 (중장기)

※ 제도권 서민금융체계(예시)

	현행	개선방안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위기이후 위험관리 강화 · 평판위험(Reputation Risk) → 은행권 서민금융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방식으로 소비자금융에 진출
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형확대 경쟁 · PF 등 고위험 대출 · 예보제도에 무임승차 →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자산확대 억제 · 소액대출평가시스템 개발 유도 → 지역기반 서민금융에 주력
상호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심사역량 부재로 낮은 예대율(중앙회 재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신용대출상품 공동개발 등을 통해 조합원 신용대출 확대
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할부 리스 등 위주로 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금융업을 신설하여 서민금융 확대 유도
대부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금융시장 공백을 계기로 규모 확대 및 소비자피해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규모 축소 유도 · 대형 대부업체는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 검토

②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공급 대상에서 경시될 수 있는 저신용층 문제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해소 (단기)

※ 非제도권 서민지원 체계(예시)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복지정책으로 접근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제활동능력이 없지만 미래 경제활동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 등 대안금융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능력이 있으나 기존채무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정상적 금융공급이 어려운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 지원제도 및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과제 5] 금융시장 효율화

5-1

단기금융시장

가. 현황

- ☐ 금변 위기 과정에서 단기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
 - 무담보 콜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외부충격 발생시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 불안정성이 심화
 - 특히 非은행금융회사의 콜시장에 과도하게 참여함에 따라 지준 시장으로서의 콜시장 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단기금융시장의 기간물(RP 등) 거래가 상대적으로 부진
- ☐ 금리의 기간구조가 미형성되고 지표금리가 부재
- ☐ CP거래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유통시장 발달이 부진

나. 정책과제

① RP 시장을 활성화 (단기)

- 과도한 콜시장 의존도를 완화하고 RP 규제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초단기 자금운용수요를 RP 시장으로 전환
- 이를 통해 단기금리 기간구조 형성,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② CP 수요 → 단기사채수요로 전환 유도 (단기)

- 전자화된 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하여 CP 시장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

③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 개발 (중장기)

- 은행간 자금시장 금리인 한국식 LIBOR 금리 등 개발 유도

가. 현황

-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간 명확한 역할구분이 없는 상태
 - 특히 코스닥과 거래소 통합이후 “제2부시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코스닥시장의 기능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 높은 개인투자자비중(낮은 기관투자자 역할), 단기매매위주의 투기적 행태 및 이로 인한 높은 시장변동성과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및 불공정거래 등이 아직 만연하는 점 등도 문제

나. 정책과제

①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 (중장기)

- 거래소시장은 아시아 대표적 자본시장으로 발전
 - 거래소 국제화를 추진하되 청산·결제기능 및 자율규제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거래소 IPO도 대안으로 검토
- Kosdaq의 기능정상화를 통해 미래 핵심유망산업 지원기지화
 -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해 상장, 공시, 매매 등의 차별적 제도 구축
 - 상장시 성장성·투명성 등 질적요건에 대한 실질심사제 마련
 - 시장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한 퇴출 확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 IR 의무화 및 마일스톤 공시 도입
 - 단일가 매매제도 및 유동성공급자제도 개선 검토

② 거래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 (중장기)

- 매매서비스 제공비용에 근거한 매매수수료 결정체제 도입

- 일부가격대의 호가단위 개선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
- 기관투자자의 대량매매로 인한 가격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량매매시스템 도입 등

③ 상장기업 공시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 및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 강화 (중장기)

- 상습적 불성실 공시와 조회공시 허위답변, 미확정답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시관련 벌점체제 개편
- 상장기업 공시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④ 주식관련 신상품 확대 및 간접·분산·장기투자 유도 (중장기)

- 우량 비상장기업의 SPAC을 통한 상장 및 구조조정 활성화 도모
- 채권, 다양한 지수 등에 근거한 ETF 도입을 통해 투자상품의 활성화 도모
- 간접·분산·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투자자 교육 등 정책적 노력 강화

⑤ 공시·회계부담 경감 등 상장부담을 지속 완화 (중장기)

가. 현황

□ 채권시장을 통한 장기안정적 기업자금 지원기능이 미흡

- 주관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채권거래에 있어 단순중개 업무에 치중할 뿐 총액인수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
- 특히 고수익채권시장은 채권발행이 가능한 중견기업의 수가 적고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
- 채권유통시장도 채권딜러의 시장조성기능 부진, 장외유통시장의 낮은 투명성 등으로 유동성이 저하

나. 정책과제

① 채권 수요확대 및 발행시장 활성화 (중장기)

- 미래핵심산업에 대한 P-CBO 지원 확대
- 채권형펀드 및 고수익채권펀드활성화방안 강구
-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채권발행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실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주관사의 책임성 강화

② 효율적인 채권유통시스템 구축 (중장기)

- ATS의 도입을 통하여 국내 채권유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거래를 촉진하고, 장외채권 전자거래 전문기관의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

③ 장기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국 채권시장의 발전을 기반으로 역내채권시장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 수행 (중장기)

가. 현황

- ☐ 우리 파생상품시장은 KOSPI 200 선물·옵션 등 장내파생 위주로 발전하고 장외파생상품은 양적·질적으로 취약
- ☐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차원에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논의중

나. 정책방향

- ①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탄소배출권(현·선물), 실물상품 선물 등 상품의 다양화를 추진 (중장기)
- ② 장외파생상품 감독의 효율성 제고 (중장기)
 - 중앙집중거래상대방(CCP) 청산소, 중앙거래정보저장소, 전자 거래 플랫폼 도입 및 각 시스템 운영주체 선정·법적근거 확보 등

- ① 상법에 의거 발행되는 ABCP의 공시강화 등 감독방안 마련 (단기)
 - ABCP를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된 단기사채제도에 편입 (중장기)
- ② 자산유동화법→“자산유동화 등 증권화에 관한 법률(가칭)” 전환 (중장기)
 - 자산유동화법에서 자산유동화뿐 아니라 Covered Bond, 담보부 사채 등 다양한 구조의 증권화를 규율
- ③ 구조화채권에 대한 공시 및 감독방안 구축 (중장기)
 - 소액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소매시장에 대한 투자자보호 장치 및 구조화채권에 대한 과도한 투자 감독 강화 방안

가. 현황

-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지나치게 보수적 자산운용 규제 등으로 현행 적립금중 85%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

나. 정책과제

① 퇴직연금시장 확대 유도 (중장기)

○ 퇴직금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유도

- 신규채용 근로자 또는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퇴직금 사내유보분 손금산입범위(30%) 단계적 축소, 퇴직금 중간 정산 제한 및 중장기적으로 퇴직금제도 폐지

○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 단기적으로 채권자 우선변제 기간을 확대(3년→5년)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
- 중장기적으로 DB형의 최저적립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100%까지 상향 조정

② 확정기여형의 주식투자제한(40%) 완화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대한 운용규제 지속 완화 (중장기)

③ 퇴직연금 관련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대한 규율과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규율 체계를 분리 검토 (중장기)

4. 최근 3년간 감사원, 총리실,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 감사원 및 자체감사결과 제출 [별첨]

○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 1부

- '09년 회계감사 처분요구서 1부

○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 08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부

☐ 총리실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사담당관실

- 목 차 -

I. 감사개요	1
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4
나. 물품관리 실태	10
다. 비정규직 운영실태	13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17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신용보증 제도)	20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22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22
5. 감사결과 처리요령	23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6.27(금) (5일간)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 연구용역, 보증제도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부문별 총평]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② 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 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④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용역결과물(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⑤ 보증제도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 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 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9백만원), 금융시스템 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경비 소요 부문	집행액	총집행액 대비비율	비 고
계	1,425	100	
이사비용	31	2.2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325	22.8	
사무실 임차료 등	297	20.8	사무실(281), 차량(16)
집기 등 구입비	133	9.3	책상, 의자, PC 등
통신시설 관련	500	35.1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기 타	139	9.8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 · 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 (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소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소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약이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요가 증가

-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정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종 전(구 금감위)				변 경(금융위)			
대형	중형	소형	계	대형*	중형	소형	계
1		1	2	3	4	1	8

* 대형(3대)는 위원장·부위원장·외빈의전용

-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조치요구 사항》

- 혁신행정과장은 에너지 절감 및 차량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용차량을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운영하시기 바람 (시정)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지적사항》

○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

(외부강사 초빙 모닝클래스 : 김&장 정성구 변호사)를 마친 후 조찬비용(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요구 사항〉

- 혁신행정과장은 숙박비 초과 지급분(\$190)에 대하여 즉시 환수 조치하시기 바람 (현지조치)
 - * '08.7.21. \$190 환수하여 국고 반납
- 혁신행정과장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서명 및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등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집행이 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현지조치)
- 혁신행정과장은 향후 일과 전·후 직원교육 등을 위한 식사비 지출을 할 경우는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지출 하시기 바람 (현지조치)
- 혁신행정과장은 초과 지급된 대우수당(703,640원)을 즉시 환수조치 하시기 바람 (현지조치)
 - * '08.6월분 급여지급시 당해직원 급여에서 703,640원을 환수하여 국고반납

나. 물품 관리 실태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재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합계	관리대장계	실사계	활용대상	불용대상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수량	1,482	1,482	1,218	193	71
금액	801,607,532	801,607,532	701,274,952	94,947,780	5,384,800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III] 감사 결과

-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예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 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지적사항》

-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정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구 분	대 수	실지 관리과
금융위 회의용	19	의사운영정보팀
구 재정부 이관	1	시장분석과
	1	글로벌금융과
미기재 총계	21	

《조치요구 사항》

- 혁신행정과장은 물품이 관리대장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재물조사를 재실시 하시기 바람 (시정)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 바,
 -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 (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로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구 분	인원 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속기사	2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YP	1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에디터	3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운전원	4	업무용차량 운전
사무보조원	21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계	31명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제로 운영

- 시간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본부는 시간외 근무를 월간 최대 15시간(시간당 8,092~8,680원* 최대 13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정규직 시간당 보수 산출근거에 따름

- FIU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인정 (시간당 5,000원, 최대 10만원)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본부와 FIU 보수체계 및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구 분	보수 체계				연간보수 수준(채용연도별)				
	기본 연봉	정근 수당	성 과 금	시간외 수당	'01	'04	'05	'06~7	'08
본 부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월 봉 의 10~100%)	32~38	월 한도: 15시간 단가: 8,092~8,680원 최대지급: 월13만원	1,525	1,488	-	1,414	1,353
FIU		없음	없음	월 한도: 20시간 단가: 5,000원 최대지급: 월10만원	1,588	1,436	1,285	-	1,224

* 연간 보수수준은 시간외 수당, 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임

《지적사항》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 · 업무량 · 업무난이도 · 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조치요구 사항》

- 혁신행정과장은 본부와 FIU간의 비정규직 보수체계 불균형 해소를 강구하시기 바람 (권고)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 실태

[I]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 정책연구용역은 국회 예·결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 ☐ 금융위 발족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향후 유사정책 수립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07년 이후 정책연구용역(구 재경부와 구 금감위에서 수행)의 「관리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현황>

(백만원)

구 재경부 금융정책국		구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구 금감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	553	4	133	3	88	24	774

[II]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적 충실성 보다는,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 감사방법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과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고

- 정책연구용역심의회철, 연구용역관리현황, 연구용역결과물 관련철을 제출받아 그 관리·활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점검했으며
- 현황(리스트)에서 과제 누락 및 PRISM 미등록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확인했음

(Ⅲ) 감사 결과

- 용역과제선정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과제의 중복여부, 계약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07.6월 국회 결산 심사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용역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차년도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담당과에서 '09년 예산 확정전에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용역과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 용역대금결제 부분을 점검한 결과 납기를 준수하고 있고, 하자 검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연구용역예산의 이·불용을 점검한 결과 '07년 용역과제 24건중 2건만 이월되었으며, '08년 용역예정과제 약 20건도 이월 또는 불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신설된 관계 등으로 현황관리 및 PRISM 미등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지적사항》

-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각 과로 부터 받아본 결과, 2개부서 (은행과, 글로벌금융과)가 '07년 수행과제 24과제 중 3과제를 리스트에서 누락했으며
- '08.6.2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과제 중 13과제만 등록되어 있고 금융정책과, 금융시장분석과, 중소서민금융과, 자본시장과, 글로벌금융과 등에서 11과제를 등록하고 있지 않았음

《조치요구 사항》

- 은행과 및 글로벌금융과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의 현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현지조치)
- 금융정책과 · 금융시장분석과 · 중소서민금융과 · 자본시장과 및 글로벌금융과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의 PRISM 등록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현지조치)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는 향후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주요 점검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07.3월 감사원은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조치 이행실태」 감사실시

- '07년 이후 우리 위원회(舊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등 5개 부문*

*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특정업무 경비집행, 문서보안 실태, 공무국외여행 경비집행, 금융법규 영문화사업 사후관리

- 이중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가 가장 많았던(8건) 산업금융과 소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부문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참고토록 함

(Ⅱ) 감사방향 및 방법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보다는 조치여부 및 조치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함

-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

-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감사대상부서(산업금융과)로부터 조치 결과·계획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 면담 및 유관기관(신·기보 등)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완

(Ⅲ) 감사 결과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6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1개사항) 및 조치 계획(5개 사항)을 회신

○ (조치 결과) 보증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부동산 매입 등)
방지를 위한 신·기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에 대하여

- 신·기보가 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고 금감원 등 지시로 은행이
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을 조치결과로 회신

○ (조치계획) '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 ①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②장기보증이용기업 보증축소 ③중복보증 해소
④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 ⑤보증연계투자 폐지 등 방안마련

- 신·기보 공동발주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금년 중 정부
정책에 반영 예정임을 조치계획으로 회신

□ 이밖에도 조치결과 및 계획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였거나
추진예정임

○ 신·기보 보증부 약정서 개정(신·기보 사후관리 업무 감독강화),
보증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예정
(조치계획에 따른 정책수립 절차상 객관성 확보) 등

□ 따라서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일련 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시정
2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현지조치
3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현지조치
4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현지조치
5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현지조치
6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시정
7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현지조치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
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5.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업무주의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

2009 . 11.

감 사 원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II .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2
1.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부적정(통보)	2
2.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 검사감독 부적정(주의통보)	6
3.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 부적정(주의2)	15
4. 인건비 과다편성·집행 및 특별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주의2)	24
5.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부적정(주의2)	33
6.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36
7. 금융법규 관련 유권해석사례 공개 부적정(주의)	39
8. 파견 인력 운용 부적정(주의)	4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시장 질서 유지, 금융산업 육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직 운영과 예산·인력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방만한 기관운영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범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본부 및 대전·대구·광주·부산지원을 대상으로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9. 25.~11. 3.) 종료 후 2006년 2월부터 2009년 5월 말까지 집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은행·증권·보험·비은행 업무권역별 금융감독업무가 적정한지, 인건비·경비 등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조직 운영과 인력 운용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는 데 감사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인원 등

2009. 5. 28.부터 같은 해 6. 10.까지 10일간 예비조사를 한 후, 같은 해 6. 15.부터 7. 17.까지 감사인원 2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11. 12. 감사 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하 “펀드”라 한다)을 운용하는 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1. 펀드 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상 등록 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 부적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2009. 5. 4.부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판매회사는 간투법에 따른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¹⁾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별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전환등록이 되지 않은 펀드의 경우에는 추가 자금모집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환매만 발생하는 등 펀드 수탁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전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의 전환등록 여부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탁됨

그런데 2009년 6월 말 현재 간투법상 펀드의 전환등록 현황²⁾을 보면 공모·추가형펀드 3,423개 중 2,216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환 등록된 반면, [별표 1] “공모·추가형펀드의 미전환 현황”과 같이 증권펀드 등 1,207개(계좌 수: 605,944개)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환등록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중 수탁고 100억 원 미만인 펀드가 1,136개(94%)로 대부분 소규모 펀드에 해당되어 나중에 전환등록 되지 않는 한 신규자금 모집이 불가능한데도 간투법상 펀드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들이 개별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법 펀드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간투법상 펀드 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전환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개별통보하도록 하는 등 간투법상 펀드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2. 소규모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부적정

수탁고 규모가 적은 소규모 펀드는 분산투자의 어려움이 있는 등 펀드재산의 운용효율성이 떨어지고, 법정보고서 작성비용, 회계감사비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비용이 대형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 계상될 뿐 아니라 펀드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 수가 증가하여 소규모 펀드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기 쉽다.

실제로 2009년 6월 말 현재 펀드의 수익률은 [별표 2] “펀드규모에 따른 수익률 현황”과 같이 수탁고 100억 원 이상의 펀드의 수익률이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의 수익률보다 1년 및 3년 펀드수익률이 최고 128.72%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간투법 시행으로 2004. 1. 5.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도 포함

또한, 소규모 펀드의 수는 2006년 4,368개, 2007년 5,136개, 2008년 6,18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9. 6. 30. 현재 소규모 펀드의 수는 [표 1]과 같이 6,054개로 전체 펀드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수탁고별 펀드 현황 (2009. 6. 30. 기준)

(단위: 개, 십억 원)

펀드 규모	10억 원 미만		10~100억 원		100억 원 이상		합 계	
	펀드 수	수탁고	펀드 수	수탁고	펀드 수	수탁고	펀드 수	수탁고
공모	1,479	603	1,679	8,231	1,400	248,364	4,558	257,198
사모	598	286	2,298	7,902	1,841	108,758	4,737	116,946
합계	2,077	889	3,977	16,133	3,241	357,122	9,295	374,144

자료: 금융투자협회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 2-11조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펀드의 판매회사가 투자자 개인의 펀드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잔고통보제를 실시하고 있고,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에 펀드조회 등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잔고통보 및 펀드조회내용에 펀드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환매 등의 의사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잔고통보 및 펀드조회내용에 펀드 규모를 포함하여 통보하거나 공시하는 등 펀드 투자자가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집합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펀드로 전환되지 않은 펀드를 펀드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 ② 펀드 판매회사에게 펀드조회 내용 등에 펀드 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공모·추가형 펀드의 미전환 현황 (2009. 6. 30. 기준)

(단위: 개)

구 분		펀드 수	계좌 수
증권펀드	주식형	75	4,380
	채권형	479	389,387
	혼합주식형	161	34,915
	혼합채권형	370	24,589
파생상품펀드		12	3,935
부동산펀드		-	-
실물펀드		-	-
단기금융펀드(MMF)		102	148,518
재간접펀드		8	220
특별자산펀드		-	-
합 계		1,207	605,944

주: 1) 펀드구분기준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펀드 분류기준

2) 모펀드, 종류형 클래스펀드 및 기금 개별펀드 제외, 계좌 수는 '09. 5. 31.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별표 2]

펀드규모에 따른 수익률 현황(2009. 6. 30. 기준)

(단위: 억 원, 개, %)

구 분	운용 사명	수탁고 합계	펀드 유형	펀드 수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A)	100억 원 이상(B)	(B)-(A)	100억 원 미만 (C)	100억 원 이상(D)	(D)-(C)
1	○○○	566,482	채권형	44	48	6.89	8.59	1.7	15.45	17.05	1.6
			주식형	59	59	-15.8	-14.75	1.05	28.94	11.01	-17.93
			단기금융	9	11	3.48	4.35	0.87	13.2	14.35	1.15
2	○○○	462,979	채권형	7	25	9.64	9.4	-0.24	17.28	18.08	0.8
			주식형	45	88	-21.68	-14.95	6.73	18.78	21.67	2.89
			단기금융	-	8	-	4.08	-	-	13.33	-
3	○○○	255,206	채권형	74	33	0.04	7.36	7.32	-0.39	15	15.39
			주식형	24	46	-25.42	-19.06	6.36	7.5	30.79	23.29
			단기금융	11	9	-0.44	4.13	4.57	6.36	13.96	7.6
4	○○○	228,635	채권형	27	38	11.64	3.82	-7.82	13.24	14.65	1.41
			주식형	13	23	-22.49	-17.8	4.69	7.26	20.11	12.85
			단기금융	14	6	2.69	4.44	1.75	11.05	14.79	3.74
5	○○○	202,539	채권형	94	35	5.98	8.77	2.79	14.16	17.42	3.26
			주식형	54	45	-10.85	-4.39	6.46	17.02	26.17	9.15
			단기금융	15	8	3.42	4.56	1.14	12.28	15.03	2.75
6	○○○	186,070	채권형	59	26	5.79	8.84	3.05	13.89	17.78	3.89
			주식형	37	31	-16.73	-14.12	2.61	3.72	14.69	10.97
			단기금융	6	7	4.17	4.25	0.08	13.33	13.95	0.62
7	○○○	135,423	채권형	142	25	7.76	4.27	-3.49	35.19	-	-
			주식형	7	14	-26.85	-24.37	2.48	-12.67	116.05	128.72
			단기금융	18	3	-	7.32	-	-	18.06	-

자료: 금융투자협회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 검사·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을 검사·감독¹⁾하고 있다.

실손(實損)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²⁾가 질병·상해로 입원(또는 통원)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³⁾으로 2003. 9. 30.까지는 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라 한다)에서만 판매하였고,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라 한다)는 같은 해 10. 1.부터 단체, 2008. 5. 1.부터는 개인에게도 위 보험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다.

2003년 9월 이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 등 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고 시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해야

1)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1조와 「보험업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검사 그리고 「보험업법」 제19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위탁받은 보험회사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음.

2)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보험수익자와 다를 수 있으나 이 처리안에는 모두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서술하였음.

3) 주로 상해·질병·운전자 보험의 주계약이 아닌 특별약관(특약)으로 부가되어 판매되고, 1999년 이전부터 판매된 상해의료비 및 1999년부터 판매된 입·통원의료비(상해, 질병) 상품이 있음.

하는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을 비례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보험금액을 중복하여 지급⁴⁾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에게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하는 등 [표 1]과 같이 2003회계연도까지 손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표 1] 실손의료보험 현황

(단위: 천 건, 백만 원, %)

회계연도	경과계약 건수 ¹⁾	사고건수	납부보험료 (A)	사고발생률	지급보험금 (B)	건당 지급보험금	손해율 ²⁾ (B/A)
2001	13,291	681	230,213	5.12	291,613	0.4282	126.7
2002	15,940	814	273,563	5.11	349,482	0.4291	127.8
2003	18,397	1,078	352,342	5.86	465,139	0.4316	132.0
2004	21,239	1,144	374,246	5.38	485,160	0.4242	129.6
2005	25,370	1,600	512,848	6.30	594,471	0.3717	115.9
2006	30,437	2,327	650,794	7.65	715,904	0.3076	110.0
2007	38,122	3,382	861,311	8.87	947,010	0.2799	109.9

주: 1) '회계연도 중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약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회계기간 동안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경우 1건으로 간주함. 만약 회계기간 중 6개월간 계약을 유지할 경우 0.5건으로 간주함.

2)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됨.

자료 : 보험개발원

이에 따라 2003. 7. 10. 위 감독원에서는 ‘의료비 보험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어 경영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같은 해 10. 1. 이후에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이하 “신계약”이라 한다)은 보험약관대로 비례분담⁵⁾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다.

4) 「상법」 제672조에서 보험계약을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비례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자신의 책임금액 이상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이고, 고객신뢰보호 상 관례적으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었던 것임.

한편, 손보사들은 같은 해 9. 30.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이하 “구 계약”이라 한다)과 여러 개의 신계약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시 구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본인 부담금 의료비가 기존 계약에서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남은 보험금 잔액을 신계약에서 비례분담하도록 협의하여 보험금을 보상(이하 “잔액보상방식”이라 한다)하는 등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상법」 제672조의 실손보상 원칙⁶⁾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지급하지 않고 발생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간 비례분담하여 보상하고 있다.

1.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계약자료 관리 부적정

위 감독원에서는 2009. 4. 14. 손보사⁷⁾들이 신계약의 중복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비례분담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고, 가입금액을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오해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보험모집 시 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비보험 계약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반드시 신계약의 중복가입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5) 2003. 10. 1.부터 각 손보사의 신계약 자료를 손해보험협회에 집적하여 각 손보사에서 공유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 시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을 비례보상하고 있음.

6)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만을 보상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실제손해를 초과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임.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과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과거부터 계약 간에 비례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었고, 실손의료보험의 성격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보험과 유사하므로 위 감독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7) 생보사는 2008년 5월부터 개인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으로 판매(단체보험은 이전부터 판매)하였으므로 중복가입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 위 감독원에서 손보사만을 언급.

8) 보험계약자가 보장내용(상해, 질병 등)이 같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다수 가입(보장금액 100만 원, 1,000만 원 등)하여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보장금액이 중복되는 부분(100만 원까지)은 각각의 보험상품에서 보험금을 비례분담 받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의 문제가 발생함.

이 후 금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7. 1.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제4-31조의3을 개정하였고, 위 감독원에서는 같은 해 6. 30. 위 제도 개선방안의 내용과 같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신계약의 중복가입 뿐만 아니라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신계약을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별표 1]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비교 명세”와 같이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비례보상 받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감독원에서는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신계약에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176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집적·관리하고 있는 구계약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고,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위 시행세칙을 개정하여야 했으며, 위 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 전산자료에 구계약 자료입력을 누락하거나 실효·해지 또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별표 2]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현황”과 같이 2002년 8월까지의 집적률이 최대 30%에 불과하며, 같은 해 8월 이후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구계약 자료의 정확성이 낮은데도 손보사로 하여금 유효한 계약자료를 모두 입력하도록 감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가 구계약 자료를 활용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위 시행세칙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위 위원회도 위 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2009. 5. 31. 현재 225만여 건의 유효한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 중복여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계약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게 될 우려가 있다.

[표 2] 손해보험회사의 구계약 보유 현황

(단위: 천 건)

보험사명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등 6개 ^{주)} 손해보험사	합계
보유건수	1,288	273	238	187	84	58	125	2,253

주) ●●손해보험(43천 건), ■■손해보험(34천 건), ◆◆해상보험(21천 건), □□손해보험(15천 건), △△해상보험(9천 건), ○○손해보험(3천 건)

자료 : 금융감독원

2.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방식 부적정

금융감독원에서는 2003년 7월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다른 보험사에 중복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가 최초로 청구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별 분담액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비 보험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시달하였고, 2007. 11. 2. 보험금을 처음 청구 받은 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지급액을 포함한 해당 보험금 전액을 지급 후 다른 회사와 각사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도록 ‘다수보험 중 의료실손 보험계약의 보상체계 정비’ 공문을 각 보험회사에 시달하였다.

그런데도 위 감독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 막연히 정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만 시달하였을 뿐 아니라 지침을 최초로 시달한 지 6년이 지난 2009. 7. 17. 현재까지 보험업계에서 정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각각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⁹⁾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2009. 6. 16.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0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검토한 결과 [별표 3]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비례분담 현황”과 같이 총 537,189명이 총 550,124건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들 중 12,230명은 중복 가입으로 2개 이상 보험회사에 25,165건(1인당 평균 2.06건)을 각각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진단서 발급비용¹⁰⁾을 최대 12백만여 원¹¹⁾만큼 부담¹²⁾하였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최대 12,935회 중복 방문¹³⁾하는 등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치할 사항 [통보] 금융감독원장은

- 9) 금융감독원에서는 2007. 12. 28.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서류의 경우 발급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제출서류(진단서 등) 대신 간이서류(입·퇴원확인서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서류의 중복제출 및 중복청구를 방지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지침 등을 통보한 바 없음.
- 10) 보험금 청구 시 필수서류인 진단서는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다르므로 1부를 초과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1부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11) $(25,165\text{건} - 12,230\text{건}) \times 1,000\text{원} = 12,935,000\text{원}$
- 12) 10개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거서류의 요구기준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진단서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액의 기준이 보험사별로 다르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1개월간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한 25,165건은 진단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 처리안에서는 모두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음.
- 13) 10개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방법을 검토한 결과 직접 방문, 우편, FAX, 모집인 대행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개월간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한 25,165건은 어떤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 처리안에서는 모두 직접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음.

① 보험개발원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계약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험회사가 신계약과 구계약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② 각 보험회사로 하여금 정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하여 보험료를 낭비하거나 보험금 수령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 시행세칙 개정 등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비교 명세

보험회사 종류	보험회사명	보험금 지급방식		
		구계약 ¹⁾ +구계약	신계약 ²⁾ +신계약	구계약+신계약
손해보험	◇◇◇	사업방법서가 동일하면 비례 보상, 다르면 중복보상	비례보상	구계약의 존재여부를 인지할 경우 구계약에서 선차감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신계약 간 비례보상 구계약의 존재여부를 인지하 지 못할 경우 신계약 간 비 례보상
생명보험 ³⁾	◇◇◇	해당사항 없음		

주: 1) 2003. 9. 30.까지 체결한 보험계약

2) 2003. 10. 1.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3) 현재 11개 생보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5개 생보사에서는 구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 없이 신계약 간에서만 비례분담하고 있음.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2]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현황

(단위: 건, %)

회사명	상해의료비	입원 80%	입원 100%	통원 100%	계
○○	334,879	0	0	0	334,879
○○	224,096	2,164	0	0	226,260
○○	102,487	0	0	0	102,487
○○	94,655	1,423	1,036	0	97,114
○○	83,491	0	1,885	0	85,376
○○	159,699	0	3,349	3,349	166,397
○○	50,732	0	0	0	50,732
○○	1,400,212	109,680	0	0	1,509,892
○○	711,634	43,839	0	0	755,473
○○	545,782	5,089	426	9,096	560,393
○○	635,038	46	195,788	0	830,872
계 ¹⁾	4,342,705	162,241	202,484	12,445	4,719,875
경과계약 건수 ²⁾	12,715,429	1,418,907	788,362	582,761	15,505,459
집적률	34.2	11.4	25.7	2.1	30.4

주: 1) 손보사에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자료로 2002년 8월 기준 계약건수로 집계한 것임. 이에 따라 경과계약 건수로 환산할 경우 합계액보다 적어져 집적률이 더 낮아짐.

2) 2002회계연도(2002. 4. 1.~2003. 3. 31.)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경과계약 건수 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해 손보사로부터 받는 자료로 위 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와는 별개로 운용되며, 손보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모든 보험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 보험개발원 자료 재구성

[별표 3]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비례분담 현황

(단위: 건, 명, %)

회사명	총보상 건수	1개 회사 청구건수	다수 보험회사 간 비례분담 건수 및 인원 ^{주)}							
			2개사		3개사		4개사 이상		합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	70,469	67,873	2,596	1,298	0	0	0	0	2,596	1,298
○○	26,757	25,606	961	481	150	50	40	10	1,151	541
○○	12,199	11,243	856	428	80	27	20	5	956	460
○○	15,360	13,809	1,361	681	154	51	36	9	1,551	741
○○	27,044	26,192	752	376	78	26	22	6	852	408
○○	13,643	12,399	1,050	525	146	49	48	12	1,244	586
○○	130,787	128,708	1,922	961	149	50	8	2	2,079	1,013
○○	97,963	93,273	4,304	2,152	350	117	36	9	4,690	2,278
○○	58,371	52,711	5,038	2,519	482	161	140	35	5,660	2,715
○○	97,531	93,145	4,386	2,193	0	0	0	0	4,386	2,193
합계	550,124	524,959	23,226	11,613	1,589	530	350	88	25,165	12,230
비율	100	95.42	4.58							
	-	-	92.30		6.31		1.39		100	

주) 보험계약자 1명이 3개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총 보상건수는 3건임.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감독원에서 「조직관리규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면서 위 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1. 인력감축계획의 형식적 추진

금융위원회에서 2008. 3. 31. 2008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 금융회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금융규제기관의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5. 2. 금융감독원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53명씩 총 159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1,589명에서 1,430명으로 10% 축소하는 내용의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였다.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정원 숫자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실제 운용하는 총 인원을 축소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1999년 설립 당시부터 1년 이상 국내·외 학술연수

및 외부파견 인력 등을 「정원의 인력」이라는 명칭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하면서, 국내·외 학술연수 인력을 1999년 15명(당시 현원 1,266명의 1.2%)에서 2007년 61명(당시 현원 1,680명의 3.6%)으로, 국제기구 연수인력을 1999년 1명에서 2007년 8명으로 각각 증가시키는 등 [별표 1] “정원의 인력의 연도별 추이”와 같이 2007년 말 현재 총 137명의 「정원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정원 10%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원 감축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2008. 5. 29. 연령 기준에 따른 팀장 보임해지 직원 18명을 위 기관 소속 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이들을 「정원의 인력」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같은 해 9. 8.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6개월 이상 파견”의 경우를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항목에 신규로 추가하였다.

또한 같은 해 8. 29. 위 기관에서 종전에는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던 교육연수 휴직, 국외유학 휴직, 배우자 동반 휴직, 가족 간병휴직 등 청원휴직 인력을 「정원의 인력」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같은 해 9. 8.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2008년 말 현재 청원휴직자 18명이 「정원의 인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08. 6. 23. 및 같은 해 7. 1. 4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기초자치단체에 10명의 인력을 신규로 파견하는 등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증가시킨 결과, [별표 2] “금융감독원 직원 정원 및 총 현원 연도별 추이”와 같이 정원 및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은 감소하였으나, 「정원의 인력」은 2007년 137명

에서 2008년 175명으로 38명 증가하여 위 기관의 총 현원은 2007년 1,680명에서 2008년 1,684명으로 4명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도록 인력감축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정원의 인력」의 한도를 엄격히 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채, 위 기관에서 인력감축계획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2. 상위직 인력 과다 운용

금융감독원에서 「조직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장, 실장, 팀장 등 직위별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현원은 가급적 정원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여야 하고 국장, 실장, 팀장 등 상위직 인력을 직위별 정원보다 많이 운용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2009. 4. 6. 정기인사를 하면서, 팀장 이상 정원은 총 265명(국장 25명, 실장 24명, 팀장S 118명, 팀장J 98명)에 불과한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국장급, 실장급, 팀장급 인사발령을 내고 이들에게 각각 국장, 실장, 팀장과 동일한 직무급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원보다 78명을 초과하여 총 343명(국장 27명, 실장 73명, 팀장S 119명, 팀장J 124명)을 팀장 이상 상위직으로 운용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2007년 말 동 기관의 실장 정원은 26명인데도 실장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을 45명으로 하여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별표 3] “금융감독원의 팀장 이상

1) 직무급(1년 기준): 부서장 27,863,000원, 실장 24,530,000원, 팀장S 19,719,000원, 팀장J 15,141,000원, 미보임직원 12,895,000원(또한, 직무급의 차이는 평가급, 특별상여금, 연차휴가보전수당, 퇴직금 등의 차이를 가져옴)

정원 대비 예산상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 비교”와 같이 매년 팀장 이상 상위직에 대해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3. 보임해지 인력 선정 및 운용 부적정

금융감독원에서 국·실장 및 팀장이 일정 연령이 되면 보임 해지한 후 이들을 교수,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운용하거나 일정기간 연수·파견을 보내는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위 기관의 「취업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되어 있고, 「팀장 보임해지 가이드라인」에서 팀장에 대한 보임해지는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 건강상태 등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보임해지 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실적 등이 아닌 단순한 연령기준에 따라 정년이 4년 이상 남은 국·실장 및 팀장을 강제로 보임 해지하여서는 안 된다.²⁾

또한, 정년까지 4년 이상 남은 인력을 현업부서가 아닌 교수,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운용하거나 연수·파견을 보내는 것은 조직 운용상 비효율적이고, 보임이 없는 무보임자에게 보임자와 같은 수준의 직위를 부여하거나 직무급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04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표 4] “심사대상 선정사유별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과 같이 국·실장의 경우 주로 고령자 위주로 보임 해지자가 선정되고 있고, 팀장의

2) 위 기관의 「인사관리규정」 제86조의 3의 규정 등에 따르면 정년이 1년 남은 1급에서 3급 직원은 총무국 소속 자문역으로 발령을 내어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경우에도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보임 해지 사례는 감소하는 반면 주로 연령(만 54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임 해지가 결정되고 있었다.

또한 위 기관에서는 국·실장을 보임 해지한 후 인력개발실 교수, 원장 자문위원, 감독역량 강화 연구위원 등으로 운용하면서 2년간 실장급으로 발령하여 실장의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팀장의 경우에도 2007년 이전에는 보임 해지 후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현업부서에 배치하였으나, 2008년부터 연령 기준에 따른 보임 해지자에 대해서는 1년간 교육훈련 파견(정원의 인력으로 관리) 후 현업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었다.

4. 수견직원 과다 운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인력을 수견 받아 민원상담,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에 운용하고 있다.

위 기관의 「수견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외부기관과의 공동업무 수행 또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 기관 인력을 수견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견인력의 수와 기간은 그 사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인력 운용의 편의 또는 단순 보조업무를 위해 인력을 수견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 2008년 현재 연수·파견·휴직 등 총 163명³⁾의 자체 잉여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감축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말 현재 총 86명

3) 2008년 말 현재 금융감독원의 「정원의 인력」 175명 중 육아휴직 11명과 가족 간병휴직 1명을 제외한 인원

(총원 대비 4.9%)의 인력을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수건 받아 운용하고 있었다.

또한 위 86명 중 41명은 민원상담 업무를, 24명은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공하는 지원업무를, 19명은 금융 인·허가 등 상담업무를, 나머지 2명은 금융감독원의 고유 업무인 보험대리점 등록을 대행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보다는 단순 보조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민원상담 업무는 이해상충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7. 10. 18. 위 기관에서 전문상담원을 자체 채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2009년 6월 말 현재까지 이를 추진하지 않은 채 수건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 ① 정원 뿐 아니라 정원외 인력에 대하여도 인력감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앞으로는 연수·파견 인력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정원 외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 ② 앞으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상위직 인력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③ 정년까지 4년 이상 남은 보임직원을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보임해지한 후 교수, 연구위원 등으로 운용하거나 연수·파견을 보내는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 ④ 수건직원 운용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 최소한도로 하고 민원상담업무를 수건직원이 주로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연수·파견 인력 등 정원의 인력은 그대로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정원만 형식적으로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정원의 인력 관련 예산 심사 등을 철저히 하고
- ② 금융감독원에서 미보임직원 등을 정원에 근거가 없는 상위직위에 임용하여 사실상 상위직위 인력을 정원보다 과도하게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정원외 인력」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구 분	1999년 ¹⁾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가기관 파견	미상	미상	36	49	51	49	32
지방자치단체 파견	미상	미상	0	0	1	1	14
공공단체 파견	미상	미상	(2)	3 (3)	5 (5)	5 (6)	5 (9)
민간단체 파견	0	0	0	0	0	0	(2)
국가기관 겸임	미상	미상	7	6	0	0	0
국내외 학술연수	(15)	(32)	(38)	54	72	61	65
국제기구 연수	(1)	(1)	(2)	3	6	8	9
교육연수 휴직	0	0	0	(1)	(9)	(6)	2
육아휴직	0	(3)	(4)	5	3	5	11
국외유학 휴직	0	(4)	(10)	(4)	(13)	(10)	10
자문역 ²⁾	-	-	0	6	4	8	3
배우자 동반휴직 ³⁾	-	-	-	-	(1)	(6)	5
가족 간병휴직 ⁴⁾	-	-	-	-	(1)	(1)	1
교육훈련 파견 ⁵⁾	-	-	-	-	-	-	18
합 계	미상	미상	43	126	142	137	175

주: 1) 해당연도 연도말 기준 인원임(괄호 안의 숫자는 정원내 인력으로 합계에서 제외됨)

2) 2002. 5. 11.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 남은 1~3급 직원을 자문역으로 발령하여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3) 2005. 9. 20.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4) 2006. 2. 17.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5) 2008. 5. 29.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2]

금융감독원 직원 정원 및 총 인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구 분	1999년 1월	2002년 말	2004년 말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말
정 원	1,342	1,529	1,545	1,585	1,589	1,536
총 인원	계	1,266	1,533	1,643	1,673	1,684
	정원내 인력	미상	1,490	1,517	1,531	1,509
	정원외 인력	미상	43	126	142	175

주) 매년 말 총 인원에는 12월 31일 퇴직자(12월 31일까지 근무자)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3]

금융감독원의 팀장 이상 정원 대비 예산상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 비교

(단위: 명)

구 분		국장	실장	팀장S	팀장J
2005년	2004년 말 정원(A)	30	24	129	114
	예산편성인원(B)	30	32	126	116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0	8	-3	2
2006년	2005년 말 정원(A)	28	24	120	100
	예산편성인원(B)	30	35	123	110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2	11	3	10
2007년	2006년 말 정원(A)	28	26	124	101
	예산편성인원(B)	29	40	133	110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1	14	9	9
2008년	2007년 말 정원(A)	28	26	125	104
	예산편성인원(B)	29	45	133	111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1	19	8	7

주: 1) 팀장J로 승진한 자에게 승진한 해에는 팀장 직무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팀장J 직무급을 실제 지급한 인원은 정원 및 예산편성인원보다 적음

2) 금융감독원의 2009년도 인건비 예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승인은 개별적인 인건비 산출근거를 토대로 하지 않고 자연증가율, 인력감축 및 임원보수체계 개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의 2008년도 인건비 예산 총액을 조정하여 이루어짐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직위별 정원 현황 제출자료 분석

[별표 4]

심사대상 선정사유별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

(단위: 명)

구 분	심사대상 선정사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심사대상	보임해지	심사대상	보임해지	심사대상	해지	심사대상	보임해지
국·실장	연 령	6	6	11	11	14	13	18	17
	보임기간	5	2	4	3	3	1	2	0
	기 타			1	1				
팀 장	연 령	2	2	18	18	9	8	13	13
	성과저조	14	5	21	4	19	2	5	4
	기 타	3	3	1	0	1	1		

자료: 금융감독원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인건비 과다편성·집행 및 특별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금융감독원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1. 인건비 과다 편성 및 집행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민간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2009년도 수입예산의 73.5%)이 주된 재원이므로, 민간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현원¹⁾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인원과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① 국책금융기관의 경우 전년 말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전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되 정원과 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여 채용에 따른 실소요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을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③ 정부의 경우 정원에 (1-결원율)을 곱해 인건비 예산을 산정하여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율을 인건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별표 1] “연도별 예산편성인원 과다산정 명세”와 같이 매년 예산편성인원을 전년도 현원보다 최소 26명에서 최대 68명까지 더 많이 산정하고, 인건비 지급단가도 [별표 2] “연도별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의 차이 명세”와 같이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함으로써, 2002년 이후 매년 기본급(연공제 직원의 경우 기준봉급)을 [별표 3] “연봉제 및 연공제 직원의 기본급(기준봉급) 과다편성 현황”과 같이 최소 1,753백만 원에서 최대 4,751백만 원까지 과다하게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기본급(기준봉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평가급, 수당, 상여금 등 다른 보수지급항목도 함께 과다 편성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위 기관에서 2002년에 전년도 특별상여금 지급분(기본급의 150%) 중 일부(기본급의 100%)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화²⁾하고서도 다시 인건비 집행잔액 3,869백만 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별표 4] “인건비 집행잔액 사용현황”과 같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224백만 원을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직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인원과 단가를 과다 산정하여 인건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그 집행잔액으로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직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2. 특별상여금 정액 지급

2) 기본급에 통합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본급이 증가할 뿐 아니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도 함께 증가

금융감독원에서 「급여규정」 제32조 제4항 및 제4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상여금 성격의 특별상여금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임직원의 경영 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비록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다른 공공기관³⁾의 경우에 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그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관 전체의 특별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특별상여금 제도가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별표 5]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명세”와 같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특별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하였고, 2005년부터 지급시기를 3차례로 나누어 근로자의 날과 추석에 기준봉급(1개월)의 50%씩 기준봉급의 100%를 정액 지급하고, 연말에만 기준봉급의 50%를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⁴⁾.

이에 대해, 2007년 감사원에서 특별상여금을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위 기관에서는 2007년 이후에도 연말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차등 지급 폭만을 일부 확대⁵⁾한 채 근로자의 날 및 추석에는 특별상여금을 여전히 정액 지급하고 있었다.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며,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며, 각 기관에서는 이와 같이 결정된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액을 다시 임직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

4) 집행간부, 사무·서무직원, 해외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정액으로 지급하였고, 연봉제 직원에 대해서는 위 연공제 직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근로자의 날과 추석에 연봉의 1/36씩 총 2/36를 정액 지급하고 연말에만 연봉의 1/36을 차등지급

5) 연공제 직원의 경우 2006년 기준봉급의 50%±6% → 2007년 100%±6% → 2008년 150%±6%로 확대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성과 향상의 동기부여 목적으로 도입한 특별상여금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 지급률 결정 등의 성과평가 요소 없이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데도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 ① 앞으로 인건비 예산 편성인원 및 지급단가 등을 실제보다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인건비를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특별상여금을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를 부당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특별상여금을 임직원의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연도별 예산편성인원 과다산정 명세

(단위: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년 말 총현원주)(A)	1,476	1,544	1,613	1,654	1,653	1,686	1,693
예산편성 인원(B)	1,523	1,612	1,675	1,680	1,690	1,738	1,740
실제 보수지급 인원(C)	1,524	1,598	1,660	1,661	1,667	1,684	1,692
총현원대비 차이(B-A)	47	68	62	26	37	52	47
실제인원대비 차이(B-C)	-1	14	15	19	23	54	48

주) 총 현원은 연수·파견 인력 등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숫자임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2]

연도별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의 차이 명세

가. 연봉제 직원의 기본급 지급단가(1년 기준)

(금액단위: 천 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02년	예산상 지급단가(A)	44,016	40,025	30,515	24,851	18,202
	실제 지급단가(B)	43,751.40	39,241.44	28,863.12	25,548.72	17,566.20
	차이(A-B)	264.60	783.56	1,651.88	-697.72	635.80
'03년	예산상 지급단가(A)	45,391	41,108	29,914	27,339	19,436
	실제 지급단가(B)	44,994.84	40,556.64	28,639.92	28,483.92	19,414.44
	차이(A-B)	396.16	551.36	1,274.08	-1,144.92	21.56
'04년	예산상 지급단가(A)	48,638	43,825	38,022	30,489	0
	실제 지급단가(B)	47,590.92	43,325.76	37,367.64	29,675.64	0.00
	차이(A-B)	1,047.08	499.24	654.36	813.36	0.00
'05년	예산상 지급단가(A)	49,136.40	44,711.30	38,584.20	31,274.80	0.00
	실제 지급단가(B)	48,664.44	44,457.36	38,505.24	30,907.08	0.00
	차이(A-B)	471.96	253.94	78.96	367.72	0.00
'06년	예산상 지급단가(A)	50,072	45,899	39,818	32,119	0
	실제 지급단가(B)	49,484.04	45,575.04	39,652.08	31,972.92	0.00
	차이(A-B)	587.96	323.96	165.92	146.08	0.00
'07년	예산상 지급단가(A)	51,555	47,539	41,411	33,428	0
	실제 지급단가(B)	50,838.84	47,219.16	41,039.04	33,045.00	0.00
	차이(A-B)	716.16	319.84	371.96	383.00	0.00
'08년	예산상 지급단가(A)	51,603	47,826	41,683	31,947	0
	실제 지급단가(B)	52,075.92	48,326.52	41,893.56	33,359.40	0.00
	차이(A-B)	-472.92	-500.52	-210.56	-1,412.40	0.00

주: 1) 실제 지급단가는 각 직급 월 평균 지급단가에 12를 곱해 1년 기준으로 작성(이하 같음)

2) 실제 지급단가는 별도로 편성된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 예산에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이하 같음)

3) 2008년에 예산상 지급단가보다 실제 지급단가가 높은 것은 2007년에 예산상 인건비 동결방침과 달리 인건비를 2% 인상한 부분이 2008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상 지급단가는 2% 인상이 되지 않은 단가로 편성이 되고, 2008년에 실제로는 지급은 2% 인상된 단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임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이하 같음)

나. 연공제 국내직원의 기준봉급 지급단가(1개월 기준)

(금액단위: 천 원)

구 분		2급	3급	4급	5급	사무직원	서무직원
'02년	예산상 지급단가(A)	3,090	2,845	2,247	1,661	1,255	1,553
	실제 지급단가(B)	3,013.19	2,761.07	2,108.71	1,538.79	1,216.06	1,541.55
	차이(A-B)	76.81	83.93	138.29	122.21	38.94	11.45
'03년	예산상 지급단가(A)	3,293.3	3,136.6	2,393.7	1,754.4	1,378.9	1,683.4
	실제 지급단가(B)	3,268.12	2,965.82	2,288.32	1,629.60	1,340.46	1,669.99
	차이(A-B)	25.18	170.78	105.38	124.80	38.44	13.41
'04년	예산상 지급단가(A)	0	4,315	3,351	2,432	1,914	2,372
	실제 지급단가(B)	4,574.58	4,122.57	3,182.88	2,248.63	1,730.11	2,285.61
	차이(A-B)	-4,574.58	192.43	168.12	183.37	183.89	86.39
'05년	예산상 지급단가(A)	5,203	4,618	3,586	2,655	2,182	2,596
	실제 지급단가(B)	4,888.87	4,441.63	3,403.66	2,448.41	1,931.18	2,476.60
	차이(A-B)	314.13	176.37	182.34	206.59	250.82	119.40
'06년	예산상 지급단가(A)	5,236	4,711	3,658	2,749	2,160	2,684
	실제 지급단가(B)	5,054.25	4,498.97	3,458.56	2,529.27	2,036.72	2,561.40
	차이(A-B)	181.75	212.03	199.44	219.73	123.28	122.60
'07년	예산상 지급단가(A)	5,468	4,710	3,699	2,771	2,284	2,800
	실제 지급단가(B)	5,194.79	4,641.32	3,543.32	2,624.07	2,166.63	2,681.09
	차이(A-B)	273.21	68.68	155.68	146.93	117.37	118.91
'08년	예산상 지급단가(A)	5,394	4,853	3,699	2,826	2,226	2,844
	실제 지급단가(B)	5,085.93	4,793.48	3,627.51	2,665.59	2,228.47	2,761.31
	차이(A-B)	308.07	59.52	71.49	160.41	-2.47	82.69

주) 임원의 기본급과 해외직원의 기준봉급은 그 지급단가가 「급여규정」에 정해져 있어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 간 차이 분석대상에서 제외

[별표 3]

연봉제 및 연공제 직원의 기본급(기준봉급) 과다편성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본급(연봉제)	602	715	882	1,286	641	1,006	380
기준봉급(연공제)	1,151	2,236	2,743	2,462	3,879	3,745	3,183
합계	1,753	2,951	3,625	3,748	4,520	4,751	3,563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4]

인건비 집행잔액 사용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추가 보수인상	-	-	-	2,325	-	2,741	-	5,066
특별상여금 지급	3,869	4,572	-	-	-	-	717	9,158
합 계	3,869	4,572	-	2,325	-	2,741	717	14,224

주)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예산보다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한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보수 및 특별상여금 예산 자체를 전년보다 과도하게 인상하여 편성한 부분은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5]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 명세

(금액단위: 천 원)

지급일자	차등 여부	집행간부	연봉제 직원	연공제 직원	해외근무직원	계
1999. 12. 29.	정액 지급	19,901	231,314	2,509,225	0	2,760,440
2001. 9. 28.	정액 지급	0	297,836	1,079,545	0	1,377,381
2001. 12. 28.	정액 지급	0	0	2,351,162	0	2,351,162
2002. 9. 16.	정액 지급	0	385,387	1,472,376	0	1,857,763
2002. 12. 27.	정액 지급	29,998	403,596	1,577,395	0	2,010,989
2003. 12. 31.	정액 지급	63,894	913,702	3,537,104	57,373	4,572,073
2004. 9. 23.	정액 지급	44,999	805,296	1,982,392	29,165	2,861,852
2004. 12. 31.	정액 지급	46,111	838,913	2,100,475	33,247	3,018,746
2005. 4. 29.	정액 지급	52,717	900,970	2,123,563	30,454	3,107,704
2005. 9. 15.	정액 지급	52,717	871,302	2,145,314	34,120	3,103,453
2005. 12. 30.	차등 지급	52,717	870,906	2,206,461	30,726	3,160,810
2006. 4. 28.	정액 지급	72,826	939,273	2,189,135	28,758	3,229,992
2006. 10. 2.	정액 지급	79,076	904,020	2,247,892	31,814	3,262,802
2006. 12. 29.	차등 지급	84,057	914,972	2,334,207	32,770	3,366,006
2007. 4. 30.	정액 지급	86,666	1,024,624	2,282,670	31,946	3,425,906
2007. 9. 20.	정액 지급	86,666	973,933	2,301,517	31,946	3,394,062
2007. 12. 31.	차등 지급	94,999	959,600	2,331,720	33,500	3,419,819
2008. 4. 30.	정액 지급	88,958	1,080,305	2,314,518	29,168	3,512,949
2008. 9. 11.	정액 지급	95,624	1,031,957	2,323,530	32,405	3,483,516
2008. 12. 31.	차등 지급	95,624	1,025,788	2,364,728	30,571	3,516,711
2008. 12. 31.	3급이하 정액지급	0	80,087	631,026	5,562	716,675
2009. 4. 30.	정액 지급	0	1,088,678	2,285,798	36,340	3,410,816
합 계		1,147,550	16,542,459	46,691,753	539,865	64,921,627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가 2008. 10. 2. 금융투자업(증권중개업)의 인가를 신청하자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위탁한 후, 심사안건을 검토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2조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008-25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의 인가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하여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와 그 임원이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이번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 전인 2008. 2. 29.에 증권 위탁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설립하고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 9개 대부업자의 311개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매매주문을 수탁한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5. 7. “◆◆◆◆이 대부업체의 선물·옵션 계좌 대여행위임을 알고도 불건전 매매주문을 수탁한 것은 증권업의 건전영위를 곤란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¹⁾

따라서 ◆◆◆◆에서 불과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 2. 「자본시장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미 인가받은 ◆◆◆◆에 증권중개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가 신청하였으므로 위 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부의안건을 작성할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었음을 명시하여야 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부의안건을 검토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감독원에서는 ◆◆◆◆이 대부업체의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매매 주문을 수탁한 데 대하여 같은 해 7. 24. 위 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기관주의’는 금융감독원의 내부기준상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누락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2009. 1. 20. 부의안건을 작성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그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부의하였다.

그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 21.과 같은 해 1. 28. ◆◆◆◆에 대하여 위 심사안건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1) ◆◆◆◆에서 금융위원회 최종의결 하루 전인 2008. 5. 8.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함

증권중개업을 인가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심사안건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여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업체에 증권중개업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지도·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1997. 7.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를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용정보업자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도록 하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¹⁾를 등록 조치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과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위 위원회는 위 연합회에 집중되는 정보는 각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과 회계법인 등에서 여신심사, 여신 건전성 감독, 회계감사 등에 폭넓게 이용되므로 신용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위 연합회가 2008. 10. 20.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실시한 일제 정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위 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정보 1,000만여 건의 1.88%에 해당하는 188,903건이 오류가 있거나 누락되어 일제정비를 통하여

1) 모든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을 정사원으로 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준사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위 법에 따라 7천여 개의 금융기관, 공공기관, 각종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당국의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

수정되는 등 오류 및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각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바로 등록 또는 해지하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국은행연합회 일제정비 결과

구 분	연체 정보	개인대출 정보	개인채무보증 정보
전체 등록 건수	1,000만여 건	3,200만여 명	410만여 명
정비 대상 건수	188,903건	776,834명	22,522명
비율(%)	1.88	2.42	0.54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자료 재구성

그러나 위 위원회에서는 위 연합회로부터 신용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협의회 안전을 보고받거나 2007. 7. 12.부터 같은 해 7. 16.까지 4일간 금융감독원을 통해 위탁검사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지도·감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위 위원회에서는 위 연합회로부터 위와 같이 일제정비²⁾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결과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거나 정비상태를 표본 점검하는 등 적절하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09. 7. 2.부터 같은 해 7. 8.까지 감사원 감사 시 위 일제 정비 후 6개월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연합회에 신용정보 변동 사항을 통보한 실적을 조사³⁾한 결과, [표 2]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위 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있는 자로 등록된 100명이 분할 상환 등으로 「신용정보 관리규약」(2009. 6. 12.)에 따른 신용정보 등록해제 대상자인데도 위 연합회에 신용정보 해제를 요청하지 않아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2009. 6. 30. 현재까지

2)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2003. 2. 24.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일제 정비 작업을 한 지 5년이 지난 2008년에 다시 실시.

3)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7,000여 개의 기관 중 특정 기관에 대하여 조사.

짧게는 62일 길게는 1,586일간 연체 등록되어 있는 등 두 기관에서 443명이 짧게는 11일에서 길게는 1,586일간 신용정보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연체 등록 또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표 2] 신용정보 변동 미반영 현황

(단위: 명)

구 분	연체 정보 등록		연체 정보 해제	
	대상자 ⁴⁾	미 등록자	대상자	미 해제자
한국주택금융공사	107,502	-	33,783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4,654	238	25,969	96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처 신용정보 등록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연체등록자 100명 중 카드 발급을 신청한 5명 모두 위 연합회의 연체등록자라는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었고 2명은 카드 사용이 중지된 후 해제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아 신용정보 제공자의 경제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그 외에도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는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을 취급하면서 잘못된 신용정보를 기초로 이들에게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전국은행연합회와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 변동사항 관리를 게을리하여 신용양호자가 피해를 입거나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 대상자는 2006년부터 연체 등록이나 해제 사실을 위 연합회에 통보해 준 건수를 집계한 것임.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금융법규 관련 유권해석사례 공개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7. 6. 4. 감독행정을 체계적·단계적으로 규범화하고자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 회의를 거쳐 확정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2007. 6. 8. 언론 보도)에 따라 금융법규와 관련된 유권 해석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 중 “금융감독 법규의 적법성·투명성 확보” 내용에 따르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관련 법규의 유권해석 및 실무 해석사례가 공유 또는 공개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관련 기관의 법규 해석사례를 공유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08. 3. 3. 출범 이후, 같은 해 7월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개통하면서 그간 민원에 회신하는 형태로 질의 당사자에게만 통보하여 오던 유권해석사례를 같은 해 7. 1.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홈페이지인 “e-금융민원센터”에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

방안”의 취지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등 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신속하게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전신인 구 금융감독위원회와 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3. 3. 금융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2009. 6. 30.까지의 유권해석사례의 공개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공개가 가능한 유권해석사례 총 326건 중에서 82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244건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¹⁾

[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공개 현황(2009. 6. 30. 현재)

(단위: 건, %)

	접수건수	완료건수 (A)	비공개사유 ²⁾ 해당건수 (B)	공개건수 (C)	미공개 건수 (A-B-C)	공개 비율 [C/(A-B)]
2008년	259	257	74	80	103	25.2%
2009년 상반기	298	226	83	2	141	1.4%
합 계	557	483	157	82	244	25.2%

자료: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위 홈페이지에 구 재정경제부와 구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의 유권해석사례 총 134건(2006년도 회신 60건, 2007년도 회신 74건)만 등록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전체 유권해석사례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금융위원회 출범 이전에 구 재정경제부와 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회신한 유권해석사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 위 유권해석사례 공개제도가 금융정책의 일관성·투명성 확보라는 애초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1) 따라서 유권해석사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위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시중에서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2) 동일·유사 내용, 신청인 철회, 유선 답변, 회신 후 법령 개정, 단순 법령안내 등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
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권해석사례를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는
등 유권해석사례 공개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파견 인력 운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외 기관 또는 단체(이하 “민간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파견받거나 소속 공무원을 국가기관으로 파견하고 있다.

위 위원회에서는 2008. 2. 29.부터 2009. 6. 30. 현재까지 민간기관으로부터 총 73명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게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41조의2 및 「공무원 임용규칙」(2008. 9.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제42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며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민간기

관의 장과 사전협의 후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 발령하고 파견 목적 및 심의결과 등을 첨부하여 민간전문가의 파견사실을 파견 후 1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 근무하거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파견 전에 민간전문가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면밀하게 심의·검토함으로써 제도에 맞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제도가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로 파견 받은 직원을 비서로 활용

그러나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2009. 7. 17. 민간전문가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8. 3. 21.부터 위 위원회 △△△△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공사 산하 ○○○○공사 계약직 ○○○은 위 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구조개선과에서 ●●●●공사에 위 사람을 공적자금 업무 관련 민간전문가로 파견 요청을 하여 같은 해 4. 21.부터 2010년 3월¹⁾까지 같은 파에 인사 발령을 내고도 실제로는 2008. 3. 21.부터 2009. 5. 31.까지 위 위원회 △△△△에 비서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위 사람과 금융불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 파견받은 ○○○○공사 ◎◎◎◎²⁾을 파견 사유와 다르게 비서로 근무하게 하고 있었다.³⁾

또한, 위 위원회 혁신행정과(현 행정인사과)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민간전문가 파견사실을 통보하면서 ○○○은 공적자금과 관련된 업무 등에서 민간전문가의

1) 위 두 사람을 대상으로 2008. 4. 21.부터 2009. 4. 20.까지 파견 요청을 하여 파견 근무토록 하고 이후 2009. 3. 20. ●●●●공사에 파견기간 연장 협조요청을 하여 1년간 파견 기간을 연장.

2) ◎◎◎은 2008. 3. 21.부터 2009. 6. 3.까지 △△△△△△, 같은 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비서로 근무하였고 ◎◎◎과 ○○○은 감사원 예비조사(2009. 5. 28.) 이후에 각각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3) ◎◎◎은 은행과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 지원에 위 사람이 필요하고 부보금융기관의 경영분석 및 금융권별 리스크 관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아 지원업무에 적임자로 선정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문서를 기안 작성하여 2008. 4. 11. 혁신행정과에 관련 문서 송부.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파견받은 것이며 ●●●●공사에서 부보금융권별 보험료 납부를 통한 목표기금규모 설정 등 예금보험제도 연구, 정리금융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등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는 위 두 사람⁴⁾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 것처럼 파견목적과 원 소속기관 담당업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민간전문가 파견

한편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2009. 7. 6. 위 위원회에서 제출한 민간전문가 파견 현황과 실제 근무 인력을 비교해 본 결과, [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민간전문가 수건 명세”와 같이 위 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직무파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도 파견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 직원 ◆◆◆ 등 2명을 2009. 2. 17. 및 같은 해 3. 23.부터 같은 해 7. 2. 현재까지 각각 근무하도록 하는 등 위 위원회 3개 과에서 민간전문가 4명⁵⁾을 위와 같이 심의절차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 해 2. 17.부터 같은 해 7. 2. 현재까지 짧게는 54일에서 길게는 136일 동안 파견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민간전문가 수건 명세

4) ○○○○은 금융 불공정거래 감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파견받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업무와 금융기관 상시 감시 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으나 위 두 사람은 ●●●●공사에서 비서나 서무 업무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근무토록 하다가 금융위원회에 파견하기 위하여 정리금융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한 인력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 전혀 경험 및 전문지식이 없음.

5) 이 중 자본시장과에 근무한 ◆◆◆ 등 3명은 감사원 예비조사 실시(2009. 5. 28.) 이후인 2009. 7. 2.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구 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소속 및 직위	◇◇◇◇ 대리	◇◇◇◇ 대리	■■■■ 과장	◇◇◇◇ 대리
실제파견 근무일	2009. 2. 17.	2009. 2. 17.	2009. 3. 22.	2009. 5. 10.
근무 부서명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파견종료일(실제)	2009. 7. 2.	2009. 7. 2.	2009. 5. 22.	2009. 7. 2.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3. 전문성 없는 업무에 민간전문가 파견 운용

한편 위 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는 국회 대응 등의 목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유를 들어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 소속 ◆◆◆ 등 2명을 파견 받아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국회대응자료 작성 및 지원에 활용하는 등 민간전문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1항”과 “3항”의 내용과 같이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부서에서도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위 위원회 직원처럼 운용하는 등 위 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일부 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금융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전문가라는 명목으로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위 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2008. 9. 23.부터 2009. 6. 10.까지 약 9개월간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상 필요하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민간전문가 파견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근무시키거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금융위원회)

2010. 4.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	---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3
------------------------	---

1·2.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주의·시정) ...	7
---	---

3.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주의)	11
--	----

4.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주의)	18
---------------------------	----

5.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주의)	20
---------------------------------------	----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및 출처 등에 의하여 검증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0. 3. 15.부터 같은 해 3. 19.까지(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0. 4. 29.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2009. 12. 31. 현재)

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림 1]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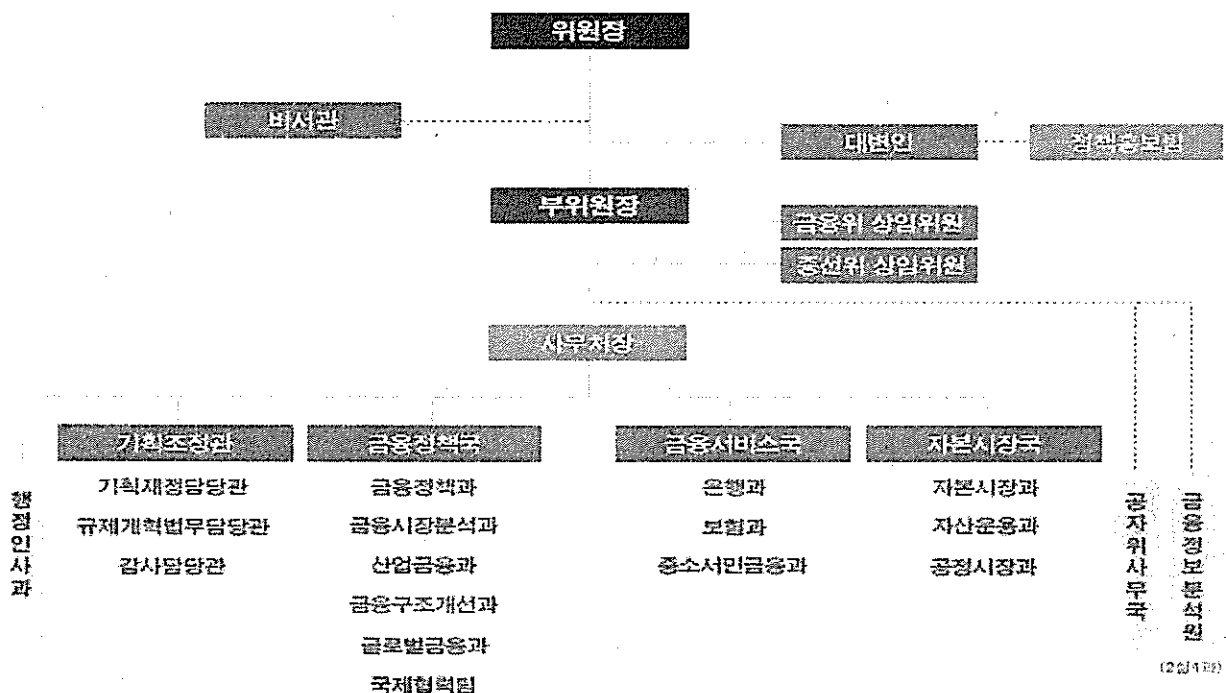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다.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5과 2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그림 1] 조직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230	220	2	2	4	4	200	190	1	1	11	11	12	12
본 부	164	161	2	2	4	4	137	134	1	1	9	9	11	11
소속기관	66	59	0	0	0	0	63	56	0	0	2	2	1	1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함.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6,811억 원(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기금 55조 8,76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0.5%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서민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2조 7,000억 원(한국산업은행 9,000억 원, 중소기업은행 8,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6,000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4,000억 원)을 출자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회 계 구 분		'09세출예산	'08세출예산	증감률
총 계		586,811	424,263	38.3
일 반 회 계		28,868	3,037	850.5
기금	소 계 (관리주체)	558,766	421,457	32.5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	110,362	89,972	22.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	1,560	1,721	△9.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57,909	30,743	88.3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24,595	16,030	53.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20,912	13,250	57.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11,168	9,757	14.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117,819	170,412	△30.8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12,085	89,567	△86.5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202,352	-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중 [표 3]과 같이 위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2조 7,719억 원, 회계기금 간 거래 822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집행금액은 327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5억 원으로 전체의 68.8%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는 102억 원)한다.

[표 3]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부 집행 현황

(금액단위: 억 원)

일반회계	28,868
인건비	139
기본경비*	86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출자 27,0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650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39 - 역모기지론 출연 30	27,820 (좌측 금액 합은 27,719)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786 - IBRD차관 원금상환 31 - IBRD차관 이자상환 5	822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만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3.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가. 임무(Mission) 및 비전(Vision)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였다.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12개의 성과목표, 45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3개와 64개, 계 77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시정요구

제 목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2005. 8. 31.)과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2007. 1. 31.)에 근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리우대 모기지론으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개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00백만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실제 대출은 개별 은행에서 취급)해 주면서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별인하(0.5~1.0%p)¹⁾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말 현재까지 6,871명에게 4,766백만 원을 이차보전 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1) 16백만 원 이하: 1.0%p 인하, 18백만 원 이하: 0.75%p 인하, 20백만 원 이하: 0.5%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르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 전산자료를 조회²⁾하여 대출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대출실행 전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다주택 소유 여부를 재확인하며 대출실행 시 1주택 초과 보유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출실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출자와 약정한 「추가약정서」에도 “대출 실행일 이후에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 이하인 상태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와 세대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2005년 11월 상품 출시 이후 사후적으로 한번도 검증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게다가 위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약정서」에는 사후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을 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2010년 3월 감사원에서 대출자와 그 배우자의 다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취급 금융기관의 부주의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한 ‘취급기준 위반’ 사례가 3건(대출잔액 200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3백만 원), 대출 취급 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대출 후 주택 추가구입 등으로 사후적으로 다주택이 된 ‘사후적 자격 상실’ 사례가 31건(대출잔액 1,552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26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백만 원)으로 다주택 소유자 총 34명에게 대출잔액 1,752,151,844원, 부당 이차보전금 29,131,935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³⁾

[표] 대출 부적격자 다주택 소유 현황

(단위: 명, 건, 원)

구 분	부적격 대출자 수	발견 주택수	부적격 대출잔액	부당 이차보전금
취급기준 위반 ¹⁾	3	6	200,072,054	2,939,440
사후적 자격 상실 ²⁾ (3주택자)	31 (3)	65 (9)	1,552,079,790	26,192,495 ³⁾
계	34	71	1,752,151,844	29,131,935

주: 1. 주택소유자에게 대출실행

2. 세대별 1주택 사후유지 요건 위반(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 주택 추가 구입 21명)

3. 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은 결혼일자를 알 수 없어 부당 이차보전금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특히 34명 중 3명은 금리우대 모기지론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2채 더 취득하는 등 주택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산광역시 *** ** OO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던 OOO의 경우 2008. 5. 7. 위 주택을 지인에게 증여하여 2008. 5. 8.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2008. 6. 20. 증여를 해제⁴⁾하는 등 사기성 대출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 한편 대출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57건, 대출잔액 3,638백만 원으로 나타나 위 직계 존비속이 대출자의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의] 앞으로 다주택 소유자에게 금리우대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시정] ①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의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3건의 대출금 200,072,050원을 회수하고 이차보전금 2,939,440원을 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한편, '사후적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31건의 대출금 1,552,079,790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 '사후적 자격 상실' 건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대출자와의 「추가약정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12개)-관리과제(4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성과지표(성과목표 성과지표 1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64개)를 설정하고 각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3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중 10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55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표 1]과 같이 4개 전략목표의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84% 수준이다.

[표 1] 전략목표 달성현황

전 략 목 표	사업규모(억 원)	성과지표 실적 (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I.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33,667	17/17 (100%)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23.1	15/19 (79%)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52.8	13/16 (81%)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4,709.5	20/25 (80%)
총 계	38,452.4	65/77 (84%)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0. 3. 15.~3. 19.) 중 위 13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77개 성과지표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① “법 개정 여부”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위 판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64개 중 14%인 9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표는 목표 달성 여부가 국회 심의·통과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등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표 2]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황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Ⅰ-3-정책②)	RBC제도 시행	관련 법규 개정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Ⅱ-1-정책①)	은행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금융상품 판매체계 개편 (Ⅱ-1-정책②)	(가칭)금융상품판매법 제정	법 제정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Ⅱ-1-정책③)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회계·공시제도 개선 (Ⅲ-1-정책①)	국제회계기준 관련 시행령 및 규정개정	시행령 및 규정개정
불완전판매 제발방지 추진 (Ⅳ-2-정책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
파생금융상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Ⅳ-2-정책②)	관련 법령 개정	법령 개정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개선 (Ⅳ-2-정책③)	내부통제개선	법
헤지펀드 도입 (Ⅳ-3-정책②)	헤지펀드제도 도입 여부	시행령 개정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② 예산액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Ⅳ.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Ⅳ-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Ⅳ-2-재정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
 (성과지표) 기금출연실적(측정방법: 기금출연액, 목표치: 650억 원)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의 성과지표를 ‘기금출연실적’, 목표치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금 예산액 ‘65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기금은 한국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있고, 위 관서에서는 매년 전년도에 기확정된 예산액 전액을 한국은행으로 전출하고 있어, 목표치인 기금출연액

이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③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재정② 저축의 날 행사 개최
(성과지표) 저축의 날 행사 개최(측정방법: 개최 여부, 목표치: 저축의 날 행사 개최)

관리과제 “저축의 날 행사”의 경우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저축의 날 행사 개최’로 하고 있으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4호)에 따르면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에 저축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1973년 법령 제정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등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④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3.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3-재정③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측정방법: FTA 금융협상 및 MOU체결실적, 목표치: 개선)

위 관서에서는 “금융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성과지표를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지원 실적’으로 설정하여 측정방법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 목표치를 ‘개선’으로 계획하였다.

그러고는 2008년 대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목표치 ‘개선’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개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달성률이 위 관서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리과제의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①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정책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측정방법: 펀드규모, 목표치: 300억 원)

위 관서에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시달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 추진계획」(2009. 9. 28.)에 따르면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의 수정은 환경변화로 정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등 환경변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방법에 따르되, 각 부처가 참여하는 수정검토 TF를 반드시 거친 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무총리실 규정과 달리 목표치를 '100억 원(3년간 300억 원)'으로 임의로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를 근거로 100% 달성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결과 실제 달성률은 33.3%에 불과하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② 당해 연도의 실적치가 아닌데도 실적치로 제시

(전략목표) 1.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성과목표) 1-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관리과제) 1-1-정책②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성과지표) ①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측정방법: 구성 여부, 목표치: 구성 여부)

②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측정방법 및 목표치: 위원 신규 선임 및 인원 보강 여부)

위 관서에서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2008년 11월 이미 설치되었고, 위원의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등 관련 기관장이 선정하는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말 이미 각 기관에서 선정하는 등 위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되었거나, 과거 업무추진의 결과로 목표치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어 당해 연도 업무추진 성과와 무관한데도 당해 연도의 실적인 것처럼 표시하고는 목표달성으로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관련되어 있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과거연도의 실적을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로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

임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
비전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Ⅰ.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Ⅰ-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 성과목표 Ⅰ-2.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 성과목표 Ⅰ-3.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 ▪ 전략목표 Ⅱ.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Ⅱ-1. 규제혁파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 성과목표 Ⅱ-2.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자율성 제고 - 성과목표 Ⅱ-3.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전략목표 Ⅲ.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Ⅲ-1. 핵심 금융인프라의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 성과목표 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 성과목표 Ⅲ-3. 녹색성장 지원 ▪ 전략목표 Ⅳ.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Ⅳ-1.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성과목표 Ⅳ-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 성과목표 Ⅳ-3. 금융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추진으로 변화된 금융수요 충족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는 2009. 3. 16. ○○○○연구원과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3. 16. ~ 9. 16. 계약금액: 45,000,000원)을, 같은 해 8. 28.에는 ○○○○○ 산학협력단과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8. 28. ~ 11. 9. 계약금액: 35,000,000원)을 체결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상 최종보고서는 각각 2009. 9. 16. 및 같은 해 11. 9.까지 50부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자 위 관서에서는 각각 같은 해 12. 15. 및 12. 28.까지로 작성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연구용역 계약서」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사완료한 후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지체상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이들 최종보고서 초안¹⁾을 2009년 12월 말경 컴퓨터 파일로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보고서 50부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2. 23.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접수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28. 두 과제의 용역비 전액 총 80,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보고서 50부는 2010년 3월 말 현재 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용역 마무리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 저하로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완성도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보고서 초안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차이: 최종보고서는 2010년 2월 FATF 총회에서 FATF 측과 협의한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이행계획(「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포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게 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자에게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 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미수납액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과징금 등을 불납결손처분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표 1]과 같이 2008년에 과징금 및 과태료 26,194백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7,825백만 원을 수납받고 2,017백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 미수납된 16,352백만 원 및 신규 13,921백만 원 등 총 30,273백만 원을 부과하여 7,251백만 원을 수납받고 834백만 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다.

1) 2005. 6. 29. 금융위원회 수입징수관(행정인사과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과징금 등 징수업무 및 결손처분관련 중요사항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표 1]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해당연도	징수결정액 ^{주)}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소계	납기 미도래	거소불명· 재력부족	징수유예
2008년	26,194	7,825	2,017	16,352	2,062	13,810	480
2009년	30,273	7,251	834	22,188	4,210	15,394	2,584

주: 전년도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됨.

자료: 금융위원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면제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²⁾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 불납결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채납자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징수결정 금액을 수납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결정통지 등의 사유가 있어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을 때에만 불납결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 3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 관서의 결손처분 내역 중 결손액이 큰 대상을 표본조사한 결과 결손액이 690백만여 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04. 7. 15. 폐업)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43백만여 원³⁾과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 2001년 8월 14일 제작)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
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

3) 2002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장부가액 12백만여 원, 시가 20백만여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2007. 4. 27. 재산조사 결과 재산이 없었으며 2008. 11. 28. 현장조사 결과 최후 주소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표 2]와 같이 위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의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이 2010. 11. 23.⁴⁾인데도 과징금 51백만여 원은 2008. 10. 29.에, 639백만 원은 2009. 5. 2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불납결손하였다.

[표 2] (주)○○○○○의 불납결손 내역

(금액단위: 원)

부과일	과징금 체납액	위원회 판단 소멸시효 완성일	불납결손 결정일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
2003. 7. 23.	51,400,000	2008. 10. 29.	2008. 12. 11.	2010. 11. 23.
2002. 6. 14.	639,000,000	2009. 5. 22.	2009. 12. 29.	2010. 11. 23.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관서에서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였으면 회수할 수 있었던 과징금(○○○○공제조합 출자금만도 2002년 기준 20백만여 원, 2010년 기준 43백만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⁵⁾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결손 처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2004. 5. 31. 위 관서는 (주)○○○○○에 부과한 과징금 51백만여 원과 639백만 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소멸시효 중단 목적으로 (주)○○○○○ 소유 아파트(울산광역시 남구 *** ***)를 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이 2005. 11. 24. 법원 강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11. 24.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0. 11. 23.임.

5) (주)○○○○○의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없다가, 2007. 11. 27. 북부산세무서에서 889백만여 원을, 2008. 1. 17. 서대구세무서에서 51백만여 원을 압류함. 따라서 위 관서는 2007년 11월 이전에 채권압류한 후 법원에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음.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

(단위: 건)

	2008년 (‘08.3.~‘08.12.)	2009년 (‘09.1.~‘09.12.)	2010년 (‘10.1.~‘10.6.)	합계
접 수	2673	4072	2700	9445

○ 항목별 민원 접수 현황

(단위: 건)

	일반 민원	고충 민원	일반 질의	법령 질의	진정	제도 개선 건의	민원 이의 신청	합계
2008년 (‘08.3.~ ‘08.12.)	1764	476	48	132	160	91	2	2673
2009년 (‘09.1.~ ‘09.12.)	954	2500	53	186	289	90	0	4072
2010년 (‘10.1 ~ ‘10.6.)	987	413	52	119	723	405	1	2700
합계	3705	3389	153	437	1172	586	3	9445

○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처리완료	민원취하/ 착수 전 해결	민원인 · 민원요지 불명	처리중	합계
2008년 (‘08.3.~ ‘08.12.)	2459	163	51	-	2673
2009년 (‘09.1.~ ‘09.12.)	3707	323	42	-	4072
2010년 (‘10.1 ~ ‘10.6.)	2540	113	22	25	2700
합계	8706	599	115	25	9445

6. 민원 처리 결과 통보 현황

□ 연도별 민원처리 결과 통보 현황

(단위 : 건)

처리 결과 통보 방식	2008년 (‘08.3.~’08.12.)	2009년 (‘09.1.~’09.12.)	2010년 (‘10.1.~’10.6.)	합계
홈페이지	10	38	242	290
서신	365	722	339	1426
이메일	1155	1629	1074	3858
SMS(문자)	222	403	249	874
서신 + 이메일	33	51	13	97
서신 + SMS(문자)	22	35	19	76
이메일 + SMS(문자)	782	1061	700	2543
서신 + 이메일 + SMS(문자)	84	133	64	281
합 계	2673	4072	2700	9445

7. 정보통신 보안 관련

- 최근 3년간 보안사건 발생 현황
(연도별, 유형별, 건별 발생사유, 피해액, 재발방지 대응 방법 등)
- 2009년 6월 발생한 일명 디도스(DDos)공격 피해 내역
- 보안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에 통보 및 업무 협조 내역
- 보안담당조직 및 인력, 예산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보안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9년도에 발생한 디도스(DDos)공격시 금융위는 DDOS공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없었음

☐ 또한, 보안담당조직 및 인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2명(5급1명, 6급1명)이 자체 정보화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 o 2010년도 정보통신 보안 관련 예산은 정보화예산 5.7억원중 39%인 2.2억원을 편성하여 개인정보유출 차단 시스템, 인증S/W 도입 등을 추진중에 있음

8. 인력운용 현황(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 정원 및 현원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 신규 채용 및 퇴사현황
- 청년 인턴 채용 현황(규모, 기간, 예산, 실제 업무, 중도퇴사자 현황 등)

☐ 정·현원 현황

	정원	현원
본부	164	163
금융정보분석원	54	5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2	10
전체	230	223

☐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본부	156	7
금융정보분석원	47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9	1
전체	212	11

☐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신규 임용 및 퇴사 현황

	신규 임용*			퇴사**		
	08년	09년	10년	08년	09년	10년
본부	11	26	6	11	21	7
금융정보분석원	-	2	1	2	1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1	1	-	-	-
전체	11	29	8	13	22	7

* 신규임용 :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임용 등

** 퇴사 : 의원면직, 명예퇴직, 계약 해지, 계약 만료 등

☐ 청년인턴 채용 현황

구분	규모	기간	예산	실제업무	중도 퇴사자*	계약 만료
09년	8명	5월	22,000천원	행정지원 및 영문번역	7명	1명
10년	5명 (현재까지 3명 채용)	5월	15,000천원	행정지원 및 영문번역	2명	1명

* 중도퇴사 사유 : 취업 및 대학원 진학 등 취업 준비

9.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 파견 현황

☐ 금융위에서 파견 보낸 공무원

직 급	파견 기간	파견기관
고공단 1명, 4급 2명	'08.04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급 2명	'08.04 ~	미래기획위원회
4급 1명	'08.10 ~	국무총리실
4급 1명	'08.04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고공단 1명, 4급 1명, 5급 2명	'08.12 ~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고공단 1명, 4급 1명, 5급 2명	'09.02 ~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 금융위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

원소속	직급	파견 기간	파견 부서
검찰청	6급 1명, 7급 1명	'08.03 ~	금융 정보 분석원
법무부	5급 3명	'08.03 ~	
경찰청	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2명	'08.03 ~	
관세청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08.03 ~	
국세청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08.03 ~	

☐ 금융위에서 파견 받은 민간전문가

- 별첨자료 참조(민간전문가 파견 현황)

민간전문가 파견 근무현황(2010.6월말 현재)

원소속	직위	성명	파견실국	과	파견 시작 일	파견종료일	담당업무	파견사유	비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00	본부	자문관실	2009.02.16 2010.02.16	2010.02.15 2011.02.15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경제 자문지원을 위한 자문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경제 자문지원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원 필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홍00	본부	자문관실	2009.05.21 2010.05.21	2010.05.20 2011.03.29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금융권안 사안 검토 등의 자문과 업무 지원을 위한 관련 자료의 분석 검토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경제 자문지원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원 필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황00	본부	자문관실	2009.05.21 2010.05.21	2010.05.20 2011.03.29	국내외 금융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서 작성, 위원장 대외기고 및 행사 참여시 기고문 연설문, 책자 등 작성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경제 자문지원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원 필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서00	본부	법률자문관실	2010.03.30	2011.03.29	금융감독정책 수립 및 감독업무 수행에 관한 법률자문, 감찰에 이질되는 사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 등의 업무를 위한 관련 자료 및 보고	법률자문관 소관업무관련 법률적 정책 대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원 필요	
자산관리공사	주임	김00	본부	법률자문관실	2009.05.21 2010.05.21	2010.05.20 2011.05.20	법률자문관의 소관업무(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의안상 불분명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담당인건	법률자문관 소관업무관련 법률적 정책 대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원 필요	
자산관리공사	대리	하00	본부	행정인사과	2010.03.30	2011.03.29	금융관련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금융관련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재권한 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갖춘 재권 관리전문가를 파견 받아 효율적인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지원 필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안00	본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0.03.30	2011.03.29	내부 법률자문, 법령 및 감독규정 제·개정안 심사, 전심사, 금융위 및 증선위 상정안건의 법률적 타당성 검토	금융위 업무특성상(인허가, 검사 및 제재, 적기사정조치, 승인 등) 높은 법률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업무전반에 걸쳐 내부 법률자문 기능 필요	
금융결제원	차장	박00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0.03.30	2010.07.31	금융위 소관 금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금융분야 전산시스템 위기관리 업무	금융위 소관 금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금융분야 전산시스템 위기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원 필요	
코스콤	차장	김00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0.05.24	2011.05.23	개인정보보호관리 및 정보보안 관련 지침 제정	금융위원회 전산분야 정보보안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원 필요	
중소기업은행	과장	김00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10.07.01	2011.06.30	주행임대대출 동향 모니터링,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파악, 관련 통계자료 작성/유지	금융회사 여신진반에 대한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원 필요	
산업은행	대리	이00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10.05.24	2011.05.23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개정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제고되고 관련 문익가 급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회사 근무 경험 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원 필요	
한국증권금융	대리	이00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2010.05.24	2010.07.31	주식시장동향분석 및 금융시장관련자료수집분석 업무	주식시장 및 글로벌 금융시장 수시 모니터링 및 이슈사항 분석 업무수집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원 필요	

원소속	직위	성명	파견실국	과	파견 시작 일	파견종료일	담당업무	파견사유	비고
산업은행	과장	김00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2010.03.30	2011.03.29	외환시장 모니터링 및 외환 건전성 감독 지원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분석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갖춘 금융전문가를 파견 받아 적절한 정책 수립에 기여	
산업은행	과장	배00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10.02.01	2011.01.31	국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 병행 지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에 기여	
기술보증기금	차장	김00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10.01.20	2011.01.19	신용보증제도 관련 조사·분석, 통계관리 및 민원처리	신용보증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업무 수행, 신·기보 관련 민원업무 처리, 신용보증 지원현황 파악 및 통계자료 작성	
예금보험공사	책임여	윤00	금융정책국	금융구조개선과	2010.02.01	2011.01.31	예보 자산매각, 예보채상환기금 관리	예금보험공사의 실무진행 업무간의 원활한 조율, 국회보고 관련 통계작성 등의 업무에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임00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2010.03.30	2011.03.29	FSB 업무 및 FTA 관련 업무지원	한국의 금융중심지 달성을 위한 국가정책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지원 필요	
자산관리공사	대리	서00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2009.05.21 2010.05.21	2010.05.20 2011.05.20	금융클러스터 지원	G20 업무지원 및 금융당국간 MOU 검토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원필요	
수출입은행	과장	장00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2010.01.20	2011.01.19	FSB, G20, IMF 등의 국제기구와의 접촉 및 외국 기관과의 MOU체결 및 대외협력 업무	FSB, G20, IMF 등의 국제기구와의 접촉 및 외국 기관과의 MOU체결 및 대외협력 업무와 관련한 지원역할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이00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10.03.30	2011.03.29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업무 지원	보험관련 업무는 전문성·복합성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며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	
보험개발원	수석	신00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10.03.30	2011.03.29	보험산업 동향 점검 및 상품 관련 업무	보험관련 업무 경험 많은 민간전문가의 지원을 통한 효율적 업무지원 및 자문역할 수행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노00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09.05.21 2010.05.21	2010.05.20 2011.03.29	대부업, 상호금융관련 업무	대부업, 신탁 등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최00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09.05.21 2010.05.21	2010.05.20 2011.03.29	여신전문금융업, 상호저축은행 관련업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탁,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파견받아 적절한 금융정책수립 및 집행지원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최00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10.03.30	2011.03.29	은행산업 동향 파악, 글로벌 금융규제, 인허가, 제재 관련 업무지원	국내 은행산업동향 및 각종 통계수집을 위하여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원필요	

원소속	직위	성명	파견실국	과	파견 시작 일	파견종료일	담당업무	파견사유	비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차장	유00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10.01.20	2011.01.19	주택금융 제도 개선, 주택신용보증기금 업무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관련 지원필요	
금융결제원	차장	조00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10.01.20	2011.01.19	전자금융 제도 개선	전자금융 제도 개선 지원 필요	
한국거래소	과장	정00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10.03.30	2011.03.29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유권해석 임 무 지원 등	유가증권 및 코스닥규정 등의 제 개정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지원 필요	
금융투자협회	대리	전00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09.05.21 2010.05.21	2010.05.20 2011.05.20	증권산업자율규제	증권산업 제도개선 및 산업관련 동향파악을 위해 전문 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갖춘 금융전문가를 파견활용	
한국예탁결제원	주무	임00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2009.05.21 2010.05.21	2010.05.20 2011.05.20	자산운용업 통계조사 및 타법률핀드	자산운용 및 특별법 관련업무에 능동적이고 법적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지원 필요	
한국증권금융	대리	박00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2009.01.12 2010.01.12	2010.01.11 2011.01.11	국내외 간접투자시장 동향점검, 관련 D/B구축 및 연구 자문	간접투자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펀드 및 자본시장 관련 통계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 지원 필요	
한국거래소	대리	이00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10.02.16	2011.02.15	자본시장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지원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및 유가증권, 코스닥 및 파생상품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해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갖춘 금융전 문가를 파견 받아 자본시장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지원을 받 고자 함	
공인회계사회	감리위원	이00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09.12.21	2010.12.20	회계감사기준 검토, 회계법인 등록	회계감사기준 검토 및 회계법인 등록 등의 실무경험이 풍부 한 민간전문가 지원 필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최00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10.03.30	2011.03.29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자본시장 발행, 유통공시업무 및 조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민 간전문가의 수선을 통해 공정시장과의 업무보좌 및 금융감 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등에 활용	
산업은행	부부장	김00	기업재무개 선지원단	기업재무개 선지원단	2010.02.01	2010.11.30	워킹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업무보좌, 각종 자료수집, 정리, 자문 등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기초법, 통합도산법) 개정 검토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예금보험공사	책임역	박00	기업재무개 선지원단	기업재무개 선지원단	2010.02.01	2010.11.30	워킹아웃 등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업무보좌, 기업구조조정관련 각종 자료수집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및 금융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업무를 수행한 전문지식인 파견 필요	
자산관리공사	5급	박00	기업재무개 선지원단	기업재무개 선지원단	2009.12.21	2010.11.30	기업구조조정 정책수립 지원, 금융시장 기업유 동성 동향 등 파악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및 금융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업무를 수행한 전문지식인 파견 필요	

원소속	직위	성명	파견실국	과	파견 시작 일	파견종료일	담당업무	파견사유	비고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차00	FIU	제도운영과	2010.03.30	2011.03.29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금융회사 및 카지노에 대한 검사 계획 검토 작성	금융감독기구 감사지원 및 사후관리지원을 위하여 해당분야 의 경험에 풍부한 전문가 지원 필요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윤00	FIU	심사분석실	2009.05.21 2010.05.21	2010.05.20 2011.05.20	금융위·금감원 요청거래 분석	금융위·금감원 요청거래 분석지원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경 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원필요	
예금보험공사	4급	임00	공자위	운용기획팀	2009.09.15	2010.09.14	공적자금 관련 업무보조 및 자문 역할 수행	위원회의 공적자금관련 당면현안업무 수행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행에 반영	
자산관리공사	5급	최00	공자위	운용기획팀	2009.09.15	2010.09.14	공적자금관련 업무보조 및 자문 역할 수행	위원회의 공적자금관련 당면현안업무 수행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행에 반영	
자산관리공사	과장	김00	공자위	회수관리팀	2009.09.28	2010.09.27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부실자산 정리, 자산 유 동성 및 건전성 제고, 공공기관신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부실자산 정리, 금융기관 자산 유동성 및 건전성 제고, 공공기관 신진화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	
예금보험공사	4급	김00	공자위	회수관리팀	2009.09.15	2010.09.14	공적자금관련 업무보조 및 자문 역할 수행	위원회의 공적자금관련 당면현안업무 수행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행에 반영	

10.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업의 재취업 현황

□ 퇴직자의 유관단체, 기업의 재취업 현황(계약직 직원은 제외)

성명	퇴직일	이직 기관(회사)
이○○	'08.3.13	LS네트웍스 고문
이○○	'08.3.28	한국거래소
전○○	'08.4.30	은행연합회
김○○	'08.12.9	금융감독원
정○○	'09.1.5	금융투자협회
양○○	'09.3.26	한국자금중개
김○○	'09.4.30	금융투자협회
한○○	'09.5.15	신영증권
김○○	'09.11.17	한국증권금융
나○○	'09.5.13	산업은행
김○○	'10.2.17	한국거래소
나○○	'10.3.2	정책금융공사

11. 설립이후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직원 사법처리 현황

□ 공무원범죄 수사 및 결과 통보서[별도제출]

-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1부
-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2부
-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2부

12. 임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 현황

□ 임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 현황

징계 현황	처분사유	처분일시
견책 2명	음주운전	09.2.27, 09.3.23
감봉2월 2명	청렴의무위반	09.3.19, 09.3.23
경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09.10.9

13. 1997년 IMF 이후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현황

- 저축은행별, 연도별, 종류별, 투입방법별
- 회수현황

□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지원·회수 총괄 현황

(2010.7월말 현재, 단위 : 조원)

구 분	지 원	회 수	비 고
공적자금 I (부실채권정리기금, 예보채상환기금)	8.5	5.6	'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설치하여 지원한 공적자금
공적자금 II (구조조정기금)	2.4	0.01 (105억 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설치하여 지원한 공적자금

□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지원·회수 상세내역

- 저축은행별 공적자금(I) 지원 및 회수현황(부실채권정리기금, 예보채상환기금)

(1997.11월 ~ 2010.7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지 원	회 수
정리금융공사<구 한아름>	61,171	39,294
경기(코미트)	276	63
경북<구한우리>(신흥)	81	-
경은	0.03	-
경인	799	624
고려	6	6
교원나라<구새한>	0.3	-
국민(제주소재)	768	524
국제	3	3

저축은행명	지 원	회 수
금강(신일)	737	723
기온	61	65
대양(경기소재)	5,023	3,892
대영<구협신>	92	157
대천(동보)	102	102
대한(광주소재)	27	27
대한(충남소재)	83	83
동방	1	1
동부	53	42
동아(경기소재)	11	1
동양	4	4
동원(안흥)	874	803
동인	8	8
문경	563	504
미래	1,382	1,118
민국	42	42
부국	228	243
부민(부산소재)(신동화)	243	-
부산2(새부산)	271	271
부산국민	21	21
부일	17	17
삼성	-	-
삼신	15	18
삼정	0	-
삼화(서울소재)	27	27
삼화(전북소재)	172	102
삼환	22	19
상업<구현대>(여수)	701	3
새누리(한보)	77	69
새온양(온양)	45	45
서인	1	1
석진	619	314
석진	11	12

저축은행명	지 원	회 수
솔로몬<구골드>(우풍)	663	7
신신<구코미트>(서울소재)	37	41
신우	2	2
신충북(충북)	161	161
신한	2	2
아림(한일)	615	615
안동	22	20
영풍	3	1
오성	0.1	0.4
유니온(대한)	557	518
인천	1	1
전남국민	16	16
전북고려	8	6
전북한일	49	49
전일	161	146
전주	2	2
제은	2	2
제이원(신한)	325	41
제일	13	6
조일(신우,아진)	767	747
조흥	10	10
주은	1	0
주은영동	26	28
중앙	12	12
진주	43	36
진흥	58	58
창업	194	149
춘천	5	3
충일(서산)	2,835	2,462
코미트(동아)	1,654	1,663
텔슨(신한국<구한국>)	775	-
평택	10	10
푸른	25	8

저축은행명	지 원	회 수
푸른2	10	4
프라임	34	33
하나	2	2
하나로(신충북)	443	21
한남(경기소재)	110	110
한마음(한일,부일)	651	116
한서	81	59
한솔	8	20
한일	4	2
한중	0.2	0.1
한진	0.3	0.3
해동	0.3	0.2
현대스위스	79	49
현대스위스2	0.4	0.2
합 계	85,110	56,485

* 경남 등 67개 상호저축은행은 가교금융기관인 한아름금고(現 정리금융공사)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어 정리되었음

□ 연도별 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지원·회수금액

① 연도별 저축은행 공적자금(Ⅰ) 지원 및 회수현황(부실채권정리기금, 예보채상환기금)

(1997.11월 ~ 2010.7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지원	14,898	17,211	6,888	34,700	8,437	439	440	1,071	499	523	3	1	-	85,110
회수	-	473	2,727	2,011	2,696	25,331	10,433	3,130	1,334	1,255	5,028	1,299	768	56,485

② 연도별 저축은행 공적자금(Ⅱ) 지원 및 회수현황(구조조정기금)

(2009.6월 ~ 2010.7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합 계
지원	446	23,869	24,315
회수	9	96	105

14. 최근 5년 간 혐의거래보고 접수현황 (월별,개별금융회사별)

□ 최근 5년 간 혐의거래보고 접수 현황(월별)

(단위: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06	1,945	2,014	1,513	1,553	1,610	1,751	1,813	2,094	2,114	2,180	2,667	2,895	24,149
'07	3,009	3,245	4,378	4,215	4,566	4,033	3,956	4,776	3,945	4,347	6,769	5,235	52,474
'08	6,745	6,780	8,179	7,867	7,020	7,421	8,187	7,553	7,360	8,668	9,352	6,961	92,093
'09	11,164	7,655	8,136	11,221	10,040	12,087	14,297	11,024	12,153	11,962	11,556	14,987	136,282
'10	15,872	12,768	16,228	21,021	17,998	20,346							104,233

□ 최근 5년 간 혐의거래보고 접수 현황(개별금융회사별)

- 현재 KoFIU는 금융업권별로 혐의거래보고 건수를 관리하는 바, 아래 표로 해당 자료요구에 같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건)

	은 행	증 권	보 험	기 타*	계**
'06	23,522	199	58	370	24,149
'07	51,330	218	56	870	52,474
'08	89,542	710	90	1,751	92,093
'09	128,564	3,049	121	4,520	136,282
'10.06	96,778	3,950	224	3,281	104,233
계	408,923	8,742	615	11,109	429,389

* 기타 :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 2001년 11월~2010.6월까지 전체 str 보고건수

15. 최근 5년 간 법집행기관 정보제공요구 현황

☐ 최근 5년 간 법집행기관 정보제공요구 현황

(단위: 건)

구 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선관위	합 계
'06	58	9	3	0	0	7	77
'07	29	24	27	2	0	1	83
'08	144	30	25	3	0	12	214
'09	244	73	17	5	0	1	340
'10.06	196	93	35	7	0	9	340

16. 최근 3년간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 자료 별첨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조치 결과 (완료)

(2009.4.15 현재)

1. 금융정보 분석·제공 업무의 개선

번호	요구 요지	처분	조치결과	진행상황
1-1-①	협의거래 정보 제공 확대	통보	【완료】 ① 법집행기관의 정보제공 요구 활성화 추진 - 기제공건 관련 STR 제공 프로세스 개선 - FIU정보시스템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서식을 전산화·규격화하고, 문서교환을 전자화 - 법집행기관협의회 등 계기 법집행기관에게 FIU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 ② 기초분석단계 검증절차 강화 - 양질 정보의 보존처리(미활용) 방지를 위해 2단계 기초분석 체제 도입 (08년 전산개발, 09.1월부터 시행) ③ 위 ①을 우선 추진한 후 미국 FinCEN과 같이 법집행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연구용역 ¹⁾ (08.7월 발주) 완료	【완료】 ① 법집행기관 정보제공 활성화 완료 - 정보제공 크게 확대 07년 2.3천건 → 08년 5.2천건 ② 정책연구 영역완료, 정보공유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
주 1) 연구용역 :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 (08.7월~12월) (연구자 : 아주대학교 이윤제, 이진국 교수)				
1-1-②	자금세탁 방지행위의 동향·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 활성화	통보	【완료】 ① 「자금세탁 동향보고서」(반기) 발간 추진(계획) ② 자금세탁 협의거래 동향분석 (범죄별, 기관별, 지역별, 거래 종류별 협의거래보고 동향) 작성 → 내부 분석자료 활용 및 금융기관 등 피드백 (08년 전산개발, 09.1월부터 시행)	【완료】 동향보고서 발간 심사분석 우수사례 매월포상

			<p>③ 혐의거래통계 관리강화 : 자금세탁 동향을 관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추출 추진</p> <p>④ 심사분석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조사·연구 업무를 활성화 (기 시행)</p>	
1-2-(2)-②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거래원장은 폐기 조치	통보	<p>【완료】</p> <p>① 보고기관의 혐의거래보고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내역이 포함된 자료의 첨부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 추진 (보고 및 감독규정 제6조 개정)</p> <p>※ 보고 및 감독규정 별지서식의 '3개월 이전의 거래내역자료와 혐의거래기간 거래내역자료' 첨부 규정은 기 삭제 조치</p> <p>② STR 서술내용만으로 보고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나, 기초분석과 상세분석 결과 전제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첨부 금융거래 자료 삭제</p>	<p>【완료】</p> <p>불필요한 자료 삭제 완료 (08.12월)</p>
1-2-(3)-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	통보	<p>【완료】</p> <p>①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사전경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검색시 검색화면에 “경고문구” 자동 제시 - 심사분석자의 분석 모니터에 경고 스티커 부착 <p>② 조회시 조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회대상자의 STR과의 관계도 기록하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지속 관리체계를 구축</p> <p>③ 내부 보안심의회 정례화(분기별 실시)로 내부통제를 강화</p>	<p>【완료】</p> <p>내부통제 시행중</p> <p>(감사지적을 반영하여 07.12월부터 시행중)</p>

2. 혐의거래 추출·보고 업무의 개선

번호	요구 요지	처분	조치결과	진행상황
2-1-①	은행의 혐의거래추출 조건 및 대상 합리화 등 전산시스템 개선	통보	【완료】 ① 혐의거래추출 조건·기준을 합리화 - 혐의거래 추출조건 정비, 제외 고객 등록,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른 차등 적용 등 ② 은행 전체와 고객단위 혐의거래 추출을 명시	【완료】 지침시달 완료('08.8.11)
2-1-②	거액 현금거래 기록·관리, 혐의거래보고 제외 사유 등 관리방안 마련	통보	【완료】 ① 거액 현금거래자 관리방안 마련 - 출처, 용도등의 기록 관리 철저 - STR 제외사유 기록·결재 ② 검사 강화	【완료】 지침시달 완료('08.8.11)
2-1-③	거액 현금거래 등의 혐의거래 보고기준, 위반시 제재기준 마련	통보	【완료】 ① 합리적 이유없는 거액현금 거래는 혐의거래로 보고토록 지도 ② 혐의거래 미보고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미보고 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	【완료】 지침시달 완료('08.8.11)
2-2	대체거래를 현금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지침 개정, 지도·감독방안 마련	통보	【완료】 ① 업무지침 관련 규정 개정 - 고객이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처리할 것을 요청한 경우 수용하고 CTR로 보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 '대체거래 현금처리 요청시 STR 검토' 추가 ② 지도공문 발송 - 거래내용에 맞게 전표처리 - 현금처리 요청시 대체처리 권유	【완료】 지침시달 완료('08.8.11)
2-3	현행 영업점 단위의 혐의거래추출 전산시스템을 은행·고객단위로 변경	통보	【완료】 2-1-① (은행의 혐의거래추출 조건/대상 합리화 등 개선) 조치사항에 포함 ⇒ 은행 전체, 고객단위로 혐의거래를 추출하도록 명시	【완료】 지침시달 완료('08.8.11)

2-5	체신관서·저축은행·수협·산림조합 등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지도·감독 강화	통보	【완료】 ① 보고책임자 임명 등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② 자금세탁 혐의거래 추출 시스템 구축 추진 ③ 검사 강화	【완료】 지침시달 완료(08.11.4)
-----	---	----	---	---------------------------------

3.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업무의 개선

번호	요구 요지	처분	조치결과	진행상황
3-1-①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수립·운용을 위한 세부기준 수립·시달	통보	【완료】 「업무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협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통보('08.9.5)	【완료】 세부기준 수립·시달
3-1-②	검사수탁기관들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의 적법성·효율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검사업무를 체계적·효율적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완료】 <input type="checkbox"/> 감독·검사업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²⁾ 완료('08.12)하고, 이를 토대로 ① 감독·검사 개선방안 마련('09.1.28) - 업무지침개정, 검사매뉴얼 작성지침 마련, 업무지침 평가를 위한 세부 체크리스트 마련(개정)등 ②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검사위탁을 통해 동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통보('09.2.13)	【완료】 검사업무를 체계적·효율적 수행 방안 마련
주 2) 연구용역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업무 효율화 방안」('08.8월~12월, 한영회계법인)				
3-2-①	검사매뉴얼·운용지침을 개발하여 검사수탁기관에게 제공하고, 검사수탁기관이 이에 맞춰 자체	통보	【완료】 ① 감독·검사 개선방안 마련('09.1.28) ② 검사수탁기관에 「검사매뉴얼 작성 지침」통보('09.3.31) 및 작성결과 통보 요구('09.6.10까지)	【완료】 검사매뉴얼·운용지침을 개발, 제공, 자체개발 감독 강화

	매뉴얼을 개발· 운용하도록 지 도·감독 강화			
3-2-②	검 사 수 탁 기 관 검사인력에 대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통보	【완료】 ① 감독·검사 개선방안 마련('09.1.28) ② 검사수탁 검사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금감원 연수원을 활용한 검사자 전문교육과정 개설 · '09.7.20-7.24, 5일간 실시 · 수탁기관에 대상자 선발 및 이수요구 ('09.6월 예정)	【완료】 검 사 수 탁 기 관 검사인력 에 대한 교 육·훈련 프 로그램 마련
3-3	검사자의 금융 거래자료 및 혐 의 거 래 보 고 내용 열람 근 거 마련	통보	【완료】 ① 감독·검사 개선방안 마련('09.1.28) ② 소관부서와의 검토·협의 등 추진일정 마련('09.1.28) - 연내 개정협의완료 - 검사매뉴얼 작성지침 통보를 통해 개별거래를 점검하도록 요구('09.3.31))	【완료】 검사자의 금 용 거 래 자 료 및 혐 의 거 래 보 고 내 용 검사 강화
3-4	농협중앙회 등 5개 자율규제 기관 위탁검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 위한 검 사결과 감리· 제재시스템 구 축 또는 금융 감독원에 검사 업무 위탁	통보	【완료】 ① 감독·검사 개선방안 마련('09.1.28) ② 수탁기관의 검사실효성 강화를 위한 「감독·검사 지원시스템」 구축('09.2) - 검사계획·결과·개선조치 등 동 시스템에 입력·분석 ※개정 검사체크리스트 활용 - 동 분석결과를 자가평가결과와 비교·검토하여 검사의 문제점 등 도출 및 개선조치 ③ 감독·검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자가평가 시스템」 구축('09.2) - 금융기관 자체 AML이행결과를 검토·진단하고 그 결과를 동 시스템에 입력·분석('09.하반기) ※자가평가항목(140여개) 마련	【완료】 위 탁 검 사 업 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결과 감 리·제 재 시 스템 구축 완료



금융정보분석원

수신자 감사원장(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완료 통보

1. 귀 원의 재정금융감사국 제3과-835호(2008.6.11)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귀 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기에 불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불임 :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완료) 1부, 끝.

금융정보분석원장

주무관	전종일	행정사무관	이귀웅	기획행정실 팀장	이영직	기획행정실 실장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04/17						
	김영과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실-425

접수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http://www.kofiu.go.kr>

전화 02-2156-9417 전송 02-2156-9679 / jong210@fsc.go.kr / 비공개(2)

17.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 첨부참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2010. 4. 7

기	획	재	정	부	행	정	안	전	부
농	림	식	품	수	산	부	금	융	위
중	소	기	업	청	회				



목 차



I. 추진배경	1
1.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1
2.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방향	2
II.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방안	3
1.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3
2.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8
3.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	9
4. 미소금융 운영개선	10
5. 신용정보관리시스템 개선	12
III.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13

I. 추진배경

1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이용기회 감소

○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는 '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서민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기업 관련 여신을 주로 취급

※ 신용 6등급이하 대출 비중(%) : 은행 21, 상호금융 36, 저축은행 87, 대부업 91

□ '09년말 출범한 「미소금융」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창업·운영 자금 지원 개시

○ 지난 3개월간 약 2만명이 방문·상담하는 등 서민층의 관심이 매우 컸으나, 그 금융수요를 모두 해소하기에 한계

□ 저신용 서민들의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금리 부담 등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조원) : 4.1('07.9) → 5.6('08.9) → 5.9('09.9)

⇒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미소금융과 함께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을 통한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

- ①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 확대
 -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이하)·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출연재원을 바탕으로 보증공급을 확대
- ② 신용회복 대상자의 안정적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한 신규 지원을 개시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기존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성실 채무상환자에 대해 자금지원 추진
- ③ 고금리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추진
- ④ 미소금융으로 지원할 수 없는 서민에 대하여는 보증부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
 - 아울러 미소금융 지방지점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소금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능력 강화
- ⑤ 서민금융회사가 보다 충실한 여신심사를 바탕으로 서민 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신용평가역량을 확충

II.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방안

1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은행에 비해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은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실정

○ 이에 서민대출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을 늘릴 필요

※ 미국은 지역개발금융펀드(CDFI)를 조성, 저소득층의 건강·교육·긴급자금 등을 지원하고, 일본은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금융소외자에게 사업자금, 생활위생개선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등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보증공급 규모 (조원)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08년	41.6	3.9	-
'09년	56.5	8.4	0.2
'10년(목표)	52.6	5.3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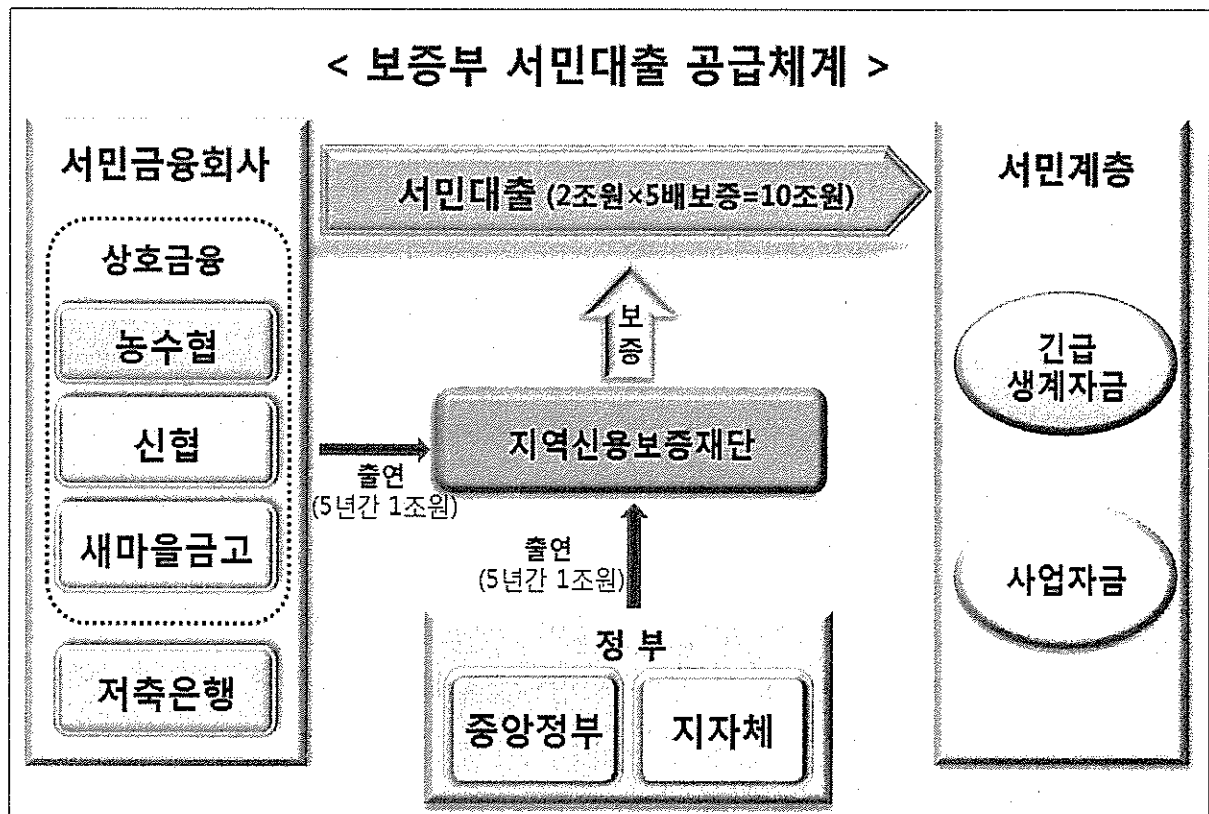
□ 현재 서민에 대한 특례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시적(금년중 종료예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보증기관이 대출위험 전부를 부담하거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금융회사가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문제

⇒ 보다 많은 서민이 보증지원 혜택을 누리고 금융회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특례보증을 마무리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상시적 지원제도로 탈바꿈시킬 필요

< 개선방안 >

- ◇ 정부와 민간의 공동재원 출연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추진



① 보증부 서민대출 공급 목표 : 5년간 최대 10조원 공급

- 대부업체 대출규모 총 10조원임을 감안하여 대출 공급 목표 설정
- 서민대출의 부실율(10% 가정)을 감안할 때 약 5배 이내의 보증배수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재원으로 향후 5년간 총 2조원 수준(매년 4,000억원) 소요 전망

⇒ 해당 소요재원을 민간과 정부가 「50 : 50」 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방안 추진

< 보증재원 조성방안 >

민간 출연 : 5년간 총 1조원(연간 약 2,000억원)

○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40 : 10」으로 분담 출연

-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간 여신규모 차이(4배), 상호금융 회사에 대한 비과세 예금 혜택 등 감안

(상호금융) : 5년간 총 8,000억원(연간 약 1,600억원)

※ 상호금융내 업권별 연간 출연 규모 예상액('09.12월말 잔액기준)

	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금고	계
비과세예금(조원)	55.5	4.8	1.2	19.6	34	115
출 연 금(억원)	833	72	18	294	510	1,727

(저축은행) : 5년간 총 2,000억원(연간 약 400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의무화 추진('10년 상반기중)

정부 출연 : 5년간 총 1조원(연간 약 2,000억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신용보증의 공공성, 지역주민 수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결정

기타 : 보증수수료 수입 등

② 보증대상

- 저신용(예: 신용 6등급이하) 또는 저소득(예 : 차상위계층)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상호금융) 등

※ 제외대상 : 부도,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중, 보증사고 관련자 등

③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담당

- ‘서민신용보증 전담’ 보증기관 신설방안도 검토 가능하나, 유사기관간 기능 중복, 보증 경쟁에 의한 부작용 등을 감안, 현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활용 바람직

※ 2009.4월 법개정을 통해 지역신보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더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보증이 가능해 짐

- 보증재원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6개 업권별로 별도 분리 운영*

* 업권별 보증규모는 출연재원에 비례하여 결정하고 특정업권의 출연금을 타 업권에서 사용치 않음

- 일정기간(예: 1년)동안 분리 운영한 후 그 실적을 평가하여 필요시 업권간 경쟁유도를 위해 보증재원의 통합 운영 검토

- 금융위와 중기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신보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앞으로 늘어날 보증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의 역량을 확충

④ 대출 운용방안

- (취급기관)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회사(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및 저축은행

※ '09년말 서민금융회사는 총 3,989개 : 저축은행 104, 상호금융 3,885 (농협 1,178, 수협 91, 산림조합 133, 신협 982, 새마을금고 1,501)

- (보증비율) 원칙적으로 대출금액의 80~85%수준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기책임하에 대출

- (대출금리) 서민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적정금리”로 운용

- 금리 상한*을 설정하되,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경쟁방식 도입

* 은행의 희망할씨대출 평균금리(14%), 쏠은행 6~10등급 평균 신용대출금리(19%)

- (자금용도) 긴급생계자금(5백만원 이내), 사업자금(1~5천만원 이내),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자금 등

- (마케팅) 미소금융, 보증자리론과 같이 “통합 브랜드”를 사용,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비용 절감

⑤ 시행시기 : '10년 하반기부터 대출상품 출시

- 관련 법령 개정과 기존 한시적 특례보증의 마무리 일정을 감안

2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①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 확대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채무조정기간 중에 금융거래가 곤란하여 생활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빈번

* '02년~'09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자 83만명 중 24만명(29%)이 생활비 수요 등 때문에 중도 탈락

⇒ 성실채무상환자*의 안정적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은 여유자금을 활용, 긴급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신규 개시
- 신용회복위원회는 재원을 확충하여 기존 대출**을 지속 확대

* 신용회복지원중인 자(76만명) 중 1년이상 성실채무상환자 : 67만명

** '06.11월 이후 소액대출 실적 : 20,746명, 623억원

※ 신규 지원 목표 : 5년간 1,500억원, 5만명(평균 3백만원, 연 4%)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Pre-workout) 연장

- '09.4월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

- '10.3월말까지 총 31,785명이 상담, 이 중 9,402명(29.6%)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금융안전망 역할 수행

⇒ 1년간 연장하여 운영

3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

- 현행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은 연 49%로 이는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

※ 미등록 대부업체는 최고이자율을 30%로 적용하여 양성화 유도

- 대부분의 대부업체, 일부 저축은행 및 여전사는 동 금리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수취하여 주된 이용자인 서민층에 과도한 부담

- '07.10월 최고이자율 인하(66%→49%) 이후 한은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시, 동 최고이자율 인하 필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7.9) 5% → ('10.2) 2%
은행 평균여신금리 : ('07.9) 6.7% → ('10.2) 5.9%

- 일본도 금년 6월부터 최고이자율을 29.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06.12월 출자법개정)

- 최고이자율 인하시 대부업체 음성화 및 서민대출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 금번 대책에 포함된 '보증부 서민대출'의 확대 실시에 따른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로 보완 기대

⇒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을 10%p (49%→39%) 인하 추진

- 우선 조속히 5%p 인하 (즉시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추진)
-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 추진

※ 5%p 인하시 금리부담 완화 기대효과 : 연간 2,000억원*

*4조원(등록 대부업체 신용대출규모) × (49% - 44%)

4 미소금융 운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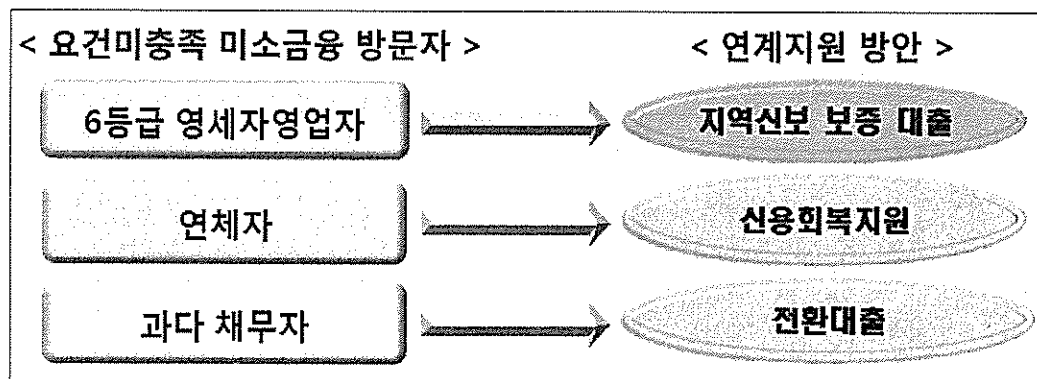
① 미소금융 창구에서 서민금융 One-Stop 서비스 제공

- 지점 방문자중 미소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증대출(지역신보), 신용회복(신복위, 신복기금) 등 다른 서민금융 지원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10.3월까지 미소금융지점 방문·상담자 총 19,995명중 11,638명(58.2%)이 미소금융의 대출요건을 미충족 (신용등급 우수 32%, 부채 과다 16%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 직원(지점당 1인 파견)이 미소금융창구에서 대면상담 및 현장 신청 접수

- 향후 미소금융 지점 증가시에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환근무하는 방안도 검토



② 지방지점 확대, 홍보활동 등을 통한 미소금융 접근성 제고

- 지방소재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지방에 20개 이상 지점을 추가 신설(총 50개 이상)

* '10.3월까지 총 34개 지점 설립(수도권 16개, 지방 18개)

-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리플렛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서민들이 개별상황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유도

* 서민층이 왕래하는 지자체·고용지원센터 등에 리플렛 중점 배포

③ 미소금융 지점 사무실 지원

-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내에 미소금융 지점 설치를 지원하여 사무실 운영비용 절감 추진(지자체 협조)

* 현재 전국 34개 지점 중 11개 지점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

④ 미소금융 관련 컨설팅 능력 제고

-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부설 교육센터」 설치하여 전문인력 양성 추진
- (가칭) '미소희망봉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의 기부'를 유도하고 미소금융의 컨설팅 능력 제고

* 전국적으로 법률·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 퇴직인력 약 1천명을 모집하여 미소금융 수혜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 지원

5 신용정보관리시스템 개선

①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역량 제고

- 상환위험이 큰 저신용층의 대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평가가 필수적이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총 104개 중 23개(22.1%)에 불과

⇒ 저축은행 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

- 개별 저축은행은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거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10.6월까지 29개사가 추가로 자체적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계획

②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 확대

- 대부업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내에서만 여신정보(대출잔액, 연체액)를 폐쇄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어려워 리스크 관리 비용이 증가

⇒ 대부업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개인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부업체의 서민대출 금리를 낮추는 계기로 활용

- 중장기적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 추진

Ⅲ.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기대효과

□ 서민금융회사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로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를 늘리고 금리부담 완화 기대

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200만명*) 서민대출 확대 기대

- 보증부 대출 : 10조원(상호금융 8조원, 저축은행 2조원)
- 신용회복 대상자 소액대출 : 1,500억원

* (가정) 1인당 평균 5백만원씩(생계자금대출 한도) 보증부 대출(만기 5년)

② 향후 10년간 최대 10조원의 서민층 금리 부담 경감

- 보증부 대출로 대출금리 부담이 평균 20%p(30%대 중반 → 10%대중반) 가량 인하 기대(8조원)
-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금리 부담 경감(2조원)

2 향후 추진일정

□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

□ 관련 법령·규정을 조속히 개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 : 금년 상반기중(중기청)
-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 금년 4월중 추진(금융위)
- 공유재산관리법 또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 : 금년중(행안부, 금융위)

18. 국내 금융 자격증 제도 현황

A. 은행과

☐ 한국 금융연수원 주관

No	구 분	신설연도	응시인원*	합격인원*	비고
1	신용분석사	2002	4,494	1,117	국가공인 민간자격
2	여신심사역	2002	375	180	
3	국제금융역	2002	654	236	
4	자산관리사(FP)	2002	47,728	13,148	
5	신용위험분석사 (CRA)	2002	944	114	
6	은행텔러	2004	21,277	9,029	한국금융연수원 인증자격
7	외환전문역(I종)	2006	6,583	2,421	
8	외환전문역(II종)	2006	5,777	2,203	
9	영업점컴플라이언스 오피서	2009	6,250	4,602	

* 2005~2010.9 까지의 인원

☐ 신용정보협회 주관

No	구 분	신설연도	응시인원*	합격인원*	비고
1	신용관리사	2006	22,428	7,696	국가공인 민간자격

* 2006~2010.9 까지의 인원

B.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자본시장법 제286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문인력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투자권유대행인)로서 협회에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펀드관계회사 인력, 위험관리전문인력으로 분류되며,
- 투자권유대행인은 펀드·증권·금융투자권유대행인으로 분류되며
-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가 불가합니다

〈 전문인력 종류 및 취급상품 〉

구 분		개 편	
		자격명칭	취급상품/업무
투자권유 자문인력		①펀드투자상담사	집합투자증권(펀드) 권유
		②증권투자상담사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제외) 권유
		③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권유
		① or ② or ③ (투자자문업무만 가능)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
		② or ③ (전문투자자 투자권유만 가능)	전문투자자대상 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권유
투자권유자문 관리인력		투자상담관리인력	전문인력의 관리·감독
투자운용인력		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일임재산 운용
		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	부동산 운용
		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운용
조사분석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조사분석자료 심사·승인
펀드 관계 회사 인력	증권분석 전문인력	채권평가인력	집합투자재산 평가·분석(채권평가회사)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펀드사무관리인력	집합투자재산 평가·분석(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펀드평가인력	집합투자기구 평가
위험관리 전문인력		위험관리전문인력	재무 위험 등의 관리
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은 제외) 권유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제외) 권유
		금융투자권유대행인	증권,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의 권유

- (등록요건) 협회에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등록교육을 이수하거나 해당 경력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등록요건	
		시험·교육요건	경력요건
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99.1.6~'04.1.4 기간내 펀드판매업무 1년 이상 종사 + (부동산·파생상품) 펀드투자상담사 시험합격
	증권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02.3월까지 증권관계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증권투자상담사 (은행취급채무 증권제한)	등록교육(은행 자체 교육 인정)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00.9.30까지 선물관계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전문투자자에게만 투자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경력이 1년이상일 경우 증권(펀드 제외) 및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투자자 투자권유업무 가능 [예: 증권투자상담사(전문투자자 상담업무에 한정)]	
	투자자문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 ②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투자상담관리인력		해당 지점에서 투자권유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상담사 자격 모두 보유+등록교육(은행, 보험은 자체교육 인정)	
투자자산운용사	투자일임인력 또는 증권운용인력으로 등록하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 등록교육	① 금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 + 2년 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종사 ② 경영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금융위 인정 교육과정 이수자 + 2년 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종사 ③ 공인회계사 + 2년 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종사 ④ 집합투자업, 신탁자산운용업을 하는 외국금융기관 2년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운용자산규모 1,000억원이상) 종사 * 증권운용전문업무 : 집합투자재산(신탁

전문인력	등록요건	
	시험·교육요건	경력요건
		재산 포함) 운용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부동산운용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부동산투자 운용 교육	① 감정평가사로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 ② 부동산 석사 또는 금융위 인정 교육 + 부동산운용업무 3년 ③ 외국 부동산투자회사 5년 + 부동산 운용업무 3년 ④ 부동산 관계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 3년
사회기반시설 운용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 교육 + 사회기반시설운용 관련 업무 5년	① 경영학 등 석사 + 사회기반시설 운용업무 3년 ②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사회 기반시설운용업무 2년 ③ 금융기관 등에서 사회기반시설 운용업무 3년 ④ 사회기반시설 자산운용규모 1조 이상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기반 시설운용업무 3년 ⑤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5년
금융투자분석사	금융투자분석사시험	①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②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 학위 이상 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 연구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조사 분석교육과정을 수료한자
위험관리인력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 소속된 자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99.1.6~'04.1.4 기간내 펀드판매업무 1년 이상 종사 + (부동산)펀드투자 상담사 시험합격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상담사 등록 요건과 동일	
금융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산운용사 등록 요건과 동일	

19.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현황

□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발생 현황

○ 첨부 참고 (자료출처: 은행연합회)

※ 현재 은행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7.8.3, 시행 2008.2.4)에 따라 휴면예금 발생분중 원권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할 수 있음

<첨부 1>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은행명	2007년		2008년		2009년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산업은행	14	4	8	3	9	2
농협중앙회	1,389	151	1,254	268	950	166
신한은행	550	119	691	109	309	58
우리은행	1,184	110	1,124	87	803	97
SC제일은행	295	52	557	76	218	40
하나은행	871	114	682	95	392	53
기업은행	768	77	706	71	628	77
국민은행	2,122	69	1,772	65	2,003	672
외환은행	538	76	528	72	1,258	59
한국씨티은행	223	22	283	24	260	44
수협중앙회	41	10	39	6	26	6
대구은행	75	31	96	12	145	33
부산은행	356	38	325	37	406	43
광주은행	-	-	114	5	183	12
제주은행	9	-	3	-	3	-
전북은행	78	10	73	11	67	9
경남은행	131	9	146	10	74	7
HSBC	1	1	2	5	3	4
총 계	8,645	893	8,403	956	7,737	1,382

박 선 숙 의원

1. 8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가맹점 수수료 인하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그러한 입장을 도출한 근거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최근 금감원에서 카드사 및 가맹점 현장 점검('10.9.10~16)을 실시한 결과
 - 카드사들이 당초 인하계획('10.4월)대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으로 파악됨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와 당초 인하계획이 차이가 나는 정확한 원인은
 - 설문조사 대상 가맹점 명단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아 매출액 및 수수료율에 대한 실사를 통해 파악 가능하나
 -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사목적외 사용불가를 이유로 동 자료 제공을 거부
- 다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와 당초 인하계획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음
 - ① 중앙회의 설문조사시 가맹점이 답변한 연간 매출금액 및 실제 부담 수수료율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
 - 또한 가맹점이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제휴포인트·무이자할부 비용*을 가맹점수수료로 오인하여 수수료율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도 존재
 - * 가맹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회원에게 제공되는 제휴포인트 적립 또는 무이자할부 판매 관련 비용의 일정률을 부담

- ② 지난 4월 수수료율 인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설문대상에 포함되었을 가능성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의료보건, 교육, 여객·운송, 도서·신문·잡지, 주택·토지 임대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경 전년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지난 4월에는 확정된 전년도 사업소득(매출액) 자료가 없어,

금년 10월경 연매출 9,600만원 미만 사업자 현황을 업데이트 할 때 동시에 파악하여 수수료율을 인하 적용하기로 하였음

- ③ 현재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은 '08.7월~'09.6월 기간 중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으로서 '09.7월 이후 신설 가맹점은 인하대상에서 제외

→ 금년 10월경 수수료율 인하대상 가맹점 명단을 '09.7~'10.6월 기간 중 매출액 기준으로 갱신(4/4분기 중 각 카드사별 전산 시스템 반영)하면 이러한 사례는 해소될 예정

- ④ '10.4월 수수료 인하 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전통시장 가맹점 명단에 일부 전통시장 소재 가맹점이 누락되었을 가능성

**2.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 계열 회사 종목
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인덱스펀드에 대한 운용규제를 완화한 조치로서 다음의 사유로 이해상충의 요소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 인덱스 펀드는 객관적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편입 종목과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액티브 펀드와 성격이 다릅니다.
- 공신력 있는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 펀드는 사전에 객관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 주식에 투자하도록 설계·운용되는 펀드로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편입종목을 투자자들이 알고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는 돈만 맡기고 집합투자업자가 편입 종목을 결정하는 일반 액티브펀드와 다르며,
- 종목별 편입비중도 객관적으로 산출된 지수에 따라 자동 결정되므로,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특정 계열사 주식의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다른 운용사와의 형평성 및 다른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인덱스펀드에 대한 예외 신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한국투신운용 등 운용사에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특정 계열사 주식으로만 구성되는 펀드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 다른 외국에서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일본 도요타투신의 경우 도요타그룹 주식으로만 구성된 펀드를 운용중에 있습니다.
- 다만, 인덱스펀드 출현으로 인해 수익자와 계열그룹간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과정 등을 통해 운용사의 임의적 운용 요소 등으로 인한 투자자피해 발생 가능성 및 계열사 지원 우려 등이 존재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에 따른 의사록 및 의안
비공개에 대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률상의 위임 또는 근거 규정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2조의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 3에서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정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의사록 및 안건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른 의사록 및 제12조 제5항에 따른 의안 비공개
대상에 국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
위원회의 해석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상으로는 의안 공개와 관련
하여 예외적으로 안전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안전 등은 1년 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원칙
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사록 및 의안 비공개 대상에 국회가 포함
된다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5조상 국회에
대한 보고규정과의 상충가능성에 대한 금융
위원회의 해석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관리(운영현황, 자산취득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고 당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 일부 제한적으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총괄적인 관리현황 위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사록 및 의안 비공개 대상에 국회가 포함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과의 상충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해석

□ 별도제출

배 영 식 의 원

**1. 2000~2010.9 현재 주택대출 관련
DTI, LTV 정부규제발표 상세내역 현황**

**1. 2000~2010.9 현재 주택대출과 관련, DTI, LTV
연도별, 상황별 정부규제발표 상세내역 현황**

□ 보도자료 별도제출

- 주택시장 안정대책('02.9.4)
- 주택가격 안정대책('03.5.23)
- 주택시장 안정화대책('03.10.30)
-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응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05.7.1)
-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05.8.30)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06.3.30)
-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책 시행('06.11.16)
-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09.7.6)
-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09.9.7)
-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09.10.8)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0.8.29)

2. 서민금융(햇살론) 월별 지원액 및 재원현황

□ ‘햇살론’ 대출개시 후 7.26~8.31. 27일간 취급실적은
총 61,663건 5,453.7억원임

(‘10. 8. 31. 기준 / 단위 : 건수, 억원)

구분	‘10. 7. (7.26~30)	‘10. 8. (8.2~31)	총계
대출건수	2,940	58,723	61,663
대출액	233.6	5,220.1	5,453.7

□ ‘햇살론’ 보증재원 2조원은 정부와 서민금융회사가 1:1 출연

○ 서민금융회사 ‘10. 9.부터 6년간 1조원 출연

○ 정부재정 ‘11. 1.부터 5년간 1조원 출연

3. 2005~2010.8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현황(회의록 사본) - 회의일자, 제목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현황

일 시	안 건 명
05.1.11	대우종합기계(주) M&A관련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안)
	2005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처리 계획
	200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
	대우종합기계(주) M&A관련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안) 심사결과
	2005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처리 계획 심사결과
	200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 심사결과
	공적자금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보고
05.1.12	대우종합기계(주)M&A관련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수정(안)
05.2.18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금융지주 일부지분 매각(안)
	한투증권 주식 매매계약체결 및 공적자금 지원안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금융지주 일부지분 매각(안) 심사결과
	한투증권 주식 매매계약체결 및 공적자금 지원안 심사결과
	2004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2004년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05.3.4	(주)현대오토넷 매각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주)현대오토넷 매각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05.3.5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보유 제일은행 주식 매각(안)
05.4.16	대우종합기계(주) M&A 거래종결안
	대우종합기계(주) M&A 거래종결안 심사결과
05.4.29	대투증권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공적자금 지원안
	대투증권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공적자금 지원안 심사결과
	2004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 결과 보고
05.7.27	현대오토넷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현대오토넷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심사결과
	2005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2005년도 1/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05.8.12	8개 상호저축은행 지원금증액청구소송 관련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동의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05.8.26	2005년 공적자금관리백서(안)
	2005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05.10.12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하이닉스반도체 주식 매각(안)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하이닉스반도체 주식 매각(안) 심사결과
05.11.1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현황

05.11.22	대우캐피탈(주)CRV 보유자산매각결과보고
	신한금융지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하이닉스반도체 주식매각결과보고
	2005년도 2/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05.12.30	신한금융지주주식매각방안
	신한금융지주 주식매각방안 심사결과
	2005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공적자금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보고
06.1.16	서울보증보험 감자방안
	2006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2006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서울보증보험 감자방안 심사결과
	2006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심사결과
06.2.21	2006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심사결과
	2006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정리계획(안)
	신한금융지주 주식 매각관련 매각주간사 선정방안 보고
	신한금융지주 주식 매각관련 매각주간사 선정방안 심사결과 보고
06.3.15	2005. 3/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대우건설 최종입찰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예금보험공사 보유 신한금융지주 주식 세부매각(안)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대우건설 주식 매각(안)
	예금보험공사 보유 신한금융지주 주식 세부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06.4.7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대우건설 주식 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2005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06.5.9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구조조정기업 매각 기본방향(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2005. 4/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06.5.30	공적자금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
	대한생명보험 매각관련 사후관리방안
06.6.9	(주)대우건설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주)대우건설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06.6.15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하이닉스반도체 주식매각(안)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하이닉스반도체 주식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06.6.20	(주)대우건설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주)대우건설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06.6.22	(주)대우건설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주)대우건설 M&A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06.6.29	한투증권 신탁형증권저축계정 상환재원 부족분 지급안
	한투증권 신탁형증권저축계정 상환재원 부족분 지급(안) 심사결과 보고
	신한금융지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안 보고
	2006. 1/4분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06.8.29	2006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안)
	대한투자증권 신탁형증권저축계정 상환재원 부족액 지급안 보고
	대한투자증권 신탁형증권저축계정 상환재원 부족액 지급(안) 심사결과 보고

06.11.10	(주)대우건설 M&A 관련 실사조정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안)
	(주)대우건설 M&A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안) 심사결과 보고
	(주)대우정밀 출자전환주식 매각결과 보고
	2006년도 2/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06.12.22	신한금융지주 주식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정리금융공사보유일반채권매각(안)
	신한금융지주 주식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정리금융공사 보유 일반채권 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2006년도 3/4분기 공적자금운용현황 보고
07.2.9	신한금융지주 주식 세부 매각(안)
	정리금융공사 보유 일반채권 매각(안)
	신한금융지주 주식 세부 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정리금융공사 보유 일반채권 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2006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보고
07.3.9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시한 연장 동의(안)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기본계획(안)
	2007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안)
	2007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안)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시한 연장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기본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2007년도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2007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정리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07.4.3	정리금융공사 보유 일반채권 세부 매각(안)
07.5.14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안)
	한국전력 주식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쌍용건설(주) 주식 매각주관사 선정방안(안)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안)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한국전력주식 매각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쌍용건설(주) 주식 매각 및 매각주관사 선정방안(안) 심사결과 보고
	정리금융공사 보유 일반채권 매각결과 보고
	2006년도 4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보고
	2006년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07.5.18	공적자금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
	우리금융지주 지분 세부매각(안)
07.6.11	우리금융지주 지분 세부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중 일부개정(안)
07.7.9	(주)대우건설 M&A 관련 실사조정 사후정산(안)
	한국전력 주식 매각 세부계획(안)
	대한생명보험(주) 관련 안건의 공개 시기 연기(안)
	(주)대우건설 M&A 관련 실사조정 사후정산(안) 심사결과 보고
	한국전력 주식 매각 세부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07.8.29	2007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안)

07.10.8	쌍용건설(주) 출자전환주식 매각 방안(안)
	쌍용건설(주) 출자전환주식 매각 방안(안) 심사결과 보고
	2007년 상반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7년도 1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보고
07.11.26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예금보험공사 보유 제주은행 보통주 매각방안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예금보험공사 보유 OO은행 보통주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08.1.11	OOOOOO 지분 세부매각(안)
	OOOOOO 지분 세부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2008년 정기재계산 추진일정 보고
	2007년도 2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보고
09.8.31	2007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09.9.1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소위원회 구성 보고
09.9.25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기준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기준” 심사결과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심사결과 보고
	(주)OOOOOOOO 주식매각 및 매각주관사 선정 방안
	“(주)OOOOOOOO 주식매각 및 매각주관사 선정 방안” 심사결과 보고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실적보고
	2009년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보고
09.10.16	OOOOOO 지분 매각방안
	“OOOOOO 지분매각방안” 심사결과보고
	OOOOOO 주식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OOOOOO 주식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보고
09.11.11	선박 매입기준
	“선박 매입기준” 심사결과 보고
	1차 매입대상 중 추가매입(2척) 및 2차 선박매입 추진계획
	“1차 매입대상 중 추가매입(2척) 및 2차 선박매입 추진계획” 심사결과 보고
	금융회사 일반담보부 부실채권 인수현황 보고
	“금융회사 일반담보부 부실채권 인수현황 보고” 심사결과 보고
09.11.20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선박매입 운영 개선 방안
	OOOOOO 지분 매각방안
09.11.20	“OOOOOO 지분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09.11.25	선박인수를 위한 캡코 글로벌 18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선박인수를위한캡코글로벌18호선박투자회사에대한출자”심사결과보고
	제2금융권(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출채권인수의 건(안)
	“제2금융권(여신전문금융회사)PF대출채권인수의건(안)”심사결과보고
	제2금융권(보험,금융투자,수협) PF대출채권인수의 건(안)
	“제2금융권(보험,금융투자,수협)PF대출채권인수의건(안)”심사결과보고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계획(안)
	“합작투자를통한혼합형부실채권인수계획(안)”심사결과보고
	예금보험공사 보유자산 현황 및 매각 계획
09.12.18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현황 및 정리 계획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안)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안)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2010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
	“2010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2010년도 예보채상환기금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
	“2010년도 예보채상환기금 보유자산 매각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10.1.27	2009년 3/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OOOOOO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OOOOOO 지분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주)OOOOOOOO 주식 매각방안
	“(주)OOOOOOOO 주식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제2금융권 등의 PF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안)
	“제2금융권 등의 PF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09.12월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해운사 보유 선박 인수현황 보고
	“‘09.12월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해운사 보유 선박 인수현황 보고” 심사결과 보고
10.2.8	OOOO 지분 매각방안
	“OOOO 지분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10.2.24	OOOO 주식 매각주관사 선정방안 및 장중매각(안)
	“OOOO 주식 매각주관사 선정방안 및 장중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10.3.19	선박인수를 위한 캡코 글로벌 19호부터 23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선박인수를 위한 캡코 글로벌 19호부터 23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심사결과 보고
10.4.2	2009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공적자금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 보고
	OOOOOO 지분 세부매각(안)
10.4.23	OOOOOO 지분 세부매각(안) 심사결과 보고
	제2금융권(OO증권·OO금융투자) PF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안)
	“제2금융권(OO증권·OO금융투자) PF대출채권 유동화계획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10.4.3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안건 및 의사록의 공개 시기 연기(안)
	OOOO 주식 매각방안
	OOOO 주식 매각방안 심사결과 보고
	2010년 1/4분기 케이알앤씨 보유자산 매각추진 현황

10.5.7	(주)00000000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주)00000000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10.5.14	(주)00000000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주)00000000 주식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10.5.28	주택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리츠·펀드 출·투자 기준 및 계획
	'주택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리츠·펀드 출·투자 기준 및 계획' 심사결과 보고
10.6.14	'09년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점검결과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안)
10.6.18	'합작투자를 통한 혼합형 부실채권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선박인수를 위한 캠프글로벌 제24호부터 25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10.6.25	"선박인수를 위한 캠프글로벌 제24호부터 25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심사결과 보고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10.7.30	"일반담보부채권 인수의 건" 심사결과 보고
	주택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00미분양아파트사모펀드1호' 및 '000000 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투자
10.8.13	"주택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00미분양아파트사모펀드1호' 및 '000000 제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투자" 심사결과 보고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인수계획 및 인수의 건(안)
10.8.23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인수계획 및 인수의 건(안)" 심사결과 보고
	2010년 1/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10.8.23	000000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000000 매각방안 및 매각주관사 선정기준(안)" 심사결과 보고
10.8.23	선박인수를 위한 캠프 글로벌 26호부터 27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선박인수를 위한 캠프 글로벌 26호부터 27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심사결과 보고
10.8.23	2010년 중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해운사 보유 선박인수, 미분양펀드 투자 현황보고
	00000000 주식 매매계약 체결
10.8.23	00000000 주식 매매계약 체결' 심사결과보고
	2010년 공적자금관리 백서(안)
10.8.23	2010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 회의록 사본

○ 공자위 회의록 및 안건은 공자위홈페이지(www.publicfunds.go.kr)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나 기업의 정보보호와 금융시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 원칙적으로 의결 1년 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위 금융정책 발표내용

□ 보도자료 배포현황

번호	제 목	작성일
1	보험상품 심사제도 개선 추진	20080305
2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개선」 추진	20080306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080311
4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80311
5	금융위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20080314
6	베어스턴스 관련 국내 금융회사 익스포저 평가 및 대응	20080318
7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대부이자 부담 완화 및 대형 대부업체 금감원 직권검사 근거규정 마련	20080318
8	[참고자료]한경미래니엄포럼 강연자료	20080320
9	위원장 기자 간담회 개최	20080320
10	금융위원회 워크숍 개최	20080321
11	금융위원회 워크숍 개최결과	20080324
12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80324
1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장과의 상견례 개최	20080325
14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매일경제 주최 “국제 금융 컨퍼런스” 강연	20080326
15	텔런트 유동근, 전인화씨 부부 소액서민금융재단 홍보대사로 위촉	20080326

1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CEO와 상견례 개최	20080327
17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범	20080327
18	[금융위 의결안건] 증권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80328
19	[금융위 의결안건]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	20080328
20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20080331
21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0331
2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70차 한경 밀레니엄 포럼 강연	20080402
2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회사 CEO와 상견례 개최	20080402
24	2008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0402
25	매일경제 제1면 「산은지분 5% 외국계에 먼저 매각」 제하 기사 관련	20080403
26	금융산업에 거는 새정부의 기대와 우리의 다짐	20080403
27	금융위원장과 중소서민 금융회사 대표 상견례	20080404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0080407
29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20080408
30	08.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절반이상이 금융분야	20080410
3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0410
32	[금융위 의결안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처리안 의결	20080411
33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주최“제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축사	20080417

34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 T/F 구성 및 추진방안	20080417
35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모두말씀	20080423
3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미 성과 관련 기자간담회	20080424
37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경련 강연 말씀자료	20080424
38	제1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 개최	20080424
39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	20080425
40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기대효과	20080428
41	지역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추진	20080429
4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말씀자료	20080429
43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20080430
44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0501
45	2008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0502
46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대폭 인하 추진	20080506
47	금융위 소관 산하기관 재산임 심사 결과	20080507
48	증권업 예비허가 심사 결과	20080509
49	금융위원회 「스승의 날」맞이 장애인 학교 방문	20080515
50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서울 개최	20080519
51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안전성 현황 점검회의 개최	20080519
52	공시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T/F 구성 및 향후 추진계획	20080520
53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머니투데이 주최 “대한민국 IB 대상”축사	20080521
54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선정 등	20080521
55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0521

5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WSB(세계저축은행협회) 제14회 아태지역총회 개최축사	20080522
57	신용카드 가맹점의 고객정보 보안관리 강화 지도 및 향후 추진 계획	20080522
58	KITA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	20080523
59	밸류에프원유한회사의 (서울)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80523
60	대한생명보험(주) 및 흥국생명보험(주)의 신탁업 경영 인가	20080523
61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산 초청 강연 말씀자료	20080523
62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1) - ① 업무영역 관련 규제개선 사항	20080523
6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1) - ② 진입관련 규제개선 사항	20080523
64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20080526
65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개막, 국무총리 개막연설	20080526
66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의장 선출	20080527
67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80527
68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 개시	20080529
69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TV 주최“헤지펀드 컨퍼런스”기조연설	20080529
70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제16차 에그몽 총회 만찬 환영사	20080529
71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2차) 보도자료	20080529
7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080530
73	제16차 에그몽 그룹 총회 서울 개최 결과	20080530
74	교차모집 시행 준비현황	20080530
75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3차) -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20080602

	외국 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	
76	전광우 금융위원장 Chatham House 강연 및 유럽계 IB초청 런던라운드테이블 개최	20080602
77	산업은행 수장, 26년여 만에 민간 전문가 임명으로 성공적인 산은 민영화 (“공공기관”→“민간금융회사”) 및 획기적인 공기업 인사쇄신의 계기를 마련	20080602
78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	20080602
79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장 수여식 개최	20080602
80	2008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0603
81	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사금융 실태조사)	20080604
82	‘회계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공청회 개최	20080604
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0080604
84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4차) - 서민금융(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관련 규제 개선사항	20080605
85	단위 신탁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 추진	20080605
86	여전업 발전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개정 검토	20080605
87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5차) -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	20080605
88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34차 한국언론재단 포럼 강연	20080605
8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ICOSA(국제증권업협회 협의회) 제21차 연차총회 기조연설	20080609
90	은행의 자회사 대출상품 판매 대행 및 소비자 보호 강화	20080609
91	새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방향	20080509
92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축사	20080610

93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CSA(세계증권업협회 협의회) 국제세미나 기조연설	20080611
94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발표	20080611
95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IPS (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 국제 컨퍼런스”축사	20080611
96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6차 보도자료-공시, 신용정보 관련 규제 등)	20080611
97	영진약품공업(주) 등 11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20080612
98	중국 은행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가능토록 협의 추진 계획	20080612
99	전광우 금융위원장,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여 한.중 양국 우량기업의 상대국 거래소 상장을 제안	20080612
100	은행권 휴면예금 출연금 확정	20080612
101	전광우 금융위원장 한.중 양국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투자를 확대키로 중국 금융당국 수장들과 합의	20080613
102	국내 금융회사 중국진출 지원방안	20080613
103	신용회복 지원 기록 삭제 관련 추가조치 시행	20080612
104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간담회 발표자료	20080612
105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20080616
106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20080616
107	엠플러스자산운용(주) 등 4개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20080616
108	(서울)HK상호저축은행의 (부산)동광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80616
109	대부업자 등록 갱신 관련 안내	20080617
110	금융규제개혁심사결과(7차 보도자료-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1)	20080617

11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개최	20080618
112	제18차 조선경제포럼 위원장님 강연	20080618
113	전광우 금융위원장 IAS Triannual Meeting 환영 만찬	20080617
114	「IAS 정례회의 및 글로벌 세미나」 개최	20080612
115	금융위원회, 캄보디아 재경부와 정보공유 및 고위급회담에 관한 MOU 체결	20080619
11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 ICGN 서울 연차총회 만찬사 연설	20080620
117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20080620
118	「IAS 정례회의 및 글로벌 세미나」 결과	20080620
119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8차) -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1)	20080623
120	금융투자회사 재인가 재등록 처리 방안	20080624
121	외환카드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판결 관련	20080624
122	「금융투자업규정」 제정 예고	20080625
12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0625
124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80625
125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 폐지 등을 위한 「은행업 부수업무지침」 개정	20080625
126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9차) 및 추가 금융규제 개선사항 - 자본시장 규제 개선사항	20080625
127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 보고 사항	20080626
12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20080626
12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Korean Economic Forum 기조 연설	20080626
130	기업은행 감사 임명	20080627

131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80627
132	(주)한화건설 등 5개사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	20080627
133	(주)KB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20080627
134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10차) -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	20080630
135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 교부행사 개최	20080630
136	제1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20080630
137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발간	20080701
138	금융민원센터 개소 및 온라인 원스톱 민원시스템 개통	20080701
139	2008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0702
140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예고	20080702
141	금융위 제1차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20080711
142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등	20080711
143	동부화재의 동부증권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20080711
144	메리츠자산운용(주) 등 3개사의 자산운용업 허가	20080711
145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714
146	전자증권제도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참석	20080715
147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산업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워크숍 개최	20080715
148	은행장간담회 개최	20080717
1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의결	20080717
150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20080718
15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080723

152	아이메카㈜ 등 2개사 및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80723
153	주식 불공정거래 형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0723
154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20080724
155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20080724
156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콜센터 운영	20080724
157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 설립 예비인가	20080725
158	자산운용업 및 신탁업 인허가	20080725
159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20080725
160	증권업 및 선물업 경영허가안 의결	20080725
161	비엔지증권중개(주)의 대주주 승인	20080725
162	하나대투증권(주)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	20080725
163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	20080725
164	공기업 특위 업무보고 관련 자료	20080728
16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입법예고	20080728
166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	20080731
167	KIKO 거래현황 및 대책	20080801
168	2008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0804
169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20080806
170	증권에탁결제원 사장 임명	20080807
171	HSBC,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관련 보완자료 제출	20080812

172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20080813
173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개정	20080813
174	금융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보도자료	20080814
1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080818
176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20080819
177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080820
178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0820
179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	20080821
180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임명 제청 및 신용보증기금 전무 임명	20080822
181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노력과 향후과제	20080825
182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80826
183	중국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한국자본시장 IR 개최	20080826
184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	20080826
185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80826
18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제 참보험인 대상 축사	20080826
187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140회 경총포럼 강연	20080828
18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20080901
189	신용회복기금 출범식 개최	20080902
190	「2008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20080902
191	2008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0904
192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080904

193	美 CME 그룹과의 연계를 통한 선물시장 글로벌화 추진	20080904
194	시장상인들을 위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 추진	20080905
195	정기국회 업무보고자료	20080908
196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	20080909
19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80909
19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80909
19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909
200	금융중심지지원센터(Fn Hub Korea) 개소	20080909
201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자료 제출	20080909
202	메디에스앤피(주)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80910
203	금융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자료 송부	20080911
204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소 및 은행별 금융애로 상담반 가동	20080911
20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시 규정 등 규정개정 승인	20080912
206	CJ투자증권(주) 및 CJ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80912
207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	20080915
208	리먼브러더스 브랑크하우스 서울지점 및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조치	20080916
209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금감원 합동 대책팀 구성.운영	20080916
210	한국 증시 FTSE 선진국 시장 편입	20080918
211	HSBC, 론스타와의 계약 파기 관련	20080919
212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강연	20080922

213	금융공기업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2차)	20080922
214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20080924
215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0924
216	(가칭)㈜KB금융지주회사 및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 설립 인가 등	20080926
217	(가칭)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20080926
218	이트레이드증권(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80926
219	상호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황	20080926
220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방안」 추진	20080929
221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20080930
222	공매도 및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20080930
223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관련 당정협의 개최	20081001
224	2008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1001
225	서울경제(08.10.2 인터넷판), 「연기금.PEF가 은행 M&A 주도할 듯」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06
226	은행장 간담회 말씀자료 송부	20081006
227	[금융위]은행장 간담회 개최 결과	20081006
228	2008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20081006
229	애널리스트 간담회 주요 현안 설명자료	20081007
230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신청 결과	20081007
2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81008
23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1009

233	중소기업은행 전무이사 임명	20081010
234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20081010
235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자료	20081013
23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세미나」 개최식 축사	20081013
237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관련 후속조치(중기지원 Fast Track 프로그램 지침 확정)	20081014
238	KIKO 등 파생상품 손실 거래소 상장기업 지원 방안	20081015
239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20081016
240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	20081019
241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추진	20081019
24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21
243	“신용회복지원중”기록 삭제 추진	20080602
244	‘신용카드업 제도개선 방안’공청회 개최	20081021
245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추진	20081021
246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개선	20081022
247	한국 투자시장 홍보 및 한·중 협력 관계 강화	20081022
248	네스테크㈜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81022
249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1022
250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81022
25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81024
252	외신기자 간담회	20081027

253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자료	20081024
254	제45회 「저축의 날」 행사	20081028
255	금융권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081029
256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아태지역위원회(APRC) 회의 주재.참석(10.30 회의 당일)	20081029
257	증권시장 악성루머에 대한 단속 강화	20081029
258	24개 KIKO 등 거래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개시	20081030
259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아태지역위원회(APRC)회의결과	20081030
260	제21차 한미재계회의 위원장님 기조연설	20081031
261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심사 실시	20081103
262	10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 편성 -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	20081103
263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81104
264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20081104
265	2008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1105
26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05
267	2008.11.5 연합뉴스 ‘내달부터 금융소외자 빚부담 덜어준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20081105
268	쥘포이보스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81105
269	오바마 후보 당선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20081105
270	11.5(水) 주요 은행장 조찬 간담회 결과 보도참고자료	20081105
271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개정 공개초안 발표	20081106
272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06

273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승인	20081107
274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20081110
275	신용회복기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채무재조정 신청.접수 개시	20081110
276	자본시장 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10
277	Financial Times(11.11,火, 04면) 전광우 금융위원장 인터뷰 기사 보도	20081111
278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축사	20081112
279	신성건설 관련 대응방안(보도 참고자료)	20081112
280	11.12(水) 증권·자산운용 CEO 조찬 간담회 결과	20081112
281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 공급 방안	20081113
282	위원장님 기자간담회 말씀자료	20081113
283	업무현안 및 2009년도 예산안 보고	20081114
284	한국시장 홍보를 위한 민·관합동 ‘글로벌 IR’ 개최	20081117
285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밀집지역 은행 현장 방문	20081117
286	권혁세 증선위원 「아시아 채권 시장 전망」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	20081118
287	금융위, 런던·뉴욕 국가 IR (Korea Investors	20081119
288	김용환 금융위원 「채권시장 정책 심포지엄」 축사	20081119
289	주식 불공정거래 형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1119
290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 개정	20081121
291	하나대투증권(주)과 하나IB증권(주)의 합병 인가	20081121
292	도이치증권(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81121

293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 관련 결정에 대한 입장	20081124
29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차관회의 통과	20081124
29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81125
296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081125
297	세계경제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오찬 연설자료(국문)	20081125
298	기업재무개선 지원단 설립	20081126
29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액보험 지원금 교부 및 보험증권 전달식 축하	20081127
300	「제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20081128
301	미국투자자 코스피200선물 투자 가능	20081201
302	2008. 12. 1. 헤럴드보험대상 축하	20081201
303	2008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81203
304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외 금융전문인력 채용·취업 지원 개시	20081203
305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20081203
306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UBS Korea Conference 오찬 기조 연설	20081204
307	08.11월 중기지원 실적 및 추가지원 방안	20081204
3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20081205
309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20081208
310	금융위-서울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 본격 시행	20081209
311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81209

312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81209
313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20081209
314	'08년 2차 P-CBO 2,500억원 발행	20081210
315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20081210
316	㈜파로스이앤아이 등 3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20081210
317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 영업 일부정지 조치 연장	20081212
318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 인정	20081212
319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 연장	20081212
320	추가 출자·재원 확보 현황	20081215
321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20081218
322	신용회복기금 채무재조정 환승론 본격 시행 및 '금융소외자 종합자활 지원 네트워크'개통	20081218
323	제8차 한·일 금융당국 고위급 연례회담, 서울에서 개최	20081219
324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	20081222
325	'0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081222
32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222
3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222
32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81222
329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	20081222
330	신종자본증권 BIS기본자본 인정한도 확대	20081223
331	『실물금융종합지원단』(가칭) 구성을 위한 지경부·금융위간 협의	20081224

332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81224
33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81224
334	부실 외부평가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및 감독강화	20081224
335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1226
336	(전북)전북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81226
337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등 개정	20081226
338	금융 공공기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20081230
339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금융 감독 대상」 시상식 축하	20081230
340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 방안	20081230
341	대부업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지연에 따른 당부사항	20081231
342	2009년 증권선물시장 개장식 치사	20090102
343	09년 금융권 인턴사원 채용 계획	20090105
344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신년사	20090105
345	2008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107
346	08년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09년 지원계획	20090108
347	국내은행, 기업 설자금으로 9조 1천억원 지원예정	20090109
348	금융위, 금감원 공동 「IFSB 이슬람금융 세미나」 개최	20090112
349	제28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090112
350	「이슬람금융 세미나」 대통령 축하(금융위원장 대독)	20090113
3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90113
352	매경 증권인상 축하	20090114

353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 인가	20090114
354	외화환산 등 관련 회계기준 확정	20090114
355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115
356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동향	20090115
357	금융위원회 청사 이전	20090116
358	설 대비, 「원스톱 현장 중기 금융지원반」 운영	20090119
359	中小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 협약식 개최	20090119
360	권혁세 증선위원, 자본시장통합법 국제세미나 축사	20090120
361	건설사 및 중소조선사 구조조정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090120
362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시행 관련	20090120
363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20090121
36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121
365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추진	20090121
366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결과	20090121
36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개선 추진 계획	20090122
368	09년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계획 수립	20090122
369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 공시규정 제·개정	20090128
370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0128
371	한맥선물(주) 및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20090129
3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등	20090129

373	2008년 12월중 유가증권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실적	20090129
374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20090130
375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20090202
376	자본시장 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20090202
377	금융투자회사 재인가. 재등록 완료	20090202
378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워크아웃 추진기업 애로 해소방안 강구	20090204
379	금융공공기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감사 실시	20090205
380	09.1월 중기지원 실적	20090205
381	2008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205
382	권혁세 증선위원, 부산 금융중심지 토론회 기조연설	20090209
383	Moody's, 국내은행 장기외화부채 신용등급 변경의 의미	20090209
384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20090212
385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 해설지침 마련 안내	20090212
3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통일 등	20090212
387	휴먼에금관리재단 이사장 임명	20090212
388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워크숍 개최 계획	20090213
389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 워크숍 논의결과	20090216
390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등	20090218
391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	20090218
392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20090218
393	(가칭)㈜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	20090218

394	에스신용정보(주)에 대한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20090218
395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	20090219
396	금융위원회, “금산분리 규제 개혁”관련 UCC 제작	20090219
397	제28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090223
398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90224
399	수출입 기업 환해지 지원을 위한 장내 통화선물 리모델링 추진	20090224
400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20090225
401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225
402	㈜대전상호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20090225
40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225
404	국제금융시장 불안 장기화에 따른 우리경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20090226
405	부도율·회수율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20090227
406	「은행 자본확충 펀드」 신청 현황	20090227
407	금융위원장, 금융소외자 지원 현장 점검	20090304
408	(경기)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0304
409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20090305
410	Wall Street Journal(Asia版)(3.6,金, 11면)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기고문 보도	20090306
411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20090309
412	09.2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20090309
413	서민 고통분담에 금융위 공무원 동참	20090310
414	事前 채무조정 제도(Pre-Workout) 시행	20090310
415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구 상임위원 영국 및 미국 출장	20090311

416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	20090311
417	(주)아이씨엠 등 2개사 및 대주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311
418	Fitch社의 국내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관련(보도참고자료)	20090313
419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20090313
420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20090316
42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316
422	금융위원회 영국 런던 현지 금융·경제 설명회 개최 결과	20090316
4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090317
424	2009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317
425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산 초청 강연과 부산지역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및 금융기관 방문 실시	20090318
42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318
427	은행자본확충펀드 제3차 운영위원회 결과	20090320
428	금융위·금감원 비상금융통합상황실 확대·개편	20090323
429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0324
430	금융위기극복 관련 추경 편성	20090324
431	한국경제바로알리기 미국 설명회 개최 결과	20090324
432	글로벌파이낸스포럼 창립기념세미나	20090325
433	주택연금 활성화 등 추진 현황(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등)	20090326
43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및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326
435	건설 및 조선사 2차 신용위험평가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090327

436	“금융위기 극복 워크숍” 개최	20090327
437	금융권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20090330
43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331
439	은행 자본확충 펀드 제1차 매입 완료	20090331
440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사외이사 간담회 개최	20090401
441	예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20090401
442	09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개시	20090402
443	금융위원장, 중기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20090403
444	북한 로켓발사관련 비상금융합동대책반 회의 개최	20090406
44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407
446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0090406
447	事前 채무조정(Pre-Workout) 시행 개시	20090408
448	「국고채 ETF」 등 신종 ETF 활성화 추진	20090408
449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408
450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판매중단 위기」 보도내용 관련	20090408
45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	20090409
452	2009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409
453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통과	20090409
454	정무위 업무보고	20090413
455	대한생명보험(주)의 한화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	20090415

456	리먼증권 서울지점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20090415
457	금융투자업 인가	20090415
45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20090422
459	자산운용보고서 관련 제도합리화	20090421
460	위기를 기회로 활용,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	20090423
461	쌍용차 및 GM대우 협력업체 2,400억원 지원 - 지자체·은행·보증기관 참여 『지역상생 보증펀드』 협약식 개최	20090423
462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국무회의 보고	20090428
463	대부업법 시행 관련 연체이자율 기준 변경	20090429
464	기업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	20090430
465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504
46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0504
467	제2차 금융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20090506
468	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본)허가	20090506
469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및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임명	20090506
470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20090508
471	'09.4월 중소기업대출 및 신용보증지원 실적	20090512
472	2009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513
473	금융위원회, '금융위기 극복'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개설	20090513
474	㈜미디어코프 등 5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513
475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20090513
476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등 규정 변경예고	20090514

477	금융 공공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20090514
478	부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	20090515
479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20090515
480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안) 주요내용	20090518
481	低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환승론) 확대 시행	20090518
482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독려	20090520
483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해지	20090520
484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	20090526
485	신성장동력 녹색금융 분야 세부추진계획 발표	20090526
486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527
487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527
488	2009사업연도 결함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등	20090527
48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20090529
490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금융의 과제(한국금융학회 창립 20주년 정기 학술대회 초청연설)	20090529
491	축사(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20090603
492	금융투자업 인가	20090603
49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605
494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정부안 국회제출	20090609
495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20090611
496	'09.5월 중기지원 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	20090612
49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090608
498	2009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616

499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등	20090617
500	(가칭)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 설립 인가 등	20090617
501	(주)골든브릿지의 (전남)상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0617
502	SH&C생명보험(주) 및 KB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	20090617
503	금융투자업 인가	20090617
50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0090617
505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20090617
506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618
507	한국의 금융정책(2009 중앙데일리-SERI 공동 주최 Korean Economic Forum 초청연설)	20090619
508	보험범죄 근절대책	20090619
509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20090622
510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20090623
511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화위원회(FSB) 창립총회 및 홍콩 국제비즈니스포럼 참석	20090623
5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매일경제신문 주최 HongKong Business Forum 기조연설)	20090624
513	(주)씨모텍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624
51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624
515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090625
516	「범금융권 고객정보보호 캠페인」 추진	20090629
517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진출 및 FSB 창립총회 주요 결정사항	20090629
518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0090630

519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및 허가취소 절차 개시	20090701
520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90701
52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701
522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제정	20090701
523	위원장,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강연	20090703
524	금융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20090703
525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발표	20090706
526	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 전국 확대 시행	20090707
527	㈜원드스카이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0708
528	디도스 공격 관련 금융권 비상 대응체제 가동	20090709
529	CMA 시장 동향 및 감독 강화 방안	20090709
530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	20090710
531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 한국 금융의 과제	20090710
532	금융위원회 외부 금융전문인력 채용 확대	20090710
533	금융위원장, 은행장과 간담회 개최 예정(7.13일)	20090713
5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090714
535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090715
536	2009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716
537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20090716
538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090716

539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예비인가 의결	20090716
540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20090716
541	09년 상반기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	20090717
542	국회 예산정책처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분석」 보고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20090722
543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722
544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722
545	舊 (주)중부상호저축은행[(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090722
546	금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0090722
54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723
548	한국산업은행 분할 방안 확정	20090728
549	금융투자업 인가 및 국제신탁(주)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20090729
550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	20090729
551	국제회계기준(IFRS) 기초연설문	20090729
552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20090730
553	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20090730
554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우리나라 상호평가 보고서 출간	20090805
555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090806
556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90811
557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20090813
558	산은·기은을 중심으로 2조원의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운용할 계획	20090817

559	2009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817
560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 최초로 영문 블로그 개설	20090818
561	제 2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	20090820
562	일본(동경) 및 중국(상해) 현지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20090824
563	서민금융 관련 반복적 민원 해소방안 추진	20090825
564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0826
565	아시아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허가취소	20090826
566	금융투자업 인가	20090826
56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20090827
568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0828
569	「2009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	20090831
570	금융위원회, 외부전문가 채용 비율 10% 초과	20090831
57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회의 개최	20090831
572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점검회의 개최	20090902
57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902
574	㈜케이디세코·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090902
575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20090903
576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090903
577	외신기자 간담회 연설문	20090907
578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	20090909
579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20090909

580	금융투자업 인가	20090909
581	우리은행 및 황영기(前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조치 의결 결과	20090909
582	ELS 발행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	20090911
583	[보도참고]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과반수 미달인데, 안건 의결」, 매일경제 「금융위, 재적위원 과반미달서 의결」, 경향신문 「금융위, 18개 안건 대리출석 처리」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914
584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20090914
585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 (MOU) 체결	20090915
586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결과	20090916
587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20090917
588	자본시장연구원 국제컨퍼런스	20090923
589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	20090923
590	(서울)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및 에이치에스에이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기)에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0923
591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 신용카드업 인허가 의결	20090923
592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예비인가 의결	20090923
593	KOSPI200선물 야간거래 개선을 위한 거래소 규정개정안 승인	20090924
594	[보도참고자료] 금융위원장 정례기자간담회	20090925
595	제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090925
59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090928
59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090928

598	[보도참고자료] 금융위원장 및 금융유관기관 협회장 「추석 맞이 재래시장 방문」 추석올가 동향 파악 및 애로사항 등 수렴	20090928
599	파이낸셜뉴스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축사	20090929
600	ADB, 금융위, 재정부 공동 국제컨퍼런스 개최	20090929
601	ADB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문	20090930
602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930
60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930
604	2009년 7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0930
605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각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1001
606	채권 유통시장 개선 방안 마련	20091005
607	(가칭)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설립 인가	20091007
608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1007
609	금융투자업 인가	20091007
610	‘녹색금융이 이끄는 녹색성장’ 컨퍼런스 축사	20091009
611	09년도 국정감사 관련 업무현황	20091012
6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20091014
613	쥬네오리소스 등 8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1014
614	한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20091014
615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추가 본인가 의결	20091021
616	제46회 「저축의 날」 행사	20091027
617	[보도참고자료]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 설립	20091027
618	한국정책금융공사 창립 기념식 축사	20091028

619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세미나 연설문	20091028
620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1028
621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091029
622	2009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1102
62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91105
624	「2009 KRX 상장기업 IR 엑스포」 기조연설	20091105
625	신용정보 협회 출범식 격려사	20091105
626	2009 서울국제금융 축사	20091106
627	[보도참고자료] 한국 조선산업 경기회복 선제대응에 나서	20091109
628	[보도참고자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해운산업 자생력 확보 계기 마련	20091109
629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20091110
630	IGE·IMF 국제금융컨퍼런스	20091111
631	쥬비엔디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91111
632	자동차보험료(자차·대물) 할증기준 개선 추진	20091112
633	국회 경제정책포럼 세미나	20091116
634	Korean G20 Leadership 연설문	20091118
635	전남서부신협과 문장신협의 합병 등 인가	20091118
636	비씨카드(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	20091118
637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 간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예비인가	20091118
638	미래상호저축은행 등의 한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091118
639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본·예비인가 의결	20091118

640	금융투자업 인가	20091118
641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	20091119
642	‘회계감사업무시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관련 회계감독 강화	20091125
643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1125
644	(주)헤세나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91125
645	제7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091125
646	2009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1127
647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20091127
648	두바이월드 채무상환유예요청 관련 비상금융합동대책반 회의 개최	20091129
649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	20091130
650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본·예비인가 의결	20091202
651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주) 설립 예비인가	20091202
652	[위원장] UBS Korea CEO/CFO Forum 2009	20091203
653	[위원장] AMCHAM Luncheon Speech	20091209
654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1211
655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신설 인가	20091214
656	2010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0091216
657	바젤위원회, 금융규제 개편방안 초안 발표	20091217
658	2009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091218
659	제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091218
660	한화손해보험(주) 및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의 합병 인가 등	20091218

661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 간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인가 등	20091218
662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본인가) 의결	20091218
663	제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20091221
664	미소금융 설립 및 운영현황 등	20091221
665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1222
666	금융위원장 및 금융유관기관장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	20091223
667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1223
668	㈜신명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20091223
669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1223
67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20091224
671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체계 개편 및 수수료 인하	20091229
672	금융투자업 인가	20091229
673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091229
674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1229
675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20091230
676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20091231
677	K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 시행	20091231
678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영업정지)	20091231
679	[위원장] 2010년 금융위원회 신년사(시무식)	20100104
680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20100104

68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20100104
682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20100104
683	[위원장] 2010년 범금융기관 신년사	20100105
684	FSB 보상원칙 국내 이행을 위한 업권별 모범규준 마련	20100106
685	(주)스타맥스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106
686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새단장 오픈	20100107
68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107
688	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20100108
689	'미소(美少)금융'신청자격을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20100111
690	제3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결과	20100111
691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20100112
692	금융위원장, 금융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20100112
693	외국인 금융투자자 등에 대한 출입국 편의제공 확대	20100113
694	[보도참고] 금융위원장, 7개 금융협회장 간담회 참석	20100114
695	미소금융 1개월간 설립·운영현황 등	20100118
696	[위원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년 세미나 기조연설	20100118
697	[보도참고] 진동수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 성과와 과제	20100119
698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현황 및 리스크 평가	20100120
699	2010년도 미소금융 추진계획	20100120
700	(주)트라이콤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120
701	[위원장]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2010년 금융정책의 과제와 방향)	20100122

702	더케이손해보험주에 대한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20100127
703	결합재무제표 기준서 제정	20100127
704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의결	20100127
705	제9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127
706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20100128
707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영업행위에 주의하세요	20100128
708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128
709	2009년 1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129
710	'09.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정리 추진 실적	20100201
711	금융위원장, 설 대비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방문	20100202
712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국제 세미나	20100203
713	[보도참고]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용역 추진	20100203
714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	20100203
715	여신금융회사 이자율제한 위반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20100205
716	[보도참고]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적자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20100207
717	제10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208
718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관련 추진계획	20100210
719	금융위원장, 설 대비 미소금융 지원 현장점검	20100210
720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하나카드 대주주 승인	20100210
721	공시위반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조사업무규정)	20100211

722	[보도참고] 서민금융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20100217
723	제287회 국회(임사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100218
724	[보도참고] 금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20100218
725	2009년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219
726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00224
727	미소금융 2개월간 운영현황	20100224
728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형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224
729	(주)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조치	20100224
730	제1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224
731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	20100302
732	케이디비칸서스밸류 PEF의 금호생명보험(주) 대주주 승인	20100303
733	한국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 분할 인가	20100303
734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 및 합병승인 의결	20100303
735	금융투자업 인가	20100303
73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추진	20100305
737	2010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305
738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감독당국과 회계법인 조찬간담회 개최	20100311
739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20100317
740	한중일 고위급 금융당국 회의 및 한중일 금융협력세미나 참석 결과	20100318
741	펀드업계 「기존 투자자 펀드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 추진	20100318

742	제12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319
743	제10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20100322
74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0323
745	[위원장] 금융선진화포럼 정책세미나	20100324
746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100324
74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324
748	(주)야호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 및 화인경영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324
749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2010년 감리업무 운영방향	20100325
750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325
751	예대율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20100326
752	[보도참고]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참석	20100326
753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공시 강화	20100330
754	2010년 2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402
755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 개최	20100407
756	금융투자업 인가	20100407
757	금융투자회사의 외환파생상품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00407
758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20100407
759	예나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20100407
760	2010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출범	20100408
76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408

762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20100409
76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 예고	20100412
76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413
765	제289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100414
766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	20100415
767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00416
768	美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20100420
769	[보도참고] 대부업법 시행령 최고이자율 인하 적용대상 관련	20100420
770	[위원장] 2010 세계 경제·금융컨퍼런스	20100421
771	[보도참고]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	20100421
772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의결	20100421
77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20100421
77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의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100421
775	현행 IFRS 외화환산회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 및 향후계획	20100422
776	2010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개최	20100422
777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	20100423
778	제1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423
779	「FSB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발간	20100426
780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20100427
781	IFRS 정보이용자 조찬간담회 개최	20100427

782	행정지도 운영 투명화 방안 추진	20100428
783	[보도참고] S&P의 그리스·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관련	20100428
78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428
785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00430
786	전화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개선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 계획	20100506
787	금융위 부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대전 동구지점 개소식 참석 및 KB 미소지점 현장점검	20100506
788	녹색금융특화 MBA 업무협약 체결	20100507
789	남유럽발 금융불안에 대응한 비상금융합동대책반회의 개최	20100507
790	2010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507
791	[보도참고]금융인 초청 오찬간담회의 금융위원장 발표자료	20100507
792	[보도참고]경제, 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	20100510
793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개시 점검	20100510
794	금융위, 한국경제 해외설명회 개최	20100510
795	[보도참고]2010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중소서민금융분과 개최	20100512
796	2010년도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제1차회의 개최	20100512
797	(가칭) 아이비케이 연금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	20100512
798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승인 의결	20100512
799	금융투자업 인가	20100512
800	[보도참고]권혁세 부위원장, 싱가포르에서 한국금융 IR 활동 전개	20100513

801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개최	20100514
802	[보도참고]제17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514
803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20100517
804	제4차 「IFRS 정착 추진단」 회의 개최	20100517
805	[위원장]2010 Korean Economic Forum	20100519
806	금융위 부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신한미소금융재단 부산 해운대지점 개소식 참석	20100519
807	진동수 금융위원장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독일금융청과의 금융 협력/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추진	20100519
808	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안 예고	20100520
809	'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00520
810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520
811	2010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 등	20100520
812	[위원장] 독일 재무부 주최 국제회의 Keynote Speech	20100521
813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대내외 금융시장 점검을 위한 비상 금융합동대책반회의 개최	20100523
814	금융위 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기업은행(IBK) 미소금융재단 부천지점 개소식 참석	20100525
815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526
816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인가 등	20100526
817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00526
818	금융투자업 인가	20100526
819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및 대주주변경 등 승인 의결	20100526
820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20100527

	찾기, '행복잡(Job)이'프로젝트	
821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527
822	제1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528
823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20100531
82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601
825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603
826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100603
82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603
8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603
829	2010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604
8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0608
831	한국, IOSCO MMOU 정식회원으로 가입	20100609
832	국민신용정보(주)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2월) 조치	20100609
833	진동수 금융위원장, 제4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및 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강화 회의 참석	20100614
834	[보도참고]거시 건전성(MacroPrudential Measures)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20100614
835	제19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614
836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이크로파이낸스 : 도전과 국제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100615
837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616
838	진동수 금융위원장, 미국 FRB 버냉키 의장, SEC 사피로 의장 면담 및 FRB, OCC, FDIC, OTS와 MOU 체결	20100617

839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20100618
840	제20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618
841	제29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20100622
842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시장 편입 발표 관련	20100622
843	[보도참고]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0623
844	경북경산제일신협과 청도군신협의 합병 등 인가	20100623
845	미니금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거래소 규정개정안 승인	20100623
846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00623
847	금융투자업 인가 및 대주주변경 등 승인 의결	20100623
848	공인인증서 사용규제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0100623
84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20100624
850	2010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20100624
851	『시장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워크숍 개최	20100624
852	[보도참고]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00625
853	[보도참고]2010년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100625
854	「시장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워크숍 개최	20100625
855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20100625
856	「(가칭)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 토론회 개최	20100629
857	미소희망봉사단 창단	20100629
858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의결	20100629

859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개최	20100630
860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0630
861	[보도참고]금융정보분석원, 룩셈부르크등 2개국 FIU와 양해각서 체결	20100630
86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630
863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펀드 공시제도 개선」 추진	20100701
864	금융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전주지점 개소식) 기업, 은행계 미소재단, 다양한 미소금융 지원 시작	20100702
865	20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회의 개최	20100702
866	저축은행에 유동성비율 제도 도입	20100707
867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00708
868	2010년 제3차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회의 개최	20100709
869	2010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709
870	[보도참고]『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금융위 전직원 워크숍 개최	20100709
871	‘미래와 금융: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대책’세미나	20100714
872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00714
87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00714
87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00714
875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지원 현장 점검 실시	20100715
876	‘10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 개최결과	20100715
877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마련 일정	20100716
878	금융위 부위원장, 회계법인 조찬간담회 개최	20100720

879	7.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본격출시	20100720
880	은행업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00721
881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00721
882	금융투자업 인가	20100721
883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00721
884	[금융위](주)탑라인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대주주 변경 승인 등	20100721
885	한도거래 대부계약에 대한 최고이자율 적용 관련	20100721
886	[금융위]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등 개정안 등	20100721
887	금융감독원 저축은행부문 인력 충원을 위한 특별예비비 사용 승인 등	20100721
888	[보도참고]상장 중소기업들에 대해 예정대로 2011년부터 IFRS를 시행	20100722
889	금융위원장 미소금융 간담회 참석	20100723
890	금융위원장,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출시 기념식 참석	20100726
891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	20100726
892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애널리스트 및 리포트 공시제도 도입 추진	20100727
893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추진	20100727
894	은행부행장 조찬간담회 개최 및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0728
895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20100728
896	[보도참고] 위험회피(헷지) 회계 관련 IFRS 개정 동향 및 한국의 대응 노력	20100729

897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20100729
898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착수	20100730
899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20100730
900	[보도참고] 중소기업 현장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도급, 인력, 자금이 주요 애로요인인 것으로 조사)	20100730
901	2010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00730
902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20100802
903	금융위원장,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현장점검	20100803
904	[보도참고] 미소금융 관련 현황 설명자료	20100805
905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기관 및 지역별 취급실적	20100805
906	금융위원장, 대전지역 '햇살론' 판매현장 점검	20100805
907	[보도참고] '저신용·고소득자의 햇살론 대출가능'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20100806
908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100806
909	케이디비생명보험(주)에 대한 자본감소인가	20100809
910	투자일임계약(랩 어카운트)의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20100810
911	[보도참고] '햇살론' 취급현황	20100810
912	제2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100813
913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 개최	20100818
914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20100818
915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20100818

916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100818
917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중소기업단체장 조찬간담회 개최	20100819

□ 보도해명자료 목록

번호	제 목	작성일
1	이데일리,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종창씨 추천』	20080324
2	한국경제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대감에 5일째 상승』 (08.3.25)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0325

3	서울경제 『기업어음 전자증권제 도입』 (08.3.26)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326
4	한국경제 「한국판 골드만 삭스 물거품 우려」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331
5	문화일보 「금융사 분담금 축소.....퇴직자 민간취업 제한은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401
6	매일경제 「저축은행에 신탁·외환 업무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407
7	“금융 공기업 기관장 일괄사표 제출”보도 관련	20080417
8	연합뉴스 「금융기관장 이번주 회비 갈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422
9	중앙일보 제E1면 「공기업 매각 주간사, 국내 IB(투자은행)에 우선권」 제하 기사 관련	20080422
10	동아일보 「2012년부터 은행거래 자금 실소유자 확인」 제하 기사 (08.4.25 B 2면) 관련	20080425
11	금융위원장의 산업은행 민영화관련 발언에 대한 보도해명	20080502
12	동아일보 퇴직연금 괴담 제하 기사(08.5.7 B 2면) 관련	20080507
13	아시아경제, “금융위-금강원 ‘氣 싸움’”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0507
14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 관련 보도 참고 자료	20080507
15	연합인포맥스 「전광우 금융위원장, “다음달 금리인하 얘기 있어”」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509
16	매일경제 제a11면 「産銀지주, 3년내 우체국금융 인수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080513
17	매일경제 제a05면 「금융위·법무부 ‘포이즌필’ 도입 합의」 제하 기사 관련	20080516
18	서울경제 A3면 「국책은행 민영화, 한미 FTA 복병되나」 제하 기사 관련	20080519
19	이데일리 ｢밥그릇싸움에 산업만 명든다｣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80520

20	이데일리 ｢제2의 송레문 되지 않으려면｣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80521
21	이데일리 「10년째 내부파벌싸움」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80521
22	국민일보, 『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정보 멋대로 활용』('08.5.23.)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0523
23	파이낸셜타임즈 아시아판 「HSBC는 외환은행(KEB) 문제 해결을 주목」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526
24	헤럴드경제, 금융'낙하산인사'부활 파문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0528
25	헤럴드경제 제1면 및 제6면 「우리․기업銀 2012년까지 매각」 제하 기사 등 관련	20080604
26	이데일리 「NDF 규제확대..“환율하락 심리 저지 역할”」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604
27	연합뉴스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완화」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612
28	서울신문 「인터넷 뱅크 설립땀 실명제 폐기?」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624
29	서울경제 「은행'방카'판매인력 제한 없앤다」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627
30	연합뉴스 「기업 은행소유 2011년 허용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721
31	한국경제 제a25면 「외환銀, 산업은행 품으로?」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080723
32	조선일보(08.7.24일자 a01면) 「HSBC, 외환은행 인수할 듯」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724
33	서울경제(7.28일자 인터넷판) 「예대율 한도설정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728
34	“기업은행 2011년 이후 민영화”, “기업은행 민영화 지연” 취지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729
35	연합뉴스(2008.7.30, 06:01) 「건보 가입자 질병정보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 추진」	20080730

36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	20080730
37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도 통합 제하 기사 관련	20080813
38	“신·기보 1~2년 뒤 통합 추진”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819
39	“금융위 국제·국내 금융 기능 통합을”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20080825
40	아시아경제(08.8.26 인터넷판) “금융위, HSBC 외환銀 인수 추석前 승인 보도해명자료	20080826
41	2009.9.1(월) The Times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 제하 기사 관련	20080902
42	연합뉴스(08.9.4 인터넷판), 문화일보(08.9.4) “금융시장 혼란속 금융위 어디있나”	20080904
43	서울경제(08.9.9 인터넷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방안 백지화 가능성 높아」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20080909
44	한국경제 제 a38면 「불확실성 키우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20080909
45	연합뉴스 「‘펀드런’나면 한은 통한 유동성 지원 추진」 제하 기사 관련	20080916
46	KBS 「공매도 무방비」 제하 기사 관련	20080923
47	머니투데이(08.9.26 1면), 「금산분리 단번에 대폭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926
48	국제신문(08.9.29 1~3면), 「‘금융중심지’부산탈락 說」 등 제하의 기사 관련	20080929
49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한국의 은행들 과거 실수 망각」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009
50	한국경제(08.10.13 A1면), 「건설업계 자금 숨통 트인다... 정부, 만기어음 상환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13
51	국내 일반은행의 예대율 현황	20081013
52	Financial Times, "Sinking feeling" 기사 (08.10.14일자) 관련	20081014
53	한국경제 A04면 등 「펀드런땐 韓銀이 유동성 지원」 제하 기사	20081023

	관련	
54	매일경제 A01면 등 「모든기업환손실 회계처리 안한다」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027
55	이데일리(인터넷판), 「건설경기 부양에 올인... DTI · LTV 더 푼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081028
56	매일경제 A01면 「기업보유주식·채권 시가평가 유예」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103
57	매일경제 제a03면 「산은 민영화 무기한 보류」 제하 기사 관련	20081104
58	경향신문 제21면 「‘뿔북대응’ 금융위」, 세계일보 제18면 「...뿔북행정 빈축」 제하 기사 관련	20081106
59	매일경제 제1면 「산은·연기금, 은행에 자본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113
60	동아일보 B1면 「16개 시중銀 지급보증 140억달러 신청하기로」 제하 기사 관련	20081117
61	11. 1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	20081118
62	「서울신문‘사채7조’서민빚 눈덩이」 제하 기사 관련	20081118
63	문화일보 1면 「한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긴급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119
64	2008. 11. 20 연합뉴스 등 「전광우 금융위원장 은행권 구조조정 시사」 제하 기사 관련	20081120
65	매일경제신문의 「PF대출 부실 굶아터지기전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속히」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121
66	한겨레 제1면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081126
67	매일경제 제1면(가판) 「정부, 은행부실채 산다」 제하 기사 관련	20081127
68	연합뉴스 「구조조정위 부활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081201
69	「연합뉴스‘저축은행에 공적자금 1조원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81203
70	조선일보 「대주단 가입 신청 29개사 모두 승인 추진」 제하 기사 관련 해명	20081205

71	「문화일보'정부, 건설업 신용보증 확대 올 3000억원→ 내년 2조원」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72	연합뉴스 「이창용“내년 성장을 2% 밀들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73	매일경제 「통합민간구조조정기구 곧 설립」 제하 기사 관련	20081208
74	조선일보, 「은행BIS비율 12% 채워라, 정부, 미달 땀 강제 구조조정」 기사에 대한 해명	20081211
75	서울경제 「미분양 해소 대책 어떻게 나올까?」 제하 기사 관련	20081216
76	연합인포맥스 「금융위, BIS 8% 이상 은행에도 공적자금투입.. 법개정 검토」 기사 관련	20081216
77	연합뉴스 「건설·조선 구조조정시 경영진 평판 고려」 제하 기사 및 이데일리 「조선·건설사 구조조정 기준 확정」 제하 기사 관련	20081231
78	내일신문 제1면 「모든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20090106
79	문화일보 제14면 「기업'자사株'담보펀드 나온다」 제하 기사 관련	20090107
80	서울경제, 「부실 저축은행 내달중 속아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09
81	이데일리, 「금감원장'BIS10%'발언....금융위와 주도권선점용?」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2
82	이데일리 「전광우“동부·두산 등 중견그룹 모니터링”」 제하 기사 관련	20090113
83	한국경제 「금강원 건설·조선사 옥석가리기 직접 나설것」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5
84	연합뉴스 「은행들 건설·조선사 퇴출 없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6
85	머니투데이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미진 때 은행문책」 및 연합뉴스 「금강원, A.B등급 부도나면 은행문책」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119
86	매일경제 「은행 BIS비율 내달 완화한다」 가판 기사 관련	20090130
87	한국경제 「자통법에 발목잡힌 국민연금」 기사 관련	20090205
88	한국일보, 「부실징후 대기업 자구안 내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6

89	연합뉴스, 「정부, 구조조정 속도 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09
90	한국경제 「기업대출보증 모두 만기연장」 및 「파격적 보증으로 中企 자금난 해소…수출보험도 무제한 지원」 (09.2.12)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211
91	서울경제 「올해 만기 중기대출 2금융권도 전액 연장」 관련 보도 해명자료	20090216
92	연합뉴스 「BIS비율 8% 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투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219
93	The Economist 「Domino theory」 (09.2.26일자)기사 관련	20090227
94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현황(보도참고자료)	20090227
95	파이낸셜뉴스 「정부, 해운사 배 100척 매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03
96	연합뉴스 「금강원 “정상기업도 신용위험 재평가”」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309
97	이데일리 「정부,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 검토」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090320
98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주식 공매도 재허용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324
99	이데일리 「상장중소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적용 연기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20090326
100	서울경제, 「금융당국, “저축은행 합쳐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417
101	파이낸셜뉴스, 「증권사‘허술한 입단속’어쩌나」 기사에 대한 해명	20090511
102	매일경제 「주식 공매도 곧 재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13
103	공매도 냉각기간제도 시행여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4
104	한국경제 「車운행 많으면 보험료 더 낸다」 기사 관련	20090527
105	“정부 유동성공급 지속 곤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527
106	“보험사기 합동조사팀”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04
107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618

108	OCI(주) 조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15
109	위원장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20090720
110	연합뉴스 「금융당국 주택대출 확대 은행에 불이익」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1
111	머니투데이 「우리금융, 조기 민영화 금융위에 요청」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813
112	CBS 노컷뉴스 「정부, 금융공기업도 임금 5% 반납」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903
113	아시아투데이 「정부, 신용평가사 자회사 보유 금지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20090911
114	헤럴드경제 「‘미소금융’ 불참…외국계銀 해도 너무하네」 관련 보도 해명	20090925
115	동아일보 「경영권 무관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23% 정부, 전량매각 미리 의결키로」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20091005
116	10.21 연합인포맥스 「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 「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091021
117	연합뉴스 「우리금융지분 7%, 11월내 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20091027
118	매일경제 「은행 美국채 보유 의무화 내년 7월 시행」 제하의 기사 관련	20091109
119	동아일보의 은행장 후보, 금융당국이 사전심사 보도 관련	20091119
120	연합뉴스 “돈세탁 의심거래 무조건 신고추진”관련	20091127
121	매일경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20091202
122	매일경제 “부실보험 판매대리점이 배상…” (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20091203
123	연합뉴스의 빅4 회계법인에 외부감사 맡아주기 보도 관련	20091203
124	헤럴드경제 “금융회장 선출에 주주대표 참여”관련	20091204
125	한국경제신문, 대우건설 産銀에 넘겨라 기사에 대한 해명	20091228

126	연합뉴스, 서울신문의 「기업인수목적회사제도 허점투성이」 기사에 대한 해명	20091228
127	매일경제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 내주 발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03
128	서울경제 등 「우리금융 등 은행간 M&A 빨라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04
129	연합뉴스 「KB회장, 사외이사제 개선후 뽑아야」 제하기사 관련	20100110
130	서울경제 「새 보험료 산출방식 의무도입 "유예"」 제하 기사 관련	20100113
131	서울경제 “은행서도 ‘랩어카운트’판매한다	20100119
132	세계일보 「공자금 상환 부진 '혈세만 줄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119
133	서울경제 「2금융권 미소금융 출자‘난색’」 제하기사 관련	20100120
134	서울경제 인터넷판 「예금보장제 10여년만에 대수술」 제하 기사 관련	20100126
135	한국경제 「우리금융, 합병통해 민영화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08
136	한국경제 「우리금융 합병 쉽게‘예보 MOU’준다」 등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09
137	서울경제 「예보,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제하기사 관련	20100216
138	이데일리, 「금융당국, 증권사 신규인가 전면 재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22
139	헤럴드경제 「우리지주 자사주 차입매입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223
140	연합뉴스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검토」 제하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141	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 외은지점 달러차입제한 강력규제 본격 검토」, 매경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늘려 제2 외환보유액 확보한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00226
142	서울경제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협의체 신설 검토」 및 「금융권 총당금체계 확 바뀐다」 제하기사 관련	20100301
143	경향신문 등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에	20100303

	관한 기사 관련	
144	서울경제 「저축銀도 유동성비율 100%이상 맞춰야」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05
145	한국경제 「모든 스마트폰서 인터넷뱅킹 된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07
146	연합뉴스 「저축銀 감독강화.. 자산운용 규제도 검토」 및 「대형 저축은행 매년 종합검사 받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14
147	매일경제 「개인신용정보 종합DB 만든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328
148	연합뉴스 「저신용자 신용대출 받기 쉬워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1
149	경향신문, 「車요일제보험 할인 준비부족에 또 연기」 보도 관련	20100401
150	헤럴드경제 「정부, 서민금융위해 저축은행에도 이익출연 강요」 및 이데일리 「금융위 서민금융TF, 개인프리워크아웃제 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6
151	헤럴드경제 「미소금융 금리 두자리수로 올려 모럴해저드 막는다」 및 「모럴해저드 차단불구 지나친 고금리 도마에」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7
152	이투데이 「금융위“직접 징계의 칼을 들겠다”」 및 「금융위금감원 제재권 놓고 ‘신경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08
153	연합뉴스 「서민금융사 보증부 대출금리 11%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1
154	뉴스핍, 「은행 사외이사제 석달만에 또 재수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2
155	연합뉴스 등의 지방미분양 문제 완화방안검토에 관한 기사 관련	20100414
156	헤럴드경제 「은행권 외화차입 규제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19
157	이데일리 「금감원 제재권한 축소 법안 기습제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20
158	문화일보의 「감사의견 거절 급증...해당 상장폐지기업 감리 강화」 보도 관련	20100420
159	헤럴드경제 「보이스피싱 관련법 급조 ... 피해자들 두 번 운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430

160	한국경제신문의 「세계단일 회계기준 2013년 새로 도입한다」 보도 관련	20100514
161	[보도해명]서울경제 「변호사·회계사도 ‘자금세탁 보고’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제하 기사 (10.5.17 A01면, A06면) 관련	20100517
162	동아일보 「대부업체 “고객정보 못줘”… 10조원 규모 서민대출 무산 ?」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522
163	서울신문 「은행세 내년 도입 확정」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1
164	한국경제 「보험사에서 증권계좌 만들면 불법?」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8
165	헤럴드 경제 「KB·우리지주 합병돼도 독과점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16
166	이데일리 「은행세 요율, 금융 재정거래 억제수준 부과 검토」 제하의 보도 관련	20100617
167	헤럴드경제(‘10.6.20) 「대부업체 고객정보 공개 반대 여전」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0
168	서울경제(‘10.6.23) 「금융위 ‘금융상품 백화점’ 도입재추진」 제하 기사 관련	20100622
169	연합인포맥스 「정부, 은행세 걷어 ‘환율안정펀드’ 조성」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23
170	파이낸셜뉴스(‘10.6.30) 「금융위금감원 또 제재권 신경전」 제하 기사 관련	20100629
171	한국경제(‘10.6.30) 「금융위금감원 또 충돌조짐」 제하 기사 등 관련	20100629
172	한겨레신문 「은행세 20조원 부과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609
173	한국경제(‘10.7.2) 「금감원 ‘펀드 시세조종 조사」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02
174	헤럴드경제(‘10.7.9) 「보험연구원 분리 논란 심화...보개원 ‘부글 부글」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09
175	내일신문 「금융위 ‘행복잡이 프로젝트’ 혼선」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715
176	연합인포맥스, 「DTI, 서울 60%, 인천·경기 70%로 완화 검토」 제하 기사 관련	20100719

177	연합뉴스('10.7.29) 「햇살론 연체이자율 제각각 '혼선」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20100729
178	SBS 8시 뉴스('10.7.31) 「가뭄의 단비 '햇살론'...재원마련 문제 없나?」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20100731
179	국민일보('10.8.4) 「서민들 되레 사채시장 내몰린다」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	20100804
180	연합뉴스('10.8.8), '연소득 5천만원 넘으면 햇살론 제한경토' 제하의 기사관련 보도해명	20100808
181	이데일리('10.8.9 11:19), 「예금보험대상 변액포함...CMA·ELS 제외」 제하 기사 관련	20100809
182	헤럴드경제(10.8.10),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대폭 강화」 제하의 보도 관련	20100810
183	서울경제('10.8.11), 「입장 누그러진 금융위 ... DTI 완화 저울질」 제하 기사 관련	20100811
184	서울경제('10.8.12 가판), 「시장조성제도 부활한다」 제하 기사 관련	20100811
185	서울신문 「이럴 바엔 만들지나 말지... 허울뿐인 中소정책 2제」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818
186	동아일보 「최저 신용등급자에도 서민금융 지원」 제하의 기사 관련	20100820
187	한국경제('10.8.20 18:32 입력),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활성화案 월말께 나올 것”」 제하 기사 관련	20100820
188	이데일리('10.8.22), MBC('10.8.21), 조선일보('10.8.21) 등의 DTI 규제완화 기사·보도 관련	20100822
189	서울경제('10.8.22 17:40 입력), 「현집 사는 1주택자도 DTI 규제완화하기로, 고가주택·강남권 등 제외...부동산대책 이달내 발표」 제하 기사 등 관련	20100822

5. 서민금융지원 종류 현황

☐ 별첨 자료

<별첨>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서민금융팀 사무관 주홍민 02-2156-9471)

1. 서민금융지원 종류 현황
2. 향후 서민금융지원제도 강화방안(계획 및 연구용역 발주현황)
3. 2010.8 현재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 등과 관련,
 - 지원배경/자본
 - 지자체 민간단체 대기업별 기부금 현황
 - 전국지점 현황/대출시작 월 일/대출조건/
 - 대출 현황(건수, 총 대출액)/대출 구비서류 및 자격
 - 지역별 월별 대출 현황(건수, 총 대출액)
 - 지점별 종사자 현황
 - 현행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 재계 금융권의 미소금융사업 확대 현황
13.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지원과 관련
 - 기금설립 배경/기금조성액/설립일자
 - 설립 후 현재(2010.8)까지 지원 상세 내역
 - 전환대출 거부 건수 및 금액
14.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재단)
 - 기금설립 배경/기금조성액/설립일자
 - 설립 후 현재(2010.8)까지 지원 상세 내역
 - 전환대출 거부 건수 및 금액
 - 금융회사별 기금조성 및 지원현황

1. 서민금융지원 종류 현황

☐ (4.7 당정협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자료 별첨)

2. 향후 서민금융지원제도 강화방안

☐ (4.7 당정협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자료 별첨)

3-1. 미소금융 지원배경

☐ 저소득·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저신용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함

3-2. 미소금융 자본

(단위: 억원)

구분	금액
휴면예금	3,341
기부금	2,812
계	6,153

3-3. 지자체 민간단체 대기업별 기부금 현황

(단위: 원)

구분	기업명	금액
기업	삼성	30,000,000,000
	현대기아차	20,000,000,000
	SK	20,000,000,000
	LG	20,000,000,000
	롯데	5,000,000,000
	포스코	10,000,000,000
은행	신한은행	10,000,000,000
	우리은행	10,000,000,000
	하나은행	4,000,000,000
	기업은행	10,000,000,000
	국민은행	10,000,000,000
	산업은행	11,129,763,000
은행 (부실채권정리기금)	하나은행	12,800,000,000
	기업은행	4,400,000,000
	국민은행	5,996,087,000
	외환은행	6,802,861,000
	씨티은행	684,366,000
	수출입은행	750,000,000
	대구은행	1,895,454,000
	부산은행	1,535,651,000
	광주은행	900,000,000
	제주은행	495,192,000
	SC제일은행	700,000,000
	전북은행	580,506,000
	경남은행	1,000,000,000
	농협중앙회	3,709,303,000
	신한은행	11,000,000,000
	우리은행	9,395,663,000
	수협중앙회	775,244,000
기타	서울코암로타리클럽	5,000,000
	생보협회	24,375,950
	금융결제원	501,797,146
	한국금융투자협회	5,000,000,000
	증권예탁원	20,000,000,000
	강원랜드	2,000,000,000
	한국금융연구원	27,407,910
	한국거래소	25,000,000,000
	한국증권금융	5,000,000,000
	코리아크레딧뷰로	15,500,000
	한국신용정보	25,000,000
	한국신용평가정보	25,000,000
	합계	281,174,171,006

3-4. 전국지점 현황('10.08.25 현재 기준)

구분	지점수
기업재단	28
은행재단	16
지역지점재단	19
합 계	63

3-5. 대출시작 월 일

☐ '10.1.5, 대출 시작

3-6. 대출조건

① 공통상품

(단위: 천 원)

구분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임차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
창업구분		창업자	사업(예정)자	기존사업자 (업력 1년 이상인자)		무관
지원한도		50,000	50,000	10,000	10,000	5,000
상환기간 이자율		4.5%				2.0%
거치기간 (이자율)	10,000 이하	1년 이내 (무이자)	1년 이내 (무이자)	6개월 이내 (무이자)	6개월 이내 (무이자)	6개월 이내 (무이자)
	10,000 이상	6개월 이내 (4.5%)	6개월 이내 (4.5%)			

② 재단별 독자상품

구분	재단공동	하나 미소	우리 미소	
상품명	전통시장상인 자 립지원	알뜰시장상인 자 립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대출대상	전통시장 상인	등록 노점상 운 영자	한부모가 세대주 인·가정	다문화가족 가장
자금용도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창업·운영·시 설·무등록자금	창업·운영·시 설·무등록 자금
대출한도	유점포 : 1천만원 이내 무점포 : 5백만원 이내	운영 : 5백만원 이내 시설 : 1천만원 이내	창업 : 2천만원 이내 운영(시설) : 1천만원 이내 무등록 : 5백만원 이내	
지원방법	개별지원	개별지원	단체 연계지원	
이자율	4.5% 이내	4.5% 이내	창업·운영·시설 : 4.5%이내 무등록 : 2%이내	

구분	KB 미소	IBK 미소	신한 미소	SK 미소
상품명	경기 무한돌봄 사업 지원	미용사 희망대출	인천시 다자녀가정 지원	용달(화물)사업자 지원
대출대상	경기도 무한돌봄 수혜자(졸업자 포함)	안산, 부천시 소재에 미용실을 창업 또는 운영중인 사업자	인천거주 다자녀 가구 (3명 이상의 자녀)	용달협회 회원이며, 용달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자금용도	창업·운영·시 설·무등록자금	창업·운영·시 설·무등록 자금	창업·운영·시 설·무등록자금	용달화물차 매입자금
대출한도	창업 : 3천만원 이내 운영(시설) :1천만원 이내 무등록 : 5백만원 이내	창업 : 2천만원 이내 운영 : 5백만원 이내	창업 : 5천만원 이내 운영(시설) :1천만원 이내 무등록 : 5백만원 이내	구입 : 2천만원 이내
지원방법	경기도 연계지원	개별 지원	인천시 연계지원	협회 연계지원
이자율	무등록 : 1% 창업·운영·시 설 : 4.1%	4.5% 이내	창업·운영·시 설 : 4.0% 무등록 : 2%이내	4.5% 이내

구분	포스코 미소	현대차 미소	현대차 미소	삼성미소·하나 미소
상품명	다문화 가족 자립지원	H 하나론	자활용차량 구매자금	지입차주 지원자금
대출대상	다문화 가족 가장	5년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중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자	생계형 차량 구매자	개입사업 지입 차주
자금용도	창업·운영·시 설· 무등록·자립자금	창업·기존사업 자	차량구입 및 개조비용	구입자금
대출한도	창업 : 2천만원 이내 운영(시설) :1천만원 이내 무등록 : 5백만원 이내 자립 : 2천만원 이내	창업 : 5천만원 이내 기존 : 3천만원 이내	차량구입:3천만원 이내 개조비용:2천만원 이내	구입자금 : 5천만원
지원방법	단체 연계지원	통일부 연계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이자율	창업·운영·시 설·자립 : 4.5% 무등록 : 2%이내	창업 : 2.0% 기존 : 4.5%	4.5%	4.0%

3-7. 대출 현황(건수, 총 대출액)

□ 2010.8.25 현재, 미소금융지원 실적

- 총 대출건수 4,492건, 대출금액 284억원
 - 미소금융지점(63개) : 2,358명, 199억원('10.8.25 기준)
 - 기존 복지사업자 : 2,134명, 85억원('10.7.31 기준)

3-8. 대출 구비서류 및 자격

□ 대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기본서류	<input type="checkbox"/>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input type="checkbox"/>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소득자의 경우(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명세서(최종 3개월분) · 급여통장(최종 3개월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최종 3개월분) · 취업사실 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영업자의 경우(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매출대금 입금통장(최종 3개월분) · 소득증명(진술)서 등 ○ 사업소득자의 경우(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수수료입금명세서(최종 3개월분) · 수수료 입금통장(최종 3개월분) · 고용계약서 · 소득증명(진술)서 등 ○ 일용직 등의 경우(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납입내역확인서 · 사업주의 근로사실확인서 · 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어)업인확인서 · 소득증명(진술)서 등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련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등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보고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서류
추가서류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및 창업임차자금	<input type="checkbox"/>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창업교육수료증(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input type="checkbox"/>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종 1년간/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input type="checkbox"/> 자금용도 및 활용 계획서(필요시)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input type="checkbox"/> 무등록사업자확인(친술)서

☐ 대출지원 자격(지원대상자)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

* '10.8.5일부터 신용등급 5~6등급중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

3-9. 지역별 월별 대출 현황(건수, 총 대출액)

(’10.8.25 현재, 단위: 천원)

구분	대출건수	대출금액
서울	689	5,741,070
인천	117	1,112,000
부산	176	1,033,500
대구	112	730,900
대전	96	730,100
광주	97	862,100
울산	52	403,500
강원	50	482,000
경기	546	5,299,000
충북	91	738,600
충남	46	401,000
경북	96	745,900
경남	60	662,000
전북	37	324,100
전남	58	454,000
제주	35	196,000
계	2,358	19,915,770

- ☐ 이와 별도로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해서도 금년 7월말까지 2,134명, 85억원을 지원

3-10. 지점별 종사자 현황

- ☐ 지역지점재단은 전국 19개이며, 각 지역지점재단별로 지역지점대표자 1명(무보수 상근 명예직), 자원봉사자 3명으로 구성

3-11. 현행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① 대출기준을 완화

- 2010.5.17,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미소금융의 지원요건 및 대출절차를 개선하여 시행
- 2010.7.2, 기업·은행계 미소재단 공동 또는 재단별로 전통시장 상인, 한부모·다문화 가정, 용달사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미소금융사업을 시행
- 2010.8.5, 새로운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 (CSS)을 도입·적용
 - 소득이 낮아 미소금융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금융거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되던 불합리성을 개선

② 사후관리 보완(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미소희망봉사단을 통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제공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
 - (구성) 경영·법률·세무·사회복지 등 전문가, 영업·매출 등 창업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능 보유자, 대학생 등 자원봉사 희망자 등
 - (역할) 경영·법률·세무 등의 전문지식, 기능·기술·영업 know-how 등의 재능나눔, 사무지원 등의 일손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

3-12. 제계 금융권의 미소금융사업 확대 현황

① 기업·은행계 미소재단의 소액대출 확대

-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 중심으로 긴급소액지원 성격의 미소금융상품을 적극 개발
 - 현재 기업·은행재단은 대출재원의 최대 50%는 독자 상품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미소금융 수행이 가능
- 소액의 운영자금 대출방식으로 현재 미소중앙재단이 시행 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은행재단도 참여
- 소액대출 모델을 '전통시장 상인'에서 여타 취약계층으로 확대
 - 지원대상: 상인회와 같이 그룹대출 운영이 가능한 대상 발굴

② “찾아가는” 미소금융 확대

- 설명회, 순회상담 등을 통해 창구에서만 기다리지 않고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알리는 현장 미소금융을 활발히 전개

13.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지원과 관련

13-1 기금설립 배경

- 외환위기 이후 저신용·저소득 계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증가 및 사금융시장의 과도한 성장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
-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채무불이행자 및 고금리 사용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구제 방안 추진

13-2 기금조성액

- '08년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금융기관 배분금을 대상으로 신용회복기금 재원 조성 추진
 - '09.1.5 및 '09.5.20자로 20개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총 6,904억원 재원 조성 완료

13-3 설립일자

- 2008.8.28 (주)신용회복기금 설립

13-4 설립후 현재(2010.8)까지 지원 상세 내역

- '10.7월말 현재 채무조정(11.1만명)과 전환대출 신용보증(2.3만명) 합쳐 약 13.4만명을 지원하였고, 약 76만명에 대해 지원 상담

(단위: 명, 억원)

구 분		누 계('08.12.19~'10.7.31)	
		신청자(상담자)	채 권액
채 무 조정	기초수급자	4,291	394
	일반채무자	107,022	4,838
	소 계(A)	111,313	5,232
전 환 대 출	신청자	27,928	2,766
	전 환 대 출 완 료(B)	22,820	2,211
지원 합계(C=A+B)		134,133	7,443
상담 · 컨설팅		760,555	-

13-5 전환대출 거부 건수 및 금액('08.12.19~'10.7.31)

(단위: 명, 억원)

건 수	금 액	비 고(사 유)
1,065	115	전환대출 보증심사 지원기준 미충족

14.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재단) 관련

14-1. 설립 배경

-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574호, 2007.8.3)에 의거, 휴면예금관리재단* 출범('08.4.22 설립등기)

* 별칭: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의 예금자 보호 및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

- ☐ 2010.9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마이크로크레딧의 중추적 기관인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논의
- ☐ '09.9.30, 미소금융 사업계획에 맞추어 재단 별칭 변경
 - 기존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변경

14-2. 기금조성액

- ☐ '3-2. 미소금융 자본'과 동일합니다.

14-3. 설립일자

- ☐ '08.3.27, 휴면예금관리재단 출범('08.4.22 설립 등기)

14-4. 설립 후 현재(2010.8)까지 지원 상세 내역

☐ 2010.8.25 현재, 미소금융지원 실적

○ 총 대출건수 4492건, 대출금액 284억원

- 미소금융지점(63개) : 2,358명, 199억원('10.8.25 기준)

- 기존 복지사업자 : 2,134명, 85억원('10.7.31 기준)

14-5. 전환대출 거부 건수 및 금액

☐ 미소금융사업은 전환대출 지원이 없습니다.

14-6. 금융회사별 기금조성 및 지원현황

☐ '3-2. 미소금융 자본'과 동일합니다.

#별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2010. 4



목 차



I. 추진배경	1
1.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1
2.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방향	2
II.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방안	3
1.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3
2.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8
3.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	9
4. 미소금융 운영개선	10
5. 신용정보관리시스템 개선	12

I. 추진배경

1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 금융위기 후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어 서민의 금융이용기회 감소

○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는 '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서민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기업 관련 여신을 주로 취급

※ 신용 6등급이하 대출 비중(%) : 은행 21, 상호금융 36, 저축은행 87, 대부업 91

□ '09년말 출범한 「미소금융」은,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창업·운영 자금 지원 개시

○ 지난 3개월간 약 2만명이 방문·상담하는 등 서민층의 관심이 매우 컸으나, 그 금융수요를 모두 해소하기에 한계

□ 저신용 서민들의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고금리 부담 등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조원) : 4.1('07.9) → 5.6('08.9) → 5.9('09.9)

⇒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미소금융과 함께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을 통한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

2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방향**

①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 확대

-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출연재원을 바탕으로 보증공급을 확대

② 신용회복 대상자의 안정적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확대

- 신용회복기금의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한 신규 지원을 개시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기존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성실 채무상환자에 대해 자금지원 추진

③ 고금리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추진

④ 미소금융으로 지원할 수 없는 서민에 대하여는 보증부 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

- 아울러 미소금융 지방지점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소금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능력 강화

⑤ 서민금융회사가 보다 충실한 여신심사를 바탕으로 서민 금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신용평가역량을 확충

Ⅱ. 서민금융 공급 확대 방안

1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 은행에 비해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은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실정

- 이에 서민대출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을 늘릴 필요

※ 미국은 지역개발금융펀드(CDFI)를 조성, 저소득층의 건강·교육·긴급자금 등을 지원하고, 일본은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금융소외자에게 사업자금, 생활위생개선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등 서민에 대한 보증지원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 보증공급 규모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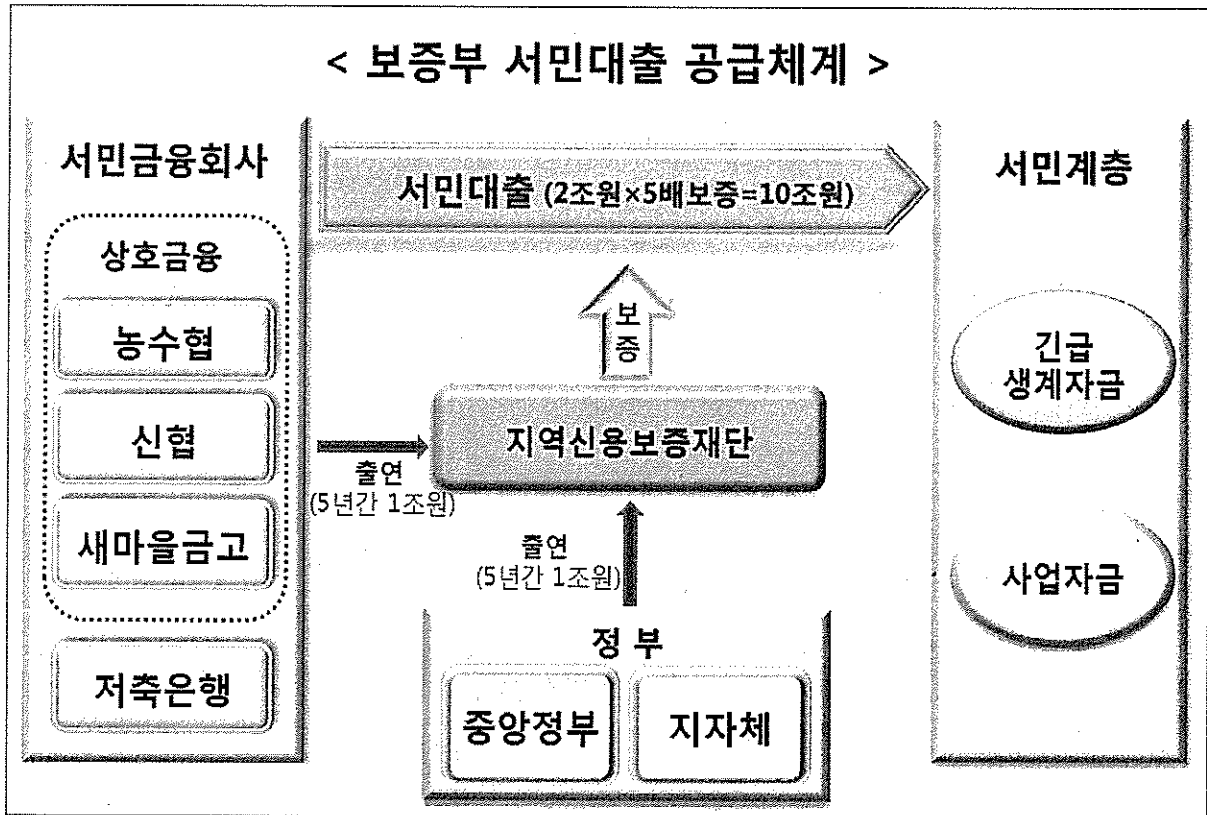
	중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08년	41.6	3.9	-
'09년	56.5	8.4	0.2
'10년(목표)	52.6	5.3	0.5

- 현재 서민에 대한 특례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시적(금년중 종료예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보증기관이 대출위험 전부를 부담하거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금융회사가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문제

< 개선방안 >

- ◇ 정부와 민간의 공동재원 출연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추진



1 보증부 서민대출 공급 목표 : 5년간 최대 10조원 공급

- 대부업체 대출규모 총 10조원임을 감안하여 대출 공급 목표 설정
- 서민대출의 부실율(10% 가정)을 감안할 때 약 5배 이내의 보증배수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재원으로 향후 5년간 총 2조원 수준(매년 4,000억원) 소요 전망

⇒ 해당 소요재원을 민간과 정부가 「50:50」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방안 추진

< 보증재원 조성방안 >

민간 출연 : 5년간 총 1조원(연간 약 2,000억원)

○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40 : 10」으로 분담 출연

- 상호금융과 저축은행간 여신규모 차이(4배), 상호금융 회사에 대한 비과세 예금 혜택 등 감안

(상호금융) : 5년간 총 8,000억원(연간 약 1,600억원)

※ 상호금융내 업권별 연간 출연 규모 예상액('09.12월말 잔액기준)

	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금고	계
비과세예금(조원)	55.5	4.8	1.2	19.6	34	115
출 연 금(억원)	833	72	18	294	510	1,727

(저축은행) : 5년간 총 2,000억원(연간 약 400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의무화 추진('10년 상반기중)

정부 출연 : 5년간 총 1조원(연간 약 2,000억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신용보증의 공공성, 지역주민 수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 결정

기타 : 보증수수료 수입 등

② 보증대상

- 저신용(예: 신용 6등급이하) 또는 저소득(예 : 차상위계층)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상호금융) 등

※ 제외대상 : 부도,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중, 보증사고 관련자 등

③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담당

- '서민신용보증 전담' 보증기관 신설방안도 검토 가능하나, 유사기관간 기능 중복, 보증 경쟁에 의한 부작용 등을 감안, 현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활용 바람직

※ 2009.4월 법개정을 통해 지역신보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더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보증이 가능해 짐

- 보증재원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6개 업권별로 별도 분리 운영*

* 업권별 보증규모는 출연재원에 비례하여 결정하고 특정업권의 출연금을 타 업권에서 사용치 않음

- 일정기간(예: 1년)동안 분리 운영한 후 그 실적을 평가하여 필요시 업권간 경쟁유도를 위해 보증재원의 통합 운영 검토

- 금융위와 중기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신보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앞으로 늘어날 보증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화의 역량을 확충

④ 대출 운용방안

- (취급기관)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회사(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및 저축은행

※ '09년말 서민금융회사는 총 3,989개 : 저축은행 104, 상호금융 3,885 (농협 1,178, 수협 91, 산림조합 133, 신협 982, 새마을금고 1,501)

- (보증비율) 원칙적으로 대출금액의 80~85%수준을 보증하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기책임하에 대출
- (대출금리) 서민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적정금리”로 운용

- 금리 상한*을 설정하되,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경쟁방식 도입

* 은행의 희망홀씨대출 평균금리(14%), 쏘은행 6~10등급 평균 신용대출금리(19%)

- (자금용도) 긴급생계자금(5백만원 이내), 사업자금(1~5천만원 이내),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자금 등
- (마케팅) 미소금융, 보증자리론과 같이 “통합 브랜드”를 사용, 인지도 제고 및 마케팅 비용 절감

⑤ 시행시기 : '10년 하반기부터 대출상품 출시

- 관련 법령 개정과 기존 한시적 특례보증의 마무리 일정을 감안

2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①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 확대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채무조정기간 중에 금융거래가 곤란하여 생활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빈번

* '02년~'09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자 83만명 중 24만명(29%)이 생활비 수요 등 때문에 중도 탈락

⇒ 성실채무상환자*의 안정적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은 여유자금을 활용, 긴급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신규 개시
- 신용회복위원회는 재원을 확충하여 기존 대출**을 지속 확대

* 신용회복지원중인 자(76만명) 중 1년이상 성실채무상환자 : 67만명

** '06.11월 이후 소액대출 실적 : 20,746명, 623억원

※ 신규 지원 목표 : 5년간 1,500억원, 5만명(평균 3백만원, 연 4%)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Pre-workout) 연장

- '09.4월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

- '10.3월말까지 총 31,785명이 상담, 이 중 9,402명(29.6%)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등 금융안전망 역할 수행

⇒ 1년간 연장하여 운영

3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인하

- 현행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은 연 49%로 이는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

※ 미등록 대부업체는 최고이자율을 30%로 적용하여 양성화 유도

- 대부분의 대부업체, 일부 저축은행 및 여전사는 동 금리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수취하여 주된 이용자인 서민층에 과도한 부담

- '07.10월 최고이자율 인하(66%→49%) 이후 한은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시, 동 최고이자율 인하 필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7.9) 5% → ('10.2) 2%
은행 평균여신금리 : ('07.9) 6.7% → ('10.2) 5.9%

- 일본도 금년 6월부터 최고이자율을 29.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06.12월 출자법개정)

- 최고이자율 인하시 대부업체 음성화 및 서민대출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 금번 대책에 포함된 '보증부 서민대출'의 확대 실시에 따른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로 보완 기대

⇒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을 10%p (49%→39%) 인하 추진

- 우선 조속히 5%p 인하 (즉시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추진)
-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 추진

※ 5%p 인하시 금리부담 완화 기대효과 : 연간 2,000억원*

*4조원(등록 대부업체 신용대출규모) × (49% - 44%)

4 미소금융 운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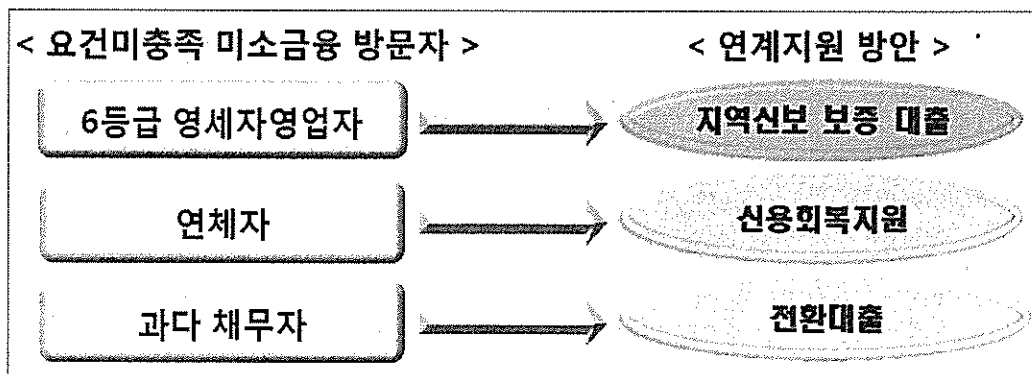
① 미소금융 창구에서 서민금융 One-Stop 서비스 제공

- 지점 방문자중 미소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증 대출(지역신보), 신용회복(신복위, 신복기금) 등 다른 서민금융 지원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10.3월까지 미소금융지점 방문·상담자 총 19,995명중 11,638명(58.2%)이 미소금융의 대출요건을 미충족 (신용등급 우수 32%, 부채 과다 16%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 직원(지점당 1인 파견)이 미소금융창구에서 대면상담 및 현장 신청 접수

- 향후 미소금융 지점 증가시에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순환근무하는 방안도 검토



② 지방지점 확대, 홍보활동 등을 통한 미소금융 접근성 제고

- 지방소재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지방에 20개 이상 지점을 추가 신설(총 50개 이상)

* '10.3월까지 총 34개 지점 설립(수도권 16개, 지방 18개)

-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리플렛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서민들이 개별상황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유도

* 서민층이 왕래하는 지자체·고용지원센터 등에 리플렛 중점 배포

③ 미소금융 지점 사무실 지원

-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 내에 미소금융 지점 설치를 지원하여 사무실 운영비용 절감 추진(지자체 협조)

* 현재 전국 34개 지점 중 11개 지점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

④ 미소금융 관련 컨설팅 능력 제고

-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부설 교육센터」 설치하여 전문인력 양성 추진
- (가칭) '미소희망봉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재능의 기부'를 유도하고 미소금융의 컨설팅 능력 제고

* 전국적으로 법률·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 퇴직인력 약 1천명을 모집하여 미소금융 수혜자에게 경영 노하우 등 지원

5

신용정보관리시스템 개선

①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역량 제고

- 상환위험이 큰 저신용층의 대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평가가 필수적이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총 104개 중 23개(22.1%)에 불과

⇒ 저축은행 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

- 개별 저축은행은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거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10.6월까지 29개사가 추가로 자체적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계획

②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 확대

- 대부업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내에서만 여신정보(대출잔액, 연체액)를 폐쇄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어려워 리스크 관리 비용이 증가

⇒ 대부업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개인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부업체의 서민대출 금리를 낮추는 계기로 활용

- 중장기적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 추진

6. 2010.8 현재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 등과 관련

- 지원배경/자본
- 지자체 민간단체 대기업별 기부금 현황
- 전국지점 현황/대출시작 월 일/대출조건/
- 대출 현황(건수, 총 대출액)/대출 구비서류 및 자격
- 지역별 월별 대출 현황(건수, 총 대출액)
- 지점별 종사자 현황
- 현행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 세계 금융권의 미소금융사업 확대 현황

6-1. 미소금융 지원배경

- ☐ 저소득·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저신용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함

6-2. 미소금융 자본

(단위: 억원)

구분	금액
휴면예금	3,341
기부금	2,812
계	6,153

6-3. 지자체 민간단체 대기업별 기부금 현황

(단위: 원)

구분	기업명	금액
기업	삼성	30,000,000,000
	현대기아차	20,000,000,000
	SK	20,000,000,000
	LG	20,000,000,000
	롯데	5,000,000,000
	포스코	10,000,000,000
은행	신한은행	10,000,000,000
	우리은행	10,000,000,000
	하나은행	4,000,000,000
	기업은행	10,000,000,000
	국민은행	10,000,000,000
은행 (부실채권정리기금)	산업은행	11,129,763,000
	하나은행	12,800,000,000
	기업은행	4,400,000,000
	국민은행	5,996,087,000
	외환은행	6,802,861,000
	씨티은행	684,366,000
	수출입은행	750,000,000
	대구은행	1,895,454,000
	부산은행	1,535,651,000
	광주은행	900,000,000
	제주은행	495,192,000
	SC제일은행	700,000,000
	전북은행	580,506,000
	경남은행	1,000,000,000
	농협중앙회	3,709,303,000
	신한은행	11,000,000,000
	우리은행	9,395,663,000
	수협중앙회	775,244,000
기타	서울코암로타리클럽	5,000,000
	생보협회	24,375,950
	금융결제원	501,797,146
	한국금융투자협회	5,000,000,000
	증권예탁원	20,000,000,000
	강원랜드	2,000,000,000
	한국금융연구원	27,407,910
	한국거래소	25,000,000,000
	한국증권금융	5,000,000,000
	코리아크레딧뷰로	15,500,000
	한국신용정보	25,000,000
	한국신용평가정보	25,000,000
	합계	281,174,171,006

6-4. 전국지점 현황('10.08.25 현재 기준)

구분	지점수
기업재단	28
은행재단	16
지역지점재단	19
합 계	63

6-5. 대출시작 월 일

☐ '10.15, 대출 시작

6-6. 대출조건

① 공통상품

(단위: 천 원)

구분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임차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
창업구분		창업자	사업(예정)자	기존사업자 (업력 1년 이상인자)		무관
지원한도		50,000	50,000	10,000	10,000	5,000
상환기간 이자율		4.5%				2.0%
거치기간 (이자율)	10,000 이하	1년 이내 (무이자)	1년 이내 (무이자)	6개월 이내 (무이자)	6개월 이내 (무이자)	6개월 이내 (무이자)
	10,000 이상	6개월 이내 (4.5%)	6개월 이내 (4.5%)			

② 재단별 독자상품

구분	재단공동	하나 미소	우리 미소	
상품명	전통시장상인 자 립지원	알뜰시장상인 자 립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대출대상	전통시장 상인	등록 노점상 운 영자	한부모가 세대주 인 가정	다문화가족 가장
자금용도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창업·운영·시 설·무등록자금	창업·운영·시 설·무등록 자금
대출한도	유점포 : 1천만원 이내 무점포 : 5백만원 이내	운영 : 5백만원 이내 시설 : 1천만원 이내	창업 : 2천만원 이내 운영(시설) : 1천만원 이내 무등록 : 5백만원 이내	
지원방법	개별지원	개별지원	단체 연계지원	
이자율	4.5% 이내	4.5% 이내	창업·운영·시설 : 4.5%이내 무등록 : 2%이내	

구분	KB 미소	IBK 미소	신한 미소	SK. 미소
상품명	경기 무한돌봄 사업 지원	미용사 희망대출	인천시 다자녀가정 지원	용달(화물)사업자 지원
대출대상	경기도 무한돌봄 수혜자(졸업자 포함)	안산, 부천시 소재에 미용실을 창업 또는 운영중인 사업자	인천거주 다자녀 가구 (3명 이상의 자녀)	용달협회 회원이며, 용달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자금용도	창업·운영·시 설·무등록자금 창업 : 3천만원 이내	창업·운영·시 설·무등록 자금 창업 : 2천만원 이내	창업·운영·시 설·무등록자금 창업 : 5천만원 이내	용달화물차 매입자금
대출한도	운영(시설) :1천만원 이내 무등록 : 5백만원 이내	운영 : 5백만원 이내	운영(시설) :1천만원 이내 무등록 : 5백만원 이내	구입 : 2천만원 이내
지원방법	경기도 연계지원	개별 지원	인천시 연계지원	협회 연계지원
이자율	무등록 : 1% 창업·운영·시 설 : 4.1%	4.5% 이내	창업·운영·시 설 : 4.0% 무등록 : 2%이내	4.5% 이내

구분	포스코 미소	현대차 미소	현대차 미소	삼성미소·하나 미소
상품명	다문화 가족 자립지원	H 하나론	자활용차량 구매자금	지입차주 지원자금
대출대상	다문화 가족 가장	5년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중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자	생계형 차량 구매자	개업사업 지입 차주
자금용도	창업·운영·시 설· 무등록·자립자금	창업·기존사업 자	차량구입 및 개조비용	구입자금
대출한도	창업 : 2천만원 이내 운영(시설) :1천만원 이내 무등록 : 5백만원 이내 자립 : 2천만원 이내	창업 : 5천만원 이내 기존 : 3천만원 이내	차량구입:3천만원 이내 개조비용:2천만원 이내	구입자금 : 5천만원
지원방법	단체 연계지원	통일부 연계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이자율	창업·운영·시 설·자립 : 4.5% 무등록 : 2%이내	창업 : 2.0% 기존 : 4.5%	4.5%	4.0%

6-7. 대출 현황(건수, 총 대출액)

□ 2010.8.25 현재, 미소금융지원 실적

- 총 대출건수 4,492건, 대출금액 284억원
 - 미소금융지점(63개) : 2,358명, 199억원('10.8.25 기준)
 - 기존 복지사업자 : 2,134명, 85억원('10.7.31 기준)

6-8. 대출 구비서류 및 자격

☐ 대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기본서류	<input type="checkbox"/>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input type="checkbox"/>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소득자의 경우(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명세서(최종 3개월분) · 급여통장(최종 3개월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최종 3개월분) · 취업사실 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영업자의 경우(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매출대금 입금통장(최종 3개월분) · 소득증명(진술)서 등 ○ 사업소득자의 경우(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수수료입금명세서(최종 3개월분) · 수수료 입금통장(최종 3개월분) · 고용계약서 · 소득증명(진술)서 등 ○ 일용직 등의 경우(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납입내역확인서 · 사업주의 근로사실확인서 · 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어)업인확인서 · 소득증명(진술)서 등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련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등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보고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서류
추가서류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및 창업임차자금	<input type="checkbox"/>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창업교육수료증(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input type="checkbox"/>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종 1년간/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input type="checkbox"/> 자금용도 및 활용 계획서(필요시)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input type="checkbox"/> 무등록사업자확인(진술)서

☐ 대출지원 자격(지원대상자)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

* '10.8.5일부터 신용등급 5~6등급중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

6-9. 지역별 월별 대출 현황(건수, 총 대출액)

(’10.8.25 현재, 단위: 천원)

구분	대출건수	대출금액
서울	689	5,741,070
인천	117	1,112,000
부산	176	1,033,500
대구	112	730,900
대전	96	730,100
광주	97	862,100
울산	52	403,500
강원	50	482,000
경기	546	5,299,000
충북	91	738,600
충남	46	401,000
경북	96	745,900
경남	60	662,000
전북	37	324,100
전남	58	454,000
제주	35	196,000
계	2,358	19,915,770

☐ 이와 별도로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해서도 금년 7월말까지 2,134명, 85억원을 지원

6-10. 지점별 종사자 현황

☐ 지역지점재단은 전국 19개이며, 각 지역지점재단별로 지역지점대표자 1명(무보수 상근 명예직), 자원봉사자 3명으로 구성

6-11. 현행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① 대출기준을 완화

- 2010.5.17,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미소금융의 지원요건 및 대출절차를 개선하여 시행
- 2010.7.2, 기업·은행계 미소재단 공동 또는 재단별로 전통시장 상인, 한부모·다문화 가정, 용달사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미소금융사업을 시행
- 2010.8.5, 새로운 미소금융 신용평가시스템 (CSS)을 도입·적용
 - 소득이 낮아 미소금융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금융거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되던 불합리성을 개선

② 사후관리 보완(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미소희망봉사단을 통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제공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
 - (구성) 경영·법률·세무·사회복지 등 전문가, 영업·매출 등 창업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능 보유자, 대학생 등 자원봉사 희망자 등
 - (역할) 경영·법률·세무 등의 전문지식, 기능·기술·영업 know-how 등의 재능나눔, 사무지원 등의 일손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

6-12. 재계 금융권의 미소금융사업 확대 현황

① 기업·은행계 미소재단의 소액대출 확대

-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 중심으로 긴급소액지원 성격의 미소금융상품을 적극 개발
 - 현재 기업·은행재단은 대출재원의 최대 50%는 독자 상품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미소금융 수행이 가능
- 소액의 운영자금 대출방식으로 현재 미소중앙재단이 시행 중인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에 기업·은행재단도 참여
- 소액대출 모델을 '전통시장 상인'에서 여타 취약계층으로 확대
 - 지원대상: 상인회와 같이 그룹대출 운영이 가능한 대상 발굴

② “찾아가는” 미소금융 확대

- 설명회, 순회상담 등을 통해 창구에서만 기다리지 않고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알리는 현장 미소금융을 활발히 전개

7. 파생상품과 관련해 민원접수 목록(2008~2010.8) 현재

- 사금융(대부업) 관련 민원접수현황(연도별, 민원사유별, 처리결과별)
- 파생상품 관련 민원접수 목록('08.3.~'10.7)

□ 사금융(대부업) 관련 민원 접수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2008년 (‘08.3.~’08.12.)	2009년 (‘09.1.~’09.12.)	2010년 (‘10.1.~’10.7.)	합 계
접 수	54	93	42	189

○ 민원 사유별

(단위: 건)

민원 내용	접 수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 요청	17
대부업체 무단 신용정보 조회 신고	18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	59
고금리 대부업 채무를 저리 은행대출로 전환대출 요청	15
대부업 피해 구제제도 마련 요청	30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대부업법 문의	50
합 계	189

○ 처리 결과별

(단위: 건)

	처리완료	민원취하/ 착수전해결	민원인· 민원요지 불명	처리중	합계
2008년 (‘08.3.~ ‘08.12.)	34	19	1	-	54
2009년 (‘09.1.~ ‘09.12.)	68	25	-	-	93
2010년 (‘10.1 ~ ‘10.7.)	27	8	1	6	42
합계	129	52	2	6	189

□ 파생상품 관련 민원 접수 목록

- 별도 첨부

파생상품 관련 민원 접수 목록

연번	신청일자	접수일자	민원제목	담당부서
1	2008-05-14	2008-05-14	이번08년05월06일 신설된 주식선물의 상품	자본시장과
2	2008-05-16	2008-05-16	08년05월6일주식선물의보완설명	자본시장과
3	2008-05-30	2008-05-30	선물거래 상담사 시험에 관한 한국선물협회에 관한 문제점 제기	자본시장과
4	2008-06-12	2008-06-12	선물시장 개선을 바라면서..	자본시장과
5	2008-07-10	2008-07-14	파생상품 선물시장 개선희망 件	자본시장과
6	2008-07-18	2008-07-18	대차거래,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7	2008-08-11	2008-08-11	환헤지 파생상품의 피해 업체 구제 호소	자본시장과
8	2008-08-15	2008-08-18	키코사태	자본시장과
9	2008-09-04	2008-09-04	파생시장의 투기	자본시장과
10	2008-09-16	2008-09-16	환율과 파생상품 규제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11	2008-09-18	2008-09-18	KIKO관련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자본시장과
12	2008-10-23	2008-10-24	증권시장중 파생시장의 규모를 축소 해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13	2008-10-24	2008-11-06	els 만기를 연장 가능토록	자본시장과
14	2008-10-24	2008-10-24	증시 선물개선과제한	자본시장과
15	2008-10-27	2008-11-06	서민들의 els 만기를 가능하게	자본시장과
16	2008-10-27	2008-10-27	이대로 방치하실겁니까..파생시장..	자본시장과
17	2009-01-07	2009-01-07	증권 파생상품 (옵션투자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18	2009-01-24	2009-01-29	금융파생상품(ELS,ELF 등) 정책적 만기연장 요청	자본시장과
19	2009-02-01	2009-02-02	금융파생상품(ELS,ELF 등) 정책적 만기연장 절실	자본시장과
20	2009-02-14	2009-02-17	금융파생상품(ELS,ELF 등) 정책적 만기연장 절실	자본시장과
21	2009-07-16	2009-07-16	선물거래시 증거금제도가 꼭필요한건가?	자본시장과
22	2009-08-20	2009-08-27	파생결합증권 관련 문의사항	자본시장과
23	2009-10-20	2009-10-21	주식선물의 관련해서	자본시장과
24	2009-11-20	2009-11-23	일반 펀드처럼 ELS 파생상품 무기한 연장 요청	자본시장과
25	2009-11-29	2009-12-08	기존 법인에 선물거래, 외환거래 FX 업종을 추가 하려면 ??	자본시장과
26	2009-12-03	2009-12-03	당사에서는 한맥FX www.hanmag.com/fx 외환선물거래 FX 를 중계하는 영업업무를 하려합니다.	자본시장과
27	2010-03-29	2010-03-29	선물거래소 계좌거래원장 발급 요청	자본시장과
28	2010-07-14	2010-07-14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업무	자본시장과

신 건 의원

1. 2009~현재 연구용역 발주 현황

□ 연구용역 발주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발주과제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주기관	비고
09년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09.3.16~ 09.12.16	45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금융상품판매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09.4.13~ 09.8.14	30	자본시장연구원	
09년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09.4.21~ 09.8.28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09년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09.5.13~ 09.11.30	30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09년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09.5.28~ 09.11.11	28.8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09.6.1~ 09.8.31	20.5	자본시장연구원	
09년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 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09.6.10~ 09.8.15	4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09년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09.7.9~ 09.11.30	35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09.8.5~ 09.12.2	32	자본시장연구원	
09년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 국제화 방안 연구	09.8.28~ 09.12.28	35	아주대 산학협력단	
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09.9.16~ 09.11.16	20	자본시장연구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09.9.18~ 09.12.17	20	보험연구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09.9.30~ 09.12.5	20	한국금융연구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09.10.7~ 09.12.6	30	한국금융연구원	

연도	발주과제명	용역기간	용역비	수주기관	비 고
09년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09.10.8~ 09.12.23	20	한국금융학회	
09년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 사례 연구	09.10.15~ 09.12.17	4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09년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 및 정책적 과제	09.11.11~ 09.12.10	23	한국채권연구원	
10년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10.3.15~	30	서울대 산학협력단	
10년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10.3.26~	30	한국개발연구원	
10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10.4.9~	30	자본시장연구원	
10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10.4.13~	45.5	한국개발연구원	
10년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10.4.19~	40	한국개발연구원	
10년	우리나라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10.4.20~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 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10.5.1~	2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10.5.28~ 7.31	30	법무법인 율촌	
10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연구	10.6.9~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10.8.30~	30	한국금융연구원	
10년	금융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수급전망	10.9.1~	50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 산하위원회 설치현황

- 명칭, 법적근거, 주요활동사항, 구성원 인적사항, 08년 이후 회의개최 실적

A.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법적근거	주요활동사항	08년이후 회의개최실적	위원 수	
				당연	위촉
공적자금관리 위원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3조	공적자금의 조성· 운용·회수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	25번	2명	6명
공적자금상환 기금운용심의회	공적자금상환 기금법제10조	기금의 주요 정책 및 예·결산 등을 심의	11번	6명	2명

□ 위원회 인적사항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회	성명	성별	구분	직위 및 추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진동수	남	당연직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남	당연직	기획재정부차관
	민상기	남	위촉직	서울대 경영학과교수
	안종범	남	위촉직	성균관대 경제학과교수
	운용만	남	위촉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임치용	남	위촉직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서지희	여	위촉직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
	박경서	남	위촉직	고려대 경영학과교수

②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위원회	성명	성별	구분	직위 및 추천
공적자금상환 기금운용심의회	권혁세	남	당연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남	당연직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용환	남	당연직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이광준	남	당연직	한국은행 부총재보
	조인제	남	당연직	예금보험공사 이사
	권경성	남	당연직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안수현	여	위촉직	외국어대 법대 교수
	이용모	남	위촉직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B. 공정시장과

□ 감리위원회

- 설치이유 : 증선위 업무보조를 위한 전문심의기구
- 법적근거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23조, 제25조
- 주요활동사항 : 회계감리 대상 선정, 감리결과 조치, 이의 신청, 직권재심 등에 관한 사전 심의
- 구성원 인적사항 : 당연직 4인, 위촉직 5인

성격	성 명	소속/직위
당연	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당연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당연	김호중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당연	김광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장
위촉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위촉	전영순	중앙대학교 교수
위촉	김범기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위촉	박창은	박창은 법률사무소 대표
위촉	정영기	홍익대학교 교수

- 08~현재 회의개최 실적 : 08년 6회, 09년 9회, 10년 현재 10회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 설치이유 :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시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심의하기 위한 증선위 자문기구
- 법적근거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1조, 제22조
- 주요활동사항 :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처리, 이의신청·직권 재심 등에 관한 사전 심의
- 구성원 인적사항 : 당연직 4인, 위촉직 3인

성격	성 명	소속/직위
당연	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당연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당연	정연수 · 박원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당해 안전담당 부원장보 1인)
당연	김범기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위촉	유승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위촉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위촉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 08~현재 회의개최 실적 : 08년 13회, 09년 13회, 10년 현재 10회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 설치이유 : 증선위 업무보조를 위해 설치된 증선위 자문기구
- 법적근거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23조, 제24조
- 주요활동사항 : 회계처리기준 수정요구,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승인, 실무의견서 등 회계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

○ 구성원 인적사항 : 당연직 4인, 위촉직 7인

성격	성명	소속/직위
당연	최규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당연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당연	김낙희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당연	김호중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위촉	이병우	대한생명보험 상무
위촉	윤경식 ¹⁾	한영회계법인 본부장
위촉	최외홍 ¹⁾	삼성벤처투자 사장
위촉	조현연 ¹⁾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위촉	백복현	서울대학교 교수
위촉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위촉	안영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1) 임기만료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차기 회의에서 위촉예정

○ 08~현재 회의개최 실적 : 08년 4회, 09년 4회, 10년 현재 2회 개최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 설치이유 :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 법적근거 :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 주요활동사항 :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 구성원 인적사항 : 당연직 3인, 위촉직 4인

성격	성 명	소속/직위
당연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당연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당연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위촉	이재일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위촉	최현덕	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
위촉	이정치	일동제약(주) 대표이사
위촉	최관	성균관대학교 교수

○ 08~현재 회의개최 실적 : 08년 1회, 09년 1회, 10년 현재 1회 개최

□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 설치이유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 법적근거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 주요활동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 구성원 인적사항 : 당연직 5인, 위촉직 2인

성격	성 명	소속/직위
당연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당연	송기국	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장
당연	장호익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당연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당연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위촉	정기영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위촉	손성규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 08~현재 회의개최 실적 : 08년 0회, 09년 2회, 10년 현재 1회 개최

C. 국제금융팀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2010.9.17 현재)

① 명칭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② 설치근거 및 시행일		- 금융중심지법 제6조(2008. 3.22.)			
③위원회 구성일		- 2008. 4.30			
④ 설치목적		- 금융중심지 조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수립과 의견조정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⑤ 기능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조정, 법령·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금융인력 양성지원, 금융중심지 지정 등에 대한 심의			
⑥ 위원 (총 21명)	위원장 (임명권자)	금융위원장(대통령)			
	당연직 (총 11명)	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지경부 차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KIC 사장, KRX 이사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보협회장, 손보협회장			
	위촉직 (총 10명)	학계 2명, 기업계 7명, 법조계 1명 (위촉직 위원 임기 : 2년)			
⑦ 회의개최실적		2007년	-	2008년	출석 1회, 서면 2회
		2009년	출석 2회, 서면 1회	2010년	출석 2회, 서면 3회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2010. 9. 17. 현재)

구 분	성 명	현 직위
민간위원 (10인)	박준현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John Walker	한국맥쿼리그룹 회장
	이장호	부산은행장
	Michael Hellbeck	한국스탠더드차타드 금융지주 최고운영책임자
	정상기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Cheng Shu Liao	교보AXA자산운용 대표이사
	김태혁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김연희	베인&컴퍼니 대표
정부위원 (5인)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유관기관 위원 (6인)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진영욱	한국투자공사장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실적

회차	안건	참석율
1차(대면) (08. 6. 30)	-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	80%
2차(서면) (08. 7. 30)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 -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	92%
3차(서면) (08. 12. 3)	-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단 구성·운영(안)	84%
4차(대면) (09. 1. 20)	- 금융중심지 지정(안)	100%
5차(서면) (09. 5. 14)	- 금융중심지조성분과위원회 구성(안) - 금융전문인력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 실무금융전문인력 연수원 지정 및 예산배정(안)	92%
6차(대면) 09.12.21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 확정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계획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추진실적(보고)	65.4%
7차(서면) 10.1.15	- 녹색금융 특화MBA 선정·지원 기본계획(안)	96%
8차(서면) 10.2.2	- 녹색금융 특화MBA 심사·선정 계획(안)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93%
9차(서면) 10.3.11.	- 녹색금융 특화MBA 심사단 확정(안)	93%
10차(대면) 10.3.22	- 녹색금융 특화MBA 심사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안)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10년 교육계획	69%
11차(대면) 10.9.10	- 금융중심지정책 경과 및 평가(보고) -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 및 발전계획(보고)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 (보고)	86%

D. 자본시장과

□ 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개최현황

○ 위원회명 : 시장효율화 위원회

○ 근거법 및 설치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 제414조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설치한다.

□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현황('10.9.14 현재)

성명	현직	위촉일	임기
김명직 (위원장)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09.02.18	2년(연임가능)
서동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05.07.14	2년(연임가능)
서지희(여)	삼정회계법인 파트너(상무)	'05.07.14	2년(연임가능)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07.9.21	2년(연임가능)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09.02.18	2년(연임가능)
오재인	단국대 경영정보학 교수	'09.02.18	2년(연임가능)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10.08.16	2년(연임가능)

□ '08 ~ 현재 회의개최 실적 및 주요활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차수	일자	주요 안건	비고
08년 1차	'08.2.20	- 10년 국채선물 수수료 심의	서면
08년 2차	'08.5.2	-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08년 3차	'08.7.9	- 돈육선물 수수료 심의 - 위원장 선출	
08년 4차	'08.9.17	-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08년 5차	'08.11.12	- 증권예탁결제원 차세대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심의	
08년 6차	'08.11.28	- 증권예탁결제원 차세대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에 대한 기술소위원회 검토결과 심의	
09년 1차	'09.03.31	-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통화선물 거래수수료 등 변경 심의	
09년 2차	'09.12.22	-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체계 개편방안 심의 -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심의	
10년 1차	'10.4.1	- 대용증권관리수수료 징수체계 개선 심의	서면
10년 2차	'10.8.16	-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장 선출 - 한국거래소 미니금선물 수수료율 심의 - 한국거래소 Eurex 연계거래수수료 징수 방안 심의 - 시장효율화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10년 3차	'10.8.30	- 금융투자협회 미니금선물 회비납부를 심의	서면

E. 중소기업과

① 위원회 현황 및 위원명단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설립기간	설립근거	취지 및 기능
대부업 정책협의회	'06.12~	대부업법, 대부업정책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

【 위원회별 위원 명단 】

위원회명	성명	상근여부	선임기간	선임당시 소속기관 및 직위	주요 학·경력
대부업 정책협의회	진동수 (위원장)	당연직	당연직 (‘09.1월~)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스턴대 석사 서울대 법대 재정경제부 차관
"	류성걸	당연직	당연직 (‘10.8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시라큐스대 박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황희철	당연직	당연직 (‘09.8월~)	법무부 차관	서울대 법대 서울남부지검장
"	안양호	당연직	당연직 (‘10.8월~)	행정안전부 차관	런던정치경제대 석사 경기도 행정 1부지사
"	손인옥	당연직	당연직 (‘09.8월~)	공정거래위원 회 부위원장	Universitat Konstanz 경제학과 공정위 상임위원

② 08년 이후 회의 실적 등

대부업정책협의회			
	회의 일시	참석위원	논의사항
제4차	'08.1.29	재경부장관, 금감위 부위원장, 법무부 차관, 행자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공정위 사무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업 관리감독상 지자체와 협력 강화 ○사금융이용자 실태조사 ○대부업법령 개정
제5차	'08.6.3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담당과장, 행안부 담당과장, 공정위 담당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제6차	'08.9.9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업법 개정 추진 ○제4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제7차	'08.12.15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차관보, 행안부 지역경제발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업 관리감독 우수 지자체 포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제4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제8차	'09.3.30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공정위 약관제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재개정 계획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사이버금융감시반 운영 현황
제9차	'09.4.24	금융위원장, 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행안부 지역경제과장, 공정위 사무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회의 일시	참석위원	논의사항
제10차	'09.10.15	서면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추진실적 ○대부업 관련제도 개선 추진동향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실적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대부업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제11차	'09.12.30	서면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민금융감독대상 포상계획(안)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사금융 종합애로지원센터 개소
제12차	'10.4.28	서면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
제13차	'10.7.23	서면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및 계획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현황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행위 근절방안 ○제7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3. 2008년 ~ 현재 금융위원회 안건 목록

☐ 붙임 2008년 ~ 현재 금융위원회 안건 목록

<붙임>

2008년 금융위원회 목록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3월21일	제1차 임시	의결 안건	1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안
2008년	3월24일	제2차 임시	의결 안건	2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008년	3월28일	제1차	의결 안건	3	금융감독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에르고 인터내셔널 아계의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6	에이아이지 유나이티드 개런티 인슈어런스 아시아 리미티드 한국지점 보험업 허가안
				7	그린화재해상보험(주)의 (가칭)그린부산창업투자(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
				8	우리금융지주(주) 및 아비바 인터내셔널 홀딩스 리미티드의 LIG생명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9	우리금융지주(주)의 LIG생명보험(주) 자회사편입 승인안
				10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법 조문 정비
				11	2007회계연도 예금보험공사 결산승인안
				12	(가칭)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3	(가칭) 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4	(가칭) 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5	오영수의 KIDB채권중개(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6	현대자동차(주) 등의 신흥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7	밸류에프투유한회사의 리딩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8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9	SK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20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21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22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23	(서울)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4	(부산)우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5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4월11일	제2차		26	(경북)참앤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27	국민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8	(사)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
				2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3	2007년도 하반기 중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현황보고
				4	경북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보고
			의결 안전	29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0	한국산업은행 임원선임안
				31	법인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2	(주)러브벨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3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4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처리안
				35	(충남)대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조치안
				36	휴면예금관리재단 정관 인가안
				37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38	(가칭)L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보고 안전	39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40	예금보험공사정관 일부개정정관 승인안
				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결과 보고
				7	금융기관 검사결과 보고
				8	(주)삼성카드 및 (주)삼성증권의 (주)가치네트 주식 초과보유 사후승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9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1	대우캐피탈(주)의 (주)기보캐피탈 주식 취득 승인안
				42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주식 취득 승인안
				43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4월25일	제3차	의결 안전	44	(부산)양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및 조치안
				45	국내은행 해외지점 등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업종 인정안
				46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07회계연도 결산심의회위원회구성(안)
				47	증권예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48	하나대투증권(주) 고정역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9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50	예금보험공사 임원 연임임명(안)
2008년	5월9일	제4차	의결 안전	51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3	동부생명보험(주) 부문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조치안
				54	동양생명보험(주) 부문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조치안
				55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6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7	(가칭)SC제일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SC제일은행의 (가칭)SC제일투자증권(주)에 대한 주식소유승인안
				58	(가칭)LIG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LIG손해보험(주)의 (가칭)LIG투자증권(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승인안
				59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스카이투자자문(주)의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60	(가칭)IBK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1	(가칭)KTB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2	(가칭)STX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3	(가칭)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4	(가칭)한국씨티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5	(가칭)KTIC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6	(가칭)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7	(가칭)와우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8	(가칭)ING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69	(가칭)리먼브러더스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네셔널증권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예비인가안
				70	(가칭)흥국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71	(가칭)BNP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2	금융감독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73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74	한국개인신용(주) 및 (주)디앤비코리아의 상호변경 허가안
			보고 안건	10	2008년도 1/4분기중 금융거래약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2008년	5월23일	제5차	의결 안건	75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안
				76	밸류에프원유한회사의 (서울)영풍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
				77	씨티크레딧서비스(주)의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안
				51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8	키움증권(주)의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주식 취득 승인안
				79	(가칭)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80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81	마이애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82	대한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및 겸영 인가안
				83	흥국생명보험(주)의 신탁업 영위 및 겸영 인가안
				84	2007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승인안
				85	2007회계연도 주택금융공사 결산승인안
				86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정안
				87	하노버재보험(주) 한국지점의 보험업 허가안
				88	우리은행의 이의신청사항 심의안
				89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의 결산일 변경 승인안
			보고 안건	11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2007년중 「금산법상」 초과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결과
				13	2008년 1/4분기중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발생현황 보고
				14	'08. 1/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5월26일	제3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90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안
2008년	6월16일	제6차	의결 안건	86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정안
				90	영진약품공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91	(가칭)엠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92	(가칭)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93	(가칭)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94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95	신한은행 및 신한생명의 (가칭)신한국민연금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소유 승인안
				96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의 화재보험 등 6개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업 허가안
				97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98	법인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99	금호생명보험(주)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조치안
				100	(가칭)강원랜드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안
				101	(서울)HK상호저축은행의 (부산)동광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102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03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
			보고 안건	1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 매각절차 보고
				19	2008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104	중소기업은행 임원 임명안
				1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06	한국공인회계사회회칙 일부개정회칙 승인안
				107	(주)케이씨오에너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08	선물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6월27일	제7차	의결 안건	10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일부개정규정안
				111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2	(주)두산케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변경 승인안
				113	엔에이치투자증권 수원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4	(가칭)KB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안
				115	하나금융지주의 코먼웰스비즈니스은행 자회사편입 이행기간 연장 승인안
				116	(대전)한발신용협동조합과 (대전)동대전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17	(제주)늘푸른신용협동조합과 (제주)제광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18	삼성생명보험(주)의 삼성생명라이프인베스트먼트(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
				119	(주)한화건설 등 5개사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보고 안건	20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보고
				21	2008년도 1/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2008년	7월11일	제8차	의결 안건	120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안
				121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안
				122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3	(경남)경남자동차정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4	(서울)면곡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5	(부산)부산택시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6	(주)뉴월드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7	(주)한국금융채널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8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동부증권(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
				129	(가칭)메리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 (가칭)메리츠자산운용과 메리츠종합금융(주)과의 자산운용업 영업양수도 및 메리츠종합금융(주)의 자산운용업 영업폐지 인가안
				130	(가칭)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31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32	(가칭)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133	(가칭)G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34	신영증권(주)의 신탁업 예비인가안
				135	유진투자증권(주)의 신탁업 예비인가안
				136	메리츠증권(주)의 신탁업 예비인가안
				137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9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140	한국FP학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141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안전	22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25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112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변경 승인안
				142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주) 설립 예비인가안
				143	국내은행 국외점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업종 인정안
				14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의 영업양수도 등에 대 한 예비인가안
				145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일부지침 개정안
				146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47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9	(강원)설악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50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51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기준안
				152	(가칭)얼라이언스벤처투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3	(가칭)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4	(가칭)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7월25일	제9차	의결 안건	155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6	(가칭)지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7	(가칭)알지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58	신영증권(주)의 신탁업 인가안
				159	유진투자증권(주)의 신탁업 인가안
				160	메리츠증권(주)의 신탁업 인가안
				161	피닉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162	교보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163	금융투자업규정안
				16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65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66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과 케이티비캐피탈(주)에 대한 출자 승인안
				167	비엔피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68	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69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70	애플투자증권중개(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171	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172	아이엔지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173	하나대투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74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75	도이치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76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77	한화손해보험(주) 및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의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안
				178	(가칭)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학회 설립 허가안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 이행상황 보고
				28	08년 2/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건	29	2008년 상반기중 외국은행 사무소 폐쇄신고 처리상황 보고
				30	2008년도 2/4분기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31	2008년 상반기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관련 금융위원회 권한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32	2008년 상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8년	8월22일	제10차	의결 안건	179	신용보증기금 임원 임명(안)
				180	제주금융포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181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안
				182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18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184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주)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85	재단법인 하나희망재단 설립 허가안
				186	(가칭)인천국제공항공사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안
				187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주)의 신용조사업무 영위 허가안
			보고 안건	33	2008년 2/4분기중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리현황 보고
				34	2008년도 2/4분기 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35	2008년도 상반기 보험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36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 보고
				37	08.2/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한국개발펀드법안
				18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8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9월12일	제11차	의결 안건	191	(주)아이씨코퍼레이션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95	(주)현대미포조선의 씨제이투자증권(주) 및 씨제이자산운용(주) 대주주 변경 승인 안
				196	재단법인 기은복지재단 정관 변경 인가안
				197	한화손해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198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안
			보고 안건	4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5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6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2008년	9월16일	제4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199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 조치안
				200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안
2008년	9월12일	제12차	의결 안건	201	(가칭)(주)KB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안
				202	KB투자증권(주) 등 3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3	(가칭)한국투자운용지주(주) 설립 인가안
				204	한국투자신탁운용(주) 등 2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5	지앤에이케이비아이씨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트레이드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 안
				206	세금융사회연구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207	(주)아셀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8	(가칭)D.A.S. 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안
				209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0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
				211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212	(충북)충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213	(가칭)에이앤에이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영위 예비허가 및 한국아이비금융(주) 의 (가칭)에이앤에이신용정보(주) 주식취득 승인안
				21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과 아메리칸엑스프레스은행의 영업양수도 등에 대 한 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건	215	신한은행 일부영업 양도 인가안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행정형벌 합리화관련 금융위 소관 11개 법률 일괄 개정 추진
				55	2008년 상반기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56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보고
2008년	9월30일	제5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21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1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보고 안건	57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 특례승인 보고
2008년	10월10일	제13차	의결 안건	218	중소기업은행 임원 임명안
				219	한미재무학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220	NDF 매입초과포지션 한도위반 은행에 대한 조치안
				221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222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3	글로벌신용정보(주)의 상호변경 허가안
				22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고 안건	5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8년	10월20일	제6차 임시	의결 안건	225	15개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국가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
				226	유진투자증권(주) 대구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7	네스테크(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28	박순하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10월27일	제14차	의결 안전	229	민응성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
				230	김태형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
				231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232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233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보고 안전	6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6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62	2008년도 3/4분기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63	2008년도 3/4분기중 전자금융거래약관 처리결과 보고
				64	2008년도 3/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65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6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정 보고
				67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제정 보고
2008년	11월7일	제15차	의결 안전	23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5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8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9	한화손해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40	(부산)양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41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242	(서울)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충북)증부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43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 및 케이티비이천칠사모투자 전문회사의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44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의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45	(주)한화건설, 한화엘앤씨(주), (주)한화갤러리아, 한화리조트(주), 한화테크엠(주)의 (경기)새누리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46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112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7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건	248	(주)포이보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68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9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2008년	11월21일	제16차	의결 안건	249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50	금융감독원·예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251	사단법인 한국금융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252	하나대투증권(주)와 하나IB증권(주)의 합병 인가안
				253	Deutsche Holdings (Malta) Ltd.의 도이치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254	유진투자증권(주)의 우리담배판매(주) 출자 승인안
				255	교보증권(주)등 51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56	(부산)양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보고 안건	7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보고
				73	2008년도 3/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74	2008년도 3/4분기 중 전자금융업 등록 및 등록말소 처리결과 보고
2008년	12월8일	제7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257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안
				258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예외인정안
			의결	259	모간스탠리은행 서울지점 결산일 변경 승인안
				260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등 신용공여한도초과 예외인정안
				261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 연장안
				262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 연장안
				263	글로벌파이낸스포럼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안
				264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265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정안
				26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67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12월12일	제17차	안전	268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과 (부산)부산물교통물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69	(전남)영광신용협동조합과 (전남)함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70	(전북)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과 (전북)한울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71	에스에이치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72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산신탁운용(주)와 에스에이치자산운용(주)의 합병 인가안
				273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74	(가칭)새한자산신탁(주)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안
				275	(가칭)지이자산신탁(주)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안
				276	보람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보고 안전	75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의결 안전	277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8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79	(주)골든브릿지의 금융지주회사 인가취득등의 기간 연장 승인안
				280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81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82	(경기)새누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283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84	(전남)해남신용협동조합과 (전남)옥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85	예금보험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286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87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288	신용보증기금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89	기술신용보증기금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90	한국산업은행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91	중소기업은행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92	한국산업은행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293	중소기업은행 2009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8년	12월26일	제18차		294	키움증권(주)의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출자 승인안
				295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등 27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96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97	(주)리더스라이프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조치안
				298	(주)푸른신호등전주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조치안
				299	(주)광장보험프라자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00	지승룡 등 2인의 증권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안
				301	외화환산 회계처리 관련 기업회계기준 등 수정요구안
				302	장외파생상품 관련 기업회계기준 수정요구안
				303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보고 안건	76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 방안
				77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 보고
				78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 보고
				79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보고
				80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개정 보고
				8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등 개정 보고
				8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등 개정 보고
				83	'중소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등 개정 보고
				84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등 개정 보고
				85	'뜻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등 개정 보고
				86	'가득조건과 취소'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개정 보고
				87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 등 개정 보고
				88	(충북)현대스위스III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결과보고
				89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결과 보고

2009년 금융위원회 목록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월14일	제1차	의결 안건	1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2	씨티그룹에 대한 (주)한국씨티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3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비아이에스보험중개(주)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	(가칭)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	(가칭)아펜다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7	(가칭)제이피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8	(가칭)에이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9	(가칭)삼천리맥쿼리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0	(가칭)현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1	노무라 인터내셔널증권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 인가안
				1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4	증권예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보고 안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KB투자증권(주)의 내부통제 운영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
				3	2008년도 4/4분기 중 전자금융거래약관 처리결과보고
				4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8.6월말 기준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5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5	금융중심지 대상지역 지정안
				16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월28일	제2차	의결 안건	1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기관자금 차입한도 증액신청 승인안
				20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의 합병 및 금융투자협회 정관 승인안
				2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6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8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29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0	케이알선물(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1	㈜경남은행 등 4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2	한맥선물(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3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4	흥국쌍용화재보험(주)의 자산운용업 폐지 인가안
				35	블리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보고 및 조치안
				36	비엔피파리바 은행 서울지점의 신탁업 폐지 인가안
				37	제이피모간 체이스 은행 서울지점의 신탁업 폐지 인가안
				38	칼리온 은행 서울지점의 신탁업 폐지 인가안
				3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4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4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4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4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분쟁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5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6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고 안건	6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결과보고
				7	2008년도 하반기 보험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8	2008년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신탁업 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 결과 보고
				9	2008년 하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 및 사무소 폐쇄신고 처리상황 보고
				10	2008년도 4/4분기 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11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등 45개 증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고
2009년	2월18일	제3차	의결 안건	47	(가칭)㈜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회사 설립 예비인가안
				48	흥국생명보험(주)의 흥국쌍용화재보험(주)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안
				49	에스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안
				50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의 집중관리·활용대상정보 범위 변경 승인안
				51	현대커머셜(주)의 현대카드(주) 주식취득 승인안
				52	하나대투증권(주) 고정역 지점장 최호웅의 이의신청사항 심의안
				53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정정안
			보고 안건	12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보고
				13	공인회계사 21인에 대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
				14	2008년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종합보고
				15	08. 4/4분기 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6	2008년 하반기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관련 금융위원회 권한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9년	3월4일	제4차	의결 안건	5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6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7	금융감독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58	(경기)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보고 안건	1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2008년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22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 보고
				23	2008년도 행정지도 사후관리 현황 보고
			의결 안건	59	BNP파리바등의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취득 승인안
				60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61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승인안
				62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63	현대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64	피델리티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65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6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7	고려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8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3월18일	제5차		69	새한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0	세일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1	솔로몬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2	에스지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3	중앙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4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5	한국기업평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6	정리금융기관(가칭:에쓰상호저축은행) 설립과 동 정리금융기관의 업무범위 및 사장선임 승인안
			보고 안전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2008년도 4/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27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28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및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2 개정)
				29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30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개정)
				3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32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정)
				33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제정)
				62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77	(전북)에쓰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안
				78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안
				79	국민은행의 국외점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업종 인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4월1일	제6차	의결 안건	80	한국주택금융공사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1	15개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
				8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의견안
				83	에금보험공사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4	한국산업은행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 안건	3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7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보고
				38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결과 보고
2009년	4월13일	제1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85	에금보험공사 임명안
2009년	4월15일	제7차	의결 안건	86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원 임명안
				87	(가칭)아시아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88	대한생명보험(주)의 한화투자신탁운용(주) 자회사 소유 및 대주주 변경 승인안
				89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90	중소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91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92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 및 영업의 일부 정지와 긴급조치 연장 보고
				9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 안
				9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6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97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99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정안
				10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02	(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과 목포약사 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보고 안건	37	상호저축은행 과징금제도 운영방안 보고
				3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8.12월말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
				43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 연장 보고안
				44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보고
2009년	4월29일	제1차 서면 의결	의결 안건	1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안건	104	한국산업은행 임원 임명안
				105	신용보증기금 임원 임명안
				106	금융감독원에 대한 결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107	다스법률비용보험(주)의 보험업 허가안
				108	우리캐피탈(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09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10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 정관 승인안
				111	(주)인네트의 (구)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5월6일	제8차		112	(주)서부트럭터미날의 애플증권중개(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안
				113	현대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4	비엔피파리바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4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 주요 변경사항
				47	'09 회계연도 금감원 예산심사시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
				4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49	KB자산운용(주)의 KTB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보고
				50	2009년도 1/4분기 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2009년	5월20일	제9차	의결 안건	115	2008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승인안
				116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대한 청산인 청구 승인안 및 영업의 일부정지 관련 보고
				117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과 (전북)수류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18	산은캐피탈(주)의 리더스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119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0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고 안건		5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5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보고
				5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54	'09. 1/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21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 임명안
				122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배정(안)
				123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4	(충남)한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6월3일	제10차	의결 안건	125	(충북)청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6	삼성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7	굿모닝신한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8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29	대우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0	한양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1	한화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2	하이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3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4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5	템피스트투자자문(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6	(가칭)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37	한일시멘트(주)의 칸서스자산운용(주) 대주주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안
			보고 안건	5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6	2009년도 1/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138	한국산업은행의 외화표시 중장기채무 차입계획 협의 승인안 및 외화표시 채무 상세 현황 보고
				139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0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41	은행업인가지침 일부개정안
				142	(주)신한은행의 에스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43	(주)케이비금융지주의 케이비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44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안
				145	(주)위브앤위너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6월17일	제11차	의결 안건	146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 설립인가안 등 .
				147	(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과 (전북)새만금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48	(경남)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과 경남자동차정비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49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0	(주)골든브릿지의 (전남)상업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승인안
				15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52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안
				153	(충남)대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종료안
				154	현대증권(주)의 출자승인 및 (가칭)현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55	(가칭)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37	한일시멘트(주)의 칸서스자산운용(주) 대주주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안
			보고 안건	57	칸서스자산운용(주) 임원의 대주주변경승인 의무 위반 여부 검토 보고
				58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59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과보고
2009년	7월1일	제12차	의결 안건	156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 조치안
				157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8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조치안
				159	얼라이언스번스타인엘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조치안
				16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1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2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6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6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 승인안
				167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영기준 제정안
				168	(충북)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60	금융회사 이자율 제한제도 운영방안
				61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 보고
				62	2009년 1/4분기중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관리현황 보고
2009년	7월16일	제13차	의결 안건	169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0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71	(가칭)노무라이화자산운용(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 안
				173	흥국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74	하나대투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5	대신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6	대우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7	현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8	굿모닝신한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9	한국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0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1	리딩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2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3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4	미래에셋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85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7	(주)부은선물의 대주주 심사 배제 인정 및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8	(전남)녹동신용협동조합과 (전남)도화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89	(대구)광장신용협동조합과 평리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90	(주)케이티캐피탈의 뱅가드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보고 안건	6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6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6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6	한국산업은행의 2/4분기 '외화표시 채무 상세 현황' 보고
			의결 안건	19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192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193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194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95	(제주)성산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96	비씨카드(주)의 스마트페이(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19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8	(주)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주)신용카드업 예비인허가안
				199	신한은행의 해외 사무소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200	아시아신용정보(주)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 조치안
				201	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융위원회 규정 등 고시 일괄정비안
				202	국제신탁(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안
				203	(가칭)아쎄다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7월29일	제14차		204	키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5	도이치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6	에스케이증권(주)의 글로벌 소프트웨어기업 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가칭)에 대한 출자승인안
				207	부국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8	교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9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10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11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제정안
				212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보고 안건	67	기업회계기준서 제104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정결과 보고
				6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대한 제정결과 보고
				6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에 대한 제정결과 보고
				70	"내재파생상품"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09호 등 개정결과 보고
				7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등에 대한 개정 결과 보고
				72	2009년 상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 및 사무소 폐쇄 신고 처리상황 보고
				73	2009년도 2/4분기 금융거래약관의 처리 결과 보고
2009년	8월11일	제2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19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13	(가칭)(주)무궁화신탁의 부동산신탁업 인가안
				214	삼성생명보험(주) 자회사의 영위업무 추가 승인안
				215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6	미래에셋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17	하나대투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8월26일	제15차	의결 안건	218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19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2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21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2	아시아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허가취소안
			보고 안건	74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6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개정 결과 보고
				77	2009년도 2/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2009년	9월9일	제16차	의결 안건	223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안
				22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25	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26	외환선물(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7	에스케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28	신용보증기금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229	기술신용보증기금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230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31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의 상해보험 등 6개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업 허가안
				232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3	하나은행의 국외 자회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 업종 인정안
				234	(주)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235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236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 임명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9월23일	제17차	의결 안건	237	금융결제원 임원 선임 승인안
				238	(주)우리금융지주의 비엔비에트증권 손자회사 편입승인안
				239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의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안
				240	국제신탁(주)의 경영개선계획 승인안
				241	(서울)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및 에이치에스에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기)에한울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
				242	산은캐피탈(주)의 KDBC-JKL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안
				243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주) 신용카드업 인,허가안
				24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45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전부개정안
				246	신한은행 등의 (가칭)코뎀코 주식소유 승인안 및 자회사 업종 인정안
				247	신한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안
				226	외환선물(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재상정 안건)
				248	한양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49	부국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0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1	솔로몬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2	이트레이드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3	교보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54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승인안
			보고 안건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9	지도공문 등 비명시적 규제 정비방안
				80	2009회계연도 금융감독원 상반기 결산결과 보고
2009년	9월29일	제2차 서면 의결	의결 안건	244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45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전부개정안
2009년	10월7일	제18차	의결 안건	255	(광주)무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56	한화손해보험(주) 및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의 합병 예비인가안
				257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58	블리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변경 승인안
				259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260	한국정책금융공사 정관 제정 인가안
				261	(가칭)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설립 인가안
				262	중소기업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실태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63	중소기업은행의 구속성예금 실태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6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65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47	신한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안(재상정 안건)
				266	리딩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보고 안건	81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고
				8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5	09년 2/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09년	10월21일	제19차	의결 안건	267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268	스카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69	한국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7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7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보고 안건	86	외환건전성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
2009년	11월4일	제20차	의결 안건	272	공인회계사 방효혁, 백승철, 김성복, 배원현, 김수인 및 박종대에 대한 징계의결안
				273	공인회계사 남형주에 대한 징계의결안
				274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연장안
				275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연장안
				276	(경기)안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77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78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기관자금 용도별 차입한도 조정신청 승인안
				279	한국정책금융공사 2009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280	한국정책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281	(주)신한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282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신설 예비인가안
			보고 안건	8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8	2009년 상반기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보고
				89	2009년도 상반기 보험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83	금융감독원 예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284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안
				285	엠에이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제주)미래상호저축은행의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286	(주)보고비씨투자목적회사의 비씨카드 대주주 승인안
				287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씨피2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288	(전남)전남서부신용협동조합과 (전남)문장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289	(광주)북동신용협동조합과 (광주)광주제일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1월18일	제21차	의결 안건	290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안
				291	(가칭)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92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간 영업양수도 등 에 대한 예비인가안
				272	공인회계사 방효혁, 백승철, 김성복, 배원현, 김수인 및 박종대에 대한 징계의결안
				293	(주)비엔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294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95	우리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96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97	한화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98	하이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99	한양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00	부국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01	신한금융투자(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02	(주)부은선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03	(가칭)한국노무라금융투자(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04	메리츠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보고 안건	9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개선계획 수정보고
				91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결과 보고
				92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결과 보고
				93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개정결과 보고
				94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제정결과 보고
				305	청호전자통신(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6	(가칭) 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2월2일	제22차	의결 안건	307	씨티그룹에 대한 한국씨티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308	대우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09	현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10	솔로몬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11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31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313	동부증권(주) 본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14	대우증권(주) 테헤란밸리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1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1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17	대신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18	마이에셋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19	피닉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20	골든브릿지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2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22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씨피1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323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씨피3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324	한국종합캐피탈의 케이케이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보고 안건	95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6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7	2008년중 금산법상 다른회사의 주식초과 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결과 보고
				98	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9.6월말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99	2009년도 3/4분기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00	2009년도 3/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처리 결과 보고
				101	'09. 3/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02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상황 보고
2009년	12월18일	제23차	의결 안건	325	(주)골든브릿지캐피탈의 (주)굿이에프 주식취득승인안
				326	국제신탁(주)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종료안
				327	대신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8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9	이트레이드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0	키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1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2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주)제이피모간퓨처스와의 영업양수도 승인안
				333	하나대투증권(주) 등의 (가칭)하나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안
				334	우리은행등의 (가칭)우리블랙스톤 오퍼튜니티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소유 승인안
				335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과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은행 서울지점간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인가 및 승인안
				336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3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3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3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4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4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4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43	한화손해보험(주) 및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의 합병인가안
				344	흥국생명의 흥국화재 주식 추가취득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	12월22일	제3차 서면 의결	의결 안건	345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산은금융지주 주식 현물출자 신청 승인안
2009년	12월29일	제24차	의결 안건	346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임명안
				347	금융감독원 2010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348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349	중소기업은행 2010회계연도 인건비 예산 승인안
				350	예금보험공사 2010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351	한국주택금융공사 2010회계연도 예산 승인안
				352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353	한국주택금융공사 2010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354	신용보증기금 2010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355	기술신용보증기금 2010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356	한국정책금융공사 2010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357	중소기업은행 2010년도 업무계획 승인안
				358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예탁업무규정 및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5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6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61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62	(가칭)피에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63	(가칭)파인트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64	(가칭)캡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65	(가칭)새한자산신탁(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66	(주)리더스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367	(주)프라임인스넷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68	(주)우리인슈어클라비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69	(주)인카인슈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70	(주)다이렉트일일구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71	(주)에임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72	(주)대우솔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73	(경기) 일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74	(강원)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375	(충남) 서천군산림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03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확정 및 지정고시안
				104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105	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를 위한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 설치운영방안
				10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개정 결과 보고
				10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108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보고
				109	09년 상반기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보고
				1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승인후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검사결과 보고
2009년	12월31일	제3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376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377	신기보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및 "소기업 담보부대출 특례보증" 관련 경과조치 안

2010년 금융위원회 목록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1월13일	제1차	의결 안건	1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맥쿼리은행 서울지점의 결산일 변경 승인안
				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주)코람코자산신탁의 출자승인·대주주 요건심사대상 제외 인정 및 (가칭)(주)코람코 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5	PCA생명보험(주) 종합검사 결과 과태료 부과 조치안
				6	대우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	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8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9	푸르덴셜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10년	1월27일	제2차	의결 안건	10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집중관리, 활용대상정보 추가 승인안
				11	더케이손해보험(주)의 질병보험 등 3개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업 허가안
				12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3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4	케이비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5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보고 안건	16	공인회계사 장동룡, 박규환 및 최성규에 대한 징계의결안
				1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녹색금융 특화MBA 선정·지원 기본계획안
				4	기업회계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 제정결과 보고
				5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 결과 보고
				6	2009년 하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 및 사무소 폐쇄신고 처리상황 보고
				7	외환건전성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
				17	농협중앙회의 해외 사무소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2월10일	제3차	의결 안건	18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9	광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0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등 조치안
				21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22	(대전)대전시산림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3	(대전)한우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4	에스케이텔레콤(주)의 하나카드(주) 대주주 승인안
				25	(주)두산캐피탈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8	'09. 4/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9	2009년도 4/4분기 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2010년	3월3일	제4차	의결 안건	26	한국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분할인가안
				27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8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9	케이디비칸서스밸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금호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30	금호생명보험(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31	한국자산신탁(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32	(주)다울신탁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33	(가칭)(주)코람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4	(가칭)파인트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5	흥국증권(주) 및 흥국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36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7	도이치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8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39	동양종합금융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동양선물(주)과의 합병 승인안
				40	메리츠증권(주)과 메리츠증권(주)의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41	교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42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3	토러스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4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45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46	공인회계사 5인에 대한 징계의결안
				47	(전북)한일(현 미래2)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1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재상정 안건)
			보고 안건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	2009년도 하반기 보험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2	2009년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종합보고
2010년	3월17일	제5차	의결 안건	4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9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50	아시아신탁(주)의 인가조건 변경승인안
				51	정리금융기관[(가칭) (주)에나래상호저축은행] 설립과 동 정리금융기관 업무범 위 승인안
				52	예금보험공사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3	한국주택금융공사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4	코리아크레딧뷰로(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5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6	우리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7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8	신한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59	진흥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0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1	한국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2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3	나이스디앤비(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전	64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3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 보고
				14	2009년도 4/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 결과 보고
2010년	4월7일	제6차	의결 안전	65	(가칭)노무라이화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66	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변경승인안
				67	(주)에셋화인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8	(주)에이폴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69	(주)골드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0	(주)키움라이프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1	(주)아이러브에셋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2	(전남)완도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73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등 조치안
				74	(전북)에나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안
				75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비과세 요건 고시 제정안
				76	메리츠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77	교보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78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고 안전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금융증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	녹색금융 특화MBA 선정 결과보고
				19	2009년도 행정지도 사후관리 현황 보고
				79	우리은행의 국외점포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 및 자회사 업종 인정안
				66	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변경승인안(제상정 안건)
				80	중소기업은행의 엔화대출 취급의 적정성 점검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81	한국산업은행 정관 일부 변경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4월21일	제7차	의결 안건	82	에스케이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83	노무라금융투자(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안
				84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85	한국예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8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8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88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8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9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9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9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서울)한신상호저축은행의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9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개정안
				96	금융감독원에 대한 결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보고 안건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등 보고
				22	금융감독원장 등 임원의 09년도 성과 평가 관련 보고
2010년	5월12일	제8차	의결 안건	97	(주)제이피모간퓨처스의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승인안
				98	(가칭)캡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99	(가칭)지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00	솔로몬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01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02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03	(가칭)아이비케이 연금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안
				104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105	금호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23	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 방안
2010년	5월26일	제9차	의결 안전	106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107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한국산업은행간 업무위탁계약 종료 승인안
				108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주) 설립 인가안 등
				109	(주)이크레더블의 신용정보업 영위 예비허가안
				110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111	(가칭)제이피에셋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12	(가칭)피에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1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14	(주)에임하이글로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115	키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16	한맥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17	신영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18	한화증권(주)의 푸르덴셜투자증권(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 및 출자승인안
				119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케이앤씨이지골프코리아(주)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120	금호종합금융(주)의 두울산업(주)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121	2009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승인안
			보고 안전	24	2009년 하반기중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현황
				25	2010년 1/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6	2009년 하반기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7	2010회계연도 금감원 예산심사시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
				122	한국정책금융공사 감사 임명(안)
				119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케이앤씨이지골프코리아(주)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재상정 안전)
				120	금호종합금융(주)의 두울산업(주)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재상정 안전)
				12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6월9일	제10차	의결 안전	124	부산은행의 (가칭) BS캐피탈 주식소유 승인안
				125	국민신용정보(주)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 및 시정명령 부과안
				126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2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8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29	(서울)한국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30	(경기)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31	(부산)영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32	(인천)신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133	행정지도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보고 안전	28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보고
				29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 승인제도 검토 보고
				3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31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9.12월말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32	신용정보업관련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10년	6월23일	제11차	의결 안전	134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3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36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37	(주)비에스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38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39	아이엔지증권(주)의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 및 대주주 변경 승인안
				140	(가칭)한맥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41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취소안
				142	마이어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143	(경북)경산제일신용협동조합과 (경북)청도군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44	(경북)구룡포신용협동조합과 (경북)장기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7월7일	제12차		145	(인천)송림신용협동조합과 (인천)송림4동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146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7	삼공개발(주)의 (인천)신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148	(주)대유신소재 및 (주)대유디엠씨의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149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150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영업정지 등 조치안
			보고 안전	33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 결과보고
				3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2010년도 1/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결과 보고
2010년	7월7일	제12차	의결 안전	151	금융감독원 감사 임명제청안
				152	(가칭)케이에스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영위 예비허가안
				153	KDB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54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55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6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7	(인천)계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158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9	(충남)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36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보고
				37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보고
				38	(인천)신라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결과 보고
				39	2010년 상반기 신용협동조합 경영관리 관련 금융위원회 권한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40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160	에이오엔홀딩스유한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조치안
				161	메트라이프글로벌매니지먼트(주)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62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7월21일	제13차	의결 안건	163	(주)탑라인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6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5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6	국민연금의 한국전력 발행주식 소유한도 확대 승인안
				16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9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70	키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71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72	대우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73	아시아신탁(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174	(가칭)지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75	(가칭)베스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6	(가칭)알에이케이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7	아주아이비투자(주)의 (가칭)아주자산운용(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및 (가칭)아주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78	롯데카드(주)의 (주)이비카드에 대한 출자 승인안
				179	(주)다함넷의 (경기)삼신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
				180	금융감독원 2010회계연도 특별예비비 사용 승인안
			보고 안건	41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2	2010년도 1/4분기 중 금융거래약관 처리결과 보고
2010년	8월9일	제1차 임시 회의	의결 안건	181	케이디비생명보험(주)에 대한 자본감소 인가안
				182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83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예외인정안
				18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5	한국신용정보(주) 등의 분할합병관련 예비인가안

연도	월일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	8월18일	제14차	의결 안전	186	하나은행 국외지점 신설에 대한 사전협의안
				187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 및 서광주지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117	신영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재상정 안전)
				188	(주)한국토지신탁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
				189	(광주)무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
				190	웅진금융제일유한회사의 (경기)늘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191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보고 안전	4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고
				44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안) 검토
				46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보고
				47	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2010년 상반기중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이전 및 사무소 폐쇄신고 처리상황 보고
2010년	9월1일	제15차	의결 안전	192	금산법 제24조 운용규제 개선방안
				193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4	(주)이크레더블의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안
				195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96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97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98	키움증권(주)의 (가칭)키움자산운용(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및 (가칭)키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9	흥국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00	하나대투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201	미래에셋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202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승인안
				203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4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0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6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7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8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보험업 허가안
				209	(가칭)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금융투자업 경영 인가안
				210	(부산)파랑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211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51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결과보고
				5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5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54	2010년도 상반기 보험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10년	9월17일	제16차	의결 안건	212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3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17	바클레이즈은행피엘씨에 대한 파태료 부과등 조치안
				218	테마섹 홀딩스 등의 (주)하나금융지주 주식보유 승인안
				219	케이에스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안
				220	국민신용정보(주) 일부업무정지 조치안
				221	케이디비칸서스밸류 유한회사의 케이디비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222	케이디비생명보험(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
				22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상호저축은행법 개정 관련)
				224	(대구)삼익신용협동조합과 (경북)다산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225	(경기)화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연도	월일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26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27	에스케이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228	(가칭)베스타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29	(가칭)(주)알에이케이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3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보고 안건	55	2010년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부문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56	2010년도 2/4분기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보고
				57	2010년도 2/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처리결과 보고
				58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추진 결과 보고
				59	2010년 2/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60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시행 보고

4. 2009년~현재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목록

☐ 붙임 2008년 ~ 현재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목록

2008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사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	000(주) 등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 안
			4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가칭)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	(가칭) 얼라이언스벤처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7	(가칭) 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8	오영수의 KIDB채권중개(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9	현대자동차(주) 등의 신흥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0	벨류에프투유한회사의 리딩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11	동양종합금융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2	SK증권(주)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안
			13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영인가 안
			14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 영인가안
			15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경 영인가안
			16	(주)000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7	(주)000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8	(주)00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9	2007년 2/4분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20	2007년 4/4분기 임원, 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21	페이퍼코리아(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	동신건설(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	(주)씨라텍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	시큐리티코리아(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	(주)에당온라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6	세기상사(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7	(주)씨티엘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8	(주)모나미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08년 3월 26일	제1차	의결 안전	29	(주)에너지원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	한성기업(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1	엠텍반도체(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2	(주)한솔교육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	(주)메타바이오메드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3	000(주) 이사 000의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안
			4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3	선물거래법 제51조(해외선물거래)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54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5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5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59	000(주) 전 대표이사 000의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보고 안건	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
08년 4월 8일	제2차	의결 안건	60	(주)000 및 (주)000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
			61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2	(가칭)L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3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08년4월23일	제3차	의결 안건	64	(주)000 감리조치 관련 000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000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65	000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6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6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6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6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3	2008년도 1/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08년5월7일	제4차	의결 안건	73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5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규정(3개) 일부개정규정안
			76	(가칭)IBK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7	(가칭)KTB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8	(가칭)SC제일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79	(가칭)STX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0	(가칭)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1	(가칭)한국씨티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2	(가칭)KTIC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3	(가칭)LIG투자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4	(가칭)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5	(가칭)와우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5월21일	제5차	의결 안건	86	(가칭)한맥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한맥선물(주)의 (가칭)한맥증권중개(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87	(가칭)ING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88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스카이투자자문(주)의 (가칭)스카이증권중개(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89	(가칭)리먼브러더스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예비인가안
			90	(가칭)흥국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91	(가칭)BNP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예비허가안
			92	000 등 6사의 임원·주요주소주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93	(가칭)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94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95	마이애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96	000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
			9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9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9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08년5월21일	제5차	의결 안건	10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3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4	000 등 34개 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5	엔디코프(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6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7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8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09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10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11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12	000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
			113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안
			114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 인정안
		보고 안건	4	2007사업연도 중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08년6월11일	제6차	의결 안전	115	(가칭)엠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16	(가칭)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17	(가칭)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18	(가칭)아이엠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19	영진약품공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120	(주)홍익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1	(주)양풍(舊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2	(주)현대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3	(주)전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4	(주)도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5	(주)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6	(주)조이토토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127	오피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128	(주)셀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129	(주)에이트픽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130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1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2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3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4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5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6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7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8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39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0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1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2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3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5	2008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보고 안건	6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7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8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08년6월25일	제7차	의결 안건	144	(주)씨앤중공업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5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6	선물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4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일부개정규정안
			149	증권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50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변경 승인안
			151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2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3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4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5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6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57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8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9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0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1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2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63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64	(주)엠피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5	(주)케이씨오에너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6	(주)큐리어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7	위디츠(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8	제이에스(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9	(주)나래원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0	(주)파로스이앤아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171	(주)에코솔루션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2	(주)코스모스피엘씨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3	(주)케이디이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74	엔디코프(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08년7월9일	제8차	의결 안전	175	(가칭)메리츠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 (가칭)메리츠자산운용과 메리츠종합금융(주)과의 자산운용업 영업양수도 및 메리츠종합금융(주) 의 자산운용업 영업폐지 인가안
			176	(가칭)블랙록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77	(가칭)더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78	(가칭)RG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179	(가칭)GS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보고 안전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보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보고
			11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보고
			180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82	(주)○○○ 및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83	○○○(주)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5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4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5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6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7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8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9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0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1	2007년 하반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192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담당 임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93	(가칭)얼라이언스벤처스타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4	(가칭)에이아이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5	(가칭)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7월23일	제9차	의결 안건	196	(가칭)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7	(가칭)지에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8	(가칭)알지에너지자원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안
			199	피닉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0	교보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01	금융투자업규정안
			20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3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4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증권업·선물업 허가 및 (가칭)케이티비캐피탈(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205	비엔피파리바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6	토러스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7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8	에플투자증권중개(주)의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안
			209	바로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210	아이엔지증권중개(주)의 증권업 허가안
			211	하나대투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12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13	도이치증권(주)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214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인가안
		보고 안건	12	2008년도 2/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15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16	회계감사 품질관리감리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17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8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9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0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21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2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3	(주)청람디지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4	(주)도움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8월20일	제10차	의결 안건	225	(주)코디너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6	(주)모빌탑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7	(주)해인아이앤씨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8	(주)에스피코프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9	(주)유성티에스아이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0	아이메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1	(주)소예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2	(주)넥사이언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3	(주)코리아타바코컴퍼니 주식 매출행위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234	STX엔파코(주) 주식 매출행위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235	월드파워텍(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6	(주)비엔디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7	(주)케이에스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8	(주)모코코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9	(주)필룩스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0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
			14	2007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접수내용
08년9월10일	제11차	의결 안건	241	(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42	(주)분당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43	메디에스앤피(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244	(주)에이엠에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245	(주)아이씨코퍼레이션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4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5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5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52	(주)현대미포조선의 씨제이투자증권(주) 및 씨제이자산운용(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9월24일	제12차	의결 안건	253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4	○○○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5	○○○ 종목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6	2008년 상반기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257	○○○(주)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258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9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0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1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2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3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4	(주)○○○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5	(주)○○○ 주식에 대한 과징금 분납요청 처리안
			266	한국투자신탁운용(주) 등 2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67	KB투자증권(주) 등 3개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268	지앤에이케이비아이씨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트레이드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08년9월30일	임시 제1차	의결 안건	26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7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보고 안건	15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 특례승인 보고
			271	○○○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2	(주)로엔케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73	네스테크(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74	아시아신용정보(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75	(주)엘제이엘에너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76	넷시큐어테크놀로지(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7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10월22일	제13차	의결 안건	28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5	○○○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96	(주)엔블루와이드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7	(주)삼합글로벌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8	(주)샤인시스템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9	한국오발(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0	(주)아이씨코리아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1	새한정보시스템(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2	시큐리티코리아(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3	(주)씨라텍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4	(주)브이에스에스티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5	(주)한국하이네트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6	(주)엘제이엘에너지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6	2008년도 3/4분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7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정 보고
			18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확정급여자 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제정 보고
			307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112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8년11월5일	제14차	의결 안건	308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의 허가조건 변경 승인안
			309	(주)스카이뉴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10	(주)포이보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1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12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13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14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15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08년11월19일	제15차	의결 안건	31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8	하나대투증권(주)와 하나B증권(주)의 합병 인가안
			319	Deutsche Holdings (Malta) Ltd.의 도이치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320	유진투자증권(주)의 우리담배판매(주) 출자 승인안
			321	교보증권(주)등 51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22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23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2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7	○○○(주)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1	(주)○○○ 임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08년12월10일	제16차	보고 안건	1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의결 안건	332	(주)다휘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33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34	(주)새누리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35	(주)파로스이앤아이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36	외부감사인의 'IFRS 도입용역' 관련 직무제한범위 운용방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337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및 긴급 조치 연장안
			338	에스에이치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339	신한비엔피파리바투자신탁운용(주)와 에스에이치자산운용(주)의 합병 인가안
			340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08년12월24일	제17차	의결 안건	34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4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45	키움증권(주)의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출자 승인안
			346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등 27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4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4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6	(주)○○○ 주식관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5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2	(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3	(주)트루맥스의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64	(주)샤인시스템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안
			365	(주)비츠로테크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일자	회사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366	(주)삼성수산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67	2008년 상반기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368	(주)○○○ 등 4개사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안
			369	(주)○○○ 주식의 단기매매차익 심사결과 조치안
			370	외화환산 회계처리 관련 기업회계기준 등 수정요구안
		보고 안전	20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 보고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개정 보고
			22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개정 보고
			23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보고
			24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개정 보고
			2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등 개정 보고
			2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등 개정 보고
			27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등 개정 보고
			28	'금융자산의 분류변경'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등 개정 보고
			29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등 개정 보고
			30	'가득조건과 취소'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개정 보고
			31	'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5호 등 개정 보고

2009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1월7일	제1차	의결 안건	1	(가칭)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2	(가칭)아센다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3	(가칭)제이피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4	(가칭)에이플러스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5	(가칭)삼천리맥쿼리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6	(가칭)현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예비허가안
			7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및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 인가안
			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정 전부개정규정안
			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0	증권예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
		보고 안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1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7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8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	○○○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	○○○ 등 3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3	(주)○○○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1월21일	제2차	의결 안건	25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26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27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2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분쟁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0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31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3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중 개정규정 승인안
			33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4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5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의 합병 및 금융투자협회 정관 승인안
			36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8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9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41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3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 인가지침 일부개정지침안
			44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5	(주)경남은행 등 47개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6	한맥선물(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7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8	흥국쌍용화재보험(주)의 자산운용업 폐지 인가안
		보고 안건	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4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51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2월25일	제3차	의결 안건	52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53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54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55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56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57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58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59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60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61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62	○○○(주) 감리조치 관련 공인회계사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63	(주)○○○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결정안
			64	(주)뉴젠비아이티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5	(주)에스티앤아이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6	(주)온누리에어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7	(주)해썬나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8	오펜스(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9	테스텍(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0	한국슈넬제약(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1	(주)펜타마이크로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2	한국개발금융(주)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3	(주)이노지디엔의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4	(주)스포츠서울21 임원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7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8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8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82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8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5	2008년도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6	○○○, ○○○,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점검 결과 보고
09년3월11일	제4차	의결 안전	7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처리안 보고
			84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승인안
			85	한화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86	피델리티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87	(주)○○○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88	(주)○○○의 반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89	(주)○○○ 및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90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8	2009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9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개선방안 보고
			10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및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2 개정)
			11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12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개정)
			13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14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정)
			15	위탁업무처리결과 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116호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제정)
			91	(가칭)아시아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9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 4월8일	제5차	의결 안건	9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9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1	(주)○○○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2	(주)○○○ 및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6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0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0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0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10	000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111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 및 영업의 일부정지와 긴급조치 연장 보고
		보고 안건	16	차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	○○○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09년4월13일	제1차	서면 의결	110	000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09년5월4일	제6차	의결 안건	11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5	○○○(주), (주)○○○,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7	(주)○○○의 ○○○(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안
		보고 안건	1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9	○○○(주)의 ○○○(주)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보고
09년5월13일	제7차	의결 안건	118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19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20	(주)○○○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1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22	(주)○○○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3	○○○(주)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24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년5월27일	제8차	의결 안건	12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26	(주)휴리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7	(주)비엔알엔터프라이즈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8	(주)봉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29	(주)리노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0	(주)확인영어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1	(주)사이버패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2	(주)에듀언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3	(주)삼에스코리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4	유씨아이콜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5	(주)한텔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6	케이엔에스홀딩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7	(주)두림티앤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8	(주)한도하이테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39	플래닛팔이(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0	(주)청람디지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1	(주)아이비네트워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145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6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7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8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9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0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51	2009사업연도 결함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안
			152	(가칭)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53	○○○(주)의 ○○○위반 관련 조치안
		보고 안전	20	○○○(주) 임원의 대주주변경승인 위반여부 검토보고
			21	2008 사업연도 중 결함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
			22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23	(주)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보고
09년6월10일	제9차	의결 안전	154	(주) ○○○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안
			155	(주)아이젠텍컴퍼니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안
			156	오리엔스금속(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157	현대증권(주)의 출자승인 및 (가칭)현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58	(가칭)아이엔지부동산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보고 안전	20	○○○(주)의 ○○○위반여부 검토보고
			24	2007년 하반기 품질관리감리 실시결과 개선권고사항 이행여부 검토 보고
			2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159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6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6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6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 승인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09년6월24일	제10차	의결 안전	166	(주)씨모텍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안
			167	(주)상보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6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09년7월8일	제11차	의결 안전	177	동양이엔피(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78	(주)윈드스카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79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안
			180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1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2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3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4	농업회사법인오담생명환경(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 고 및 조치안
			185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6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7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88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처리 안
			189	(가칭)노무라이화자산운용(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 정규정 승인안
			191	○○○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92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3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일자	회사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194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5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6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7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8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99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0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1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2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3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4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05	○○○의 대주주 심사 배제 인정 및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보고 안전	26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현황에 대한 보고
			206	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융위원회 규정 등 고시 일괄정비안
			207	○○○(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08	(가칭)아센다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09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10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11	○○○증권○○○회사 출자승인안
			154	舊 (주)중부상호저축은행[(주)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21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9	○○○등 ○○○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7월22일	제12차	의결 안건	22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2	○○○(주) 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안
			223	(주)대한은박지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4	(주)사라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5	영풍제지(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6	(주)시노팩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7	(주)테라리소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8	(주)비엔알엔터프라이즈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29	(주)야호커뮤니케이션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0	(주)에이치원바이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1	(주)씨앤중공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2	(주)트라이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3	(주)희훈디앤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4	(주)엑스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5	(주)대유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6	(주)블루스톤디앤아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7	(주)포넛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8	(주)아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39	(주)정원엔시스템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0	(주)미디어코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27	기업회계기준서 제104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2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30	"내재파생상품"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09호 등 개정결과 보고
			3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등에 대한 개정 결과 보고
			32	2009년도 상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41	(주)○○○(舊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 8월26일	제13차	의결 안건	242	(가칭)㈜무궁화신탁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44	미래에셋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5	하나대투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6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7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8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보고 안건	33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개정 결과 보고
09년 9월2일	제14차	의결 안건	207	현대스위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4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50	주○○○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1	○○○주(주)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6	주○○○ 및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59	○○○주(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6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1	주케이디세코(舊 주신명비엔에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의결 안건	262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의 금융투자업 경영 인가안
			263	○○○주(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4	○○○주(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5	○○○주(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6	○○○주(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09년9월16일	제15차		267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8	○○○㈜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69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승인안
			270	㈜○○○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정안
		보고 안전	34	2008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접수내용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09년9월30일	제16차	의결 안전	271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72	블리스자산운용(주)의 대주주변경 승인안
			273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4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6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8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79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1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2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3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85	㈜블루스톤디앤아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86	㈜네오리소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87	㈜블루텀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88	㈜중앙바이오텍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89	㈜엔엔티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0	㈜제네시스엔알디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1	네스텍(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2	모빌링크텔레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93	(주)에신평제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4	(주)지한정보통신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5	케이앤에스홀딩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6	(주)대우솔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7	(주)메카포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98	○○○(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보고 안전	3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7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고
			38	200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접수내용 보고
09년10월14일	제17차	의결 안전	299	국제신탁(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300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0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
			302	한국에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03	회계감사 품질관리감리 업무규정 중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04	(주)리노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05	(주)네오리소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06	(주)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307	(주)코스모스피엘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08	(주)한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09	(주)무등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10	(주)한일상호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11	○○○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12	(주)대한은박지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39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기재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내용
			31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10월28일	제18차	의결 안건	31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09년11월11일	제19차	의결 안건	322	(가칭)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23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4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5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6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7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28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329	○○○(주) 감리조치 관련○○○회계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330	(주)비엔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40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개정결과 보고
			41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개정결과 보고
			42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개정결과 보고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5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제정결과 보고
			331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2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3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34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335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336	○○○ 등의 ○○○에 대한 출자승인안
			33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3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39	(주)케이엠에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0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11월25일	제20차	의결 안건	341	(주)해썬나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2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3	(주)카라반케이디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4	(주)플러스프로핏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5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6	티이씨(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7	(주)파켄오피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48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49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50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51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35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2	(주)○○○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36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7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68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09년12월9일	제21차	의결 안건	369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70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71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372	○○○의 금융투자업 변경 변경인가 및 ○○○와의 영업양수도 승인안
			373	○○○및 ○○○간 금융투자업 양수도 등에 대한 승인안
			374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7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7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7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7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7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8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 안건	384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에탁업무규정 및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
			38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8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387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388	(가칭)피에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89	(가칭)파인트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90	(가칭)캡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391	(가칭)새한자산신탁(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392	(주)신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393	(주)○○○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
			394	(주)○○○주식 및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09년12월23일	제22차		31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0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01	(주)○○○주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402	(주)대우솔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403	비전하이테크(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404	(주)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405	(주)유성티에스아이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406	(주)제네시스엔알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보고 안건	44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제정 결과 보고	
		45	IFRS하에서의 질의회신제도를 위한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 설치운 영방안	
		4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에 대한 개정결과 보고	
		4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개정결과 보 고	

2010년 증권선물위원회 목록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1월6일	제1차	의결 안건	1	(주)코람코자산신탁의 출자승인·대주주 요건심사대상 제외 인정 및 (가칭)(주)코람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	(주)유틸엑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3	(주)스타맥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4	(주)위너스인프라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5	(주)하이스마텍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6	(주)케이에스리소스의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	(주)신지소프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8	태광관광개발(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9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0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010년1월20일	제2차	의결 안건	11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2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3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4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5	(주)트라이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	(주)유틸엑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1	2009년도 하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	기업회계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 제정결과 보고
			3	2009년도 감사인 선임 및 지정결과 보고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2월3일	제3차	의결 안건	23	(주)○○○ 감리조치 관련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
			24	○○○(주)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
			25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6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7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8	○○○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보고 및 처리안
2010년2월24일	제4차	의결 안건	2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2	○○○(주), (주)○○○,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7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3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0	(주)○○○ 등 1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2	○○○ ELW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4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등에 대한 조치안
			44	(주)일공공일안경콘택트(舊 (주)엔블루와이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45	한국자산신탁(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46	(주)다울신탁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47	(가칭)(주)코람코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8	(가칭)파인트리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49	○○○및 ○○○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50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51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52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53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과의 합병 승인안
			54	○○○(주)과 ○○○(주)의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보고 안전	4	2009년도 불공정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2010년3월10일	제5차	의결 안전	55	아시아신탁(주)의 인가조건 변경승인안
			56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010년3월24일	제6차	의결 안전	57	(가칭)노무라이화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58	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변경승인안
			59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60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61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62	(주)중앙디자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3	(주)지오엠씨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4	(주)쓰리소프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5	(주)솔라엔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6	(주)모라리소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7	(주)카이시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8	(주)위너스인프라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69	(주)바이오하이테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7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7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7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80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8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82	(주)○○○의 분기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83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5	2010년도 감리실시 및 선정계획 보고
2010년4월13일	제7차	의결 안건	84	○○○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과의 영업양수도 승인안
			85	한국예탁결제원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86	한국거래소 정관 일부변경 승인안
			87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8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8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9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9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94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95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96	(주)재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97	코디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98	스맥스(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9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0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1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4월28일	제8차	의결 안건	102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0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0	○○○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11	(가칭)캡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12	(가칭)지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13	솔로몬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14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15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116	○○○의 금융투자업 폐지 및 해산 승인안
2010년5월20일	제9차	의결 안건	117	(가칭)제이피에셋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18	(가칭)피에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19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20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21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22	○○○의 ○○○ 대주주 변경 및 출자승인안
			123	○○○의 ○○○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124	○○○의 ○○○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
			12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26	2010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안
			127	2009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작성면제기업집단 인정안
			128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129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0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2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3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
		보고 안전	6	2009사업연도 중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
			7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품질관리감리 처리결과 보고
2010년5월26일	임시1차	의결 안전	134	네오세미테크(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10년6월1일	제10차	의결 안전	135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6	(주)정원엔시스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7	해원에스티(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8	(주)고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39	(주)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40	(주)퓨처인포넷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41	(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42	엘엔지특수전선(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4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6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47	삼원테크(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8	(주)오라바이오텍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49	(주)엘림에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0	(주)이룸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1	페이퍼코리아(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2	(주)케이에스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53	엠씨티티코어(주)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54	(주)태창파로스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10년6월16일	제11차	의결 안건	155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56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57	○○○의 금융투자업 변경예비인가안
			158	○○○의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 및 대주주 변경 승인안
			159	(가칭)한맥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60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주)의 인가조건 취소 승인안
			161	마이여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16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163	(주)코다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4	동산진흥(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5	(주)아이디엔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66	(주)이앤티 분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67	(주)모비딕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8	(주)이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69	(주)희훈디앤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170	(주)에버리소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010년6월30일	제12차	의결 안건	171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2	(주)○○○ 우선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176	(주)중앙디자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177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7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18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일자	회차	안전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7월14일	제13차	의결 안전	181	○○○의 ○○○ 관련 제한완화 승인안
			182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83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184	(가칭)지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185	(가칭)베스타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6	(가칭)(주)알에이케이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7	(가칭)아주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188	아시아신탁(주)의 대주주변경 승인안
			189	(주)단성일렉트론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90	(주)투미비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91	(주)제로원인터랙티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192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193	(주)지케이파워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4	(주)포네이처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5	(주)제네시스엔알디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6	(주)이루넷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7	(주)현대금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8	(주)쌈지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199	(주)에이스일렉트로닉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0	우리담배판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1	(주)에스피코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2	(주)아구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0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4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5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8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09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8	2010년도 상반기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2010년8월25일	제14차	의결 안건	210	금산법 제24조 운용규제 개선방안
			211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2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13	한국에탁결제원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214	○○○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15	○○○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216	○○○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안
			217	○○○의 금융투자업 폐지승인안
			218	키움증권(주)의 (가칭)키움자산운용(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및 (가칭)키움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
			219	(가칭)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의 금융투자업 경영 인가안
			220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21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22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3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4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5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6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8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29	(주)○○○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30	삼원테크(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31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232	(가칭)베스타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233	(가칭)(주)알에이케이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안

일자	회차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2010년9월8일 2010년9월17일	제15차	의결 안건	234	○○○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235	○○○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 인가안
			23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237	㈜포네이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238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39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0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1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2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3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4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5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6	㈜○○○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7	○○○(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248	㈜세라텍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49	오피스(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0	㈜폴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1	에이스하이텍(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2	㈜서광건설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3	태창기업(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4	㈜단성일렉트론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255	㈜유비프리스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56	㈜진성티이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257	㈜삼성수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58	㈜○○○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59	정우개발(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60	㈜유퍼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일자	회사	안건 유형	번호	제 목
			135	(주)하이텍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61	(주)000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62	스멕스(주)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신우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치의 일 부취소안
			263	(주)중앙오션(舊 (주)메가바이온)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안
			264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5	(주)전산텍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6	(주)000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7	한국섬배(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268	(주)위지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
			269	(주)000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보고 안건	9	주총 참석요구 불응한 감사인 징계요청 처리보고

5. 서민금융정책 추진 현황 및 추진 실적

6.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및 대출·보증 등 추진 실적

① (서민금융 공급 확대)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대출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

□ 미소금융(미소금융지점) : 제도권 금융 접근이 곤란한 서민에게 대출과 더불어 자활컨설팅을 지원

○ '09.12월 미소금융 출범이후 지점설립과 동시에 대출 및 컨설팅 지원, 제도개선 등 미소금융의 조기 착근에 주력

○ (지점설립) 전국적으로 총 68개 지점 설립 (기업재단 30, 은행재단 19개, 지역지점재단 19개)을 설립

○ (대출) '10년중 9.20 현재까지 총 7,493명에 460.9억원 대출

* 미소금융지점 289.4억원/3,273명(9.20기준), 기존 복지사업자 172억원 / 4,220명(8.31기준)

○ (활성화) 미소금융 방문자에 대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소액대출 활성화*, 자원봉사단을 통한 자활지원 강화, 공공기관 무상임대 추진 등을 통해 미소금융 활성화 노력

- 특히, 소득이 낮은데도 신용등급이 양호(5~6등급)하여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운 서민도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를 개선

(5, 6등급 해당자 약 1천만명 중에서 약 200만명이 대출대상에 포함)

* 운영자금의 영업기간요건 단축(2년→1년이상) 등·대출요건 완화
및 기업·은행계 재단의 특성화상품 도입(전통시장 상인, 용달
사업자 등 대상)

** 미소금융희망봉사단 : 8.31일 기준, 1,395명 모집(전문지식 577명,
재능나눔 51명, 일손지원 596명 등)

□ **햇살론(서민금융회사) : 정부 및 민간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조성
하여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역할을 복원**

○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근로자,
농림어업인 등에게

- 생계자금·운영자금·창업자금을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 유무에 따라 차등하여 대출

○ 정부와 서민금융회사* 공동으로 보증재원을 조성(2조원)하여
향후 5년간 10조원을 대출할 계획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 '10.7.26 출시 이후 9.20까지 97,734명에 총 8,940억원대출

□ **희망홀씨대출(은행)** : 은행이 서민전용대출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이행**

○ '09.3월부터 **16개 시중은행**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지원중(2천만원 이내, 평균금리 13%대)

○ '09.3월~'10.7월까지 36만7천명에게 총 2.4조원을 대출

○ 대출방식별 비중은 신용대출 8,234억원(33.9%),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대출 1조6,078억원(66.1%)로 보증부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

② 금리·수수료 부담 경감

□ **(카드수수료 인하)**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운 사업 여건하에 놓여 있는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 **(전통시장 가맹점)**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전통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상한을 2.0~2.2%에서 1.6~1.8%로 인하

○ **(중소 가맹점)** 전통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상한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

□ **(최고금리 인하)** 7.21, 대부업 등 전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법정상한을 5%p인하(연49%→연44%)

□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금리인하 등)**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대형 여전회사를 중심으로 대출금리 인하 및 취급수수료 폐지 시행

③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의 채무조정(원리금 감면·만기연장)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 '08년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비영리단체) 21만명,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 11만명 등 총 32만명이상에게 채무조정을 지원

□ (취업지원) 정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는 별도로 신용회복기금으로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하여 1인 채용시 1년간 최대 810만원(정부 540만원, 금융권 270만원) 지원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 유도(금년 7.1부터 시행 중)

- 7월이후 8.31까지 총 162명의 취업을 지원(신복위 126명, 신복기금 36명)

□ (전환대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서민들의 20%이상 고금리대출(대부업체·캐피탈 등)을 은행의 12%내외 대출로 전환토록 지원

- '08.12월 전환대출 시행 이후 금년 9.16까지 24,851명에 2,426억원 전환대출 지원

□ (신용회복프로그램 성실이행자 소액대출)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 이내에서 4%로 대출(향후 5년간 1,500억원)하여 성공적 재기를 지원

- * 신용회복기금 : 1,589명 49억원('10.6~8월)
- 신용회복위원회 : 11,792명 366억원('10.1~8월)

4 미소금융사업내역

- ☐ 미소금융사업은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전반을 총칭
 - (미소금융지점을 통한 대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
 - (복지사업자 지원을 통한 대출)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복지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수혜자에게 저리로 대출


7. 가장 최근 조사한 사금융이용 실태조사서 결과 및 향후 조사계획

☐ 가장 최근 조사한 사금융이용 실태조사서 결과

- 붙임과 같이 사금융이용 실태조사서를 첨부함

☐ 향후 조사계획

- 금융위-금감원은 매 반기별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대부행위 등을 포함한 사금융이용 실태조사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재정경제부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참고자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생 산 일	2006. 12. 27	생 산 부 서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담당과장	박영춘(02-2150-2370)	담 당 자	이상규(02-2150-2372)

제 목 : 제 1 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 정부는 2006.12.27(수) 09:3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 : 경제부총리,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동 협의회는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및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 관리·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장관회의(12.19)에서 구성·운영기로 결정

□ 금번 협의회에서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침을 확정하였음

○ 장관급 협의회는 대부업 정책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보고하기 위하여 매분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동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재경부 차관보 주재)를 두고, 부처별 실행과제의 선정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실무협의회 산하에 과제별 T/F를 설치하여 부처소 관별 이행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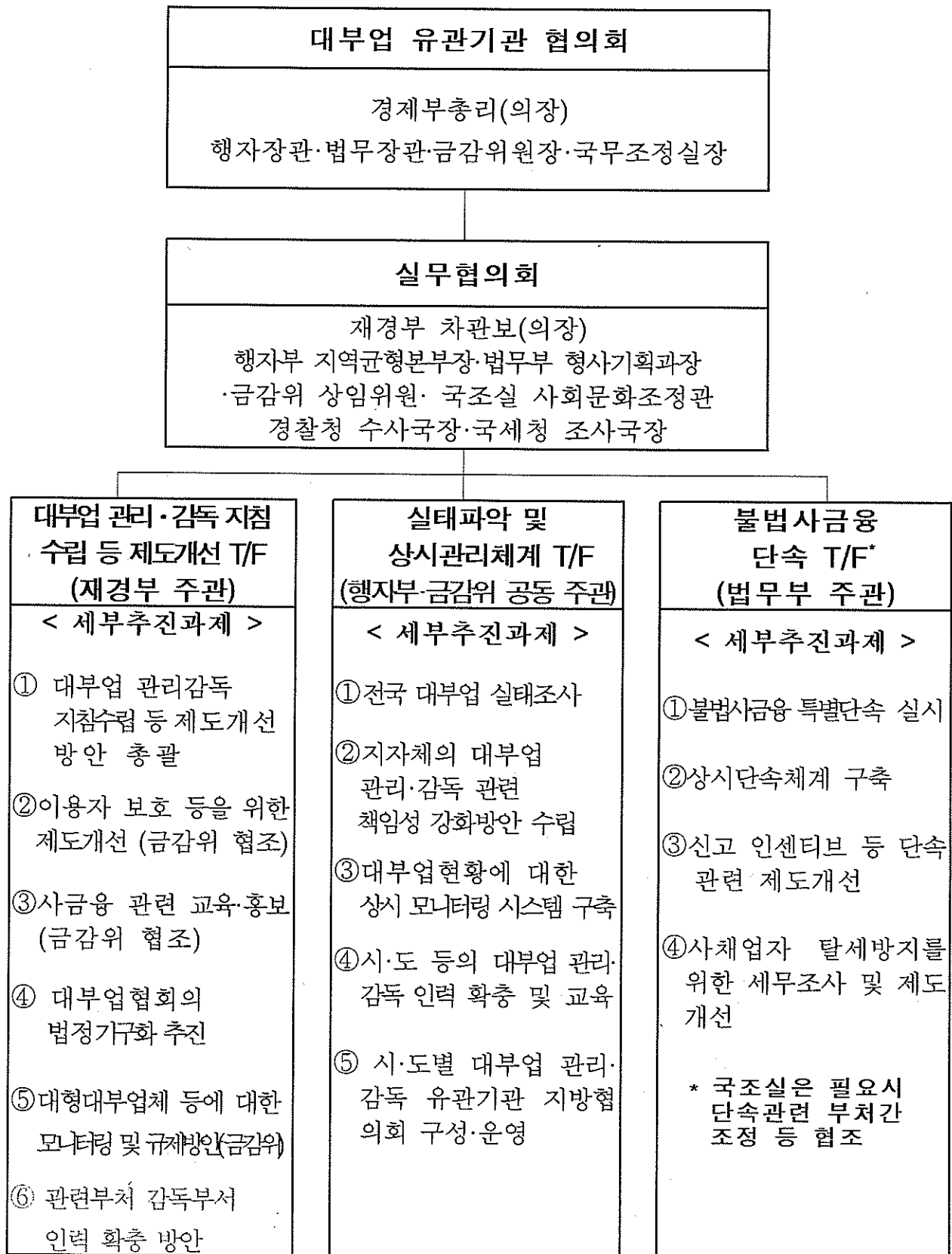
*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등 제도개선 T/F (재경부),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체계 T/F (행자부·금감위 공동), 불법사금융 단속(법무부)


○ 시·도의 원활한 행정협의 및 협력강화를 위해 시·도별로도 대부업 관리·감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를 구성·운영기로 함

- 아울러 07년 중 추진할 부처별 제도개선 사항 및 실행 사항을 확정하였음
 -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07년 1~3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 1월은 사전홍보와 더불어 탐문, 광고분석 신고센터 접수사례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3월 기간 동안 집중 단속 실시
 - 제경부는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홍보 방안,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음
 - 행자부·금감위 공동주관으로 07년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부업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금감위는 서민금융 119 등을 중심으로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 활동 강화해 나가는 한편,
 - 특히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법무부 주관 하에 검찰·경찰·금감원·국세청·정통부·행자부 등 단속기관간 체계적인 협조체제 구축
- 대부업 관리·감독은 서민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준법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고리채·불법추심·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참 고>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안)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정부
	보도일시	2007.6.5(화) 15:00 부터	
생 산 일	2007.6.5(화)	생산부서	금융정책국 보험제도와 경제정책국 복지경제과
담당과장	박영춘 과장(2150-2370) 이재영 과장(2150-2180)	담 당 자	김연준 사무관(2150-2372)
			박은숙 사무관(2150-2184)

제 목 :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2007.6.5(화) 15:0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장관, 금감위원장, 행자부 제2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참고1)

※ 동 협의회는 '06.12.19 대부업 관리·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성·운영키로 결정하였으며, 12.27 제1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협의회에서는 ①대부업 제도개선, ②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③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한 ④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주요 논의결과〉

① (최고이자율 인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을 70%→60%로 인하하되,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실행이자율을 결정

②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지자체가 관리·감독시 업무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제정을 추진 (☞참고2)

-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법·절차와 함께, 판례·단속사례·유권해석 등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침의 유용성과 이해도를 제고

③ (상시모니터링) '07년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 (☞참고3)

* DB 구축은 행자부가, 자료의 검토·분석은 금감위가 담당

- 감독당국에 대한 대부업체의 정기적인 업무보고 의무 부과
- DB로 구축된 정보와 자료는 재경부·금감위(원)·행자부 등 정책부서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불법사금융 단속)·국세청(세원관리)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
 - 국세청은 대부업 DB를 활용, 대부업자에 대한 상시세적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계획
-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등록여부 검색 서비스 제공을 추진

④ (대형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 중소형 업체의 경우 반기보고, 대형대부업체(자산 70억원 이상)의 경우 분기보고와 함께 보고서 내용을 세분화* (☞참고4)

※ 대형대부업체 비중(대부잔액의 83%), 대부규모(업체당 811억원)

-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금액, 담보인정비율, 금융기관 차입금,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내역, 대출채권 양도내역 등
- 회사분할, 법인화 기피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특수관계인의 자산을 포함하여 70억원이 넘는 경우, ②개인·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대형업체에 준하여 모니터링

⑤ (실태조사) 결산시기에 맞추어 실태조사를 정례화

- 반기별 결산시기(3월, 9월)를 기준으로, 매년 4월, 10월중 2차례 실태조사

* 은행법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12.31일을 결산일로 하고,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공고

⑥ (상시단속체계)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화·음성화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 경찰이 현장단속을 전담하고, 검찰은 불법 사금융 전담검사가 경찰 수사지휘 및 송치 후 처리 전담, 중형유도에 주력

* 필요시 금년 하반기 중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재설정

- 제1차 단속시 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2명)·국무총리 표창(5명)을 수여하는 한편, 향후 단속의 공로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⑦ (허위·과장광고 규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이자율·대출 조건 등을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의 방식·문구 등을 규제하는 한편,

-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도 직접 단속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

- 대부업법 개정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조사 이후에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 (☞참고5)

- ⑧ (인력·조직 보강) 대부업 관리·감독과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인력의 확충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결정

- 무엇보다 지자체의 대부업 담당인력을 총 71명 증원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

<지자체별 인력 증원 기준(행자부 안)>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증원인력 (명)	4	2	2	5	6	2	2	19	2	4	3	5	4	2	7	2	71

※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수가 70개에 미달되어 금번에 증원되지 않은 지자체도 향후 70개 초과시 추가적으로 인력을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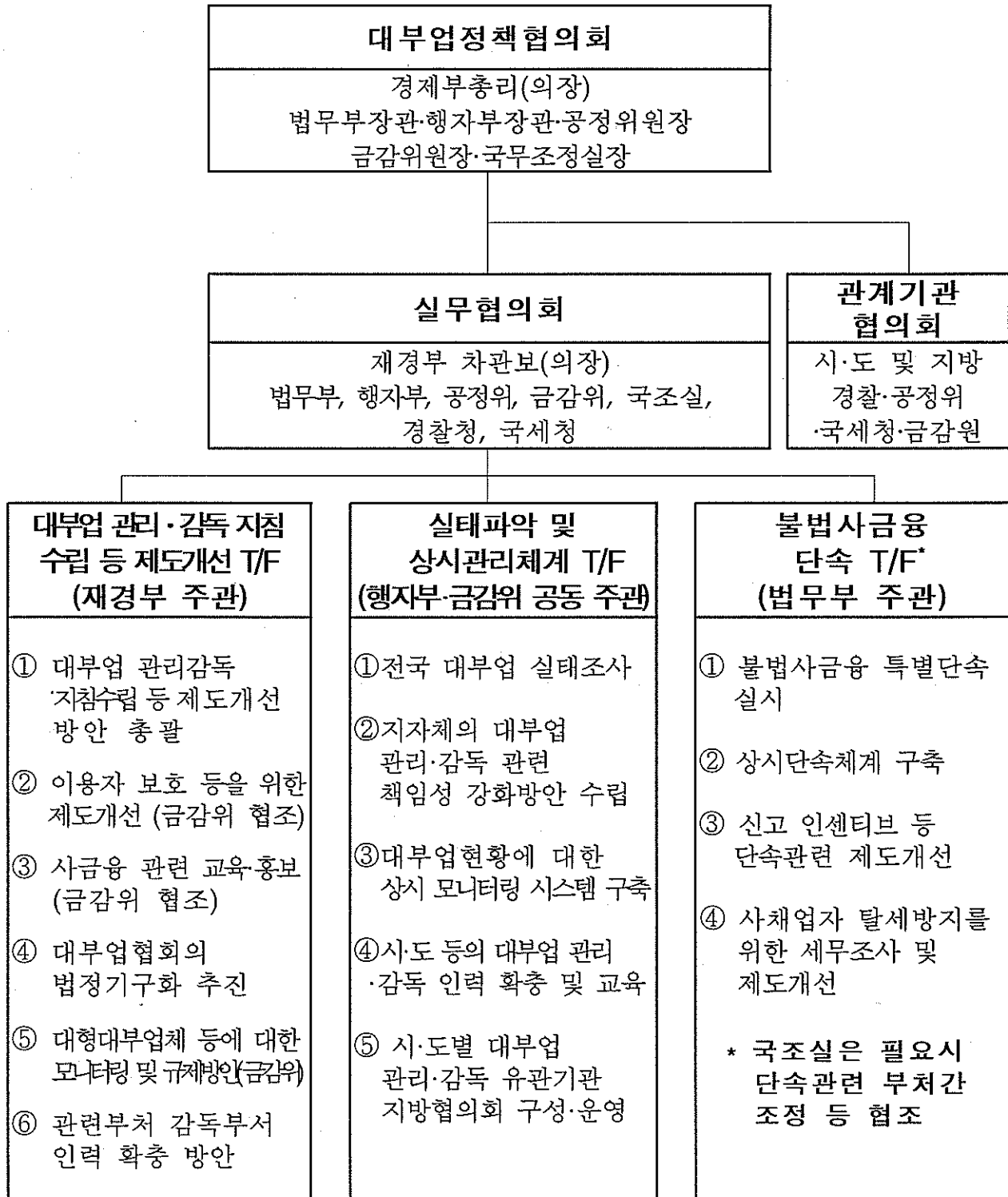
- 법률 소관부처인 재경부에 1개 과를 신설하는 한편, 행자부·금감위에 담당인력을 각 1명씩 증원기로 함
 - 이자제한법 시행 전까지 경찰청의 단속전담 인력 증원도 추진
- ⑨ (법률구제지원) 이자제한법 시행(6.30)시 이자제한법 관련 법정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 법무부 중심으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저소득 서민층의 법률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참고6)

10 (금융소외계층 지원)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이자율 인하로 인하여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 계층(25만명 추가지원)에 대하여 사용목적별로 적절한 금융 기회를 제공 (☞참고 7)

- 재정자금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지원 강화
- 하반기 발족예정인 각종 공익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 의료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장기교육비 대출제도, 의료비 대출제도 및 소액보험(Micro - insurance) 제도 도입
 - 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제도를 통한 창업 등 자활지원
- * 공익기금 : 사회투자재단(7월중설립예정), 휴면에금관리재단(6월이후 설립예정), 사회공헌기금(9월이후 설립예정)

〈참고 1〉

대부업정책협의회 구성현황



《참고2》

대부업 관리 · 감독지침(안) 주요내용

1. | 대부업의 개념 |

①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② 판례에 따른 “업”의 의미

-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
(대판 94. 4. 28. 93다54842 판결 등)
- 다만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것인바,
 -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가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방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즉, ① 영리의 목적(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② 동종행위를 반복하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③ 영업의 의사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함 (영업의사 객관적 인식가능성)

2. | **대부업 등록** |

가. 등록대상 여부 판단(법 제2조, 제3조)

☐ 등록대상이 되는 '대부업'의 정의

- 금전의 대부는 물론 어음할인, 전당포,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해석상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 받은 대출모집인(재경부 보험41207-323)
- 다만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출모집인은 등록대상에 포함

나. 대부업체 상호선택시 주의사항(법 제3조)

☞ 위반시 제재내용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이하의 벌금

☐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령은 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여신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되므로 대부업체는 물론 등록을 수리하는 지자체 담당자도 유의할 필요

★ (법개정 추진중) 대부업자 명칭에 “대부업” 명시 (대부중개만 하는 경우는 “대부중개” 명시)

3. | 대부계약 체결 前 단계 |

가. 대부광고·게시(법 제9조)

☞ 위반시 제재내용 : 과태료 5백~2천만원, 영업정지

- ☐ 이자율, 등록번호 등 대부 표시·광고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사항**은 이용자가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표기

★ (법개정 추진중) 광고의 문안·방식 등을 이용자가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안·방식 관련사항은 재경부 장관이 정함

- ☐ 광고내용에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 (권고사항)

* 예시 : 서울시 대부업 등록 제000호

** 사례 : 부동산 담보대출 가족소유 부동산[비밀보장]

(인감증명 위조 등을 통해 가족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 (법개정 추진중) 이자율·대부조건 등과 관련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광고 및 불법을 유도·조장하는 광고 금지

나. 명의대여 등의 금지(법 제9조)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 대부업법상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 법 위반에 해당

- 명의를 대여한 등록 대부업자는 명의대여 금지 위반, 명의를 차용한 무등록 업자는 대부업 등록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 예시 : 무등록업자 甲이 등록업자 乙의 명의를 빌려 대부계약을 체결

- ☐ 명의대여 여부의 판단은 '계산의 주체' 및 '계약의 당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4. | **대부계약 체결** |

☞ 위반시 제재내용 : 과태료 5백~2천만원, 영업정지

가. 계약서 교부·보관의무(법 제6조)

- ☐ 대부계약 체결시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1부는 대부업자가 보관(2년간)**
- ☐ 대부금액, 대부업자의 명칭, 부대비용 등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금지

나. 대부조건 설명의무(법 제9조①)

-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등 **중요사항을 설명**
 -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보관 **권고사항**

다. 과잉대부 금지(법 제7조)

☞ 위반시 제재내용 : 영업정지

- ☐ 과잉대부란 **차주의 소득 및 재산수준 등을 고려할 때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로서 대부업법은 이를 금지
 - 변제능력은 이자지급은 물론 원금상환 능력도 포함, 과잉대부의 판단시점은 개별 계약 체결시를 기준
 - 과잉의 판단대상은 대부금액은 물론 대부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이며, 이자율은 법 제8조(이자율의 제한)에서 별도 규율

5. | 이자율 제한(법 제8조) |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가. 이자율의 최고 상한

□ 대부업자는 연66%를 초과하는 이자수취 금지

- 사례금·수수료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
- 다만 담보권설정비용(법원에 지급하는 실비) 및 신용정보업자*에게 지불하는 신용조회비용은 이자간주 대상에서 제외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나. 선이자·선수수수료 공제

□ 대출금을 지급할 때 선이자, 선수수수료 등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은 이자율 한도 초과여부 계산시 원금에서 제외

- 대부계약 체결후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

[사례] 대부업자 갑은 금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 5만원, 수수료 명목 5만원을 공제한 90만원만 지급, 1달후 원금 및 이자로 총 105만원을 수취

<이자율 계산> 이자율(%) = 이자 / 원금 × 100

- 원금 : 최초 지급받은 90만원
- 이자 : 15만원(1달후 지급한 105만원 - 최초 지급받은 90만원)
- 1개월 이자율 = 15만원 / 90만원 × 100 = 16.7%
- 연 이자율 = 1개월 이자율 × 12 = 200%

다. 이자제한법과의 관계

- 대부업법상 이자율의 제한은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고, 이자제한법*은 그 밖의 모든 대부계약에 적용

* 법 연 40%, 시행령 연 30% (07.6.30 시행)

-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모두 적용
 - 연30% 초과 이자계약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가 되고, 연66% 초과이자 수취시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 ★ (법개정 추진중) 무등록업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30%)을 적용

라.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의 성립시기

- 1회라도 이자율의 최고상한(연66%)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때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성립
 - 계약기간 전체를 통산, 수취이자가 이자율의 최고상한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법화하지 못함

[법제처 유권해석]

- ☞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도 연이자율 100분의 6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

6.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법 제10조)

가. 적용대상

☐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또는 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

☞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여전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중복 적용

나. 추심관련 금지행위

☐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위반시 제재내용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관련 사례 >

- ▶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 ▶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아이들 등·하교길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 ▶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시키는 인쇄물·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충분한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권고사항)

□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 관련 사례 > —

- ▶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 채무자에게는 채무금액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속여 채권 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 위반시 제재내용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6월이하 영업정지

— < 관련 사례 > —

- ▶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 ▶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

□ 말·글·영상·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방문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 관련 사례 > —

- ▶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등 부적절한 시간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부적절한 시간 : 21:00 ~ 08:00)
 - * 다만, 야간근무 등으로 일반인과 수면시간대가 다른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조정 필요
- ▶ 필요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전화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

7. | **중개의 제한(법 제11조의2)** |

☞ 위반시 제재내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 중개를 의뢰한 금융이용자를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연결하는 행위 금지

- 일반인이라도 (중개)대부업자에게 금융이용자 소개를 의뢰하는 경우 등록대상이 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를 받는 행위 금지

-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에 대한 대가를 수취

8. | **감독·검사 및 제재** |

☐ 대부업 등록을 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제재권한을 보유

- 대부업체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통해 감독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

- 다른 지자체*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요청 가능

* 감독대상 대부업체가 다른 지자체의 관할에 속하는 영업소를 둔 경우

** 2개이상 시·도지사에게 등록, 월평균 대부잔액 10억원 초과, 금융기관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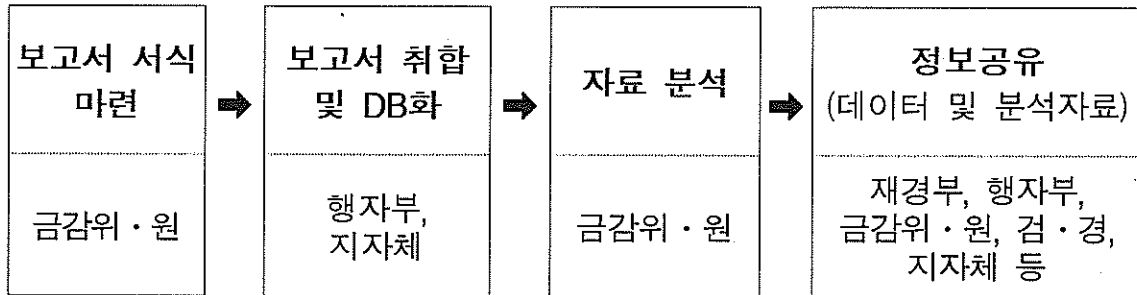
- 감독상 필요한 명령(시정명령 포함), 영업정지·취소, 과태료 부과권

☐ 제재절차는 대부업법 및 행정절차법 준수

《참고3》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행자부·금감위)

< 추진 단계별 업무 분장 >



1. 업무보고서 서식 마련 [금감위·원 주관]

□ 업무보고서 내용 및 보고주기

☞ 대부업체의 자산규모에 따라 보고내용과 주기를 차등화

- 개인, 소규모법인, 반기별로 상호, 등록번호 등 일반 현황과 대출금, 차입금 규모 등 기본 영업현황을 보고
- 대형업체(자산7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 등)는, 분기별로 기본 영업현황 외에 대출내역 등 상세 재무자료를 보고
- 보고시한은 분·반기 종료후 1월 이내

□ 업무보고서 서식 마련

- 지자체 및 대부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보고서 서식을 마련('07.6월)

※ 대형업체의 기준, 업무보고서 서식, 보고주기 등을 추후 대부업 법령에 반영

2. 대부업 현황관리 및 DB화 [지자체 주관]

- ☐ 지자체는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DB화
 - 지자체별로 대부업체 일반 현황 외에 감독·검사 및 행정 조치 결과 등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최대한 DB로 구축
- ☐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 ※ 현재, 70개 이상의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에 대한 전담인력 보강 추진중(행자부)

3. 업무보고서 취합 및 DB화 [행자부 주관]

- ☐ 지자체가 취합한 영업현황 자료를 종합하여 DB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07년말)
 - 행자부, 금감위·원, 지자체, 대부업협회 등으로 전산 시스템 구축 T/F 구성·운영
- ☐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등록여부 검색 서비스 제공

4. 자료 분석 [금감위·원 주관]

- ☐ 행자부가 취합한 DB를 토대로 대부업체 일반현황* 분석
 - * 대부업체수, 대부잔액, 대부수익 등
- ☐ 주택담보대출 취급 등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실시

5. 관계 부처간 정보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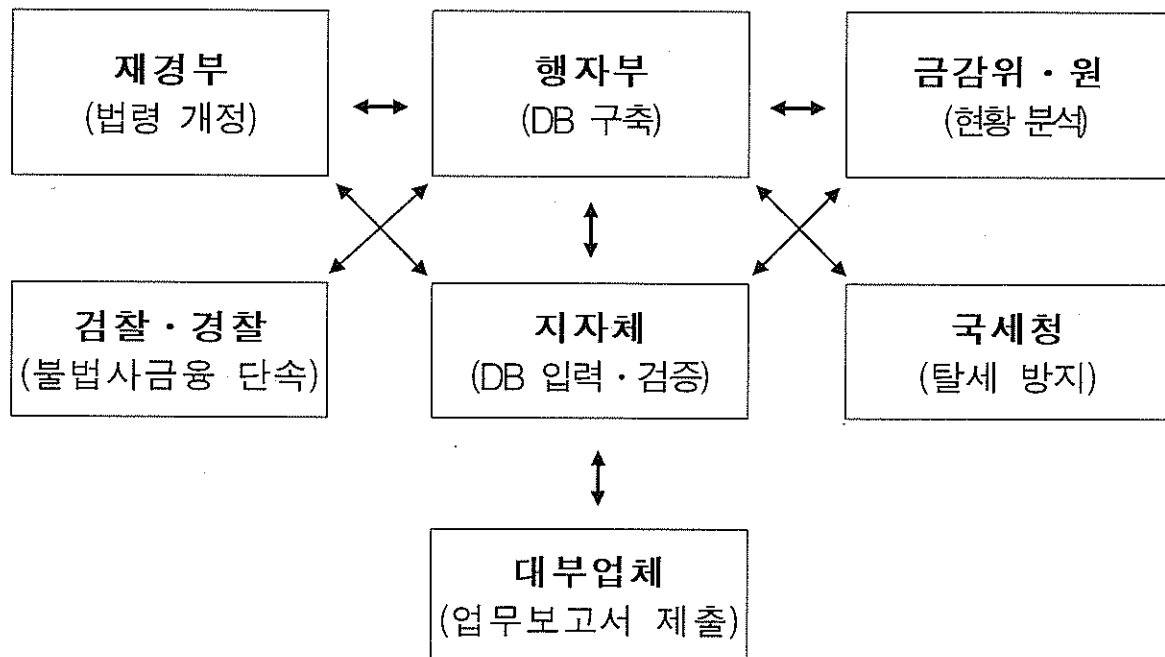
□ 정보공유 필요성

-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정보를 재경부, 행자부, 법무부, 금감위·원, 검찰·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공유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

□ 정보공유 방안

- 행자부에 수집된 대부업체 자료(DB) 공유
 - 관계 부처는 ID를 부여받아 전산시스템에 수시 접근
- 금감위·원은 행자부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대부업정책 협의회」에 분기별로 보고

〈정보 공유 체계〉



《참고4》

대형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방안(금감위)

- ☐ 자산 70억원 이상 외감대상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중·소형 업체(반기보고)보다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단축(분기보고)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세분화****

* '06말 현재 140개(총 대부업체수 17,210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금액, 담보인정비율, 금융회사 차입금,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내역, 대출채권 양도내역 등

- ☐ 회사분할이나 개인 또는 유한회사로 등록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 강구

- 자산 70억원 미만의 회사라도 특수관계인*의 자산 포함시 70억원 이상인 경우 외감대상 업체에 준하여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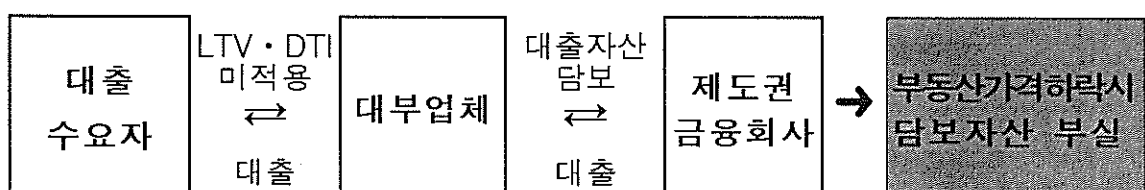
* 계열회사, 주요주주, 임원 등(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

- 개인 또는 유한회사 등의 경우에도 자산(개인의 경우 평균 대출 금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 ☐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해 대부업체 지원과 관련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

- 대부업체가 국내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 담보대출 취급 등을 확대할 경우 대부업체의 대출관련 리스크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을 차단

<대부업체 대출에 따른 은행 등의 부실우려(예시)>



《참고5》

허위·과장광고 조사 및 향후 계획 (공정위)

1. 조사현황

- ☐ 5월 15일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중
 - 조사대상 업체는 그동안의 모니터링(4월부터 실시) 결과를 토대로, 허위·과장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
 - * 모니터링은 인터넷, TV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는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
- ☐ 조사사항은 이자율 등의 대부조건, 대부받을 수 있는 자격, 대부서비스의 내용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임

2. 향후계획

- ☐ 6월초까지 현장조사를 완료
- ☐ 필요한 경우 보완조사를 거쳐 부당 광고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조치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참고6》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제 지원(법무부)

1. 현 황

- 이자제한법 시행(6.30)시 이자제한법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리사채 이용자의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로 자력으로는 법률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

⇒ 저소득층 법률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활용

2.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

- (대 상)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채권자와의 법적 분쟁 관련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서 월 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 등 저소득층 국민을 구조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 고리사채 이용자를 별도의 구조대상자로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필요시 별도 지정 방안 검토

- (적용범위) 고리사채 이용 후 채권자측의 지급 요구에 대한 거절, 최고이자율 초과부분을 이미 지급한 경우의 반환청구 등 이자제한법 관련 채권자와의 모든 법적분쟁에 대한 구조 가능
- 고리사채를 이용한 저소득층 국민이 법률구조공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참고7〉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2007. 6. 5(火)

재정경제부

I.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 정부재정 및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자금수요별(교육·의료·자활 등)로 적절한 금융기회 마련

① (재정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지원 강화

② (공익기금) 하반기 발족예정인 각종 공익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

- 의료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장기교육비 대출제도, 의료비 대출제도 및 소액보험(Micro - insurance) 제도 도입
- 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제도를 통한 창업 등 자활지원

* 공익기금 : 사회투자재단(7월중설립예정), 휴면예금관리재단(6월이후 설립예정), 사회공헌기금(9월이후 설립예정)

1. 【재정사업】 학자금 대출확대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① (교육) 중·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폭 확대(07.2학기부터)

* 대학생 이상, 연 50만명, 2조원 규모

교육수요에 대한 보호확대

소득기준	이자경감폭	혜택범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2% 할인(이공계 무이자) → 무이자	연 17만명
· 대출자 70% (수급자·차상위 제외)	국고채 이자율 → 2% 할인	연 18만명
· 대출자 30%	국고채 이자율 유지	연 15만명

② (의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저소득층 범위 확대
(최저생계비(4인기준 121만원) 130% → 150%, 1만명 추가)

* 위기상황의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06.3월 도입)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2회 지원

2. [공익기금 등을 활용한 민간사업] 의료비·교육비 대출제도 도입 및 소액대출·소액보험제도 도입

① (장기 교육비 대출제도)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환시점을 소득발생시점과 연계한 교육비 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

- 본인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시점의 소득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적용
- 대출금 상환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대출제도와 과세·4대보험 징수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장기교육비 대출제도(안)

	장기교육비 대출제도(안)
지원대상	· 저소득 고등학생으로 연간 약 9만명
대출한도	· 연 200만원, 총 600만원
상환기간	· 본인 소득이 일정 소득을 초과한 시점부터 일정기간
이자납부	· 상환시점에 함께 납부(후불 이자)
대출금리	· 상환당시의 소득기준 - 저소득자 : 무이자·저리, 고소득자 : 적정 금리 부여
투자규모	· 연 1,800억원 수준으로 공익기금 등 활용

② (의료비 대출제도 도입)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긴급한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비 대출제도를 도입

* 중저소득층은 건강이 회복되면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 제도를 통한 지원제도를 마련

-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중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계층 (약10만명)에 대해 단기간·적정금리로 의료비를 대출

의료수요에 대한 보호확대

· 현 행	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30%)	
· 개선안	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30% → 150%)	의료비 대출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

③ 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 제도 활성화

- 제도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신용 계층의 창업·자활을 지원

* 그동안 국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은 규모가 작아 (4개기관, 총 247억원, 94억원 지원)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한계

- 다양한 기관들의 창업·취업지원서비스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창업·자활성공률을 제고

자활·창업 수요에 대한 보호확대

기존 무보증 소액대출 (민간 4개기관) 총 94억원 지원	⇒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 (사회투자재단 등) 1,500억원 규모 지원
---------------------------------------	---	---

4 소액보험(Micro-insurance) 제도 신규 도입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및 교육보험 등 민영소액 보험상품 개발하여 미래의 급전수요에 대비
 - 보험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빈곤층에게는 보험료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수요발생시 보험금 지급
- * 연간 가구소득 3,600만원 이상 가구 가입률은 90~93%인 반면 1,200만원 미만 가구 가입률은 35%에 불과(보험개발원)
-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험 설계사 이외 판매망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Ⅱ. 예상지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① 지원규모(안) : 약 25만명 추가보호 (약 0.6조원 추가투자)

	현 행		추진계획(안)	
	지원규모	소요재원	지원규모	소요재원
① 긴급복지지원	3.5만명	재정 340억원	1만명	정부예산 100억원
② 장기교육비 대출	-	-	9만명	공익기금 등 1,800억원
③ 의료비대출제도	-	-	10만명	공익기금 등 2,000억원
④ 무보증소액대출	493건	민간 94억원	7,500건	공익기금 등 1,500억원
⑤ 소액보험	-	-	5만명	공익기금 등 1,000억원
계			25만명	추가정부예산 : 100억원 공익기금 등 : 6,400억원

* 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자경감(35만명)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

② 재원조달방안


① 학자금대출(08년 468억원) 및 긴급복지지원 확대(약100억원)
: 정부 재정에서 추가지원

② 교육비 대출, 의료비 대출, 무보증소액대출 및 소액보험 :
공익기금* 등 활용(약 0.6조원)

* 사회투자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등

Ⅲ. 향후 일정

- ① 재정사업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내용 확대
 - 학자금 대출제도 확대는 예산에 既반영되어 있고 07년 2학기부터 실시할 예정
 -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복지부 예산에 반영 추진중 (08년예산에 반영 목표)
- ② 공익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은 사회투자재단 등이 설립 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빠른 시일내 지원 실시
 - (사회투자재단) 7월중 설립예정
 - (휴면예금등관리재단) 6월 임시국회에서 휴면예금특별법이 마무리 되는 대로 특별법 또는 민법에 의해 설립
 - (사회공헌기금) 하반기중 발족 예정(9월 이후)
- ③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가 촉진될 수 있도록 기부문화 활성화방안 마련
 - 6월중 공청회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9월 정기 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
 -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확대 및 공익기금 등 기부대상 단체의 투명성 제고

 재정경제부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보도일시	2007.11.5(월) 15:00 부터	
생 산 일	2007.11.5(월)	생산부서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담당과장	우상현 과장(2150-9650)	담당자	이석란 사무관(2150-9653)

제 목: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2007.11.5(월) 15:0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장관, 행자부 제2차관, 금감위부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참고1)

※ 동 협의회는 '06.12.19 대부업 관리·감독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성·운영기로 결정하였으며, 12.27일 제1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07.6.5일 제2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협의회에서는 ①대부업 제도개선, ②실태조사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③불법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시장동향을 조사해 보고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마련

〈주요 논의결과〉

①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및 대부업체의 모범기준(Best Practice) 역할을 할 지침을 제정

○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지침안을 확정하여, 11월중 지자체 등에 배포 계획

○ 향후, 지침안은 운영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항, 추가적인 법령 해석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

② (상시모니터링) '07년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

* 행자부·지자체가 정기적(대형대부업체는 분기, 중소형업체나 개인은 반기)으로 대부업 DB를 구축하고 금감위가 자료의 검토·분석

- 제2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중('07.10~11)
 - 2차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2월중 결과 발표
- DB로 구축된 정보와 자료는 재경부·금감위(원)·행자부 등 정책부서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불법사금융 단속)·국세청(세원관리)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
 - 국세청은 대부업 DB를 활용,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등록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갈 계획
-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등록여부 검색 서비스 제공을 추진

③ (상시단속체제) 이자제한법 시행 및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화·음성화 우려가 큰 상황

-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 내년에도 필요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④ (홍보강화) 이자제한 내용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관련 홍보를 강화

*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금감원, 10.8~23, 865명) 결과 이자제한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44.5%, 이자제한법 시행이후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 이용자는 13.1%

- 서민금융안내 책자, 이자제한법 해설책자 등을 제작하여 11월중 지자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예정

- 특히,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제를 강화할 예정(☞참고2)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법률내용과 구조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

5 (서민금융공급 확대)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저신용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안금융 제공

- 서민맞춤대출서비스(이지론), 대출 환승론* 등 기존 서민금융 대출제도에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

* 대부업체 이용자중 상환실적이 양호한 자에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연이율 35%~48%)로 전환해주는 대출상품
(실적 : 5.21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632건, 28.7억원을 대출)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서민들의 급전수요에 따른 적절한 금융기회를 제공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07.2학기부터)

** 07.10월 현재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최저생계비 130% → 150%, 1만가구 추가)하는 긴급복지법시행령 개정중(08.1월 시행)

-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계층에게는 다양한 대안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자생력을 제고

- 내년 1/4분기까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마이크로 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 창업·취업지원 대출, 교육·의료비 지원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등

- 사회투자재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교육 등 사회투자 인프라 구축사업에 특화하는 재단으로 설립 추진중(11월 설립 예정)

- 11월말 이후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운영재단이 설립되면 영세서민을 위한 소액보험지원 가능

《참고 1》

대부업정책협의회 구성현황

대부업정책협의회

경제부총리(의장)
법무부장관·행자부장관·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국무조정실장

실무협의회

재정부 차관보(의장)
법무부, 행자부, 공정위, 금감위, 국조실,
경찰청, 국세청

관계기관
협의회

시·도 및 지방
경찰·공정위
·국세청·금감원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수립 등 제도개선 T/F
(재정부 주관)

- ①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수립 등 제도개선 방안 총괄
- ②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금감위 협조)
- ③ 사금융 관련 교육·홍보 (금감위 협조)
- ④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추진
- ⑤ 대형대부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방안(금감위)
- ⑥ 관련부처 감독부서 인력 확충 방안

실태파악 및
상시관리체계 T/F
(행자부·금감위 공동 주관)

- ①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 ②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책임성 강화방안 수립
- ③ 대부업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④ 시·도 등의 대부업 관리·감독 인력 확충 및 교육
- ⑤ 시·도별 대부업 관리·감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 구성·운영

불법사금융
단속 T/F*
(법무부 주관)

- 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 ② 상시단속체계 구축
 - ③ 신고 인센티브 등 단속관련 제도개선
 - ④ 사채업자 탈세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및 제도개선
- * 국조실은 필요시 단속관련 부처간 조정 등 협조

《참고2》

불법 사금융 피해자 법률구제 지원(법무부)

1. 현 황

- 이자제한법 시행(6.30)으로 이자제한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고리사채 이용자의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로 자력으로 법률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

⇒ 저소득층 법률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활용

2. 법률구조공단의 이자제한법 관련 법률구조

【 법률구조대상자(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

- ▶ 월평균 수입 240만원 이하의 국민/농·어·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영세담배소매인/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등

【 주요 법률상담 사례 】

-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설명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 지급한 돈의 반환청구나 원본에 충당이 가능함을 설명
▶ 이자제한법 시행 전에 약정한 이율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중 초과부분은 무효임을 설명
▶ 이자제한법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

3. 향후 추진계획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지속적 추진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구조 등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공단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홍보 강화('07. 10.~11.)

- 공단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 국정홍보처 전광판 활용 홍보, 안내 리플렛(10만부) 제작·배포,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 관련 서식 게시
- 유관기관과 협조,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법률구조 홍보 강화

제4차 대부업정책협의회 결과

-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회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1.29(화) 16:00~17:00, 장소 : 재경부 7층 대회의실

1. 주요 논의결과

①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 지방의 행정력, 경찰력, 세무서 등을 통해 대부업체를 관리·감독·단속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 현재 시·도별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

②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를 마련

③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 다음 실태조사시에는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대부시장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도 포함
- 대부업체 이용자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신용도, 연체정도, 사금융 이용 용도 등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 대안금융을 제공할 대상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금융애로도 발굴

4] 관계법령 개정 노력

- 대부업법, 유사수신규제법 등 대부업 및 유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2. 향후 추진계획

- ☐ 대부업자와 사금융이용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08.2~3월)
- ☐ 상반기중 지자체 인력충원을 마무리
- ☐ 상반기중 대부업법·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제5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개최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6.3(화)

1. 주요 논의결과

① 등록 대부업체와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그 동안 사금융 시장 규모는 각 연구소 등에서 18~45조원으로 추산
- 그러나 동 추정치는 90년대 통계치, 등록 대부업체 조사 등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정책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 이에 전국민과 사금융 이용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시행

- 사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현황 자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조사결과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전 국민(20세 이상 3,500만명)의 5.4%인 약 189만명인 것으로 추정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5조원으로 추정됨

-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이고,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

② 경찰과 검찰은 작년에 이어 금년 3~4월중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 '08.1~4월중 1,185명을 단속

- 하반기에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가하여 실시하되
 -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
-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적발해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공정위에서는 그 동안 대부업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07.6~12)하여 시정권고·명령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

③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대부업체 DB구축, 지자체 대부업 전담인력 보강*, 시·도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지속 추진중

*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인력을 '07~'08.5월중 26명까지 확보

** 16개 시도중 12개 시도 개최

-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정보의 DB화를 완료**(‘08.2)
- 향후 관계부처가 단속·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국민이 대부업체 여부 확인시 동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④ 대부업법 개정(‘08.3 시행)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되었음

* 2개 이상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경우,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 이에따라, 금감원의 관련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현재 지자체를 통해 검사대상 대부업자 현황을 파악중이며, 직권검사 대상 업체에게 설명회를 통해 검사내용 등을 안내
-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권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계획임

⑤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추진

- ① 국민연금 기납부액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②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통한 창업·취업지원, 신용대출, ③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연체채무 재조정 및 고금리 채무 환승 지원, ④ ‘신용회복지원중’ 기록말소, ⑤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
- 이를 위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도 논의

2. 향후 추진계획

- ①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회 6~7월중 최종방안 발표)
- ② 대부업체DB를 활용한 상시관리시스템 및 사이트 운영에 대한 실무자 회의 개최 ('08.6~7월중)
- ③ 단속기관은 서로간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제6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9.9(화) 15:00~16:00, 장소 : 금융위 5층 회의실(513호)

1. 주요 논의결과

- ① 대부업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대부업법 입법예고 기간 중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필요
- ② 제4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추진 계획 및 지자체 파견 전문검사역 활동성과
 - 금감원의 지자체 파견 전문검사역 활동성과 보고
-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 ④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지자체 인력 확대가 어렵고 아직까지 대부업에 대한 시도의 관심이 미흡한 상황
 - 대부업 상시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협의

⑤ 대부업 정책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

- 대부업 정책 협의회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협의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만큼 연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필요
- 우선, 실무단계에서 지자체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선정한 후 정책 협의회에 상정할 필요

2.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으로 사금융에 의한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각 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 대부업체 DB를 활용한 상시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실무자 회의 개최('08.9월중)

제7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7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8.12.15(월) 15:00~16:00, 장소 : 금융위 5층 회의실(513호)

1. 주요 논의결과

①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지자체 연말 포상 실시

- 대부업 관리·감독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언론사·금융위 공동으로 지자체장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 포상 실시
- 「서민금융대상」을 「서민금융 우수 감독 대상」으로 조정하고, 포상대상에 금감원 등을 추가할 필요

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④ 대부업상시관리시스템의 구축

- 대부업체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등록대부업체 DB화 등 대부업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⑤ 제4차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결과

- '08년 하반기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2. 향후 추진계획

- 「서민금융대상」을 「서민금융 우수 감독 대상」으로 조정하고, 포상대상에 금감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 사회적으로 사금융에 의한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각 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

제8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3.30(월) 17:00~17:40, 장소 : 금융위 부위원장실

1. 주요 논의결과

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대부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대부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대부계약시 제출받는 소득증명서류의 범위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②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 대부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추진실적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③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검·경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및 단속실적, 국세청의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정비·세무조사 실시 및 실적

④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⑤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 대부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

⑥ 사이버금융감시반 운영 현황

- 사이버금융감시반의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2. 향후 추진계획

-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 ☐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제9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회의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제9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4.24(금) 08:00~09:40, 장소 : 금융위 20층 식당 별실

1. 주요 내용

① 금융권을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강화 대책

- ① 저신용자에게 생활자금 대출 지원
- ② 보유재산 담보부 생계비 저리융자
- ③ 은행 「저신용자 전용대출 상품」 활성화

② 불법 사금융 단속강화 및 사후구제 확대

가. 유관기관 합동의 불법 사금융행위 총력 단속 실시

- ① 불법 대부업 상시 집중단속 강화
- ②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지급제도 신설
- ③ 금융감독기관과 수사기관간 공조강화(금감원·경찰청 협약식 체결)
- ④ 불법·혐의정보 수사기관 즉각 제보
- ⑤ 세금탈루 대부업자 세무조사 및 연중 사업자 등록정비
- ⑥ 대부업자 탈세신고세터 개설

나.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강화

- ① 등록 대부업 DB 인터넷 공개
- ② 무등록업체 광고활동 모니터링 및 수사기관 정기 통보
- ③ 금감원 직권검사 강화 및 지자체에 현장점검 및 상담 지원
- ④ 대부거래 및 보증 표준약관 제정·보급
- ⑤ 업계 자율규제 강화

다.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 ① 개인회생·파산절차 무료지원
- ②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한 무료소송지원

③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8.7)전 홍보

나. 서민금융정책 및 피해예방 홍보

- ① 서민금융안내 책자 및 리플렛 발간
- ② 서민금융포털사이트 활용도 제고
- ③ 방송광고 실시

2. 주요 논의결과

□ 법무부

-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
- 불법 대부행위를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체계의 강화가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 (On-line 홍보) 사채 등에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즉각 검색 되도록 하는 등 인터넷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피해구제 방법도 인터넷 포털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약관) 대부거래 및 대부거래 표준약관 인터넷 계약의 경우 대부이용자에게 계약서 송부를 의무화하여 채무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함

□ 경찰청

-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을 통해 사회안정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불법대부행위가 내밀하게 이루어져 단속이 어려움
-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신고활성화를 기할 것임
- 별도의 신고피해전화를 개설하기 보다는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존의 신고전화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국세청

- 세금탈루 혐의 대부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홈페이지의 탈세 신고방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별도로 구분 신설할 것임

□ 금융감독원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고리사채를 치면 바로 「서민금융 119」로 연결되도록 조치하고, Cyber 홍보 등을 지속추진할 것임

□ 금융위

- 신설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향후 지자체와 연결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할 것임
-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각 부처는
 - 올 8월 시행예정인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 대부업 관리·감독, 엄정한 단속과 처벌, 피해자 사후구제 등 일련의 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 상호공조를 공고히 하여 주시기 바람

3. 향후 추진계획

- 금일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국무회의('09.4.28)에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보고

제10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0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10.15(목)

□ 각 부처의 국정감사 일정으로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모두 전체 안건에 대해 “이견 없음”으로 합의

주요내용

①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추진실적

② 대부업 관련제도 개선 추진동향

- 대부업 실태조사 시기를 업무보고서 작성 시기에 맞춰 현재 3월, 9월에서 6월, 12월로 변경

③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추진 실적

④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 상한제한 적용 사례 및 대부업법의 실무 적용 관련 해석사항

⑤ 대부업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 소재불명 대부업자 일제 정비 추진 및 대부광고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생활정보지와 협조체제 구축

제11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0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09.12.30(수)

□ 각 부처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재부·법무부·행안부·공정위 모두 전체 안건에 대해 “이견 없음”으로 합의

주요내용

① 서민금융감독대상 포상계획(안)

○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실시

②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연 60% → 연 50%)

○ 대부업 등록요건에 고정사업장 요건 추가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채권추심 관련폭행·상해죄를 저지른 자의 대부업 고용제한 등

③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④ 사금융 종합애로지원센터 개소

○ 경찰청(수사), 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 합동으로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실시

제12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0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10.4.28(수)

- 각 부처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가 '서민금융사 보증부 대출'의 원활한 추진, 등록대부업체 검색시스템 정착 및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대부업체 음성화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주요내용

①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②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5%p 인하
(연 60% → 연 50%)

제13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 결과

◇ 대부업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3차 대부업정책협의회」의 회의결과임

- 일 시 : '10.7.23(금)

□ 각 부처 위원들의 회의참석이 어려워 서면회의를 개최

주요내용

- ①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및 계획
- ②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현황
- ③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행위 근절방안
 -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단속 강화
 - 대부업계의 자율 시정노력
 - 관련 기관별 피해예방 홍보 강화
- ④ 제7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8. 권익위가 권고한 신용정보관리체계 개선안 처리결과

- 권익위는 개인 연체기록 보존기간 단축, 금융기관 간 공유되는 연체금액 기준 상향조정 등 현행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대하여 금융위에 개선을 권고('09.8월)
 - 권익위 권고내용 중 일부*는 개정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반영하여 시행('09.10.2)하고 있음
 - *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 단축' : 7년→ 5년
 - ** 채무자에게 대출연체시 연체기록 관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고지
- 다만, 그 외의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학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T/F 논의 등 결과
 - 신용정보 관리체계의 순기능을 감안할 때, 신용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제고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하기로 함

<참고> 권익위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안 검토내용

권고 내용	검토 의견
연체정보 보존기간 단축 상환 후 5년→ 3년	(추후 검토) 신용평가의 정확도제고를 위하여 최소 5년간 이력정보 활용 필요 ※ 신바젤협약도 고객의 부도를 추정시 최소5년 이상의 이력정보 활용을 권고
미상환채무 해제기간 단축 연체 후7년 → 5년	(추후 검토) 미국도 미상환 연체정보의 경우 7년후 해제 또한,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본인노력으로 해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해제사유를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
연체정보 등록금액 상향조정 50만원 초과→ 200만원 초과	(추후 검토) 연체정보 관리기준 상향 조정은 채무자의 부채상환 의지 악화를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승인 기준의 보수화를 초래할 우려. 특히, 신용카드, 보증보험 채권 등 소액채권 리스크 관리에 곤란
연체 후 5~10일 경과된 단기 연체채무 수집금지(3개월 이상 장기연체채무만 등록 및 유통)	(추후 검토) 단기연체정보는 연체자 미연 방지 및 신용평가 정확성 제고에 중요 요소이며 특히 현금서비스등 단기대출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정보만으로는 사전 리스크 관리가 곤란한 측면
파산면책정보 보존기간 단축 면책결정 후 7년 → 3년	(일부 수용) 면책결정 후 5년으로 단축
채무자에게 대출연체시 연체 기록 관리로 불이익 받을 수 있음을 사전고지	(취지 수용) 금융기관은 현재 채무회수 관리를 위해서 대출 또는 대출 연체시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관리 됨을 고지하고 있음

9. 대부업 금리인하 조사결과 자료

□ 7.21일 최고이자율 인하('10.7.21, 연 49% → 연 44%) 이후 대부분 대부업체가 수취 금리를 연 44%에 근접하게 인하

* 이전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연 48% 이상의 이자 수취

○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인하된 최고이자율(44%)보다
보다 큰 폭으로 인하한 경우도 있음

* 러시앤캐쉬 등 일부 대형대부업체는 연 40% 이하로 인하

□ 금번 최고이자율 인하가 대부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 '10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10.12월 예정)

10. 햇살론 사업실적 현황

- A. 대출실적(대출수, 대출액, 1인당평균금액)
- B. 각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
- C. 연소득 규모별 대출 비중
- D. 보증부 대출 비율

☐ 대출실적

- 7.26. 햇살론 대출개시 후 9.15.까지 취급실적은 총 89,890건 약 8,160억원
- 1인당 평균금액
 - 생계자금 : 약 7,791천원
 - 운영자금 : 약 11,358천원
 - 창업자금 : 약 14,792천원

☐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

(‘10. 9. 15. 기준)

신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	0.5	1.4	2.3	6.6	16.6	30.5	28.7	10.9	2.2	0.5

□ 연소득 규모별 대출 비중

소득구간	2천만원 미만	2~3천만원	3~4천만원	4~5천만원	5~6천만원	6천만원 초과
% (건수비중)	73.6	17.5	5.4	1.9	0.8	0.6

□ 보증부 대출 비율

- 햇살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보증하는 보증부 서민대출임
- 보증비율 85%인 부분보증제도로 운영하여 서민금융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신심사능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음

11. 햇살론 사업 참여 금융기관 현황

- 각 금융기관별 대출 실적

□ 금융회사별 실적

('10.9.15. 기준 / 단위 : 건수, 억원)

구분	계	상 호 금 융						저축 은행
		소계	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 금고	
대출금	8,164	7,733	3,087	133	27	1,584	2,901	431
대출 건수	89,890	84,597	35,171	1,497	335	17,023	30,571	5,293

12.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현황 관련

- A. 2008~현재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실적,소액금융지원,취업지원,신용관리 교육실적
- B. 지역별 지원 실적
- C.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중 금융기관 잉여금의 법적 성격, 발생경위, 금융기관 배분현황, 배분당시 잉여금 총액

A. 2008~현재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실적,소액금융지원,취업지원 실적

□ 2010.8월말 현재,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실적

- 채무조정은 114,142건, 5,397억원 지원
- 전환대출은 24,174건, 2,354억원 지원
- 기금 소액대출은 1,589명, 49억원 지원

(단위:명,억원)

구 분		2009년 말까지	2010년 (1.1~8.31)	합 계
채무조정	인원	76,040	38,102	114,142
	금액	3,277	2,120	5,397
전환대출	인원	14,936	9,238	24,174
	금액	1,431	923	2,354
기 금*	인원	-	1,589	1,589
	금액	-	49	49

* 기금 소액대출 업무개시일 : 2010.6.1

□ 취업지원 실적(2010.8.31현재)

(단위 : 건수)

구 분	상 담	등 록	알 선	채 용
구 직	4,833	246	1,715	36
구 인	134	7	-	-

* 업무개시일 : 2010. 7. 1

B.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명, 억원)

구분	채무조정		전환대출		소액대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23,533	1,129	7,309	737	330	11
경기	26,638	1,259	5,545	547	380	12
인천	7,140	338	1,543	142	119	4
부산	9,161	467	1,893	175	144	3.7
강원	3,881	176	517	45	35	1
광주	3,319	147	717	67	49	2
대구	4,681	242	1,164	111	71	2
울산	2,402	114	440	45	46	1
대전	2,873	139	836	77	45	1
충남	2,996	139	733	71	50	2
충북	4,495	209	461	43	40	1
전남	4,974	223	385	38	42	1
전북	3,316	149	326	30	64	2
경남	5,336	243	1,320	132	100	3
경북	8,002	364	820	79	64	2
제주	1,395	59	165	15	10	0.3
합계	114,142	5,397	24,174	2,354	1,589	49

**C.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중 금융기관 잉여금의 법적 성격,
발생경위,금융기관 배분현황,배분당시 잉여금 총액**

□ 금융기관 잉여금의 법적성격 및 발생경위

- 2007.12.21 개정된 공사법 부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기금 잔여재산을 정부(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금융회사의 출연비율 (86% : 14%)에 따라 배분

□ 기금 잔여재산 배분현황

- 2009년말까지 정부에 6조 6,500억원, 금융회사에 1조 877억원 등 총 7조 7,377억원을 반환
- 2010년에는 정부에 1조 500억원을, 금융회사에 1,718억원을 반환할 계획

<기금 잔여재산 반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기 반 환				예 정	합 계
	07년	08년	09년	소계	10년	
정 부	30,000	30,000	6,500	66,500	10,500	77,000
금융회사	-	9,814	1,063	10,877	1,718	12,595
계	30,000	39,814	7,563	77,377	12,218	89,595

□ 배분당시 기금 잔여재산 총액

- 2008년 기금 정기재계산 실시결과 기금의 자산은 12.6조원으로 부채 3.5조원을 제외할 경우 청산시 약 9.1조원의 잉여가 예상

13. 미소금융 관련

A. 사업내역

B. 재단 및 지역재단 현황 - 대표자 약력 각 지역별 자본금 현황

14. 미소금융 사업실적 관련(출범이후 매 분기별)

A. 총 대출건수, 총 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B. 대출종류별 대출건수, 총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C. 각 신용등급별 대출건수, 총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D. 각 지점별 대출건수, 총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15. 업종별 대출종류별 미소금융 대출실적(출범이후 매 분기별)

- 총 대출건수, 총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16. 미소금융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 관련

A. 각 프랜차이즈 회사별 대출실행 건수, 대출규모

B. 2인 이상 공동창업자 대출 비중

17. 미소금융 대출자 중 폐업현황(출범이후 매 년도별)

13.A. '10.9.10 현재, 미소금융 관련 사업내역

□ 미소금융사업은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전반을 총칭

○ (미소금융지점을 통한 대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

- (복지사업자 지원을 통한 대출)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복지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수혜자에게 저리로 대출

13.B. '10.9.10 현재, 미소금융 관련 재단 및 지역재단 현황 - 대표자 약력, 각 지역별 자본금 현황

□ 재단 및 지역재단 현황(대표자 약력 포함)

구분	재단명	대표자	약력
기업재단	삼성미소금융(7)	이순동	前 삼성사회봉사단 단장
	현대차미소금융(6)	정태영	현대캐피탈/카드 사장
	LG미소금융(4)	조명재	前 LG생활건강대표이사
	포스코미소금융(3)	최종태	(주)포스코 사장
	SK미소금융(8)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
	롯데미소금융(2)	박상훈	롯데카드 대표이사
	소계	30	
은행재단	하나미소금융(2)	김정태	하나은행 은행장
	KB미소금융(3)	민병덕	KB은행 은행장
	우리미소금융(5)	이종휘	우리은행 은행장
	IBK미소금융(4)	윤용로	IBK은행 은행장
	신한미소금융(5)	이백순	신한은행 은행장
	소계	19	
지역지점 재단	서울서초구지점	김영수	성결대 사회과학부 교수
	충북청주지점	박노성	교직40년6개월, 교육위원
	서울은평구지점	박운석	중용자산연구원장
	광주서구지점	김재철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
	대구서구지점	박성동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원춘천지점	박의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부산중구지점	정진욱	중기청단장
	제주지점	이봉헌	前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대전동구지점	이홍근	前 하나은행 지점장
	경기화성지점	장동호	前 한국씨티은행 본부장
	대구중구지점	김석동	한국산업은행 성서본부장
	충남천안지점	정낙철	미소금융 충남천안지점 대표
	경기성남지점	김영준	前 기업은행이사(부행장)
	서울관악구지점	남상만	한국음식업중앙회장
	경북안동지점	박병섭	(주)광진 사장
	경기구리지점	이영련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부산연제구지점	이정우	KNN(부산경남방송) 감사

	경남거제지점	오정림	부산서구시니어클럽실장
	전북전주지점	진대권	삼양종금
	소계	19	
합계		68	

□ 지역지점재단

- 미소금융지점(지역지점재단)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사업비(대출재원)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지점 사무실로 활용토록 권장하는 등
운영비 절감에 노력 중

< 연간 지역지점재단 예산 >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사업비	500,000	- 대출재원
운영비	13,350	- 자산취득비
	36,000	- 자원봉사자(3명) 실비보상 성격의 급여
	25,500	- 기타경비
계	575,000	

* 지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초년도에 한하며, 향후 감액할 예정

14. '10.9.10 현재, 미소금융 사업실적 관련(출범이후 매 분기별)

A. 총 대출건수, 총 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단위: 명, 천원, %)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10일까지)	계
총 대출건수	647	725	1,546	2,918
총 대출액	4,690,400	6,210,700	14,583,070	25,484,170
연체액*	-	-	6,493	6,493
연체율*	-	-	0.9%	0.9%

* 연체액과 연체율은 월말단위로 산출하며, 8월 31일자 기준

B. 대출종류별 대출건수, 총대출액

(단위: 명, 천원)

구분		프랜 차이즈	창업 자금	운영 자금	시설 개선	무등록 사업자	기업은행 독자상품
1/4분기	대출건수	0	86	197	89	275	-
	대출액	0	1,342,000	1,330,100	742,900	1,275,400	-
2/4분기	대출건수	2	147	218	101	257	-
	대출액	70,000	2,663,500	1,486,000	809,600	1,181,600	-

3/4분기 (9월10 일까지)	대출건수	5	172	338	167	281	583
	대출액	250,000	3,434,000	2,648,600	1,428,700	1,339,800	5,481,970
계	대출건수	7	405	753	357	813	583
	대출액	320,000	7,439,500	5,464,700	2,981,200	3,796,800	5,481,970

※ 연체율의 경우 전체 납입대상자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대출종류별에 따른 연체율 산출은 산출이 어려움

C. 각 신용등급별 대출건수, 총대출액

(단위: 명, 천원)

구분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차상위 계층	무등급
1/4분기	대출건수	332	202	100	12	-	1
	대출액	2,352,100	1,460,300	797,000	76,000	-	5,000
2/4분기	대출건수	340	236	107	33	-	9
	대출액	2,996,500	1,971,600	834,200	334,900	-	73,500
3/4분기 (9월10일 까지)	대출건수	623	4461	162	114	166	20
	대출액	5,798,070	4,478,300	1,557,600	939,000	1,570,100	240,000
계	대출건수	1,295	899	369	159	166	30
	대출액	11,146,670	7,910,200	3,188,800	1,349,900	1,570,100	318,500

※ 연체율의 경우 전체 납입대상자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신용등급에 따른 연체율은 산출이 어려움

D. 각 지점별 대출건수, 총대출액

(단위 : 명, 천 원)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9월10일까지)	
	대출인원	대출금액	대출인원	대출금액	대출인원	대출금액
하나미소금융재단	31	180,000	61	431,500	87	747,000
신한미소금융재단	65	448,400	57	483,600	101	1,062,500
우리미소금융재단	45	373,600	60	558,600	56	582,800
IBK미소금융재단	17	132,000	15	139,000	78	554,000
KB미소금융재단	75	499,600	66	634,000	140	1,205,300
삼성미소금융재단	56	515,800	75	711,100	175	1,598,700
현대차미소금융재단	39	213,000	32	174,500	211	2,257,100
포스코미소금융재단	15	100,000	45	452,000	108	995,000
롯데미소금융재단	10	75,000	23	265,000	51	467,000
LG미소금융재단	26	263,000	44	470,400	93	1,072,500
SK미소금융재단	24	250,500	79	634,000	206	2,149,770
지역지점(19개)	244	1,639,500	168	1,257,000	240	1,891,400
총 계	647	4,690,400	725	6,210,700	1,546	14,583,070

15. '10.9.10 현재, 업종별 대출종류별 미소금융 대출실적

☐ 총 대출건수, 총대출액

(단위: 천원)

구분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화물운송업		제조업		건설(시설)업		인쇄출판업		무등록사업자		기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609	6,602,500	969	8,097,200	344	3,146,500	237	2,396,270	95	669,800	48	354,800	25	202,500	249	1,198,700	342	2,815,900	2,918	25,484,170

* 서비스업: 미용, 교육, 여가활동 등의 각종 서비스업

16. '10.9.10 현재, 미소금융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 관련

A. 각 프랜차이즈 회사별 대출 실행 건수, 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대출실행건수	대출금액
수홍부대찌개(부대찌개)	1	30
마인케이스(핸드폰 악세사리)	6	290
합 계	7	320

B. 2인 이상 공동창업자 대출 비중 : 없음

17. '10.9.10 현재, 미소금융 대출자 중 폐업현황(출범이후 매 년도별) 사례는 없습니다.

18. 민간배드뱅크 사업 현황(자료 출처 : 유암코)
- 민간배드뱅크의 부실채권 인수현황(채권은행별, 채권종류별)

□ 유암코 2010년중 부실채권 인수 실적

(단위: 억원)

연도	분기	매각은행	자산구성	OPB*	투자액
2010	1Q	기업은행	담보부 채권	2,143	
2010	1Q	하나은행	담보부 채권+기업회생, 청산파산 채권	2,080	
2010	1Q	부산은행	담보부 채권	556	
소계				4,779	2,427
2010	2Q	신한은행	담보부 채권+기업회생, 청산파산 채권	3,967	
2010	2Q	국민은행		1,151	
2010	2Q	농협		695	
2010	2Q	부산은행	담보부 채권+기업회생, 청산파산 채권	825	
2010	2Q	제주은행		57	
2010	2Q	6개 주주**	기업회생채권	3,285	
소계				9,980	5,260
2010	3Q	농협	담보부 채권+기업회생, 청산파산 채권	1,717	
2010	3Q	국민은행***	담보부 채권+기업회생, 청산파산 채권	605	
2010	3Q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회생채권	4,019	
2010	3Q	부산은행***	담보부 채권	341	
소계				6,682	3,816
합계				21,441	11,503

* OPB : Outstanding Principal Balance(미상환원금잔액)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 인수업무 진행중

19.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현황

-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위해 지난해 산은법 개정('09.4월)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
 - 산업은행 자산분할을 통해 산은지주사 및 정책금융공사를 설립('09.10월)하는 등 하드웨어 개편을 마무리
- 현 시점에서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매각가치 제고 등을 위해 산은의 재무·수익구조 개선 등 체질개선을 추진
 - 세부 민영화 일정은 이러한 체질 개선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외 시장여건, 매각가치 극대화 등의 관점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

20.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현황

(2002년 이후 매 년도별)

☐ 공적자금 I

(2002년 ~ 2010.7월말 현재, 단위 :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8,437	439	440	1,071	499	523	3	1	-	11,413

☐ 공적자금 II

(2009.6월 ~ 2010.7월말 현재, 단위 : 억원)

2009	2010.7	합 계
446	23,869	24,315

21. 2006년 이후 취업제한대상자의 재취업 관련

- A. 재취업자 현황 : 성명, 퇴임당시 소속부서와 직위, 재취업 직장명·직책 명시
- B.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사본, 첨부한 의견서 사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지서
- C. 금융위에 접수된 취업승인 요청서 사본, 이에 첨부한 의견서 사본

☐ A. '06년 이후 취업제한대상기관 재취업자

이승우	부위원장	08.3월	LS네트웍스 고문(08.3월)
이철환	금융정보분석원장	08.3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08.4월)
양돈선	부이사관	09.3월	한국자금중개 전무(09.4월)
한승우	서기관	09.5월	신영증권 상무이사(09.5월)
박영춘	부이사관	09.9월	SK C&C 상무(09.10월)
김영과	금융정보분석원장	09.11월	한국증권금융사장(09.11월)

☐ B.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사본, 첨부한 의견서 사본, 공직자윤리위원회 통지서(별도제출)

☐ C. 금융위에 접수된 취업승인 요청서 등 : 해당사항 없음

22.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관련

- 2005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체납현황
- 결손처리한 체납과징금 현황

□ 2005년 이후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체납, 결손 처리 현황

(단위 : 건,백만원)

연도	부과건수	부과액	체납건수	체납액	결손처리 건수	결손처리액
'05년	58	4,567	5	320	-	-
'06년	29	10,082	1	1,223	-	-
'07년	50	9,557	12	3,785	-	-
'08년	43	8,803	16	3,702	-	-
'09년	86	10,693	53	8,137	-	-
'10년 8월말	46	5,162	34	3,458	-	-

※ 우리 위원회는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어, '05년 이후 부과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실시사례가 없음

23. 2007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 년도별 부과건수, 부과총액, 체납건수, 체납총액
- 부과일시, 당사자, 부과금액, 사건내용, 납부일시

□ 2007년 이후 부과한 과징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건수	부과총액	체납건수	체납총액
'07년	54	10,683	12	3,826
'08년	45	11,801	20	5,114
'09년	93	11,694	65	9,452
'10년 8월말	54	9,951	35	3,482

붙임 : 2007년 이후 과징금 부과 세부 현황 1부. 끝.

	부과일시	당사자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잔액	비고
1	2007-02-02	(주)에스엔이코프(주)넷시엔터테인먼트그룹	247,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08	2007-06-13	-	
2	2007-02-15	(주)큐론(주)하이테크	25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4-20	-	
3	2007-02-15	(주)코스모서엔터(인) 케이엔텍이브	25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4-25	-	
4	2007-02-15	(주)세고엔터테인먼트	245,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4-23	-	
5	2007-02-15	○○○(개인)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4-23	-	
6	2007-02-15	(주)티에스엠홀딩스(주)시스템네트웍스	12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4-21	2007-06-12	-	
7	2007-03-16	케이윌엔터테인먼트스튜디오(주)	50,000,000	어산친환경농업법 위반	2007-04-10	2007-03-27	-	
8	2007-03-19	(주)케이스트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3	2007-05-23	-	
9	2007-03-19	(주)카드콤	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5-23	2007-05-07	-	
10	2007-03-30	(주)시오텍	44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03	2007-06-04	-	
11	2007-04-02	알리안츠생명보험(주)	182,000,000	보험법 위반	2007-06-06	2007-06-07	-	
12	2007-04-13	큐텍스(주)	250,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6-17	2007-06-15	-	
13	2007-05-15	서울보증보험(주)	645,000,000	보험법 위반	2007-07-19	2007-07-19	-	
14	2007-05-28	(주)솔빛텔레콤	174,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07-31	-	
15	2007-05-28	(주)조이로프	9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11-21	-	
16	2007-05-28	(주)큐엔텍코리아	23,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08-01	-	
17	2007-05-28	(주)우리기술포	2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01	2007-08-01	-	
18	2007-06-22	롯데관광개발(주)	156,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6	2007-08-24	-	
19	2007-06-22	케이알신용(주)	7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6	2007-08-23	-	
20	2007-06-22	오스템임플란트(주)	148,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08-26	2007-08-27	-	
21	2007-08-27	(주)세한	359,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1-23	-	
22	2007-08-27	(주)삼화네트웍스	2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2-07	-	
23	2007-08-27	○○○(개인)	2,0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0,000,000	
24	2007-08-27	(주)나노연혁	5,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0-30	-	
25	2007-08-27	(주)모텔리언이엔티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50,000,000	
26	2007-08-27	(주)로라리소스	67,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0-30	-	
27	2007-08-27	(주)티에스엠홀딩스(주)시스템네트웍스	89,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8-01-09	-	
28	2007-08-27	한국창업투자(주)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0-31	2007-10-25	-	
29	2007-08-27	교보생명보험(주)	249,000,000	보험법 위반	2007-10-31	2007-10-30	-	
30	2007-09-11	(주)다유뱅크	244,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11-15	-	
31	2007-09-11	(주)솔트웍스	2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11-15	-	
32	2007-09-11	한국기술산업(주)	14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12-14	-	
33	2007-09-11	○○○(개인)	2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1-15	2007-12-20	-	
34	2007-10-12	(주)코아크로스(주)에커스	4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5	2007-12-17	-	
35	2007-10-12	○○○(개인)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5	2007-12-17	-	
36	2007-10-12	(주)유비스타	45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15	2007-12-17	-	
37	2007-10-25	(주)엔터원	23,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2007-12-27	-	
38	2007-10-25	(주)나노연혁	48,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2007-12-27	-	
39	2007-10-25	(주)티에스아이(주)정림이엔아이	324,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2008-07-29	-	
40	2007-10-25	○○○(개인)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16,000,000	
41	2007-10-25	○○○(개인)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7-12-29		20,000,000	
42	2007-11-12	(주)엘지이엔터테인먼트(주)마스터테크놀	560,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16		560,700,000	
43	2007-11-22	(주)케이스트	43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6	2008-01-28	-	
44	2007-11-22	○○○(개인)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6	2008-01-25	-	
45	2007-11-22	(주)엘지이엔터테인먼트(주)마스터테크놀	1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6		180,000,000	
46	2007-11-22	○○○(개인)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1-26		30,000,000	
47	2007-12-24	케이엔텍이브(주)	14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145,100,000	
48	2007-12-24	시큐리티코리아(주)	152,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152,400,000	
49	2007-12-24	산림전기(주)	316,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316,700,000	
50	2007-12-24	(주)삼화네트웍스	144,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2008-02-27	-	
51	2007-12-24	○○○(개인)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30,000,000	
52	2007-12-24	(주)한빛	325,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325,300,000	
53	2007-12-24	샘표식품(주)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2008-02-27	-	
54	2007-12-24	(주)한신디앤피	45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2-27	2008-07-09	-	
	2007년	54건 부과	10,683,600,000		42건 완납	12건 미납	3,826,200,000	
1	2008-02-22	우리은행	2,992,000,000	은행법 위반	2008-04-27	2008-04-24	-	
2	2008-03-28	(주)유니온	9,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2008-05-23	-	
3	2008-03-28	케이퍼코리아(주)	8,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2008-05-30	-	
4	2008-03-28	동진건설(주)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2008-06-02	-	
5	2008-03-28	대한손학지공업(주)	441,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441,700,000	
6	2008-03-28	○○○(개인)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01		16,000,000	
7	2008-04-24	○○○(개인)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8		40,000,000	
8	2008-04-24	동아회원권그룹(주)동아G&L	40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6-28	2008-06-10	-	
9	2008-05-26	(주)신지소프트	6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7-25	2008-10-31	-	
10	2008-06-13	(주)조이로프	318,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318,700,000	
11	2008-06-13	○○○(개인)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20,000,000	
12	2008-06-13	모텍스(주)	1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130,000,000	
13	2008-06-13	(주)셀리온	20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2008-08-12	-	
14	2008-06-13	(주)네오솔라(주)에이티브스	48,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2	2008-08-12	-	
15	2008-06-17	영진약품공업(주)	994,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18	2008-08-18	-	
16	2008-06-26	(주)노블투(주)영피오	72,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10-22	-	

	부과일시	당사자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잔액	비 고
17	2008-06-26	(주)씨엘종합공업	11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115,500,000	
18	2008-06-26	(주)큐리이스	10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19	2008-06-26	(주)알엑스넷(구 ㈜위디츠)	8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20	2008-06-26	제이엑스(주)	77,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21	2008-06-26	(주)나리원	4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22	2008-06-26	(주)파로스이앤아이	1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5	2008-08-25	-	
23	2008-06-30	(주)케이씨에너지	820,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8-29		820,800,000	
24	2008-07-24	현대피현세(주)	98,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09-29	2008-09-29	-	
25	2008-07-29	한국통신데이터(주)	49,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02		49,400,000	
26	2008-08-21	ㅇㅇㅇ(개인)	17,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7		17,500,000	
27	2008-08-21	ㅇㅇㅇ(개인)	10,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0-27	2008-10-23	-	
28	2008-09-17	메디에스엔피(주)(구. 엑트론)	13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1-21		133,800,000	
29	2008-09-17	(주)아이씨코퍼레이션	772,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1-21		772,900,000	
30	2008-09-17	ㅇㅇㅇ(개인)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1-21		20,000,000	
31	2008-09-17	한화손해보험(주)	5,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8-11-21	2008-11-20	-	
32	2008-10-23	(주)엘블루하이드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29	2009-04-07	-	
33	2008-10-23	(주)사인시스템	4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29		480,000,000	
34	2008-10-23	(주)백리텍	16,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29	2009-01-13	-	
35	2008-10-23	(주)로엔케이	61,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29		61,900,000	
36	2008-10-27	(주)이플렉스(구. 미스트라테크놀로지)	382,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31		382,800,000	
37	2008-10-27	넷시큐어테크놀로지(주)	103,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3-12	2009-03-16	-	
38	2008-10-27	네스텍(주)	532,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8-12-31	2008-12-31	-	
39	2008-11-07	(주)스카이뉴클	25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1-13	2009-01-13	-	
40	2008-11-11	(주)포이로스	973,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1-15		973,400,000	
41	2008-11-12	침안치제법인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1-16		50,000,000	
42	2008-12-18	(주)파로스이앤아이	4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24	2009-08-24	-	
43	2008-12-18	ㅇㅇㅇ(개인)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2-23		50,000,000	
44	2008-12-26	(주)유리시아알엔티	49,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3-04	2009-03-20	-	
45	2008-12-26	(주)트루엑스(구. 티티씨아이)	2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3-04		220,000,000	
	2008년	45건 부과	11,801,100,000		25건 완납	20건 미납	5,114,400,000	
1	2009-02-27	(주)뉴전미아티	78,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78,400,000	
2	2009-02-27	(주)에스타원아이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8	-	
3	2009-02-27	(주)온누리메어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30,000,000	
4	2009-02-27	(주)세빠나	40,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40,200,000	
5	2009-02-27	오펜스(주)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30,000,000	
6	2009-02-27	테스텍(주)	24,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4,500,000	
7	2009-02-27	한국슈넬제약(주)	1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4	-	
8	2009-02-27	(주)엘타이코로	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12,000,000	
9	2009-02-27	한국개발금융(주)	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04	2009-05-01	-	
10	2009-03-20	(주)아이씨넷	12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5-25		121,200,000	
11	2009-04-10	네스텍(주)	355,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15	2009-06-15	-	
12	2009-04-10	ㅇㅇㅇ(개인)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15		20,000,000	
13	2009-04-10	ㅇㅇㅇ(개인)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6-15	2009-06-12	-	
14	2009-05-06	(주)로크네오거구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10	2009-07-10	-	
15	2009-05-06	(주)인네트	598,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10		598,200,000	
16	2009-05-27	세협치제법인	8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31	2009-07-31	-	
17	2009-05-27	(주)사리랩	310,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31		310,500,000	
18	2009-05-27	(주)유니트테크놀로지스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31	2009-07-21	-	
19	2009-05-27	(주)모리소스	15,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7-31		15,800,000	
20	2009-05-28	(주)유리프	50,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50,400,000	
21	2009-05-28	(주)비엔알엔티프라이즈	4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44,000,000	
22	2009-05-28	(주)정주	4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44,000,000	
23	2009-05-28	(주)리노셀	4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7-31	-	
24	2009-05-28	(주)확진형어사	38,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7-31	-	
25	2009-05-28	(주)사이버엑스	3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34,000,000	
26	2009-05-28	(주)에듀인스	30,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8-19	-	
27	2009-05-28	(주)삼에스코리아	2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01	2009-07-31	-	
28	2009-06-05	정주상호지속은행	4,000,000	상호지속은행법 위반	2009-08-10	2009-08-10	-	
29	2009-06-05	한주상호지속은행	71,000,000	상호지속은행법 위반	2009-08-10	2009-08-11	-	
30	2009-06-18	교보생명(주)	22,000,000	보험업법 위반	2009-08-24	2009-08-18	-	
31	2009-06-24	(주)이씨엔컴퍼니	4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28	2009-08-28	-	
32	2009-06-25	(주)아이씨코퍼레이션	45,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31		45,500,000	
33	2009-06-25	대우전자부품(주)	141,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8-31		141,200,000	
34	2009-07-08	(주)서모텍	232,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11		232,200,000	
35	2009-07-08	(주)상보	97,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11		97,000,000	
36	2009-07-17	동양이앤피(주)	23,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1		23,700,000	
37	2009-07-17	(주)윈드스카이	147,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1		147,000,000	
38	2009-07-24	(주)대환온박지	3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8		34,200,000	
39	2009-07-24	(주)태리리소스	455,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8		455,200,000	
40	2009-07-24	(주)비엔알엔티프라이즈	63,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8		63,800,000	
41	2009-07-24	(주)이호커뮤니케이션	68,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09-28		68,300,000	
42	2009-07-24	(주)셀프랩(구. 에이치퀀바이오)	217,8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217,800,000	

	부과일시	담당자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잔액	비 고
43	2009-07-24	(주)연중공업	116,8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116,800,000	
44	2009-07-24	(주)트리아콤	79,7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79,700,000	
45	2009-07-24	(주)지흥디앤지	54,0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54,000,000	
46	2009-07-24	(주)엑스케이	51,7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51,700,000	
47	2009-07-24	(주)대우	50,2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50,200,000	
48	2009-07-24	(주)블루스톤디앤지	48,1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48,100,000	
49	2009-07-24	(주)도넷	24,4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24,400,000	
50	2009-07-24	(주)이원	20,0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20,000,000	
51	2009-07-24	(주)창원시스템	4,10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2009-09-28		4,100,000	
52	2009-07-30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	144,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10-05		144,000,000	
53	2009-09-03	ㅇㅇㅇ(개인)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1-09		50,000,000	
54	2009-09-03	ㅇㅇㅇ(개인)	5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1-09		50,000,000	
55	2009-09-03	(주)파도이앤씨	312,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1-09		312,000,000	
56	2009-09-03	(주)보통	2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1-09		200,000,000	
57	2009-09-03	새신(주)	306,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1-09		306,400,000	
58	2009-09-25	우리은행	594,000,000	금융투자업법 위반	2009-12-03	2009-12-03	-	
59	2009-10-06	네스테크(주)	164,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10	2009-12-10	-	
60	2009-10-06	(주)에스피케이	43,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10	2009-12-10	-	
61	2009-10-06	ㅇㅇㅇ(개인)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10		16,000,000	
62	2009-10-06	(주)네시스엔알디	287,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10		115,160,000	
63	2009-10-06	(주)블루팀	54,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10		54,400,000	
64	2009-10-06	(주)내오리소스	80,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10		80,600,000	
65	2009-10-06	모빌링크텔레콤(주)	82,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10		82,900,000	
66	2009-10-06	(주)유성티에스아이	2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10		200,000,000	
67	2009-10-08	(광주)무등상호저축은행	70,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12-14	2009-12-14	-	
68	2009-10-19	(주)리노스	17,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23	2009-12-23	-	
69	2009-10-19	(주)내오리소스	112,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23		112,600,000	
70	2009-10-19	(주)원델터테인먼트그룹	98,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23		98,000,000	
71	2009-10-26	(서울)스카이상호저축은행	95,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09-12-30	2009-12-30	-	
72	2009-10-30	(주)트마워	32,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31	2010-01-12	-	
73	2009-10-30	(주)에프아이투어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31		30,000,000	
74	2009-10-30	새신(주)	204,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09-12-31		204,300,000	
75	2009-11-20	(주)비앤디	870,0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1-25		870,000,000	
76	2009-11-27	ㅇㅇㅇ(개인)	20,0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2-01	2010-06-18		
77	2009-11-27	ㅇㅇㅇ(개인)	20,0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2-01	2010-02-10	-	
78	2009-11-27	(주)한신디앤피	256,5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2-01		256,500,000	
79	2009-11-27	(주)고제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2-01		30,000,000	
80	2009-11-27	(주)내오리소스	365,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2-01		365,700,000	
81	2009-11-30	(주)파칸오피스	95,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2-03	2010-02-03	-	
82	2009-11-30	ㅇㅇㅇ(개인)	1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2-03		10,000,000	
83	2009-11-30	ㅇㅇㅇ(개인)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2-03		30,000,000	
84	2009-11-30	(주)케이엘에스	135,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2-03		135,800,000	
85	2009-11-30	티미세(주)	376,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2-03		376,900,000	
86	2009-11-30	(주)카라만케이디	98,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2-03		98,200,000	
87	2009-11-30	(주)플러스트로트	200,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2-03		200,100,000	
88	2009-12-03	정호진자흥신(주)	76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2-08		764,000,000	
89	2009-12-24	ㅇㅇㅇ(개인)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3-02	2010-04-21		
90	2009-12-24	ㅇㅇㅇ(개인)	1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3-02	2010-02-26	-	
91	2009-12-24	ㅇㅇㅇ(개인)	2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3-02		20,000,000	
92	2009-12-24	비전하이테크(주)	162,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3-02		112,300,000	
93	2009-12-30	(주)대우솔라	70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3-05		700,000,000	
	2009년	93건 부과	11,693,800,000		28건 환납	65건 미납	9,452,960,000	
1	2010-01-11	(주)케이에스리소스	25,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3-17	2010-03-17	-	
2	2010-01-11	(주)라이스마텍	13,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3-17		13,100,000	
3	2010-01-11	(주)신지소프트	34,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3-17		34,800,000	
4	2010-01-11	(주)스타텍스	259,5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3-17		259,500,000	
5	2010-01-20	(주)에버리소스	5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3-29		54,000,000	
6	2010-01-25	(주)유틸텍스	33,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4-01		33,900,000	
7	2010-02-17	(주)두산캐피탈	123,000,000	어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10-04-23	2010-04-20		
8	2010-02-26	(주)일광종합환경문제트	61,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4-30		61,100,000	
9	2010-03-26	(주)프리지엄	434,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5-31	2010-08-31	-	
10	2010-03-26	ㅇㅇㅇ(개인)	10,0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5-31		10,000,000	
11	2010-03-26	(주)카이사스	15,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5-31		15,600,000	
12	2010-03-26	(주)지오엘서	130,6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5-31		130,600,000	
13	2010-03-26	(주)중앙다자인	451,5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5-31		451,500,000	
14	2010-03-26	(주)모라리소스	24,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5-31		24,000,000	
15	2010-03-26	(주)올리엔텍	58,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5-31		58,400,000	
16	2010-03-31	(주)케이에스피	217,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6-04	2010-06-16		
17	2010-04-15	스텍스(주)	151,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6-21	2010-09-02	-	
18	2010-04-15	코다콤(주)	424,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6-21		424,800,000	
19	2010-04-29	(주)세계투어	30,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7-03	2010-07-05	-	
20	2010-04-29	ㅇㅇㅇ(개인)	16,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7-03		16,000,000	

	부과일시	당사자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일시	부과금 잔액	비고
21	2010-05-13	금호생명보험(주)	450,000,000	보험업법 위반	2010-07-17	2010-07-19	-	
22	2010-05-27	세원회계법인	78,2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7-31	2010-07-29	-	
23	2010-05-27	(주)오리바이오틱스	209,9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7-31		209,900,000	
24	2010-06-04	(주)케이에스피	12,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8-11	2010-08-10	-	
25	2010-06-04	삼원테크(주)	50,9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8-11	2010-08-11	-	
26	2010-06-04	케이피코리아	17,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8-11	2010-08-11	-	
27	2010-06-04	(주)이플렉	34,8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8-11		34,800,000	
28	2010-06-04	(주)델타에듀	37,7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8-11		37,700,000	
29	2010-06-04	(주)오리바이오틱스	39,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8-11		39,100,000	
30	2010-06-08	(주)정원시스템	4,1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8-12	2010-08-12	-	
31	2010-06-08	(주)올리스타	22,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8-12		22,300,000	
32	2010-06-08	(주)유지인포넷	131,4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8-12		131,400,000	
33	2010-06-08	(주)에임하이글로벌	618,3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8-12	2010-08-26	-	
34	2010-06-08	세원에스티(주)	64,2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8-12	2010-08-20	-	
35	2010-06-15	연남상호저축은행	319,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10-08-19	2010-08-19	-	
36	2010-06-15	한국상호저축은행	870,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10-08-19	2010-08-19	-	
37	2010-06-15	경기상호저축은행	1,270,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10-08-19	2010-08-19	-	
38	2010-06-18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633,000,000	보험업법 위반	2010-08-23	2010-08-19	-	
39	2010-06-22	(주)에버리소스	155,9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8-26		155,900,000	
40	2010-07-12	서일상호저축은행	100,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10-09-15	2010-09-15	-	
41	2010-07-16	(주)포네티치	204,8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9-20		204,800,000	
42	2010-07-16	(주)제네시스엔알디	129,000,000	증권거래법 위반	2010-09-20		129,000,000	
43	2010-07-16	(주)이투넷	54,0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9-20		54,000,000	
44	2010-07-16	(주)현대금융	42,0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9-20		42,000,000	
45	2010-07-16	(주)원지	41,2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9-20		41,200,000	
46	2010-07-16	(주)에이스알렉트론닉스	40,0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9-20		40,000,000	
47	2010-07-16	우리집배판에(주)	24,0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9-20		24,000,000	
48	2010-07-16	(주)에스피코프	20,0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9-20		20,000,000	
49	2010-07-16	(주)이쿠스	7,0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10-20		7,000,000	
50	2010-07-16	(주)아쿠스	7,0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1-04-20		7,000,000	
51	2010-07-16	남양상업신탁토론	297,3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9-20		297,300,000	
52	2010-07-16	신우회계법인	100,0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9-20		100,000,000	
53	2010-07-16	(주)골드카운티	274,200,000	자본시장법 위반	2010-09-20		274,200,000	
54	2010-08-27	(주)우동상호저축은행	23,000,000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2010-11-01		23,000,000	
	2010년 8월 현재	54건 부과	9,950,700,000		19건 완납	35건 미납	3,481,600,000	
	합계	246건 부과	44,129,200,000		114건 납부	132건 미납	21,875,460,000	